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Ⅲ)

2012. 9



금 융 위 원 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I 권)

| | | |
|----------|-------|-----|
| 강 기 정 의원 | | 1 |
| 강 석 훈 의원 | | 389 |
| 김 기 식 의원 | | 565 |
| 김 기 준 의원 | | 749 |

(II 권)

| | | |
|----------|-------|-----|
| 김 영 주 의원 | | 1 |
| 김 영 환 의원 | | 111 |
| 김 용 태 의원 | | 493 |
| 김 재 경 의원 | | 501 |

(III 권)

| | | |
|----------|-------|-----|
| 김 종 훈 의원 | | 1 |
| 노 회 찬 의원 | | 447 |
| 민 병 두 의원 | | 695 |
| 박 대 동 의원 | | 963 |

(IV 권)

| | | |
|----------|-------|-----|
| 박 민 식 의원 | | 1 |
| 성 완 종 의원 | | 195 |
| 송 광 호 의원 | | 351 |
| 송 호 창 의원 | | 489 |
| 신 동 우 의원 | | 547 |
| 안 덕 수 의원 | | 629 |
| 유 일 호 의원 | | 827 |

(V 권)

| | | |
|----------|-------|------|
| 이 상 직 의원 | | 1 |
| 이 종 결 의원 | | 219 |
| 정 호 준 의원 | | 707 |
| 조 원 진 의원 | | 1001 |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김종훈 의원

| | |
|--|-----|
| 1. 업무편람, 규정집, 내규집 | 3 |
| 2. 예산안 설명자료('11~'12년) | 4 |
| 3. 결산 내역(09~11년) | 141 |
| - 이용, 전용, 이월, 불용된 사업내역 | |
| 4.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1부(11~12년) | 149 |
| 5. 2012년 주요업무시행계획(국별) | 150 |
| 6. 통계집 | 352 |
| 7. 기관평가결과(자체, 외부 : 09-12년 현재) | 353 |
| 8. 산하기관평가관련(08-11년 현재) | 355 |
|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언론해명자료 및 정정 보도요청내역 (보도내용 포함) | 356 |
| 10. 징계현황(사유·직급·징계정도별 총계: '09 ~ '12년 현재) | 364 |
| - 징계심의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 |
| 11.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내역, 사유, 계획서(09~12년 현재) | 365 |
| 12. 민원, 진정, 청원 관련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사유별, 총계 : 09~12년 현재) | 366 |
| 13. 연구용역 현황('09~'12년 현재) | 367 |
| 14. 12년도 공문접수 및 발송목록 현황 | 371 |
| 15. 금융위원회 소송현황('09~12 승패율, 사유) | 372 |

| | |
|---|-----|
| 16. 공적자금 관련 | 373 |
| (최초 투입시부터 현재까지 : 연도별, 총계) | |
| 17. 가계부채 관련 | 390 |
| - 기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 |
| - 문제점 및 대책 | |
| 17. DTL, LTV 규제 관련 | 434 |
| 18. 산은지주 민영화 관련 | 438 |
| ① 민영화 세부추진방안 | 438 |
| ②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점포신설 및 인력, 조직 확충계획 | 439 |
| ③ 산업은행법상 특례현황 및 해소 계획과 추진실적 | 440 |
| ④ 향후 추진계획 | 441 |
| 19.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및 중복 해소 관련 | 442 |
| 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신보, 기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지원대상 중복 내역 | 442 |
| ② 해외자원개발지원 관련 수출입은행과 업무 경쟁 현황 | 443 |
| ③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SOC, 지역개발 관련 산업은행과 업무중복 내역 | 444 |
| ④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확보방안 및 실행내역 | 445 |
| ⑤ 문제점 및 대책 | 445 |

노회찬 의원

| | |
|---|-----|
|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 결과 | 449 |
| 2. 최근 3년간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 목록 | 450 |
| 3.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 451 |
| 4. 금융위 출범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 454 |
| 5. 금융위 임직원 징계 현황(2008년 이후부터 2012년 8월까지) | 456 |

| | |
|---|-----|
| 6. 금융위원회 의사록(2008-2012.8) | 457 |
| 7. 최근 3년간 민원처리 점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 458 |
| 8. 2012년 8월까지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의사록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 459 |
| 9. 2008년~2012년 8월말 현재 월별 햇살론 대출현황과 대위변제율 ... | 462 |
| 10. 2008년~2012년 8월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현황과 연체율 | 463 |
| 11. 최근 3년간 청와대에 보고된 보고자료 | 464 |

민병두 의원

| | |
|---|-----|
|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목록, 감사처분서 (사본), 직원들의 징계처분서 | 697 |
|---|-----|

박대동 의원

| | |
|---|-----|
| 1. 해외 출장 관련 | 960 |
| 1-1. 연도별(2009~2012.6월)임직원 국외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 | 965 |
| 1-2. 연도별(2009년~2012.6월) 임직원 법인카드 해외사용 현황 | 986 |
| 1-3. 2010~2012.6월까지 임직원 법인카드 해외사용내역 | 986 |
| 2. 경영효율화 관련 | 990 |
| 2-1. 연도별(2009년 ~ 2012.6월) 노사합의서 및 노조요구사항 주요내용 | 990 |
| 2-2. 연도별(2009년 ~ 2012.6월) 기관장, 임원별, 직원 직급별 임·직원의 평균연봉(급여)액 및 급여인상율 | 991 |
| 2-3. 연도별(2009년~2012.6월) 기관별 후생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내역, 출연사유, 후생 복지기금의 지출항목 | 992 |

| | |
|---|------|
| 2-4. 연도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해고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현황(청년인턴 별도) | 993 |
| 2-5. 연도별(2009년~2012.6월) 기관장 및 임원별, 기타 직급/팀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사용액 | 994 |
| 2-6. 2011~2012.6까지 기관장 및 부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996 |
| 2-7. 연도별(2009년 ~ 2012.6월) 임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현황, 노사합의사항 중 임직원 채용 관련 사항, 임직원 (특별)채용 관련 내부규정 | 997 |
| 2-8. 연도별(2009~2012) 예산현황 | 998 |
| 3. 경영투명성 관련 | 1001 |
| 3-1. 연도별(2009년~2012.6월) 공용카드 발급현황 및 실사용자 ... | 1001 |
| 3-2. 연도별(2009년~2012.6월) 공용카드(법인카드, 클린카드 등)에 대한 자체감사, 감사원, 총리실, 청와대, 경찰, 검찰 등 외부기관의 부당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내역 | 1005 |
| 4. 연구용역 관련 | 1006 |
| 4-1. 연도별('09~'12년 6월) 연구용역 내역 | 1006 |
| 4-2. 연도별('09~'12년 6월) 연구용역비 현황 | 1012 |
| 4-3. 연도별('09~'12년 9월) 발주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경쟁 입찰, 제한경쟁의 건수 및 금액 | 1013 |
| 5. 2009-2011까지의 국무총리실의 업무평가 실적 | 1018 |
| 6. 소관 위원회 관련 | 1019 |
| 6-1. 연도별(2009~2012.6월) 소관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 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 |
| 6-2. 연도별(2009~2012.6월) 위원별 회의수당 지급현황 | |
| 6-3. 연도별(2009~2012.6월) 위원별 출장내역 및 출장비용 | |
| 6-4. 연도별(2009~2012.6월) 각 위원회 예산현황 (자체수입·정부 지원금 구분) | |
| 6-5. 연도별(2009~2012.6월) 위원회별 개최 현황 | |

| | |
|--|------|
| 7. 임직원 교육 훈련 관련 (국내외, 6개월 이상 교육) | 1044 |
| 7-1.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 |
| 7-2. 연도별(2009년~2012.6월)교육훈련별 임직원 교육이수 내역 | |
| 8. 감사관련 | 1047 |
| 8-1. 연도별(2009년~2012.6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질문답변서, 결과보고서 사본(지적사항별 조치결과, 조치계획 포함) | 1047 |
| 8-2. 연도별(2009 - 2012.6월)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의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한 현황(공문사본 포함) 및 처리결과 | 1048 |
| 8-3. 연도별(2009-2012.6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청와대, 국정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접수한 수사(조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통보서, 감사원이 제출한 수사요청서 사본 | 1049 |
| 8-4. 연도별(2009년~2012.6월) 감사관실 작성 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조치내역 포함) | 1050 |
| 8-5. 연도별(2009년 - 2012.6월) 직원 징계현황(피징계자, 직급· 직책·직위, 징계사유, 징계유형, 징계의결서, 처리결과 등 포함) | 1051 |
| 8-6. 연도별(2009 - 2012. 6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자에 대한 현황(피징계자, 직급·직책·직위, 징계사유, 징계유형, 징계의결서, 처리결과 등 포함) | 1052 |
| 8-7.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본부 및 산하기관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 1053 |
| 8-8. 2005년 이후 청렴도 평가 순위 및 개선이행 조치결과 | 1054 |
| 9. 조직관리, 인사운영 관련 | 1055 |
| 9-1. 연도별(2009년 ~ 2012.6월) 직원 중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 1055 |
| 9-2. 연도별(2009년~2012.6월)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 1056 |

김 중 훈 의원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 업무편람, 규정집, 내규집

☐ 금융위원회는 업무편람 규정집, 내규집을 발간하지 않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2. 예산안 설명자료('11~'12년)

☐ 별첨참조

별첨 : 1.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II. 일반회계 세입예산

III. 일반회계 세출예산

1. 총 괄

2. 인건비

3. 기본경비

4. 사업경비

5. 내부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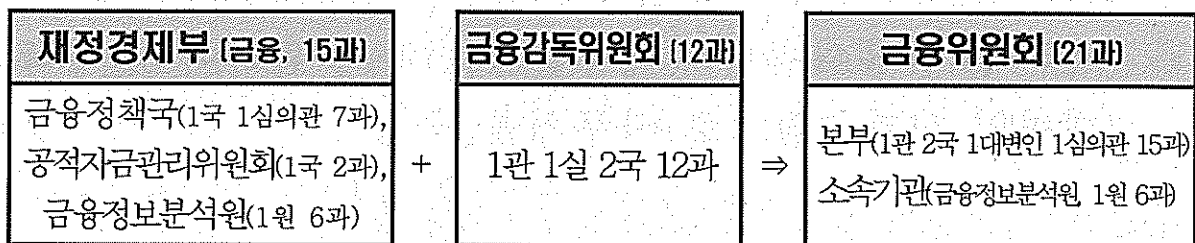
〈별 첨〉 사업별 설명자료

IV. 기금운용계획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10.7.16, 금융서비스국에 서민금융팀 신설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 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사무처)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5과 3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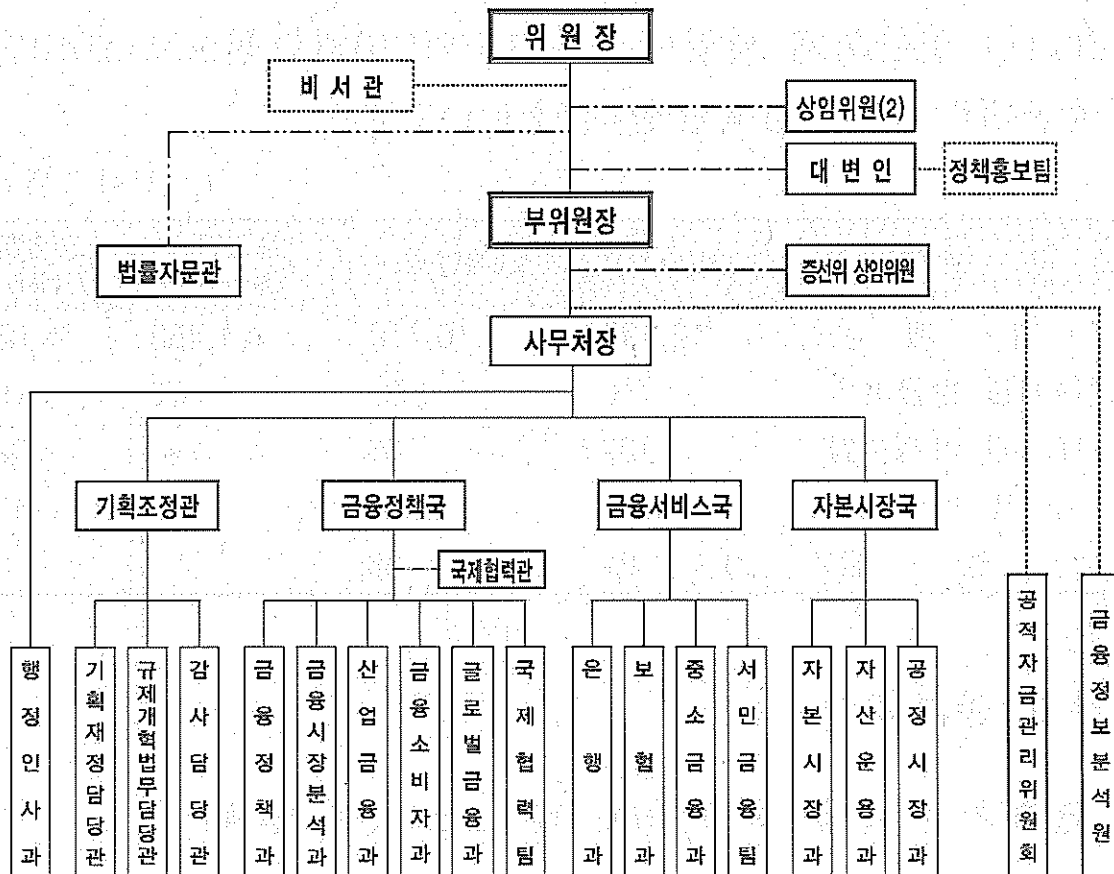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공적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31명

| | 정무직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 |
|---------|-----|-----|-----|-----|-----|-----|
| 합 계 | 2 | 206 | 4 | 7 | 12 | 231 |
| 본부 | 2 | 150 | 4 | - | 11 | 167 |
| 금융정보분석원 | - | 44 | - | 7 | 1 | 52 |
| 공자위 사무국 | - | 12 | - | - | - | 12 |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억원, 세출예산 1조 5,556억원('11년도)

II.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억 10백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14억 83백만원 감소(△12.2%)

(단위 : 백만원)

| 구 분(항)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률 (%) |
|-------------|----------|----------|--------------|------------|
| 합 계 | 12,193 | 10,710 | △1,483 | △12.2 |
| 전대차관 원금회수 | 1,110 | 1,038 | △72 | △6.5 |
| 전대차관 이자수입 | 127 | 86 | △41 | △32.3 |
| 벌 금 및 몰 수 금 | 10,875 | 9,500 | △1,375 | △12.6 |
| 가 산 금 | 81 | 86 | 5 | 6.2 |

□ 주요 증감내역

○ 전대차관 원금 회수('10년 대비 72백만원 감액)

- 기준환율 하락(1,230원 → 1,150원)을 반영

○ 전대차관 이자수입('10년 대비 41백만원 감액)

- 미상환 재전대 원금 감소 및 기준환율 하락(1,230원 → 1,150원) 반영

*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의 IBRD전대차관(8,895,694불) 및 공인회계사회 IBRD전대차관(129,020불)을 '04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벌금 및 몰수금('10년 대비 1,375백만원 감액)

- 최근 4년간('06년~'09년) 벌금 및 몰수금의 수입액 평균치 반영

○ 가산금('10년 대비 5백만원 증액)

- 최근 4년간('06년~'09년) 가산금 수입액 평균치 반영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

1. 총괄

□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556억 31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대비 1조 5,907억 60백만원 감소(50.6% 감)

- 금융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1,031억원으로
전년대비 28.0% 감소(특별 설비투자펀드 지원에 따른 자본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산은·기은 출자 400억원 등 삭감)
-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1조 4,494억원을 반영(전년대비 51.7% 감)

(단위 : 백만원)

| 구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계 | 3,146,391 | 1,555,631 | △1,590,760 | △50.6 |
| □ 금융위원회 운영 | 143,103 | 103,100 | △40,003 | △28.0 |
| ○ 인건비 | 15,028 | 16,350 | 1,322 | 8.8 |
| ○ 기본경비 | 7,141 | 7,462 | 321 | 4.5 |
| ○ 사업비 | 120,934 | 79,288 | △41,646 | △34.4 |
| □ 내부거래 | 3,003,288 | 1,452,531 | △1,550,757 | △51.6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 3,000,000 | 1,449,353 | △1,550,647 | △51.7 |
| ○ IBRD차관 원금 상환 | 2,948 | 2,754 | △194 | △6.6 |
| ○ IBRD차관 이자 상환 | 340 | 424 | 84 | 24.7 |

2. 인 건 비

- 2011년 인건비 예산은 163억 50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대비 13억 22백만원 증가(8.8%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15,028 | 16,350 | 1,322 | 8.8 |
| ○ 인 건 비 | 14,111 | 15,400 | 1,289 | 9.1 |
| ○ 직무수행경비 | 917 | 950 | 33 | 3.6 |

□ 증감 주요내역

- 서민금융팀 정원증가(5명) 및 처우개선 인상분 반영

3. 기본경비

- 2011년 기본경비 예산은 74억 62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 대비 3억 21백만원 증가(4.5%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7,141 | 7,462 | 321 | 4.5 |
| ○ 기획조정관실 | 5,550 | 5,628 | 78 | 1.4 |
| ○ 대변인실 | 185 | 271 | 86 | 46.5 |
| ○ 금융정책국 | 370 | 407 | 37 | 10.0 |
| ○ 금융서비스국 | 289 | 358 | 69 | 23.8 |
| ○ 자본시장국 | 287 | 310 | 23 | 8.0 |
| ○ 공자위사무국 | 459 | 489 | 30 | 6.5 |

□ 증감 주요내역

- 서민금융팀 신설(53), 금융발전심의회 운영비(99), 뉴스콘텐츠 통합이용시스템 활용(50) 등

4. 사업경비

□ 2011년 사업경비 예산은 792억 88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 대비 416억 46백만원 감소(34.4%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120,934 | 79,288 | △41,646 | △34.4 |
| ○ 금융업법체계개편 | 79 | 71 | △8 | △10.1 |
| ○ 금융소비자 보호 | - | 128 | 128 | 신규 |
| ○ 녹색금융 | 150 | - | △150 | 종료 |
| ○ 금융중심지추진 | 298 | 213 | △85 | △28.5 |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 500 | 510 | 10 | 2.0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 637 | 573 | △64 | △10.0 |
| ○ 금융전문인력양성 | 1,900 | 1,350 | △550 | △28.9 |
| ○ 저축의날행사및저축장려 | 74 | 60 | △14 | △18.9 |
| ○ 한국산업은행출자 | 10,000 | - | △10,000 | 종료 |
| ○ 중소기업은행출자 | 30,000 | - | △30,000 | 종료 |
| ○ 모기지론이차보전 | 4,563 | 4,700 | 137 | 3.0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기금출연 | 65,200 | 63,700 | △1,500 | △2.3 |
| ○ 금융정보분석원 운영 | 1,256 | 1,295 | 39 | 3.1 |
| ○ FIU전산망구축운영 | 4,656 | 4,623 | △33 | △0.7 |
| ○ APG 유형론 실무회의 | - | 430 | 430 | 신규 |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21 | 113 | △8 | △6.6 |
| ○ 정보화지원 | 570 | 542 | △28 | △4.9 |
| ○ 정책연구개발 | 600 | 650 | 50 | 8.3 |
| ○ 금융정책알리기 | 330 | 330 | - | - |

□ 증감 주요내역

- 설비투자펀드 운영에 따른 산은·기은의 자본금 손실보전을 위해 '10년도 한시적으로 편성되었던 출자예산(400억원) 삭감

* 정부 차원의 「재정지출생산성 제고」 추진 노력 반영

-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 APG 유형론 실무회의, 정책연구 개발을 신설 또는 증액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11년 내부거래 예산은 1조 4,525억 31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대비 1조 5,507억 57백만원 감액(51.6%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3,003,288 | 1,452,531 | △1,550,757 | △51.6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 3,000,000 | 1,449,353 | △1,550,647 | △51.7 |
| ○ IBRD차관 원금 상환 | 2,948 | 2,754 | △194 | △6.6 |
| ○ IBRD차관 이자 상환 | 340 | 424 | 84 | 24.7 |

□ 증감 주요내역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10년 대비 51.7% 감액된 1조 4,494억원)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대한 상환규모 축소로 인해 감액
- IBRD차관 원리금 상환('10년 대비 3% 감액된 31억 78백만원)
 - 기준환율 하락(1,230원 → 1,150원), '04년부터 원금 상환(매년 약 240만불)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 등 반영

<별첨> 사업별 설명자료

【금융정책국】

1. 금융소비자 보호
2. 금융업법 체계개편
3. 금융관련 국제협력
4. 금융중심지추진
5.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6. 금융전문인력 양성
7. 모기지론 이차보전

【금융서비스국】

8.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금융정보분석원】

10. APG유형론 실무회의
11. FIU운영
12.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기획조정관】

13. 정보화 지원(정보화)
14. 정책연구개발

【대변인】

15. 금융정책알리기

【행정인사과】

16.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7.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18.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1 금융소비자 보호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 | - | 128 | 12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제도·관행을 점검·개선하고, 체계적 금융소비자교육 추진을 목표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사업내용

- 금융소비자 관련 현황 조사
 - 금융상품 판매관행·소비자인식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화설문·면접 등을 통한 시장조사 실시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인 '금융교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금융소비자 교육자료 제작
 -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투자자, 금융소외계층 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신규법령·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교육 콘텐츠 제작

2 금융업법 체계개편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64 | 79 | 71 | △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업종별 금융업법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고 규제합리화와 제도개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를 이룩함

□ 사업내용

- 시장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능별 통합작업을 추진

< 금융업법 체계개편의 단계 >

| 단계 | ① 업권별 통합법 제정 (1단계) | ② 기능별 법 통합 작업 (2단계) | ③ 금융통합법 체계 (최종단계) |
|------|--|--|-----------------------------|
| 정비목적 | ■ 기능별 통합에 앞서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 수준 및 형식을 단일한 기준으로 정비 | ■ 1단계 정비를 바탕으로 유사한 규제를 기능별로 통합 | ■ 2단계 정비를 바탕으로 금융통합법 체계를 마련 |
| 과제 | - 자본시장법 제정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 → 완료 - 은행법·보험업법 정비 | -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회사경영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진입·퇴출에 관한 법 등 제정 | |

- 또한 G-20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국제적 규제·감독 정책 논의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법령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3 금융관련 국제협력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267 | 637 | 573 | △64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근 국제금융환경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감독기구 활동 등 글로벌스탠다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한 국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각종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적극적인 이해관계 반영 필요성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비하여, FTA체결 다변화를 통한 실용적·능동적 개방 및 FTA·WTO 등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
- 최근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투자자 설명회(IR) 개최 등의 지속적인 추진

4 금융중심지추진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77 | 298 | 213 | △85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사업내용

-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의 국제화,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 및 국내 금융시장 진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 추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완·개선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법적 추진체계를 공고화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와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

5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450 | 500 | 510 | 1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경영환경 개선 등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

□ 사업내용(중심지법 §13 ①)

-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진입지원
 - 외국사 등의 국내 영업상 불합리한 제도, 애로사항 원스탑 서비스 지원 및 외국계 금융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화채널 운영
 - 금융관련 법령,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대한 영문화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영문법규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 외국의 법규·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제공(데이터베이스화)
-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세제, 출입국, 교육 등 행정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및 영어전문인력을 통한 고충처리

6 금융전문인력 양성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408 | 1,900 | 1,350 | △55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금융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민간의 경우 아직 녹색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음
- 따라서 녹색금융 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 사업내용

- 녹색금융특화 MBA로 선정된 대학(KAIST와 고려대)에서 녹색금융 강좌가 개설·운영되도록 학생장학금 및 과정운영비 등을 지원

7 모기지론 이차보전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안(B) | 증감(B-A) |
|-------|----------|-----------|---------|
| 2,710 | 4,563 | 4,700 | 137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모기지론의 이차를 보전

☐ 사업내용

-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하여 모기지론 금리를 차등 (0.5~1.0%p) 우대
 - '05.10.31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출시 (1년간 한시 판매)
 - '07.8.27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재개

< 소득수준별 금리우대 내역 >

| 구 분 | 차입자 연소득 | | |
|-----------|----------|---------------------|---------------------|
| | 16백만원 이하 | 16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 20백만원 초과 ~ 25백만원 이하 |
| 모기지론 기준금리 | 반기별 기준금리 | | |
| 이차보전금리 | 1.0% | 0.75% | 0.5% |

8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54 | 74 | 60 | △14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홍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저축의식을 고양하고, 국내투자재원의 조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내실있는 경제성장을 도모

□ 사업내용

- 한국은행이 적자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이관을 요청해옴에 따라 '08년부터 동 업무를 우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
- 건전한 소비문화와 더불어 건전한 저축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금융자원의 원활한 유통 증진
- 저축유공자 포상을 매년도 기념행사와 더불어 실시하여 저축 미담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며, 어린이 금융생활길잡이 등 저축 교육 실시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65,000 | 65,200 | 63,700 | △1,50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출연

* 일반농어민 : 연 1.5 ~ 2.5%, 저소득농어민 : 연 6.0 ~ 9.6%

☐ 사업내용

- '11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예상소요액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 의거 정부는 매년도 마다 저축장려금 예상소요액의 1/2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

10 APG유형론 실무회의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 | - | 430 | 43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신의 자금세탁 유형·기법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 및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11년도 APG 유형론 실무회의의 국내 개최

* APG(Asia-Pacific Group)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아-태 지역기구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의 이행감독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일시/장소 : '11. 10. 31.(월) ~ 11. 2.(수) 3일간 / 서울 (잠정안)
- 참석인원 : 40개 APG회원국 및 IMF등 국제기구 관계자 250여명
- 주요 프로그램
 - 개·폐막식 및 APG 유형론 실무그룹 회의/공동프로젝트 발표
 - 각국의 최신 자금세탁기법/유형에 대한 세미나 등
- 개최비용 : 효과적인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장/부대시설과 국제관행에 따른 공식만찬·다과 등 필수적 소요만을 반영
 - 예산·인력에 있어서 낭비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국제회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

11 금융정보분석원(FIU) 운영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089 | 1,256 | 1,295 | 39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 지원
- FATF가입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 기준을 관련 제도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격을 제고

□ 사업내용

- 테러자금조달 억제와 관련한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자금세탁방지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

○ 세부사업 내용

- 비정규직 보수 : 98백만원
- 관서운영비 : 455백만원
- 여비 : 221백만원
- 업무추진비 : 6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 155백만원
- 해외경상이전(국제분담금) : 283백만원
- 비정규직 보험료, 자산취득비 등 : 20백만원

12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4,688 | 4,656 | 4,623 | △33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금융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심사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에 따른 특정금융거래 정보증가 및 정보분석·제공 환경 변화에 따른 FIU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 사업내용

-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의 효과적 차단을 지원하기 위한 FIU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운영 지원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유출·위변조·해킹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와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급격히 증가하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요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개선
- 정보분석 신속처리 지원을 위한 노후 장비 및 S/W 교체
- 세부사업 내용
 - 장비 임차료 : 2,431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874백만원
 - 위탁사업 및 연구개발 : 1,222백만원
 - 전산망 전용회선료 : 40백만원
 - 노후 장비 교체 등 : 56백만원

13 정보화 지원(정보화)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585 | 570 | 542 | △2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도모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내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및 정보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금융위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관리 실시

* 공정위,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위탁운영 실시

- 전용회선 사용료 및 보안USB, 프린터 공유기 등 전산소모품 구입
- 노후화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및 업무용 S/W 도입
-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수준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통한 정보보안 취약부분 개선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499 | 600 | 650 | 5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정책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수행을 통하여 정책수립·집행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 합리화 방안
- 금융회사 진입·퇴출에 관한 법률안 검토
-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체계 구축 방안
- 글로벌 금융개편 논의와 예보의 역할 재정립 방안
- 보험정보의 효율적 관리·보호 및 감독방안
- 보험사 상장이 보험산업 및 감독정책에 미치는 영향
- 자본시장인프라 중장기 발전 방안(매매, 청산·결제, 예탁, 전산 등)
-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업의 비전과 발전방안
- 회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방안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거래 제도 개선방안 등

15 금융정책알리기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92 | 330 | 330 | -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정책을 금융시장의 공급자인 금융업계와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건전한 금융산업 육성과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코자 함
- 특히 금융소외자들의 자활을 돕는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대국민홍보를 집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도 중점적으로 홍보코자 함

□ 사업내용

- 저비용 고효율의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
- 타겟별 유효매체를 적절히 선정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
- 스마트폰을 비롯한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을 통해 국민체감형 정책홍보를 집행
- 금융업권별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대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을 집행
- 사금융 피해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아이টে으로 하는 기획홍보 및 계도광고 집행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91 | 121 | 113 | △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직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계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사업내용

- 직장교육, 어학 등 공통역량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의 행정효율성 제고
- 전 직원 및 직급별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 간 소통과 조직의 일체감 형성 도모
- 정부업무평가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수행으로 각종 정책추진에 기여한 자를 발굴·포상하여 전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성과 향상 유도

17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3,611 | 3,288 | 3,178 | △11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98년 IBRD로부터 전대차관자금을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증권시장 선진화,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기술지원차관의 원리금 상환

□ 사업내용

- 원금상환 : 2,754백만원
- 이자상환 : 4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직조원금(\$) | 2011년도 상환규모 | | |
|-----------------------|------------|-------------|-------|-------|
| | | 계(A+B) | 원금(A) | 이자(B) |
| 합 계 | 23,959,720 | 3,178 | 2,754 | 424 |
| 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지원 등 | 23,542,703 | 3,122 | 2,707 | 415 |
| ② 증권시장발전연구 | 168,737 | 22 | 19 | 3 |
| ③ 회계감사제도개선 | 248,280 | 32 | 28 | 4 |
| ④ 수수료 | - | 1 | - | 1 |

18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78,660 | 3,000,000 | 1,449,353 | △1,550,647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위기 이후 집행된 공적자금의 채무상환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제고

□ 사업내용

- 정부보증채(예보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 만기도래액*중 재정 부담분 49조원('02말 기준)을 국채로 전환**하고

* 공적자금 부채 97조원('02말 기준)중 회수 가능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은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49조원 및 20조원 분담

** 국채 전환(49조) : (03년) 13조, (04년) 12조, (05년) 12조, (06년) 12조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지원받아 25년(2003년~2027년) 이내에 상환
- 적정수준의 일반회계 출연이 안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하여 부족자금을 충당하여야 하며, 25년간('03~'27) 일반회계(재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전출)할 예정

IV. 기금운용계획

목 차

1. 공적자금상환기금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3. 신용보증기금
4. 기술신용보증기금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부실채권정리기금
9. 구조조정기금

1 공적자금상환기금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설치연혁
 - 2002. 12. 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
 - 2002. 12. 30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정
 - 2003. 01. 01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개시

□ 설치목적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담한 공적자금 채무 중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재정이 부담하기로 한 액면가액 기준으로 원리금 49조원에 대한 원활한 상환

□ 사업내용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보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중 정부부담분 49조원을 국채로 전환*하여 상환하고

* 국채전환 : ('03년) 13조, ('04년) 12조, ('05년) 12조, ('06) 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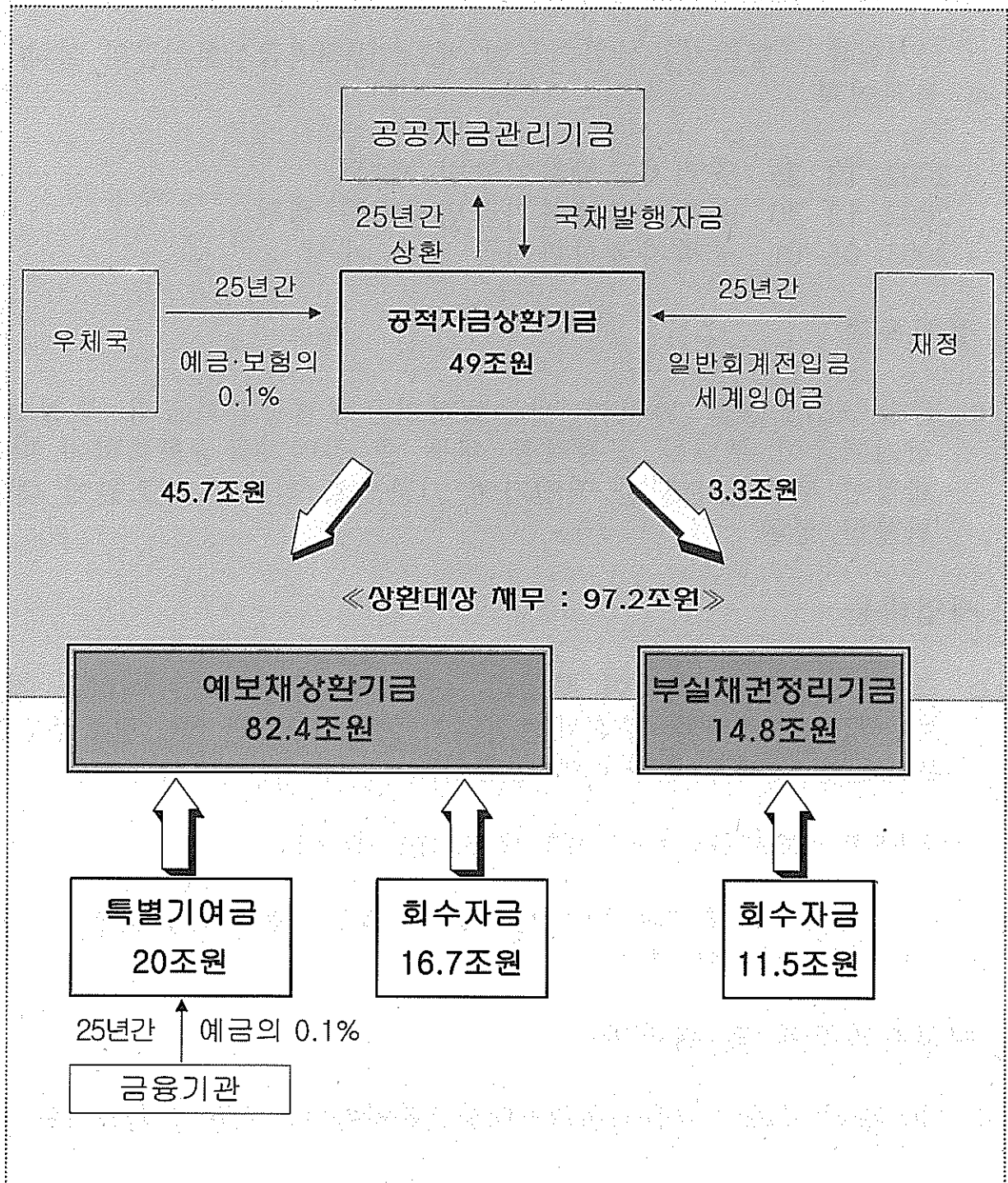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02말 현재가치기준)을 지원받아 25년 이내에 상환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 주체 :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 위탁 관리기관 : 한국은행(국고증권실 증권팀)

공적자금 상환체계도

재정출연을 통한 상환체계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일반회계 전입금 1조 4,494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6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9,500억원 등 총 2조 4,685억원을 조달하여 2011년 만기도래하는 예수이자 상환 등에 2조 4,685억원을 운용

(단위 : 백만원)

| 조 달 | | 운 용 | |
|------------------------------|-----------|---------------|-----------|
| ○ 기타 재산수입 (여유자금 운용수익) | 3,099 | ○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 2,468,470 |
| ○ 일반회계 전입금 | 1,449,353 | - 원금 상환 | - |
| ○ 우체국 예금·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 66,029 | - 이자 상환 | 2,468,470 |
| ○ 공공기금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 950,000 | ○ 기금관리비 | 11 |
| ○ 공자기금 예수금 | - | | |
| 계 | 2,468,481 | 계 | 2,468,481 |

3. 조달 · 운용 계획

가. 조달계획

□ 재산수입 : 3,099백만원

-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의 유입시점과 공적자금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시점의 단기 시차로 인해 일시 보유하는 여유자금 운용수익

○ 운용자금

① 일반회계

: 1,449,353백만원 * 2.25%(10년 7월말 기준금리)*10/365 = 893백만원

② 특별회계 전입금 및 공공기금전입금 등

: 1,016,029백만원 * 2.73%(10년 7월말 MMDA 등 평균금리)*29/365 = 2,204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 1,449,353백만원

- '11년에는 상환해야 할 만기원금이 없기는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2조 4,685억원의 집행이 필요하므로
- 수입재원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전입금 9,5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660억원, 기타재산수입 31억원 외에 부족한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출연실적 현황>

(단위 : 조원)

| | ' 03 | ' 04 | ' 05 | ' 06 | ' 07 | ' 08 | ' 09 | ' 10 | 소계 | ' 11 계획 | ' 12 계획 | ' 13 계획 | ' 14 계획 |
|----------|------|-------|------|------|-------|------|-------|------|-------|------------|------------|------------|------------|
| 상환계획(A) | 2.0 | 2.1 | 2.3 | 2.4 | 2.6 | 2.7 | 2.9 | 3.1 | 20.1 | 3.3 | 3.5 | 3.8 | 4.0 |
| 실 적(B) * | 2.1 | 0.25 | 1.3 | 3.4 | 0.02 | 3.0 | 1.37 | 3.8 | 15.24 | 1.45 | 1.25 | 3.8 | 4.0 |
| B - A | 0.1 | -1.85 | -1.0 | 1.0 | -2.58 | 0.3 | -1.53 | 0.7 | -4.86 | -1.85 | | | |

* 세계잉여금 포함(06년 : 0.38조원, 08년 : 2.98조원, 09년 : 1.3조원, 10년 0.8조원)포함

□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 66,029백만원

| 구 분 | 산출산식 |
|---------------|--|
|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산식 : (2010년도 예금수신고 × 1/1,000)+전년결산차액 ▪ 산출내역 : 44,542백만원=(43,038(43,038,713×1/1,000)+1,504("10년도 결산차액)) |
|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산식 : ("10년 책임준비금 + '10년도 예상 수입보험료)/2×1/1,000+전년결산차액 ▪ 산출내역 : 21,487백만원=(28,035,000백만원+6,029,400백만원)/2×1/1,000 +4,455백만원("10년도 결산차액) |

□ 공공기금전입금 : 950,000백만원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9,500억원 전입

나. 운용계획

□ 기금운영비 : 11백만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인쇄비, 여유자금 운용거래 수수료 등

□ 예수이자상환 : 2,468,470백만원

- 2011년도에 상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1. 개 요

☐ 설치근거법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3797호, '85.12.23 제정) 제7조

☐ 설치연혁

- 1976.3.30 농수산부, 재무부 합의
- 1985.12.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되어 1986년부터 업무 개시
- 2009년까지 약 24,282억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 설치목적

-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 주요사업내용

- 정부출연금, 한국은행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저축자에 대한 저축원리금 상환시 저축장려금을 지급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금융위원회
- 관 리 방 식 : 한국은행에 위탁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 및 운용규모

- 총 1,542억원으로 10년(1,569억원) 대비 1.7% 감소

□ 주요내역

- <조달부문> 정부출연금 637억원, 한은출연금 633억원, 여유자금회수 268억원, 기금운용수익 4억원으로 기금 재원을 조달
- <운용부문> 저축장려금 1,274억원 지급 및 여유자금운용 269억원 등으로 기금 운용

(단위 : 백만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156,937 | 154,228 | △2,709 | ■ 합계 | 156,937 | 154,228 | △2,709 |
| 정부출연금 | 65,200 | 63,700 | △1,500 | 저축장려금 | 130,357 | 127,360 | △2,997 |
| 한은출연금 | 63,100 | 63,300 | 200 | 기금운영비 | 1 | 1 | - |
| 기금운용수익 | 557 | 449 | △108 | 여유자금운용 | 26,579 | 26,867 | 288 |
| 여유자금회수 | 28,080 | 26,779 | △1,301 | | | |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1,542억원(10년 대비 17억원 감소)

- 일반회계 전입금(63,700백만원)
- 한국은행 출연금(63,300백만원)
- 기금운용수익(449백만원) :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액
- 기타 여유자금 회수
 - 한국은행예치금 회수(9백만원) : 전년도말 이월 한은 예치금 잔액
 - 여유자금 회수(26,770백만원) : 전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운용중인 기금 여유자금 잔액

□ 운용부문 : 1,542억원(10년 대비 17억원 감소)

- 저축장려금 지급(127,360백만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기본금리(5.5%)외에 저축장려금리*를 추가 제공
 - * 일반농어민 : 연 1.5~2.5%, 저소득농어민 : 연 6.0~9.6%
- 여유자금 운용(26,867백만원) : 자금의 유입 및 지급시기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여유자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운용하여 기금수익 증대

<참 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 1976년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동 저축제도 신설(85.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리를 추가 제공

〈저축기간 및 농어가소득에 따른 지급금리〉

| 저축 기간 | 기 본 금리(%) | 법정장려금리(%) | | 지급금리(합계) | |
|----------|--------------|-----------|---------|----------|--------|
| |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 3년 | 5.5 | 1.5 | 6.0 | 7.0 | 11.5 |
| 5년 | 5.5 | 2.5 | 9.6 | 8.0 | 15.1 |

* 예) 농민의 경우, 일반: 1ha~2ha, 저소득: 1ha이하 농지 소유자

- 법정장려금 재원의 50%이상 정부 부담*(나머지는 한은 부담)

* '10년도의 경우 정부는 652억원 출연 계획

□ 저축한도 : 월 12만원(저소득 농어민은 월10만원)

□ 운영실적(09말) : 저축계좌 47.4만좌, 저축불입액 1.4조원

□ 취급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조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황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취급근거 | ○'76.3.30 : 농수산부, 재무부 합의 ○'85.12.23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 | | | | | | | |
| 실시기간 | ○'76. 4. 1 ~ 계 속 | | | | | | | | | |
| 취급기관 | ○ 단위농업협동조합, 수협 | | | | | | | | | |
| 가입대상 | 구 분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 | | | | | |
| | 농 민 | 1ha초과 ~ 2ha이하 농지소유 경작농민 | 1ha 이하 농지소유, 경작, 타인농지 임차 경작 농민 | | | | | | | |
| | 어 민 | 20톤이하 동력선 소유어민 | 무동력선 및 비어선 사용어민 | | | | | | | |
| | 양축가 | 젓소 20마리 이하등 일정규모의 가축소유 양축가 | 일반농어민의 1/2이하의 가축소유, 사육양축가 | | | | | | | |
| 가입한도 | 구 분 3년 · 5년 | 일반농어민 월12만원 이하 | 저소득농어민 월10만원 이하 ('95.6.16까지는 월6만원 이하) | | | | | | | |
| 이자율 및 장려금 | 년 수 | 기본금리 | 장려금리 | 계 | | | | | | |
| | 3 년 | 5.5 | 1.5(6.0) | 7.0(11.5) | | | | | | |
| | 5 년 | 5.5 | 2.5(9.6) | 8.0(15.1) | | | | | | |
| | * 기본금리인하('01.12.10) 7.0% → 5.5%, ()안은 저소득농어민 | | | | | | | | | |
| 장려금재원 (=기금재원) | ○ 정부출연금, 한국은행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 | | | | | | | | | |
| 저축가입실적 (천좌, 억원) | 구좌수 | '01 855 | '02 824 | '03 795 | '04 742 | '05 659 | '06 604 | '07 567 | '08 523 | '09 474 |
| | 불입액 | 19,279 | 20,905 | 21,498 | 21,363 | 18,450 | 16,378 | 16,561 | 15,415 | 14,177 |
| 법 정 장려금 지급액(억원) | | '01 1,884 | '02 1,229 | '03 1,260 | '04 1,617 | '05 2,022 | '06 1,873 | '07 1,270 | '08 1,356 | '09 1,290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2695호, 1974.12.21)

○ 설치연혁

- 1961. 7. 1 :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
- 1974. 12. 21 :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 1976. 6. 1 : 신용보증기금 창립

□ 설치목적

-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용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신용보증기금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4.6조원('10년 대비 0.4조원 증가)

- 보증료수입, 구상권회수 등 자체수입 2조 2,765억원, 여유자금회수 2조 3,480억원으로 총 4조 6,245억원을 조달하여,
- 대위변제 등 사업비 2조 4,252억원, 기금운영비 3,100억원, 여유자금 1조 8,893억원 등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42,206 | 46,245 | 4,039 | ■ 합계 | 42,206 | 46,245 | 4,039 |
| ① 자체수입 | 21,857 | 22,765 | 908 | ① 사업비 | 25,944 | 24,252 | △1,692 |
| ② 정부출연 | - | - | - | ② 기금운영비 | 2,898 | 3,100 | 202 |
| ③ 여유자금회수 | 20,349 | 23,480 | 3,131 | ③ 여유자금운용 | 13,364 | 18,893 | 5,529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4.6조원('10년 대비 0.4조원 증가)

- (자체수입) 보증료수입, 구상권회수, 금융기관출연금, 이자수입 등 2.3조원(+908억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유가증권 매각 등 2.3조원(+3,131억원)

□ 운용부문 : 4.6조원('10년 대비 0.4조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기타사업비 등 2.4조원(△1,692억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0.3조원(+202억원)
- (여유자금운용) 금융기관예치, 채권매입 등 1.9조(+5,529억원)

<세부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익 (A) | '11계익 (B) | 증감(B-A) |
|-----------|--------------|--------------|---------|
| 합 계 | 42,206 | 46,245 | 4,039 |
| ▪ 자체수입 | 21,857 | 22,765 | 908 |
| (신용보증료) | 5,547 | 5,678 | 131 |
| (구상권회수) | 6,180 | 6,199 | 19 |
| (금융기관출연금) | 8,078 | 8,086 | 8 |
| (이자수입) | 1,630 | 2,250 | 620 |
| (기타수입) | 422 | 552 | 130 |
| ▪ 정부출연금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20,349 | 23,480 | 3,131 |

☐ 운용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익 (A) | '11계익 (B) | 증감(B-A) |
|----------|--------------|--------------|---------|
| 합 계 | 42,206 | 46,245 | 4,039 |
| ▪ 사업비 | 25,944 | 24,252 | △1,692 |
| (대위변제) | 24,261 | 22,608 | △1,653 |
| (보증연계투자) | 100 | - | △100 |
| (기타사업비) | 1,583 | 1,644 | 61 |
| ▪ 기금운영비 | 2,898 | 3,100 | 202 |
| (인건비) | 1,762 | 1,858 | 96 |
| (기타운영비) | 1,136 | 1,242 | 106 |
| ▪ 여유자금운용 | 13,364 | 18,893 | 5,529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3866호, 1986.12.26)
- 연혁
 - 1989. 4 :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 1999. 2 :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 2004. 8 : 총 보증지원 100조원 돌파
 - 2005. 4 : 중앙기술평가원 개원
 - 2005. 7 : 新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 2007. 1 : 보증프로세스를 기술평가보증으로 일원화
 - 2010. 6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4년연속)

□ 설치목적

- 기술보증제도의 정착·발전으로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로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사업화 및 성장 지원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기술보증기금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 · 운용 규모 : 2조 5,067억원('10년 대비 4,246억원 증가)

- 자체수입 1조 606억원, 여유자금회수 1조 4,461억원으로 총 2조 5,067억원을 조달하여,
- 사업비 1조 1,807억원, 기금운영비 1,626억원, 여유자금운용 1조 1,634억원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달계획 | | | | 운용계획 | | | |
|--------|--------|--------|-------|--------|--------|--------|--------|
| 구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합계 | 20,821 | 25,067 | 4,246 | 합계 | 20,821 | 25,067 | 4,246 |
| 자체수입 | 10,911 | 10,606 | △305 | 사업비 | 14,134 | 11,807 | △2,327 |
| 정부출연금 | - | - | - | 기금운영비 | 1,434 | 1,626 | 192 |
| 여유자금회수 | 9,910 | 14,461 | 4,551 | 여유자금운용 | 5,253 | 11,634 | 6,381 |

3.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 2조 5,067억원('10년 대비 4,246억원 증가)

- (자체수입) 금융기관출연금, 이자수입, 구상채권회수, 보증료수입, 기타수입 등 1조 606억원(△305억원)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0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 및 국공채 회수 등 1조 4,461억원(+4,551억원)

□ 운용부문 : 2조 5,067억원('10년 대비 4,246억원 증가)

- (사업비) 기보대위변제, 중소기업투자, 구상권관리, 기술평가, 본점 신축, 보증료환급 등 1조 1,807억원(△2,327억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1,626억원(+192억원)
- (여유자금운용)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풀 투자 등 1조 1,634억원(+6,381억원)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억 원)

| 구 분 | '10 계획(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20,821 | 25,067 | 4,246 |
| ○ 자체수입 | 10,911 | 10,606 | △ 305 |
| (금융기관출연금) | 4,664 | 4,550 | △ 114 |
| (이자수입) | 678 | 634 | △ 44 |
| (구상채권회수) | 2,900 | 2,587 | △ 313 |
| (보증료) | 2,451 | 2,520 | 69 |
| (기타수입) | 218 | 315 | 97 |
| ○ 정부출연금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9,910 | 14,461 | 4,551 |

☐ 운용부문

(단위: 억 원)

| 구 분 | '10 계획(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20,821 | 25,067 | 4,246 |
| ○ 사 업 비 | 14,134 | 11,807 | △ 2,327 |
| (대위변제) | 13,008 | 10,633 | △ 2,375 |
| (중소기업투자) | 100 | 100 | - |
| (기보운영) | 1,026 | 1,074 | 48 |
| ○ 기금운영비 | 1,434 | 1,626 | 192 |
| (인건비) | 908 | 958 | 50 |
| (기타운영비) | 526 | 668 | 142 |
| ○ 여유자금운용 | 5,253 | 11,634 | 6,381 |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개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법률 제2277호, 1971. 1.13)
- 설치연혁
 - 1971. 1. 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법률 제2277호) 제정
 - 1972. 3. 20 농협중앙회 기금출연(1억원)으로 업무개시
 - 1972. 11. 3 정부 기금출연(1억원)
 - 1999. 2. 5 보증 대상자, 대상자금, 금융기관 확대
 - 2000. 12. 30 업무위탁 근거조항 신설

□ 설치목적

-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을 위하여 그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농협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제4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를 취급한다.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① 조달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구상채권회수금, 수입보증료 등 자체 수입으로 4,886억원을 조달
- 정부내부수입(기타특별회계전입금) 없음
- 유가증권매각대금 및 정부예금회수 등으로 1조 9,521억원을 조달

② 운용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신용보증료환급, 소송및법적절차비용 등 사업비로 3,375억원 운용
- 기금운영을 위한 기금운영비로 604억원 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국채외채권매입 등 여유자금으로 2조 427억원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15,736 | 24,406 | 8,670 | ■ 합계 | 15,736 | 24,406 | 8,670 |
| ① 자체수입 | 4,801 | 4,886 | 84 | ① 사업비 | 7,565 | 3,375 | △4,190 |
| ② 정부내부수입 | 1,200 | 0 | △1,200 | ② 기금운영비 | 541 | 604 | 62 |
| ③ 여유자금회수 | 9,734 | 19,521 | 9,786 | ③ 여유자금운용 | 7,629 | 20,427 | 12,798 |

3. 조달·운용 계획

가. 총괄

□ 조달부문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자체수입)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및 구상채권회수금 수입보증료 등 4,886억원(84억원)

* 여유자금이자수입('10년 456억원 → '11년 1,091억원)
 금융기관출연금('10년 1,975억원 → '11년 1,804억원)
 구상채권회수금('10년 1,750억원 → '11년 1,431억원)
 수입보증료 등 ('10년 620억원 → '11년 559억원)

- (정부내부수입)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0원(△1,200억원)

- (여유자금회수) 유가증권매각대금 등 1조 9,521억원(9,786억원)

□ 운용부문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신용보증료환급, 소송 및 법적절차비용 등 3,375억원(△4,190억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604억원(62억원)

-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국채외 채권(금융채)매입 등 2조 427억원(1조 2,798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 자체수입 : 4,886억원(84억원) | · 사업비 : 3,375억원(△4,190억원) |
| · 정부내부수입 : 0원(△1,200억원) | · 기금운영비 : 604억원(62억원) |
| · 여유자금회수 : 1조9,521억원(9,786억원) | · 여유자금운용 : 2조427억원(1조2,798억원) |
| 2조4,406억원(8,670억원) | 2조4,406억원(8,670억원) |

< 조달·운용 총괄표 >

□ 조달부문

(단위: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5,736 | 24,406 | 8,670 |
| ○ 자체수입 | 4,801 | 4,886 | 84 |
| • 이자수입 | 456 | 1,091 | 635 |
| • 금융기관출연금 | 1,975 | 1,804 | △171 |
| • 구상채권원리금 회수 | 1,750 | 1,431 | △319 |
| • 수입보증료 | 574 | 493 | △81 |
| • 기타영업외잡수익 | 46 | 66 | 20 |
| ○ 정부내부수입 | 1,200 | 0 | △1,200 |
| ○ 여유자금회수 | 9,734 | 19,521 | 9,786 |

□ 운용부문

(단위: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5,736 | 24,406 | 8,670 |
| ○ 사업비 | 7,565 | 3,375 | △4,190 |
| • 대위변제 | 7,466 | 3,270 | △4,196 |
| • 소송및법적절차비용 | 35 | 46 | 11 |
| • 보증료환급 | 64 | 59 | △5 |
| ○ 기금운영비 | 541 | 604 | 62 |
| • 인건비 | 365 | 402 | 37 |
| • 기타운영비 | 176 | 202 | 26 |
| ○ 여유자금운용 | 7,629 | 20,427 | 12,798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설치연혁
 - 1987. 5. 30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설치 (관리기관 : 한국주택은행)
 - 1999. 1. 1 : 관리기관 변경 (한국주택은행 ⇒ 신용보증기금)
 - 2004. 3. 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공사 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업무 인수
 - 2007. 4. 1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연금보증계정 설치

□ 설치목적

- (주택신용보증계정) 주택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주택수요자(개인)의 주택마련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자(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건설을 촉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주택연금 지원으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 관리방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1조 4,709억원(10년 대비 133억원 증가)

① 주택신용보증계정 : 1조 4,377억원(10년 대비 19억원 증가)

- 자체수입 8,095억원, 여유자금 회수 6,282억원 등 1조 4,377억원의 재원을 조달
- 대위변제 등 사업비 1,878억원, 기금운영비 500억원, 차입금상환 364억원, 여유자금운용 1조 1,635억원 등으로 운용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332억원(10년 대비 114억원 증가)

- 자체수입 117억원, 여유자금 회수 215억원 등 332억원의 재원을 조달
- 대위변제 등 사업비 4억원, 기금운영비 74억원, 여유자금운용 254억원 등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14,576 | 14,709 | 133 | ■ 합계 | 14,576 | 14,709 | 133 |
| ① 주택신용보증계정 | 14,358 | 14,377 | 19 | ① 주택신용보증계정 | 14,358 | 14,377 | 19 |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218 | 332 | 114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218 | 332 | 114 |

3. 조달 · 운용 계획

가. 주택신용보증계정

□ 조달부문 : 1조 4,377억원(10년 대비 19억원 증가)

- (자체수입) 여유자금 운용자산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구상채권 회수금 및 신용보증료 등 8,095억원(751억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매각대금 6,282억원 (Δ732억원)

□ 운용부문 : 1조 4,377억원(10년 대비 19억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보증료환급 및 구상권관리비 등 1,878억원 (Δ46억원)
-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를 위한 인건비, 기타운영비 및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500억원(13억원)
- (차입금상환) IBRD 차입금 원리금 상환 364억원(Δ40억원)
- (여유자금운용)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금 1조 1,635억원 (92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 : 8,095억원(751억원) · 여유자금회수 : 6,282억원(Δ732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878억원(Δ46억원) · 기금운영비 500억원(13억원) · 차입금상환 : 364억원(Δ40억원) · 여유자금운용 : 1조 1,635억원(92억원) |
| 1조 4,377억원(19억원) | 1조 4,377억원(19억원) |

<주택신용보증계정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계획 | | '11계획(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14,358 | 14,358 | 14,377 | 19 |
| · 자체수입 | 7,344 | 7,344 | 8,095 | 751 |
| (이자수입) | 1,099 | 1,099 | 1,174 | 75 |
| (금융기관출연금) | 4,404 | 4,404 | 4,918 | 514 |
| (구상채권회수금) | 1,000 | 1,000 | 913 | △87 |
| (신용보증료등) | 807 | 807 | 983 | 176 |
| (기타수입) | 34 | 34 | 107 | 73 |
| · 정부내부수입 | -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7,014 | 7,014 | 6,282 | △732 |

□ 운용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계획 | | '11계획(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14,358 | 14,358 | 14,377 | 19 |
| · 사업비 | 1,924 | 1,924 | 1,878 | △46 |
| (대위변제) | 1,700 | 1,700 | 1,670 | △30 |
| (보증료환급) | 97 | 97 | 111 | 14 |
| (구상권관리) | 127 | 127 | 97 | △30 |
| · 기금운영비 | 378 | 487 | 500 | 13 |
| (기금관리비) | 326 | 435 | 447 | 12 |
| (위탁수수료) | 52 | 52 | 53 | 1 |
| · 차입금상환 | 404 | 404 | 364 | △40 |
| (차입금 원금상환) | 280 | 280 | 280 | - |
| (차입금이자상환) | 124 | 124 | 84 | △40 |
| · 여유자금운용 | 11,651 | 11,543 | 11,635 | 92 |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조달부문 : 332억원(10년 대비 114억원 증가)

○ (자체수입) 여유자금 운용자산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구상채권 회수금 및 신용보증료 등 117억원(54억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매각대금 215억원(60억원)

□ 운용부문 : 332억원(10년 대비 114억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및 구상권관리비 등 4억원(Δ2억원)

○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를 위한 인건비, 기타운영비 및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74억원(12억원)

○ (여유자금운용)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금 254억원 (104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 : 117억원(54억원) · 여유자금회수 : 215억원(6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억원(Δ2억원) · 기금운영비 74억원(12억원) · 여유자금운용 : 254억원(104억원) |
| 332억원(114억원) | 332억원(114억원)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획 | | '11계획(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218 | 218 | 332 | 114 |
| · 자체수입 | 63 | 63 | 117 | 54 |
| (이자수입) | 9 | 9 | 13 | 4 |
| (금융기관출연금) | 1 | 1 | 4 | 3 |
| (구상채권회수금) | 3 | 3 | 4 | 1 |
| (신용보증료등) | 50 | 50 | 96 | 46 |
| (기타수입) | - | - | - | - |
| · 정부내부수입 | -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155 | 155 | 215 | 60 |

□ 운용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획 | | '11계획(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218 | 218 | 332 | 114 |
| · 사업비 | 6 | 6 | 4 | Δ2 |
| (대위변제) | 6 | 6 | 3 | Δ3 |
| (구상권관리) | - | - | 1 | 1 |
| · 기금운영비 | 62 | 62 | 74 | 12 |
| (기금관리비) | 62 | 62 | 74 | 12 |
| (위탁수수료) | - | - | - | - |
| · 차입금상환 | - | - | - | - |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 - |
| · 여유자금운용 | 150 | 150 | 254 | 104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6807호, 2002.12.26)

○ 설치연혁

- 1995. 12. 29 : 예금자보호법 제정
- 1996. 6. 1 : 예금보험기금 설치 및 공사 설립
- 1998. 4. 1 : 예금보험기금 통합
- 2003. 1. 1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설치

□ 설치목적

○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함) 정리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예금보험공사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8.1조원('10년 대비 5.2조원 감소)

- 기초보유자금 3조 683억원, 출자주식 매각대금 1조 6,672억원, 대출금회수 5,543억원, 특별기여금 9,929억원, 상환기금채권 발행 1조 5,000억원 등 총 8.1조원의 재원을 조달
- 상환기금채권 등 원리금 상환 5조 1,810억원, 금융구조조정 지원 755억원, 기금운영비 170억원 등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예보채상환기금 | 132,668 | 80,691 | △51,977 | 예보채상환기금 | 132,668 | 80,691 | △51,977 |

3.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 8.1조원('10년 대비 5.2조원 감소)

- (기초보유자금) 전년 이월 보유자금 3조 683억원
- (회수자금 등) 출자주식 매각 등 2조 5,079억원
- (특별기여금) 특별기여금 수입 9,929억원
- (상환기금채권 발행) 상환기금채권 발행 수입 1조 5,000억원

□ 운용부문 : 8.1조원('10년 대비 5.2조원 감소)

- (채권 등 원리금 상환) 상환기금채 등 원리금 상환
5조 1,810억원
- (금융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법적절차비, 정리자문비용
등 자금지원 755억원
- (기금운영비) 공사운영경비 등 170억원
- (여유자금운용)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금 2조 7,956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 기초보유자금 : 3.1조원 | · 채권 등 원리금 상환 : 5.2조원 |
| · 회수자금 등 : 2.5조원 | · 금융구조조정 : 0.1조원 |
| · 특별기여금 : 1.0조원 | · 기금운영비 : 0.02조원 |
| · 상환기금채 발행 : 1.5조원 | · 여유자금운용 : 2.8조원 |
| 8.1조원 | 8.1조원 |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획(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32,668 | 80,691 | △51,977 |
| · 기초보유자금 | 16,167 | 30,683 | 14,516 |
| · 회수자금 등 | 24,197 | 25,079 | 882 |
| (출자주식 매각) | 18,087 | 16,672 | △1,415 |
| (융자금 회수) | 2,093 | 5,543 | 3,450 |
| (배당금 등) | 3,328 | 2,463 | △865 |
| (이자수입) | 689 | 401 | △288 |
| · 특별기여금 | 8,304 | 9,929 | 1,625 |
| · 상환기금채권 발행 | 84,000 | 15,000 | △69,000 |

□ 운용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획(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32,668 | 80,691 | △51,977 |
| · 채권 원리금 상환 | 90,413 | 50,456 | △39,957 |
| (원금) | 74,400 | 37,300 | △37,100 |
| (이자) | 16,013 | 13,156 | △2,857 |
| · 차관원리금 상환 | 1,422 | 1,354 | △68 |
| (원금) | 1,168 | 1,168 | - |
| (이자) | 254 | 186 | △68 |
| · 금융구조조정 | 5,264 | 755 | △4,509 |
| (출연) | 4,844 | 185 | △4,659 |
| (보험금 지급) | 7 | - | △7 |
| (법적절차비) | 92 | 9 | △83 |
| (정리자문비용 등) | 321 | 561 | 240 |
| · 기금운영비 | 179 | 170 | △9 |
| · 여유자금운용 | 35,390 | 27,956 | △7,434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1997.8.22)

○ 설치연혁

- 1997. 11. 24 : 공사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 2002. 11. 22 : 부실채권정리기금 인수시한 종료
- 2006. 12. 30 :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 5년 연장(2012.11.22)
- 2007. 12. 21 : 기금 잔여재산 배분기준 재설정*

* 기금 출연비율(정부 3.5조원, 86% : 금융회사 0.6조원, 14%)에 따라 배분하고, 운용기간 종료전에 반환 가능

□ 설치목적

-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2조 8,914억원

- 자체수입 1조 5,517억원 및 여유자금회수 1조 3,397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 기금운영비 3,099억원, 정부 및 금융회사에 잔여재산 조기반환 1조 1,054억원을 지출하고 1조 4,761억원을 차기로 이월할 계획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계 | 21,899 | 28,914 | 7,015 | 계 | 21,899 | 28,914 | 7,015 |
| 자체수입 | 18,006 | 15,517 | △2,489 | 기금운영비 | 1,087 | 3,099 | 2,012 |
| 여유자금회수 | 3,893 | 13,397 | 9,504 | 공적자금상환 | 10,500 | 9,500 | △1,000 |
| | | | | 금융기관반환금 | 1,718 | 1,554 | △164 |
| | | | | 여유자금운용 | 8,594 | 14,761 | 6,167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2조 8,914억원('10년 대비 7,015억원 증가)

- (자체수입) 부실채권등처분 및 이자수입 등 1조 5,517억원 (△2,489억원)
- (여유자금회수) 전기이월 여유자금 1조 3,397억원(9,504억원)

□ 운용부문 : 2조 8,914억원('10년 대비 7,015억원 증가)

-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금관리비, 자산관리비 및 자산매각비 등 3,099억원(2,012억원)
- (공적자금상환) 기금 잔여재산 조기배분 9,500억원(△1,000억원)
- (금융기관반환금) 기금 잔여재산 조기배분 1,554억원(△164억원)
- (여유자금운용) 차기이월 여유자금 1조 4,761억원(6,167억원)

<세부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21,899 | 28,914 | 7,015 |
| · 자체수입 | 18,006 | 15,517 | △2,489 |
| (부실채권등처분) | 17,550 | 15,077 | △2,473 |
| (이자수입) | 189 | 356 | 167 |
| (융자원금회수) | 48 | - | △48 |
| (기타수입) | 219 | 84 | △135 |
| · 여유자금회수 | 3,893 | 13,397 | 9,504 |

□ 운용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21,899 | 28,914 | 7,015 |
| · 기금운영비 | 1,087 | 3,099 | 2,012 |
| (인건비) | 67 | 50 | △17 |
| (기금관리비) | 65 | 45 | △20 |
| (자산관리비) | 866 | 2,907 | 2,041 |
| (자산매각비) | 89 | 97 | 8 |
| · 공적자금상환 | 10,500 | 9,500 | △1,000 |
| · 금융기관반환금 | 1,718 | 1,554 | △164 |
| · 여유자금운용 | 8,594 | 14,761 | 6,167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9670호, 2009.5.13)

- 설치연혁

- 2009. 5. 13 : 공사법 개정으로 공사내에 구조조정기금 설치

□ 설치목적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인수·정리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5조 5,751억원

- 자체수입 4,233억원, 기금채권 발행 5조원 및 여유자금회수 1,518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 구조조정지원 5조원, 기금운영비 184억원 및 차입금이자상환에 1,894억원을 지출하고 3,673억원을 차기로 이월할 계획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계 | 106,416 | 55,751 | △50,665 | 계 | 106,416 | 55,751 | △50,665 |
| 자체수입 | 6,380 | 4,233 | △2,147 | 구조조정지원 | 100,000 | 50,000 | △50,000 |
| 차입금(기금채권) | 100,000 | 50,000 | △50,000 | 기금운영비 | 357 | 184 | △173 |
| 여유자금회수 | 36 | 1,518 | 1,482 | 차입금원금상환 | 100 | - | △100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3,565 | 1,894 | △1,671 |
| | | | | 여유자금운용 | 2,394 | 3,673 | 1,279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5조 5,751억원('10년 대비 5조 665억원 감소)

- (자체수입) 부실자산등정리 및 이자수입 등 4,233억원(△2,147억원)
- (차입금)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5조원(△5조원)
- (여유자금회수) 전기이월 여유자금 1,518억원(1,482억원)

□ 운용부문 : 5조 5,751억원('10년 대비 5조 665억원 감소)

- (구조조정지원)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자산 인수 등 5조원(△5조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금관리비, 자산관리비 등 184억원(△173억원)
- (차입금이자상환) 기금채권 이자상환 1,894억원(△1,671억원)
- (여유자금운용) 차기이월 여유자금 3,673억원(1,279억원)

<세부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06,416 | 55,751 | △50,665 |
| · 자체수입 | 6,380 | 4,233 | △2,147 |
| (부실자산등정리) | 6,255 | 4,152 | △2,103 |
| (이자수입) | 34 | 81 | 47 |
| (기타수입) | 91 | - | △91 |
| · 차입금 | 100,000 | 50,000 | △50,000 |
| (기금채권발행) | 100,000 | 50,000 | △50,000 |
| · 여유자금회수 | 36 | 1,518 | 1,482 |

□ 운용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06,416 | 55,751 | △50,665 |
| · 구조조정지원 | 100,000 | 50,000 | △50,000 |
| (금융구조조정지원) | 75,000 | 45,000 | △30,000 |
| (기업구조조정지원) | 25,000 | 5,000 | △20,000 |
| · 기금운영비 | 357 | 184 | △173 |
| (인건비) | 112 | 60 | △52 |
| (기금관리비) | 103 | 89 | △14 |
| (자산관리비) | 134 | 35 | △99 |
| (자산매각비) | 8 | - | △8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3,665 | 1,894 | △1,771 |
| (원금) | 100 | - | △100 |
| (이자) | 3,565 | 1,894 | △1,671 |
| · 여유자금운용 | 2,394 | 3,673 | 1,279 |

2011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II. 일반회계 세입예산

III. 일반회계 세출예산

1. 총 괄

2. 인건비

3. 기본경비

4. 사업경비

5. 내부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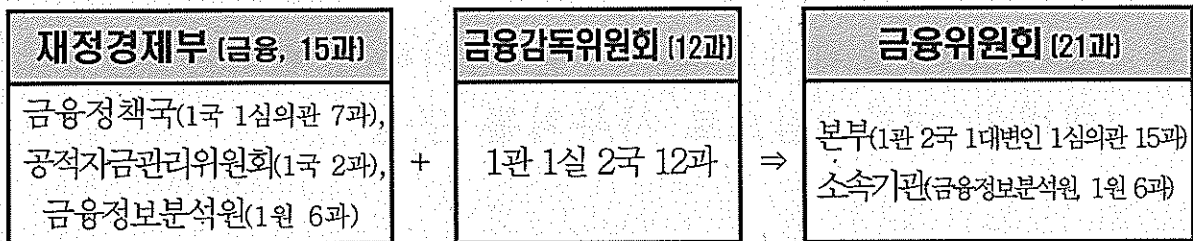
〈별 첨〉 사업별 설명자료

IV. 기금운용계획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10.7.16, 금융서비스국에 서민금융팀 신설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 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사무처)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5과 3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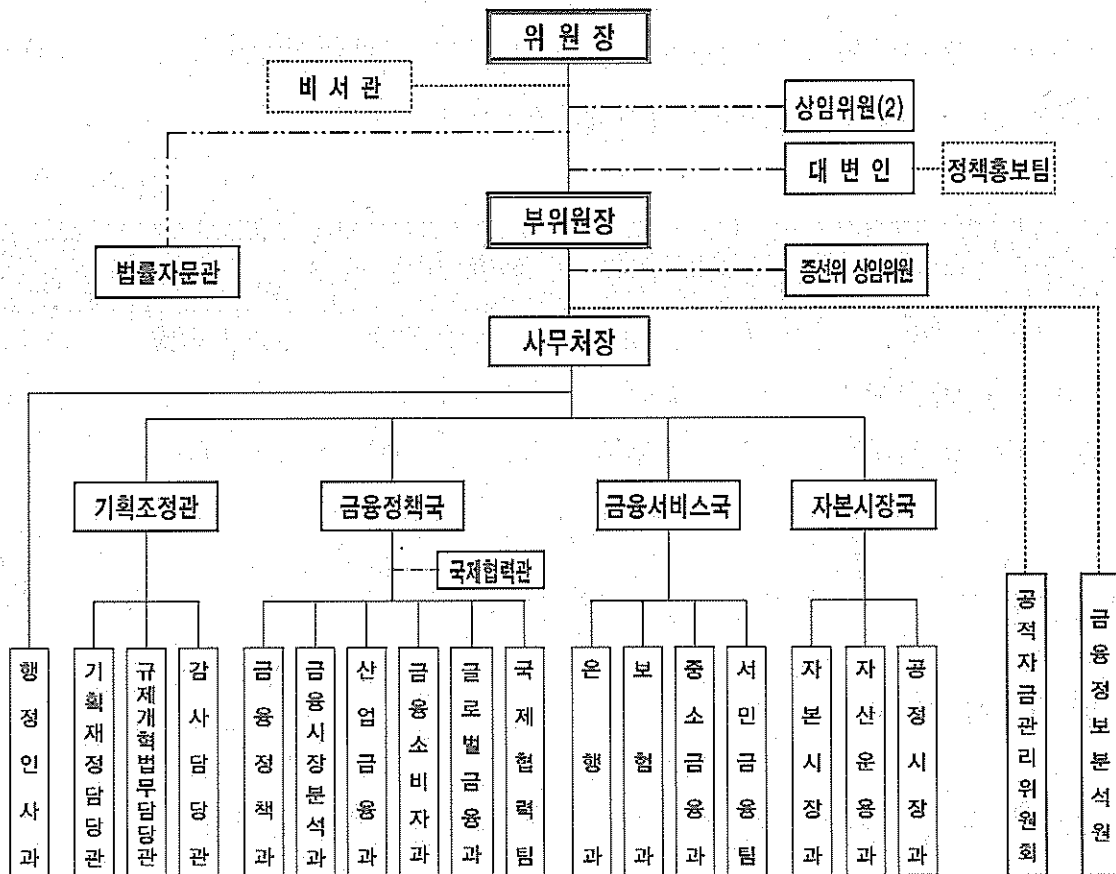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공적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31명

| | 정무직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 |
|---------|-----|-----|-----|-----|-----|-----|
| 합 계 | 2 | 206 | 4 | 7 | 12 | 231 |
| 본부 | 2 | 150 | 4 | - | 11 | 167 |
| 금융정보분석원 | - | 44 | - | 7 | 1 | 52 |
| 공자위 사무국 | - | 12 | - | - | - | 12 |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억원, 세출예산 1조 5,556억원('11년도)

II.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억 10백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14억 83백만원 감소(△12.2%)

(단위 : 백만원)

| 구 분(항)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률 (%) |
|-------------|----------|----------|--------------|------------|
| 합 계 | 12,193 | 10,710 | △ 1,483 | △ 12.2 |
| 전대차관 원금회수 | 1,110 | 1,038 | △ 72 | △ 6.5 |
| 전대차관 이자수입 | 127 | 86 | △ 41 | △ 32.3 |
| 벌 금 및 물 수 금 | 10,875 | 9,500 | △ 1,375 | △ 12.6 |
| 가 산 금 | 81 | 86 | 5 | 6.2 |

□ 주요 증감내역

○ 전대차관 원금 회수('10년 대비 72백만원 감액)

- 기준환율 하락(1,230원 → 1,150원)을 반영

○ 전대차관 이자수입('10년 대비 41백만원 감액)

- 미상환 재전대 원금 감소 및 기준환율 하락(1,230원 → 1,150원) 반영

*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의 IBRD전대차관(8,895,694불) 및 공인회계사회 IBRD전대차관(129,020불)을 '04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벌금 및 물수금('10년 대비 1,375백만원 감액)

- 최근 4년간('06년~'09년) 벌금 및 물수금의 수입액 평균치 반영

○ 가산금('10년 대비 5백만원 증액)

- 최근 4년간('06년~'09년) 가산금 수입액 평균치 반영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

1. 총 괄

□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556억 31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대비 1조 5,907억 60백만원 감소(50.6% 감)

- 금융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1,031억원으로
전년대비 28.0% 감소(특별 설비투자펀드 지원에 따른 자본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산은·기은 출자 400억원 등 삭감)
-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1조 4,494억원을 반영(전년대비 51.7%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3,146,391 | 1,555,631 | △1,590,760 | △50.6 |
| □ 금융위원회 운영 | 143,103 | 103,100 | △40,003 | △28.0 |
| ○ 인 건 비 | 15,028 | 16,350 | 1,322 | 8.8 |
| ○ 기 본 경 비 | 7,141 | 7,462 | 321 | 4.5 |
| ○ 사 업 비 | 120,934 | 79,288 | △41,646 | △34.4 |
| □ 내부 거래 | 3,003,288 | 1,452,531 | △1,550,757 | △51.6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 3,000,000 | 1,449,353 | △1,550,647 | △51.7 |
| ○ IBRD차관 원금 상환 | 2,948 | 2,754 | △194 | △6.6 |
| ○ IBRD차관 이자 상환 | 340 | 424 | 84 | 24.7 |

2. 인 건 비

- 2011년 인건비 예산은 163억 50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대비 13억 22백만원 증가(8.8%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15,028 | 16,350 | 1,322 | 8.8 |
| ○ 인 건 비 | 14,111 | 15,400 | 1,289 | 9.1 |
| ○ 직무수행경비 | 917 | 950 | 33 | 3.6 |

□ 증감 주요내역

- 서민금융팀 정원증가(5명) 및 처우개선 인상분 반영

3. 기본경비

- 2011년 기본경비 예산은 74억 62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 대비 3억 21백만원 증가(4.5%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7,141 | 7,462 | 321 | 4.5 |
| ○ 기획조정관실 | 5,550 | 5,628 | 78 | 1.4 |
| ○ 대변인실 | 185 | 271 | 86 | 46.5 |
| ○ 금융정책국 | 370 | 407 | 37 | 10.0 |
| ○ 금융서비스국 | 289 | 358 | 69 | 23.8 |
| ○ 자본시장국 | 287 | 310 | 23 | 8.0 |
| ○ 공자위사무국 | 459 | 489 | 30 | 6.5 |

□ 증감 주요내역

- 서민금융팀 신설(53), 금융발전심의회 운영비(99), 뉴스콘텐츠 통합이용시스템 활용(50) 등

4. 사업경비

□ 2011년 사업경비 예산은 792억 88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 대비 416억 46백만원 감소(34.4%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120,934 | 79,288 | △41,646 | △34.4 |
| ○ 금융업법체계개편 | 79 | 71 | △8 | △10.1 |
| ○ 금융소비자 보호 | - | 128 | 128 | 신규 |
| ○ 녹색금융 | 150 | - | △150 | 종료 |
| ○ 금융중심지추진 | 298 | 213 | △85 | △28.5 |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 500 | 510 | 10 | 2.0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 637 | 573 | △64 | △10.0 |
| ○ 금융전문인력양성 | 1,900 | 1,350 | △550 | △28.9 |
| ○ 저축의날행사및저축장려 | 74 | 60 | △14 | △18.9 |
| ○ 한국산업은행출자 | 10,000 | - | △10,000 | 종료 |
| ○ 중소기업은행출자 | 30,000 | - | △30,000 | 종료 |
| ○ 모기지론이차보전 | 4,563 | 4,700 | 137 | 3.0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기금출연 | 65,200 | 63,700 | △1,500 | △2.3 |
| ○ 금융정보분석원 운영 | 1,256 | 1,295 | 39 | 3.1 |
| ○ FIU전산망구축운영 | 4,656 | 4,623 | △33 | △0.7 |
| ○ APG 유형론 실무회의 | - | 430 | 430 | 신규 |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21 | 113 | △8 | △6.6 |
| ○ 정보화지원 | 570 | 542 | △28 | △4.9 |
| ○ 정책연구개발 | 600 | 650 | 50 | 8.3 |
| ○ 금융정책알리기 | 330 | 330 | - | - |

□ 증감 주요내역

- 설비투자펀드 운영에 따른 산은·기은의 자본금 손실보전을 위해 '10년도 한시적으로 편성되었던 출자예산(400억원) 삭감

* 정부 차원의 「재정지출생산성 제고」 추진 노력 반영

-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 APG 유형론 실무회의, 정책연구 개발을 신설 또는 증액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11년 내부거래 예산은 1조 4,525억 31백만원으로 10년도 예산대비 1조 5,507억 57백만원 감액(51.6%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합 계 | 3,003,288 | 1,452,531 | △ 1,550,757 | △ 51.6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 3,000,000 | 1,449,353 | △ 1,550,647 | △ 51.7 |
| ○ IBRD차관 원금 상환 | 2,948 | 2,754 | △ 194 | △ 6.6 |
| ○ IBRD차관 이자 상환 | 340 | 424 | 84 | 24.7 |

□ 증감 주요내역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10년 대비 51.7% 감액된 1조 4,494억원)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대한 상환규모 축소로 인해 감액
- IBRD차관 원리금 상환('10년 대비 3% 감액된 31억 78백만원)
 - 기준환율 하락(1,230원 → 1,150원), '04년부터 원금 상환(매년 약 240만불)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 등 반영

<별첨> 사업별 설명자료

【금융정책국】

1. 금융소비자 보호
2. 금융업법 체계개편
3. 금융관련 국제협력
4. 금융중심지추진
5.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6. 금융전문인력 양성
7. 모기지론 이차보전

【금융서비스국】

8.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금융정보분석원】

10. APG유형론 실무회의
11. FIU운영
12.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기획조정관】

13. 정보화 지원(정보화)
14. 정책연구개발

【대변인】

15. 금융정책알리기

【행정인사과】

16.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7.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18.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1 금융소비자 보호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 | - | 128 | 12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제도·관행을 점검·개선하고, 체계적 금융소비자교육 추진을 목표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사업내용

- 금융소비자 관련 현황 조사
 - 금융상품 판매관행·소비자인식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화설문·면접 등을 통한 시장조사 실시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인 '금융교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금융소비자 교육자료 제작
 -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투자자, 금융소외계층 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신규법령·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교육 콘텐츠 제작

2 금융업법 체계개편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64 | 79 | 71 | △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업종별 금융업법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고 규제합리화와 제도개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를 이룩함

□ 사업내용

- 시장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능별 통합작업을 추진

< 금융업법 체계개편의 단계 >

| 단계 | ① 업권별 통합법 제정 (1단계) | ② 기능별 법 통합 작업 (2단계) | ③ 금융통합법 체계 (최종단계) |
|------|--|--|-----------------------------|
| 정비목적 | ■ 기능별 통합에 앞서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 수준 및 형식을 단일한 기준으로 정비 | ■ 1단계 정비를 바탕으로 유사한 규제를 기능별로 통합 | ■ 2단계 정비를 바탕으로 금융통합법 체계를 마련 |
| 과제 | - 자본시장법 제정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 → 완료 - 은행법·보험업법 정비 | -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회사경영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진입·퇴출에 관한 법 등 제정 | |

- 또한 G-20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국제적 규제·감독 정책 논의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법령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3 금융관련 국제협력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267 | 637 | 573 | △64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근 국제금융환경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감독기구 활동 등 글로벌스탠다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한 국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각종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적극적인 이해관계 반영 필요성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비하여, FTA체결 다변화를 통한 실용적·능동적 개방 및 FTA·WTO 등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
- 최근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투자자 설명회(IR) 개최 등의 지속적인 추진

4

금융중심지추진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77 | 298 | 213 | △85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사업내용

-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의 국제화,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 및 국내금융시장 진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 추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완·개선 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법적 추진체계를 공고화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와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

5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450 | 500 | 510 | 1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경영환경 개선 등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

□ 사업내용(중심지법 §13 ①)

-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진입지원
 - 외국사 등의 국내 영업상 불합리한 제도, 애로사항 원스탑 서비스 지원 및 외국계 금융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화채널 운영
 - 금융관련 법령,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대한 영문화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영문법규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 외국의 법규·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제공(데이터베이스화)
-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세제, 출입국, 교육 등 행정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및 영어전문인력을 통한 고충처리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408 | 1,900 | 1,350 | △55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금융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민간의 경우 아직 녹색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음
- 따라서 녹색금융 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 사업내용

- 녹색금융특화 MBA로 선정된 대학(KAIST와 고려대)에서 녹색금융 강좌가 개설·운영되도록 학생장학금 및 과정운영비 등을 지원

7 모기지론 이차보전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안(B) | 증감(B-A) |
|-------|----------|-----------|---------|
| 2,710 | 4,563 | 4,700 | 137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모기지론의 이차를 보전

☐ 사업내용

-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하여 모기지론 금리를 차등 (0.5~1.0%p) 우대
 - '05.10.31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출시 (1년간 한시 판매)
 - '07.8.27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재개

< 소득수준별 금리우대 내역 >

| 구 분 | 차입자 연소득 | | |
|-----------|----------|---------------------|---------------------|
| | 16백만원 이하 | 16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 20백만원 초과 ~ 25백만원 이하 |
| 모기지론 기준금리 | 만기별 기준금리 | | |
| 이차보전금리 | 1.0% | 0.75% | 0.5% |

8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54 | 74 | 60 | △14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홍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저축의식을 고양하고, 국내투자재원의 조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내실있는 경제성장을 도모

□ 사업내용

- 한국은행이 적자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이관을 요청해옴에 따라 '08년부터 동 업무를 우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
- 건전한 소비문화와 더불어 건전한 저축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금융자원의 원활한 유통 증진
- 저축유공자 포상을 매년도 기념행사와 더불어 실시하여 저축 미담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며, 어린이 금융생활길잡이 등 저축 교육 실시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65,000 | 65,200 | 63,700 | △1,50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출연

* 일반농어민 : 연 1.5 ~ 2.5%, 저소득농어민 : 연 6.0 ~ 9.6%

☐ 사업내용

- '11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예상소요액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 의거 정부는 매년도 마다 저축장려금 예상소요액의 1/2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

10 APG유형론 실무회의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 | - | 430 | 43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신의 자금세탁 유형·기법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 및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11년도 APG 유형론 실무회의의 국내 개최

* APG(Asia-Pacific Group)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아·태 지역기구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의 이행감독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일시/장소 : '11. 10. 31.(월) ~ 11. 2.(수) 3일간 / 서울 (잠정안)
- 참석인원 : 40개 APG회원국 및 IMF등 국제기구 관계자 250여명
- 주요 프로그램
 - 개·폐막식 및 APG 유형론 실무그룹 회의/공동프로젝트 발표
 - 각국의 최신 자금세탁기법/유형에 대한 세미나 등
- 개최비용 : 효과적인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장/부대시설과 국제관행에 따른 공식만찬·다과 등 필수적 소요만을 반영
 - 예산·인력에 있어서 낭비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국제회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

11 금융정보분석원(FIU) 운영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089 | 1,256 | 1,295 | 39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 지원
- FATF가입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 기준을 관련 제도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격을 제고

□ 사업내용

- 테러자금조달 억제와 관련한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자금 세탁방지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
 - 비정규직 보수 : 98백만원
 - 관서운영비 : 455백만원
 - 여비 : 221백만원
 - 업무추진비 : 6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 155백만원
 - 해외경상이전(국제분담금) : 283백만원
 - 비정규직 보험료, 자산취득비 등 : 20백만원

12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4,688 | 4,656 | 4,623 | △33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금융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심사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에 따른 특정금융거래 정보증가 및 정보분석·제공 환경 변화에 따른 FIU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 사업내용

-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의 효과적 차단을 지원하기 위한 FIU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운영 지원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유출·위변조·해킹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와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급격히 증가하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요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개선
- 정보분석 신속처리 지원을 위한 노후 장비 및 S/W 교체
- 세부사업 내용
 - 장비 임차료 : 2,431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874백만원
 - 위탁사업 및 연구개발 : 1,222백만원
 - 전산망 전용회선료 : 40백만원
 - 노후 장비 교체 등 : 56백만원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585 | 570 | 542 | △2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도모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내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및 정보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금융위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관리 실시
 - * 공정위,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위탁운영 실시
- 전용회선 사용료 및 보안USB, 프린터 공유기 등 전산소모품 구입
- 노후화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및 업무용 S/W 도입
-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수준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통한 정보보안 취약부분 개선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499 | 600 | 650 | 5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정책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수행을 통하여 정책수립·집행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 합리화 방안
- 금융회사 진입·퇴출에 관한 법률안 검토
-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체계 구축 방안
- 글로벌 금융개편 논의와 예보의 역할 재정립 방안
- 보험정보의 효율적 관리·보호 및 감독방안
- 보험사 상장이 보험산업 및 감독정책에 미치는 영향
- 자본시장인프라 중장기 발전 방안(매매, 청산·결제, 예탁, 전산 등)
-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업의 비전과 발전방안
- 회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방안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거래 제도 개선방안 등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192 | 330 | 330 | -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정책을 금융시장의 공급자인 금융업계와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건전한 금융산업 육성과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코자 함
- 특히 금융소외자들의 자활을 돕는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대국민홍보를 집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도 중점적으로 홍보코자 함

□ 사업내용

- 저비용 고효율의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
- 타겟별 유효매체를 적절히 선정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
- 스마트폰을 비롯한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을 통해 국민체감형 정책홍보를 집행
- 금융업권별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대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을 집행
- 사금융 피해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아이템으로 하는 기획홍보 및 계도광고 집행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91 | 121 | 113 | △8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직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계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사업내용

- 직장교육, 어학 등 공통역량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의 행정효율성 제고
- 전 직원 및 직급별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 간 소통과 조직의 일체감 형성 도모
- 정부업무평가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수행으로 각종 정책추진에 기여한 자를 발굴·포상하여 전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성과 향상 유도

17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3,611 | 3,288 | 3,178 | △11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98년 IBRD로부터 전대차관자금을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증권시장 선진화,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기술지원차관의 원리금 상환

□ 사업내용

- 원금상환 : 2,754백만원
- 이자상환 : 4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직조원금(\$) | 2011년도 상환규모 | | |
|--------------------|------------|-------------|-------|-------|
| | | 계(A+B) | 원금(A) | 이자(B) |
| 합 계 | 23,959,720 | 3,178 | 2,754 | 424 |
| 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지원 등 | 23,542,703 | 3,122 | 2,707 | 415 |
| ② 증권시장발전연구 | 168,737 | 22 | 19 | 3 |
| ③ 회계감사제도개선 | 248,280 | 32 | 28 | 4 |
| ④ 수수료 | - | 1 | - | 1 |

18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09결산 | '10예산(A) | '11예산(B) | 증감(B-A) |
|--------|-----------|-----------|------------|
| 78,660 | 3,000,000 | 1,449,353 | △1,550,647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위기 이후 집행된 공적자금의 채무상환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제고

□ 사업내용

- 정부보증채(예보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 만기도래액*중 재정 부담분 49조원('02말 기준)을 국채로 전환**하고

* 공적자금 부채 97조원('02말 기준)중 회수 가능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은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49조원 및 20조원 분담

** 국채 전환(49조) : (03년) 13조, (04년) 12조, (05년) 12조, (06년) 12조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지원받아 25년(2003년~2027년) 이내에 상환
- 적정수준의 일반회계 출연이 안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하여 부족자금을 충당하여야 하며, 25년간('03~'27) 일반회계(재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전출)할 예정

IV. 기금운용계획

| |
|-----|
| 목 차 |
|-----|

1. 공적자금상환기금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3. 신용보증기금
4. 기술신용보증기금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부실채권정리기금
9. 구조조정기금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설치연혁
 - 2002. 12. 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
 - 2002. 12. 30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정
 - 2003. 01. 01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개시

□ 설치목적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담한 공적자금 채무 중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재정이 부담하기로 한 액면가액 기준으로 원리금 49조원에 대한 원활한 상환

□ 사업내용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보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중 정부부담분 49조원을 국채로 전환*하여 상환하고

* 국채전환 : ('03년) 13조, ('04년) 12조, ('05년) 12조, ('06) 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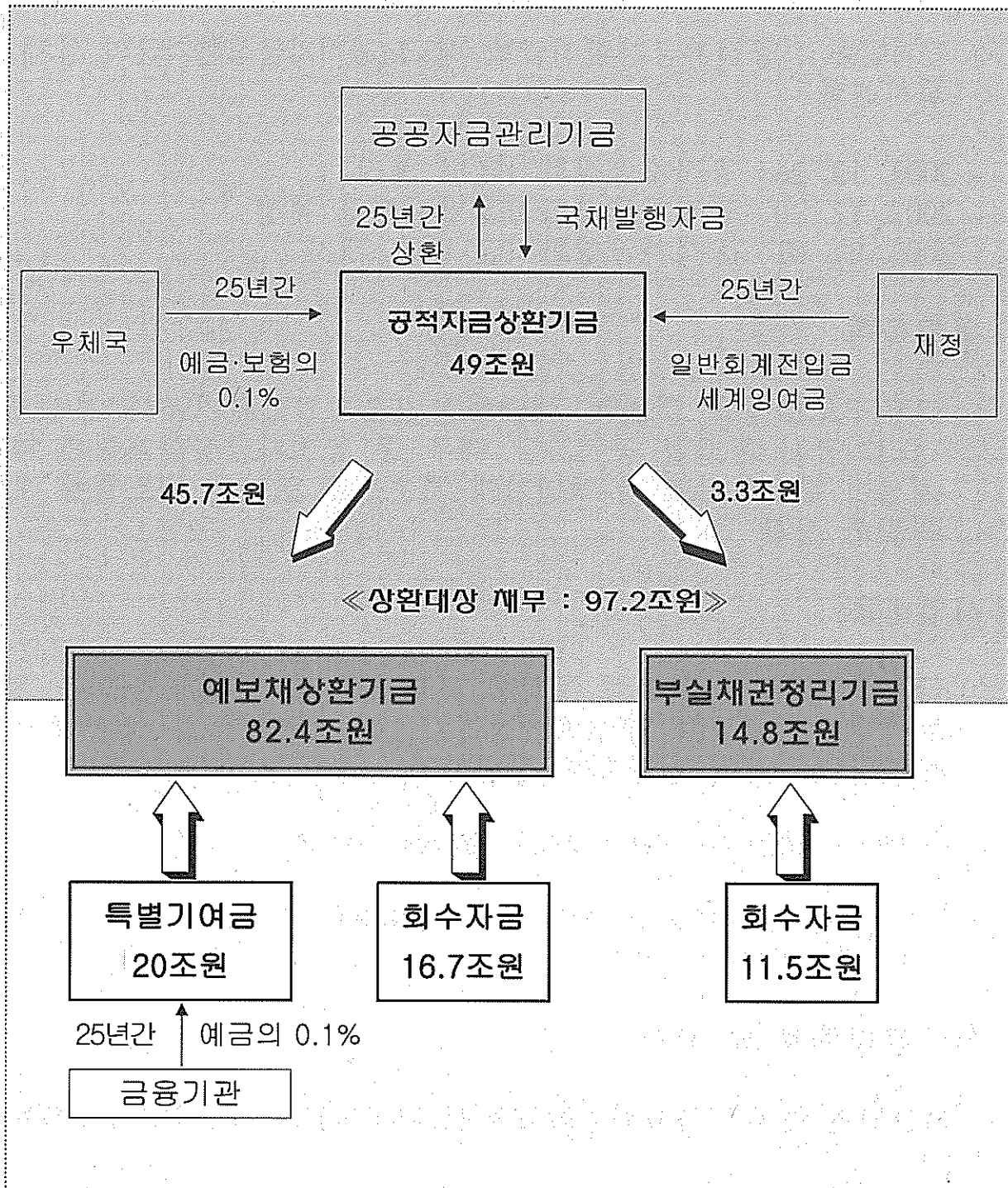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02말 현재가치기준)을 지원받아 25년 이내에 상환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 주체 :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 위탁 관리기관 : 한국은행(국고증권실 증권팀)

공적자금 상환체계도

재정출연을 통한 상환체계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일반회계 전입금 1조 4,494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6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9,500억원 등 총 2조 4,685억원을 조달하여 2011년 만기도래하는 예수이자 상환 등에 2조 4,685억원을 운용

(단위 : 백만원)

| 조 달 | | 운 용 | |
|------------------------------|-----------|---------------|-----------|
| ○ 기타 재산수입 (여유자금 운용수익) | 3,099 | ○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 2,468,470 |
| ○ 일반회계 전입금 | 1,449,353 | - 원금 상환 | - |
| ○ 우체국 예금·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 66,029 | - 이자 상환 | 2,468,470 |
| ○ 공공기금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 950,000 | ○ 기금관리비 | 11 |
| ○ 공자기금 예수금 | - | | |
| 계 | 2,468,481 | 계 | 2,468,481 |

3. 조달 · 운용 계획

가. 조달계획

- 재산수입 : 3,099백만원

-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의 유입시점과 공적자금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시점의 단기 시차로 인해 일시 보유하는 여유자금 운용수익

○ 운용자금

① 일반회계

: 1,449,353백만원 * 2.25%(10년 7월말 기준금리)*10/365 = 893백만원

② 특별회계 전입금 및 공공기금전입금 등

: 1,016,029백만원 * 2.73%(10년 7월말 MMDA 등 평균금리)*29/365 = 2,204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 1,449,353백만원

- '11년에는 상환해야 할 만기원금이 없기는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2조 4,685억원의 집행이 필요하므로
- 수입재원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9,5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660억원, 기타재산수입 31억원 외에 부족한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출연실적 현황>

(단위 : 조원)

| | ' 03 | ' 04 | ' 05 | ' 06 | ' 07 | ' 08 | ' 09 | ' 10 | 소계 | ' 11 계획 | ' 12 계획 | ' 13 계획 | ' 14 계획 |
|----------|------|-------|------|------|-------|------|-------|------|-------|------------|------------|------------|------------|
| 상환계획(A) | 2.0 | 2.1 | 2.3 | 2.4 | 2.6 | 2.7 | 2.9 | 3.1 | 20.1 | 3.3 | 3.5 | 3.8 | 4.0 |
| 실 적(B) * | 2.1 | 0.25 | 1.3 | 3.4 | 0.02 | 3.0 | 1.37 | 3.8 | 15.24 | 1.45 | 1.25 | 3.8 | 4.0 |
| B - A | 0.1 | -1.85 | -1.0 | 1.0 | -2.58 | 0.3 | -1.53 | 0.7 | -4.86 | -1.85 | | | |

* 세계잉여금 포함(06년 : 0.38조원, 08년 : 2.98조원, 09년 : 1.3조원, 10년 0.8조원)포함

□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 66,029백만원

| 구 분 | 산출산식 |
|---------------|--|
|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산식 : (2010년도 예금수신고 × 1/1,000)+전년결산차액 ▪ 산출내역 : 44,542백만원=(43,038(43,038,713×1/1,000)+1,504('10년도 결산차액)) |
|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산식 : ('10년 책임준비금 + '10년도 예상 수입보험료)/2×1/1,000+전년결산차액 ▪ 산출내역 : 21,487백만원=(28,035,000백만원+6,029,400백만원)/2×1/1,000 +4,455백만원('10년도 결산차액) |

□ 공공기금전입금 : 950,000백만원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9,500억원 전입

나. 운용계획

□ 기금운영비 : 11백만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인쇄비, 여유자금 운용거래 수수료 등

□ 예수이자상환 : 2,468,470백만원

- 2011년도에 상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1. 개 요

☐ 설치근거법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3797호, '85.12.23 제정) 제7조

☐ 설치연혁

- 1976.3.30 농수산부, 재무부 합의
- 1985.12.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되어 1986년부터 업무 개시
- 2009년까지 약 24,282억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 설치목적

-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 주요사업내용

- 정부출연금, 한국은행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저축자에 대한 저축원리금 상환시 저축장려금을 지급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금융위원회
- 관 리 방 식 : 한국은행에 위탁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 및 운용규모

- 총 1,542억원으로 10년(1,569억원) 대비 1.7% 감소

□ 주요내역

- <조달부문> 정부출연금 637억원, 한은출연금 633억원, 여유자금회수 268억원, 기금운용수익 4억원으로 기금 재원을 조달
- <운용부문> 저축장려금 1,274억원 지급 및 여유자금운용 269억원 등으로 기금 운용

(단위 : 백만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156,937 | 154,228 | △2,709 | ■ 합계 | 156,937 | 154,228 | △2,709 |
| 정부출연금 | 65,200 | 63,700 | △1,500 | 저축장려금 | 130,357 | 127,360 | △2,997 |
| 한은출연금 | 63,100 | 63,300 | 200 | 기금운영비 | 1 | 1 | - |
| 기금운용수익 | 557 | 449 | △108 | 여유자금운용 | 26,579 | 26,867 | 288 |
| 여유자금회수 | 28,080 | 26,779 | △1,301 | | | |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1,542억원(10년 대비 17억원 감소)

- 일반회계전입금(63,700백만원)
- 한국은행 출연금(63,300백만원)
- 기금운용수익(449백만원) :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액
- 기타 여유자금 회수
 - 한국은행예치금 회수(9백만원) : 전년도말 이월 한은 예치금 잔액
 - 여유자금 회수(26,770백만원) : 전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운용중인 기금 여유자금 잔액

□ 운용부문 : 1,542억원(10년 대비 17억원 감소)

- 저축장려금 지급(127,360백만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기본금리(5.5%)외에 저축장려금리*를 추가 제공

* 일반농어민 : 연 1.5~2.5%, 저소득농어민 : 연 6.0~9.6%

- 여유자금 운용(26,867백만원) : 자금의 유입 및 지급시기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여유자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운용하여 기금수익 증대

<참 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 1976년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동 저축제도 신설(85.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리를 추가 제공

<저축기간 및 농어가소득에 따른 지급금리>

| 저축 기간 | 기 본 금리(%) | 법정장려금리(%) | | 지급금리(합계) | |
|----------|--------------|-----------|---------|----------|--------|
| |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 3년 | 5.5 | 1.5 | 6.0 | 7.0 | 11.5 |
| 5년 | 5.5 | 2.5 | 9.6 | 8.0 | 15.1 |

* 예) 농민의 경우, 일반: 1ha~2ha, 저소득: 1ha이하 농지 소유자

- 법정장려금 재원의 50%이상 정부 부담*(나머지는 한은 부담)

* '10년도의 경우 정부는 652억원 출연 계획

□ 저축한도 : 월 12만원(저소득 농어민은 월10만원)

□ 운영실적(09말) : 저축계좌 47.4만좌, 저축불입액 1.4조원

□ 취급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조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황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취급근거 | ○'76.3.30 : 농수산부, 재무부 합의 ○'85.12.23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 | | | | | | | |
| 실시기간 | ○'76. 4. 1 ~ 계 속 | | | | | | | | | |
| 취급기관 | ○ 단위농업협동조합, 수협 | | | | | | | | | |
| 가입대상 | 구 분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 | | | | | |
| | 농 민 | 1ha초과~2ha이하 농지소유 경작농민 | 1ha 이하 농지소유, 경작, 타인농지 임차 경작 농민 | | | | | | | |
| | 어 민 | 20톤이하 동력선 소유어민 | 무동력선 및 비어선 사용어민 | | | | | | | |
| | 양축가 | 젖소 20마리 이하등 일정규모의 가축소유 양축가 | 일반농어민의 1/2이하의 가축소유, 사육양축가 | | | | | | | |
| 가입한도 | 구 분 3년·5년 | 일반농어민 월12만원 이하 | 저소득농어민 월10만원 이하 ('95.6.16까지는 월6만원 이하) | | | | | | | |
| 이자율 및 장려금 | 년 수 | 기본금리 | 장려금리 | 계 | | | | | | |
| | 3 년 | 5.5 | 1.5(6.0) | 7.0(11.5) | | | | | | |
| | 5 년 | 5.5 | 2.5(9.6) | 8.0(15.1) | | | | | | |
| * 기본금리인하('01.12.10) 7.0% → 5.5%, ()안은 저소득농어민 | | | | | | | | | | |
| 장려금재원 (=기금재원) | ○ 정부출연금, 한국은행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 | | | | | | | | | |
| 저축가입실적 (천좌, 억원) | 구좌수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 | 855 | 824 | 795 | 742 | 659 | 604 | 567 | 523 | 474 |
| | 불입액 | 19,279 | 20,905 | 21,498 | 21,363 | 18,450 | 16,378 | 16,561 | 15,415 | 14,177 |
| 법정장려금 지급액(억원) |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 | 1,884 | 1,229 | 1,260 | 1,617 | 2,022 | 1,873 | 1,270 | 1,356 | 1,290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2695호, 1974.12.21)

○ 설치연혁

- 1961. 7. 1 :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
- 1974. 12. 21 :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 1976. 6. 1 : 신용보증기금 창립

□ 설치목적

○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용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신용보증기금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4.6조원('10년 대비 0.4조원 증가)

- 보증료수입, 구상권회수 등 자체수입 2조 2,765억원, 여유자금회수 2조 3,480억원으로 총 4조 6,245억원을 조달하여,
- 대위변제 등 사업비 2조 4,252억원, 기금운영비 3,100억원, 여유자금 1조 8,893억원 등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42,206 | 46,245 | 4,039 | ■ 합계 | 42,206 | 46,245 | 4,039 |
| ① 자체수입 | 21,857 | 22,765 | 908 | ① 사업비 | 25,944 | 24,252 | △1,692 |
| ② 정부출연 | - | - | - | ② 기금운영비 | 2,898 | 3,100 | 202 |
| ③ 여유자금회수 | 20,349 | 23,480 | 3,131 | ③ 여유자금운용 | 13,364 | 18,893 | 5,529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4.6조원('10년 대비 0.4조원 증가)

- (자체수입) 보증료수입, 구상권회수, 금융기관출연금, 이자수입 등 2.3조원(+908억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유가증권 매각 등 2.3조원(+3,131억원)

□ 운용부문 : 4.6조원('10년 대비 0.4조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기타사업비 등 2.4조원(△1,692억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0.3조원(+202억원)
- (여유자금운용) 금융기관예치, 채권매입 등 1.9조(+5,529억원)

<세부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 계획 (A) | '11 계획 (B) | 증감(B-A) |
|-----------|---------------|---------------|---------|
| 합 계 | 42,206 | 46,245 | 4,039 |
| ▪ 자체수입 | 21,857 | 22,765 | 908 |
| (신용보증료) | 5,547 | 5,678 | 131 |
| (구상권회수) | 6,180 | 6,199 | 19 |
| (금융기관출연금) | 8,078 | 8,086 | 8 |
| (이자수입) | 1,630 | 2,250 | 620 |
| (기타수입) | 422 | 552 | 130 |
| ▪ 정부출연금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20,349 | 23,480 | 3,131 |

☐ 운용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 계획 (A) | '11 계획 (B) | 증감(B-A) |
|----------|---------------|---------------|---------|
| 합 계 | 42,206 | 46,245 | 4,039 |
| ▪ 사업비 | 25,944 | 24,252 | △1,692 |
| (대위변제) | 24,261 | 22,608 | △1,653 |
| (보증연계투자) | 100 | - | △100 |
| (기타사업비) | 1,583 | 1,644 | 61 |
| ▪ 기금운영비 | 2,898 | 3,100 | 202 |
| (인건비) | 1,762 | 1,858 | 96 |
| (기타운영비) | 1,136 | 1,242 | 106 |
| ▪ 여유자금운용 | 13,364 | 18,893 | 5,529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3866호, 1986.12.26)
- 연혁
 - 1989. 4 :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 1999. 2 :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 2004. 8 : 총 보증지원 100조원 돌파
 - 2005. 4 : 중앙기술평가원 개원
 - 2005. 7 : 新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 2007. 1 : 보증프로세스를 기술평가보증으로 일원화
 - 2010. 6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4년연속)

☐ 설치목적

- 기술보증제도의 정착·발전으로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로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사업화 및 성장 지원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기술보증기금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 · 운용 규모 : 2조 5,067억원('10년 대비 4,246억원 증가)

- 자체수입 1조 606억원, 여유자금회수 1조 4,461억원으로 총 2조 5,067억원을 조달하여,
- 사업비 1조 1,807억원, 기금운영비 1,626억원, 여유자금운용 1조 1,634억원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계 획 | | | | 운 용 계 획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합계 | 20,821 | 25,067 | 4,246 | 합계 | 20,821 | 25,067 | 4,246 |
| 자체수입 | 10,911 | 10,606 | △305 | 사업비 | 14,134 | 11,807 | △2,327 |
| 정부출연금 | - | - | - | 기금운영비 | 1,434 | 1,626 | 192 |
| 여유자금회수 | 9,910 | 14,461 | 4,551 | 여유자금운용 | 5,253 | 11,634 | 6,381 |

3.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 2조 5,067억원('10년 대비 4,246억원 증가)

- (자체수입) 금융기관출연금, 이자수입, 구상채권회수, 보증료수입, 기타수입 등 1조 606억원(△305억원)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0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 및 국공채 회수 등 1조 4,461억원(+4,551억원)

□ 운용부문 : 2조 5,067억원('10년 대비 4,246억원 증가)

- (사업비) 기보대위변제, 중소기업투자, 구상권관리, 기술평가, 본점 신축, 보증료환급 등 1조 1,807억원(△2,327억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1,626억원(+192억원)
- (여유자금운용)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폴 투자 등 1조 1,634억원(+6,381억원)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억 원)

| 구 분 | '10 계익(A) | '11 계익(B) | 증감(B-A) |
|-----------|-----------|-----------|---------|
| 합 계 | 20,821 | 25,067 | 4,246 |
| ○ 자체수입 | 10,911 | 10,606 | △ 305 |
| (금융기관출연금) | 4,664 | 4,550 | △ 114 |
| (이자수입) | 678 | 634 | △ 44 |
| (구상채권회수) | 2,900 | 2,587 | △ 313 |
| (보증료) | 2,451 | 2,520 | 69 |
| (기타수입) | 218 | 315 | 97 |
| ○ 정부출연금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9,910 | 14,461 | 4,551 |

☐ 운용부문

(단위: 억 원)

| 구 분 | '10 계익(A) | '11 계익(B) | 증감(B-A) |
|----------|-----------|-----------|---------|
| 합 계 | 20,821 | 25,067 | 4,246 |
| ○ 사 업 비 | 14,134 | 11,807 | △ 2,327 |
| (대위변제) | 13,008 | 10,633 | △ 2,375 |
| (중소기업투자) | 100 | 100 | - |
| (기보운영) | 1,026 | 1,074 | 48 |
| ○ 기금운영비 | 1,434 | 1,626 | 192 |
| (인건비) | 908 | 958 | 50 |
| (기타운영비) | 526 | 668 | 142 |
| ○ 여유자금운용 | 5,253 | 11,634 | 6,381 |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개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법률 제2277호, 1971. 1.13)
- 설치연혁
 - 1971. 1. 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법률 제2277호) 제정
 - 1972. 3. 20 농협중앙회 기금출연(1억원)으로 업무개시
 - 1972. 11. 3 정부 기금출연(1억원)
 - 1999. 2. 5 보증 대상자, 대상자금, 금융기관 확대
 - 2000. 12. 30 업무위탁 근거조항 신설

□ 설치목적

-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을 위하여 그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농협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제4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①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관리기관)①기금의 운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를 취급한다.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① 조달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구상채권회수금, 수입보증료 등 자체 수입으로 4,886억원을 조달
- 정부내부수입(기타특별회계전입금) 없음
- 유가증권매각대금 및 정부예금회수 등으로 1조 9,521억원을 조달

② 운용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신용보증료환급, 소송및법적절차비용 등 사업비로 3,375억원 운용
- 기금운영을 위한 기금운영비로 604억원 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국채외채권매입 등 여유자금으로 2조 427억원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15,736 | 24,406 | 8,670 | ■ 합계 | 15,736 | 24,406 | 8,670 |
| ① 자체수입 | 4,801 | 4,886 | 84 | ① 사업비 | 7,565 | 3,375 | △4,190 |
| ② 정부내부수입 | 1,200 | 0 | △1,200 | ② 기금운영비 | 541 | 604 | 62 |
| ③ 여유자금회수 | 9,734 | 19,521 | 9,786 | ③ 여유자금운용 | 7,629 | 20,427 | 12,798 |

3. 조달·운용 계획

가. 총괄

□ 조달부문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자체수입)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및 구상채권회수금 수입보증료 등 4,886억원(84억원)

* 여유자금 이자수입('10년 456억원 → '11년 1,091억원)
 금융기관출연금('10년 1,975억원 → '11년 1,804억원)
 구상채권회수금('10년 1,750억원 → '11년 1,431억원)
 수입보증료 등 ('10년 620억원 → '11년 559억원)

○ (정부내부수입)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0원(△1,200억원)

○ (여유자금회수) 유가증권매각대금 등 1조 9,521억원(9,786억원)

□ 운용부문 : 2조 4,406억원('10년 대비 8,670억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신용보증료환급, 소송 및 법적절차비용 등 3,375억원(△4,190억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604억원(62억원)

○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국채외 채권(금융채)매입 등 2조 427억원(1조 2,798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 자체수입 : 4,886억원(84억원) | · 사업비 : 3,375억원(△4,190억원) |
| · 정부내부수입 : 0원(△1,200억원) | · 기금운영비 : 604억원(62억원) |
| · 여유자금회수 : 1조9,521억원(9,786억원) | · 여유자금운용 : 2조427억원(1조2,798억원) |
| 2조4,406억원(8,670억원) | 2조4,406억원(8,670억원) |

< 조달·운용 총괄표 >

□ 조달부문

(단위: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5,736 | 24,406 | 8,670 |
| ○ 자체수입 | 4,801 | 4,886 | 84 |
| • 이자수입 | 456 | 1,091 | 635 |
| • 금융기관출연금 | 1,975 | 1,804 | △171 |
| • 구상채권원리금회수 | 1,750 | 1,431 | △319 |
| • 수입보증료 | 574 | 493 | △81 |
| • 기타영업외잡수익 | 46 | 66 | 20 |
| ○ 정부내부수입 | 1,200 | 0 | △1,200 |
| ○ 여유자금회수 | 9,734 | 19,521 | 9,786 |

□ 운용부문

(단위: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5,736 | 24,406 | 8,670 |
| ○ 사업비 | 7,565 | 3,375 | △4,190 |
| • 대위변제 | 7,466 | 3,270 | △4,196 |
| • 소송및법적절차비용 | 35 | 46 | 11 |
| • 보증료환급 | 64 | 59 | △5 |
| ○ 기금운영비 | 541 | 604 | 62 |
| • 인건비 | 365 | 402 | 37 |
| • 기타운영비 | 176 | 202 | 26 |
| ○ 여유자금운용 | 7,629 | 20,427 | 12,798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설치연혁
 - 1987. 5. 30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설치 (관리기관 : 한국주택은행)
 - 1999. 1. 1 : 관리기관 변경 (한국주택은행 ⇒ 신용보증기금)
 - 2004. 3. 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공사 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업무 인수
 - 2007. 4. 1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연금보증계정 설치

□ 설치목적

- (주택신용보증계정) 주택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주택수요자(개인)의 주택마련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자(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건설을 촉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주택연금 지원으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 관리방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1조 4,709억원(10년 대비 133억원 증가)

① 주택신용보증계정 : 1조 4,377억원(10년 대비 19억원 증가)

- 자체수입 8,095억원, 여유자금 회수 6,282억원 등 1조 4,377억원의 재원을 조달
- 대위변제 등 사업비 1,878억원, 기금운영비 500억원, 차입금상환 364억원, 여유자금운용 1조 1,635억원 등으로 운용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332억원(10년 대비 114억원 증가)

- 자체수입 117억원, 여유자금 회수 215억원 등 332억원의 재원을 조달
- 대위변제 등 사업비 4억원, 기금운영비 74억원, 여유자금운용 254억원 등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 합계 | 14,576 | 14,709 | 133 | ■ 합계 | 14,576 | 14,709 | 133 |
| ① 주택신용 보증계정 | 14,358 | 14,377 | 19 | ① 주택신용 보증계정 | 14,358 | 14,377 | 19 |
| ②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정 | 218 | 332 | 114 | ②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정 | 218 | 332 | 114 |

3. 조달 · 운용 계획

가. 주택신용보증계정

□ 조달부문 : 1조 4,377억원(10년 대비 19억원 증가)

- (자체수입) 여유자금 운용자산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구상채권 회수금 및 신용보증료 등 8,095억원(751억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매각대금 6,282억원 (Δ732억원)

□ 운용부문 : 1조 4,377억원(10년 대비 19억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보증료환급 및 구상권관리비 등 1,878억원 (Δ46억원)
-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를 위한 인건비, 기타운영비 및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500억원(13억원)
- (차입금상환) IBRD 차입금 원리금 상환 364억원(Δ40억원)
- (여유자금운용)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금 1조 1,635억원 (92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 : 8,095억원(751억원) · 여유자금회수 : 6,282억원(Δ732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878억원(Δ46억원) · 기금운영비 500억원(13억원) · 차입금상환 : 364억원(Δ40억원) · 여유자금운용 : 1조 1,635억원(92억원) |
| 1조 4,377억원(19억원) | 1조 4,377억원(19억원) |

<주택신용보증계정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익 | | '11계익(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14,358 | 14,358 | 14,377 | 19 |
| · 자체수입 | 7,344 | 7,344 | 8,095 | 751 |
| (이자수입) | 1,099 | 1,099 | 1,174 | 75 |
| (금융기관출연금) | 4,404 | 4,404 | 4,918 | 514 |
| (구상채권회수금) | 1,000 | 1,000 | 913 | △87 |
| (신용보증료등) | 807 | 807 | 983 | 176 |
| (기타수입) | 34 | 34 | 107 | 73 |
| · 정부내부수입 | -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7,014 | 7,014 | 6,282 | △732 |

□ 운용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익 | | '11계익(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14,358 | 14,358 | 14,377 | 19 |
| · 사업비 | 1,924 | 1,924 | 1,878 | △46 |
| (대위변제) | 1,700 | 1,700 | 1,670 | △30 |
| (보증료환급) | 97 | 97 | 111 | 14 |
| (구상권관리) | 127 | 127 | 97 | △30 |
| · 기금운영비 | 378 | 487 | 500 | 13 |
| (기금관리비) | 326 | 435 | 447 | 12 |
| (위탁수수료) | 52 | 52 | 53 | 1 |
| · 차입금상환 | 404 | 404 | 364 | △40 |
| (차입금원금상환) | 280 | 280 | 280 | - |
| (차입금이자상환) | 124 | 124 | 84 | △40 |
| · 여유자금운용 | 11,651 | 11,543 | 11,635 | 92 |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조달부문 : 332억원(10년 대비 114억원 증가)

- (자체수입) 여유자금 운용자산 이자수입, 금융기관출연금, 구상채권 회수금 및 신용보증료 등 117억원(54억원)
- (여유자금회수)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매각대금 215억원(60억원)

□ 운용부문 : 332억원(10년 대비 114억원 증가)

- (사업비) 대위변제 및 구상권관리비 등 4억원(Δ 2억원)
-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를 위한 인건비, 기타운영비 및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74억원(12억원)
- (여유자금운용)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금 254억원 (104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 : 117억원(54억원) · 여유자금회수 : 215억원(6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억원(Δ2억원) · 기금운영비 74억원(12억원) · 여유자금운용 : 254억원(104억원) |
| 332억원(114억원) | 332억원(114억원)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획 | | '11계획(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218 | 218 | 332 | 114 |
| · 자체수입 | 63 | 63 | 117 | 54 |
| (이자수입) | 9 | 9 | 13 | 4 |
| (금융기관출연금) | 1 | 1 | 4 | 3 |
| (구상채권회수금) | 3 | 3 | 4 | 1 |
| (신용보증료등) | 50 | 50 | 96 | 46 |
| (기타수입) | - | - | - | - |
| · 정부내부수입 | -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155 | 155 | 215 | 60 |

□ 운용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계획 | | '11계획(B) | 증감(B-A) |
|-----------|-------|-------|----------|---------|
| | 당초 | 수정(A) | | |
| 합 계 | 218 | 218 | 332 | 114 |
| · 사업비 | 6 | 6 | 4 | Δ2 |
| (대위변제) | 6 | 6 | 3 | Δ3 |
| (구상권관리) | - | - | 1 | 1 |
| · 기금운영비 | 62 | 62 | 74 | 12 |
| (기금관리비) | 62 | 62 | 74 | 12 |
| (위탁수수료) | - | - | - | - |
| · 차입금상환 | - | - | - | - |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 - |
| · 여유자금운용 | 150 | 150 | 254 | 104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6807호, 2002.12.26)

○ 설치연혁

- 1995. 12. 29 : 예금자보호법 제정
- 1996. 6. 1 : 예금보험기금 설치 및 공사 설립
- 1998. 4. 1 : 예금보험기금 통합
- 2003. 1. 1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설치

☐ 설치목적

○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함) 정리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예금보험공사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8.1조원('10년 대비 5.2조원 감소)

- 기초보유자금 3조 683억원, 출자주식 매각대금 1조 6,672억원, 대출금회수 5,543억원, 특별기여금 9,929억원, 상환기금채권 발행 1조 5,000억원 등 총 8.1조원의 재원을 조달
- 상환기금채권 등 원리금 상환 5조 1,810억원, 금융구조조정 지원 755억원, 기금운영비 170억원 등으로 운용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예보채상환기금 | 132,668 | 80,691 | △51,977 | 예보채상환기금 | 132,668 | 80,691 | △51,977 |

3.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 8.1조원('10년 대비 5.2조원 감소)

- (기초보유자금) 전년 이월 보유자금 3조 683억원
- (회수자금 등) 출자주식 매각 등 2조 5,079억원
- (특별기여금) 특별기여금 수입 9,929억원
- (상환기금채권 발행) 상환기금채권 발행 수입 1조 5,000억원

□ 운용부문 : 8.1조원('10년 대비 5.2조원 감소)

- (채권 등 원리금 상환) 상환기금채 등 원리금 상환
5조 1,810억원
- (금융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법적절차비, 정리자문비용
등 자금지원 755억원
- (기금운영비) 공사운영경비 등 170억원
- (여유자금운용)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금 2조 7,956억원

| 조달부문 | 운용부문 |
|--------------------|-----------------------|
| · 기초보유자금 : 3.1조원 | · 채권 등 원리금 상환 : 5.2조원 |
| · 회수자금 등 : 2.5조원 | · 금융구조조정 : 0.1조원 |
| · 특별기여금 : 1.0조원 | · 기금운영비 : 0.02조원 |
| · 상환기금채 발행 : 1.5조원 | · 여유자금운용 : 2.8조원 |
| 8.1조원 | 8.1조원 |

<세부 조달 · 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 계획(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32,668 | 80,691 | △51,977 |
| · 기초보유자금 | 16,167 | 30,683 | 14,516 |
| · 회수자금 등 | 24,197 | 25,079 | 882 |
| (출자주식 매각) | 18,087 | 16,672 | △1,415 |
| (융자금 회수) | 2,093 | 5,543 | 3,450 |
| (배당금 등) | 3,328 | 2,463 | △865 |
| (이자수입) | 689 | 401 | △288 |
| · 특별기여금 | 8,304 | 9,929 | 1,625 |
| · 상환기금채권 발행 | 84,000 | 15,000 | △69,000 |

□ 운용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 계획(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32,668 | 80,691 | △51,977 |
| · 채권 원리금 상환 | 90,413 | 50,456 | △39,957 |
| (원금) | 74,400 | 37,300 | △37,100 |
| (이자) | 16,013 | 13,156 | △2,857 |
| · 차관원리금 상환 | 1,422 | 1,354 | △68 |
| (원금) | 1,168 | 1,168 | - |
| (이자) | 254 | 186 | △68 |
| · 금융구조조정 | 5,264 | 755 | △4,509 |
| (출연) | 4,844 | 185 | △4,659 |
| (보험금 지급) | 7 | - | △7 |
| (법적절차비) | 92 | 9 | △83 |
| (정리자문비용 등) | 321 | 561 | 240 |
| · 기금운영비 | 179 | 170 | △9 |
| · 여유자금운용 | 35,390 | 27,956 | △7,434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1997.8.22)

○ 설치연혁

- 1997. 11. 24 : 공사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 2002. 11. 22 : 부실채권정리기금 인수시한 종료
- 2006. 12. 30 :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 5년 연장(2012.11.22)
- 2007. 12. 21 : 기금 잔여재산 배분기준 재설정*

* 기금 출연비율(정부 3.5조원, 86% : 금융회사 0.6조원, 14%)에 따라 배분하고, 운용기간 종료전에 반환 가능

□ 설치목적

-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2조 8,914억원

- 자체수입 1조 5,517억원 및 여유자금회수 1조 3,397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 기금운영비 3,099억원, 정부 및 금융회사에 잔여재산 조기반환 1조 1,054억원을 지출하고 1조 4,761억원을 차기로 이월할 계획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계 | 21,899 | 28,914 | 7,015 | 계 | 21,899 | 28,914 | 7,015 |
| 자체수입 | 18,006 | 15,517 | △2,489 | 기금운영비 | 1,087 | 3,099 | 2,012 |
| 여유자금회수 | 3,893 | 13,397 | 9,504 | 공적자금상환 | 10,500 | 9,500 | △1,000 |
| | | | | 금융기관반환금 | 1,718 | 1,554 | △164 |
| | | | | 여유자금운용 | 8,594 | 14,761 | 6,167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2조 8,914억원('10년 대비 7,015억원 증가)

- (자체수입) 부실채권등처분 및 이자수입 등 1조 5,517억원 (△2,489억원)
- (여유자금회수) 전기이월 여유자금 1조 3,397억원(9,504억원)

□ 운용부문 : 2조 8,914억원('10년 대비 7,015억원 증가) ,

-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금관리비, 자산관리비 및 자산매각비 등 3,099억원(2,012억원)
- (공적자금상환) 기금 잔여재산 조기배분 9,500억원(△1,000억원)
- (금융기관반환금) 기금 잔여재산 조기배분 1,554억원(△164억원)
- (여유자금운용) 차기이월 여유자금 1조 4,761억원(6,167억원)

<세부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21,899 | 28,914 | 7,015 |
| · 자체수입 | 18,006 | 15,517 | △2,489 |
| (부실채권등처분) | 17,550 | 15,077 | △2,473 |
| (이자수입) | 189 | 356 | 167 |
| (융자금회수) | 48 | - | △48 |
| (기타수입) | 219 | 84 | △135 |
| · 여유자금회수 | 3,893 | 13,397 | 9,504 |

☐ 운용부문

(단위 : 억 원)

| 구 분 | '10예산(A) | '11 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21,899 | 28,914 | 7,015 |
| · 기금운영비 | 1,087 | 3,099 | 2,012 |
| (인건비) | 67 | 50 | △17 |
| (기금관리비) | 65 | 45 | △20 |
| (자산관리비) | 866 | 2,907 | 2,041 |
| (자산매각비) | 89 | 97 | 8 |
| · 공적자금상환 | 10,500 | 9,500 | △1,000 |
| · 금융기관반환금 | 1,718 | 1,554 | △164 |
| · 여유자금운용 | 8,594 | 14,761 | 6,167 |

1. 개 요

□ 설치 근거법률 및 연혁

- 근거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9670호, 2009.5.13)

- 설치연혁

- 2009. 5. 13 : 공사법 개정으로 공사내에 구조조정기금 설치

□ 설치목적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정후기업 및 구조개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인수·정리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 리 방 식 : 직접관리

2. '1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조달·운용 규모 : 5조 5,751억원

- 자체수입 4,233억원, 기금채권 발행 5조원 및 여유자금회수 1,518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 구조조정지원 5조원, 기금운영비 184억원 및 차입금이자상환에 1,894억원을 지출하고 3,673억원을 차기로 이월할 계획

(단위 : 억원)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구 분 | '10계획 | '11계획 | 증감 |
| 계 | 106,416 | 55,751 | △50,665 | 계 | 106,416 | 55,751 | △50,665 |
| 자체수입 | 6,380 | 4,233 | △2,147 | 구조조정지원 | 100,000 | 50,000 | △50,000 |
| 차입금(기금채권) | 100,000 | 50,000 | △50,000 | 기금운영비 | 357 | 184 | △173 |
| 여유자금회수 | 36 | 1,518 | 1,482 | 차입금원금상환 | 100 | - | △100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3,565 | 1,894 | △1,671 |
| | | | | 여유자금운용 | 2,394 | 3,673 | 1,279 |

3.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 5조 5,751억원('10년 대비 5조 665억원 감소)

- (자체수입) 부실자산등정리 및 이자수입 등 4,233억원(△2,147억원)
- (차입금)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5조원(△5조원)
- (여유자금회수) 전기이월 여유자금 1,518억원(1,482억원)

□ 운용부문 : 5조 5,751억원('10년 대비 5조 665억원 감소)

- (구조조정지원)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자산 인수 등 5조원(△5조원)
-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금관리비, 자산관리비 등 184억원(△173억원)
- (차입금이자상환) 기금채권 이자상환 1,894억원(△1,671억원)
- (여유자금운용) 차기이월 여유자금 3,673억원(1,279억원)

<세부 조달·운용 계획>

☐ 조달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예산(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06,416 | 55,751 | △50,665 |
| · 자체수입 | 6,380 | 4,233 | △2,147 |
| (부실자산등정리) | 6,255 | 4,152 | △2,103 |
| (이자수입) | 34 | 81 | 47 |
| (기타수입) | 91 | - | △91 |
| · 차입금 | 100,000 | 50,000 | △50,000 |
| (기금채권발행) | 100,000 | 50,000 | △50,000 |
| · 여유자금회수 | 36 | 1,518 | 1,482 |

☐ 운용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 '10예산(A) | '11계획(B) | 증감(B-A) |
|------------|----------|----------|---------|
| 합 계 | 106,416 | 55,751 | △50,665 |
| · 구조조정지원 | 100,000 | 50,000 | △50,000 |
| (금융구조조정지원) | 75,000 | 45,000 | △30,000 |
| (기업구조조정지원) | 25,000 | 5,000 | △20,000 |
| · 기금운영비 | 357 | 184 | △173 |
| (인건비) | 112 | 60 | △52 |
| (기금관리비) | 103 | 89 | △14 |
| (자산관리비) | 134 | 35 | △99 |
| (자산매각비) | 8 | - | △8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3,665 | 1,894 | △1,771 |
| (원금) | 100 | - | △100 |
| (이자) | 3,565 | 1,894 | △1,671 |
| · 여유자금운용 | 2,394 | 3,673 | 1,279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3. 결산 내역(09~11년)

- 이용, 전용, 이월, 불용된 사업내역

□ 이용내역(09~11년)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세목 | 금액 | 내역 |
|----------------|----------|-----|--------------------------------------|
| IBRD차관 원금상환 | 전대차관원금상환 | 482 | 환율인상에 따른 IBRD 전대차관 원금상환 예산 부족액 충당 |
| FIU운영 | 기타직보수 | 6 | 금융정보분석원 기타직 보수 부족액 충당 |
| 합 계 | | 488 | |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세목 | 금액 | 내역 |
|---------|-------|-----|----------------|
| FIU 운영 | 기타직보수 | 11 | 금융정보분석원 기타직 보수 |
| FIU 인건비 | 보수 | △11 | 부족에 따른 이용 |
| 합 계 | | ±11 | |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 전용내역(09~11년)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세목 | 금액 | 내역 |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 일반수용비 | 99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공동위원회 및 사무국 기본경비 총당 |
| | 공공요금및 제세 | 3 | |
| | 임차료 | 97 | |
| | 국내여비 | 2 | |
| | 관서업무비 | 10 | |
| | 자산취득비 | 15 | |
| | 소계 | 226 |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일용임금 | 17 | |
| | 특근매식비 | 2 | |
| | 복리후생비 | 2 | |
| | 가타운영비 | 2 | |
| | 월정직책급 | 5 | |
| | 소계 | 28 |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월정직책급 | 4 | 정원증가로 인한 본부 기본경비 월정직책급 총당 |
| 대변인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 일반수용비 | 15 | 대변인실 일반수용비 부족액 총당 |
| 금융허브 | 연구개발비 | 40 | 금융허브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총당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 연금지급금 | 1 | 정원증가에 따른 연금지급금 부족 예산 총당 |
| FIU운영 | 연금지급금 | 8 | 사무보조원(1명) 퇴직에 따른 연금지급금 부족분 총당 |
| | 국제부담금 | 14 | 에그몽 그룹의 국제부담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총당 |
| | 국제부담금 | 26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구(FATF) 정회원 가입에 따른 특별회비 15,000 유로 총당 |
| 합 계 | | 576 | |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세목 | 금액 | 내역 |
|-----------------------------|---------|------|--------------------------------------|
| 금융중심지추진 | 연구개발비 | 50 |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연구개발비 총당 |
| | 일반수용비 | △50 | |
| FIU전산망 구축운영 | 자산취득비 | 47 | FIU 전산망 분리에 따른 예산 전용 |
| | 위탁사업비 | △29 | |
| | 임차료 | △10 | |
| | 공공요금및제세 | △8 | |
| 금융정책알리기 | 자산취득비 | 4 |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자산취득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
| 대변인실 총액인건비 미대상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 | △4 | |
| FIU운영 | 국제부담금 | 21 | FATF 국제분담금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
| | 일반수용비 | △11 | |
| | 공공요금및제세 | △10 | |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월정직책급 | 12 | 월정직책급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
| | 기타운영비 | △3 | |
|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월정직책급 | △9 | |
| 금융정책알리기 | 일반수용비 | 55 |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 일반수용비 | △55 | |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기타직보수 | 2 | 기타직 보수 및 직급 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
|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일용임금 | △2 | |
| 본부 인건비 | 직급보조비 | 4 | |
| 공자위사무국 인건비 | 직급보조비 | △4 | |
| 합 계 | | ±194 | |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세목 | 금액 | 내역 |
|-----------------------------|-------|------|--|
| FIU 인건비 | 보수 | 80 |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
| 본부 인건비 | 보수 | △80 | |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 기타직보수 | 34 | 기타직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
| 본부 인건비 | 기타직보수 | △34 | |
| FIU운영 | 기타직보수 | 15.4 | 기타직보수 및 민간이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
| | 연금지급금 | 6.6 | |
| | 일반수용비 | △22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 국제부담금 | 4.4 | 편성시와 집행시의 환율차이로 인한 부족액 발생에 따른 예산 전용 |
| | 일반수용비 | △4.4 | |
|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월정직책급 | 0.6 | 월정직책급 부족분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연금지급금 부족분 예산 전용 |
| | 복리후생비 | △0.6 | |
| | 연금지급금 | 1.8 | |
| | 일용임금 | △1.8 | |
| 합 계 | | ±143 | |

□ 이월내역(09~11년)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세목 | 금액 | 내역 |
|------|-------|----|---|
| 금융허브 | 일반수용비 | 20 |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과정 만족도 조사(10), 홍보 브로셔 제작비(10) |
| | 연구개발비 | 40 |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 발전 방향' 연구 용역(40) |
| 합 계 | | 60 | |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내역- 해당사항 없음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세목 | 이월액 | 집행액 | 집행내역 |
|--------|-------|-----|-----|---|
| 정책연구개발 | 연구개발비 | 65 | 65 | '외환·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용역(35) |
| | | | | '청년 창업 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 방안' 연구 용역(30) |
| 합 계 | | 65 | 65 | |

□ 불용내역(09~11년)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예산 현액 |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
|-------------------|----------|--------------|----------------|
| - 금융업법체계개편 | 79 | 14(17.8) | 예산절감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 373 | 105(28.2) | 집행잔액 |
| - 금융허브 | 300 | 64(21.3) |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
| - 금융전문인력 양성 | 1,500 | 92(6.1) | 예산절감 |
|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 72 | 18(25.0) | 예산절감 |
| - 모기지론이차보전 | 3,903 | 1,193(30.6) | 지급사유 미발생 |
| - FIU운영 | 1,108 | 19(1.7)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 4,757 | 89(1.9)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정보화 지원(정보화) | 604 | 19(3.1) | 집행잔액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127 | 36(13.3)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정책연구개발 | 500 | 1(0.2) | 집행잔액 |
| - 금융 정책알리기 | 245 | 54(22.0)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인 건 비 | 13,918 | 329(2.4) | 집행잔액 |
| - 기 본 경 비 | 8,597 | 942(11.0)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합계 | | 2,975 | |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예산 현액 |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
|-----------------------|----------|--------------|--------------------------|
| - 금융업법체계개편 | 79 | 15(19.0) |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
| - 금융중심지 추진 | 358 | 86(24.0) |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 637 | 149(23.4) |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미발생 등 |
| - 녹색금융 | 150 | 51(34.0) |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
|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 장려 | 74 | 2(2.7) | 집행잔액 |
| - 모기지론이차보전 | 4,563 | 1,378(30.2) | 지급사유 미발생 |
| - FIU운영 | 1,267 | 27(2.1) | 집행잔액 |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 4,656 | 2(0.1) | 집행잔액 |
| - 정보화 지원(정보화) | 570 | 8(1.4)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 121 | 2(1.7)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정책연구개발 | 600 | 26(4.3) | 집행잔액 |
| - 금융정책알리기 | 389 | 3(0.8) | 집행잔액 |
| - IBRD차관 원리금상환 | 3,288 | 539(16.4) | 환율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지출액 감소 |
| - 인 건 비 | 15,017 | 850(5.7) | 집행잔액 |
| - 기 본 경 비 | 7,082 | 667(9.4)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합계 | | 3,804 | |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 예산 현액 |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
|-------------------|----------|--------------|--------------------------|
| - 금융업법체계개편 | 71 | 21(29.6)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 573 | 47(8.2)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금융소비자 보호 | 128 | 16(12.5)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금융중심지 추진 | 213 | 45(21.1) |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
|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 60 | 6(10.0) |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
| - 모기지론이차보전 | 4,700 | 212(4.5) | 지급사유 미발생 |
| - FIU운영 | 1,295 | 58(4.5) | 집행잔액 |
| - APG 유형론 실무회의 | 430 | 32(7.5) | 집행잔액 |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 4,623 | 67(1.5) | 집행잔액 |
| - 정보화 지원(정보화) | 542 | 23(4.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113 | 15(13.3)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 정책연구개발 | 650 | 83(12.7) | 집행잔액 |
| - 금융정책알리기 | 330 | 5(1.5) | 집행잔액 |
| - IBRD차관 원리금상환 | 3,178 | 505(15.9) | 환율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지출액 감소 |
| - 인 건 비 | 16,350 | 670(4.1) | 집행잔액 |
| - 기 본 경 비 | 7,463 | 684(9.2)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 합계 | | 2,489 |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4.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1부(11~12년)

☐ 백서 별도송부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5. 2012년 주요업무시행계획(국별)

□ 별첨참조

별첨 : 2012 성과관리시행계획

201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금융위원회

2012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2012.4.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56-96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목 차

I.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전략목표 III

전략목표 IV

전략목표 V

전략목표 VI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 변화관리 계획
4. 갈등관리 전략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 그간의 정책성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시장안정 노력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 '08.9월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

-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은행 자본확충 지원, 금융회사 유동성·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1,000억불 한도), 정부·한은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5조원) 및 은행 자본확충펀드(4조원)를 통한 지원 등

-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신용경색 발생을 차단

* 중소기업 대출 만기 전액 연장,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지원업체수 11,861개, 지원액 30.7조원), 보증공급 확대(55.4조원), 상생보증 프로그램 가동 등

□ 위기극복 이후 금융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함

-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

* 외화유동성 비율 산출시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 적용, 외화안전자산 보유제도 도입, 여전사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 김치본드 투자제한 등

- 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

* 원화에대율 '13년말(100% 이하) 도입, '11.6.29대책시 도입시기 단축('12.6말)

- 금년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외화자금 확보를 유도

* '11.11말 국내은행 외화현금유동성은 '11.6말 대비 6배 이상 증가

⇒ 주요국보다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권의 위기대응능력도 대폭 향상

* 단기외화차입비중 : ('08말) 50.1% → ('11.9말) 29.2%

* 은행 BIS비율 : ('08.6말) 11.4% → ('11.9말) 14.1%

나. 잠재불안 요인에 대응

◆ 그동안 부채중심의 금융 외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가계부채, 저축은행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대출구조 개선 등을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6.29대책)'을 마련·시행
 -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 저축은행 업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과감히 정리
 - 저축은행 일괄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7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등 '11년중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 「구조조정기금*」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재원을 활용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뒷받침
 - * 5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등을 매입
 - **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조달을 위해 설치
- PF 부실이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PF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사업장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
 - PF 부실 정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PF 부실 정리를 유도
 - PF 정상화뱅크* 설립 등 사업장 정상화 지원 기반을 마련
 - * 7개 시중은행이 출자, '11년중 1.8조원 규모의 은행권 PF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성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추진

⇒ 시장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극대화

- * 신규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 ('10.12월중) 35% → ('11.9월중) 19.7%
- * 은행권 PF 부실채권 규모 : ('10.12말) 6.3조 → ('11.9말) 3.9조

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저소득층·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으로 완화를 위해 3대 서민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충

□ 3대 서민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대폭 확대

- '08년 이후 '11.10월말까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를 통해 총 3.4조원(약 40.4만건)을 서민층에 공급

* 지원실적('11.10월말까지): 미소금융('08.7) 5.4만건 0.4조원, 새희망홀씨('10.11) 14.9만건 1.2조원, 햇살론('10.7) 20.1만건 1.8조원

□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에 대응하여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 미소금융 적격자 발굴·경영컨설팅 강화,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전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전채무조정 제도 2년 연장 등

□ 수수료, 금리 등 금융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0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 ('08.10 이전) 3.3~3.6% → ('11.6) 2.0~2.15%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1.6~1.8%, 서울시내 3대 대형백화점 2.0~2.4%)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2차례('10.7월, '11.6월)에 걸쳐 10%p 인하(49% → 39%)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 채무조정('08.1~'11.8월) 51.4만명(신용회복기금 21.4만명, 신복위 30만명)
전환대출('08.1~'11.8월) 5.9만명, 0.6조원

⇒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신용층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 금융채무불이행자 : ('08월)227만명 → ('11.9월)130만명

* 저신용자(7~10등급) 비중 : ('07월)22.9% → ('11.6월)17.3%

라.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성공적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금융 선진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

□ '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핵심 금융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BCBS, FSB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Basel III*, SIFI 규제** 관련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 은행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

** 추가 자본 적립방안, 정리절차 마련 등

○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및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신규의제로 제안하고 우리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

□ 선진금융 방식과 국제기준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금융 선진화 노력도 착실히 추진

○ 자본시장법 제정 등 자본시장 규율체계를 선진형으로 전환* 하고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도입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도입 등

○ 금융중심지 지정('09.1월,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해외 진출 확대* 등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금융회사 해외점포수 : ('07말) 253개 ('11.9말) 341개

○ 파생상품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소속부제도 개편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 사후증거금 제도 개선,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 등

○ 국제회계기준(IFRS),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등 선진제도를 도입·시행

○ 한국 증시가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09.9월)되고,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에도 가입('09.10월)

⇒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선진금융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참고] 지난 4년간 금융산업 변화 모습

□ (자산규모) 전반적인 금융자산 규모가 꾸준히 성장

금융업권별 자산규모 추이 (조원)

| | FY 07 | FY 08 | FY 09 | FY 10 | 2011.9 | 07말 대비 |
|-------|---------|---------|---------|---------|---------|--------|
| 은행 | 1,567.8 | 1875.3 | 1800.0 | 1841.8 | 1,995.7 | +27.3% |
| 보험사 | 371.4 | 402.3 | 458.7 | 518.8 | 545.9 | +47.0% |
| 증권사 | 130.9 | 148.8 | 177.0 | 199.8 | 253.0 | +93.3% |
| 여전사 | 89.6 | 102.1 | 104.1 | 120.8 | 154.6 | +72.5% |
| 저축은행* | 53.2 | 63.5 | 74.9 | 86.4 | 59.7 | +12.2% |
| 계 | 2,212.9 | 2,592.0 | 2,614.7 | 2,767.6 | 3,008.9 | +36.0% |

* 2011.9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91개사) 기준

□ (수익성)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나, 점차 위기이전의 이익수준으로 회복해 가는 모습

금융업권별 당기순이익 추이 (조원)

| | FY 07 | FY 08 | FY 09 | FY 10 | 2011.1~9 |
|------|-------|-------|-------|---------|----------|
| 은행 | 15.0 | 7.7 | 6.9 | 10.1 | 12.4 |
| 보험사 | 3.8 | 1.9 | 4.0 | 6.1 | 3.2* |
| 증권사 | 4.4 | 2.0 | 2.9 | 2.8 | 1.2* |
| 여전사 | 3.7 | 2.4 | 2.8 | 3.7 | 2.1 |
| 저축은행 | 0.37 | △0.13 | △0.56 | △0.80** | 0.14** |

* 2011.4~9월 수치(3월결산) / ** 2011.7~2011.9월 수치(6월결산)

□ (건전성) 위기 이후 은행 BIS 비율이 14%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

금융업권별 건전성지표 추이 (%)

| | | FY 07 | FY 08 | FY 09 | FY 10 | 2011.9말 |
|------|----------|-------|-------|-------|-------|---------|
| 은행 | BIS비율 | 12.28 | 12.31 | 14.36 | 14.55 | 14.17 |
| | 부실채권비율 | 0.7 | 1.1 | 1.2 | 1.9 | 1.7 |
| 보험사 | 부실채권비율 | 1.98 | 1.86 | 1.74 | 1.15 | 1.13 |
| 증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 | 591 | 617 | 580 | 555 | 518 |
| 여전사 | 카드사 연체율 | 3.79 | 3.43 | 2.23 | 1.68 | 1.91 |
| | 카드사外 연체율 | 2.8 | 4.5 | 3.9 | 3.8 | 3.5 |
| 저축은행 | BIS비율 | 9.09 | 9.08 | 9.43 | 9.05 | 10.31* |
| | 부실채권비율 | 10.2 | 9.4 | 10.3 | 10.6 | 15.2* |

* 2011.9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91개) 기준

2.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대외여건 및 전망

◇ 유럽 재정위기 지속,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 '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대응 여력 약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전망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는 실물·재정부문에서 초래된 것으로 위기해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은 재정위기 해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재정긴축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
- 미국은 주택·고용 부진과 저금리·재정악화에 따른 정책대응 능력 약화 등으로 빠른 경기회복세 기대는 어려운 상황
- 중국 등 신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수출감소 등 둔화 우려도 상존

< IMF 경제성장률 전망(11.9.20일, 단위 : %) >

| 구 분 | 전세계 | 미국 | 유로존 | 중국 | 일본 |
|------|-----|-----|-----|-----|------|
| '11년 | 4.0 | 1.5 | 1.6 | 9.5 | △0.5 |
| '12년 | 4.0 | 1.8 | 1.1 | 9.0 | 2.3 |

□ 국제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 및 은행으로 확산될 우려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건전성 악화에 따라 자본확충이 어려워진 유럽계 은행들이 자산감축에 나서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
-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심화 우려

◇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내년도 국내경제는 유럽·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한은·재정부는 '12년도 성장률 둔화를 예상 ('11년 3.8% → '12년 3.7%)

○ 특히 경기애 민감한 중소기업·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

-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공급이 위축될 경우 창업부진, 투자감소 등 실물부문 성장기반이 취약해질 우려

- 서민, 저신용층의 경우 소득회복 지연으로 생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원리금 부담은 가중될 우려

□ 국내금융시장도 경제 성장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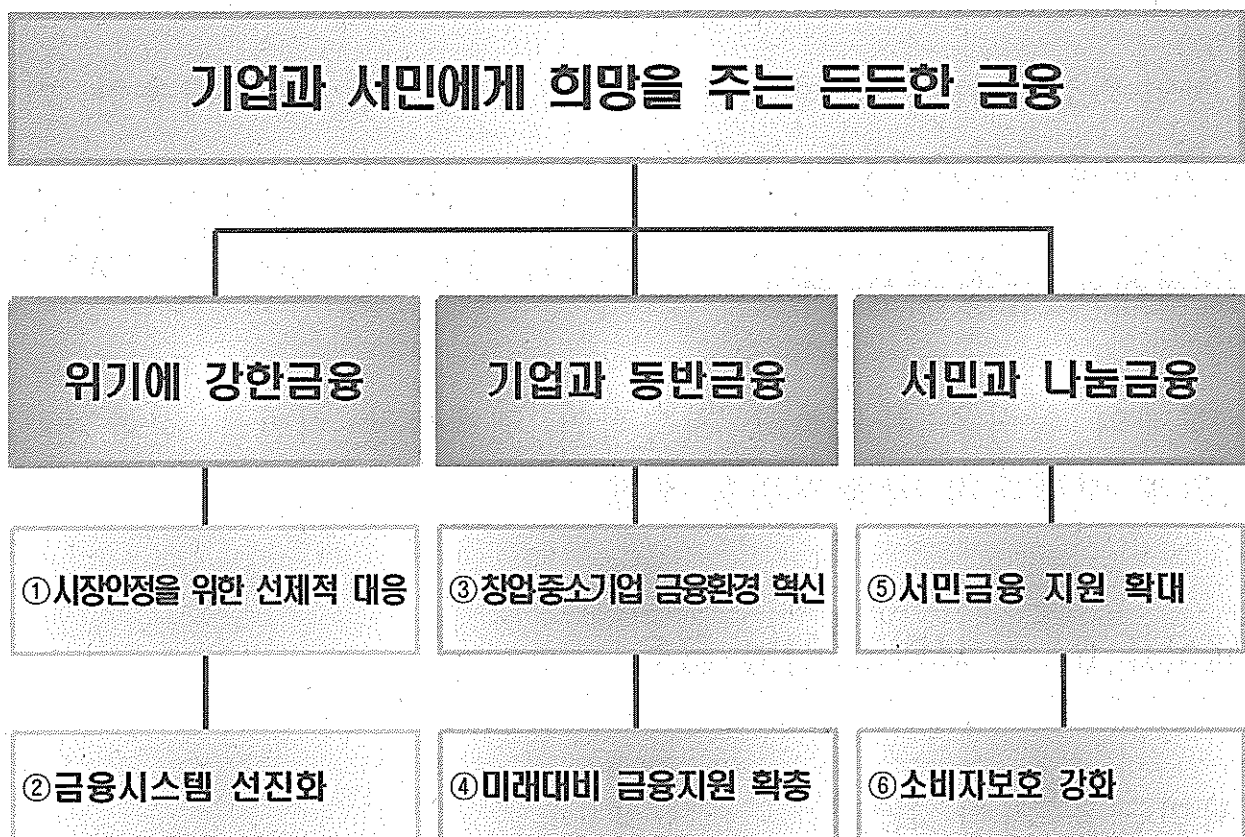
○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투자 감소 및 외화차입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 (주요신평사·IB등 평가) 북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한국 신용등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북한권력이양 과정에서 동아시아 내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

○ 경기 둔화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 상존

- ◇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의 탄탄한 성장 지원과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

⇒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와 6개 전략과제에 역량을 집중



정책목표 1

위기에 강한 금융

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유럽 재정위기,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잠재불안 요인에 적극 대비

② 금융시스템 선진화

-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 개선 등 다각적인 금융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책목표 2

기업과 동반 금융

③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한 기업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④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

정책목표 3

서민과 나눔 금융

⑤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발전시켜 서민 등 금융 애로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⑥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확충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1)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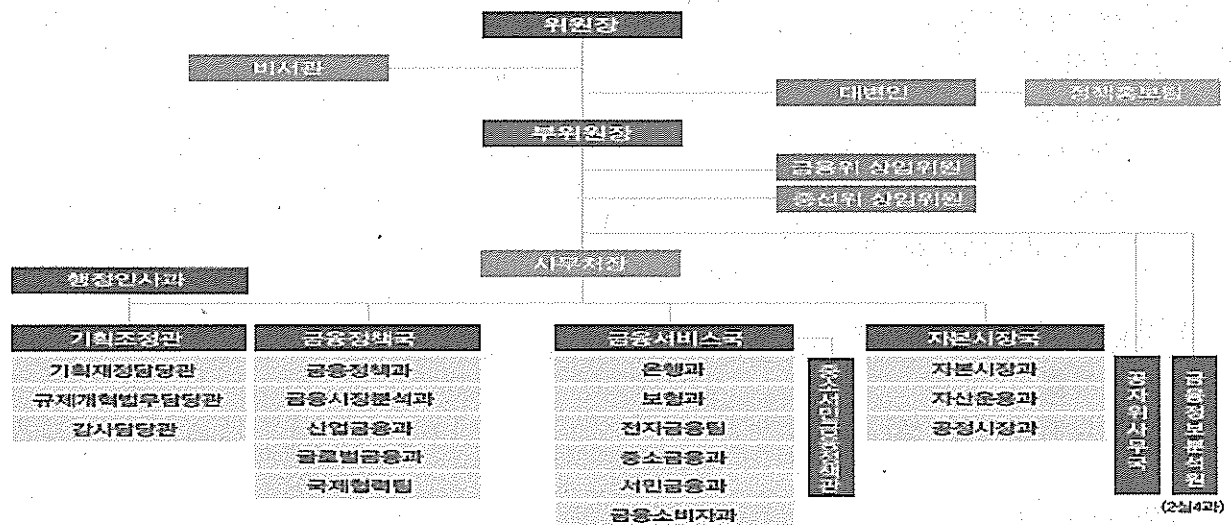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6과 3팀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2) 인 원 (정원 : 246명)

| | 정무직 | 일반직 | 법정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 |
|---------|-----|-----|-----|-----|-----|-----|
| 합 계 | 2 | 222 | 6 | 8 | 8 | 246 |
| 본 부 | 2 | 163 | 6 | - | 8 | 179 |
| 금융정보분석원 | - | 47 | - | 8 | - | 55 |
| 공자위 사무국 | - | 12 | - | - | - | 12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11 | '12 | '13 | '14 | '15 |
|-------------------------|----------|------------------|------------------|------------------|------------------|
| □ 재정사업 합계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120,608 | 70,085 △41.9 | 16,080 △76.9 | 12,770 △20.6 | 8,251 △35.4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317,566 | 285,102 △10.2 | 425,762 50.0 | 279,618 △34.3 | 162,155 △42.0 |
| □ 총지출 구분 | | | | | |
|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 3,853 | 3,856 0.1 | 356 △90.8 | 373 4.8 | 328 △12.0 |
|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 1,973 | 4,269 116.4 | 281.27 △93.4 | 285.65 1.6 | 135.09 △52.7 |
|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 118,588 | 61,960 △47.8 | 15,505 | 12,174 | 7,789 |
| □ 예산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1,031 | 817 △20.7 | 950 20.3 | 930 △2.1 | 979 5.3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15,556 | 4,231 △72.8 | 38,979 827.2 | 40,930 5.0 | 43,979 7.4 |
| 【일반회계】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1,031 | 817 △20.7 | 950 20.3 | 930 △2.1 | 979 5.3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15,556 | 4,231 △72.8 | 38,979 827.2 | 40,930 5.0 | 43,979 7.4 |
| □ 기금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119,577 | 69,269 △42.1 | 15,130 △78.1 | 11,840 △21.7 | 7,272 △38.6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302,010 | 280,871 △7.0 | 386,783 38.3 | 238,688 △38.3 | 118,176 △50.5 |
| 【공적자금상환기금】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0.1 - | 46.8 - | 0.1 - | 0.1 - | 0.1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37,794 | 22,916 △39.4 | 166,062 624.7 | 89,014 △46.4 | 43,710 △50.9 |

| 구 분 | '11 | '12 | '13 | '14 | '15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 | |
| · (총)지출 | 1,274 | 972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23.7 | - | - | - |
| · 총계 | 1,542 | 1,088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29.4 | - | - | - |
| 【신용보증기금】 | | | | | |
| · (총)지출 | 27,352 | 29,320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7.2 | - | - | - |
| · 총계 | 46,245 | 59,930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29.6 | - | -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 |
| · (총)지출 | 13,433 | 12,627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6.0 | - | - | - |
| · 총계 | 25,067 | 23,091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7.9 | - | - |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 | | |
| · (총)지출 | 3,979 | 3,358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15.6 | - | - | - |
| · 총계 | 24,406 | 14,652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40.0 | - | - |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 | |
| · (총)지출 | 2,540 | 4,863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91.5 | - | - | - |
| · 총계 | 14,709 | 20,688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40.6 | - | - |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 | |
| · (총)지출 | 14,268 | 12,226 | 11,769 | 9,054 | 7,273 |
| (전년대비증가율, %) | | △14.3 | △3.3 | △23.1 | △19.7 |
| · 총계 | 80,691 | 105,415 | 188,033 | 116,425 | 74,515 |
| (전년대비증가율, %) | | 30.6 | 78.4 | △38.1 | △36.0 |
| 【부실채권정리기금】 | | | | | |
| · (총)지출 | 4,653 | 4,594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1.3 | - | - | - |
| · 총계 | 28,914 | 23,338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19.3 | - | - | - |
| 【구조조정기금】 | | | | | |
| · (총)지출 | 52,078 | 1,262 | 3,361 | 2,786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97.6 | 166.3 | △17.1 | - |
| · 총계 | 55,751 | 9,752 | 32,737 | 33,299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82.5 | 235.7 | 1.7 | - |

* 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성기금은 단년계획(2012년)만 있음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 (임무)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전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를 3대 임무로 설정
 - (비전) 정책비전을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6대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
- ⇒ **전략목표 I**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 ⇒ **전략목표 II**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 ⇒ **전략목표 III**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한다.
- ⇒ **전략목표 IV**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 ⇒ **전략목표 V**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 ⇒ **전략목표 VI**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2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도출
 - 6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22개의 성과목표 하에 59개의 관리과제를 선정
- 추진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2개 성과목표에 대한 31개의 성과지표와 59개 관리과제에 대한 102개의 성과지표를 각각 선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
| 6 | 22 | 31 | 59 | 102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
|--|------|-----------------------------------|
| I.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 | |
| 1.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 | 업무 1-1 |
| ① 시장 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 | | 업무 1-1 |
| ② 외환건전성 제고 | | 업무 1-3 |
| 2.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을 도모한다. | | 업무 1-2 |
| ①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 업무 1-2 |
| ② PF 연착륙 추진 | | 업무 1-2 |
| 3.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확충한다. | | 업무 1-4 |
| ① 금융회사 이익 내부유보 활성화 | | 업무 1-4 |
| ②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 | | 업무 1-4 |
| ③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 | 업무 1-4 |
| 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 | 업무 1-5 |
| ① 저축은행 조기정상화 | | 업무 1-5 |
| ②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 | | 업무 1-5 |
| II.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 | |
| 1.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 업무 2-1 |
| ① 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 | 업무 2-1 |
| ②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 | 업무 2-1 |
| ③ 단기자금시장 개편 | | 업무 2-1 |
| 2.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한다. | | 업무 2-2 |
|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 업무 2-2 |
| ②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검토 | | 업무 2-2 |
| 3. 전자금융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 업무 2-3 |
| ① 전자금융산업 경쟁 촉진 및 감독시스템 정비 | | 업무 2-3 |
| ② 전자금융 인프라 마련 | | 업무 2-3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
|-----------------------------------|------------------------------|-----------------------------------|
| 4.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한다. | | 업무 2-4 |
| | ① 불공정거래 공시의무 및 제재 강화 | 업무 2-4 |
| | ②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 업무 2-4 |
| | ③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 업무 2-4 |
| 5.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국제화 확대를 추진한다. | | 업무 2-5 |
| | 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업무 2-5 |
| | ② 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업무 2-5 |
| | ③ 금융분야 국제적 논의 및 협상 적극 참여 | 업무 2-5 |
| III.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한다. | | |
| 1.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한다. | | 업무 3-1 |
| | ① 창업지원 환경 혁신 | 업무 3-1 |
| | ② 재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 업무 3-1 |
| 2. 중소기업 금융인프라를 혁신한다. | | 업무 3-2 |
| | ① 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 | 업무 3-2 |
| | ② 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 | 업무 3-2 |
| | ③ 중소기업 직접금융 확대 | 업무 3-2 |
| 3. 정책금융 지원을 효율화한다. | | 업무 3-3 |
| | ①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 업무 3-3 |
| | ②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 업무 3-3 |
| 4.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 업무 3-4 |
| | ① 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업무 3-4 |
| | ② 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 업무 3-4 |
| IV.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 | |
| 1.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 업무 4-1 |
| | ①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업무 4-1 |
| | ② 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확대 | 업무 4-1 |
| | ③ 코스닥 상장 지원 강화 | 업무 4-1 |
| 2. 녹색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 업무 4-2 |
| | ① 녹색산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 업무 4-2 |
| | ②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업무 4-2 |
| | ③ 녹색 경영공시 강화 | 업무 4-2 |
| 3.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을 제공한다 | | 업무 4-3 |
| | ①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업무 4-3 |
| | ② 보험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 업무 4-3 |
| | ③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업무 4-3 |
| | ④ 퇴직 금융인 취업지원 | 업무 4-3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
|---------------------------|------|-----------------------------------|
| V.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 | |
| 1. 서민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 | 국정과제 3-11-53-12 업무 5-1 |
| ①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 | 국정과제 3-11-53-12 업무 5-1 |
| ②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 | | 업무 5-1 |
| ③ 금융비용 부담 완화 | | 업무 5-1 |
| 2. 서민층 금융피해를 방지한다. | | 업무 5-2 |
| ① 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강화 | | 업무 5-2 |
| ②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 | 업무 5-2 |
| ③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 | | 업무 5-2 |
| 3.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 업무 5-3 |
| 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 | | 업무 5-3 |
| ② 대학생 신용애로 완화 | | 업무 5-3 |
| 4.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한다. | | 업무 5-4 |
| ①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 | 업무 5-4 |
| ② 직불형 카드 활성화 | | 업무 5-4 |
| ③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 업무 5-4 |
| VI.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 |
| 1.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 | 국정과제 2-8-37-5 업무 6-2 |
| ①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 업무 6-2 |
| ②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설명의무 강화 | | 업무 6-2 |
| ③ 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 | | 국정과제 2-8-37-5 업무 6-2 |
| ④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 업무 6-2 |
| 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 업무 6-3 |
| 2.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강화한다. | | 업무 6-4 |
| ① 개인정보 수집 억제 | | 업무 6-4 |
| ② IT 보안체계 강화 | | 업무 6-4 |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기 본 방 향

- ◇ 북한 리스크 대두 이후 보다 확대된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대내외충격 발생에 신속히 대응
- ◇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요인 관리,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
| 4 | 8 | 9 | 16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I-1.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 | 비상금융상황대응팀 점검실적 |
| | | 조기경보모형 등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실적 |
| | |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 | ① 시장 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 | 조기경보모형 등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실적 |
| | ② 외환건전성 제고 |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횟수 |
| | | 국내은행 외화부문 경영계획 점검 횟수 |
| | | 여전사 외화차입 실적 점검 횟수 |
| | | 은행 해외점포 점검에 따른 조치 및 분석 |
| I-2.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을 도모한다. |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대응 여부 |
| | | PF대출 연착륙 도모 |
| | | |
| | ①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황 |
| | ② PF 연착륙 추진 | PF대출 건전성 점검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I-3. 금융회사 위기 대응능력을 확충한다. | | 국내은행 BIS 비율 |
| | |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개선 |
| | ① 금융회사 이익 내부유보 | 시중 금융지주회사 평균 보통주 배당성향 |
| | ② 금융회사(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 | 일반은행 예대율 |
| | | 신탁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 | ③ 자본적적성 기준 강화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 |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개선 |
| | | 상호저축은행 건전성규제 개선 |
| I-4. 저축은행 및 상호 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 | 저축은행 BIS 비율 |
| | ① 저축은행 조기정상화 | 저축은행 BIS 비율 |
| | ②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
| | | 신탁 예보기금 개선 연구용역 수행 |

(1) 주요 내용

- 유럽 재정위기 확산, 글로벌 자금경색 등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취약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체제를 정비할 필요
-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구성,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위기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 또한, 외환부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외환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비상금융상황대응팀 점검 실적 | 신규 | | | 연 12회 | 월 1회 점검 | 월별 점검 여부 | 비상금융상황대응팀 회의 개최실적 |
| 조기경보모형 등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실적 | 연 해당없음 12회 | | | 연 12회 | 월 1회 점검 | 월별 점검 여부 | 조기경보모형 등 점검자료 |
|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신규 | | | 연 4회 | 분기별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점검 | 분기별 점검여부 | 외환건전성 제고 이행상황 점검결과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모니터링 및 대응체제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재정부, 한은, 금감원 등)과의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는 旣구축(외환시장안정협의회)
-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 및 외국인 투자자금 모니터링은 위기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로 금융회사의 반대 소지는 없음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시장 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I-1-①)

□ 추진배경 (목적)

-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기 부진 등 대외 불안요인 지속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계량적 점검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성적 점검을 병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
- 글로벌 IB, 해외사무소, 외은지점 등과 Hot-line을 가동하여 국제금융시장 및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리스크 요인 점검 지속 | '12.1월 | |
| | | '12.2월 | |
| | | '12.3월 | |
| 2/4분기 | 리스크 요인 점검 지속 | '12.4월 | |
| | | '12.5월 | |
| | | '12.6월 | |
| 3/4분기 | 리스크 요인 점검 지속 | '12.7월 | |
| | | '12.8월 | |
| | | '12.9월 | |
| 4/4분기 | 리스크 요인 점검 지속 | '12.10월 | |
| | | '12.11월 | |
| |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사전적인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을 통해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 안정에 전반적으로 기여

□ 기대효과

- 국내외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조기경보모형 등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실적 | 해당없음 | 연 12회 | 연 12회 | 연 12회 | 월 1회 점검 | 월별 점검 여부 | 조기경보모형 등 점검 자료 |

② 외환건전성 제고(I-1-②)

□ 추진배경 (목적)

-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시, 외환 부문 취약요인이 노출됨에 따라 향후 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지속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매분기 국내은행 외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외환건전성 제고 실적 및 외화유동성 확보 상황 등을 지속 점검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국내은행 외화 Stress Test 실시 | '12.2월 | |
| | '12년도 국내은행 외화부문 경영계획 점검 | '12.3월 | |
| 2/4분기 | 국내은행 외화 Stress Test 실시 | '12.5월 | |
| | 여전사 외화차입 실적 점검 | '12.6월 | |
| 3/4분기 | 국내은행 외화 Stress Test 실시 | '12.8월 | |
| | 국내은행 해외점포 점검에 따른 조치 | '12.9월 | |
| 4/4분기 | 국내은행 외화 Stress Test 실시 | '12.11월 | |
| | 여전사 외화차입 실적 점검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은행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해 외환이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

□ 기대효과

- 국내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시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건널 수 있는 외화 유동성 선제적 확보 추진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횟수 | | 신규 | | 연 4회 | 분기별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점검 | 분기별 점검여부 | 외환건전성 제고 이행상황 점검결과 |
| 국내은행 외화부문 경영계획 점검 횟수 | | 신규 | | 연 1회 | 12년도 국내은행 외화부문 경영 계획 점검 | 점검여부 | 국내은행 외화부문 점검결과 |
| 여전사 외화차입 실적 점검 횟수 | | 신규 | | 연 2회 | 여전사 외화차입 현황 점검 | 점검여부 | 여전사 외화차입 점검결과 |
| 은행 해외점포 점검에 따른 조치 및 분석 | | 신규 | | 연 1회 | 은행 해외점포 점검결과 분석 | 점검 및 분석 여부 | 은행 해외점포 점검 결과 |

(1) 주요 내용

□ 금융시스템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금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유럽 재정 위기의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는 등 예기치 못한 대외충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와 같은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 불안요인과 결합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
-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 PF 부실채권 문제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

- 지난해 발표한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출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

□ 아울러, PF 대출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대응 여부 | | | 가계부채 대응방안 마련·시행 |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고 시행하였는지 여부 | 가계대출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여부 | 가계부채 현황보고 및 점검회의 실적 가계부채 대책관련 보도자료 |
| PF대출 연착륙 도모 | | | | 건전성 점검 | PF대출 건전성을 정기 점검 | PF대출에 대한 점검 | 금감원 통계 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가계부채 연착륙추진 (I-2-①)

□ 추진배경 (목적)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

* 가계부채/GDP(% , 09년) : (韓) 80, (美) 97, (英) 102, (OECD 평균) 70 (08년)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09년) : (韓) 143, (美) 126, (英) 168, (日) 112

- 또한, 단기·일시상황·변동금리 위주의 취약한 대출구조에 대한 지적도 지속 제기

⇒ 지난해 발표한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추가대책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의 지속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 부문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필요시 부문별 추가대책 마련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대출구조 개선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 모니터링 | 계속 | |
| |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 점검 | '12.3월 | |
| |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시행 | 미정 | 필요시 추진 |
| 2/4분기 |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 모니터링 | 계속 | |
| |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시행 | 미정 | 필요시 추진 |
| 3/4분기 |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 모니터링 | 계속 | |
| |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시행 | 미정 | 필요시 추진 |
| 4/4분기 |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 모니터링 | 계속 | |
| |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시행 | 미정 | 필요시 추진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잠재적 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을 통해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 안정에 전반적으로 기여

□ 기대효과

- 가계부채 증가속도 적정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 변동금리·일시상환 형태에 치중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황 | |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표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후속조치 이행 |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금년 필요시 추진할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 | 후속조치 이행여부 | 행정지도 규정개정 등 진행상황 |

② PF 연착륙 추진(I-2-②)

□ 추진배경 (목적)

- 부동산시장 활황기에 추진되었던 대형 PF사업들이 전반적인 시장 위축과 함께 지연되면서 PF대출 연쇄 부실화 우려

*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 (08말)4.4 (09말)6.4 (10말)12.9 (11.9월)13.9

- 부실한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연쇄 부실화를 방지하고 사업성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여 시장을 정상화시킬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PF대출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정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

① 필요시 PF 정상화 बैं크에서 PF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여 구조조정 및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 추진

② 부실우려 PF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상각, 시장매각 등을 통해 조기 정리 독려

* 다만, 우량 PF사업장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PF 대출 건전성 점검 시행 | '12.3월 | |
| 2/4분기 | PF 대출 건전성 점검 시행 | '12.6월 | |
| 3/4분기 | PF 대출 건전성 점검 시행 | '12.9월 | |
| 4/4분기 | PF 대출 건전성 점검 시행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PF 대출 부실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PF 대출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

□ 기대효과

- PF대출채권의 연쇄적인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PF대출 건전성 점검 | - | - | 연간 4회 | 연 4회 점검 | 분기별 1회 점검(은행권 기준) | 점검여부 | 건전성 점검 여부 (금감원) |

(1) 주요 내용

□ 대내외 불안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대응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 지나친 배당을 자제하여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바젤Ⅲ 등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자본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리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국내은행 BIS 비율 (%) | | | 신규 | 10% | 은행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 | BIS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금감원 통계자료 (개별은행 제출 보고서) |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개선 | 신규 | 신규 | 신규 |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손실흡수능력 반영 필요 |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개선 여부 | 감독규정 개정 공고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정 시 자본의 손실흡수능력에 따른 구분이 없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되는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자본의 손실흡수능력에 따른 계층화(기본자본과 보완자본)를 신규 도입하여 자본적정성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 제기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은행)의 이익 내부유보(I-3-①)

□ 추진배경 (목적)

- 은행(지주회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안정적이나 대내외 불안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
-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과도한 배당을 억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작년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강화된 대손준비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내부 유보 확대를 유도

* IFRS 회계기준상의 대손충당금이 과거 감독기준상의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배당 등 외부유출을 금지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강화된 대손준비금 제도 시행 및 내부유보 확대 유도 (2,3월 중 지주사 이사회에서 주당 배당수준 논의) | '12.1월 | |
| | 지주사 배당 관련 논의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 '12.2,3월 | |
| 2/4분기 | 내부유보 확대 지속 유도 | 지속 | |
| | 지주사의 11년 이익배당의 실적 최종 점검 (3, 4월 중 지주사 배당 실시) | '12.4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위기시에도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전자금,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의 주주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소액 주주 등이 금융회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금융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운전자금, 사업자금 등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시중 금융지주회사 평균 보통주 배당성향(단위:%)(11년 당기순이익 기준) | 1.4 | 14.4 | 22.4 | 20.0 | 리먼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낮 았던 배당성향이 회복되고 있지 만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11년 배당성향 보다 낮게 목표치 설정 | 배당금 /당기순이익 | 각 지주 재무제표 |

* 주) 금융지주회사(KB, 신한, 하나, 우리, SC, 씨티 기준)

② 금융회사(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I-3-②)

□ 추진배경 (목적)

- 은행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 수신에 기반한 자산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

-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은 2014.1.1일이나, 그 이전에도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100% 이하가 되도록 지속 관리

* 시중은행 예대율(%) :

(‘07말) 122.2 → (‘08말) 118.0 → (‘09말) 112.4 → (‘10말) 98.2 → (‘11.10말) 97.0

- 상호금융에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토록하고, 80%초과 조합은 2년내에 80% 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 징구

*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금고는 ‘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11년 4/4분기 예대율 점검 | '12.1월 | |
| 2/4분기 | 1/4분기 예대율 점검 | '12.4월 | |
| 3/4분기 | 2/4분기 예대율 점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12.7월 '12.9월 | |
| 4/4분기 | 3/4분기 예대율 점검 | '12.10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를 통해 금융기관이 수신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의 경영인, 주주 등

□ 기대효과

- 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일반은행 예대율(%) | | | 신규 | 100% 이하 | 2014.1.1일부터 시행예정인 예대율 규제 수준 | 예대율=원화대출금 / 원화예수금(CD 제외) | 금감원 통계자료 |
| 신협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 | 신규 | 법령 등 개정 | 제도개선사항이므로 법령 등 개정이 목표 | 법령 등 개정 여부 | 법령 등 개정 공고 |

③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I-3-③)

□ 추진배경 (목적)

- 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이 안정적이나 대내외 불안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적정한 자본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 (은행) 바젤Ⅲ 자본규제(13년부터 단계적 도입) 및 유동성 규제('15년 도입) 시행에 대비('13년 자본규제 도입에 대응하여 감독규정 개정)
- (보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정 시 자본의 계층화*를 신규 도입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추진

* 자본요건(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으로 분류하여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고,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

-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본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대손충당금 적립율* 점진적 강화 방안 모색

* 담보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업계평균 경험손실률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최소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 (신협) 신협 출자금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된 신협법 개정안 개정 추진

* 조합원당 출자금 한도확대(총출자금의 10%→15%), 배당금의 출자금 전환 허용,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익년도에 환급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Basel III에 대한 국내외 동향 점검 | 지속 | |
| 2/4분기 | Basel III에 대한 국내외 동향 점검 | 지속 | |
| |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산정방식 개선(안) 마련 | '12.4월 | |
| |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산정방식 개선(안) 의견수렴 | '12.5월 | |
| 3/4분기 | 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개정내용 공고 | '12.7월 | |
| |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12.8월 | |
|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추진 | '12.9월 | |
| 4/4분기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12.12월 | |
| | 상호저축은행법령 등 개정 | 연내 | |
|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지원 | 연내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기관이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강화된 자본적정성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 기대효과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로 국가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
 - (보험) 자본적정성 기준 정합성 제고를 통한 보험회사의 위기 대응능력 향상 기대
 - (신협) 자본확충을 용이하게 하여 손실흐수 능력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신규 | 신규 | 신규 | 규정 개정 | 제도도입이므로 법규개정이 목표치 | 감독규정 개정 여부 | 감독규정 개정 공고 |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개선 | 신규 | 신규 | 신규 |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손실흡수능 력 반영 필요 | 지 급 여 력 비 율 산정방식 개선 여부 | 감독규정 개정 공고 |
|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 개선 | 건전성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 제도 개선 여부 | 제도 개선 관련 보고 서 등 |

(1) 주요 내용

-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및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해당 업권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화 우려 등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으로 전환
 - (상호금융)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상호금융 업권의 안정을 유도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저축은행 BIS 비율(단위 : %) (매년도 말 기준) | 9.31 | 9.03 | 9.79 | 9.4 | 최근 3개년 BIS 비율 평균 | 영업중인 저축은행 BIS 비율 평균치 | 정책수행 효과를 연단위로 평가하 기 위하여 6월말 이 아닌 12월말 반기결산 BIS를 성과지표로 사용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시 bank-run, 예금손실 우려 등에 대한 우려로 예금인출이 증가하는 등 시장에 불안감 형성
 - 예금보장범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시장불안요인이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저축은행 조기정상화(I-4①)

□ 추진배경 (목적)

- '11년 16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저축은행 부실문제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상당부분 해소
- 그 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
 - 현재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 구조조정기금에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45개)의 자본확충을 이행토록 독려
 -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에도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구조조정 추진
 - 충분한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추진
 - 본연의 서민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허용 등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 추진 | 연중 | |
| 4/4분기 | 상호저축은행법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 지원 | 연중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저축은행 상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저축은행금융시장의 건전성에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저축은행 업계

□ 기대효과

-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에도 자체 정상화가 곤란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저축은행 BIS 비율 (단위 : %) (매년도 말 기준, '11년은 9월 기준) | 9.31 | 9.03 | 10.00 | 9.4 | 최근 3개년 평균 | 영업중인 저축 은행 BIS 비율 평균치 | 정책수행 효과를 연 단위로 평가하기 위 하여 6월말이 아닌 12월말 반기결산 BIS를 성과지표로 사용 * '11.12월말 BIS 비율이 산정될 경우 '12년 목표치가 소폭 조정 될 수 있음 |

②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I-4-②)

□ 추진배경 (목적)

- '09년 1월 비과세 예금 한도 확대(2천만원 → 3천만원) 이후 상호금융의 자산 및 여신규모 크게 성장
-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자산부실화 우려에 사전 대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영개선요구대상 신탁의 자구노력 촉진을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을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을 검토
-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13.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강화)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여신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조정) | '12.2월 | |
| 2/4분기 | 신탁 목표기금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 수행 | '12.6월 | |
| 4/4분기 |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신탁법 시행령 개정 등 검토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신탁의 위기대응능력 및 경영건전성 제고로 신탁의 건전성에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신탁

□ 기대효과

- 은행 수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 및 예금자보호기금 확충을 통해 신탁의 위기대응능력 및 경영건전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 신규 | 신규 | 신규 | 감독 규정 개정 |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내 용을 포함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감독규정 개정 | 감독규정 개정현황 |
| 신탁 예보기금 개선 연구용역 수행 | 신규 | 신규 | 신규 | 연구 용역 수행 | 신탁 목표기금제 도입을 위한 연 구용역 수행 추진 |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전략목표 II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기 본 방 향

- ◇ 자본시장 혁신,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금융 인프라를 정비
- ◇ 국제적인 금융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금융협력 강화 등 금융국제화도 지속 추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
| 5 | 6 | 13 | 29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II-1. 자본시장 인프라개선·금융투자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 ① 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헤지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파생제도개선 시행여부 연기금의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
| | ②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문화, 특화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 |
| | ③ 단기자금시장 개편 | 증권사 콜머니 월평균 잔액 한도 기관간 RP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
| II-2.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한다.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 |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 | ②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검토 |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마련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II-3. 전자금융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 전자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① 전자금융산업 경쟁 촉진 및 감독 시스템 정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 | ② 전자금융 인프라 마련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전자증권법 제정 전자문서 도입 기준안 마련 |
| II-4.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한다. | | 자본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 ① 불공정거래 공시의무 및 제재 강화 | 대량보유(5%) 보고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임원의 횡령·배임 공시방안 마련 저축은행 공시·제재 강화 |
| | ②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및 감사인등록제도 마련 |
| | ③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달성률(%) |
| II-5.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국제화 확대를 추진한다. | | 금융국제기준 한국입장 반영수준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건수 |
| | 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MOU 체결건수 신흥국 감독당국 교육프로그램 실행 |
| | ② 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및 금융 기관 해외진출 지원 | 금융중심지정책 추진목표 달성도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한 금융회사 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지원업무 추진목표 달성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수 |
| | ③ 금융분야 국제적 논의 및 협상 적극 참여 | FSB 정례회의 참석률 DDA/FTA 금융분야 협상 수준(공통) |

성과목표 II-1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1) 주요 내용

- 자본시장의 자금의 수요·공급 매칭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관련 플레이어의 역량 제고
 -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
시장 인프라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
 -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전문화·특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플레이
어의 차별화된 성장 유도 및 다양한 자금수요 충족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선행작업 추진 또는 신규 | |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 심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선결될 필요 | 방안 마련 여부 | 방안 마련 여부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요구 증대
- (갈등요인) 자본시장 시스템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강화시 관련 이해관계 업권의 반발 가능성
 - (갈등관리)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의 균형점 도출 노력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Ⅰ 자본시장 시스템 개편(Ⅱ-1-①)

□ 추진배경 (목적)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 투자은행의 발전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 지난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말에 헤지펀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 모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9월), 금투업규정 개정(11월), 모범규준 제정(12월)

-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함으로써, 증권 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및 효율성 제고

* 美·EU·日 등 해외 주요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ATS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 CCP 도입으로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축소되고 다양한 청산수요에 대응 가능

- 그간 신용평가 관련 경쟁부재, 이해상충, 신평사 독립성 미흡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

-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장내파생시장의 과도한 거래규모, ELW시장의 불공정성 및 FX마진 시장의 개인투자자 손실 등 문제점 해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자본시장법상 규제 완화를 통해 연기금 등의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하여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되는 업무 허용
- 헤지펀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해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가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 추진 (자본연구원 주관)
- 헤지펀드 운용사 진입장벽*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자산운용사 : 수탁고 10조원 이상, 증권사 :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 : 일임수탁고 0.5조원 이상
- 대체거래시스템(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중앙거래청산소(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
- 기업 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 시장투명성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를 선진화
- 기 발표한 장내파생상품, ELW 및 FX마진거래 건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ELS 관련 정보공개 등 ELS 투자자 보호강화 방안 마련
 - * 장내옵션 거래단위 조정, 장내파생상품 현금예탁비율 상향, ELW 상장기준 강화 및 LP호가 제한, FX마진거래 개시증거금률 상향 등
- 연기금의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고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 연중 | |
| |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상향, ELW LP 호가제한, FX마진거래 증 거금률 상향 | '12.3월 | |
|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방안 마련 | '12.3월 | |
| |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 '12.3월 | |
| 2/4분기 | 헤지펀드 국제 세미나 추진 | '12.6월 | |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 개 정안 마련 | '12.6월 | |
| 3/4분기 | ELS 건전화방안 마련 | '12.9월 | |
| |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위 심사 | '12.7월 | |
| |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12.9월 | |
| 4/4분기 | 헤지펀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2.12월 | |
| | 연기금의 임원, 주요주주 보고의무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안 마련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증권·파생상품투자자, 신용평가
업자 및 연기금
- (이해관계자) 자기자본,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
운용사, 증권사, 자문사

□ 기대효과

- 해외 투자은행·헤지펀드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 평판
(Reputation)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Player 출현이 기대
- 헤지펀드 안착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 정규거래소와 ATS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인하 및 매매체결
서비스 품질 개선
-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여 채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파생상품시장 참가자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개인의 과도한 투기거래 억제 및 ELS 투자자를 위한 투자정보 확대

○ 연기금 주식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연기금 등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로 자본시장의 변동성 제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 | 법안 국회 제출 | 국회 통과 노력 | | 투자은행 활성화, ATS-CCP 도입 및 신용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여부 | 보도자료 및 내부자료 |
| 헤지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신규 | 개선안 마련 | | 1년간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헤지 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개선안 마련 여부 | 보도자료 |
|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 개선 방안 검토 | 개선 방안 마련 | |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한 채권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개선방안 마련 여부 | 보도자료 및 내부자료 |
| 파생제도개선 시행여부 | | 개선 방안 마련 | 개선 방안 시행 | |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 시행여부 | 보도자료 및 내부자료 |
| 연기금의 임원·주요주 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 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 신규 | 신규 | 신규 | 규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연기금의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안 마련 및 규정 개정이 필요 | 규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여부 | 개정안 및 관련 보도자료 등 |

②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Ⅱ-1-②)

□ 추진배경 (목적)

- 진입기준을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
 - 펀드시장의 과점적 판매채널 구조로 경쟁이 부족하고 투자자보다 판매회사의 이익이 우선될 유인이 높아 이에 대해 개선 필요
 - '11.6월 법무부의 「신탁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운 신탁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자본시장법령상 신탁업 규제체계를 정비
 - 중소형증권사의 전문화 특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충실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공시강화 등 간접규제를 통해 과도한 계열사 판매비율 완화 유도

* 예) 계열사 펀드 판매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他 운용사의 유사한 펀드를 비교·권유토록 의무화

- 개정 신탁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법령의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 예)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도입)

-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특화 유도방안 검토

* 금투협회, 연구기관, 업권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및 중소형 증권사 전문화·특화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중소형 증권사 전문화·특화 T/F 구성 | '12.1월 | |
| 2/4분기 | 중소형 증권사 전문화, 특화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금투협) | '12.5월 | |
| | 금융투자업규정(펀드 판매채널 관련) 개정 | '12.6월 | |
| 3/4분기 | 개정 신탁법 취지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2.9월 | |
| 4/4분기 | 중소형 증권사 전문화·특화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금투협) | '12.10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중소형 증권사, 펀드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 (이해관계자) 펀드 판매사인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자

□ 기대효과

-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요 창출
- 신탁업 규제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금융여건 변화 및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 | | 신설 | 규정 개정 | 펀드 판매채널을 경쟁적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여부 | 금융위 홈페이지의 규정개정 공고문 |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 신설 | 법안 국회제출 | 신탁업 규제체계의 정비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 | 국회제출여부 | 국회 의안관리시스템 확인 |
| 전문화, 특화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 | | | 신설 | 연구용역 완료 | 중소형증권사 전문화·특화 지원을 위해 의미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필요 | 연구용역 완료 여부 | 연구용역 책자 |

③ 단기자금시장 개편(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단기자금시장에서 담보위주 또는 신용도가 반영된 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고 금융투자업 선진화를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증권사의 콜머니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 각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도

- *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기준」 개정, '11.6.1 既시행
- *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11.12월 개정 완료

② 기관간 RP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 마련

- 시장참가자가 시장 내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RP이율, 거래기간, 매도증권 등 관련 정보를 공시
- 자산운용사 등 RP시장 자금공급자의 공급여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증권사의 만성적인 자금 미스매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예) 투자자 예탁금의 익일 예치 → 당일 예치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증권사 콜차입 축소 점검(1/4분기 목표치 점검) | '12.3월 | |
| 2/4분기 | 증권사 콜차입 축소 점검(2/4분기 목표치 점검) | '12.6월 | |
| | 기관간 RP 활성화 방안 마련 | '12.6월 | |
| 4/4분기 | 기관간 RP 활성화 방안 관련 규정 개정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단기자금시장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 기대효과

-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운용시 담보·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
- 금융기관간 기간물 거래를 활성화시켜 금융투자업 발전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증권사 콜머니 월평균 잔액 한도(조원) | - | - | 120 | 8.3 | FY10년말 자기자본 금액의 25% 수준(자본금 증감 반영) | 증권사 콜차입 규모 | 금융투자협회 통계 |
| 기관간 RP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 - | - | - | 규정 개정 | 기관간 RP시장을 활성화할수 있는 규정 개정 필요 | 규정개정 여부 | 보도자료 |

(1)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업권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형성
 - 이사회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금융회사 보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
 - 임원 유형별(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연동 보수지급, 성과보수 이연지급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확립
 -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 의무화
- 은행법령상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신규 | 신규 | 신규 |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제출 되는 일정을 토대로 목표치를 산출 | 법률안 국회제출 여부 | 국회 시스템 등재 여부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 '11년부터 T/F를 구성하여 문제점 및 사례 조사와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임을 강조
 - 학계, 금융업계, 감독당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노력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Ⅱ-2-①)

□ 추진배경 (목적)

-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

* 이사회외 사외이사 비율, 상근임원 겸직제한 범위, 임직원 제재시 임원자격제한 범위, 임원결격 사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등

-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과 관련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주보호뿐 아니라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OECD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위기 보고서('09.6월), BCBS의 은행 지배구조향상원칙('10.3월), FSB의 보상원칙('09.4월) 등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

* CEO 선임절차·승계시스템이 미비하여 CEO공백상태가 장기화된 사례 및 저축은행 등의 감사위원회·상근감사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사례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 보수의 투명성 강화

* 보수총액 등 연차보고서 공시, 임원의 보수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수위원회 설치

○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 *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 참여 금지,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 리스크 관리 강화

- *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도입

○ 집행임원(업무집행책임자) 규율

- * 등기임원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예: 부행장 등)은 이사회에서 임면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홍보계획 등) |
|-------|----------------------------|--------|-----------------|
| 1/4분기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2.3월 | |
| 2/4분기 | ○ 법률안 국회 제출 | '12.6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금융회사(은행·금투·보험·저축·여전·지주 등 6개 업권) 및 임직원

□ 기대효과

- 예금자·투자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시스템리스크 완화
-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능별 규제체계의 틀을 마련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인식 및 관행 혁신의 계기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신규 | 신규 | 신규 |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제출되는 일정을 토대로 목표치를 산출 | 법률안 국회제출 | 국회 시스템 등재 여부 |

②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검토(Ⅱ-2-②)

□ 추진배경 (목적)

- 국내 은행법령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
- 론스타 매각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비금융주력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 (검토필요사항 예시) ① 환율 변동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인종 비금융 회사의 자산이 원화기준으로 2조원이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는데 환율변동의 추가 고려 필요성, ② 과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설정한 원화기준 2조원의 적정성, ③ 비금융주력자 확인 절차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내 은행 소유규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은행소유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지속 | |
| 2/4분기 | 은행소유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지속 | |
| 3/4분기 | 은행소유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지속 | |
| 4/4분기 | 비금융주력자제도 등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마련 | 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내은행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법령상 불명확성 해소 및 은행의 건전한 소유구조 형성
- (이해관계집단)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현행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마련 | 신규 | 신규 | 신규 | 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사항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그 목표임 | 개선방안 마련 여부 | 보고서 |

(1) 주요 내용

- ☐ 전자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 전자단기사채법 제정 및 전자증권법 제정을 통해 금융거래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제도 투명성 제고
- ☐ 종이없는 친환경 금융거래 기반을 마련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전자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신규 | | | 법령 등 제도정비 | 시장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기준안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등 제 개정 및 전자서명 기준 마련 | 법령 개정 및 기준안 마련 여부 |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금융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외부 갈등요인이 적음

(4)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Ⅰ 전자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감독시스템 정비(Ⅱ-3-①)

□ 추진배경 (목적)

-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경영지도기준(미상환 잔액대비 안전자산비율) 일부 적용 면제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유관 부처협의 | '12.5월까지 | |
| 2/4분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완료 | '12.6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및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 기대효과

- 보다 많은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개정 | 신규 | | | 시행령 개정 | 시장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행여부 |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 정보시스템 |

② 전자금융 인프라 마련(Ⅱ-3-②)

□ 추진배경 (목적)

- IT발달에 따라 전자금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은 미흡

* (전자금융거래건수) ('08년) 87억건 → ('09년) 98억건 → ('10년) 114억건

- 전자금융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해나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단시간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작업 추진
- 아울러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관련 실무규정 등)를 '12.12월 말까지 구축

②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법무부와 공동 소관)

③ 전자문서를 활성화함으로써 종이 없는 친환경 금융거래 기반마련

-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기준안 마련·통보
- 자동이체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도록 개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 금융기관, 발행사 및 투자자
- 전자증권제도 도입 : 금융기관, 발행사 및 투자자
-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험계약 : 보험회사 및 보험가입자
- 자동이체시 전자문서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및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 기준안 마련·통보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단 및 실무반 TF구성·운영 | '12.1월 '12.3월 | |
| 2/4분기 |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위한 전자문서 활성화 유관 부처협의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내부 보고(금융위) 추심이체 출금동의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2.5월 '12.6월 '12.6월 | |
| 3/4분기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12.9월 | |
| 4/4분기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완료 | '12.12월 | |
| | 전자증권법 제정안 마련 | '12.12월 | |

□ 기대효과

- 전자금융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금융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자금조달 수단 활성화를 도모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종이 없는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견인
하는 친환경 금융거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 | 신규 | | 전자단기 사채법 시행령 제정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완료 | 시행령 제정 여부 | 법제처 법령조회시스템 |
| 전자증권법 제정 | | 신규 | | 제정안 마련 | 전자증권법 제정안 마련 | 전자증권법 제정안 마련 여부 | 전자증권법 제정안 |
| 전자문서 도입 기준안 마련 | | 신규 | | 기준안 마련 | 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전자서명 등 기준안 마련 *보험업법·전자금융거래법시행 령개정완료 | 기준안 마련 여부 | 보도자료, 기준안 통보 공문 |

(1) 주요 내용

①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시의무 및 제재를 강화

- 대량보유(5%) 보고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임원의 횡령·배임, 회계분식 등의 전력을 사업보고서에 공시
- 저축은행의 허위·지연 공시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②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

- 과징금 상한 조정(5억→20억원),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제한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
- 상장법인·금융회사 감사법인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품질관리능력 및 손해배상책임능력)을 요구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

③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 개선

- 국제기구(FATF)의 지적을 반영하여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정비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전략적 심사분석 강화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외환거래 및 행정정보 등 축적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비자금·불법증여 등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체계를 구축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자본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 개선 | 자본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여부 | 개선안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시·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공정한 시장규율 마련을 위한 기반제도 도입임을 이해시키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조율할 계획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불공정거래 공시 의무 및 제재 강화(Ⅱ-4-①)

□ 추진배경 (목적)

-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시 의무 및 제재를 강화
- (저축은행) 공시 주기가 길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며 금융거래자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 미흡 및 신뢰도 저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량보유(5%) 보고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임원의 횡령·배임, 회계분식 등의 전력을 사업보고서에 공시
- 저축은행의 허위·지연 공시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 대량보유(5%) 보고의무위반 과징금 제도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 법안 국회통과 노력 | 연중 | |
| 2/4분기 | ·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방안 마련 실무 TF 구성 | '12.6월 | |
| | · 임원 횡령·배임공시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 '12.4~6월 | |
| 3/4분기 | · 임원 횡령·배임공시관련 관계기관(금융위, 금감원, 업계, 연구원 등) 협의 및 공시방안 마련 | '12.8월 | |
| | ·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방안 마련 | '12.9월 | |
| 4/4분기 | ·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12.10월 | |
| | · 상호저축은행법령 등 개정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공정·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통한 금융시장 투자자(소비자)들을 보호

□ 기대효과

- 공정·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통해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 (저축은행) 경영공시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대량보유(5%) 보고의무위반 과징금 제도 마련 | 신규 | 신규 | 신규 | 개선안 마련 | 대량보유(5%) 보고의무위반 과징금 제도 마련 | 개선안 마련 여부 | 개선안 또는 보도자료 등 |
| 임원의 횡령·배임 공시방안 마련 | 신규 | 신규 | 신규 | 개선안 마련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임원의 횡령·배임 공시방안 마련 | 개선안 마련 여부 | 개선안 또는 보도자료 등 |
| 저축은행 공시·제재 강화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 개선 | 허위·지연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여부 | 제도개선 여부 | 개선안 |

②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Ⅱ-4-②)

☐ 추진배경 (목적)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과징금 상한 조정(5억→20억원),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제한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
- 상장법인·금융회사 감사법인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품질관리능력 및 손해배상책임능력)을 요구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 법령(외감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실무T/F 운용 · 감사인 등록요건 세부 평가지표 마련 | '12.1~3월 | |
| 2/4분기 | · 법령(외감법 및 시행령) 최종확정 및 감사인 등록요건 확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2.5월 '12.6월 | |
| 3/4분기 | · 입법예고 및 대외발표 | '12.8~9월 | |
| 4/4분기 | · 규제위 및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상정 | '12.11~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기업체

☐ 기대효과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및 감사인등록제도 마련 | 신 규 | 신 규 | 신 규 | 외감법 개정안 마련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 방안 및 감사인등록제도 마련 필요 | 외감법 개정안 마련 여부 | 개정안 또는 보도자료 등 |

③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Ⅱ-4-③)

□ 추진배경 (목적)

-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도는 여전히 미흡 지적, 국제사회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강화
 -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고 국제기준 개정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정착으로 정보보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략적 심사분석 등 효율적인 심사·분석 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 개선
 - 국제기구(FATF)의 지적을 반영하여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정비 하고, 국제기준 개정예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전략적 심사분석 강화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외환거래 및 행정정보 등 축적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비자금·불법증여 등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체계를 구축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전략적 심사분석 (분석주제 발굴, 분석기법 개발 등) | 연중 | |
| 2/4분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2.6월 | |
| 3/4분기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12.9월 | |
| 4/4분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12.12월 | |
| | 특정금융거래정보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에 따라 선진화되는 우리 금융제도를 이용하는 일반국민

- 또한,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우리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와 영업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 자금세탁 등 불법금융거래 방지제도 선진화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달성률(%) | 76.4 | 81.0 | 85.7 | 88.0 |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12년 목표를 88%로 설정 | 14개 중점 권고 사항에 대한 주요 7개국* 평균 대비 달성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 주요 7개국의 상호평가보고서(MER)와 我國이 FATF에 제출한 이행실적 보고서(Follow-up Report) |

(1) 주요 내용

- 유럽 재정위기의 국내 금융시장 전이를 방지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재부각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공조의 기틀을 마련
- 우리나라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여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중심지 기본 인프라를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 (정책과제)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 4대 영역 50개 세부과제 추진
 -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시행(’12.4월) 및 서울국제금융센터 완공(’12.10월)을 계기로 국내외 금융회사의 금융중심지 집적을 가속화
 - 금융공공기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해외진출 효과를 극대화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12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 | | |
| 금융국제기준 한국입장 반영수준 (건) | | | 신규 | 25 | 과거 추세치 반영 | 국제회의 참석 및 협의회수 한국제안 및 국제기준 반영건수 | 결과기록물 |
| 국내외 금융회사 진 출입 건수(건) | | | 신규 | 18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16건)을 감안하여 향상된 목표설정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 회사의 해외진출 건수 | 결과 기록물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제협력의 특성상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변화 및 해외 금융당국의 사정으로 인한 협력사업 지연 가능성 존재

- 기 구축된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참여와 해외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을 통해 금융국제화 확대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Ⅱ-5-①)

□ 추진배경 (목적)

- 금융국제화 확대를 통한 우리 금융시장 선진화와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금융선진국 및 신흥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의 지속적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당국간 협력약정(MOU) 체결을 통해 정보교류 및 감독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 현재 미국 등 18개국 31개 금융당국 및 1개의 국제기구와 MOU를 체결
- 신흥국 감독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 한·중·일 당국간 고위급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신흥국 금융당국과의 MOU 협의 | '12.3월 | |
| 2/4분기 | 한중일 금융감독자 고위급 회의 한국 개최 | '12.6월 | |
| | 신흥국 금융당국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12.6월 | |
| 3/4분기 | 기타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 '12.9월 | |
| 4/4분기 | 신흥국 금융당국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행 | '12.11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MOU 체결」 및 「신흥국 감독당국 교육」 등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효과가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영업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기대효과

- '10년 G20 의장국으로서 축적된 네트워크와 경험을 발전시켜 연속성을 유지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위상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MOU 체결건수(건) | 0 | 4 | 5 | 3 | 지난 3년간 체결된 MOU 연간 평균 체결건수 이상 (3년 평균 : 3건) 과거 추세치 반영 | 체결건수 | 보도자료 |
| 신흥국 감독당국 교육 프로그램 실행(건) | | 신규 | 2 | 2 | | 개최건수 | 결과보고서 |

② 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Ⅱ-5-②)

□ 추진배경 (목적)

- 우리나라가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설립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 요소인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기관 유치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12.3월) 및 자금지원 기준 마련(‘12.5월)
- (금융기관 해외진출 체계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개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연간 해외금융협력사업 계획 마련(‘12.3월)
- (금융중심지 네트워크 강화) 해외 금융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Job Fair 개최(‘12.9월) 및 외국 금융회사 유치 홍보를 위한 금융중심지 IR개최(‘12.11월)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우수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에 특화된 해양·파생 분야 실무금융전문가 양성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금융회사 집적여건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 | '12.3월 | |
| | 공공 금융기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개최 | '12.3월 | |
| | '12년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 배정 | '12.3월 | |
| 2/4분기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생 모집 | '12.4월 | |
| | 금융회사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12.5월 | |
| 3/4분기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작성 | '12.8월 | |
| | 글로벌 금융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 Job Fair 개최 | '12.9월 | |
| 4/4분기 |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홍보를 위한 금융중심지 IR 개최 | '12.11월 | |
| | 실무금융전문인력 교육 실적 평가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금융기관, 국내진입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 금융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금융권 재직자 등

□ 기대효과

-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개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 환경 구축 등 다양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중심지 추진 역량을 강화
-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외국금융회사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대내외 기반조성을 가속화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 | 회계구분 | '11 | '12 |
|----------------------------|--|------|------------------|------------------|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III-1-일반재정①) | | | | |
| ①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1131) | | 일반회계 | 20.73 (20.73) | 18.91 (18.91) |
| ▪ 금융중심지 추진(301) | | | 2.13 | 1.26 |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302) | | | 5.1 | 4.6 |
| ▪ 금융전문인력양성(303) | | | 13.5 | 13.0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중심지정책 추진목표 달성도(공통) | | | 신규 | 90점 | 분야별 금융중심지정책 추진실적 가중평균 | 금추위 개최(20%), 심의·보고(10%), 정책추진(70%) 종합평가 ¹⁾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안건, 2012년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등 |
| 금융중심지로의 신규진입한 금융회사 수(공통) | | | 신규 | 10개 | 현재까지의 실적은 없으나, '12년 SIFC 완공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 목표치 설정 | 서울 및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국내외 금융회사 수 | 결과 기록물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지원업무 추진목표 달성도(공통) | - | | 신규 | 90점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별 추진실적 가중평균 |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20%), 외국금융회사 진입 지원(30%),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지원(30%), 경영·생활환경 개선(20%) 등 종합평가 ²⁾ | 매분기별 결과보고물 실적점검 |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수(공통) | - | - | - | 100명 | 과거 실적 및 (부산)금융인력 규모 고려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수 | 교육기관별 교육생 현황자료 |

1) 종합점수 = ①+②+③

- ① 금추위 개최횟수(가중치 20%) : 3회 이상(20점), 3회 미만(N/3*20, 소수점 반올림)
- ② 금추위 심의·보고 안건 수(가중치 10%) : 8건 이상(10점), 8건 미만(N/8*10, 소수점 반올림)
- ③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건수(70%) : 50건(70점), 50건 미만(N/8*10, 소수점 반올림)

2) 종합점수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① 해외 IR 개최건수(가중치 10%) : 2회 이상(10점), 1회(5점), 0회(0점)
- ② 해외 Job Fair 개최건수(가중치 10%) : 1회 이상(10점), 0회(0점)
- ③ 금융법령 영문화(가중치 15%) : 35건 이상(15점), 35건 미만(n/35*15, 소수점 반올림)
- ④ 외국금융사 간담회(가중치 15%) : 35건 이상(15점), 35건 미만(n/35*15, 소수점 반올림)
- ⑤ 해외 금융당국 초청세미나(가중치 10%) : 1건 이상(10점), 0건(0점)
- ⑥ 국내 금융회사 간담회(가중치 10%) : 5회 이상(10점), 5회 미만(n/5*10, 소수점 반올림)
- ⑦ 외국 금융법령 DB 확충(가중치 10%) : 10건 이상(10점), 10건 미만(n/5*10, 소수점 반올림)
- ⑧ Fn Hub Newsletter 발간(가중치 10%) : 6건 이상(10점), 6건 미만(n/6*10, 소수점 반올림)
- ⑨ 금융거래 가이드북 발간(가중치 10%) : 1건 이상(10점), 0건(0점)

③ 금융분야 국제적 논의 및 협상 적극 참여 (Ⅱ-5-③)

□ 추진배경 (목적)

- G20 금융규제개혁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FSB등 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
- WTO/FTA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시스템 선진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G20, FSB, BCBS 등을 통한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국내제도도 정비
- 현재 추진중인 중국·터키 등과의 FTA 금융서비스분과 협상 참여 및 WTO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참가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FSB 총회 참석 FSB 총회, CBCM, SRC 컨퍼런스 콜 참석 FSB 운영위원회, CBCM 회의 참석 | '12.1월 '12.2~3월 '12.3월 | |
| 2/4분기 | FSB 총회, 운영위원회, 아시아 지역협의체·SRC 참석 | '12.5월 | |
| 3/4분기 | FSB 운영위원회, SRC 회의 참석 | '12.9월 | |
| 4/4분기 | FSB SRC 회의 참석 FSB 총회, SRC 컨퍼런스 콜 참석 FSB 총회 참석 | '12.10월 '12.10~11월 '12.12월 | |

* FSB 회의 일정은 FSB 사무국 사정에 의하여 변동가능성 있음

** FTA는 외교통상부 주관하에 협상 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협상 일정을 지정한 후, 금융위를 포함한 각 부처가 협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추진일정 예측이 곤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G20 금융규제개혁 논의와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
- 은행, 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기대효과

- 국제적 금융규제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장을 반영하고, FTA를 금융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 일반회계 | '11 | '12 |
|------------------------|------|--------------|--------------|
| 금융관련 국제협력(III-1-일반재정②) | | | |
| ① 금융정책지원(1131) | | 5.7 (7.7) | 4.3 (7.1) |
| ▪ 금융관련 국제협력(302) | | 5.7 | 4.3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FSB 정례회의 참석률 (%) | 신규 100% | | | 100% | FSB 총회와 운영위원회, 감독규제 협력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국제기준제정자로서의 위상 강화 | 참석회의수/ FSB총정례회의 개최수 | 출장보고서, 결과보고서 |
| DDA/FTA 금융분야 협상 수준(공통) | 신규 | | | 5회 | 양자 및 다자협상, 협상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회수 | 국제회의 참석 및 협의 회수 | 출장보고서, 결과보고서 |

전략목표 III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한다.

기 본 방 향

- ◇ 청년·기술창업 환경을 혁신하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확산을 적극 추진
- ◇ 여신관행 개선, 정책금융 효율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
| 4 | 4 | 9 | 15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III-1. 청년·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한다.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개선 | |
| | ① 창업지원 환경 혁신 |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 | ② 재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한 확대 |
| III-2.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를 혁신한다. | 중소기업 인프라 개선 | |
| | ① 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 | 면책관련 개선방안 마련 및 감독규정 개정 |
| | ② 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 | 복합금융프로그램 도입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투자 확대 |
| | ③ 중소기업 직접금융 확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등 개정 |
| III-3. 정책금융 지원을 효율화한다.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액 | |
| | ①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 |
| | ②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III-4.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 |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
| | ① 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개별 대기업(4~6월)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 | | 중소기업(7~10월)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 | | 중소기업에 대한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실시 횟수 |
| | ② 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 | | 경기민감업종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실시횟수 |

(1) 주요 내용

□ 최근 청년층의 벤처창업과 녹색산업 등 첨단기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추세

- * 첨단 고기술 제조업 창업(개) : ('00년) 10,407 → ('09년) 5,207
- * 2030 청년 벤처CEO 비중(%) : ('00년) 54 → ('10년) 10

○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붐업(Boom-up)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개선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해서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 여부 | 보도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창업에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

-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있어서 보증기관은행 및 중기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창업지원 환경 혁신(Ⅲ-1-①)

□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전체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청년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창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하되, 공동 창업시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

○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2/4분기 | 기업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 '12.5월 | |
| 3/4분기 |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확대 방안 마련 | '12.7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예비창업자 및 사업초기단계의 창업기업

□ 기대효과

-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 경감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 <신규> | | | 제도개선 | 기업여신 연대보증 제도 모범규준 마련 | 모범규준 마련 여부 |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
|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방안 마련 | <신규> | | | 제도개선 |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지원 확대 | 규정개정 여부 | 신·기보 내부규정 |

② 재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Ⅲ-1-②)

□ 추진배경

-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CEO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의 채무 감면 상한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30%→50%)
 - * 현행 신·기보 원금감면한도 30%, 일반금융회사 50%
- 법인의 채무불이행 부실책임자로 등록되는 '관련인 정보'를 신용회복 시작시 삭제
-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재기중소기업인 지원확대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협의 | '12.3월 | |
| | 신용회복 시작시 '관련인 정보' 삭제 | '12.3월 | |
| 2/4분기 |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확대 시행 | '12.4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채무불이행 중소·벤처기업인
- (이해관계집단) 금융채무 불이행 중소·벤처기업인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기관

□ 기대효과

-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인이 재기가 보다 원활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여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중소·벤처기업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한 확대 | 신규 | | 제도 개선 | 중소·벤처기업인 채무 중 60% 이상이 신·기보 등 보증기관 채무인 점을 감안하여 보증기관 채무의 원금 감면 상한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 규정개정여부 | 신·기보 내부규정 |

(1) 주요 내용

-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 보다는 대출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금융회사는 매출액·담보 등 외형중심의 대출관행을 유지
- ☐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술력·성장성 평가 중심의 여신관행을 정착시키고
- 정책금융 효율성 추구 및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개선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중소기업 인프라 개선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 개선 | 면책제도 등 개선 | 제도 개선 여부 | 보도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금융회사가 실제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성장력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있어서 금융기관 여신담당자·중소기업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Ⅲ-2-①)

□ 추진배경 (목적)

-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형 중심의 중기 대출 심사관행을 혁신함으로써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면책요건의 완화 및 규정화, 면책처리절차 마련 등 면책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공정보 공유 확대 검토 등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의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기업 관련 공공정보 공유 협의 | '12.3월 | |
| | 면책제도 관련 은행연합회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면책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발표 | '12.3월 | |
| 2/4분기 | 면책제도 개선방안 관련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개정 | '12.4월 | |
| | 기업 관련 공공정보 공유 협의 | '12.5월 | |
| 3/4분기 | 기업 관련 공공정보 공유 협의 | '12.7월 | |
| 4/4분기 | 기업 관련 공공정보 공유 협의 | '12.10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중소기업,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담당자, 기업CB와 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
- (이해관계자)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 기대효과

- 면책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중기 대출 취급의 유인 제고
- 기업관련 공공정보의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면책관련 개선방안 마련 및 감독규정 개정 | 신규 | 신규 | 신규 | 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 제도개선 사항으로 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을 목표치로 설정 |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부 및 규정 개정 여부 | 감독규정 개정 공고 |

② 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Ⅲ-2-②)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취약,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주식·회사채 발행보다는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대출·보증 중심임

⇒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금융방식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주식·채권 등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시 대출과 투자를 동시 지원하는 복합금융(Package Finance) 프로그램 도입

○ 정책금융공사가 조성한 중소·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의 CB, BW 등 회사채 투자 규모를 확대

* ('11년) 700억원 → ('12년) 1,200억원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조성한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에 130억원 투자(누적) | '12.3월 | |
| 2/4분기 |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조성한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에 260억원 투자(누적) | '12.6월 | |
| 3/4분기 |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조성한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에 600억원 투자(누적) | '12.9월 | |
| 4/4분기 |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조성한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에 1,200억원 투자(누적)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중소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부재, 중소기업 주식·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이해관계자) 벤처캐피탈,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 기대효과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이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복합금융프로그램 도입 | - | - | - | 도입 | 중소기업에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프로그램 | 기관별 복합 금융프로그램 도입여부 | 기관별 제출자료 |
|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투자 확대(억원) | - | - | 700 | 1,200 | '11년 실적 대비 대폭 확대된 1,200억원으로 목표치 설정 | 정책금융공사의 투자실적 확인 | 정책금융공사 제출자료 |

③ 중소기업 직접금융 확대(Ⅲ-2-③)

□ 추진배경

- (전문투자자 시장) 코스닥 시장의 높은 진입문턱, 프리보드의 부진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로서 역할이 미흡한 상황
 - 초기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히 모험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거래플랫폼이 필요
- (코스닥상장 특례) 현재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상장특례를 운영
 - 혁신형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상장도 촉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기업금융규제 합리화) 금융회사의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융자(Pre-IPO), M&A 등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문투자자 시장) 중소·벤처기업주식 거래에 특화된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 해당 중소기업주식은 고위험·고수익 증권으로서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
- *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벤처캐피탈 등을 동 시장의 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코스닥상장 특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검증받은 유망중소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업금융규제 합리화) 투자은행업무(IB) 및 자산관리업무(PB)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정보교류 차단 합리화) | '12.3월 | |
| | 전문투자자시장 개설방안 마련 | '12.3월 | |
| 2/4분기 | 코스닥 상장특례 개선방안 마련 및 상장규정 개정 | '12.6월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차관회의·국무회의 제출(정보교류 차단 합리화) | '12.6월 | |
| 4/4분기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문투자자 시장)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성장성있는 중소기업 및 해당기업 투자자, 투자은행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등

□ 기대효과

- 성장성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투자 자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여 중소기업 직접금융의 선순환 기대
- 기업금융업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증권회사의 비상장 신생 기업 발굴, 투자 및 자금지원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12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 | 신규 | 시행령 개정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업무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개정여부 | 공고문 및 보도자료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등 개정 | | | 신규 | 규정 개정 | 코스닥상장특례 개선을 위해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등 개정 | 개정여부 | 보도자료 |

(1) 주요 내용

- 정책금융기관은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의 안전판 역할 수행
 -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공급규모 조정
- 또한, 창업·신생기업, 일자리 창출 부문 등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큰 부문에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액 (단위 : 조원) | 104.8 | 104.5 | 108.7 | 106.4 | 과거 추세, 기관별 공급여력, 경제여건 및 지원 규모의 점진적 감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기관별 지원실적 합계 | 기관별 제출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환경, 자금사정 등이 악화될 가능성 존재
 -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금사정 악화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히 자금지원 실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Ⅲ-3-①)

□ 추진배경 (목적)

- 실물경기 둔화 등에 대비하여 금융공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를 방지하고 경기회복에 기여

* 국책은행(산은, 기은, 정책금융공사)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다만, 정책금융의 과도한 확대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증대

-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감축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창업·신생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실시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자금 배분을 통해 창업·신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대출 6.4조원(기은), 보증 15.1조원(신보 8.2조원, 기보 6.9조원), 투자 0.15조원(정책금융공사) 등 총 21.7조원

- 신·기보의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누계 4.7조원) | '12.03월 | |
| 2/4분기 |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누계 11.8조원) | '12.06월 | |
| 3/4분기 |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누계 16.2조원) | '12.09월 | |
| 4/4분기 |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누계 21.7조원)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 창업·신생기업 등이 정책수혜자로 예상됨

□ 기대효과

-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 및 경제전체의 활력을 유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조원) | 21.7 | 23.8 | 23.6 | 21.7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1년도 계획(17.2조원)을 감안하여 '12년에 21.7조원 공급을 목표로 설정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합계 | 기관별 제출자료 |

②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Ⅲ-3-②)

□ 추진배경

- '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도 전년보다 어려워 질 전망
- 이에 따라,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기반이 약화될 가능성
-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군*(13개), 고용창출기업 등 일자리 창출부문에 금년중 8.4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실시

* (예) 반도체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 일자리창출 분야 자금 지원 : 3.5조원(누계) | '12.3월 | |
| 2/4분기 | · 일자리창출 분야 자금 지원 : 4.5조원(누계) | '12.6월 | |
| 3/4분기 | · 일자리 창출 분야 자금 지원 : 6.0조원(누계) | '12.9월 | |
| 4/4분기 | · 일자리 창출 분야 자금 지원 : 8.4조원(누계)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일자리 창출 기업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조원) | 2.3 | 5.2 | 10.7 | 8.4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1년도 계획(7.3조원)을 감안하여 '12년에 8.4조원 공급을 목표로 설정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합계 | 기관별 제출자료 |

(1) 주요 내용

- 既 수립한 기업규모별 구조조정 체계에 따라 채권단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체질을 개선·강화
-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등으로 하여금 자금사정을 밀착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 필요시 업종별 수시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 | | 신규 |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신용위험평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는지 여부 | 신용평가 실시여부 | 보도자료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現 경기민감업종(건설, 조선, 해운)외 다른 업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만큼
- 채권은행 및 애널리스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여타 업종의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Ⅲ-4-①)

□ 추진배경

-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의 침체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아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 철저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체질을 지속 개선·강화함으로써 부정적 파급효과의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既 수립된 기업규모별 구조조정 체계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희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 희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시장불확실성 해소를 도모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홍보계획 등) |
|-----------------|--|----------------------------|-----------------|
| 1/4분기 | · 중소기업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 1월~2월 | |
| 2/4분기 | · 개별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 4월~6월 4월~5월 | |
| 3/4분기 ~4/4분기 | ·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 중소기업 분기별 신용위험평가(2/4분기말) · 중소기업 분기별 신용위험평가(3/4분기말) | 7월~10월 7월~8월 10월~11월 | |
| 연중 | · 유동성 우려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 | -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채권단의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단, 투자자 등도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부실징후기업은 채권단의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적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채권단 및 투자자 등은 경영정상화과정에서의 손실 분담 등을 통해 대출금, 투자금 등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 존재

□ 기대효과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 채권단의 옥석가리기를 통한 워크아웃 등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로의 부실 확산·전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개별 대기업(4~6월)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 실시 | 실시 | 개별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 개별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 채권은행 보고 등 |
| 중소기업(7~10월)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 실시 | 실시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 채권은행 보고 등 |
| 중소기업에 대한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실시 횟수 | | 신규 | 4회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말 2개월 이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실시 횟수 | 채권은행 보고 등 |

② 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Ⅲ-4-②)

□ 추진배경

- 美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민감업종의 영업·재무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 '09년에는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연쇄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특히, 경기민감업종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업종 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으로 부실이 확산·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등으로 하여금 자금사정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한편,
- 채권은행 등으로 하여금 경기민감업종내 유동성 우려기업의 자금사정을 밀착 점검토록 하고,
- 업종 전반에 대한 대규모 부실 우려 등 필요할 경우에는 업종별 수시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홍보계획 등) |
|------------------|---|--------------------|-----------------|
| 1/4분기 ~ 2/4분기 | · 경기민감업종 동향 모니터링(상반기) ·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 | 3월 ~ 5월 4월 ~ 6월 | |
| 3/4분기 ~ 4/4분기 | · 경기민감업종 동향 모니터링(하반기) | 9월 ~ 11월 | |
| 연중 | ·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업종동향, 자금사정 등을 모니터링 ※ 필요시 업종별 수시평가를 실시 | 수시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기민감업종의 자금사정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 해당 업종내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로의 부실 확산·전이를 방지하여 안정적 영업을 지원
- 아울러, 채권은행 등 채권단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를 통해 여신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경기민감업종의 자금사정을 지속 모니터링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향후 경제의 잠재불안요인 등에 대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 | | 신규 | 평가 실시 |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시 부실징후여부를 평가하여 기업구조조정 추진 |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모니터링 횟수/2) | 채권은행 보고 등 |
| 경기민감업종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실시횟수 | | | 신규 | 100% | 채권은행, 애널리스트 면담 등을 통해 경기민감업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업종 리스크를 사전 파악 | ×100 | 채권은행 보고 등 |

전략목표 IV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기 본 방 향

- ◇ 녹색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
-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지원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기반을 강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
| 3 | 3 | 10 | 16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IV-1.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신성장동력 산업 및 R&D 자금공급 확대 | 신성장동력 산업 및 R&D 자금공급 확대 |
| | ① 정책자금 지원 확대 | 해외프로젝트 관련 정책금융기관 MOU 체결 신성장동력분야 특별온렌딩 공급 외화온렌딩제도 도입 |
| | ② 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확대 | 국책은행의 R&D 자금지원 R&D 특례보증 |
| | ③ 코스닥 상장 지원 강화 | 상장희망기업 교육 실시 횟수 전략적 상장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
| IV-2. 녹색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
| | ① 녹색산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 녹색산업 자금 공급 녹색산업 보증 공급 |
| | ②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녹색금융특화 MBA의 충실성(공통) |
| | ③ 녹색 경영공시 강화 | 녹색경영정보 공시제도 시행 및 실적점검 |
| IV-3.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을 제공한다.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제도 개선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제도 개선 |
| | ①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주택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등 제도 개선 |
| | ② 보험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 노후건강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인프라 제공 |
| | ③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확정기여형(DC)의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투자 허용 |
| | ④ 퇴직 금융인 취업지원 | 금융권 퇴직인력 DB 구축 금융권 퇴직인력 중개서비스 시행 |

(1) 주요 내용

- ☐ 미래성장동력인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 공급 등을 확대 지원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방식을 다양화
 - 신성장 기업의 R&D 투자 및 既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
 - 코스닥 상장 특례 등을 활용, 신성장 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신성장동력 산업 및 R&D 자금공급 확대 (단위 : 조원) | 1.0 | 2.0 | 2.3 | 2.6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 분야 특별온렌딩 지원실적 및 국책은행의 R&D자금공급 실적의 합계 | 각 기관별 공급실적 취합 | 정책금융기관 제출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정책자금 지원 확대(IV-1-①)

□ 추진배경

- 미래 핵심산업이 될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
-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공조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자금공급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장기·저리 외화자금 조달능력을 활용한 외화 온렌딩 제도를 도입, 신성장 기업 등에 지원
- 원전 등 해외 프로젝트 여신 지원을 위한 수은·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간 공조 체제 강화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해외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MOU 체결 | '12.3월 | |
| 2/4분기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특별온렌딩 자금공급(누적) : 5,000억원 | '12.6월 | |
| 3/4분기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특별온렌딩 자금공급(누적) : 9,000억원 | '12.9월 | |
| 4/4분기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특별온렌딩 자금공급(누적) : 15,000억원 정책금융공사 외화온렌딩제도 도입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신성장동력부문 중사 기업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 등이 주요 수혜대상일 것으로 기대

□ 기대효과

- 미래핵심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
- 정책금융기관 간 공조 강화를 통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해외프로젝트 관련 정책금융기관 MOU 체결 | 신규 | | | 체결 | 원전 등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MOU 체결(신규) | 체결여부 확인 |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MOU체결서 |
| 신성장동력분야 특별온렌딩 공급(조원) | - | 1.05 | 1.25 | 1.5 | 그간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 '12년도 1.5조원의 공급 목표치 설정 | 정책금융공사 지원실적 확인 | 정책금융공사 제출자료 |
| 외화온렌딩제도 도입 | 신규 | | | 도입 | 정책금융공사의 외화자금 조달력을 활용한 외화온렌딩 도입(신규) | 도입여부 확인 | 정책금융공사 제출자료 |

② 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확대(IV-1-②)

□ 추진배경 (목적)

-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
- 특히, 정책자금 지원은 신성장 기업이 R&D 과정에서 직면하는 리스크를 완화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책은행을 통해 R&D 및 既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

* R&D 자금공급 규모(산은·기은) : (11년) 0.99조원 → (12년) 1.1조원

- R&D 단계별로 기술력을 평가하고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R&D특례보증을 확대

* 기보 R&D 특례보증 : ('11년) 0.9조원 → ('12년) 1.4조원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 국책은행을 통해 R&D 자금 1,400억원 공급 | '12.3월 | |
| | · 기보의 R&D 특례보증 2,000억원 공급 | | |
| 2/4분기 | · 국책은행을 통해 R&D 자금 4,200억원 공급 (누적) | '12.6월 | |
| | · 기보의 R&D 특례보증 6,000억원 공급 (누적) | | |
| 3/4분기 | · 국책은행을 통해 R&D 자금 7,600억원 공급 (누적) | '12.9월 | |
| | · 기보의 R&D 특례보증 10,000억원 공급 (누적) | | |
| 4/4분기 | · 국책은행을 통해 R&D 자금 11,000억원 공급 (누적) | '12.12월 | |
| | · 기보의 R&D 특례보증 14,000억원 공급 (누적) |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

□ 기대효과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의 전단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조원) | | | 목표치 (조원)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국책은행의 R&D 자금지원 (산은, 기은)(조원) | 1.0 | 1.0 | 1.1 | 1.1 | 과거 추세 및 기관별 공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각 기관 지원실적 합계 | 기관별 제출자료 |
| R&D 특례보증 (기보)(조원) | - | - | 0.9 | 1.4 | 과거 추세 및 기관별 공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각 기관 지원실적 | 기관별 제출자료 |

③ 코스닥 상장지원 강화(IV-1-③)

□ 추진배경

-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기술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업종을 확정('09.1월)하고 지원정책* 발표

* '그린 IT'에 향후 5년간 4.2조원, 녹색기술연구개발에 10.9조원,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8조 4천억원 투자 등

- 신성장동력기업에 상장특례를 부여('11.3)하였으나 신규상장 기업의 IPO준비에 상당기간*(1년이상)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상장지원이 필요

* 지정감사인 지정, 주관사 계약 체결, 회계·내부통제제도 정비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대상 상장유치 활동 강화

- '10.12월 개원한 상장지원센터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상장지원 및 전략적 상장유치활동 강화

▶ 상장유치활동 주요 내용 (예시)

- 상장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전국 지자체와 협력
- 재무실적 DB를 분석하여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장유치활동 전개

- 상장지원 과정에서 상장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비상장기업 맞춤형 상장컨설팅 서비스 개시 | '12.1월 | |
| 연중 | 상장희망기업 경영자 및 실무자 교육 실시 | 연중 | |
| | 전략적 상장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및 현장상담 실시 | 연중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신성장동력산업 등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투자자 등

□ 기대효과

- 신성장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촉진되어 해당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상장희망기업 교육 실시 횟수(회) | | | 12 | 12 | 상장관련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 경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교육 실시 | 실시횟수 | 결과보고서 |
| 전략적 상장유치를 위한 기업방문(사) | | | 신규 | 15 | 신성장동력산업 등 유망기업을 대상 으로 전략적 상장유치 대상 15사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 | 방문기업수 | 결과보고서 |

(1)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해 녹색산업을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
-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녹색산업 금융지원을 통해 녹색성장을 뒷받침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10 '11 | '12 | | | |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조원) | 신규 | 10.7 | 녹색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 자금지원 실적 점검 | 기관별 제출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달이 일정 수준 전제되어야 녹색금융 활성화와 녹색산업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음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녹색산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IV-2-①)

□ 추진배경 (목적)

- 녹색산업의 특성상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
- 녹색산업은 대체로 투자 불확실성이 높고 회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민간자금 공급에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확대
- 녹색산업 설비투자 촉진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에서 대출 및 투자를 통해 자금 공급
- 자금수요가 절실한 녹색산업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우대 보증(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조정) 제공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계획(조원) : ('11년) 8.6 → ('12년) 10.7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녹색산업 자금 공급(누적, 억원) : 7,500 | '12.3월 | |
| | 녹색산업 보증 공급(누적, 억원) : 15,300 | '12.3월 | |
| 2/4분기 | 녹색산업 자금 공급(누적, 억원) : 16,400 | '12.6월 | |
| | 녹색산업 보증 공급(누적, 억원) : 38,600 | '12.6월 | |
| 3/4분기 | 녹색산업 자금 공급(누적, 억원) : 26,000 | '12.9월 | |
| | 녹색산업 보증 공급(누적, 억원) : 51,750 | '12.9월 | |
| 4/4분기 | 녹색산업 자금 공급(누적, 억원) : 38,000 | '12.12월 | |
| | 녹색산업 보증 공급(누적, 억원) : 69,000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책금융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녹색산업* 종사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산업 (10대 분야)

○ (이해관계집단) 대출, 투자 및 보증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

□ 기대효과

○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통해 아직 산업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녹색산업의 성장을 견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녹색산업 자금 공급 (조원) | 1.86 | 3.6 | 4.1 | 3.8 | 종래 녹색성장 기업 지원 계획 및 실적을 감안하여 산출 | 기은, 산은, 정금공의 지원 실적 합계 | 기관별 제출자료 |
| 녹색산업 보증 공급 (조원) | 4.3 | 5.4 | 7.8 | 6.9 | | 신보, 기보의 지원 실적 합계 | 기관별 제출자료 |

② 녹색금융전문인력 양성(IV-2-②)

□ 추진배경 (목적)

- 녹색산업이 성장할수록 이를 뒷받침할 녹색금융 분야 역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 2030년, 1조 달러(모건스탠리)

- 이러한 녹색금융의 성장에 맞춰 인프라로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그러나 녹색금융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교육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성숙하지 않아,

- 시장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련분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정부 지원 필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10)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요내용) 녹색금융특화 MBA 지정대학(KAIST, 고려대)을 통해 녹색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수반되는 교육경비를 지원

- 녹색금융과정 이수자 대한 장학금(개도국 학생 포함), 녹색금융 교과목 연구비, 우수교원 유치비 등 지원

- (추진계획) 녹색금융특화 MBA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10~'11년도 대학별 자체평가 결과 검토 | '12.3월 | |
| | '1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대학별 예산편성 | '12.3월 | |
| 2/4분기 | '11년도 녹색금융특화 MBA 사업 정산 및 교부금 확정 | '12.4월 | |
| 3/4분기 | 녹색금융특화 MBA 과정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실시 | '12.8월 | |
| | 녹색금융특화 MBA 과정 중간실적 및 실태 점검 | '12.8월 | |
| 4/4분기 | 녹색금융특화 MBA 과정 중간실적 및 실태 점검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녹색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생, 녹색금융 분야 과정 개설 및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KAIST, 고려대)

□ 기대효과

- 녹색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성장동력인 녹색분야의 경쟁력 제고
- 녹색금융과정 개설 및 관련 연구활동을 통해 향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녹색금융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 | 회계구분 | '11 | '12 |
|----------------------------|---------------------|------|-----------------|------------------|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III-1-일반재정①) | | | | |
| ①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1131) | 일반회계 | 13.5 (20.73) | 13.05 (18.91) |
| | ▪ 금융전문인력양성(303) | | 13.5 | 13.0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녹색금융특화 MBA의 충실성(공통) | 신규 | | 90점 | 과거 녹색금융특화 MBA 교육실 적 등 고려 | 녹색금융특화 MBA 졸업생/세미나/ 실무연계/국제화/ 커리큘럼/연관 산업 취업비율 종합점수* 도출 | 교육기관별 교육실적 현황자료 |

* 종합점수 = ①+②+③+④+⑤+⑥+⑦

①녹색금융 MBA 졸업생 수(30%) : 36명 이상(30점), 35명 이하($n/36 \times 30$ 점)

②녹색금융 세미나 회수(10%) : 10회 이상(10점), 9회 이하($n/10 \times 10$ 점)

③실무금융인의 녹색금융특화 MBA 강의 회수(10%) : 10회 이상(10점), 9회 이하($n/10 \times 10$ 점)

④영어강의 비율(10%) : 50% 이상(10점), 50% 미만($n/50 \times 10$ 점)

⑤해외연수 비율(10%) : 70% 이상(10점), 70% 미만($n/70 \times 10$ 점)

⑥녹색금융강좌 수(10%) : 15개 이상(10점), 14개 이하($n/15 \times 10$ 점)

⑦녹색금융 MBA 졸업생 6개월 이내 연관 산업(금융기관 등) 취업비율(20%) : 70% 이상(20점), 70% 미만($n/90 \times 20$ 점)

※ ①~⑦ 계산은 녹색금융특화 MBA(KAIST, 고려대) 합산

③ 녹색 경영 공시 강화(IV-2-③)

□ 추진배경 (목적)

- 기업의 녹색경영 유도 및 녹색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녹색 경영 공시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실가스 배출업체 등의 녹색경영정보(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공시 제도는 既 시행('11.1월)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마련(금감원) 및 업계 전파 점검 | '12.1~2월 | |
| 4/4분기 | · 녹색경영정보를 반영한 사업보고서 공시 실적점검 | '12.11~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금감원, 거래소, 기업체, 일반국민

□ 기대효과

- 녹색경영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 민간 녹색금융활성화 및 녹색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녹색경영정보 공시 제도 시행 및 실적 점검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 시행 및 실적 점검 | 녹색경영정보 공시제도 시행 및 실적점검 | 제도 시행 및 실적점검여부 | 보도자료 등 |

(1) 주요 내용

□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은퇴·노후 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고령자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위험률 등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해 노후 건강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 공적연금 보완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추진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 금지 완화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금융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기회 제공을 위해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금융권 퇴직인력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권 퇴직인력 DB’를 구축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제도 개선 | | | | 제도 개선 | 주택연금 수시인출확대 등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및 운용규제 완화를 위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 법령 및 규정 개정 | 금융위 홈페이지의 법령개정 공고문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 필요

- 금융권 퇴직인력 DB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나 자발적인 신상정보 입력 절차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불가

☐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TF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IV-3-①)

□ 추진배경 (목적)

-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및 공급 증대를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후 연령별 지출형태를 감안하여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

* 의료·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의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30%→50%로 확대(주택담보대출 상환·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이미 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 가능)

** 종신지급하더라도 지급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지급후반기에는 적게 지급하는 전후후박(前厚後薄) 형태로 월지급금을 지급

- 주택연금 취급기관(현재 11개 은행)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
-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과 연계 마케팅 추진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2/4분기 |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 | '12.6월 | |
| | 주택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 '12.6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금융자산이 없는 고령층이 거주주택을 노후대비 수단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율 보다 활성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주택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등 제도 개선 | | | 신규 | 시행령 개정 |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 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주금공법 시행 령 개정 여부 | 관보(시행령 개정령) |

② 보험의 노후보장기능 강화(IV-3-②)

□ 추진배경 (목적)

- 현재 노후연금보험은 가입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동일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제공하고 있으며,
 - * 기왕증(질병보유) 국민은 일반가입자에 비해 잔여 기대수명이 짧아 생존시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음에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어 연금보험 가입을 기피
- 노후건강보험은 위험률 및 관련 통계 부족으로 82세까지만 보장하고 있어 고연령층에 대한 위험보장기능 취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연금보험 상품’의 개발추진을 통한 연금상품의 다양화로 연금보험 기피계층을 흡수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연령층의 위험보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위험률 등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해 노후건강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80세 이상 고연령층도 민영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험률 산출 기간을 확대(現 82세 → 최대 112세)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2/4분기 | 질병 등 관련 위험률 산출연령 확대 | '12.6월 | |
| 4/4분기 | 건강상태에 따른 연금액 차등화 방안 검토 | '12.10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기왕증(질병보유) 및 고연령층 국민의 보험가입 확대
- (이해관계집단)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기왕증(질병보유) 및 고연령층 국민의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기회 확대를 통해 보험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기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노후건강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인프라 제공 | 신규 | | | 위험률 확대 제공 | 위험률 통계의 확대제공을 통해 보험의 노후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 참조위험률 확대제공 여부 | 참조위험률 통계 제공 자료 |

③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IV-3-③)

□ 추진배경 (목적)

- 급속한 고령화 및 공적연금의 보완 등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의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C 및 IRA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금지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추진
 - 현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안정성 및 담보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효과적 자산운용 불가
-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2/4분기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TF 운용 | '12.4월 | |
| 3/4분기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 '12.7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퇴직연금 사업자 및 DC 및 IRA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근로자

□ 기대효과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및 가입자 특성(위험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일정부분 자본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확정기여형(DC)의 주 식형 및 혼합형 펀드 투자 허용 | | | 신설 | 규정 개정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운용규제 완화 방안 마련 | 감독규정 개정 여부 | 금융위 홈페이지의 규 정개정 공고문 |

④ 퇴직 금융인 취업지원(IV-3-④)

□ 추진배경 (목적)

- 금융업권 퇴직자의 재취업 수요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현재 운영되는 재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미흡

- 조기퇴직(50대 미만 퇴직)이 금융업권 퇴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연령에 이르고 있음

* '55년~ '63년 사이(49~57세)에 출생한 세대로 약 713만명, 총인구의 약 15% 차지

-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구직수요를 파악할 있는 시스템이 미비

□ 퇴직 금융인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금융권 퇴직 인력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권 퇴직인력 DB'를 구축
- 금융권 퇴직자와 기업간 구인/구직 중개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운영중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등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세부추진 계획 마련을 위해 금융권 협회와 회의 개최 | '12.3월 | |
| 2/4분기 | 금융권 퇴직인력 재취업지원방안 세부시행계획 마련 | '12.6월 | |
| 3/4분기 | 재취업 의사를 지닌 퇴직금융인 개인정보 수집 | '12.9월 | |
| 4/4분기 | 금융권 퇴직인력 DB 구축 완료 및 중개서비스 시행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재취업 의사를 지닌 금융권 퇴직자와 퇴직 금융인을 고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이해관계집단) 금융권 퇴직인력 DB 구축 및 중개서비스 운영 주체인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기대효과

- 퇴직 금융인과 금융회사의 구직/구인 비용 감소로 인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권 퇴직인력 DB 구축 | - | - | 신규 | DB 구축 | 금융권 퇴직자들의 재취업 수요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금융권 퇴직자와 기업간 구인/구직 중개서비스 제공에 활용 | DB구축여부 확인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 제출 자료 |
| 금융권 퇴직인력 중개서비스 시행 | - | - | 신규 | 서비스 시행 | | 중개서비스 시행여부 확인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 제출 자료 |

전략목표 V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 본 방 향

- ◇ 3대 서민금융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을 확대
- ◇ 신용회복지원 확대, 신용카드 제도개선 및 피해예방구제 강화 등을 병행하여 서민층 금융애로를 해소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
| 4 | 7 | 11 | 15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V-1.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 | 서민금융 지원인원 |
| | | 미소금융 지원금액 |
| | ①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금액 새희망홀씨의 저신용·저소득자(신용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지원비율 |
| | ②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 | 금리우대형 보증자리론 지원 확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환보증 신설 |
| | ③ 금융비용 부담 완화 | 바꿔드림론 보증지원 인원 |
| V-2. 서민층 금융피해를 방지한다. | |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 |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TF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
| | | 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 | |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 | ① 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강화 |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 | ②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TF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 | ③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 |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V-3.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 채무조정 지원인원 |
| | 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 |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금액 |
| | ② 대학생 신용애로 완화 |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제도 개선 |
| V-4.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한다. | |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
| | ①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 수수료율체계 개편 방안 |
| | ② 직불형 카드 활성화 |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
| | ③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1) 주요 내용

- ①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내실있게 운용하여 서민층 금융애로 경감
- ②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리우대형 보증자리론 지원 확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환보증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③ 전환대출 지원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서민금융 지원인원 (단위 : 천명) | 179 | 200 | 437 | 400 | ○ '11년도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 가계부채 규모 지속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규모 확대보다는 기존 대출자의 연체 방지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 | 미소금융,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새희망홀씨 지원인원 총계 |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인원 및 상호금융·저축은행·시중은행의 햇살론·새희망홀씨 신규대출 지원 인원 집계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V-1-①)

□ 추진배경 (목적)

- 유럽 재정위기 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서민층의 금융애로 증가 우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소금융은 신상품을 개발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 현재는 기업·은행재단에서만 '특성화 상품'을 통해 대출
 -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리의 미소금융 자금을 지원
 - * 전통시장 미소금융 지원채널(개) : ('11)300 → ('12)600 → ('13)900
-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고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요건을 완화
- 새희망홀씨는 연간 대출 공급규모를 지속 확대('11년 1.2→'12년 1.5조원)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저소득층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확대 시행 | '12.2월 | |
| | 햇살론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 확대방안 마련 | '12.2월 | |
|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요건 완화방안 마련 | '12.2월 | |
| 2/4분기 | 햇살론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 확대 시행 | '12.5월 | |
|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요건 완화 시행 | '12.5월 | |
| 4/4분기 | 전통시장 미소금융 채널 확대 | 연중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 미소 금융 :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햇 살 론 :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새희망홀씨 : 신용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이해관계집단) 미소금융지점 및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미소금융),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햇살론), 시중은행(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취급기관

□ 기대효과

○ 자활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사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자부담을 경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미소금융 지원금액 (단위 : 억원) | 413 | 1,160 | 3,131 | 2,500 | '11년 목표 금액이 2,000억원이므로 이에 25%증가한 2,500억원을 목표로 설정 | 지원실적 확인 | 미소금융재단 집계 |
|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금액 (단위 : 억원) | 신규 | | | 500 | '11년도 대환대출 인프라 마련 및 '12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대환대출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1.9~'11.12 대환자금 지원액 : 72억원 | 지원실적 확인 |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환대출 공급금액 집계 |
| 새희망홀씨의 저신용·저소득자(신용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지원비율 (단위 : %) | - | - | 76.4 | 70% 이상 | 새희망홀씨가 고신용·고소득자 위주로 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신용·고소득자 대출비율을 70% 수준으로 설정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대출건수 / 전체 대출건수) * 100 | 16개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지원 인원 집계 |

②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V-1-②)

□ 추진배경 (목적)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증자리론 지원을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구입시 지원하되 '12년중 1.5조원 내에서 공급(연소득 2,500만원 이하는 기공급중)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

*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확대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금리우대형 보증자리론 지원 확대 | '12.1월 | |
|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환보증 신설 | '12.3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무주택 서민

□ 기대효과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금리부담을 경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금리우대형 보증자리론 지원 확대 | | | 신규 | 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 | 지원대상 확대여부 | 보도자료 |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전환보증 신설 | | | 신규 | 전환보증 신설 |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전세 거주자 지원을 위해서는 보증한도를 확대한 전환보증을 신설할 필요 | 전환보증 신설여부 | 보도자료 |

③ 금융비용 부담 완화(V-1-③)

□ 추진배경 (목적)

- 금융시장 불안,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자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증가할 우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환대출인 신용회복기금의 바뀐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 (현행) 3천만원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전환대출 허용 → (개선) 바뀐드림론을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상환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총 3,0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전환대출 허용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바뀐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 '12.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고금리채무를 지닌 저신용·저소득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면서 연 20%이상 고금리채무자

- (이해관계집단) 바뀐드림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및 고금리 대출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 기대효과

- 고금리채무의 은행권 저금리채무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서민층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발생 등을 사전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바뀌드림론 보증지원 인원 (단위 : 명) | 14,866 | 16,569 | 46,164 | 30,000 | '11년도에는 고금리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공급(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2년도에는 지원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10년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10년도의 두배 수준으로 목표 설정 | 지 원 실 적 확인 | 신용회복기금 전환 대출 지원인원 집계 |

(1) 주요 내용

① (私금융 피해) 불법 금융거래로 인한 서민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 행위, 불법추심, 신종대출사기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지속
-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등을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대출권유 행위를 억제

*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

②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사기유형·편취방법 등에 따라 유형화·분석하여 빈발하는 사기 유형에 대한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
-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협의회”를 구성
- 피해자의 성별·연령·피해규모 분석 등을 통해 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홍보를 강화

③ (보험사기)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을 제고
 - 회의개최 정례화(연4회 개최), 유관기관간 공동대응 및 정보공유 활성화 등을 추진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신 규 | | 관련 규정 개정 | 불법·부당한 대부광고로 인한 충동적 대출, 불법 사채업 이용 등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여부 |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안건, 보도자료 등 |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TF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 신 규 | | TF 회의 2회 개최 및 종합대책 발표 |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금융,통신,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 | 회의 개최 여부 종합대책 발표 여부 | 회의 자료 종합대책 보도자료 |
| 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신 규 |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보이스피싱이 빈번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여부 | 보고서, 보도자료 등 |
|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신 규 | | 연4회 개최 | 보험조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 ('08년 이후 총 3회 개최) | 회의 개최여부 | 회의 개최자료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대부업체 광고규제 강화 등 규제 강화에 따라 해당업계의 반발
가능성

- 대부금융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규제 강화의 취지 및 내용을
업계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강화 (V-2-①)

□ 추진배경

- 서민, 노약층,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및 불법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부업 광고시 과도한 차입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포함, 광고의 표시기준 마련 등 대부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
-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 행위, 불법추심, 신종대출사기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지속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 '12.3월 | |
| 4/4분기 |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불법추심, 신종 대출사기 등 모니터링 실시 | 연중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서민, 노약층,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부금융 이용자
- (이해관계집단)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관련협회 등

□ 기대효과

- 불법 사금융 모니터링 지속, 광고규제 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를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신 규 | | | | 불법·부당한 대부광고로 인한 총동적 대출, 불법 사채업 이용 등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여부 |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안건, 보도자료 등 |

②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V-2-②)

□ 추진배경

- 전년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 '10년 5,455건, 554억원 → '11년 8,244건(51.1% ↑), 1,019억원(83.9% ↑)
-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이용 절차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통신·치안 등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 마련
-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이용 절차 및 요건 강화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및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 '12.1월 | |
| 3/4분기 | 비대면 금융거래 이용요건 및 절차 강화방안 마련 및 시행 | ~'12.7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중인 금융소비자

□ 기대효과

- 비대면 금융거래의 이용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피해 감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10 | '11 | | | |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TF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 신 | 규 | TF 회의 2회 개최 및 종합대책 발표 | 회의 개최 여부 종합대책 발표 여부 | 회의 자료 종합대책 보도자료 |
| 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신 | 규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여부 | 보고서, 보도자료 등 |

③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V-2-③)

□ 추진배경

-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 보험사기 발생 추정규모 : 2.2조원(FY06 기준)

- 보험사기 관련자 제재규정 신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및 기획조사 실시 등을 통해 제재강도 및 적발확률 향상을 도모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사기 관련자 제재규정 신설
 -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조력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진

-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보험사기 등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금융위, 금감원, 복지부 등 11개 기관)간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08년 이후 총 3회 개최)

- 회의개최 정례화(연 4회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간 공동대응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취약분야 기획조사 강화

- (일반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고 손해율 상품을 중심으로 동일유형 사고다발자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자동차보험) 허위청구·고의사고, 물적 손해율 증가요인 등 보험금 누수요인 조사
- (병·의원 연루)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과장 청구 및 모집종사자와 연계한 의료관련 보험금 부당편취 등 조사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보험사기 기획조사 계획 수립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 '12.3월 | |
| 2/4분기 |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 '12.6월 | |
| 3/4분기 |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 '12.9월 | |
| 4/4분기 |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제3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연중 4회)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보험사기에 따른 누수 보험금 발생방지로 보험회사 및 보험가입자 부담 경감 예상
- (이해관계집단)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 및 보험료 적정화 효과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신규 | 신규 | 신규 | 연4회 개최 | 보험조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 ('08년 이후 총 3회 개최) | 회의 개최여부 | 회의 개최자료 등 |

(1) 주요 내용

① 성실한 신용회복자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부담을 경감

-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관(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기금)의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
- 신용회복 지원시 채무재조정 비용 및 신용회복 신청비 면제 대상을 확대

② (취업지원) 채용시 신용정보 이용제한 등 대학생 취업애로 완화

-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직원 채용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
-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졸업후 일정기간(예: 2년) 동안 정보의 집중 유예를 추진
-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채무조정 지원인원 (단위 : 명) | 149,178 | 167,989 | 162,997 | 130,000 | '09년·'10년에는 '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원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11년도에는 지원인원이 감소세로 전환한 점을 고려하여 '11년도의 80% 수준으로 목표설정 * '12년도 목표치 13만명은 '08년도 지원실적(82,656명)의 약 1.6배 수준 | 채무조정 지원 인원 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지원 인원을 집계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등록을 유예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문제발생 우려
 - 연체등록으로 취업에 제약받는 경우 오히려 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졸업후 일정기간 동안 연체정보 집중유예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V-3-①)

□ 추진배경 (목적)

- 성실한 신용회복자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저리(연 4.0%)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 ('10년) 700억원 → ('11년) 881억원

- 예상치못한 실직 및 질병 등 긴급상황 발생을 이유로 하는 채무재조정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
- 군복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용회복 신청비(5만원) 면제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채무재조정 비용 경감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협의 | '12.2월 | |
| 2/4분기 | 채무재조정 비용 및 신용회복 신청비 면제대상 확대 시행 | '12.5월 | |
| 4/4분기 | 성실상환자에 대한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 확대 | 연중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신용회복 지원 성실상환자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 (이해관계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기관

□ 기대효과

- 의료비, 학자금 등 긴급자금 수요 발생으로 신용회복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소액자금을 지원하여 신용회복 성공률 제고
-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금액 (단위 : 억원) | 364 | 700 | 881 | 1,000 |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원 증가추세 반영 | 소액대출 지 금액 | 지원 | 신용회복기금, 신용회 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 금액 집계 |

② 대학생 신용애로 완화(V-3-②)

□ 추진배경 (목적)

- 채용시 신용정보 이용제한 등 대학생 취업애로 완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금융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
 - * '11.12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직원 채용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
-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연체 정보의 은행연합회 집중 유예 추진
-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신용회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정부 일반상환학자금 연체에 대한 유예제도 시행 | '12.1월 | |
| |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2.2월 | |
| 2/4분기 |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제도개선 시행 | '12.4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부 일반상환학자금 등을 대출받은 대학생 및 청년 구직자,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
- (이해관계자) 한국장학재단 및 취업시 신용정보를 활용중인 기업 및 금융회사, 대학생 연체채권 보유 채권기관

□ 기대효과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취업자들이 연체 등으로 인해 겪는 취업애로를 완화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이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제도 개선 | 신규 | | | 협약 개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협약 개정을 통해 대학생 신용회 복지원 강화 | 협약개정 여부 | 신용회복위원회 |

(1) 주요 내용

- ☐ 카드업계 스스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
- ☐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고 계획소비가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전환시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
-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 | 9.0 | 11.1 | 13.2 | 15.0 | 과거실적을 감안, '11년도 실적인 13.2% 대비 1.8%p 상향된 15%를 목표로 설정 | 직불형카드 이용실적 총 카드 이용실적 | 금융감독원, 협회 실적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갈등요인)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개편 또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대해 신용카드사는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염려하여 저항하거나 소극적일 가능성
 -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조율할 계획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V-4-①)

□ 추진배경 (목적)

- 카드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자의적이고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 특히, 대형점에 비해 중소형점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대한 불만 확산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

▶ 신용카드 종합대책('11.12.26) 개선방향(例示)

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

②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

-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
-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대폭 축소

③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유지

-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중에 공청회를 개최(여신금융협회)
- 전문연구기관 연구결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중에 카드사별 수수료율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 | '12.3월 | |
| 2/4분기 | 수수료율 체계 관련 공청회 개최 | '12.6월 | |
| 4/4분기 | 수수료율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중소형 가맹점

○ (이해관계집단) 가맹점 단체의 수수료율 인하요구, 가맹점 수수료율이 증가하는 가맹점의 반발 등

□ 기대효과

○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업종간 불합리한 차별이 제거되고 투명성이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수수료율체계 개편 방안 | 신규 | 신규 | 신규 | 시행 | 국내 신용카드업 태생이후 최초의 대규모 가격체계 개편작업 | 시행여부 확인 | 보도자료 등 |

② 직불형 카드 활성화(V-4-②)

□ 추진배경 (목적)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게 빚 증가로 귀결되며,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으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
-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카드결제 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가게 건전화를 유도
-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

* 계좌 이용 수수료 인하, 다양한 유형의 신용·직불 겸용카드 발급 유도 등

- 소비자의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

*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 허용 | '12.2월 | |
| |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 | '12.2월 | |
| 2/4분기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 '12.6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회원) 예금 범위 내 지출로 계획소비가 가능
- (가맹점)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부담이 경감

* 신용카드 최고 3.6%, 직불형 카드 최고 1.7%(중소가맹점 1.0%)

- (카드회사)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보완

□ 기대효과

- 회원의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
- 가계부채 증가 억제,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 | 9.0 | 11.1 | 13.2 | 15.0 | 과거실적을 감안, '11년도 실적인 13.2% 대비 1.8%p 상향된 15%를 목표로 설정 | 직불형카드 이용실적 총 카드 이용실적 | 금융감독원, 협회 실적 자료 |

③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V-4-③)

□ 추진배경 (목적)

- 카드사들이 운용중인 개별약관의 내용이 카드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맹점의 권리행사를 제약

* (예)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카드사 임의로 조정 가능, 신용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를 과도하게 규정

-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계약행태를 시정

-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카드사 귀책사유로 판매대금 지급 지연시 카드사 배상책임을 명시

- 판매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카드사의 자의적인 대금지급 가능성을 차단

*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변조 등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

-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통보를 의무화

*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1개월전 서면 통보 의무화

-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한 공정위 협의, 금감원 심사를 완료하고, 상반기중에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시행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가맹점 표준약관 내용 공정위 협의, 금감원 심사 | '12.3월 | |
| 2/4분기 |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및 시행 | '12.6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신용카드 가맹점
- (이해관계집단)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으로 규제, 비용이 증가하는 신용카드사

□ 기대효과

-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가맹점의 권익이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신규 | 신규 | 신규 | 제정 | 가맹점 표준약관의 신규 제정여부를 목표로 설정 | 제정 여부 확인 | 보도자료 등 |

전략목표 VI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서민 등 금융약자를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IT보안 강화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도 확충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
| 2 | 3 | 7 | 11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
| VI-1.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 |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
| | ①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보험상품 공시내용 이해도 평가 실시 |
| | | 공시대상 확대 |
| | ②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설명의무 강화 | 연금저축 통합공시 방안 마련 |
| | | 중도해지시 세금추징 설명의무 강화 |
| | ③ 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지방 주민등에 대한 금융교육 실시 |
| VI-2.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강화한다. | ④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금리연동상품의 해약환급금 제공내용 개선 |
| | |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감독 강화 |
| | 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제출 |
| | |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실시 |
| |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
| | ① 개인정보 수집 억제 |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실시 |
| | ② IT 보안체계 강화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

(1) 주요 내용

-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실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
- ☐ 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구제 등 금융소비의全过程를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
 -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며 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 | |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국회 제출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각 업권별 제도개선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점 및 18대 국회 임기 등을 감안하여 법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설정 | 법안 국회제출 여부 |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VI-1-①)

□ 추진배경 (목적)

-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회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부담에 대한 비교공시를 실시 중
- 공시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야별 공시대상 확대 및 복잡·난해한 공시내용의 재정비를 통한 이해도 향상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분야별 공시대상 확대
 - (은행) 현재 미공시 수수료 등에 대한 추가 공시
 - (카드) 신용카드 금리수준별 회원분포와 평균금리 공시대상을 확대
 - (신협) 대출종류별·신용등급별 금리수준 등 공시 확대 ('12.9월)
 - (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지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신용공여이자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
- 공시내용 재정비를 통한 소비자 이해도 향상
 - (보험) 공시내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공시내용 재정비 추진

* 현행 약관이해도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상품 공시내용을 일반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평가 실시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신용공여이자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 | '12.2월 | |
| | 카드상품별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개선 | '12.3월 | |
| |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 | '12.3월 | |
| 2/4분기 | 상품 공시내용 소비자 이해도 평가 방법 검토 | '12.6월 | |
| | 은행권 및 관련기관 협의 | '12.6월 | |
| 3/4분기 | 상품 공시내용 소비자 이해도 평가 방안 마련 | '12.9월 | |
| | 실험 대출종류별·신용등급별 금리수준 공시 확대 | '12.9월 | |
| 4/4분기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수수료 추가공시 | '12.12월 | |
| | 상품 공시내용 소비자 이해도 평가 실시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상품 공시 확대를 통해 알권리 및 선택권이 확대되는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확대를 통한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회사간 건전경쟁 촉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보험상품 공시내용 이해도 평가 실시 | 신규 | | | 이해도 평가 실시 | 보험관련 공시내용에 대한 소비자 등 이해도평가 실시를 통한 이해도 제고 필요 | 이해도 평가 실시 여부 | 이해도 평가 실시계획 |
| 공시대상 확대 | 신규 | | | 공시 대상 확대 |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금융분야별 공시대상 확대 추진 | 공시 여부 | 홈페이지 등 |

②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설명의무 강화(VI-1-②)

□ 추진배경 (목적)

-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지속 발생
- 특히, 노인 등 보험취약계층 대상상품 및 중도해지시 세금추징이 따르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인 등 보험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상품광고 규제 및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추진
- 세금추징으로 인해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큰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 강화 추진

* 해지 시 세금추징 패널티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권역별 모든 연금저축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통합비교공시 실시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2/4분기 | 연금저축 금융권역별 공시내용 조사 | '12.6월 | |
| 3/4분기 | 연금저축 통합공시 방안(안) 검토 | '12.9월 | |
| 4/4분기 | 연금저축 통합공시(안) 마련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노인 등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계층
- (이해관계집단)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안내 의무화를 통한 노인 등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의 피해발생 예방 및 선택권 확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연금저축 통합공시 방안 마련 | 신규 | 신규 | 신규 | 통합 공시안 마련 | 금융권역별 비교가능한 연금저축 통합공시안 마련을 통한 소비자알 권리 등 보장 필요 | 통합공시안 마련여부 | 연금저축 통합공시 검토자료 등 |
| 중도해지시 세금추징 설명 의무 강화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 개선 | 보험취약계층 피해방지를 위한 중도해지시 세금추징 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설명 의무 강화내용의 안내장 등 반영여부 | 설명 의무 관련 안내장 등 |

③ 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VI-1-③)

□ 추진배경 (목적)

- 고령화사회 진입 등 최근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연령대별·재무상황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개발 추진
- 저축은행 사태, 보이스피싱 피해 등 지방생계형 서민, 노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원거리 방문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상담 서비스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추진전략 및 교육프로그램」(11.12)을 토대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활용

* 개인이 일생동안 겪는 ①미혼기, ②신혼기, ③자녀출산 및 양육기, ④ 자녀 학령기, ⑤자녀 성년기, ⑥자녀독립 및 은퇴기 등 주요 단계

- 지자체와 공동(MOU체결)으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등 서민의 생계현장을 찾아가는 「민생금융 Tour 버스(가칭)」 운영
- 신설되는 실용경제과목에 실생활과 관련된 금융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초중고 표준교재*를 각급 학교에서 활용

* 초중고 표준교재 개발(11.12), 서울시교육청 인정교과서 승인(12.1)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연 중 | 지자체 주민 대상 교육 실시 | | |
| 1/4분기 | 찾아가는 민생금융 투어 버스 계획 수립 | '12.3월 | |
| | 대구시, 경북, 강원도와 금융교육협력 MOU 체결 | '12.3월 | |
| 2/4분기 | 순회버스 구입 및 찾아가는 민생금융 투어버스 실시 | '12.5월 | |
|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콘텐츠개발 기관 선정 | '12.6월 | |
| 4/4분기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콘텐츠개발 · 보급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다양한 연령대의 금융소비자 및 지리적 여건, 바쁜 생업활동 등으로 인해 금융교육, 상담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주민

□ 기대효과

- 연령별·계층별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지방주민의 금융교육·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어 균형 있게 금융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 | |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 신규 | 개발 | 콘텐츠 개발 여부 | 콘텐츠 개발 여부 | |
| 지방 주민등에 대한 금융교육 실시 | | 강도 | 3건, 30회 | MOU 체결건수 민생금융 투어 실시 | MOU 체결건수 민생금융 투어 실시 횟수 | |

④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VI-1-④)

□ 추진배경 (목적)

- (저축은행) 저축은행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 없이 후순위채를 판매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발생
- (보험)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보험상품에 대한 시장통제기능 미흡으로 인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기능 미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저축은행)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에 대한 사모발행으로 제한하고,
 - 공모시에도 창구 직접판매는 금지
- (보험) 보험상품에 대한 시장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검증기능 강화
 - 전문계리법인 육성, 상품공시 강화 등 검증기능 강화방안 마련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추진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3/4분기 |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 (공시이율 등) | '12.7월 | |
| 4/4분기 | 상호저축은행법령 등 개정 | 연내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예방되는 금융소비자 등
- (이해관계집단)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관련 피해 사례 발생 예방
- 보험료·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기능 강화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시장통제기능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금리연동상품의 해약환급금 제공 내용 개선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 개선 | 분야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추진 |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추진 여부 | 제도 개선 현황 등 |
|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감독 강화 | | | | 제도 개선 |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감독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여부 | 제도개선 여부 | 제도 개선 현황 등 |

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VI-1-㉑)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KIKO 사태 등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에서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소비의全过程(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
 - (판매행위규제)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 규정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체결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

* (예) 설명의무 (①투자성상품 : 투자 위험, ②예금성상품 : 이자율·종도해지 수수료, ③보장성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제재강화) 과징금제도 신설 등 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

*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규제위반시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부과

- (분쟁조정제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 5백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진행 중 소송제기를 금지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 (금융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금감원내에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한 準 독립기구로 설치

○ '12년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18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시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재제출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제출 | '12.3월 | |
| 2/4분기 |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통과 노력 | '12.5월 | |
| 4/4분기 | · (18대 국회 법안 폐기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19대 국회 제출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규제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제출 | | | | 법안 국회 제출 | 18대 국회 임기 등을 감안하여 법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설정 | 법안 국회제출 여부 | |

(1) 주요 내용

-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
- ☐ 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정례적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실시 | | 신규 | | 조사 실시 | 개인정보조사 여부 | 개인정보조사 현황자료 | 각 업권 협회를 통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료 수집 |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 | 신규 | | 법령 등 제도 정비 | 전자금융기반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여부 | 법안 국회제출 여부 및 시행령 제도개선 마련·시행여부 | 보도자료, 입법현황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보조업자 직접조사권 도입 등에 대해 민간의 반발 소지가 있으나,
 - 동 제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 최소한 임을 적극 홍보하고,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추진

(4)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개인정보수집억제(VI-2-①)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법·금융실명법 등의 예외조항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

* (예)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

- 특히,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업권별·거래 형태별로 금융거래시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전수조사
-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가 필요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2/4분기 | 금융권 개인정보 이용실태 조사 실시 | '12.6월 | |
| 3/4분기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 '12.9월 | |
| 4/4분기 |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2.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회사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제출해도 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줄어드는 금융기관 이용자

- (이해관계자) 거래형태별로 필요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하는 금융회사

□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제공·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실시 | 신규 | | | 전수 조사 | 개인정보 관련 전수조사 선행될 필요 | 개 인 정 보 조 사 현황자료 | 각 업권 협회를 통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료 수집 |

② IT보안체계 강화(VI-2-②)

□ 추진배경 (목적)

- 전자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전자적 침해행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위협요인도 증가하고 있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IT보안체계를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회사로 하여금 CEO책임하에 연간 IT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유도
- 금융회사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IT보안 책임성 강화
- IT보안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금융회사*·위반자**(해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보안수준 제고

* 안전성의무(전자금융거래법 §21) 위반시 영업정지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시 형사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12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
| 1/4분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 '12.3월 | |
| 2/4분기 | CISO 지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2.5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용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IT관련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업무부담 증가 및 보안비용 상승

등으로 동 계획안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음

- 특히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신설하는데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IT보안체계 강화를 통하여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가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12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09 | '10 | '11 | '12 | | | |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 신규 | | |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 | 전자금융기반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법안 국회제출 여부 시행령 마련·시행 여부 | 보도자료, 입법현황 |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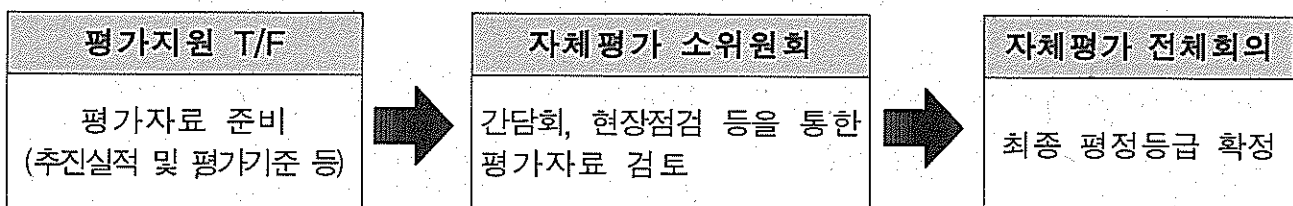
- ◇ 자체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략목표별 담당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 ◇ 체계적인 자체평가 지원을 통한 단계적 평가를 실시

□ 점검체계

-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략목표별 담당 소위원회로 구분 운영
 - 총 6개 전략목표를 각 소위별로 2개씩 담당
 - * 1소위(전략목표 I ~ II), 2소위(전략목표 III ~ IV), 3소위(전략목표 V ~ VI)
- 각 소위별 평가지원 T/F*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과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
 - * 구성원 : 해당 전략목표 관련 주요 관리과제 담당자

□ 실적 점검 및 평가

- 매분기별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
 - 관리과제의 성과 달성도 향상을 위해 반기별 대면 또는 서면회의 실시
- 연 1회 자체평가 실시 ('13.1월)
 - 평가지원 TF로부터 소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로의 단계적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1단계 평가 기초자료 준비 (평가지원T/F) : 매 분기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를 중심으로 평가의 기초자료(주요정책의 추진방향 및 분기별 추진실적)를 분기별로 작성
- 반기별 실적 점검으로 자체평가위원회의 정책 컨설팅 기능 강화

2단계 평가자료 준비 (평가지원T/F) : '12.10~11월

-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방법(평가지표, 평가기준 등) 및 연간 주요 추진실적을 미리 배포

3단계 검토 및 1차평가 (소위원회) : '12.11 ~ 12월

- 평가자료를 토대로 자체평가 소위원회 회의(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별 기본 평가지침* 도출
 - * 예시 : 외생적 요인에 대한 평가반영 방법 등
- 소위원회별로 1차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4단계 평가점수 등 최종 확정 (전체회의) : '12.12~'13.1월

- 자체평가 전체회의에서 1차 자체평가보고서에 이견이 있는 부서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점수 결정
- 동 절차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평정점수 및 자체평가보고서 확정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 성과관리시행계획이 개인별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기준, 인사, 조직 등에 반영

가. 격월로 추진실적 점검 및 feed-back 실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실적 점검회의를 통해 격월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과제의 경우에는 추진을 독려
 - 평가회의에는 부위원장 및 소관 과제 담당 국장들이 참석함으로써 간부들의 관심도를 제고
 -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실·국의 간부들이 함께 공유하여 실·국간 협력을 통해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 직원들의 담당업무 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요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Brown bag Meeting 등을 활용
 - 담당 과제 및 금융제도·현안에 대해 직원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기자들도 참석하여 위원회 내·외부 함께 성과계획 달성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시성 있는 환류가 가능토록 함

다. 분야별 환류 방안

□ 인사

- 승진심사시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우수자에 대한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실시
- 개별 평가분야 중 주요정책 등에 대한 성과평가 유공자에게 포상

□ 조직

-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분석하여 인력 감축 등 유동정원제 및 조직개편시 반영
-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 특히, 격월로 부위원장 주재로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
 - 다만, 조직개편은 직제개편이 필요하므로 직제개편이 필요 없는 내부 태스크포스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

□ 성과급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정책수립·집행

- 실적점검 및 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개선 유도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토록 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환류성을 강화
- 실패사례를 DB화한 실패정책은행 등의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시행착오 방지
- 평가결과 반영노력을 개인 성과평가에 연계하는 방안 강구

3. 변화관리 계획

가. 변화관리 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 변화관리전략과 관리방향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및 인사의 연계 고리 강화
-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 비효율 제거
-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
 - 업권별 금융전문가 인재DB를 구축·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금융 포럼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 세부실천과제

① 성과관리시스템과 업무의 연계성 강화

- (교육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를 확산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 (피드백 실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한 상시적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에 반영

② 금융감독포탈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 (사용자 환경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강화 등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시스템 만족도 제고
- (피드백 실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

③ 학습체계 내실화를 통한 업무 역량 증진

- (학습프로그램 다양화) 브라운 백 미팅(연간 20회 수준), 전문 교육기관 위탁(연중 수시) 등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 (학습 유인체계 구축)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 조성

나. 성과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 성과지표 관리 전담 TF를 구성·운영(연간)

- 기획재정담당관실을 성과지표 관리 전담 팀으로 지정하여 전체 성과지표들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총괄
 - * 성과지표 달성정도를 업무실적 평가시 반영, 성과지표 수정·보완 시 총리실과의 조정 창구 역할 등
 - * 반기별로 TF 회의를 개최하여 성과지표의 중복을 해소하고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을 확보
- 정책목표별 총괄추진팀을 지정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성과지표 추진현황을 집중 관리

4. 갈등관리 전략

□ 갈등관리 기본 방향

- 민간(수요자) 위주의 정책 추진을 원칙으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성 확보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단계별 진행상황 및 대응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금융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과 갈등 전문가들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2012년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 >

| 구분 | 위원명 | 직책/직업 | 경력사항·주요활동 |
|----------|-----------|---------|------------------------|
| 민간 위원 | 안동현 (위원장) | 서울대 교수 | 금융발전심의위원 |
| | 조명현 | 고려대 교수 |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
| | 신인석 | 중앙대 교수 | 금융발전심의위원 |
| | 정세창 | 홍익대 교수 | OECD보험위원회 한국대표 |
| | 김병일 | 강남대 교수 | FIU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 | 정순섭 | 서울대 교수 | 한국증권학회 이사 |
| | 박영규 | 성균관대 교수 | 英 코넬대 초빙연구교수 |
| 내부 위원 | 서태종 | 기획조정관 | 서민금융정책관 |
| | 고승범 | 금융정책국장 | 금융서비스국장 |
| | 정지원 | 금융서비스국장 | 기획조정관 |
| | 진웅섭 | 자본시장국장 | 대변인 |

□ 갈등관리 전략

- 관리대상 갈등을 리스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갈등관리 대장을 마련, 갈등유형, 단계별 진행상황 및 대응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체계적으로 관리
-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및 전문가의 정책 참여 통로 마련
- 위원장 등 간부를 중심으로 정부 시책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여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한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주요 정책 수립·집행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도록 강조
 - 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 미소금융 지원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 갈등상황 점검

□ 갈등관리종합시책 수립

-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외부 전문가, 금융위 갈등과제 담당자 등과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TF를 구성·운영
-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여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 총괄현황

(단위: 개)

| 전략 목표 | 구분 | | 성과지표 | | | | | |
|----------|------|----|------|----------|----------|-------------|-------------|-------------|
| | | | 소계 | 지표성격 | | | | 정량지표 |
| | | |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
| 6 | 성과목표 | 22 | 31 | 0 (-) | 0 (-) | 14 (45%) | 17 (55%) | 14 (45%) |
| | 관리과제 | 59 | 102 | 0 (-) | 0 (-) | 54 (53%) | 48 (47%) | 54 (53%) |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정량화 | 성격 | |
| 1.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 | | | | | |
| 1.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 ①비상금융상황대응팀 점검 실적 | 월별 점검 여부 | 연 12회 | 정량 | 산출 | |
| | ②조기경보모형 등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실적 | 월별 점검 여부 | 연 12회 | 정량 | 산출 | |
| | ③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분기별 점검여부 | 연 4회 | 정량 | 산출 | |
| 2.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을 도모한다. | ①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대응 여부 |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점 검하여 필요시 추가대책을 적절히 마련하고 시행하였는 지 여부 |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정성 | 결과 | |
| | ②PF대출 연착륙 도모 | PF대출에 대한 점검 | 건전성 점검 | 정성 | 결과 | |
| 3. 금융회사 위기 대응능력을 확충한다. | ①국내은행 BIS 비율 | BIS비율 = 자기자본/위험 가중자산 | 10% | 정량 | 산출 | |
| | ②보험사 지급여력 |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개선 | 감독규정 | 정성 | 결과 |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정량화 | 성격 | |
| | 비율 산정방식 개선 | 여부 | 개 정 추 진 | | | |
| 4. 저축은행 및 상호 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 ①저축은행 BIS 비율 (매년도 말 기준) | 영업중인 저축은행 BIS 비율 평균치 * 매년도 말 기준 '12.2월 현재 '11년 12월 말 반기결산 결과가 확정 되지 않아 '11.9월말 기 준 수치 사용 | 9.4% | 정량 | 산출 | |
| 2.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 | | | | | |
| 1. 자본시장 인프라개선·금융 투자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 모한다. | ①자본시장의 자금 공급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방안 마련 여부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2.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한다. | ①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법률안 국회제출 |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 정성 | 결과 | |
| 3. 전자금융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①전자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법령 개정 및 기준안 마련 여부 | 법령 등 제도정비 | 정성 | 결과 | |
| 4.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을 제고한다. | ①자본시장의 투명· 공정성 제고를 위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 개선 여부 | 제도개선 | 정성 | 결과 | |
| 5.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국제화 확대를 추진한다. | ①금융국제기준 한 국입장 반영수준 | 국제회의 참석 및 협의회수 한국제안 및 국제기준 반영 건수 | 25회 | 정량 | 산출 | |
| | ②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건수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건수 | 18건 | 정량 | 산출 | |
| 3.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한다. | | | | | |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정량화 | 성격 | |
| 1. 청년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한다. | 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 제도개선 여부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2.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를 혁신한다. | ① 중소기업 인프라 개선 | 제도개선 여부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3. 정책금융 지원을 효율화한다. | ① 정책금융기관의 중소 기업 자금공급액 | 기관별 지원실적 합계 | 106.4조원 | 정량 | 산출 | |
| 4.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한다. | ①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는지 여부 | 대기업중소기 업에 대한 신 용평가 실시 | 정성 | 결과 | |
| 4.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 | | | | | |
| 1.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① 신성장동력 산업 및 R&D 자금공급확대 | 각 기관별 공급실적 취합 | 2.6조원 | 정량 | 결과 | |
| 2. 녹색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 한다. | ①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 자금지원 실적 점검 | 10.7조원 | 정량 | 결과 | |
| 3.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을 제공한다. | 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제도 개선 | 법령 및 규정 개정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5.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 | | | | | |
| 1.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 ① 서민금융 지원인원 | 미소금융, 신용회복기금, 신용 회복위원회, 햇살론·새희망 홀씨 지원 인원 총계 | 400천명 | 정량 | 산출 | |
| 2. 서민층 금융피해를 방지한다. | ①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여부 | 관련 규정 개정 | 정성 | 결과 |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정량화 | 성격 | |
| | ②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TF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 회의 개최 여부 및 종합대책 발표 여부 | TF 회의 2회 개최 및 종합대책 발표 | 정성 | 결과 | |
| | ③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여부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정성 | 결과 | |
| | ④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회의 개최여부 | 연4회 개최 | 정량 | 산출 | |
| 3.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①채무조정 지원인원 | 채무조정 지원인원 수 | 130,000명 | 정량 | 산출 | |
| 4.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한다. | ①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 | $\frac{\text{직불형카드 이용실적}}{\text{총 카드 이용실적}}$ | 15.0% | 정량 | 산출 | |
| 6.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 | | | | |
| 1.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 ①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국회제출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법 안 국회 제출 | 정성 | 결과 | |
| 2.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강화한다. | ①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실시 | 개인정보조사 현황자료 | 조사실시 | 정성 | 결과 | |
| | ②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 법안 국회제출 여부 및 시행령 제도개선 마련·시행여부 | 법령 등 제도정비 | 정성 | 결과 | |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 정량화 | 성격 | |
| I.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 | | | | | | |
| 1.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 | | | | | | |
| | ①시장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 | ①조기경보모형 등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실적 | 월별 점검 여부 | 연 12회 | 정량 | 산출 | |
| | ②의환건전성 제고 | ①외화 스트레스 테 스트 실시 횟수 | 분기별 점검여부 | 연 4회 | 정량 | 산출 | |
| | | ②국내은행 외화부문 경영계획 점검 횟수 | 점검여부 | 연 1회 | 정량 | 산출 | |
| | | ③여전사 외화차입 실적 점검 횟수 | 점검여부 | 연 2회 | 정량 | 산출 | |
| | | ④은행 해외점포 점검에 따른 조치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여부 | 연 1회 | 정량 | 산출 | |
| 2.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을 도모한다. | | | | | | | |
| | ①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①가계부채 대책 이행 상황 | 후속조치 이행여부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후속조치 이행 | 정성 | 결과 | |
| | ②PF 연착륙 추진 | ①PF대출 건전성 점검 | 점검여부 | 연 4회 | 정량 | 산출 | |
| 3.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확충한다. | | | | | | | |
| | ①금융회사 이익 내부유보 | ①시중 금융지주회사 평균 보통주 배당 성향(11년 당기순 이익 기준) | 배당금/당기순이익 | 20.0% | 정량 | 산출 | |
| | ②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 | ①일반은행 예대율 |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 예수금(CD 제외) | 100% 이하 | 정량 | 산출 | |
| | | ②신협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법령 등 개정 여부 | 법령 등 개정 | 정성 | 결과 | |
| | ③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 ①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감독규정 개정 여부 | 규정 개정 | 정성 | 결과 | |
| | | ②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산정방식 개선 |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산정방식 개선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 | ③상호저축은행 자본 규제 개선 | 제도 개선 여부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 | | | | | | |
| | ①저축은행 조기정상화 | ①저축은행 BIS 비율 (매년도 말 기준, '11년은 9월 기준) | 영업중인 저축은행 BIS 비율 평균치 | 9.4% | 정량 | 산출 | |
| | ②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 ①상호금융업 감독 | 감독규정 개정 여부 | 감독 규정 | 정성 | 결과 |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 정량화 | 성격 | |
| | 강화 | 규정 개정 | | 개정 | | | |
| | | ②신탁 예보기금 개선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수행 여부 | 연구 용역 수행 | 정성 | 결과 | |
| II.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 | | | | | | |
| 1.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금융 투자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 | | | | | |
| | ①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 ①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여부 | 국회 통과 노력 | 정성 | 결과 | |
| | | ②헤지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개선안 마련 여부 | 개선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 | ③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개선방안 마련 여부 | 개선 방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 | ④파생제도개선 시행 여부 | 제도개선 시행여부 | 개선 방안 시행 | 정성 | 결과 | |
| | | ⑤연기금의 임원·주요 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 규정개정 및 시행령 개정 안 마련 여부 | 규정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 ②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 ①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여부 | 규정 개정 | 정성 | 결과 | |
| | | ②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국회제출여부 | 법안국회제출 | 정성 | 결과 | |
| | | ③전문화, 특화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 | 연구용역 완료 여부 | 연구용역 완료 | 정성 | 결과 | |
| | ③ 단기자금시장 개편 | ①증권사 콜머니 월평균 잔액 한도 | 증권사 콜차입 규모 | 8.3조원 | 정량 | 산출 | |
| | | ②기관간 RP거래량 | 기관간 RP거래량(매도) 잔량(12월말) | 20.8조원 | 정량 | 산출 | |
| 2.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한다. | | | | | | | |
| | ①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제정 | ①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법률안 국회제출 여부 |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 정성 | 결과 | |
| | ②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검토 | ①은행소유규제 개선 방안 마련 | 개선방안 마련 여부 | 개선 방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3. 전자금융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 | | | | | |
| | ①전자금융산업 경쟁 촉진 및 감독시스템 정비 | ①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여부 | 시행령개정 | 정성 | 결과 | |
| | ②전자금융 인프라 마련 | ①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 시행령 제정 여부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 정성 | 결과 | |
| | | ②전자증권법 제정 | 전자증권법 제정안 마련 여부 | 제정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 정량화 | 성격 | |
| | | ③전자문서 도입 기준안 마련 | 기준안 마련 여부 | 기준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4.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한다. | | | | | | | |
| | ①불공정거래 공시 의무 및 제재 강화 | ①대량보유(5%) 보고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 의무기준 마련 | 개선안 마련 여부 | 개선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 | ②임원의 횡령·배임 공시방안 마련 | 개선안 마련 여부 | 개선안 마련 | 정성 | 결과 | |
| | | ③저축은행 공시·제재 강화 | 제도개선 여부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 ②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 ①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및 감사인등록제도 마련 | 외감법 개정안 마련 여부 | 외감법 개정안 마련 여부 | 정성 | 결과 | |
| | ③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 ①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달성률 (%)(공통) | 14개 중점 권고사항에 대한 주요 7개국* 평균 대비 달성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 88% | 정량 | 산출 | |
| | | | | | | | |
| 5.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국제화 확대를 추진한다 | | | | | | | |
| | ①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①MOU 체결건수 | 체결건수 | 3건 | 정량 | 산출 | |
| | | ②신흥국 감독당국 교육프로그램 실행 | 개최건수 | 2건 | 정량 | 산출 | |
| | ②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①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목표 달성도(공통)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안건, 2012년 금융중심 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등 | 90점 | 정량 | 산출 | |
| | | ②금융중심지로 신 규진입한 금융 회사 수(공통) | 결과 기록물 | 10개 | 정량 | 산출 | |
| | | ③금융중심지지원 센터 지원업무 추진 목표 달성도(공통) | 매분기별 결과보고물 실적점검 | 90점 | 정량 | 산출 | |
| | | ④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수(공통)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수 | 100명 | 정량 | 산출 | |
| | ③ 금융분야 국제적 논의 및 협상 적극 참여 | ①FSB 정례회의 참석률 | 참석회의수/FSB총정례 회의회개최수 | 100% | 정량 | 산출 | |
| | | ②DDA/FTA 금융 분야 협상 수준 (공통) | 국제회의의 참석 및 협의회수 | 5회 | 정량 | 산출 | |
| | | | | | | |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 정량화 | 성격 | |
| Ⅲ.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한다. | | | | | | | |
| 1.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한다. | | | | | | | |
| | ①창업지원 환경 혁신 | ①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 모범규준 마련 여부 | 제도개선 | 정성 | 결과 | |
| | | ②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방안 마련 | 규정개정 여부 | 제도개선 | 정성 | 결과 | |
| | ②제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 ①중소·벤처기업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한 확대 | 규정개정여부 | 제도개선 | 정성 | 결과 | |
| 2. 중소기업 금융인프라를 혁신한다. | | | | | | | |
| | ①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 | ①면책관련 개선방안 마련 및 감독규정 개정 | 제도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규정 개정 여부 | 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 정성 | 결과 | |
| | ②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 | ①복합금융프로그램 도입 | 기관별 복합 금융프로그램 도입여부 | 도입 | 정성 | 결과 | |
| | | ②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투자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투자실적 확인 | 1,200억원 | 정량 | 산출 | |
| | ③중소기업 직접금융 확대 |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개정여부 | 시행령 개정 | 정성 | 결과 | |
| | | ②코스닥시장상장 규정 등 개정 | 개정여부 | 규정 개정 | 정성 | 결과 | |
| | | | | | | | |
| 3. 정책금융 지원을 효율화한다. | | | | | | | |
| | ①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 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합계 | 21.7조원 | 정량 | 산출 | |
| | ②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 ①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합계 | 8.4조원 | 정량 | 산출 | |
| 4.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 | | | | | |
| | ①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 ①개별 대기업(4~6월)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개별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 실시 | 정성 | 결과 | |
| | | ②중소기업(7~10월)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 실시 | 정성 | 결과 | |
| | | ③중소기업에 대한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실시 횟수 | 중소기업에 대한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실시 횟수 | 4회 | 정량 | 산출 |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 정량화 | 성격 | |
| ②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 | ①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신 용위험평가 실시여부 | 평가 실시 | 정성 | 결과 | |
| | | ②경기민감업종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실시 횟수 | (모니터링 횟수/2) ×100 | 100% | 정량 | 결과 | |

IV.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1.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 | | | | | |
|---------------------------|--------------------------------|-------------------|-------|----|----|--|
| ①정책자금 지원 확대 | ①해외프로젝트 관련 정책금융기관 MOU 체결 | 체결여부 확인 | 체결 | 정성 | 결과 | |
| | ②신성장동력 분야 특별은행당 공급 | 정책금융공사 지원실적 확인 | 1.5조원 | 정량 | 산출 | |
| | ③외화은행당 제도 도입 | 도입여부 확인 | 도입 | 정성 | 결과 | |
| ②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확대 | ①국책은행의 R&D 자금지원 | 각 기관 지원실적 합계 | 1.1조원 | 정량 | 산출 | |
| | ②R&D 특례보증 | 각 기관 지원실적 | 1.4조원 | 정량 | 산출 | |
| ③코스닥 상장 지원 강화 | ①상장희망기업 교육 실시 횟수 | 실시횟수 | 12 | 정량 | 산출 | |
| | ②전략적 상장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 방문기업수 | 15 | 정량 | 산출 | |

2. 녹색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 | | | | | |
|---------------------|--------------------------------|---|--------------|----|----|--|
| ①녹색산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 ①녹색산업 자금 공급 | 기은, 산은, 정금공의 지원 실적 합계 | 3.8조원 | 정량 | 산출 | |
| | ②녹색산업 보증 공급 | 신보, 기보의 지원 실적 합계 | 6.9조원 | 정량 | 산출 | |
| ②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①녹색금융특화 MBA의 충실성 (공동) | 녹색금융특화 MBA 졸업생/세미나/실무연계 /국제화/커리큘럼/학생 만족도로 종합점수* 도출 | 90점 | 정량 | 산출 | |
| ③녹색 경영 공시 강화 | ①녹색경영정보 공시 제도 시행 및 실적 점검 | 제도시행 및 실적점검 여부 | 제도시행 및 점검 | 정성 | 결과 | |

3.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을 제공한다.

| | | | | | | |
|----------------------|-------------------------------------|-------------------|-----------------|----|----|--|
| ①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①가입자에 유리한 연금지급이 가능 하도록 제도개선 |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여부 | 시행령 개정 | 정성 | 결과 | |
| ②보험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 ①노후건강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제공 | 참조위험을 확대제공 여부 | 위험률 확대 제공 | 정성 | 결과 | |
| ③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①확정기여형(DC)의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투자 허용 | 감독규정 개정 여부 | 규정 개정 | 정성 | 결과 |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 | 정량화 | 성격 | | |
| | ④퇴직 금융인 취업지원 | ①금융권 퇴직인력 DB구축 | DB구축여부 확인 | DB 구축 | 정성 | 결과 | | |
| | | ②금융권 퇴직인력 중개서비스 시행 | 중개서비스 시행여부 확인 | 서비스시행 | 정성 | 결과 | | |
| V.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 | | | | | | | |
| 1. 서민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 | | | | | | | |
| | ①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 ①미소금융 지원금 | 지원실적 확인 | 2,500억원 | 정량 | 산출 | | |
| | | ②햇살론 대환대출 지원금액 | 지원실적 확인 | 500억원 | 정량 | 산출 | | |
| | | ③새희망홀씨 저신용·저소득자 (신용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지원 비율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득 2,000만원 이하 대출건수 / 전체 대출건수) * 100 | 70% 이상 | 정량 | 산출 | | |
| | ②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 | ①금리우대형 보증 자리론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여부 | 지원대상 확대 | 정성 | 결과 | | |
| | | ②제2금융권 전세 자금대출 전환보증 신설 | 전환보증 신설여부 | 전환보증 신설 | 정성 | 결과 | | |
| | ③금융비용 부담 완화 | ①바꿔드림론 보증 지원 인원 | 지원실적 확인 | 30,000명 | 정량 | 산출 | | |
| | 2. 서민층 금융피해를 방지한다. | | | | | | | |
| | | ①사금융 피해방지 및 규제 강화 | ①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여부 | 관련 규정 개정 | 정성 | 결과 | |
| | | ②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 ①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TF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 회의 개최 여부 종합대책 발표 여부 | TF 회의 2회개최및 종합대책 발표 | 정성 | 결과 | |
| ②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여부 |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정성 | 결과 | | |
| ③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 | | ①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회의 개최여부 | 연4회 개최 | 정량 | 산출 | |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2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 비고 |
|-----------------------|----------------------------|--------------------------------|--|------------------------|-------|----|----|
| | | | | | 정량화 | 성격 | |
| 3.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 | | | | | |
| | ①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 | ①성실상환자에 대한 간접 생계자금 지원 금액 | 소액대출 지원금액 | 1,000억원 | 정량 | 산출 | |
| | ②대학생 신용애로 완화 | ①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제도 개선 | 협약개정 여부 | 협약 개정 | 정성 | 결과 | |
| 4.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한다. | | | | | | | |
| | ①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 ①수수료율체계 개편 방안 | 시행여부 확인 | 시행 | 정성 | 결과 | |
| | ②직불형 카드 활성화 | ①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 | $\frac{\text{직불형카드 이용실적}}{\text{총 카드 이용실적}}$ | 15.0% | 정량 | 산출 | |
| | ③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①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제정 여부 확인 | 제정 | 정성 | 결과 | |
| VI.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 | | | | | |
| 1.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 | | | | | | |
| | ①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①보험상품 공시내용 이해도 평가 실시 | 이해도 평가 실시 여부 | 이해도 평가 실시 | 정성 | 결과 | |
| | | ②공시대상 확대 | 공시 여부 | 공시 대상 확대 | 정성 | 결과 | |
| | ②보험상품 및 연금저축 상품 설명의무 강화 | ①연금저축 통합공시 방안 마련 | 통합공시안 마련여부 | 통합 공시안마련 | 정성 | 결과 | |
| | | ②중도해지시 세금 추징 설명의무 강화 | 설명 의무 강화내용의 안 내장 등 반영여부 확인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 ③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 | ①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콘텐츠 개발 여부 | 개발 | 정성 | 결과 | |
| | | ②지방 주민들에 대한 금융교육 실시 | MOU 체결건수 민생금융 투어 실시 횟수 | 3건, 30회 | 정량 | 산출 | |
| | ④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①금리연동상품의 해약환급금 제공 내용 개선 |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추진 여부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 | ②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감독강화 | 제도개선 여부 | 제도 개선 | 정성 | 결과 | |
| | ⑤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①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제출 | 법안 국회제출 여부 | 법안 국회 제출 | 정성 | 결과 | |
| 2.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강화한다. | | | | | | | |
| | ①개인정보 수집 억제 | ①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실시 | 개인정보조사 현황자료 | 전수 조사 | 정성 | 결과 | |
| | ②IT 보안체계 강화 | ①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 법안 국회제출 여부 시행령 마련·시행여부 | 법안 국회 제출, 시행령 개정 | 정성 | 결과 |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100대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과제명 및 과제코드) |
|---|------|---|
| I.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 | |
| 1.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 | (업무 1-1)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제 확립 |
| ① 시장 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 | | (업무 1-1)시장 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 |
| ② 외환건전성 제고 | | (업무 1-3)외환건전성 제고 |
| 2.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을 도모한다. | | (업무 1-2)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추진 |
| ①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 (업무 1-2)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 ② PF 연착륙 추진 | | (업무 1-2)PF 연착륙 추진 |
| 3.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확충한다. | | (업무 1-4)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
| ① 금융회사 이익 내부유보 | | (업무 1-4)금융회사 이익 내부유보 |
| ②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 | | (업무 1-4)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 |
| ③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 | (업무 1-4)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
| 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 | (업무 1-5)금융권 건전성 강화 |
| ① 저축은행 조기정상화 | | (업무 1-5)저축은행 조기정상화 |
| ②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 | | (업무 1-5)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 |
| II.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 | |
| 1.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 (업무 2-1)자본시장 개혁 |
| ① 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 | (업무 2-1)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
| ②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 | (업무 2-1)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
| ③ 단기자금시장 개편 | | (업무 2-1)단기자금시장 개편 |
| 2.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한다. | | (업무 2-2)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 개선 |
|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 (업무 2-2)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 ②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 검토 | | (업무 2-2)은행소유규제 검토 |
| 3. 전자금융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 (업무 2-3)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① 전자금융산업 경쟁 촉진 및 감독시스템 정비 | | (업무 2-3)경쟁도입 및 감독시스템 정비 |
| ② 전자금융 인프라 마련 | | (업무 2-3)전자금융 인프라 마련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100대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과제명 및 과제코드) |
|-----------------------------------|------------------------------|---|
| 4.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한다. | | (업무 2-4)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 | ① 불공정거래 공시의무 및 제재 강화 | (업무 2-4)공사·제재 강화 |
| | ②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 (업무 2-4)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
| | ③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 (업무 2-4)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
| 5.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국제화 확대를 추진한다. | | (업무 2-5)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
| | 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업무 2-5)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 | ② 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업무 2-5)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
| | ③ 금융분야 국제적 논의 및 협상 적극 참여 | (업무 2-5)FTA 이행 후속조치 마련 |
| Ⅲ.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한다. | | |
| 1.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한다. | | (업무 3-1)창업 지원 강화 |
| | ① 창업지원 환경 혁신 | (업무 3-1)창업지원 환경 혁신 |
| | ② 제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 (업무 3-1)제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
| 2. 중소기업 금융인프라를 혁신한다. | | (업무 3-2)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
| | ① 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 | (업무 3-2)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 |
| | ② 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 | (업무 3-2)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 |
| | ③ 중소기업 직접금융 확대 | (업무 3-2)직접금융시장 접근성 확대 |
| 3. 정책금융 지원을 효율화한다. | | (업무 3-3)정책금융 효율화 |
| | ①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 (업무 3-3)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
| | ②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 (업무 3-3)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
| 4.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 (업무 3-4)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 | ① 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업무 3-4)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 | ② 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 (업무 3-4)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
| Ⅳ.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 | |
| 1.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 (업무 4-1)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 강화 |
| | ①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업무 4-1)정책자금 지원 확대 |
| | ② 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확대 | (업무 4-1)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확대 |
| | ③ 코스닥 상장 지원 강화 | (업무 4-1)코스닥 상장 지원 강화 |
| 2. 녹색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 (업무 4-2)녹색 산업 금융지원 강화 |
| | ① 녹색산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 (업무 4-2)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
| | ②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업무 4-2)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 | ③ 녹색 경영공시 강화 | (업무 4-2)녹색 경영공시 강화 |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100대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과제명 및 과제코드) |
|----------------------------|---------------------------|---|
| 3.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을 제공한다. | | (업무 4-3)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
| | ①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업무 4-3)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 | ② 보험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 (업무 4-3)연금보험 활성화 |
| | ③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업무 4-3)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 | ④ 퇴직 금융인 취업지원 | (업무 4-3)퇴직 금융인 취업지원 |
| V.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 | |
| 1. 서민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 | (업무 5-1)서민 금융공급 확대 |
| | ①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 (국정과제 3-11-53)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업무 5-1)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
| | ②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 | (업무 5-1)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 |
| | ③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업무 5-1)금융비용 부담 완화 |
| 2. 서민층 금융피해를 방지한다. | | (업무 5-2)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 | ① 사금융 피해방지 및 규제강화 | (업무 5-2)사금융 피해방지 및 규제강화 |
| | ②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 (업무 5-2)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
| | ③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 | (업무 5-2)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 |
| 3.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 (업무 5-3)신용회복 지원 강화 |
| | 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 | (업무 5-3)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 |
| | ② 대학생 신용애로 완화 | (업무 5-3)대학생 신용애로 완화 |
| 4.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한다. | | (업무 5-4)신용카드 제도 개선 |
| | ①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 (업무 5-4)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
| | ② 직불형 카드 활성화 | (업무 5-4)직불형 카드 활성화 |
| | ③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업무 5-4)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 VI.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 |
| 1.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 | (업무 6-2)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 | ①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업무 6-2)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 | ②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설명의무 강화 | (업무 6-2)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설명의 무 강화 |
| | ③ 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 | (국정과제 2-8-37) 체계적인 금융교육 실시 (업무 6-2)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 |
| | ④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업무 6-2)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 | 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업무 6-3)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 2.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강화한다. | | (업무 6-4)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
| | ① 개인정보 수집 억제 | (업무 6-4)개인정보 수집 억제 |
| | ② IT 보안체계 강화 | (업무 6-4)IT인력·예산 강화,연간 IT보안계획 수립,IT보안의무 위반시 제재강화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6. 통계집

☐ 금융위원회가 발간하는 통계집이 없습니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7. 기관평가결과(자체, 외부:09-12년 현재)

< '09년도 평가 결과 >

- '09년도 12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5%), 다소 우수 8개(25%), 보통 12개(40%), 다소 미흡 5개(15%), 미흡과제 1개(5%)로 나타남
 - 우수한 과제는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은행 자본 확충 추진 등이며,
 - 미흡한 과제는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4%로
 - 37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지연 및 금융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변경

< '10년도 평가 결과 >

- '10년도 총 35개 주요정책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4%), 다소 우수 9개(26%), 보통 15개(43%), 다소 미흡 2개(6%), 미흡 4개(11%)로 나타남

-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5개 과제는 우수한 과제로 평가됨

□ 총 35개 관리과제의 59개 성과지표 중 58개 성과지표의 목표는 달성하였고,

-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新국제감사기준 채택 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였기 때문임

* 新국제감사기준의 적용을 주도한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결정

< '11년도 평가 결과 >

□ 총리실 권고사항에 맞춰 상대평가함 : 총 55개 과제중 (매우)우수과제는 10개*

* (1소위) ① PF대출 부실예방 및 정리노력 강화, ②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장가·고정금리 활성화, ③ 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 ④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

(2소위)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경감, ② 저소득층의 금리부담 지속 경감 등

(3소위)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다변화 및 특성화 유도 등 전문화·특성화 촉진

| 총리실 권고 사항 | | 금융위 자체평가결과 | | | 계 |
|----------------------|-------|------------|-----|-----|----|
| 순위 누적% (등수/전체과제수) | 등급 | 1소위 | 2소위 | 3소위 | |
| ~상위 5%이내 | 매우 우수 | 1 | 1 | 0 | 2 |
| 5%초과 ~ 20%이내 | 우수 | 3 | 4 | 1 | 8 |
| 20%초과 ~ 40%이내 | 다소 우수 | 4 | 5 | 2 | 11 |
| 40%초과 ~ 70%이내 | 보통 | 6 | 7 | 3 | 16 |
| 70%초과 ~ 85%이내 | 다소 미흡 | 3 | 4 | 1 | 8 |
| 85%초과 ~ 95%이내 | 미흡 | 2 | 2 | 1 | 5 |
| 95% 초과 ~ | 부진 | 2 | 2 | 1 | 5 |
| 과제 수 합계 | | 21 | 25 | 9 | 55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8. 산하기관평가관련(08-11년 현재)

□ 소관기관 경영실적보고서

※ 책자별도송부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언론해명자료 및 정정 보도요청내역(보도내용 포함)

☐ 보도해명자료 목록(보도내용 붙임 참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 | 머니투데이(2012.6.27(수) 「금융주 공매도 4년만에 허용」 기사 관련 | 20120627 |
| 2 | 한국경제(2012.5.31(수) 인터넷판 「준비 안 된 '청년창업재단' 출범」) 기사 관련 | 20120531 |
| 3 | 동아일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지원 0.5%도 안돼」 제하 보도 관련 | 20120530 |
| 4 | 서울경제(12.5.15) 「MB 정부의 은행은 '낙하산 왕국'이었네」 제하 보도 관련 | 20120515 |
| 5 | 머니투데이방송(12.5.11) 「정치인 테마타고 가격제한폭 급물살 제하 보도 관련 | 20120511 |
| 6 | 2012년 5월 9일자 문화일보 「저축銀,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제하 기사 관련 | 20120509 |
| 7 | 2012년 5월 10일자 가판 파이낸셜뉴스 「저축銀 예금보호한도 단계적 축소」 제하 기사 관련 | 20120509 |
| 8 | 서울경제가판(2012.5.8.) 「퇴직연금 가입후 6개월 대출 금지... 은행은 반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508 |
| 9 | 조선일보(2012.5.2.) 「불법 사채 신고해봤자.. 금융지원은 2.7%뿐」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502 |
| 10 | 연합인포맥스('12.4.16) 「외은지점 업무 범위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416 |
| 11 | 아시아경제(2012.4.4) 「'老多'보험료 뜯어고친다」 제하 기사 관련 *老多 : 노인일수록 더 많이 내는 요금체계 | 20120404 |
| 12 | 조선비즈(2012.3.26)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접속 오류.. 해킹 루머」 제하 기사 관련 | 20120326 |
| 13 | 한국경제('12.3.5 인터넷판) 「해지펀드 운용 진입장벽 낮춘다」 기사 관련 | 20120305 |
| 14 | Wall Street Journal('12.2.10) 「Lone Star Lesson : 'More Precise Laws」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210 |
| 15 | 서울경제('12.2.8) 「농협·신협 등 LTV·충당금 강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208 |
| 16 | 문화일보('12.2.6) 「가계부채 900兆 돌파 제2금융 대출 억제 고강도 대책 나온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206 |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7 | 이데일리('12.1.18) 「금융위, 금감원 공무원화 검토..감독 기구 개편 군불?»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118 |
| 18 | 문화일보(2012.1.16.) 「저축은행 권역제한 완화... 영업 '숨통」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116 |
| 19 | 서울경제(12.1.13) 「공모주 받은 기관, 상장후 보름간 못 팔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112 |
| 20 | 서울경제('12.1.11 가판) 「'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20110 |
| 21 | 서울경제신문('11.12.23 가판) 「체크카드 사용액 기준 낮춰 공제 늘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222 |
| 22 | 서울경제신문('11.12.20) 「신용카드에 '직불기능' 추가(당정, 수수료 인하안 연내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220 |
| 23 | 연합뉴스('11.12.18)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정부가 직접 고친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218 |
| 24 | 한국경제('11.12.18 인터넷판) 「카드수수료 '택시요금' 방식으로 바뀐다'및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어떻게 바뀌나... | 20111218 |
| 25 | 문화일보('11.12.1일자) (“저신용자 704만명 '카드론' 이용 못하게 되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201 |
| 26 | 코리아헤럴드('11.11.29) 「론스타 단순명령, 금융위 내부 반발 드러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130 |
| 27 | 문화일보('11.11.25) 「저소득층 대출자 20% 돈줄 막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125 |
| 28 | 조선일보('11.11.23) 「보험 해약 때 '쥐꼬리 환급금'개선 설계사 수당 선지급 관행 바꾸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123 |
| 29 | 파이낸셜뉴스(2011.11.16일자(가판)) 「저축은행들 내년 대손충당금 비상」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115 |
| 30 | 한국경제(2011.11.14(월)) 「금융당국, '뺑뺑이'신용평가 대수술」 인터넷 기사 관련 | 20111114 |
| 31 | 서울신문('11.11.3), 서울경제('11.10.3), 파이낸셜뉴스('11.10.3) 등의 「'중기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 제하의기사 관련 | 20111103 |
| 32 | 연합인포맥스(2011.11.1(화)) 「금융위, 주식 공매도 허용」 기사 관련 | 20111101 |
| 33 | 매일경제(2011.10.21(금)) 「신용카드 포인트제 단계적 폐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021 |
| 34 | 연합뉴스(2011.10.18(화))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대란 후 최대 전망」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018 |
| 35 | 서울경제(2011.10.19일자(가판)) 「소비자보호한다더니...官治로 가는 금융소보원」 기사 관련 | 20111018 |
| 36 | 이데일리(2011.10.17(월)) 「체크카드, 비밀번호 결제방식 도입.. 수수료 확 낮춘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017 |
| 37 | 서울신문(2011.10.18(화) 가판) 「체크카드도 1%로 내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017 |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38 | 연합뉴스(2011.10.16일자) “은행·카드사 ‘사상 최대’ 수수료 뺀다” 기사 관련 | 20111016 |
| 39 | 연합뉴스 '11.10.16일 「금융위, 금융권 '급여·배당 탐욕' 제동 건다」 보도 관련 | 20111016 |
| 40 | 매일경제·한국경제(2011.10.12(수), 인터넷판) 「금융위,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012 |
| 41 | 매일경제신문 '11.10.11자 A16 「저축銀 기본자본비율 △0.97%로 급락」 보도 관련 | 20111011 |
| 42 | 매일경제(2011.10.11(화))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추진… 수수료 ‘1%’ 관건」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1011 |
| 43 | 헤럴드경제(2011.10.6일) 「 MB예산은 ‘분식예산’」 기사 관련 | 20111006 |
| 44 | 이데일리('11.10.5), 서울경제('11.10.5) 「신용카드 1년 이상」 | 20111005 |
| 45 | 내일신문('11.9.30, 8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논란」 제하 기사 관련 | 20110930 |
| 46 | 동아일보('11.9.29.) “금융위원장, 론스타에 조건없이 지분매각 명령내릴 것”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29 |
| 47 | 머니투데이(2011.9.23(금)) 「신용카드 발급에도 DTI 적용」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23 |
| 48 | 헤럴드경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이르면 19일 공식 발표... 대형 저축은행 1곳 포함 6곳 영업정지 가닥」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16 |
| 49 | 경향신문(2011.9.16(금)) 「미소금융 대출 30% 고 신용자에게 갔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16 |
| 50 | 서울신문(2011.9.16(금)) 「햇살론 한도 내주부터 3,000만원 까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15 |
| 51 | 한국경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르면 주말에 나온다」 및 매일경제 「저축은행 생사 주말께 결판날듯…자구노력따라 희비」 및 머니투데이 | 20110914 |
| 52 | 한국일보('11.9.7) 「저축은행 5곳 회생불능 판정」 기사 관련 | 20110907 |
| 53 | 조선일보('11.9.6) 「영업정지 저축은행 5~6곳 압축」 및 중앙일보 「저축은행 12곳 영업정지 대상」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06 |
| 54 | 머니투데이의 「구조조정 저축銀 16곳 확정」 보도 ('11.9.3.) 관련 | 20110905 |
| 55 | 한국경제('11.9.1) 「새마을금고, 영업구역외 대출 줄인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01 |
| 56 | 조선일보('11.8.31.), 「저축은행 15곳 不實」 및 매일경제 ('11.8.31.), 「저축銀 구조조정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110831 |
| 57 | SBS뉴스(2011.8.26(금)) 「“거꾸로 가는 보안대책…선택권·자율성이 명분”기사 관련 | 20110829 |
| 58 | 연합뉴스('11.8.18) “일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818 |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59 | 서울경제(2011.8.12(금)) 「증안펀드, 추가 대신 기존펀드 증액으로」 인터넷 기사 관련 | 20110812 |
| 60 | 중앙일보('11.8.6), 「김석동 “9월까지 없다” 해놓고… 울산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제하 기사... | 20110808 |
| 61 | 한국경제('11.8.8), 「9월까지 문 닫는 곳 없다는 말 믿고 예금 댔었는데」 제하 기사 관련 | 20110808 |
| 62 | 파이낸셜뉴스('11.8.3, 14:44),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공적자금 5000억 투입」 제하 기사 관련 | 20110803 |
| 63 | 한국경제('11.7.26.)“年30% 넘는 불법 사채이자 몰수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26 |
| 64 | 이투데이('11.7.22.)“저축은행 주범 8·8클럽 낙담만에 10·8로 부활”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22 |
| 65 | 연합뉴스(11.7.20) 「금융당국,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검토」, 「외국기업 상장심사 주먹구구... 소액공모 허점 많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21 |
| 66 | 머니투데이(11.7.14) 「'고정금리 대출 30%'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14 |
| 67 | 문화일보('11.7.11) 「총자산 90조 새마을금고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11 |
| 68 | 한국경제('11.7.7) 「농·수협 예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07 |
| 69 | 중앙일보('11.7.5), 「부실저축은행 퇴출에 10조 투입」, 「20조원 쏟아부어 저축은행 불신 씻기」 제하 기사 및 한겨레('11.7.5),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25조원 추가조성」 제하 기사 관련 | 20110705 |
| 70 | 이데일리('11.7.5.)“지방저축銀, 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05 |
| 71 | 매경('11.7.5) 「금융위 혼선...영업정지 조건 뒤늦게 수정」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05 |
| 72 | 연합뉴스('11.6.30) 「정부, 은행 예대율 90%대로 인하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30 |
| 73 | 서울경제(2011.6.29 가판) 「美 경제실세 서머스 김석동 만났다는데...」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28 |
| 74 | 한겨레신문(11.6.21) 「DTI 규제, 지방대도시로 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21 |
| 75 | 한국경제(2011.6.20(월) 인터넷판) 「증권사 빅5, 합병 안해도 '종합 IB'할 수 있다」 기사 관련 | 20110620 |
| 76 | 서울경제('11.6.17. A01, A05면)“정책은 오락가락 시장은 갈팡질팡”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17 |
| 77 | 연합뉴스('11.6.16)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16 |
| 78 | 연합뉴스('11.6.12 06:15), 「저축銀 구조조정 대비 공적자금 조성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110612 |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79 | 연합뉴스('11.6.9 06:09), 「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제하 기사 및 「소액금융분쟁 소송금지, 과연 가능할까」 제하 기사 관련 | 20110609 |
| 80 | 경향신문('11.6.3. 3면)“상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하달”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03 |
| 81 | 경향신문('11.6.2)“금융당국, 또 저축은행 부실 덮나”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02 |
| 82 | 2011.6.1일 파이낸셜 뉴스「수출입銀·무역보험公 통합 추진」 기사 관련 | 20110601 |
| 83 | 문화일보('11.6.1) 「카드대출 고삐 죄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01 |
| 84 | 매일경제('11.5.30)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해 은행별 대출 증가율 규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30 |
| 85 | 연합뉴스('11.5.26.)“저축은행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26 |
| 86 | 한국경제 「‘산은+우리’ 정부지분 50%대로 낮춘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6 |
| 87 | 한국경제신문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 못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6 |
| 88 | 서울경제 「우리금융 소유규제 풀어 일괄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6 |
| 89 | 연합인포맥스(2011.5.11(수)) 「금융위, 금융주 공매도 허용 검토」 기사 관련 | 20110511 |
| 90 | 노컷뉴스('11.5.11.)“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20일 전에 이미 결정됐다””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1 |
| 91 | 한국경제 「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1 |
| 92 | 헤럴드경제(2011년 5월 9일자) 「과태료 부과자 ‘보험료 할증’물 건너가나」 기사 관련 | 20110509 |
| 93 | 헤럴드경제('11.5.6)의 「경제부처간 이견...외환銀 처리 장기 표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06 |
| 94 | 이데일리“우리금융소유규제완화후재매각검토,산은입찰허용될듯” 기사 관련 | 20110505 |
| 95 | 서울경제('11.4.27일자 가판) 「미소금융 “울고 싶어라”」 제하 기사 관련 | 20110426 |
| 96 | 이데일리('11.4.25.)“상장 저축銀 IFRS 고민 풀린다..당국 해법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25 |
| 97 | '11.4.21일 연합뉴스 「‘악마의 유혹’ELW시장에, 금융당국 수수방관」 기사 관련 | 20110421 |
| 98 | 머니투데이('11.4.18) 「부실 PF채권 특화 ‘민간 배드뱅크’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18 |
| 99 | '11.4.19일자(가판) 서울경제 a01면, 파이낸셜뉴스 001면 등의 「부실PF 처리 민간 배드뱅크 추진」에 관한 기사 관련 | 20110418 |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00 | 매일경제('11.4.12.)“해킹방어 금융공동망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12 |
| 101 | 머니투데이(인터넷, '11.4.7.) “저축銀 먹거리 대책, 여신전문 출장소로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07 |
| 102 | 한국경제 ('11.4.4일자) "불법 사채업과 전쟁 ... 이자 연 6% 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04 |
| 103 | 한국경제('11.3.24) 「발표 이틀만에“ 강남3구 혜택 제외”시장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24 |
| 104 | 매일경제(2011.3.20(일), 인터넷판) 「금융위“한국 거래소 문제 많다. 확 바꿀것”」 기사 관련 | 20110321 |
| 105 | 연합뉴스('11.3.18일자) 「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다음달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포함」 제하 기사 관련 | 20110318 |
| 106 | 머니투데이('11.3.17) 「DTI 규제완화, 이달 말 종료」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17 |
| 107 | 쿠키뉴스(2011.3.10(목) 인터넷판) 「또 만수야? 강만수 靑특보 산은회장,연봉최고 수준」 기사 관련 | 20110310 |
| 108 | 매일경제(2011.3.9(수) 가판) 「금융당국 소직원 취업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9 |
| 109 | 매일경제(2011.3.9(수)) 「예보법 수정안 국회통과 청신호」, 서울경제(2011.3.9(수)) 「예보법 개정안 타협점 찾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 20110309 |
| 110 | 헤럴드경제('11.3.9)의 "론스타 적격성 심사 불가능... 당국 감독행위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9 |
| 111 | 서울경제(2011년 3월 8일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내용이 담기나"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7 |
| 112 | (서울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 부활 검토 관련 | 20110304 |
| 113 | 연합인포맥스('11.3.2)의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 적격성 문제 없어"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2 |
| 114 | 연합뉴스('11.2.28) 「금융위, DTI 규제 원상복귀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8 |
| 115 | 연합뉴스('11.2.28)의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3월16일 승인 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8 |
| 116 | 매일경제('11.2.28) 「금융위, 풀었던 DTI 규제 원래대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8 |
| 117 | 이데일리(2011.2.21일자) 김석동“중장기 과제로 저축銀 예금 보장한도 축소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1 |
| 118 | 매일경제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합병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1 |
| 119 | 서울경제(2011년 2월 17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연장 가닥 잡았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 20110216 |
| 120 | 매일경제 ('11.2.9일자 인터넷판) (“4대은행, 저축銀에 2조 긴급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10 |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21 | 매일경제(2011.2.10(목) 가판) 「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제재 착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10 |
| 122 | 이데일리(2011.2.9(수) 인터넷) 「[단독] ‘옵션쇼크’ 도이치 서울지점 ‘6개월 영업정지’」 제하의 기사 등 관련 | 20110209 |
| 123 | 동아일보(2011.2.7(월) A02면) 「도이체뱅크, 2004년 옵션거래로 200억대 이득」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07 |
| 124 | 연합인포맥스(2011.2.7(월) 인터넷) 「금감원, ‘도이치 獨본사 검찰 고발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07 |
| 125 | 매일경제(2011년 2월 7일자(인터넷판)) 「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꺾다, DTI규제 완화 연장될듯」 기사 관련 | 20110207 |
| 126 | 파이낸셜 뉴스('11.1.31일 1면, 3면) (“기금마련후 부실 저축銀 일괄제재”)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30 |
| 127 | 아시아경제(2011.1.27(목) 3면) 「부실증권사 퇴출 심사」 기사 관련 | 20110127 |
| 128 | 매일경제 「정부,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26 |
| 129 | 한국경제 「경남, 광주은행, 우리금융과 묶어 판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25 |
| 130 | MTN 뉴스('11.1.24) 「금융당국, 저축銀 공적자금 검토 구조조정 ‘세계’」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 20110124 |
| 131 | 매일경제('11.1.19일 인터넷판) (“정부, 부실 저축은행 일괄 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9 |
| 132 | 조선일보(2011.1.17(월) B01면) 「금융株 공매도 다시 허용될 듯」 기사 관련 | 20110117 |
| 133 | 연합인포('11.1.17일 인터넷) (“상화 포함 부실 위험 저축은 10곳”)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7 |
| 134 | 뉴시스('11.1.17일 인터넷) (“대형저축은행이 더 부실... 평균 BIS비율 9%”)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7 |
| 135 | 머니투데이(2011년 1월 16일자(인터넷판)) 「DTI 규제유예, 3월말 종료될 듯」 기사 관련 | 20110116 |
| 136 | 서울경제(2011년 1월 13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추가연장 검토」 기사 관련 | 20110112 |
| 137 | 조선일보(2011.1.11일자) 「차명계좌 실소유주 형사처벌」 기사 관련 | 20110111 |
| 138 | 헤럴드경제(2011년 1월 11일자) 「금융위 금감원, 자보료 인상 “담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1 |
| 139 | 서울경제('11.1.10일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달부터 0.3~0.4%p 인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0 |
| 140 | 이데일리('11.1.7일자 인터넷판) (김석동식 구조조정 저축은행 6곳..상장사 없어]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07 |
| 141 | 문화일보('11.1.6일자 17면)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06 |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42 | 한국경제(2011.1.5(수) A30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손질”」 기사 관련 | 20110105 |
| 143 | 매일경제(2011.1.5(수) A02면) 「공모주 개인물량 25~40%까지 늘어날까」 기사 관련 | 20110105 |
| 144 | 서울경제신문('11.1.5일자 가판)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손질하겠다」 기사 관련 | 20110104 |
| 145 | 한국경제(2011년 1월 4일자(가판)) 「변동금리 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 제외」 기사 관련 | 20110104 |

☐ 2011년 보도해명기사모음 : 별도제출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0. 징계현황(사유·직급·징계정도별 총계: '09 ~ '12년 현재)

- 징계심의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 징계현황

(단위 : 명)

| 직 급 징계 정도 | 고위공무원 | 4급 | 5급 | 계 |
|--------------|-------------|-------------|-------------|---|
| 파면 | 1 (금품수수) | - | - | 1 |
| 감봉 | - | 2 (금품수수) | - | 2 |
| 견책 | - | 1 (음주운전) | 1 (음주운전) | 2 |
| 계 | 1 | 3 | 1 | 5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관할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1.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내역, 사유, 계획서
(09~12년 현재)**

☐ 09~12년간 사업계획 변경내역 없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2. 민원, 진정, 청원 관련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사유별, 총계 : 09~12년 현재)

□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 사유별 접수현황

(단위 : 건)

| | 민원 | 진정 |
|---------------------------|-------|-----|
| 2009년 (‘09.1.~‘09.12.) | 3,693 | 289 |
| 2010년 (‘10.1.~‘10.12.) | 3,776 | 755 |
| 2011년 (‘11.1.~‘11.12.) | 3,223 | 128 |
| 2012년 (‘12.1.~‘12.6.) | 1,489 | 3 |

○ 사유별 처리결과

(단위 : 건)

| | 처리완료 | 민원취하 등 |
|---------------------------|-------|--------|
| 2009년 (‘09.1.~‘09.12.) | 3,707 | 365 |
| 2010년 (‘10.1.~‘10.12.) | 4,666 | 380 |
| 2011년 (‘11.1.~‘11.12.) | 3,554 | 368 |
| 2012년 (‘12.1.~‘12.6.) | 1,436 | 225 |

김 중 훈 의원(새누리당)

13. 연구용역 현황('09~'12년 현재)

□ 2009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
| 1 |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 09.04.13~ 09.08.14 |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 30 |
| 2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 09.03.16~ 09.12.16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계) | 45 |
| 3 |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 09.06.01~ 09.08.31 |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 20.5 |
| 4 |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09.06.10~ 09.08.15 |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홍식) | 40 |
| 5 |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 09.05.13~ 09.11.3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협) | 30 |
| 6 |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 09.05.28~ 09.11.11 |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 28.8 |
| 7 |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 09.04.21~ 09.08.28 |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 30 |
| 8 |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 09.07.09~ 09.11.30 |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 35 |
| 9 |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09.08.05~ 09.12.02 |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 32 |
| 10 |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 09.08.28~ 09.12.28 | 아주대 산학협력단 (이윤제) | 35 |
| 11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 09.10.07~ 09.12.06 |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 30 |
| 12 |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 09.10.15~ 09.12.17 |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 40 |
| 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 09.09.30~ 09.12.05 |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 20 |
| 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09.09.18~ 09.12.17 | (사)한국보험연구원 (유경원) | 20 |
| 15 |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 09.10.08~ 09.12.23 |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 20 |
| 16 |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 09.11.11~ 09.12.10 |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 23 |
| 17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 09.09.16~ 09.11.16 |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 20 |

□ 2010년

| 연번 | 과 제 명 | 계약 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
| 1 |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 10.03.26~ 10.07.25 | 한국개발연구원 (손욱) | 30 |
| 2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 10.04.01~ 10.07.31 |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 30 |
| 3 |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 10.04.19~ 10.08.31 |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 40 |
| 4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 10.05.28~ 10.07.31 | 법무법인 을촌 (김정수) | 30 |
| 5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 10.04.13~ 10.07.12 |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 45.5 |
| 6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 10.06.09~ 10.7.30 |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 30 |
| 7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 10.04.09~ 10.09.03 |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 30 |
| 8 |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 10.05.01~ 10.10.31 |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 20 |
| 9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10.08.30~ 10.12.20 |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 30 |
| 10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 10.09.16~ 10.12.15 |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 30 |
| 11 |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 10.09.20~ 10.12.20 |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 25 |
| 12 |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 10.10.11~ 10.12.11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 30 |
| 13 |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 10.10.11~ 10.12.11 | 한국금융연구원 (서근우) | 25 |
| 14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 10.10.15~ 10.12.14 |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 30 |
| 15 |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 10.10.15~ 10.12.14 |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 30 |
| 16 |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 10.04.20~ 10.11.30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 30 |
| 17 |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 10.10.15~ 10.12.27 | (주)데이타메이션 (한미혜) | 27.7 |
| 18 |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10.10.25~ 10.12.20 |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 47.5 |
| 19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 10.11.03~ 10.12.20 |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 10 |
| 20 |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 10.11.03~ 10.12.20 | 보험연구원 | 3 |

□ 2011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
| 1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 11.01.27~ 11.06.02 | 금융연구원 (이명환) | 40 |
| 2 |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 11.04.06~ 11.05.30 | 금융연구원 (이병윤) | 20 |
| 3 |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 11.05.02~ 11.06.30 |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 30 |
| 4 |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 11.06.27~ 11.09.26 | KDI (정찬우) | 15 |
| 5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 11.07.01~ 11.12.30 | KDI (고영선) | 50 |
| 6 |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 11.07.11~ 11.11.04 |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 30 |
| 7 |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 11.07.26~ 11.11.30 | KDI (천규승) | 25 |
| 8 |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 11.08.19~ 11.10.31 |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중) | 29 |
| 9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 11.09.23~ 11.12.15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 30 |
| 10 |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11.10.04~ 11.12.20 |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 39 |
| 11 |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 11.10.12~ 11.12.20 | 금융연구원 (이윤석) | 44 |
| 12 |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 11.10.19~ 11.12.16 | 금융연구원 (이규복) | 30 |
| 13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 11.10.19~ 11.12.20 | 금융연구원 (김동환) | 30 |
| 14 | EI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 11.10.25~ 11.12.15 | 금융연구원 (연태훈) | 30 |
| 15 |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 11.10.26~ 11.12.25 | 전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 30 |
| 16 |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 11.10.27~ 11.12.27 | 금융연구원 (서병호) | 30 |
| 17 |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 11.07.15~ 12.02.2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 35 |
| 18 |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 11.12.22~ 12.04.21 | 금융연구원 (구본성) | 30 |

□ 2012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
| 1 |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2.04.06~ 12.06.03 |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 20 |
| 2 |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 12.04.24~ 12.09.23 |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 26 |
| 3 |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 12.04.30~ 12.08.31 | 보험연구원 (김대환) | 30 |
| 4 | 금융세계 현황 및 발전 방향 | 12.05.04~ 12.08.31 | 금융연구원 (연태훈) | 30 |
| 5 |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 12.05.18~ 12.10.31 |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 39 |
| 6 |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2.05.25~ 12.09.24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 35 |
| 7 |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 12.06.08~ 12.07.07 | 한국갤럽연구소 (박명일) | 10 |
| 8 |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 12.06.25~ 12.10.31 |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 26 |
| 9 |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 12.07.06~ 12.10.05 |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 20 |
| 10 |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 12.07.17~ 12.11.20 |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 40 |
| 11 |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향 | 12.07.26~ 12.11.26 |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 30 |
| 12 |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 12.07.30~ 12.10.29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 20 |
| 13 | 가계부채 미시분석 | 12.08.16~ 12.11.15 |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 40 |
| 14 |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 12.08.31~ 12.12.10 |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 35 |
| 15 |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정보 제공방안 | 12.09.10~ 12.11.30 |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 34 |
| 16 |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금융부문 중심) | 12.09.13~ 12.12.30 |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 35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4. 12년도 공문접수 및 발송목록 현황

☐ 12년도 공문접수 및 발송목록 현황 : 별도제출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5. 금융위원회 소송현황('09~12 승패율, 사유)

□ 연도별 사건 처리 현황 및 승소율(판결 확정일 기준)

| 연도 | 종결 처리(확정) | | | | | 승소율(%) |
|------|-----------|----|----|----|----|--------|
| | 계 | 승소 | 패소 | 취하 | 기타 | |
| 2009 | 10 | 8 | 1 | 1 | 0 | 90.0 |
| 2010 | 13 | 10 | 0 | 3 | 0 | 100.0 |
| 2011 | 12 | 8 | 1 | 3 | 0 | 91.7 |
| 2012 | 7 | 6 | 0 | 1 | 0 | 100.0 |
| 계 | 42 | 32 | 2 | 8 | 0 | 95.2 |

□ 패소 사유

| 종결 연도 | 사건명 | 심급별 판결 요지 | 심급별 결과 |
|----------|--|---|------------------------|
| 2009 | 해임요구처분취소 (○○ 외 1, 서울행정 2008구합6561) | ○ 피고가 2008. 1. 29. ○○ 등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처분 취소함 ○ 원고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재직한 소속부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 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 등을 직접 감독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심 : 패 |
| | | ○ 1심 판결 요지 원용 ○ (추가)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이 무죄 확정됨 | 2심 : 패 |
| 2011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연대, 서울행정 2007구합35166) |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등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취소 ○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 재판(형사사건)의 쟁점이 아니며,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한 사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1심 : 일부 패 |
| | | ○ 1심 판결 요지 원용 ○ (추가) 금융위(금감원) 미보유 정보는 각하 ○ 2심 판결의 잘못이 없음 | 2심 : 일부 패 3심 : 일부 패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6. 공적자금 관련

(최초 투입시부터 현재까지 : 연도별, 총계)

□ 공적자금 투입내역

① 공적자금 I ('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조성된 재원)

○ 기관 및 지원방식별 지원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기 관 | 출자 | 출연 | 예금대지급 | 자산매입등 | 부실채권매입 | 계 |
|-----|------|------|-------|-------|--------|-------|
| 예보 | 50.8 | 18.6 | 30.3 | 11.2 | - | 110.9 |
| 캠코 | - | - | - | - | 38.5 | 38.5 |
| 정부등 | 12.7 | - | - | 6.6 | - | 19.3 |
| 계 | 63.5 | 18.6 | 30.3 | 17.8 | 38.5 | 168.7 |

○ 금융권역별 지원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금융권 | | 출자 | 출연 | 예금 대지급 | 자산 매입등 | 부실채권 매입 | 계 |
|-----------------------|-------|------|------|-----------|-----------|------------|-------|
| 은 행 | | 34.0 | 13.9 | - | 14.4 | 24.6 | 86.9 |
| 제 2 금 융 권 | 총 금 | 2.7 | 0.7 | 18.3 | - | 1.0 | 22.8 |
| | 증권·투신 | 10.9 | 0.4 | 0.01 | 2.1 | 8.5 | 21.9 |
| | 보 험 | 15.9 | 3.1 | - | 0.3 | 1.8 | 21.2 |
| | 신 험 | - | - | 4.7 | 0.3 | - | 5.0 |
| | 저축은행 | - | 0.4 | 7.3 | 0.6 | 0.2 | 8.5 |
| | 소 계 | 29.5 | 4.7 | 30.3 | 3.3 | 11.5 | 79.4 |
| 해외금융기관등 | | - | - | - | - | 2.4 | 2.4 |
| 계 | | 63.5 | 18.6 | 30.3 | 17.8 | 38.5 | 168.7 |

○ 공적자금 지원추이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일 자 | 채권발행 | | | 회수자금 재사용 | | | 공공 자금등 | 계 | 증감 (억원) |
|-------|------|------|-------|----------|------|------|-----------|-------|------------|
| | 예보 | 캠코 | 소계 | 예보 | 캠코 | 소계 | | | |
| ‘97년 | - | 6.5 | 6.5 | - | - | - | 5.9 | 12.4 | - |
| ‘98년 | 20.5 | 18.3 | 38.8 | - | - | - | 16.7 | 55.6 | 335,366 |
| ‘99년 | 43.5 | 20.5 | 64.0 | 3.4 | 2.3 | 5.7 | 21.3 | 91.0 | 238,189 |
| ‘00년 | 52.4 | 20.5 | 72.9 | 11.1 | 14.3 | 25.7 | 29.6 | 128.2 | 213,752 |
| ‘01년 | 81.6 | 20.5 | 102.1 | 14.0 | 16.5 | 30.7 | 22.4 | 155.2 | 177,601 |
| ‘02년 | " | " | " | 15.7 | 17.0 | 32.7 | 24.1 | 159.0 | 22,712 |
| ‘03년 | " | " | " | 16.9 | 17.4 | 34.3 | 24.7 | 161.1 | 6,604 |
| ‘04년 | " | " | " | 20.9 | 17.4 | 38.3 | 24.6 | 165.0 | 2,424 |
| ‘05년 | " | " | " | 24.2 | 17.4 | 41.6 | 24.2 | 168.0 | 3,715 |
| ‘06년 | " | " | " | 24.9 | 17.2 | 42.0 | 24.1 | 168.3 | 5 △172 |
| ‘07년 | " | " | " | 25.1 | 17.1 | 42.2 | 24.1 | 168.4 | 828 |
| ‘08년 | " | " | " | 25.3 | 17.0 | 42.3 | 24.1 | 168.5 | 20 |
| ‘09년 | " | " | " | 25.5 | 16.9 | 42.5 | 24.0 | 168.6 | 1,656 |
| ‘10년 | " | " | " | 25.7 | 16.9 | 42.6 | 23.9 | 168.6 | 49 |
| ‘11년 | " | " | " | 25.8 | 16.9 | 42.7 | 23.8 | 168.6 | 15 |
| ‘12.6 | 81.6 | 20.5 | 102.1 | 25.8 | 16.9 | 42.8 | 23.7 | 168.7 | 96 |

② 공적자금Ⅱ('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원)

○ 지원대상별 지원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부실채권매입 | 출자 | 계 |
|-----------------|--------|-------|--------|
| PF대출채권 | 43,743 | 9 | 43,752 |
| 일반담보부채권 | 8,662 | - | 8,662 |
| 기업개선채권등(JV-SPC) | 4,291 | - | 4,291 |
| 해운사 보유선박 | - | 4,736 | 4,736 |
| 미분양 주택 | - | 527 | 527 |
| 계 | 56,696 | 5,272 | 61,968 |

○ 권역별 지원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 부실채권매입 | 출자 | 계 |
|------|-------|--------|-------|--------|
| 금융권 | 은 행 | 12,474 | 5 | 12,479 |
| | 제2금융권 | 44,222 | 4 | 44,226 |
| | 소 계 | 56,696 | 9 | 56,705 |
| 비금융권 | 해운사 | - | 4,736 | 4,736 |
| | 건설사 | - | 527 | 527 |
| | 소 계 | - | 5,263 | 5,263 |
| 계 | | 56,696 | 5,272 | 61,968 |

○ 연도별 지원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계 |
|-----|--------|--------|--------|------|--------|
| 지원액 | 10,667 | 33,648 | 17,698 | △45 | 61,968 |

□ 기회비용 감안한 투입 및 회수 내역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회비용을 감안한 투입 및 회수액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적자금의 기회비용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봄

○ 이론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기간중 현금흐름을 기준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함으로써 기회비용을 감안한 공적자금 지원·회수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를 위해서는 지원·회수 건별 현금흐름과 이에 적용할 할인율 등을 추정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통계작성이 어려움

○ 지원액에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부담한 채권이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적자금 지원 손실*에 따른 이자부담도 지원액에 산입되는 결과가 되고

* 2002년 말 기준으로 수립된 공적자금상환체계 상 상환대상 부채 97.2조원 중 회수에상가액 28.2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이 손실액

- 채권이자는 조달비용으로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공적자금의 지원 실적에 채권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공적자금을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정의

- ②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관리·발표되어온 공적자금 관련 통계에서는 지원액 및 회수액을 원금기준으로만 작성하고 있으며, 채권발행 및 이자상환 내역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지원·회수 및 이자상환 세부내역: 붙임 참조

- ③ 외국의 경우에도 지원 및 회수액을 원금기준으로만 발표하고 있으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지원·회수 실적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컨대 일본 예금보험공사와 미국 정리신탁공사 보고서에서도 지원액과 회수액만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회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고 있음

기금별 이자상환 내역

(‘12.6월 말 현재, 단위 : 조원)

| 연도 | 공적자금 I | | | 공적자금 II | 계 |
|--------|-------------|----------|----------|---------|-------|
| | 예보채상환 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구조조정기금 | |
| ‘97 | - | - | | | - |
| ‘98 | 1.1 | 0.8 | | | 1.9 |
| ‘99 | 2.9 | 1.4 | | | 4.3 |
| ‘00 | 4.3 | 1.7 | | | 6.0 |
| ‘01 | 5.3 | 1.1 | | | 6.4 |
| ‘02 | 6.3 | 1.0 | | | 7.3 |
| ‘03 | 5.7 | 1.0 | 0.1 | | 6.8 |
| ‘04 | 4.5 | 0.6 | 0.9 | | 6.0 |
| ‘05 | 3.5 | 0.2 | 1.5 | | 5.2 |
| ‘06 | 2.3 | 0.2 | 2.2 | | 4.7 |
| ‘07 | 1.9 | 0.1 | 2.5 | | 4.5 |
| ‘08 | 1.8 | 0.1 | 2.6 | | 4.5 |
| ‘09 | 1.4 | - | 2.4 | 0.01 | 3.81 |
| ‘10 | 1.4 | - | 2.4 | 0.05 | 3.85 |
| ‘11 | 1.3 | - | 2.3 | 0.09 | 3.69 |
| ‘12.6월 | 0.6 | | 1.1 | 0.06 | 1.76 |
| 누계 | 44.4 | 8.1 | 18.1 | 0.21 | 70.81 |

□ 회수액 및 회수율

① 공적자금 I

○ 기관 및 지원방식별 회수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 기관 | 출자금회수 | 파산배당등 | 자산매각등 | 부실채권매각 | 계 | 회수율 |
|-----|-------|-------|-------|--------|-------|-------|
| 예보 | 21.0 | 19.5 | 8.6 | - | 49.0 | 44.2 |
| 캠코 | - | - | - | 45.4 | 45.4 | 117.8 |
| 정부등 | 2.6 | - | 6.6 | - | 9.2 | 47.6 |
| 계 | 23.5 | 19.5 | 15.2 | 45.4 | 103.6 | 61.4 |

○ 금융권역별 회수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금융권 | | 출자 | 출연 | 예금 대지급 | 자산 매각등 | 부실채권 매각 | 계 |
|-------------------|-------|------|------|-----------|-----------|------------|-------|
| 은 행 | | 18.8 | 1.9 | - | 12.5 | 28.7 | 61.9 |
| 제2 금 융 권 | 증권·투신 | 1.2 | 0.3 | 0.01 | 1.8 | 10.0 | 13.3 |
| | 보 험 | 3.4 | 0.5 | - | 0.2 | 1.8 | 5.9 |
| | 종 금 | 0.1 | 0.7 | 7.5 | - | 1.4 | 9.8 |
| | 저축은행 | - | 0.01 | 5.1 | 0.6 | 0.2 | 5.9 |
| | 신 협 | - | - | 3.4 | - | - | 3.4 |
| | 소 계 | 4.8 | 1.6 | 16.0 | 2.6 | 13.4 | 38.4 |
| 해외금융기관등 | | - | - | - | - | 3.2 | 3.2 |
| 계 | | 23.5 | 3.5 | 16.0 | 15.2 | 45.4 | 103.6 |

○ 공적자금 회수추이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연 도 | 예보 | | | | 캠코 | 정부등 | 계 |
|--------|-------|-------|-------|------|------|-------|-------|
| | 출자금주회 | 파배당산능 | 자매각산능 | 소계 | | | |
| ‘98년 | - | - | - | - | 2.4 | - | 2.4 |
| ‘99년 | 1.4 | 2.9 | - | 4.3 | 9.7 | 0.04 | 14.0 |
| ‘00년 | 1.0 | 2.9 | 2.2 | 6.0 | 8.9 | 0.005 | 15.0 |
| ‘01년 | 1.4 | 1.4 | 1.3 | 4.1 | 5.3 | - | 9.4 |
| ‘02년 | 1.3 | 0.9 | 0.5 | 2.7 | 3.8 | 6.6 | 13.1 |
| ‘03년 | 1.2 | 4.0 | 0.4 | 5.6 | 2.4 | 1.1 | 9.1 |
| ‘04년 | 2.1 | 2.7 | 0.9 | 5.7 | 1.4 | 0.2 | 7.3 |
| ‘05년 | 2.6 | 1.3 | △0.3 | 3.6 | 2.1 | 0.1 | 5.8 |
| ‘06년 | 2.1 | 0.8 | 0.5 | 3.4 | 4.8 | 0.2 | 8.4 |
| ‘07년 | 3.0 | 0.7 | 0.7 | 4.4 | 0.8 | 0.2 | 5.4 |
| ‘08년 | 1.1 | 0.5 | 0.8 | 2.4 | 0.7 | 0.3 | 3.4 |
| ‘09년 | 1.3 | 0.6 | 0.6 | 2.4 | 0.4 | - | 2.8 |
| ‘10년 | 1.8 | 0.4 | 0.7 | 2.9 | 1.8 | - | 4.8 |
| ‘11년 | 0.7 | 0.4 | 0.2 | 1.3 | 0.3 | 0.1 | 1.7 |
| ‘12.6월 | 0.11 | 0.05 | 0.10 | 0.26 | 0.49 | 0.18 | 0.93 |
| 누계 | 21.0 | 19.5 | 8.6 | 49.0 | 45.4 | 9.2 | 103.6 |

② 공적자금 II

○ 지원대상별 회수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 구 분 | 부실채권매각등 | 출자금회수 | 계 | 회수율 |
|----------|---------|-------|--------|------|
| PF대출채권 | 10,846 | - | 10,846 | 24.8 |
| 일반담보부채권 | 6,677 | - | 6,677 | 77.1 |
| 기업개선채권등 | 2,462 | - | 2,462 | 57.4 |
| 해운사 보유선박 | - | 736 | 736 | 15.8 |
| 미분양 부동산 | - | 516 | 516 | 97.9 |
| 계 | 19,985 | 1,252 | 21,237 | 34.3 |

○ 권역별 회수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 부실채권매각등 | 출자금회수 | 계 |
|------|-------|---------|-------|--------|
| 금융권 | 은 행 | 9,134 | - | 9,134 |
| | 제2금융권 | 10,851 | - | 10,851 |
| | 소 계 | 19,985 | - | 19,985 |
| 비금융권 | 해운사 | - | 736 | 736 |
| | 건설사 | - | 516 | 516 |
| | 소 계 | - | 1,252 | 1,252 |
| 계 | | 19,985 | 1,252 | 21,237 |

○ 연도별 회수내역

(‘12.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부실채권매각 등 | 출자금회수 | 계 |
|----------|----------|-------|--------|
| ‘09년 | 2,525 | 48 | 2,573 |
| ‘10년 | 4,169 | 237 | 4,406 |
| ‘11년 | 8,470 | 739 | 9,209 |
| ‘12년 6월말 | 4,821 | 228 | 5,049 |
| 합 계 | 19,985 | 1,252 | 21,237 |

□ 상환 실적 현황

① 공적자금 I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대책의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진행중임

- '12.6월말 현재 채무 잔액은 상환대책 수립시 부담하여야 할 채무 82.4조원 중 0.2조원과 차환 발행 잔액 22.4조원* 등 총 22.6조원임

* 상환채무인 예금보험기금채권 채무의 상환시기와 상환재원인 회수자금 및 금융권 특별기여금의 조달시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04년부터 국회의 보증 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차환 발행하고 있음

상환대책 대비 상환 실적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구 분 | 상환대책('02년) | | | 상환실적 | | |
|------|------------|------|------|-------|------|------|
| | 정부출연금 | 자체상환 | 계 | 정부출연금 | 자체상환 | 계 |
| '03년 | 9.7 | — | 9.7 | 9.7 | — | 9.7 |
| '04년 | 12.0 | 4.7 | 16.7 | 12.0 | 4.7 | 16.7 |
| '05년 | 12.0 | 6.4 | 18.4 | 12.0 | 6.4 | 18.4 |
| '06년 | 12.0 | 7.2 | 19.2 | 12.0 | 7.2 | 19.2 |
| '07년 | — | 5.8 | 5.8 | — | 6.2 | 6.2 |
| '08년 | — | 12.0 | 12.0 | — | 11.5 | 11.5 |
| '09년 | — | 0.1 | 0.1 | — | 0.1 | 0.1 |
| '10년 | — | 0.1 | 0.1 | — | 0.1 | 0.1 |
| '11년 | — | 0.1 | 0.1 | — | 0.1 | 0.1 |
| '12년 | — | 0.1 | 0.1 | — | 0.1 | 0.1 |
| '13년 | — | 0.1 | 0.1 | — | — | — |
| 합 계 | 45.7 | 36.7 | 82.4 | 45.7 | 36.5 | 82.2 |

-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음

- 이후 잔여재산을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86%:14%)에 따라 반환하고 있으며, '12.6월말 현재까지 정부에 반환한 금액은 총 8.7조원

상환대책 대비 상환 실적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구 분 | 상환대책(‘02년) | | | 상환실적 | | |
|------|------------|------|------|-----------|-------|------|
| | 정부 출연금 | 자체상환 | 계 | 정부 출연금 | 자체상환 | 계 |
| ‘03년 | 3.3 | 8.9 | 12.2 | 3.3 | 8.9* | 12.2 |
| ‘04년 | — | 2.2 | 2.2 | — | 2.2 | 2.2 |
| ‘05년 | — | 0.4 | 0.4 | — | 0.4** | 0.4 |
| 합계 | 3.3 | 11.5 | 14.8 | 3.3 | 11.5 | 14.8 |

* 자체상환에는 차환채권(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4조원 포함

** 2005년 상환예정이었던 IBRD 차관자금 0.4조원은 2003년말 상환 완료

② 공적자금 II

- (구조조정기금) 보유 부실자산의 정산만기 등 회수시점과 기금채권 만기시점을 연계시켜 상환 진행중임

- ‘12.6월말 현재 채무 잔액은 4.9조원이며, ‘14년말까지 전액 상환 예정

구조조정기금채권 연도별 상환일정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만기도래 시점 | ‘12 | ‘13 | ‘14 | 합계 |
|---------|-----|-----|-----|-----|
| 만기도래 금액 | 0.5 | 2.2 | 2.2 | 4.9 |

□ 미회수 기관 및 금액 현황

① 공적자금 I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기 관 | 지원(A) | 회수(B) | 차이(A-B) |
|-----|-------|-------|---------|
| 예보 | 110.9 | 49.0 | 61.9 |
| 캠코 | 38.5 | 45.4 | (6.9) |
| 정부등 | 19.3 | 9.2 | 10.1 |
| 계 | 168.7 | 103.6 | 65.1 |

② 공적자금 II

(‘12.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기 관 | 지원(A) | 회수(B) | 차이(A-B) |
|-----|-------|-------|---------|
| 캠코 | 6.2 | 2.1 | (4.1) |

□ 향후 회수 계획

① 공적자금 I (주요 보유 주식 매각 진행 현황)

(‘12.7월말 기준, 단위 : 천주, 억원)

| 기관 | 기업명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상장 여부 | 매각계획 |
|----------------------------|--------|-------------------------|--------|----------|--|
| 예 금 보 험 공 사 | 우리금융지주 | 459,199 | 56.97% | 상장 | ‘12.4.27일 매각방안을 발표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8.2일 매각절차 중단 - 매각 재추진 시기와 방법 등은 공자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 |
| | 대한생명 | 214,962 | 24.75% | 상장 |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방안 마련 예정 |
| | 제주은행 | 4,076 | 18.42% | 상장 | 일부 지분에 대한 장종매각 지속 추진중 - 잔여지분은 상장유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경쟁입찰 등을 통해 매각 추진 |
| | 수협 | 115,810 (우선출자 증권) | - | - | 이월결손금이 해소되는 ‘18년 이후부터 우선출자증권 상환 추진 전망 |
| | 서울보증보험 | 32,764 | 93.85% | 비상장 | 보증보험 시장개방 추이 등 매각여건을 고려하여 매각방안 마련 예정 |
| (주)케 이알 앤;씨 | 한국전력 | 32,211 | 5.02% | 상장 |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 추진 중 |
| | 하이닉스 | 4,382 | 0.63% | 상장 | 채권단(외환은행 등) 공동매각 진행 중 |
| | 포항터미널 | 10 | 100% | 비상장 | 공개경쟁입찰 등 추진 |
| | 한국자금중개 | 485 | 24.25% | 비상장 | 국내 외환시스템의 성숙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각 추진 예정 |
| 자 산 관 리 공 사 | 대우조선해양 | 36,567 | 19.11% | 상장 | 주가 등 매각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매각방안 마련 예정 |
| | 쌍용건설 | 11,537 | 38.75% | 상장 | 매각 계속 추진 중 - ‘12.8월 우선협상대상자 이랜드는 협상 중단 |
| | 대우일렉 | 61,127 | 57.42% | 비상장 | 주채권은행 주관으로 매각절차 진행중 |

② 공적자금Ⅱ

(‘12.7월말 기준, 단위 : 천주, 억원)

| 기관 | 구분 | 보유 매입액 | 회수 계획 |
|----------------|-------------------|--------|---------------------------------------|
| 자산 관리 공사 | PF채권 | 33,052 | 사업장매각 및 정상화 등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추진 |
| | 담보채권 | 2,543 | 경매실행 및 채권추심 등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추진 |
| | 혼합형채권 (JV-SPC) | 2,030 | ‘14.12월까지 유동화자산 정리를 통해 유동화사채 회수 추진 |
| | 선박출자금 | 4,666 | ‘14.12월까지 선박운용 후 재매각 추진 |
| | 미분양펀드 출자금 | 43 | ‘12.7월중 전액 회수 완료 |

☐ 향후 상환계획

① 공적자금 I

- '02년 마련된 공적자금상환대책(붙임 참조)에 따라 상환중
- 그동안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 출연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출연되기는 하였으나,
 - 일반회계 출연 부족분이 세계잉여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보충됨에 따라 '02년 상환계획보다 빠르게 상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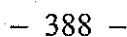
* 국채잔액 비교: ('11년 계획) 56.2조 → ('11년 실적) 45.7조

-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 출연 및 금융권 특별기여금(예금의 0.1%) 납부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적자금 상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② 공적자금 II

- 구조조정기금은 기금운용시한('14.12월)까지 자산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정리방식을 활용하여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 보유자산의 정리를 통해 회수된 자금으로 만기도래하는 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인 공적자금 회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이 상환기간 내에 모두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 <공적자금 지원> | <부채> | <회수추정> | <상환분담> |
|--|--|---|--|
| 159조원 | 97.2조원 | | |
| <div> <div>채권발행</div> <div>102조원</div> </div> | <div> <div>채권 95.2조원</div> <div>+102조원-7조원(기상환)</div> </div> | <div> <div>회수자금</div> <div>28.2조원</div> </div> | |
| <div> <div>차관자금</div> <div>2조원</div> </div> | <div> <div>차관자금 2조원</div> <div>⇒ 예보 82.4조원</div> <div>캠코 14.8조원</div> </div> | <div> <div>향후 상환부담</div> <div>69조원</div> </div> | <div> <div>69조원</div> <div>재정 49조원</div> <div>(일반회계 출연)</div> </div> |
| <div> <div>회수자금</div> <div>33조원</div> </div> | | | <div> <div>금융권 20조원</div> <div>(특별기여금 0.1% 부과)</div> </div> |
| <div> <div>공공기관자금</div> <div>22조원</div> </div> | 상환대상 아님 | | <div> <div>※ 재정:금융권 = 7:3</div> </div> |



☐ MOU 체결 현황

- ☐ 예금보험공사는 '12.6월말 현재 6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MOU 체결 현황

('12.6월말 현재)

| 구 분 | 금융회사 | MOU 체결일자 |
|-----|-----------|---------------------------|
| 은행권 | 우리금융지주 | '01.7.2 |
| | 우리은행 | '00.12.30 ('99.1.22) |
| | 경남은행 | '00.12.30 |
| | 광주은행 | '00.12.30 |
| | 수협 신용사업부문 | '01.4.25 |
| 보 험 | 서울보증보험 | '01.6.9 ('00.4.12) |

* () 안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 MOU 이행 부진사항 및 조치 현황

- 우리은행 등 5개 금융회사는 '12.1/4분기 MOU 재무비율 목표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 우리금융지주는 반기별로 목표 부여

- 기타 이행 부진사항 없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7. 가계부채 관련

- 기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 문제점 및 대책

[기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 2008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 7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수도권 전역(투기지역 제외)의 LTV규제 60%→50%로 강화

(2) 2009. 9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DTI규제 적용
(서울 : 50%, 인천·경기 : 60%)

(3) 2009. 10월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전사에 적용
- 수도권 전역(투기지역 제외)의 LTV규제 강화
-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DTI규제 적용

(4) 2011. 3월 DTI 규제 자율적용 폐지

- 2010.8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 자율 적용되었던 DTI 규제를 정상화

(5) 2011.6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 외형지표(카드자산, 신규발급수,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독 강화 및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자본조달 규제 정비

(6) 20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세부내용 별첨 참조

(7) 2012.2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 세부내용 별첨 참조

[문제점 및 대책]

□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입니다.

- GDP나 소득증가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구조가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99~'10년중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 11.7%, GDP 7.3%, 가처분소득 5.7%

* 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비중('10) : 94.9% (미국 10%, 독일 10%, 영국 62%)

*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비중('10) : 41.3% (미국 9.7%, EU 7.5%)

□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DTI규제 원상회복('11.3월),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외형확대 억제('11.6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고

- 지난해 6월 29일에는 4대 분야*의 범정부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총유동성 안정적 관리, ②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③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④서민금융 강화

- 또한 금년초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을 추진하였습니다.

[별첨]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 6.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3. 평가

II.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방향>

<금융부문 대응방안>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2. 가계대출구조 개선방안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4.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III. 추진 계획

(별첨) 금융부문대책 추진일정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 11.3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가계대출이 752.3조원*
(은행권 435.1조+비은행권 317.2조), 판매신용이 49.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364.9조(은행 289.9조, 비은행 75.0조)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

□ 가계부채는 99년~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

□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경제·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09년 기준으로 GDP대비 86%(12위), 가처분소득 대비 153%(9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OECD평균 |
|-----------------|------------|-------|-------|---------------------|--------|
| ▪ 가계부채/GDP(%) | 85.9 (12위) | 100.2 | 110.0 | 80.4 | 77.0 |
|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152.7 (9위) | 132.0 | 171.5 | 129.5 ¹⁾ | 134.1 |

주)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09년, 통계가 공표된 27개국 기준), 1) 08말 기준

< 가계부채 추이 >

* 한은 가계신용기준

| (조원) | '99말 | '02말 | '05말 | '07말 | '09말 | '10말 | '11.3말 |
|----------------------|-------|-------|-------|-------|-------|-------|--------|
| 가계신용 | 214.0 | 439.1 | 521.5 | 630.7 | 733.7 | 795.4 | 801.4 |
| 가계대출 | 191.9 | 391.1 | 493.5 | 595.4 | 692.0 | 746.0 | 752.3 |
| - 은행 | 76.3 | 222.0 | 305.5 | 363.7 | 409.5 | 431.5 | 435.1 |
| 주담대 | - | - | 190.2 | 221.6 | 264.2 | 284.5 | 289.9 |
| - 비은행 | 115.6 | 169.1 | 188.0 | 231.7 | 282.5 | 314.5 | 317.2 |
| (상호금융) ¹⁾ | 37.8 | 45.7 | 77.8 | 101.4 | 132.2 | 154.8 | 157.4 |
| (여전사) | 16.2 | 57.1 | 23.8 | 30.7 | 31.5 | 36.3 | 36.9 |
| 주담대 ²⁾ | - | - | - | 46.6 | 64.6 | 73.1 | 75.0 |
| 판매신용 ³⁾ | 22.1 | 47.9 | 28.0 | 35.3 | 41.7 | 49.4 | 49.1 |

1) 단위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 보험사·여전사 등 제외,
3) 카드사 신용판매, 여전사 및 판매회사(백화점 등) 제공 신용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99~02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 05~06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증

| (연평균 증가율) | '99~'02 | '03~'04 | '05~'06 | '07~'10 |
|--------------|---------|---------|---------|---------|
| ▪ 가계 부채 (%) | 24.3 | 4.0 | 10.7 | 8.1 |
| ▪ 경상 GDP (%) | 9.5 | 7.1 | 4.8 | 6.6 |

□ (99~02년) 시중유동성 증가, 기업대출수요 감소, 가계수지 악화 등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연평균 24%)

○ 금리급락 등으로 시중유동성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은 구조조정·재무구조 개선 추진으로 대출수요가 감소

* 유동성 증가율(L) - GDP 증가율(%) : (99년)△0.3, (00년)2.1, (01년)4.0, (02년)3.0

* 제조업 부채비율(%) : (97년) 396, (99년) 215, (01년) 182, (02년) 135

- 가계대출 수요가 기업대출수요 감소를 점진적으로 대체

* 은행대출 증가율(%) : [가계] (99년)44.2, (00년)40.5, (01년)46.1, (02년)41.7
[기업] (99년)18.1, (00년)18.0, (01년)△10, (02년)24.8

○ 외환위기이후 소득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교육비·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급감

* 개인 저축률(%) : (99년) 21.6, (00년) 8.6, (01년) 4.8, (02년) 0.4

* 가계지출 중 교육비+통신비 비중(%) : (97년)13.6, (99년)15.6, (01년)17.2, (02년)17.6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으로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및 판매신용도 30%대 증가세를 시현

*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율(%) : (99년)35.0, (00년)107.4, (01년)30.0, (02년)30.8

* 여전사 판매신용 증가율(%) : (99년)30.9 (00년) 35.5, (01년)62.3, (02년)29.2

□ (03~04년) 카드사태 등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연평균 4.0%)

- 여전사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판매신용은 감소

* 03~04년중 연평균 증가율(%): (은행대출)11.6, (비은행대출)1.2, (판매신용)△27.4

□ (05~06년) 부동산경기 과열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연평균 10.7%)

-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경쟁 등 시중자금의 주택시장 쏠림현상 발생

* 수도권 아파트가격/은행 주담대 증가율(yoy, %): (05년)7.2/12.4, (06년)24.6/14.1

□ (07년 이후) 주택대출 규제 강화, 기업 자금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연평균 8.1%)

- 은행권은 경제성장률 이내로 조정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의 증가폭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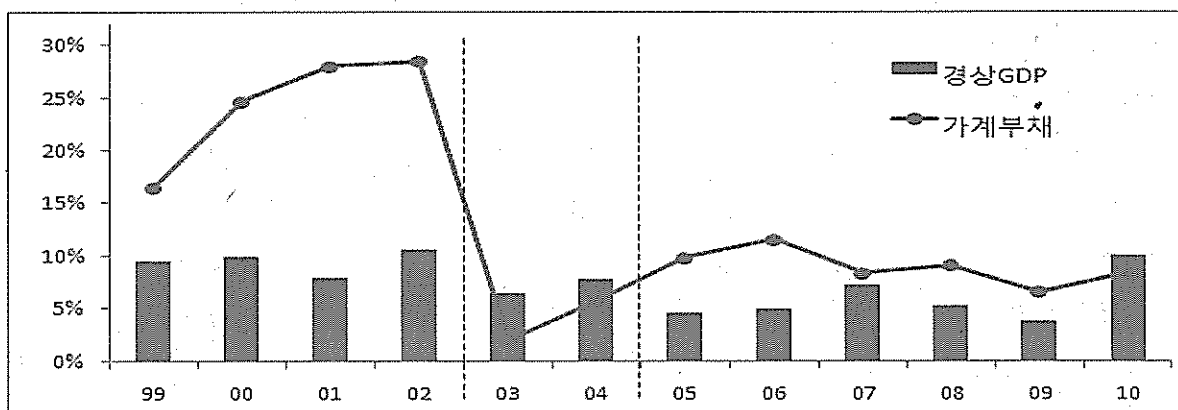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07년)5.5, (08년)6.8, (09년)5.4, (10년)5.4

* 07~10년 연평균 증가율(가계대출/주담대, %): (은행)5.7/7.0, (비은행)11.4/16.2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 06말 37.1% → 10말 42.2%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 지속(9.1%)

<시기별 가계부채 추이>



< 참고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동향 >

- 07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11.4%)

| (yoy, %) | '07 | '08 | '09 | '10 | ('07~'10 평균) |
|------------|--------|--------|--------|--------|--------------|
| * 은행 가계대출 | : 5.0 | 6.8 | 5.4 | 5.4 | 5.7 |
| * 비은행 가계대출 | : 13.5 | 12.1 | 8.7 | 11.3 | 11.4 |
| (주택담보대출) | : (-) | (20.1) | (15.4) | (13.1) | (16.2) |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도 상승(06말 37.1%→10말 42.2%)

-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년들어 여전사·저축은행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상호금융) 세제혜택* 등에 따른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년 이후 평균 15.4% 증가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09.1월부터 비과세한도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확대)

*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예금 증가율 : 15.9% (대출 증가율 15.4%)

- (저축은행) 아직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PF대출 시장 위축에 따라 가계대출이 확대(10년중 11.3% 증가)

- (여전사) 10년중 카드론(35.2%)을 중심으로 가계대출(15.2%) 증가,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신용판매(12.3%)도 급증

< 비은행권 가계대출 추이(한은, 가계신용) >

| | '06말 | '07말 | '08말 | '09말 | '10말 | '11.3말 |
|--------------------|---------|---------|---------|---------|---------|---------|
| 비은행권 합계 | 204.2 | 231.7 | 259.8 | 282.5 | 314.5 | 317.1 |
| (전년동기비) | (10.7%) | (13.7%) | (15.4%) | (10.9%) | (16.4%) | (10.8%) |
| 상호금융 ¹⁾ | 87.5 | 101.4 | 118. | 132.2 | 154.8 | 157.4 |
| 보험 | 50.9 | 55.9 | 61.7 | 64.2 | 66.0 | 66.7 |
| 여전사 | 25.2 | 30.7 | 31.3 | 31.5 | 36.3 | 36.9 |
| 저축은행 | 7.7 | 6.8 | 6.9 | 7.3 | 8.2 | 8.4 |

1) 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및 추가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추세

* 한국 : (01) 61.2% → (09) 85.9% (+24.7%p)

* OECD 평균 : (01) 51.8% → (09) 77.0% (+25.2%p)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내수회복 등 위기극복·경제성장에 기여

* 99년~02년중 GDP 증가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 74.4% (90년 이후 평균 48%)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과거 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시정되면서 가계의 금융이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기업부문에 집중되고 가계부문에는 위축되었던 기업과 가계간 자금배분의 불균형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이에 따라 기업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

(98말) 27.7 → (02말) 47.1 → (10말) 43.7 [美(04말) 45.2, 英(03말) 46.0]

* 기업부채비율(%) : (98년) 303.0, (02년) 135.4, (05년) 100.9, (09년) 109.6

□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으로 판단

○ 금융권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

* 가계대출 연체율(전업권, %): (06)2.44, (07)1.94, (08)1.91, (09)1.76, (10)1.68

(은 행, %): (06)0.70, (07)0.55, (08)0.60, (09)0.42, (10)0.61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전업권, %) : (10.12월) 0.87, (美, 10.4/4) 8.22

○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이들 계층의 대출비중이 증가

* 고신용등급(1~4등급) 대출 비중(%) : (06말) 62.0, (08말) 62.4, (10말) 70.2

※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 비우량 대출인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이 01년 8.6%에서 06년 20%까지 확대

○ 가계대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당히 낮음

* 韓 47%, 美 75%, 英 61%, 佛 80%, 獨 74%, 홍콩 64% ('09말 기준)

- BIS 비율·당기순이익 등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높아진 상황

* BIS 비율(은행, %) : ('06말)12.8, ('08말)12.3, ('10말)14.6(글로벌 20대 은행 13.6)

* 당기순이익(은행, 조원) : ('07년) 15.0, ('08년) 7.7, ('09년) 6.9, ('10년) 9.3

○ 또한 최근 수년간 가계금융부채 증가와 동시에 금융자산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가계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오히려 상승

* 가계금융자산 / 부채 (배) : ('08말) 2.09, ('09말) 2.28, ('10말) 2.32, ('11.3말) 2.33

※ 가계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02년 이후 OECD 평균 △0.67배 감소한 반면, 우리는 +0.12배 증가

□ 다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 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

-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고, 금리 적용기간이 짧음

*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09말, %) : (韓)95, (美)10, (英)62, (佛)13, (獨)10

* 금리적용기간(변동주기)는 통상 3개월 수준(美은 통상 1년, 日은 6개월 이상)

-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만기시 상환부담이 크고 차환위험에 노출

·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연장 관행 지속

* 일시상환 비중(은행) : (韓) 41%('10말), (美) 9.7%('10말), (EU) 7.5%('09말)

* 주담대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거치기간중인 분할상환) 비중 : 80%('10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유형별 현황('10년말)>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합계 |
|---------|---------|---------|--------|
| | 거치기간중 | 원금상환중 | |
| 117.4조 | 108.8조 | 58.8조 | 284.5조 |
| (41.3%) | (38.2%) | (20.5%) | (100%) |

■ : '10년말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경기·금리여건에 대한 민감도가 큰 저신용층의 어려움이 상존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
| * 금리1%p 상승시 순이자부담(만원) | 16.1 | 13.0 | 9.8 | 9.0 | 17.1 | 12.4 |
| (가처분소득대비) | (3.2%) | (1.0%) | (0.4%) | (0.4%) | (0.3%) | (0.4%) |

주) 통계청 2010년 가계신용조사,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리민감 자산 및 부채 기준

➡ 지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응여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II.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 방향>

◇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①, ②과제의 세부 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가계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일 발표)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

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

①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

※ 고위험 대출(例示) :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별도 마련

- 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
- ②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

○ 특정부문(예: 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예: 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영향분석·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 결정

②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

○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은행기준, 10.1~6월)

*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 LTV 비율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업무가 소홀

○ 앞으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CAMELS 반영 등)

○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단, 충분한 예고 및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

□ 은행 예대율 관리 강화

- 100% 초과 은행 : 100% 준수기한(13년말)을 12.6월말까지 1년6개월 단축 지도
- 100% 미달 은행 : 준수기한(12.6월말)중 다시 100%를 초과 하지 않도록 지도

* 11.3월말 현재 일반은행(13개) 예대율 : 97.1%

나.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전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①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를 설정·관리(6.7일 既발표)

- 회사별 목표수준에 대해 정기점검
-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②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와 여타 여전사간 규제수준을 차등화
- 규제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점진적인 규제준수를 유도

* 레버리지 현황(평균/최고, 11.3말, 배) :
(카드사) 4.1 / 7.7, (할부사) 8.4 / 20.1, (리스사) 7.2 / 18.0

③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대비 10배) 폐지(6.7일 既발표)

* 레버리지 규제로 대체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6.15일 규정개정 완료,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

* 정상 여신 : 1.5% → 2.5%, 요주의 여신 : 40% → 50%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요주의 여신(12년) : 2%(할부대출), 8%(가계대출) → 10%

- 정상 여신 : 1%(은행과 동일) → 적립비율 상향폭은 리스크 수준 및 레버리지 규제도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 유도(3.30일 既발표)

- 카드 모집실태 및 마케팅 경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 강화

*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매반기→매분기),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20명→30명, 금감원 참여(월1회))

-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3장→2장이상 소지자)

* 현재 신용카드 3개 이상 소지자의 카드 사용실적, 이용한도 등에 대해 카드사간 정보공유

[상호금융]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
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확대

* 09~10년중 예수금 증감 (증가율) : (상호금융) 57.5조(29.1%) (은행) 191.8조(21.9%)
가계대출 증감(증가율) : (상호금융) 36.8조(31.2%) (은행) 42.9조(11.0%)

※ <참고>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 개요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9의3)
- 혜택 : 비과세(~'12말) → 5%과세('13) → 9%과세('14~)

⇒ 비과세 혜택은 12년말 예정대로 종료하여 가계대출
확대요인이 된 상호금융 수신증가를 최대한 정상화

- 상호금융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

○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 | <현 행> | | <개 선(안)> |
|----------|--------------|---|------------|
| * 정상여신 | : 3개월미만 연체 | → | 1개월미만 연체 |
| * 요주의여신 | : 3~6개월미만 연체 | → | 1~3개월미만 연체 |
| * 고정이하여신 | : 6개월이상 연체 | → | 3개월이상 연체 |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

* 정상여신 (0.5% → 1%), 요주의여신 (1% → 10%)

⇒ 2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 및 비율
상향조정(유예기간 중 최소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토록하여 충격흡수 유도)

□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는 있으나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합리적 수준의 최고한도 설정

- *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
- * 자기자본/동일인 대출한도('11.3말, 억원) : 신탁 44/9, 농협 147/30, 산림조합 34/7

② 신탁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도입

- *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별도의 대출총량한도가 없음
- 간주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 총한도(연간 신규대출 취급액의 1/3로 제한)에 포함해서 적용

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25%까지 소득공제

□ 개인신용평가지 신용카드 이용실적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 현재 신용카드는 장기간 연체 없이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 향상요인이 되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3월말 既 시행)

- * 2.0~2.5% → (중소가맹점) 1.0%, (일반가맹점) 1.5~1.7%

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신규대출부터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공제제도 개선 방안>

| 구분 | 현행 | 개선안 |
|------------|---------------|--|
| 주택보유수 | 무주택자 | 좌 동 |
| 대상주택 |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 좌 동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좌 동 |
| 소득공제 한도 | 1,000만원 |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1,500만원 ▪ 기타 대출 : 500만원 |

-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차등화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 (현행) 고정금리대출은 연 0.125%(거치식·비거치식 구분 없음)
변동금리대출은 연 0.260%

-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은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예: 매년 3년주기)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

*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분리 운영도 가능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및 혼합대출*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대출금의 일정부분(예: 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상기 목표대출 실적에 포함)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 데스크 설치 등 on-off 라인을 통한 상품 안내·홍보 강화(은행연합회)

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유동화(MBS발행) 지원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 자산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일정비율(예: 20%~50%) 이상 포함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증가추이를 보아가며 편입비율 확대

☐ MBS·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유동화 수요를 보면서 자본금 확충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①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지의무 등 강화

- 차주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필수사항 규정

※ 고지의무사항(예시) :

- (i) 금리·금리변동주기·금리변동사유 등 기본적 사항
- (ii)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 (iii)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월간, 연간)
- (iv)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 금리변동시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부여(예: 최소 1개월전)

*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한자에 한해 1~2주전 고지

②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시 약 1.5% 수수료 부과

③ 변동성이 낮은 COFIX(잔액기준) 연동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 변동폭을 축소하는 옵션부 대출상품 개발 유도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 종류>

| | |
|---------------------|------------------------|
| 초기간한도(lifetime cap) |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 |
| 기간한도(periodic cap) |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 |
| 상환한도(payment cap) | 금리조정시 월 상환금액 증가 한도를 설정 |

- CD(3개월) 등 여타 금리 연동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금리상한 옵션 대출 상품 판매 등)토록 유도

- 금리변동주기 확대(3개월 →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도

* 통상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이상)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 점검(은행 등 가능한 업권부터 先시행)

□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

-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 마련(협회별 T/F 구성)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 수수료 등 실태조사 강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 불법·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

-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일선점포 불법·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본점의 책임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이 심화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

◇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

※ 11.4.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접근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 지원(10.1~11.6 : 2,521억원 대출)

- 미소금융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직능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중

* 금년중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 4천명 교육

* 현재 세탁업중앙회, 미용사 협회 등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고 있는 것을 여타 단체로 확대

○ (햇살론)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10.7~11.6 : 1조6,368억원 대출)

-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예시)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탄력적용, 보증지원절차 간소화 등

○ (새희망홀씨) 기존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의 지원대상 확대 등 개선(10.11~11.5 : 6,867억원)

- 새희망홀씨 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 제정

□ 금리·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 2.0~2.2% → 1.6~1.8%

기타 중소 가맹점 : 3.3~3.6% → 2.0~2.15%

-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10.4) 9,600만원미만 → (11.5) 1.2억원미만 → (12.1) 1.5억원미만)

○ (고금리 대부업 피해 방지) 대부업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연49%→연44%(10.7)→연39%(11.6))하였으며, 과다·허위 대부
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 방안 마련·추진

○ (금리비교공시 확대)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상호금융·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도 도입

○ (대출중개비용 경감)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 수행, 불법 대출중개 단속강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서민층 고금리부담 완화

*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준비중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조회기록 및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미반영, 단기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5년→3년)

*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중, 전
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

-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의 우량정보를 모든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하고 신용평가지 적극 반영

* 4.28일부터 정보집중 개시, 10월부터 신용평가지 반영 예정

□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지원노력 강화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08년 이후 47.6만건 지원)

-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 시행 중(당초 11.4월 종료 예정)

- 6.1일부터 채무 상환기간(8년→10년) 및 상환 유예기간(1년→2년) 연장 시행 등 신용회복 제도 보강

- “사이버 지부” 활성화, 안내·홍보활동 강화, 신용회복 지원협약 참여기관(현재 3,523개) 확대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활성화 추진

○ (소액대출·취업지원) 신용회복지원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지원 및 취업지원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 재할자금(4%) 지원규모 확대(10년 700억원→11년 1,000~1,200억원)

* 은행 등의 추가 기부금 출연 등 재원확대방안 강구

-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중인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원까지 확대

○ (전환대출) 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6등급이하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내외의 은행대출로 전환(08년이후 4,697억원 지원)

- 지원대상 확대 및 창구 확대 등 전환대출 지원 보강

* 지원대상(6.10 시행) : (현행) 6~10등급 → (개선) 연소득 2,600만원 이하

* 지원창구(6.30 예정) : (현행) 6개 은행 창구 → (개선) 전국 모든 은행 창구

Ⅲ. 추진 계획

□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7월중 추진
-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검토후 하반기중 시행
- 법령·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중 개정완료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

①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예: 10%~50%)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 준비금 적립시 배당이 제한되므로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당기손익 및 배당을 제한하는 현행 대손충당금과는 달리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배당만 제한; 대손준비금과 유사)

⇒ 적정수준 기준, 적립률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분석,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②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③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④ 고위험·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

별첨

금융부문 대응방안 추진 일정

| 추진 과제 | 필요 조치 | 시행시기 | 소관부처 |
|-----------------------------------|------------------|--------------|--------------|
| 1.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 | | | |
| 나. 은행권 | | | |
| ❶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 | 시행세칙 개정 | 11년중 | 금감원 |
| ❷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❸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❹ 예대율 관리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가. 비은행권 | | | |
| ❶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추진 | 여전법 등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금융위 |
| ❷ 여전사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❸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 시행령 등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❹ 신탁 간주조합원 대출총량한도 도입 | 시행령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❺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다. 체크카드 활성화 | | | |
| ❶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 | 소득세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기재부 |
| ❷ 체크카드 이용실적 신용평가 반영 | 신평사 자율시행 | 11년중 | |
|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 | | |
| 가. 고정금리·분할상환 활성화 | | | |
| ❶ 소득공제 차등화 | 소득세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기재부 |
| ❷ 주신보 출연료를 차등화 | 시행규칙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❸ 은행별 목표관리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년중 | 금감원 |
| 나. 장기자금조달 여건 마련 | | | |
| ❶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이후 | 금융위 · 금감원 |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 | |
| ❶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금융위 · 금감원 |
| ❷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
| ❸ 잔액기준 COFIX 유도 | 실적점검 | 11.7월중 | |
| ❹ 금리상한상품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
| ❺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 실태점검 | 11년중 | |
| ❻ 불법·허위 광고 억제 | 실태점검 | 11년중 | |
| 4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 | | | |
| ❶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 11.7월 | 금융위 |
| ❷ 과다 허위 대부광고 피해방지 | 대부업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금융위 |
| ❸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 실적점검 | 11년중 | 금융위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2012. 2.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II. 기본방향

III.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예대출 관리 강화
2.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3.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4.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5.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개선
6.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IV.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조정
2.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V.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
3.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VI. 향후 추진 계획

I.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1. 일반현황

□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말 대비 7.6% 증가한 858.1조원

○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9조원으로 2010년말 대비 5.7%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402.3조원으로 9.9% 증가

□ 2007년 이후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율(%) >

(괄호안은 연도별 증가액, 조원)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전체 | 9.7 (45.5) | 11.4 (58.7) | 9.7 (55.6) | 8.7 (54.8) | 7.7 (53.0) | 8.1 (59.6) | 7.6 (60.6) |
| 은행 | 10.6 (29.2) | 13.3 (40.7) | 5.0 (17.5) | 6.8 (24.9) | 5.4 (20.9) | 5.4 (22.0) | 5.7 (24.4) |
| 제2금융권 | 8.4 (16.3) | 8.6 (18.0) | 16.7 (38.1) | 11.2 (29.9) | 10.8 (32.1) | 11.5 (37.7) | 9.9 (36.2) |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수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결과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한은기준, 조원)

: (은행) '04말 276.3 → '11년말 455.9 (제2금융권) '04말 193.8 → '11년말 402.3

-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 175.0 (보험) 74.7 (저축은행) 10.2 (여전) 38.8

2. 부문별 현황

□ (보험)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원으로 '10년말 대비 6.4조원(9.3%)이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

○ 특히 '11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년 대비 빠르게 상승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상호금융)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0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2조원(13.1%)이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업권별 증가율 : 신탁 15.1%, 농·수협·산림조합 11.5%, 새마을금고 17.5%

○ '02년말 45.7조원에 불과하던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11년말 까지 불과 9년 사이에 네 배 가까운 규모로 급속히 증가

* 2003~2011년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6.1%에 달함

□ (저축은행)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0.2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조원(24.9%) 증가

○ 증가속도가 빠른편이나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좀 더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방안 검토

□ (여전사)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38.8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5조원(7.0%)이 증가

○ '11년중 카드사에 대한 대책*등으로 '10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10년 15.1% → '11년 7.0%)

* 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상향('11.6월 시행), 레버리지 규제 도입방안 발표, 카드발급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카드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참고 : 6.29 대책 이후 가계대출 동향 〉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발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

○ (은행권)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11.6조원(+2.7%)이 증가하여 상반기 12.8조원(+3.0%)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제2금융권) 반면 제2금융권은 하반기 20.5조원(+5.6%)이 증가하여 상반기 15.7조원(+4.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 특히 보험사(1.6%→7.7%), 상호금융(5.5%→7.6%)의 경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높아짐

2011년 분기·반기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전년말비, %)

| | '11.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상반기 | 하반기 |
|--------|---------|------|------|------|------|------|
| 가계대출 | 1.4% | 2.2% | 1.6% | 2.4% | 3.6% | 4.0% |
| 은행권 | 0.9% | 2.1% | 1.2% | 1.5% | 3.0% | 2.7% |
| 제2금융권 | 1.9% | 2.4% | 2.1% | 3.5% | 4.3% | 5.6% |
| (보험) | 0.8% | 0.8% | 4.4% | 3.3% | 1.6% | 7.7% |
| (상호금융) | 1.7% | 3.8% | 3.1% | 4.5% | 5.5% | 7.6% |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대비 기간별 증가액으로 산출

II. 기본방향

-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예대율 관리,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충당금 조기적립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
 - 보험사는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
- ◇ 이와함께 가계부채 규모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도 차질 없이 추진
 -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노력 강화
 -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신규대출 위주로 시행
- ◇ 또한 서민금융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도 병행 추진

Ⅲ.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 예대율 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수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들어 예대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

* 상호금융 예대율 현황 (한은 비은행기관 여수신자료 · 분기말 잔액 기준)

| | 2010년 | | 2011년 | | | |
|--------------------|-------|-------|-------|-------|-------|-------|
|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신탁 | 65.2% | 65.8% | 68.1% | 68.7% | 69.4% | 71.1% |
| 상호금융 ¹⁾ | 68.9% | 68.2% | 67.9% | 68.7% | 69.3% | 69.4% |
| 새마을금고 | 55.1% | 56.4% | 58.1% | 60.5% | 62.8% | 66.8% |

1)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햇살론·희망드림론)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예대율을 관리

* FTA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 필요성, 서민대출 중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을 제외하고 예대율 산정

- ①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토록하고, 80%초과 조합은 2년내에 80%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 징구**

* 은행과 동일하게 예대율 규제를 법제화하여 시행
(’12년 3/4분기까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해 이행계획 징구 (’12년 1/4분기중)

- ②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시 우선 검사하는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

* 단 지역 경제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예수금 절대액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예대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일부예외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일시상환 · 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은 신용위험이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은 만큼 보다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
 - 은행권은 일시상환 ·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35%→50%로 상향 조정
- ⇒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대응방안

- 고위험 대출 유형을 설정하고, 고위험 대출이 과도한 조합에 대해서는 총당금 추가 적립 · 중점검사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 '12년 3/4분기 중 개정)
 - * 사업자금 성격임이 증명된 대출은 고위험 대출 분류시 제외
 - * 고위험 대출에 포함되는 일시상환 · 거치식 대출 금액 · 다중채무자 대출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 ② 신규 고위험 대출의 총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
(2012. 3/4분기부터 적용)
 - 신규 고위험 대출부터 우선 적용하되, 기존 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고위험 대출 총당금 기준을 적용
 - * 세부적인 총당금 적립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 (예) 정상, 요주의, 고정분류 대출에 대한 총당금 적립기준에 20%를 가산
 - ③ 고위험 대출 과다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 · 감독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증가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 상승
 - * 단위농협 비조합원 대출비중 : (08말)29%→(09말)31%→(10말)32%→(11.11월)33%
 - 단위수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비중은 66% 수준
- ⇒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 원격지 대출 관리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조합원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의 연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 농·수협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높은 한도를 적용
 - *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한도 : (농협) 신규대출의 1/2, (수협) 대출한도 미적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규대출의 1/3
- ⇒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

대응방안

-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1/3이내로 일원화
 - 단위농협은 금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 대출의 1/3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 (행정지도, '12년 1/4분기중)
 -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없는 단위수협의 경우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로 제한 (수협법·수협법시행령 개정, '15년부터 시행)
 - 다만, 비조합원 신규 대출 비중을 2011년말 기준으로 standstill하고, 비조합원 신규 대출 단계적 감축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
- 정관·업무방법서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일관성·실효성을 확보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 현재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정관(단위 농·수협, 산림조합)이나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등에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규정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권역외 대출임에도 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한도가 미적용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 조합원과 동일세대, 준조합원(농·수협),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

- ⇒ 권역외 대출의 확대는 대출관리의 부실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해당지역 공동유대에 기반한 상호금융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

대응방안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삭제
(신협법·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삭제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비조합원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게 됨
- 상호금융의 사업 중 신용사업(대출업무)에 한하여 적용
- *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경제사업 등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 이용시에는 계속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
- 법령 개정 전에도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중 담보대출(11.9월말 총 대출의 86.4%)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
 - 상호금융은 업권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
 - 상호금융의 경우 상용근로자 보다 농어업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고객비중이 높음
 - 한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권역외 대출 등의 경우 원격지의 담보를 충실히 관리하는데 한계
- ⇒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마련 → 업권별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 '12년 2분기 시행)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하여 소득 증빙 자료의 인정범위 등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여신업무방법서에 가이드라인을 반영
 - 소득 확인방법 및 인정대상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 단, 소득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농림어업인 등의 경우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방식*도 허용
- * (예) 행정안전부(재산등록 매뉴얼)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및 소득계산법 등
- 금감원·중앙회의 검사시 상환능력 확인 여부 중점 점검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6.29 대책에서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2015년까지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연체기간 : (정상)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요주의) 6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고정)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연체
 - * 대손충당금 적립율 : (정상) 0.5%→1%, (요주의) 1%→10%
- 다만, 시행시기와 방법은 2013.6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 그러나 유예기간중 상호금융 자체적인 사전준비 없이 2013.7월 부터 강화된 기준을 일시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또한 상호금융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강화된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기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
- ⇒ 유예기간 중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대응방안

- 상호금융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유예기간(~2013.6말) 중에도 강화된 수준(2013.7월부터 적용되는 수준)까지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 상향 적용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각 조합의 이행여부를 점검
- (’12년 1분기 중 이행계획 제출 → 6월 반기결산시 이행여부 점검)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조기적용 예시 (단위 : %)

| 구 분 | 현 행 | ’12.7 | ’13.1 | ’13.7 | ’14.1 | ’14.7 | ’15.1 | ’15.7 |
|------|-----|-------|-------|-------|-------|-------|-------|-------|
| 정 상 | 0.5 | 0.55 | 0.6 | 0.65 | 0.7 | 0.8 | 0.9 | 1.0 |
| 요 주의 | 1.0 | 2.0 | 3.0 | 4.0 | 5.5 | 7.0 | 8.5 | 10.0 |

※ 굵은 테두리 부분은 강화된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

IV.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중 보험사 가계대출이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 시현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특히 2011.6월 이후의 증가속도가 빠름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증감액 (증가율) | 0.6조원 (0.8%) | 0.5조원 (0.8%) | 3.0조원 (4.4%) | 2.3조원 (3.3%) |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 대비

⇒ 보험사의 경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2년 2분기 규정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정상 : 0.75% → 1.0%, 요주의 : 5% → 10%, 회수의문 : 50% → 55%

□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세칙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2.8%로 상향조정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4.0%로 상향조정

* 일시상환조건 대출, 3건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

→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범주와 동일(은행의 경우 BIS위험가중치 상향)

-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조정은 신규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기존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사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알선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단지 배포 등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측면

⇒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억제 등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보험회사 등의 대출영업 억제

-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보험모집·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 제한 (행정지도, '12년 1분기 중 시행)
-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 (행정지도, '12년 2분기 중 시행)
-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적으로 집중검사하여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관련 항목을 추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중 시행)

- 상환능력 확인 등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 (비계량평가 항목)하여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

V.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 (미소금융) 채신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12년 상반기 중)
 - 특히, 전통시장 상인 및 신용등급은 양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 (햇살론) 대환대출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12.2.13 既 시행)
 -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95%(현행 85%)로 확대
 - 신용 6등급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증기청 고시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시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 서민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대출취급 前 현장실사를 신용 보증 지역재단에서 수행토록 개선
- (새희망홀씨 대출)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 ('11년 공급목표 1조 2천억원)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

-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뀐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
 - '12년중 4,000억원 지원 목표 ('09~'11년중 연평균 2,623억원 지원)
 - 바뀐드림론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서민에 대해 총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2.2.1 既 시행)
 -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안내, 환승론 서비스 등을 확대

□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저금리(4%) 재활자금 지원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09~'11년중 연평균 648억원 지원)
- 인터넷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

3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증자리론 지원을 확대 ('12.1.16 既 시행)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2,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공급 신설('12년 1.5조원 이내 공급)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 ('12.2.27일부터 시행)
 -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 가구에 대해 공급
- 오피스텔(주거 목적) 및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신규로 지원
('12.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 국민주택기금·은행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보증대상을 확대

VI. 향후 추진 계획

☐ 1/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행정지도 등 조기사행이 가능한 사항은 1/4분기 중 추진
-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기관 협의 후 3/4분기 까지 시행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 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

< 추가 대응방안 예시 >

○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

-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적립금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은행권 도입 여부와 연계하여 검토)

참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추진일정

| 추진과제 | 필요조치 | 시행시기 | 소관부처 |
|--|------------------------|---------------|--------------------|
| 1.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 | |
| ① 예대출 관리 강화 | | | |
| · 예대출 규제 제도화 |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 | 2분기 3분기 | 금융위 행안부 |
| · 예대출 관리 이행계획 징구 | 지도공문 발송 이행계획 징구 | 1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 평균 예대출 초과조합 지도·감독 | 지도공문 발송 | 1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② 고위험 대출 규제·감독 강화 | | | |
| · 고위험 대출 총당금 기준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3분기 | 금융위 행안부 |
| · 고위험 대출 과다조합 감독강화 | 검사·감독 | 3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③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 | | |
| · 농·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관리 | 지도공문 발송 | 1분기 | 농식품부 금감원 중앙회 |
| · 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신설 | 수협법·시행령 개정 | 2015년 | 농식품부 |
| · 비조합원 대출한도 법정화 | 농·수·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개정 | 금년 중 국회 제출 | 관계부처 |
| ④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 농·수·신협법 산림조합법 개정 | 금년 중 국회 제출 | 관계부처 |
| ⑤ 상환능력 확인 강화 | 여신업무방법서 개정 | 2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⑥ 강화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기준 적용 준비 | 이행계획 제출 검사·감독 | 1분기 2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2.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 | |
| ①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 | | | |
| ·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2분기 | 금융위 |
| · 가계대출 신용위험 계수 상향조정 | 시행세칙 개정 | 2분기 | 금감원 |
| ② 가계대출 관리·감독 강화 | | | |
| · 과도한 대출영업 억제 | 지도공문 발송 검사·감독 | 1분기 2분기 | 금감원 |
| · RAAS 평가지표 개선 | 시행세칙 개정 | 2분기 | 금감원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7. DTI, LTV 규제 관련

- 규제 개요 및 현황
-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및 근거
- 입장변경 사유
- 문제점 및 대책

[규제 개요 및 현황]

- LTV, DTI 규제는 담보가치나 소득능력에 합당한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 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주택가격의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이며,
- DTI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 LTV, DTI 규제의 세부현황은 별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및 근거 / 입장변경 사유]

- ※ 규제완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최근 보완방안을 마련한 DTI규제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 DTI규제는 가계, 금융기관, 금융시장,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치이므로 부동산 시장 상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 DTI규제는 대출이 상환능력의 범위내에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가계·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장치이며, 과잉 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OECD도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의 건전성 관리장치로서 DTI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잦은 DTI규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DTI규제 완화는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선부른 정책변화는 우리정부의 관리의지 및 역량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무디스는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 건전성 악화, 민간소비 위축, 재정 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가계부채 문제 안정화 여부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관건이라고 밝힘 ('12.4월)

□ 정부가 지난 8.17일 발표한 “DTI 규제 보완방안”은 DTI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관점에서 일부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 DTI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

□ 다만, 금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출가능 금액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정부는 DTI규제 보완이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젊은층의 장래소득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에만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순자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연 5,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고 감독당국도 은행권의 상환능력 확인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③ 아울러 보완방안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별첨] LTV, DTI 규제현황

[별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현황

□ LTV 규제현황

| 담보소재지 | 담보유형 | 대출기간 | 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여전사 |
|-------|------|-----------|----|----|------|------|-----|
| 수도권 | 아파트 | 10년 이하 | 50 | 50 | 60 | 60 | 60 |
| | | 10년 6억원초과 | 50 | 50 | 60 | 60 | 60 |
| | | 초과 6억원이하 | 60 | 60 | 60 | 60 | 60 |
| | 주택 | 3년 이하 | 50 | 50 | 70 | 70 | 70 |
| | | 3년 초과 | 60 | 60 | 70 | 70 | 70 |
| 기타지역 | 아파트 | 3년 이하 | 60 | 60 | 70 | 70 | - |
| | | 3년 초과 | 60 | 60 | 70 | 70 | - |
| | 주택 | 3년 이하 | 60 | 60 | 70 | 70 | - |
| | | 3년 초과 | 60 | 60 | 70 | 70 | - |

□ DTI 규제현황

| | | 은행·보험 | | 기타 비은행권 | |
|---------------------------------|---------------|-------|-------|---------|-------|
| | | 서울 | 경기·인천 | 서울 | 경기·인천 |
| 6억초과 아파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50% | 60% | 50% | 60% |
| 6억초과 아파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경과) | | 50% | 60% | 50% | 60% |
| 3억초과~6억이하 아파트 | | 50% | 60% | 50% | 60% |
| 3억이하 아파트 | 국민주택 규모초과 | 50% | 60% | 55% | 65% |
| | 국민주택 규모이하 (A) | 50% | 60% | 55% | 65% |
| 최고한도 | 3억초과 | 65% | 75% | 65% | 75% |
| | 3억이하 | | | 75% | 80% |

* 6억초과 아파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제외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 신고소득의 경우 -5%p의 가산 항목 운영
(최대 +15%p, 위 최고한도는 가산항목 적용시 최대 DTI 한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8. 산은지주 민영화 관련

① 민영화 세부추진방안

- 산은 민영화는 '09.5월 국회의 산은법 개정을 통해 '14.5월 까지 산은지주의 최초지분을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그간 산은지주는 수신기반 확충, 수익성·건전성 제고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IPO를 준비 중에 있음
- 산은의 체질개선 성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은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②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점포신설 및 인력, 조직 확충계획

- 민영화를 위한 수신기반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 및 인력·
조직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 (점포수) '10년 말 : 49개 → '11년 말 : 60개 → '12.8말 : 71개
- * (인력) '10년 말 : 2,465명 → '11년 말 : 2,702명 → '12.8말 : 2,653명
- * (조직) '10년 말 : 9본부 2센터 45부·실 → '11년 말 : 9본부 4센터 44부·실
→ '12.8말 : 10본부 5센터 45부·실

③ 산업은행법상 특례현황 및 해소 계획과 추진실적

- 산업은행법은 ①금융채 발행한도, ②유가증권 투자한도, ③금융자회사 출자한도, ④신용공여 한도, ⑤타법인 출자한도, ⑥회사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 | 은행법 | 산업은행법 |
|-----------|------------------------------------|---|
| 금융채 발행한도 | 자기자본 × 3 | [(납입자본금 + 적립금) × 30] (정부가 원리금상환을 보증한 산금채는 제외) |
| 유가증권 투자한도 | 자기자본 60% 이내 | 자기자본 60% 이내 (단, 벤처투자, 공공법인 특수채 등 예외 인정) |
| 금융회사 출자한도 | 자기자본 15% 이내 | 자기자본 20% 이내 |
| 신용공여 한도 | 동일인 : 자기자본 20%, 동일차주 : 자기자본 25% | 동일인 : 자기자본 20%, 동일차주 : 자기자본 25% (분할에 따른 자본 감소분 5년간 인정) |
| 타법인 출자한도 | 의결권주식 15% 초과금지 | 의결권주식 15% 초과금지 (창투조합, 벤처투자 등 예외인정) |
| 회사채 인수 | 인가 불허 | 본업무 허용 |

- ①금융채 발행한도, ③금융자회사 출자한도, ④신용공여 한도는 은행법상 한도 이내로 운용 중이며,

- ②유가증권 투자한도, ⑤타법인 출자한도, ⑥회사채 인수는 단계적으로 해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12.3월말 유가증권 잔액 : 10.95조원 (은행법상 한도 : 10.23조원)

** '12.3월말 15% 초과 타법인 출자 현황 : 0.1조원 한도초과

④ 향후 추진계획

□ 산은지주는 현재 '12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 중에 있으며

- 향후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은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산은법(부칙 4조)상 '14.5월까지 산은지주 최초 지분 매각 필요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19.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및 중복 해소 관련

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신보, 기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지원대상 중복 내역

□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 대출 및 직접 대출시,

- 성장 단계의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을 기피하는 장기 시설자금 등 리스크가 큰 자금 위주로 지원 중

* (온렌딩) 창업 이후 3년 경과, 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
(직접대출) 녹색·신성장동력 등 유망 산업 분야 기업 지원

-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 신기보, 중진공의 자금지원은 정책금융공사 지원과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 지원대상 : (신기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진공) 창업초기 중소기업 등

- 특히,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 및 직접대출시 신기보 보증을 제한하여 개별 여신이 중복지원될 소지 차단

② 해외자원개발지원 관련 수출입은행과 업무 경쟁 현황

-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가 크고 국가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서,
 - 국내 기업이 자금조달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특히, 프로젝트의 대형화, 高위험화 경향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 및 수은은 업무 경쟁보다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 * 공동지원 사례 :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개발('12.5월)
 - 한국컨소시엄(한국가스공사 등)은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을 개발하여 천연가스 생산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운영 예정
 - 총사업비는 39.3억불이며 정금공, 수은, 산은, 무보 등이 공동 지원
 - 최근 정책금융기관(정책금융공사-산은-수은-무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동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③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SOC, 지역개발 관련 산업은행과 업무중복 내역

□ 신성장동력산업은 성장잠재력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중

□ SOC 및 지역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큼에 따라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금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정책금융공사도 산업은행 등과 업무공조를 통해 공동으로 자금공급하는 사례가 다수

* 공동지원 사례 : 수원-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0.11월~'15.10월)
- 총사업비 1.7조원 중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민간 시중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가 1.2조원 지원

④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확보방안 및 실행내역

⑤ 문제점 및 대책

- 정책금융공사는 '09.10월 설립 이후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및 기반을 갖추고,
 - 중소·중견기업, 해외프로젝트, 녹색·신성장산업 등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 중
- 향후에도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는 한편,
 - 여타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공조도 강화해나갈 계획

1.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s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is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third part of the paper is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fourth part of the paper is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fifth part of the paper is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노 회 찬 의원

노회찬 의원(무소속)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 결과

☐ 별도제출

노회찬 의원(무소속)

2. 최근 3년간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 목록

☐ 해당사항 없음

노회찬 의원<무소속>

3.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금융제도팀

| 기관명 | 지 적 사 항 | 처 리 결 과 |
|-------------|-------------------------|---|
| 국민권익 위원회 |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규정화 | - 제재규정 강행규정화 대상 선정 · 규정변경예고(~2010.11.12일) |
| | 제재기준의 세분화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0.1.5) -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제재기준을 시행세 칙에 반영 |
| |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방안 검토 | - 주요 선진국 등 해외사례 조사·연구 진행 중 |
| |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시행 (2010.1.28) - 재판상 공개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 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은 행 과

1. 국민권익위원회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10.03.10 | 우체국 예금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위원회는 기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전달 -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정 |
| '10.03.10 |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은행법('10.4월 국회 통과, 11.18 일 시행)에서 은행의 예금 구속행위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 하고 반드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 신설 |

보 험 과

1. 국민권익위원회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10.10.19 | 【보험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 보험계약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모집자의 설명의무 구체화,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선지급수수료제도 개선 등 |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수용가능한 의견의 경우 보험업법 및 시행령등 개정시 ('11.1.24시행) 반영 |

2. 국가인권위원회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09.6.30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시정 및 예방교육 강화 | 생·손보험회를 통해 장애인 보험가입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
| '10.7.28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 차별금지】 |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을 조사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조치 |
| '10.10.4 '10.11.4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 ○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검토 및 감독강화 |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장애인차별 금지조항 신설 (보험업법§97①, '11.1.24시행) - 보험가입심사시 비장애인과 동일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강화 및 설계사 자격시험시 관련 문항 출제하도록 조치 |

노회찬 의원(무소속)

4. 금융위 출범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 금융위 출범(2008.3)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 연도 | 퇴직일 | 이름 | 직위/직급 | 퇴직전부서 | 재취업처 및 직위 |
|------|-----------|-----|---------|------------------|---------------------|
| 2008 | '08.03.28 | 이○○ | 원장 | 금융정보 분석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 | '08.04.30 | 전○○ | 과장 | 제도운영과 | 은행연합회 감사 |
| | '08.05.15 | 김○○ | 과장 | 혁신행정과 | 법무법인 변호사 |
| | '08.06.07 | 윤○○ | 일반계약직5호 | 정책홍보팀 | - |
| | '08.08.01 | 하○○ | 일반계약직5호 | 공정시장과 | 검찰청 검사 |
| | '08.08.20 | 장○○ | 일반계약직5호 | 글로벌금융과 | - |
| | '08.10.07 | 김○○ | 일반계약직6호 | 공정시장과 | 금융감독원 |
| | '08.11.19 | 강○○ | 일반계약직5호 | 공정시장과 | 법무법인 회계사 |
| | '08.12.09 | 김○○ |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부원장 |
| 2009 | '09.01.05 | 정○○ | 서기관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협회 부장 |
| | '09.01.09 | 이○○ | 행정사무관 | 은행과 | 법무법인 변호사 |
| | '09.01.20 | 전○○ | 위원장 | 금융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 | '09.01.20 | 홍○○ | 서기관 | 공정시장과 | 법무법인 변호사 |
| | '09.03.26 | 양○○ | 실장 | 기획행정실 | 한국자금중개 전무 |
| | '09.04.30 | 김○○ | 행정주사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협회 |
| | '09.05.13 | 나○○ | 서기관 | 감사담당관실 | 한국산업은행 |
| | '09.05.15 | 한○○ | 서기관 | 금융위원회 (고용휴직) | 신영증권 상무이사 |
| | '09.09.11 | 박○○ | 부이사관 | 금융위원회 (타기관파견) | SK C&C 상무 |
| | '09.10.12 | 김○○ | 행정사무관 | 금융위원회 (타기관파견) | - |
| | '09.11.17 | 김○○ | 원장 | 금융정보 분석원 | 한국증권금융 사장 |
| | '09.11.19 | 이○○ |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
| 2010 | '10.02.17 | 김○○ | 전산서기보 |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한국거래소 |

| 연도 | 퇴직일 | 이름 | 직위/직급 | 퇴직전부서 | 재취업처 및 직위 |
|------|-----------|-----|---------|----------------|----------------------|
| | '10.03.02 | 나○○ | 행정사무관 | 행정인사과 | 정책금융공사 팀장 |
| | '10.04.15 | 임○○ |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 | 금융통화위원 |
| | '10.04.15 | 서○○ | 일반계약직5호 | 자산운용과 | 정책금융공사 팀장 |
| | '10.06.17 | 김○○ | 일반계약직5호 | 보험과 | - |
| | '10.08.23 | 김○○ | 일반계약직5호 | 기획행정실 | - |
| | '10.10.14 | 남○○ | 행정사무관 | 산업금융과 | 정책금융공사 팀장 |
| | '10.12.06 | 임○○ | 서기관 | 금융위원회 | 파인트리 파트너스 (자산운용사) |
| 2011 | '11.01.03 | 진○○ | 위원장 | 금융위원회 | 송실대 객원교수 |
| | '11.02.16 | 최○○ | 원장 | 금융정보 분석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 | '11.03.27 | 권○○ |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장 |
| | '11.03.28 | 이○○ |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 | 법무법인 변호사 |
| | '11.05.02 | 김○○ | 고위공무원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 | '11.06.02 | 안○○ | 행정사무관 | 서민금융팀 | - |
| | '11.09.23 | 공○○ | 행정사무관 | 감사담당관실 | 금융감독원 |
| | '11.09.28 | 남○○ | 팀장 | 국제협력팀 | KT 상무 |
| 2012 | '12.01.01 | 이○○ | 외신대변인 | 정책홍보팀 | - |
| | '12.02.27 | 박○○ | 일반계약직5호 | 회수관리팀 | - |
| | '12.03.14 | 원○○ | 과장 |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금융결제원 감사 |
| | '12.03.21 | 이○○ | 국제협력관 | 금융정책국 | 두산그룹 |
| | '12.05.18 | 김○○ | 행정사무관 | 금융소비자과 | 예금보험공사 |
| | '12.05.21 | 이○○ | 과장 | 감사담당관실 | 신용보증기금 이사 |
| | '12.05.26 | 김○○ | 사무처장 | 금융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사장 |
| | '12.07.02 | 진○○ | 고위공무원 | 자본시장국 |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
| | '12.08.02 | 김○○ | 일반계약직5호 | 금융정책과 | 법무법인 변호사 |
| | '12.08.13 | 전○○ | 서기관 | 금융위원회 | Ibk 캐피탈 부사장 |
| | '12.08.17 | 김○○ | 일반계약직5호 | 자산운용과 | 한국증권금융 |
| | '12.08.31 | 김○○ | 일반계약직5호 | 기획행정실 | - |
| | '12.09.04 | 오○○ | 전산사무관 |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 |

노회찬 의원(무소속)

5. 금융위 임직원 징계 현황(2008년 이후부터 2012년 8월까지)

☐ 금융위 출범(2008.3) 이후 징계 현황

| 징계자 | 징계종류 | 징계사유 | 징계일 |
|-----|------|------|-----------|
| ○○○ | 견책 | 음주운전 | '09. 1.16 |
| ○○○ | 감봉 | 금품수수 | '09. 2.27 |
| ○○○ | 감봉 | 금품수수 | '09. 2.27 |
| ○○○ | 견책 | 음주운전 | '09. 2.27 |
| ○○○ | 파면 | 금품수수 | '11.12.16 |

노회찬 의원(무소속)

6. 금융위원회 의사록(2008-2012.8)

☐ 금융위원회 의사록(2008-2012.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제출 : 금융위 의사록(2008-2012.8)

노회찬 의원(무소속)

7. 최근 3년간 민원처리 점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0년

| 구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
| e-금융민원센터 관리·운영 | ○ e-금융민원센터 민원관리대장에 접수일 및 처리일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파악이 어려움 | ○ 민원 처리 진행상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인허가 및 등록신고 민원관리대장에 접수일 및 처리일 항목을 신설('11.2.16.) |
|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 ○ 민원만족도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 ○ 매주 민원답변 실태 수시 점검 - 민원답변 내용 점검 후, Feedback ('11.1월부터 매주(금)실시) ○ 민원처리담당자의 사기진작 방안 추진 - 반기별 민원처리 우수담당자 포상(3) 및 연말 민원처리 우수자에 대한 위원장 표창장 수여(1) 실시 |

○ 2011년

| 구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
| 불만족민원 추가답변 및 만족도 | ○ 불만족 민원 관리 필요 | ○ 매월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쏘부서 공개(e-portal 내부망 공지) - 불만족 민원의 추가답변 실적(우수(1)·부진(3)부서) 및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부서를 공지('11.1월부터 매월 실시) |

○ 2012년 : '12.12월 점검실시 예정

노회찬 의원(무소속)

8. 2012년 8월까지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의사록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 대부업정책협의회

| 회 차 | 일 시 | 회의안건 | 출석위원 |
|-----|-----------|--|--|
| 제1차 | '06.12.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운영방안 ○ 부처별 추진과제 |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제2차 | '07.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추진 ○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 실태조사 정례화 ○ 허위·과장광고 규제 |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조실 기획차장 |
| 제3차 | '07.1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 구축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홍보 강화 ○ 서민금융 공급 확대 |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
| 제4차 | '08.1.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관리감독상 지자체와 협력 강화 ○ 사금융이용자 실태조사 ○ 대부업법령 개정 |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차관,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공정위 사무처장 |
| 제5차 | '08.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담당과장, 행안부 담당과장, 공정위 담당과장 |
| 제6차 | '08.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법 개정 추진 ○ 제4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

| 회 차 | 일 시 | 회의안건 | 출석위원 |
|------|-----------|--|---|
| | |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
| 제7차 | '08.12.15 | ○대부업 관리·감독 우수 지자체 포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제4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차관보, 행안부 지역경제발전과장 |
| 제8차 | '09.3.30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 제9차 | '09.4.24 |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 금융위원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공정위 사무처장 |
| 제10차 | '09.10.15 |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실적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서면 회의 |
| 제11차 | '09.12.30 | ○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 | 서면 회의 |
| 제12차 | '10.4.28 |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 서면 회의 |
| 제13차 | '10.7.23 |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 서면 회의 |
| 제14차 | '10.11.03 |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

| 회 차 | 일 시 | 회의안건 | 출석위원 |
|------|-----------|---|---|
| | | ○대부업체 대출금리 및 불법광고 점검결과 |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 제15차 | '11.5.13 | ○'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 서면 회의 |
| 제16차 | '11.11.29 | ○'1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대부시장 최근 동향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 서면 회의 |
| 제17차 | '12.5.10 | ○'1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지자체 추 진상황 |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검찰국장, 행안부 차관보, 공정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 |

□ 회의 결과 : 별도 제출

노회찬 의원(무소속)

9. 2008년~2012년 8월말 현재 월별 햇살론 대출현황과 대위변제율

□ 햇살론 월별 대출현황 ('12. 8.31. 현재)

(단위 : 억 원)

| 구분 | '10.7 | 8 | 9 | 10 | 11 | 12 | 11.1 | 2 | 3 | 4 | 5 | 6 | 7 |
|-----|-------|--------|--------|--------|--------|-------|-------|-------|-------|-------|-------|-------|-------|
| 건 수 | 2,940 | 58,723 | 44,487 | 24,393 | 13,194 | 8,994 | 5,890 | 4,467 | 5,808 | 4,924 | 4,614 | 4,710 | 4,687 |
| 금 액 | 234 | 5,220 | 4,301 | 2,215 | 1,133 | 756 | 503 | 385 | 514 | 434 | 400 | 413 | 415 |

(단위 : 억 원)

| 구분 | 8 | 9 | 10 | 11 | 12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계 |
|-----|-------|-------|-------|-------|-------|-------|-------|-------|-------|-------|-------|-------|-------|---------|
| 건 수 | 5,145 | 3,975 | 3,953 | 4,042 | 3,882 | 2,732 | 3,322 | 3,788 | 3,546 | 4,203 | 4,352 | 4,619 | 6,210 | 241,600 |
| 금 액 | 465 | 353 | 307 | 326 | 320 | 227 | 276 | 316 | 296 | 350 | 361 | 388 | 532 | 21,440 |

□ 햇살론 월별 대위변제율 현황 ('12. 8.31. 현재)

| 구분 | '10. 12 | '11년도 | | | | | | | | | | | |
|----------|------------|-------|------|-----|-----|-----|-----|-----|-----|-----|-----|-----|-----|
| | | '11.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대위변제율(%) | 0.03 | 0.12 | 0.18 | 0.5 | 0.8 | 1.2 | 1.7 | 2.1 | 2.5 | 3.0 | 3.5 | 4.2 | 4.8 |

| '12년도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5.5 | 6.5 | 6.8 | 7.4 | 7.9 | 8.4 | 8.9 | 9.4 |

노회찬 의원(무소속)

10. 2008년~2012년 8월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현황과 연체율

□ 미소금융 대출현황, 연체율 ('12. 8.31. 현재)

○ 대출현황 : 35,495건, 4,795억원

○ 연체율* : 5.0%

* 납입대상자 중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자의 연체금액 기준

노회찬 의원(무소속)

11. 최근 3년간 청와대에 보고된 보고자료

□ 최근 3년간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일 시 |
|-----------------------|-----------|
|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 '09.12.16 |
|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 '10.12.14 |
|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 '11.12.30 |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11.6.29 |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 '12.2.27 |
|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 '12.7.19 |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2009. 12. 16



금융위원회

목 차

I. 2009년 업무계획 추진실적과 평가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2. 금년도 중점과제 추진실적
3. 성과와 반성

II. 2010년 대내외 금융여건 전망

1. 금융시장
2. 금융산업

III.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과 6대 중점 추진과제
2. 세부 추진과제

<제1과제>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제2과제> 기업 구조조정 강화

<제3과제>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제4과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5과제>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6과제> G20회의를 계기로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 (별도과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I. 2009년 업무계획 추진실적과 평가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 금년도 업무계획상 핵심과제로 설정했던 금융시장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구조조정 강화 등 대부분의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

○ 41개 세부과제 중 36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나 일부 과제 (5개)는 법률안의 국회계류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추진상황 | |
|-----------------------|--------|---|------|-----------------|
| | | | 정상 | 지연 |
| 1. 금융소외자 및 소비자 보호 | 10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담 완화, 금융소외자 지원 등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교육 강화 등 | 8 | 2 ¹⁾ |
| 2.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 7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회계제도 개선 등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신·기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자금공급 확대 | 7 | - |
| 3. 금융시장 안정 도모 | 12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안펀드, 증시안정펀드 운용, 외화유동성 지원 등 금융회사 자구노력 강화, 은행 자본 확충,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등 | 11 | 1 ²⁾ |
| 4. 금융 인프라 개선 | 8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상품 규제개선, 투자자 보호체계개선 등 발행공시 제도 선진화, KPI 제도개선 등 | 7 | 1 ³⁾ |
| 5. 글로벌 협조체제 및 녹색성장 지원 | 4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20 Action Plan 추진, 해외홍보 IR 등 녹색산업 금융지원 강화 등 | 3 | 1 ⁴⁾ |

1)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보호 강화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보험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2) 새로운 채권상품 도입 : 단기사채법 제정 추진중(입법예고 완료)

3)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 G-20 등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

4)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체결 확대 : 카자흐스탄·영국 등 상대국 내부사정으로 체결 지연(현재 협의 진행중)

□ 금년중 국회입법절차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주력하는 한편 세부과제의 충실한 이행 및 성과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

①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추진

① (금융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기반을 공고화

-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은행 외화표시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
- **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MMF 규제 개선 등

②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 되도록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정리 지원

- *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구조조정기금 조성·운용과 금융안정기금 설치근거 마련 등

③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 * 중기대출 만기 전액연장, 보증공급 확대(55.4조원),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 중소기업 외화환산 특례 적용 등

④ (기업구조조정)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위기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및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

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금융건전성 확보 및 주택시장으로의 급격한 자금유입 억제를 위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

- * (은행권) LTV 강화(수도권 60→50%), DTI 강화(서울 50% 여타수도권 60%)
- * (비은행권) LTV 강화(수도권 보험 60→50%, 기타 70→60%), DTI 강화(서울 50%, 여타수도권 60%)

② (외환 건전성 제고)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마련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강화, 외화파생거래 한도 신설 등

③ (국제협력 강화)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글로벌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FSB 운영위원 선출,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정회원 가입 등

③ 금변 위기로 금융이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① (서민금융 사각지대 최소화)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

* 재계 기부금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

② (금융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기금 등을 활용,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및 저금리 전환대출 등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09.11월말 현재, 개인워크아웃 82만여명, 약 26조원의 채무를 18.6조원으로 조정

* (신용회복기금) 09.11월말 현재, 채무재조정 7.1만여건(2,983억원), 전환대출 1.4만여건(1,317억원)

③ (기타) 영세상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등 추진

* 재래시장 등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09.1월) 등

④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금산분리 완화, 산은민영화를 위한 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 설립 등

※ 09년 주요 제도개선 실적 : 총 18개 법률 제·개정

① 금산법·자산관리공사법·공적자금 특별법 개정 : 금융안정기금·구조조정기금 설치 및 공자위 설치 등

②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금산분리 완화

③ 산은법 개정 및 정책금융공사법 제정 : 산은 민영화 등

④ 대부업법 및 여전법 개정 : 서민·중산층 보호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가. 업무추진 성과

①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주요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시현

○ 실물경제는 금년들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전기비)을 시현

* 09.3Q GDP 전년동기비 성장률(%) : 韓 +0.6, 美 Δ 25, 英 Δ 5.1, 日 Δ 5.1, 獨 Δ 4.8

○ 주가 상승 및 CDS프리미엄 하락 등 금융·외환시장도
안정세

* KOSPI : (08말) 1124.5 \rightarrow (09.11말) 1555.60 \rightarrow (12.15) 1665.85

* CDS프리미엄 : (08말) 316 \rightarrow (09.2말) 437 \rightarrow (09.11말) 104 \rightarrow (12.14) 86.5

* 08말 대비 주가 상승률(%12.14기준) : 韓 +48.1, 美 +19.7, 英 +19.9, 獨 +20.6, 日 +14.1

○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금융회사 및 기업의
자금사정도 빠르게 개선

* 은행채 스프레드(AAA, BP) : (08말) 222 \rightarrow (09.11말) 77 \rightarrow (12.14) 77

* 회사채 스프레드(AA-, BP) : (08말) 431 \rightarrow (09.11말) 111 \rightarrow (12.14) 110

* 08말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AA(α AA), 3y, BP) : (韓) Δ 250, (美) Δ 86, (英) Δ 172, (日) Δ 25

② 금번 위기사 보여준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해 외국계
기관 및 언론 등도 긍정적인 평가 (첨부1)○ 특히,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은 금융시장의 빠른
안정이 실물 경제의 견조한 회복에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

* IMF 09년 한국 연례협의(8월) :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정책 및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신용경색 및 경제침체를 효율적으로 극복

* OECD 경제전망(11월) : 자본확충, 무수익여신 및 부실자산 매입, 정책 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고,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

- ③ 이에 따라 최근 해외투자자의 우리경제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도 점차 해소되고 위기 직후 급격히 유출된 글로벌 자금도 빠르게 환류

* 09년중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 (억불, 괄호안은 시가총액대비 %, 12.14기준)
: 韓 237.9(3.0), 대만 129.2(1.9), 태국 12.0(0.7), 인니 11.5(0.5), 인도 167.9(1.3)

나. 반성

- ① 과거 외환위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여전히 단기 외화차입 증가 및 만기연장 애로 등 국내금융회사 외환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나타남
- 최근의 두바이 사태와 같은 대내외 금융불안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부문 건전성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
- ② 각종 금융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서민층은 아직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쉽지 않는 등 금융시장의 온기가 서민층으로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위기 전개과정에서 더욱 취약해진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을 배가할 필요
- ③ 당면한 금융위기 대응에 주력한 결과, 금융·기업부문 체질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위기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가운데 위기 이후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강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

<첨부 1> 금융정책에 대한 해외 반응 및 평가

1. 국제기구

① IMF(미션브리핑 결과, 12.8일)

- 금융·재정·통화정책 대응은 민간수요 주도 경기회복의 발판이 되었으며,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조치를 환영한다고 언급

② OECD (경제전망, 11.19일)

- 적극적 유동성 공급과 함께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입 등 금융 안정 대책 등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면서 빠른 회복 시현

2. 주요 외신

① Business Week (11.11일)

- 한국경제는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

② Wallstreet Journal (8.3일)

- 정책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한국의 경기지표가 빠르게 개선

3. 국제 신평사 및 외국계 투자자(IB)

① Fitch(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9.2일)

- 경기침체에 대응한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으로 외화유동성 및 거시경제지표 개선

② Morgan Stanley(9.3일)

-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 등으로 거시경제여건이 빠른 속도로 회복

II. 2010년 대내외 금융여건 전망

1 금융시장

가. 국제 금융시장

- ①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기관 | 전망시기 | 세계 | | 미국 | | 유로 | | 일본 | | 중국 | |
|------|------|------|------|------|------|------|------|------|------|------|------|
| | | 2009 | 2010 | 2009 | 2010 | 2009 | 2010 | 2009 | 2010 | 2009 | 2010 |
| IMF | 10월 | △1.1 | 3.1 | △2.7 | 1.5 | △4.2 | 0.3 | △5.4 | 1.7 | 8.5 | 9.0 |
| OECD | 11월 | △1.7 | 3.4 | △2.5 | 2.5 | △4.0 | 0.9 | △5.3 | 1.8 | 8.3 | 10.2 |

- ②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불안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 최근 두바이월드 채무상환 유예 요청(11.25일)으로 인해 그간 금융 시장 호조세가 반전 또는 둔화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상존

* 두바이 사태 익일 유럽 주요국(英·獨·佛) 증시 전일대비 3% 이상 급락

- 美 상업용 모기지 부실 확대에 의한 중소형 은행 파산 증가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美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09.9월 현재 고점대비 42.9% 하락)과 모기지 연체율 상승 지속(07.3분기 2.00%→09.1분기 6.45%→09.3분기 8.74%)

- 유가 상승, 달러가치 하락 및 글로벌 금리 상승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나. 국내 금융시장

① 주식시장은 국내외 실물경기 개선과 함께 기업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낙관적 전망이 우세

* 500대 국내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FNguide, 09.12.14기준)
: ('09) 61조원 → ('10) 82조원 (34.4% 증가)

○ 다만, 글로벌 금융불안재개 및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가능성 등 약세 요인도 함께 있는 상황

② 채권시장은 국채발행 축소 및 견조한 외국인 투자증가세 등 원활한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

* 국고채 순발행규모가 축소('09년 : 52조원, '10년 : 38조원)되고,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국채지수 편입 시 외국인 투자도 100~200억\$ 유입될 것으로 예상(기획재정부, 09.6월)

○ 특히, 회사채 발행은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신용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어 호조세를 보일 전망

* 회사채(AA-3y,bp) 스프레드 : (08.9월)202 (09.3월)219 (6월)123 (9월)114 (11월)111 (12.14)110

○ 다만, 선진국의 금리 조기 인상 및 신용경색 재연 등에 따른 기업 자금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상존

③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에 따라 대체로 안정세 지속 전망

* VIX : (08.9월)39.4 (09.3월)44.1 (9월)25.6 (10월)30.7 (11월)24.5 (12.11)21.6

○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캐리 트레이드 추세가 반전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① (수익성)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 여건은 금년에 비해 대체로 개선추세를 보일 전망

- 은행은 대출금리 상승 및 고금리 수신 만기도래 등에 따른 예대마진 개선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금융투자회사는 증시회복에 따른 고객예탁금 증가, 주식형 펀드의 자금순유입 전환 등을 통해 수수료 수입 호조 전망

| | 08.4Q | 09.1Q | 09.2Q | 09.3Q | 09.11월 |
|-----------------|-------|--------|---------|---------|--------|
| * 고객예탁금(기말, 조원) | 9.2 | 12.9 | 12.7 | 13.8 | 12.3 |
| * 주식형펀드(기종, 억원) | △609 | △1,007 | △13,830 | △49,865 | +2,386 |

- 보험사는 실물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보험료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본시장 호조 등으로 자산운용수익률도 다소 개선될 전망

- * 수입보험료 : FY06 94.6조 → FY 07108.4조 → FY08 110.45조
- * 자산운용수익률 : FY06 0.97% → FY07 1.07% → FY08 0.49%

<당기순이익 추이>

| | 08.3Q | 08.4Q | 09.1Q | 09.2Q | 09.3Q |
|------------|---------|-------|-------|-------|---------|
| * 은행(조원) | 1.5 | △0.5 | 0.6 | 2.1 | 2.3 |
| * 증권(조원) | 0.9 | 1.4 | 2.0 | 1.1 | 1.9 |
| * 자산운용(억원) | 1,304.8 | 596.4 | 574.4 | 960.7 | 1,718.2 |
| * 보험(조원) | 1.8 | 2.0 | 1.9 | 1.2 | 2.5 |

② (재무건전성) 금융회사의 수익성 개선 및 자본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재무건전성 추이>

| | 08.3Q | 08.4Q | 09.1Q | 09.2Q | 09.3Q |
|----------------|--------|--------|--------|--------|--------|
| * 은행(BIS 비율) | 10.86% | 12.31% | 12.94% | 13.74% | 14.07% |
| * 증권(NCR 비율) | 538.5 | 584.2 | 617.2 | 584 | 557.9 |
| * 자산운용(NCR 비율) | 534.7 | 564.8 | 532.0 | 489.6 | 456.6 |
| * 보험(지급여력 비율) | 204.3 | 220.4 | 230.7 | 245 | 261.9 |
| * 저축은행(BIS 비율) | 8.5 | 9.4 | 9.7 | 9.53 | 9.58 |

③ (리스크요인) 시장쏠림의 재연, 중소기업 여신부실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 금융산업 불안요인 잔존

-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융회사간 외형경쟁과 쏠림현상 재연 가능성
- 또한 금리상승, 기업구조조정 지속 및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우려

* 연체율(은행) : 1.08%(08년말) → 1.19%(09.6월말) → 1.17%(10월말)

* 부실채권비율(은행) : 1.14%(08년말) → 1.51%(09.6월말) → 1.52%(10월말)

- 대내외 불안요인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추가부실화 가능성도 잠재

* 총대출 대비 비중 : 50.5%(08.6월) → 50.2%(08년말) → 50.6%(09.6월말)

〈 종 합 〉

- ◇ 대내외 경기 회복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여건도 대체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
- ◇ 다만, 미국·유럽 등의 소비 및 고용부진 지속 등에 따른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과 과도한 정부부채 등 경제기초체력 취약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글로벌 불안요인이 잠재
- ◇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착실히 뒷받침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선진일류국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

Ⅲ.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과 6대 중점 추진과제

□ 내년도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은

- G-20 개최 의장국의 위상에 걸맞게 조기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위기 이후 미래를 대비한 금융선진화 노력을 강화하여
- 따뜻하고 강한 선진 일류 금융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둘째,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체질 개선 유도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
- 셋째, 위기 전개과정에서 노출된 금융시스템상의 취약 요인을 재정비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
- 넷째, 제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
- 다섯째, 위기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는 등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
- 여섯째, G-20의 의장국으로서 높아진 국가위상을 활용,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

따뜻하고 강한 선진일류 금융으로의 도약 기반 구축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

|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기업 구조조정 강화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 G20개최를 계기로 금융의 글로벌 위상제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공급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금공급확대 ▪ 녹색금융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 뒷받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건전성감독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 외부충격대비 비상계획수립 ▪ 예금보험 기능 강화 ▪ 단기자금 시장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건전·내실 경영 정착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영업규제 개혁지속 ▪ 금융공기업 민영화 촉진 ▪ 선진금융 인프라 구축 ▪ 금융선진화 비전 및 발전전략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 금융지원확충 ▪ 저신용층 신용회복 지원강화 ▪ 중산서민층 금융이용부담 완화 ▪ 금융소비자 보호 획기적 제고 ▪ 금융교육 내실화 ▪ 저출산·고령화 대비 금융 역할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강화 ▪ 특화된 금융 중심지 육성 ▪ 금융 글로벌화 적극 추진 ▪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 협력 강화 ▪ G20 의장국에 걸맞는 금융 감독 서비스 선진화 |

제1과제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투자자금 등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도 활성화

가.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

①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

- 산업은행 9.5조원, 기업은행 8.0조원, 정책금융공사 1.35조원, 신·기보 3.7조원 등 총 23조원의 설비 금융을 공급

* 08년 23조원, 09년 19.4조원(11월말기준) 대비 3.6조원 증가

②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자금을 공급

-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 전체적으로 93.7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

* 08년 80.6조원 대비 13.1조원 증가, 09년 위기지원시 대비 5조원 감소

- (국책은행) 기업은행 29.0조원, 산업은행 10.0조원, 정책금융공사 2.1조원 등 총 41.1조원을 공급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2.6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③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 2010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보증 만기연장 조치를 유지 하되(Fast-Track도 10.6월까지 연장), 자생력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
- 09년에 상향된 보증비율(일반기업 95%, 핵심분야 100%)은 내년초 부터 점차 하향조정하여 '10.7월부터 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

* (기존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10.1월부터)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④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

- (정책금융공사) 민간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을 활용 하는 간접대출(온렌딩(On-lending) 방식) 확대를 통해 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보증기관)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시 기업에 대한 기보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

* 기보가 해당기업 경영진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연대보증 의무를 완화

- 은행의 보증부 대출금리 적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추진

* 은행의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대출총액중 신용위험이 없는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위험 가산금리 부과여부를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

나.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금공급 확대

① 회사채 등 증권발행여건 개선

- 회사채 공모시 기업실사 및 인수실적 공개 등을 통해 주관사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발행가격 결정관행을 개선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 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 구축 등 채권 유통체계를 개선
- 적격투자자 대상 발행·유통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증권 신고서 제출 등)를 면제하는 등 적격투자자(QIB) 제도를 도입
- 원유·원자재·녹색 ETF 등 다양한 형태의 ETF 및 파생 결합증권의 개발·공급 활성화를 유도

②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자금 조달 지원

- 新성장동력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제도 개선, 진입·퇴출 요건 완화 및 IR 확대 등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상장 우량기업이 신속하게 공모자금을 조달·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 SPAC 공시심사 지침 마련, 합병실패 위험·경영진과 이해상충·피합병 법인 사전 지정 등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③ 중소·중견기업 투자 펀드 등 자금공급 수단 확충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설립 추진
- 중소·중견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다. 녹색금융 활성화

① 녹색기업 인증제 시행('10년부터)을 계기로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 녹색예금·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

*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등(현재 조특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 금융공기업의 정책금융을 녹색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등을 마련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 (09년)최대4.3조원 → (10년)최대5.0조원

② 10년부터 시행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에서도 착실히 지원

- 녹색금융지원을 '녹색기술·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탄소 저감 사업'으로 적극 확대

- 온실가스 저감 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ESCO)에 대해 저리자금지원, 신용보증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

* (예시) CO₂ 포집·저장·활용 플랜트 설치,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설치, 기업간 용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등

-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PF대출 보증 및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보증료 우대 실시

◇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기업 체질개선을 지속 유도**① 시장의 잠재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체질개선 유도를 위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강화**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 시 평가기준에 현금흐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

-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추진

② 제도개선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 뒷받침

- PEF 규제완화(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포함)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지원체계 마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10년말 종료) 연장

-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희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 ◇ 위기 발생시마다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으로 지적된 **유동성 및 외환분야** 등 잠재된 취약요인에 선제적 대응체제를 보강
 - 특히, 위기재발방지를 위해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하여 건전성 규제체제를 재정비
- ◇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계를 개편

가.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① 은행예대율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을 마련

* 10년부터 CD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금변위기과정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추진

- 은행권에 대해 외화유동성비율, 외화파생상품에 대한 신용 리스크 관리강화 등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방안***을 시행

* 외화유동성 비율 강화, 중장기재원조달 비율의 단계적 강화, 외화파생 상품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외화안전자산 최소보유비중 설정 등

- 은행권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비은행권에 확대 적용
- 국제 논의를 보아가며 **외환분야 레버리지 규제** 도입 검토

③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를 지속
 - 주택담보대출의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발생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나. 건전성 감독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① 국제 논의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

<FSB/BCBS 등에서 논의중인 과제중 도입 검토 대상 예시>

- BIS 자기자본비율과 함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보통주 중심의 Tier1 비율 등)한 자본적정성 규제 제도
-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적 자본적립 제도 및 장기예상 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제도
- 조건부 자본* 등 추가적인 자본확충 수단의 도입방안
- 레버리지 비율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 제도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를 지정하여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

* 추가적 자본·유동성·레버리지 규제의 강화 등

②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개편

- FSB가 권고한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 및 이행기준*」에 맞추어 동 이행기준의 국내도입방안을 추진

* ①보장상여금 및 퇴직상여금 제한, ②보상금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 설정, 비현금 지급의무 등을 통해 보상과 장기성과와의 연계, ③ 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변동보상 지급상한 설정, ④ 공시 및 감독강화 등

- 기본적으로 현행 단기성과위주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와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도록 개편
- 국내 임금구조 및 관련 법제, 선진국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4분기 중 국내 금융업권별로 모범 기준을 마련·시행

③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을 제정하고 금감원의 위험평가에도 반영하여 단기 유동성 관리 강화
- (보험회사) 획일적 위험계수 대신 회사별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위험기준자기자본 제도(RBC)를 내실화
- 글로벌 기준 및 위험요인별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보험 회사 통합리스크 산출기준 개선을 검토

다. 외부충격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 마련

① 시스템리스크를 적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 금융시장 조기 정보모형(EWS)의 개선 추진

② 외부충격 단계별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마련

- 금번 글로벌 위기대응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contingency plan) 준비 필요성을 절감
- 이에 따라 다양한 외부충격의 형태를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과제와 계획을 수립
 - 외부충격이 시장별·금융주체별로 미칠 파급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금융당국과 재정당국간 협력과제 및 대응체계를 미리 정립할 필요
 - 비상상황에 대비한 은행별 비상자금 조달계획 수립 및 충분한 양질의 유동성 자산보유 의무화 등 포함

라. 예금보험기능 강화

- 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관리 외에 부보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시·지도(risk adviser) 등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
 -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평가 강화
 -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기능을 강화
 -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경영개선계획 심의 등 적기 시정조치 과정에 조기 참여하여 정리비용 최소화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단기적·사후적 점검 방식에서 장기적·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전환
- * 단기성장보다 장기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무목표 및 임원보수체계를 장기성과와 연계하도록 개편하고, MOU 정밀점검 도입 등 점검방식도 개선
- ② 금융신상품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 예금범위 등을 개선
- ③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차질없이 시행(2014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차등평가 기준 개발, 연도별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

마.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①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조달이 콜시장(1일물 무담보 콜)에 편중되어 신용경색 등으로 콜시장 위축시 전체 금융권의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 우려

- 선진국과 달리, 채권 등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시장(환매 조건부채권(RP)시장)이 미발달하여 채권시장 활성화 및 담보 관리 등 다양한 금융업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

⇒ 따라서 위기 재발시 리스크를 완화하고,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대책 마련(현행 콜·CP시장위주 → RP·단기사채시장 육성)

① RP시장 활성화를 통해 채권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유도

- ※ 자산운용사 등의 RP 매매 관련 규제완화, RP 시장 참여기관 확대, 각종 거래 인프라 개선 등

② 금융회사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③ CP(기업어음) 거래수요는 전자화된 단기채권으로 흡수하여 시장 투명성 강화, 자금조달의 신속성·적시성 제고

- ※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CP와 유사한 발행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유통성은 더욱 강화된 단기채권 도입 등

-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 영업규제 개혁, 금융인프라의 개선 및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지속 추진
 -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장단기 발전전략을 마련

가.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을 유도

- ①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 유도
-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금유치·자산확대 등 무리한 외형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구조조정기금(10년 10조원 한도 조성 계획)과 민간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
- ②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강화 유도
- 각 금융회사별 정기적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
 - 리스크 관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고 은행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 관리 평가체계 정비 및 통합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

③ 금융회사의 경영효율화와 수익기반 확충 지원

- (은행) 신상품 개발 및 새로운 수익원 확충과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 강화를 유도
- (증권회사) 수익구조를 위탁매매 위주에서 IPO, M&A 등 IB 업무로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업재무안정PEF 및 SPAC 시장 활성화 등

- (자산운용사) 펀드 합병절차 간소화 및 등록유지요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규모 펀드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수익성 제고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① 은행권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해상충 방지요건 강화 및 활동내역·평가 공시
- 임기상한 설정, 겸직금지 및 순환보직제 도입 등 추진
-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10년 주총부터 적용

②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현행 등기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확대 적용

*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해임·면직된 경우 5년간 임원자격 결격 등

다. 영업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 추진

①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감독은 국제논의 흐름에 맞추어 강화해 나가되,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완화

- 금융위원회내에 매분기별로 금융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운영하여 금융규제 정비과제를 발굴·개선

② 금융업 신규진입 및 업무범위 확대

- 시장리스크와 투자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 신규진입 및 업무확대를 단계적으로 허용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11→6단위)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 (현행) 서울 경기/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 충북
→(변경)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 자기자본기준 변경(장부상기준→BIS 기준) 등

-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변화

- 단위신협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신협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 분산 유도

* 중앙회의 대출한도 : (현행)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초과분
(개선)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50% 초과분

③ 영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

- 금융상품 투자성격의 출자 및 투자시* 금산법상의 승인면제 등 규제를 간소화

* 例 : 금융회사의 뮤추얼 펀드 및 PEF의 LP투자 등

- 그동안 금산법상의 제도운영(법 §24)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공표

- 신탁법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수탁가능 재산 및 업무 위탁규제 등 신탁업 감독제도를 대폭 정비

* 새로운 유형의 신탁도입 및 신탁규제 유연화 등

- 겸영신탁회사의 부동산 신탁 취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

라.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기업 매각 촉진

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가속화

- 지배지분매각은 합병, 다수에 대한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검토하되
 -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기타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조속히 매각 추진

② 산업은행 민영화를 착실히 준비

- 본격적인 민영화 착수이전에 글로벌 추세에 맞는 비전을 정립하고 체질 개선을 우선 추진

③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의 본격 추진

- M&A시장 여건 및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12개 구조조정기업중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

*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 상기 민영화 및 지분매각은 자본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

마. 선진적 금융인프라의 구축

① 기업신용평가의 품질과 투명성 제고

- G20 등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신용평가사 표준내부통제기준(09.10.2일)

-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평가직원의 순환보직,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 금지, 등급평가 위원회 설치 등 포함

- 신용평가회사별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공시체계*를 강화하여 신용평가 회사간의 질적 경쟁 유도

* 평가과정 및 방법, 평가회사간 평가결과 비교 등을 포함

②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부정적 정보(연체정보 등) 위주의 평가관행을 개선하여 긍정적 정보(상환 실적 등)를 신용도 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

- 개인의 정확한 신용도 산정을 위해 합리적 신용정보 관리·활용 체계 수립

- 특히, 현행 신용정보 활용 기준*을 재정비하여 신용등급 산정의 신뢰도를 제고

* 연체 기간, 연체 금액, 현금서비스 등 대출 실적, 신용정보 조회기록 등

- 다양한 공공정보를 신용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 정보범위 및 제공절차를 마련
- 신용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정보 오·남용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③ 국제회계기준(IFRS)의 차질없는 도입 등 회계제도 개선

- 'IFRS 정착 추진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부담 경감방안 등을 지속 추진
- 연결중심·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특성에 맞춰 연결감리 확대 등 회계감리 제도를 전면 개편
-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품질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인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추진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마련

-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 설립 등 제도개편 방안 마련

* CCP를 통한 장외 파생상품 청산(G20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CCP 설립·감독 방안을 마련(12년까지 CCP 설립 예정)

바.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① 금번 금융위기로 성장전략에 한계를 노출한 외국과 달리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 우리나라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

-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한 금융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성장전략 수립에 예측가능성을 제고

* (예시) 규제완화 →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
겸업화 → 전업주의 논의 대두
대형화 → 레버리지 규제를 통한 무분별한 대형화 억제
증권화 → 과도한 증권화 억제 및 공시 강화

- 금번 금융위기로 경쟁상대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 미국·영국 등 금융강국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어 있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신흥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② 이를 위해 지난 '09.7월부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중

- ①금융시스템 안정화, ②금융시장 효율화, ③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금융인프라 선진화 등 4대부분 과제에 대해 선진화 전략을 연구
-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권역별 특성분석(SWOT)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마련·추진

③ 내년 1월중 작업결과를 발표(3개 연구기관 공동)하고

- 금융시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금융위내 금융선진화를 위한 합동회의 운영)한 후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정책화를 추진

제5과제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을 완화
-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집행체계를 실효성있게 정비하고 금융교육을 내실화

가. 서민층 금융지원 확충

① 미소(美少) 금융의 성공적 착근

- ① 자활의지가 있으나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

* 지역·기업법인을 전국적으로 설립(향후 200~300개 목표)하여 접근성 제고

- 금융지원, 신용관리 교육, 맞춤형 창업·운영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 ② 미소금융사업자에 대한 공통업무 매뉴얼 제공^{*}(12.3일) 및 실무진 교육강화 등 내실있는 운영 도모

* 설립예정 지역법인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배포 및 집합교육 실시중(12.3~4, 14~18)

- 미소금융 사업자간 정보연계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공유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 특히 서류심사, 면접, 현장심사 등 밀착형 대출심사와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미소금융 사업이 초기부터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소액보험의 지원규모·대상 확대 및 다양한 보장 등을 통해 불의의 사고 발생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09년중 휴면보험금(40억원)을 재원으로 6,800명의 차상위계층 빈곤아동·부양자(한부모, 조손 가정 등)의 상해·생명보험 가입 지원

③ 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공급기능을 활성화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 제고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 역량을 강화
-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이 서민 대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④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하여 대부업체의 건전영업 유도

-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영업방식의 투명성**을 제고

*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 범죄조직 관련 처벌받은 자 등 종사자 결격요건 확대 등

** 제3자 담보제공시 확인의무 신설 등

- 시장영향이 큰 대형업체*의 영업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관리감독 시스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100개) 비중이 전체 대부업체(15,723개사) 대출금액의 86.8% 차지('09.3월말)

나.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①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제도 선진화

○ 고금리(20%이상) 채무를 저금리(12%내외)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신용회복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7등급→6등급이하)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만명) : ('08.12) 227 → ('09.3) 221→ ('09.6) 211 → ('09.10) 202

-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금융지원 확대

○ 개인회생·파산 신청전 사전상담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체계를 선진화

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부담 완화

① 가계대출 관련 금융비용 경감

-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유도하여 가계의 금리변동 리스크 부담 경감

* 은행별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에 대한 점검 강화

- 연체이자·가산금리 부과체제 개선 유도

-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한편넣기'로 변경하고 공휴일이 낡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가계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례 방지

- 금융회사의 대출실행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대고객 정보제공·설명 노력 강화를 지도

- CD금리연동 대출의 지나친 편중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금리를 개발토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토록 유도

②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및 공시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점 수수료 상한제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저신용층이 다수 이용하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사별 금리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체제 개선

③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기존펀드에 적용토록 유도

* 펀드 판매보수 : (현행) 연 5% → (개선) 연 1%
펀드 수수료 : (현행) 5% → (개선) 2%

- 펀드 보수·수수료 체제를 개편*하고 펀드발행 분담금 제도를 개선**

* 판매 보수제 대신 계좌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주요국 사례조사를 통해 발행 분담금 부과 주체 및 기준 개선

- 한국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거래관련 수수료 인하 등 수수료체계 개편작업을 차질없이 시행

④ 대부업체 고금리의 점진적 인하 유도

-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효율화 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고금리 인하 환경 조성
- 대형대부업체의 불법 중개수수료 단속을 강화하여 금융 이용자 부담완화

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획기적 제고

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에 걸맞게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를 재정비

○ 내년 상반기중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전반에 걸쳐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예시) 상품공시, 판매, 약관, 광고 등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감독행정체계를 보강

- 금융위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독립본부로 격상된 금감원의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확충하고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인력을 보강

* 예시: 민원정보를 감독에 적시반영하는 등 민원의 피드백 강화

- 금감원의 분쟁조정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확대

②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속 개선

○ 자본시장법상의 소비자보호장치(적합성원칙,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를 보험분야 등에 추가 적용

○ 민원다발분야인 보험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민원발생의 구조적 감축 유도

-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대폭 강화

* 예시 : 광고기준을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수입보험료의 20%까지) 부과

- 보험 판매채널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제재를 받은 법인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 다른 대리점 임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인대리점의 공사보고의무 강화

* 보험대리점 소속 임원·모집사용인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 제재근거를 마련

③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공시감독도 강화

○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등 공시위반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 추진

* 유통공시 위반에 대한 행위자 과징금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예정

○ 현물·선물 연계거래 및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법적 구성요건 등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④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사채·불법 추심 등의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운영을 통해 피해상담·신고·구제 등을 한자리에서 제공(One-stop 서비스)

마. 금융교육 내실화

① 투자자 보호재단의 기능을 확충하여 금융교육기능을 강화

- 금융상품·금융회사 등에 대한 소비자 평가업무(Consumer Report)도 수행

② 금융교육 추진 네트워크를 활성화

-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의 금융교육 추진협의회를 재정비·활성화
-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강사 풀(pool) 구축, 교육자료 공유 등 교육여건을 제고하고 교육인원도 확대

* 금감원, 금융회사, 협회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

③ 금융유관기관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교육 실시

- 금감원 및 금융교육 유관기관을 통해 주부, 직장인, 어린이·청소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교육 실시
-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농·어민, 실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
- 초·중·고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학생·교사 등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제고

① 고령층의 노후대비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

- (은행) 고령층의 실버타운 거주 활성화를 위해 실버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역모기지’) 제공 (‘10.7월부터 실시)
 - * 현재 실버타운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
- (보험) 노후생활대비 개인연금보험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지원방안 강구
- (신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형 신탁제도 마련
 - * 경제적 취약계층 등이 신탁 가입할 경우 신탁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최소금액 보장 등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강구

②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유도

- (은행)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 * 일정수 이상(예 : 3명) 자녀보유 가구에 대해 예금금리 추가제공 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인하 등
- (보험)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 할인
 - * 교육 및 생존보험 등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할인 등
- (펀드) 자녀교육비 저축 목적용 펀드를 활성화
 - * 영국은 Child-Trust Fund 제도를 ‘05년부터 도입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등 세제지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
- 글로벌 시각에서는 아직 한국금융의 위상이 낮음(첨부2)

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①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과 FSB 등 국제회의시 선진·신흥국간 가교역할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그간의 실적) 금융위는 FSB에서 신흥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이슈인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여 다수 회원국의 공감대 형성(09.9월)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선진·신흥국의 공통의제 발굴, 주요 의제에 대한 국가간 이견 조정 등에 적극 기여
- 특히, 금융분야 의제에 대한 국제적 의견 수렴을 위해 아시아 국가 금융당국간 상시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

* FSB 아시아 회원국간 대화채널을 우선 추진하되, FSB 비회원국 등으로의 확대도 검토

② FSB(금융안정위원회),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각종 금융분야 주요회의도 G-20 회의준비와 연계하여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G20 회의의 한국개최와 연계한 FSB 총회 한국 개최 추진

나. 한국금융 바로 알리기(IR) 노력 강화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WEF(세계경제포럼)등과 같은 해외 금융관련 지수 평가에 적극 대응

- 우리 금융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와 최신통계자료 등 제공

* 금융위, 기재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② (한국금융바로알리기) 해외언론·IB·신평사 등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 강화

- 부정적 기사와 보고서 발표후의 사후적·방어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적극적 IR활동을 전개

- 단기적 해외투자자금 유치보다 주요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 신뢰확보에 중점

- 이를 위해 해외 주요언론, 애널리스트 및 여론주도층 인사 등으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 정확한 정보의 선제적·적극적 제공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가능성을 차단

* 주로 해외관심사항 등에 관한 정례적인 컨퍼런스콜 및 금융 관계기관 합동 글로벌 IR 행사 등 활용

- 위기상황 발생시 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신뢰관계 구축

다. 특색있는 금융중심지 육성

①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을 자생력 있는 금융특화지역으로 육성

-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부이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
- 해외 우수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해외 금융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 예: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도입, 금융회사의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유도 등

② 금융위기 이후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 파생상품과 자산운용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보완·발전

*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회장 (09.11월) : 한국은 파생상품이나 자산운용 같은 분야에 특화하면 "아시아의 시카고"가 될 수 있을 것

③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

- 시장수요를 보다 철저히 분석, 정밀한 금융인력 수급전망을 통해 향후 금융인력 양성 정책방향 마련
- 금융 MBA과정, 실무금융인력 양성사업 등 지원을 통해 녹색금융, 퇴직연금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육성

라. 금융의 글로벌화 적극 추진

① 금융위기 극복과정 등에서 축적된 금융 노하우(know-how)를 신흥국에 전수

- 금융·기업구조조정과 시장안정 조치, 부실자산정리 경험 등을 신흥국에 전수
- 한국형 증권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을 확대하여 아시아 역내증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증권업의 해외진출 지원
 - * 라오스 및 캄보디아 거래소 설립 지원,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10년이후 지속 추진)
 - ** 향후 남미, 중앙아시아 등 증시관련 시스템개선 수요 발생시 사업수주 적극 추진
- 우리의 공적 신용보증 시스템 운영 경험 등을 전수하여 신흥국의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개발을 측면 지원

②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 인프라 및 플랜트건설 관련업체 등 제조업과의 동반 진출 모색
 - 제조업체 기진출국 및 증시인프라 수출국 등을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 해외진출 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정부와의 협의 강화
- 금융회사 진출 희망국의 현지법령·시장정보 등의 적기 제공 및 필요시 해당국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

- 싱가포르·일본 등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방안 모색

* 양국간 펀드 등록 및 상장 절차 등을 완화하여 상호진출을 활성화

- 해외진출 은행의 현지화 촉진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외진출 사전감독 시스템 정비 및 사후감독 강화

마.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 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09.10.14일)으로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일원으로서 활동 가능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32개국(OECD국가 25개국), 2개 국제기구로 구성

-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여,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 ②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일부 국제기준 미달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인하 등 제도개편 추진

* 현행 2천만원(외화거래 1만불)인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

- ②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편

바. 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는 금융감독서비스 선진화

① 금융감독 · 검사 관행 및 행태 개선

-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감독 · 검사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 · 검사행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 금융위 · 금감원 · 예보 · 정책금융공사 등의 업무수행 행태 · 방법 등에 대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시
- 평가 결과 및 주요 시정조치 사항은 대외공표

②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투명성 · 실효성 제고

- 제재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신분적 제재 방식에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방식으로 점차 전환

③ 기능별 감독 및 검사 강화

- 겸업화 및 부수업무 확대 등에 대응하여 권역별 · 칸막이식 감독 및 검사에서 탈피하여 권역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④ 검사서비스 품질제고 추진

- 상시 감시업무의 충실도 제고 및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평가 강화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 강화
- 검사품질관리제도(Quality Assurance)를 도입, 상시감시 및 감사업무의 적정성을 제3자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첨부 2>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금융

- ◇ 낮은 글로벌 위상, 외환위기 낙인효과 등에 따른 불안감 등 한국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며 여러 취약요인이 지적되고 있음

① 낮은 글로벌 위상

○ 금융부문 글로벌화가 아직은 초보적 단계

- 국내 은행의 국제화 지수*가 낮은 수준이며,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플레이어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

* TNI (Trans National Index): 韓 4.3%, 美 24.7%, 英 40.3%, 獨 42.7%, 佛 37.5%
($TNI = [(海外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 \div 3$)

** 세계 1000대 은행수(개) : 美 159, 日 97, 中 52, 인도 32, 대만 28, 韓 10

○ 그간 글로벌 금융협력 논의시 수동적 참여에 그치고 주도적 역할은 아직 초기 단계*

* 금융안정위원회(FSB)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규제설정자로서 역할 등

○ 이에 따라 금융부문 국제 경쟁력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평가도 낮은 수준

* WEF 금융발달지수 09년 55개국 중 23위

* IMD 국제경쟁력 평가(금융부문)는 09년 57개국 중 33위

②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의 가시적 성과가 아직은 미흡

○ 금융시장규모, 생활환경 · 법률 등 인프라, 금융전문인력 등의 측면에서 그간의 금융중심지 추진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 GFCI 순위(09년) : 런던(1), 뉴욕(2), 홍콩(3), 싱가포르(4), 서울(35)

③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 높은 대외의존도, 외환위기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으로 한국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
- 특히, 리먼사태 이후 국내금융시장의 여건이 양호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 및 외신 등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 불안을 증폭
- * 피치 (08.11월) :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stable→negative)
- * S&P (08.10월) : 국내 7개 금융회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stable→negative)
- * FT (08.10월) :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율, 대외채무, 민간부채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 제기 ("Sinking Feeling")

④ 금융 감독에 대한 낮은 신뢰

- 글로벌 투자자들은 종종 비일관적이며 경직적인 금융 감독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

⇒ 외국인 우려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과 함께 한국 금융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그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고 우리 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

① 금융위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사업 적극 참여

(금융위·금감원·금융공기업)

-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지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 기관별로 「중대형차 홀짝제 운행」, 「10% 에너지 절감」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홍보전광판 심야소등, 경차·하이브리드카 구입, 적정 냉·난방 온도 관리(동계 19℃, 하계 27℃) 등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

-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여 절감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

* 에너지-사랑+ 캠페인 :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대기 전력 차단 등)에 따른 절감실적이 5% 이상일 경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적립

* 09년중 우체국, 이마트, 국민은행 등 민간·공공기관 8,700여개 건물 참여

- 특히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LED 조명*에 대한 투자를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확대**

* 소비전력 및 수명 비교 : (할로겐)20~75W, 3,000h (LED)3~17W, 50,000h

** 현재 산업은행 등에서 일부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내년부터 교체규모 확대 예정

② 민간 금융권의 에너지 절감노력 확산 유도

- 국내외 금융권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자율적 에너지 절감 계획을 시행토록 유도

※ 국민은행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

(KB-CEMS, Carbon dioxide Emission Management System)

- 본점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물자 사용량 정보를 수집한 후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계
- 탄소배출관리지침을 통해 전기, 자동차유류 등 이용량 절감

※ 美 HSBC의 Eco Branch (태양광 시범점포)

- 태양광 발전설비를 영업점에 설치하여 해당 영업점을 이용하는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모델 역할(넛지 효과*)

* 넛지효과(Nudge Effect) : 모범사례에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부드러운 개입효과

③ 친환경 금융상품 보급 확대

- 금융상품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친환경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친환경 금융상품 예시

- (예금)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에 ATM 수수료 등 면제
친환경 차량(LPG, 하이브리드카 등) 소유고객 금리 우대
- (대출) 경차보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출금리 감면
- (보험)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보험료 감면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2010. 12. 14



금융위원회

목 차

I. 2010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2. 금년도 중점과제 추진실적
3. 성과 및 미흡한 점

II. 2011년 대내외 여건 전망

1. 대외 여건
2. 대내 여건

III.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제1목표>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과제①]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과제②] 실물경제 지원 강화
2. <제2목표>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과제③]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과제④] 서민금융 내실화
3. <제3목표>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과제⑤] 금융시스템 선진화
[과제⑥] 글로벌 경쟁력 확충

I. 2010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 금년도 업무계획상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위해 선정했던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현재 31개 세부과제 중 30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며, 1개 과제는 법률안 관련 의견조정 등으로 다소 지연

<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추진상황 | |
|---------------------|------|--|------|----|
| | 개수 | 주요 내용 | 정상 | 지연 |
| 1.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5 |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보증만기 연장 등 | 5 | - |
| 2. 기업구조조정 강화 | 1 | ■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 1 | |
| 3.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4 |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예금보험기능 강화, 단기자금시장 개선 | 4 | - |
| 4.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7 |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마련 ■ 국제회계기준 도입, 장외파생제도 선진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공적자금 투입 기관 및 구조조정기업 매각 | 6 | 1* |
| 5.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9 | ■ 미소금융, 서민금융, 신용회복 지원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 고령층의 노후대비 금융수요 충족 | 9 | - |
| 6.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 5 | ■ G20 성공적 개최 지원 ■ 금융 글로벌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 선진화 | 5 | - |

*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입법 지연

□ 금년 남은 기간중 당초 계획했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

- * 입법이 지연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1년중 입법 추진

[참고] 핵심법안 입법화 현황 및 미통과법안 대응방안

① 금년중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법률중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총 13개 법률이 개정

- 대부분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

| | 주요 개정 내용 |
|-------|--|
| 은행법 | • 은행 부수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
| 자본시장법 | •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신설 • 판매수수료 · 보수한도 신설 |
| 보험업법 | •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보험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
| 저축은행법 | • 영업구역 광역화 및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 여전법 | • 카드결제대상 범위확대 및 카드모집인 처벌규정 도입 |
| 대부업법 |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② 현재 휴면예금법, 신탁법 등 5개 핵심법안이 국회 계류중

| | 법률명 |
|---------|--|
| 정무위 계류중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휴면예금법, 전자단기사채법 신용협동조합법 |
| 국회제출 | • 예금자보호법(11.17일) |

-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및 對국회 · 국민 설득 등 입법 노력을 강화
- 특히, 휴면예금법(미소금융 관련) 등 民生법안의 경우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① G20 의장국으로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를 개최, 핵심 금융개혁과제를 마무리

* 10.19일 BCBS 회의, 10.20일 FSB 총회 서울 개최

① (新금융규제체계 구축)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핵심 개혁방안 도출

② (신규과제 의제화)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및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서울정상회의 이후 신규의제로 제안

*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에 대한 신흥국 역량 강화, 과도한 국경간 자본이동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축소 등

② 위기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

① (서민금융 공급확대) 지점 확대 등 미소금융('09.12월)을 활성화하고 햇살론('10.7월) 등 서민금융상품 출시

* 미소금융 : '10.12.14일 현재, 총 99개 지점 설립

* 햇살론 : 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 저금리 자금 대출 (5년간 10조원 공급 목표)

② (금융이용 부담 경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및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 전통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최대 $\Delta 1.4\%p$)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연 49% \rightarrow 연 44% ($\Delta 5\%p$)

③ (신용회복 지원 지속)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및 저신용자의 저금리 전환대출 등 지원

* 채무조정('10년중) : 14.7만명(신용회복기금 7.6만명, 신용회복위원회 7.1만명)

* 전환대출('10년중) : 1.3만명 대상 1,350억원 지원

③ 취약요인 개선 및 구조조정 등 체질개선 노력 지속

① (잠재취약요인 개선) 외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PF대출 건전성을 제고

- * 외은지점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매입(총 3.7조원), PF대출 총당금 기준 강화 등

② (건전성 감독제도 정비) 예대율 규제 및 단기자금시장 개선

- * 2014년까지 예대율 100% 달성('10.8월 감독규정 개정)
- * 증권사 콜차입 제한 등 콜시장 건전화, RP거래 활성화 등

③ (기업구조조정)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지원체계 마련

- * 대기업그룹(4월) 및 개별대기업(6월) 신용위험 평가
- * 경영권 이전 없이 구조조정기업에 50% 이상 투자 가능한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등

④ 기업자금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 등 실물경제 지원

① (기업자금 지원) 신성장 동력 및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 녹색분야 지원('10년중) : 8.1조원
- * 중소기업 지원('10년중) : 총 98.9조원(추정)

② (주택시장대책)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 마련(4.23일, 8.29일)

- * DTI 등 금융규제 완화, 전세자금 지원, 미분양 건설회사 자금 지원 등

⑤ 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전략(10.2월)을 마련·추진

가. 업무추진 성과

① 성공적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를 주도하면서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G20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계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발휘
- 특히,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를 주도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내실있게 수행

* Global SIFI와 National SIFI 구분, 글로벌 SIFI에 대한 본국-진출국 금융당국간 효과적인 정보공유, 신흥국의 국제회계기구 참여 확대 등

②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층으로 확산

- 미소금융을 조기에 안착시켜 서민층 자활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 금융이용기회를 확충

* 미소금융 : 출시('10.1월)이후 총 883억원(1.2만명) 대출

* 햇살론 : 출시('10.7월)이후 총 1.3조원(14.7만명) 대출

- 금리·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애로도 완화

* 카드 가맹점수수료율(평균, %) : ('08년)2.21, ('09년)2.18, ('10년.상)2.10

카드 현금서비스금리(%) : ('09.4/4)25.7, ('10.1/4)24.6, (2/4)23.0

③ 지난해에 이어 금융시장 취약요인 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 금융시장과 기업 자금사정도 개선 추세 지속

* 종합주가지수(p) : ('08말) 1,124.5, ('09말) 1,682.8, ('10.12.10) 1986.2

* 중기자금사정 BSI(한은, p) : ('08.12) 60, ('09.6) 78, ('09.12) 83, ('10.10) 84

나. 미흡한 점

①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잔존

- 특히, 가계부채 및 PF 대출 부실 우려 등 국내 금융시장내 잠재 취약요인에 대한 지적이 지속 제기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09말, %) : 韓 143, 美 128, 日 112

*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9말) 4.1 → ('10.9말) 15.0

➡ 부문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취약요인에 대해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②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일부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불완전 판매 등 일선 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미흡한 지배구조도 지속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 정책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③ 당면한 시장안정과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력한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부진하며 단순한 수익구조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

* 금융국제화 지수(TNI) : 韓 4.3 美 24, 英 40, 獨 42

➡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회로 삼아 해외시장 진출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II. 2011년 대내외 여건 전망

| | | | |
|---|----------|--|----------------------|
| < 강 점 > | S | W | < 약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경제기초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성장률 : OECD 3위 * 재정건전성(정부 부채) : OECD 4위 * 외환보유고 : 세계 5위 ▪ 양호한 금융·실물부문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자본비율 OECD 25개국중 11위('08년) * 기업부채비율(% , '08년) : 韓 123, 美 147 ▪ 충분한 시장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양질의 인력자원 *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부문에 비해 취약한 국제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리딩 금융회사 부재 * 국제적 네트워크 부족 ▪ 금융시장내 잠재적 취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 외환부문 구조적 취약성 ▪ 금융관행 등 미성숙한 하부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보호 인식 부족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 관행 미정착 | |
| < 기 회 > | O | T | < 위 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이후 국제적 위상 제고 ▪ 위기이후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규제체계의 개편 * 선진 금융시장 위축 및 신흥국 시장 부상 ▪ 고령화·녹색 등 다양한 금융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163억원 → ('10.10월)20.9조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부문 충격 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 불안 *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재발 우려 ▪ 가계대출 및 PF대출 부실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금리대출 비중(% , '08년) : 韓 93, 美 26 ▪ 급격한 자금줄림 재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시장 단기화 지속 우려 * 금융회사 과당경쟁 우려 | |

- ① 내년도에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회복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IMF 경제 성장률 전망(단위 : %) >

| | 전세계 | 미국 | 유로존 | 일본 | 중국 |
|------|-----|-----|-----|-----|------|
| '10년 | 4.8 | 2.6 | 1.7 | 2.8 | 10.5 |
| '11년 | 4.2 | 2.3 | 1.5 | 1.5 | 9.6 |

- ② 국제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 재정문제 · 환율갈등 등 불안요인도 내재

- 아일랜드 구제금융(11.28) 이후, 포르투갈 · 스페인 등으로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심리 지속

* CDS 프리미엄(10.18일→12.9일, bp)

: (그리스)660→934 (포르투갈)344→453 (스페인)197→327 (아일랜드)395→546

- ③ 근본적으로는 금변 위기 이후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 변화가 진행중

- 새로운 금융규제체계가 마련되고 실물지원 등 전통적 상업은행업무의 중요성이 부각

-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등 공익성 차원의 규제 필요성도 대두

- 위기 과정에서 선진국 시장이 위축된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회복이 빠른 신흥국 금융시장이 부상

- 특히, 한국의 경우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이 강화

- ① 국내경기는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위기이후 성장세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성장률 전망(한은, %) : ('10년) 6.1 → ('11년) 4.5

- ② 금융시장도 대체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나, 대내외 불안 요인도 내재

- 외국인 자금유입 확대로 대외부문 영향력이 증대
 - 북한관련 리스크가 고조되거나 국제금융불안이 재연될 경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가계대출·PF대출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시중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도 병존

- ③ 금융산업은 전반적인 수익성·건전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발굴할 필요성 상존

-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선진 금융 시장 위축은 한국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好機로 작용
- 녹색금융·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의 증가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을 제공

⇒ 당면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변화 등을 기회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

Ⅲ.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

①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으로 발전

②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금융시장 취약요인 해소 등 현안과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노력도 병행 추진

⇒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주력

- 둘째,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금융이 솔선수범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및 '서민금융 내실화' 노력을 강화

- 셋째,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

⇒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적극 추진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시장
불안요인
선제대응**

**실물경제
지원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
내실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공정한 시장

[과제①]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①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② 장기·고정금리대출 유도
- ③ 신용카드 과당경쟁 억제

나.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 ① PF 부실 예방 노력 강화
- ② 신속한 PF부실 정리를 통한 금융권 확산 방지
- ③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 ④ 예보의 선제적 감시역할 제고

다. 취약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계 정비

- ①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 ② 자금시장 이상징후 대처
- ③ 외부충격에 대비한 대응 체계 정비

라.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 ①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② 기업구조조정제도 보완

[과제②]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 성장동력 지원 확대

- ① 미래핵심산업 금융지원 확대
- ②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 지원 원활화
- ②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② 일자리 알선 확대

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 ①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지원
- ②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지원

마.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 ① 연금시장 활성화
- ②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비 금융 상품 개발 촉진

[과제③]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① 금융규제체계를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편
- ②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경감

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 ① 불법 차명거래 방지노력 강화
- ②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다. 신뢰받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 ① G20 금융개혁에 걸맞는 금융 감독 구현
- ②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③ 수요자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구축

함께하는 선진금융



따뜻한 금융

[과제4]

서민금융 내실화

가.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 ① 미소금융 활성화
- ②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대출 안정적 운영
- ③ 신용회복지원 강화

나. 서민층 금융이용부담 경감

- ① 저소득층 금리부담 등을 지속 경감
- ②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③ 불공정한 금융 관행과 약관 지속 정비

다.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①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②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 대부 관행 근절
- ③ 전화사기 피해구제 및 방지 노력 강화

라. 나눔문화 확산

- 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유도
- ②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체계 구축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과제5]

금융시스템 선진화

가.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 ① 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
- ② 국제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③ 글로벌 네트워크 및 경험의 체계적 관리

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 ① 경영지배구조 개선
- ② 신용정보·평가 시스템의 합리적 개편
- ③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다.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과제6]

글로벌 경쟁력 확충

가. (은행)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新성장전략 모색

나. (금융투자) 전문화·특성화 촉진

다. (보험) 소비자중심의 판매채널 선진화

라. (서민금융) 서민금융 공급 역량 확충

마. (회계) 글로벌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노력을 지속 추진

〈 기본 방향 〉

- ◆ 대내외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금융 체질개선 유도
- ◆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의 혈맥'으로서 금융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

■ [제①과제]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나.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 다. 취약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제 정비
- 라.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 [제②과제] 실물경제 지원 강화

- 가. 新성장동력 지원 확대
- 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 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지원 활성화
- 마.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 ◇ 당면한 현안과제인 가계부채 및 PF대출이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 ◇ 외환 등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체질개선 지속 유도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①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

- LTV·예대출 규제* 지속 및 자본·유동성 규제 등 글로벌 개혁과제** 도입을 통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

* 2014년까지 예대출 100% 이내로 관리('10.8월 감독규정 개정).

** Basel III 주요내용 : ① 자본비율규제 강화(기본자본비율 4% → 6%), ② 유동성 규제 도입(장단기 유동성비율 $\geq 100\%$), ③ 레버리지 규제 신설

② 장기·고정금리대출의 단계적 확대 유도

- 혼합대출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선택토록 유도

* (예시)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하거나 일정기간 경과후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 상품 등

-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MBS 발행) 지원 확대

* 변동금리 대출비중('08년, %) : 韓 93, 美 26, 日 20, 獨 16

* MBS 발행규모(조원) : ('07년) 2.2, ('08년) 2.6, ('09년) 8.6, ('10.1~10월) 6.4

* MBS 발행비중('09년, GDP대비, %) : 韓 1.8, 美 71.3, 英 35.2

-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을 통한 커버드본드* 발행 등 은행의 자체적인 장기자금조달 여건도 개선

* 은행 등이 우량 주택담보대출자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유도**

* 원금분할상환대출임에도 원금 일부상환 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하여 이자만 상환 →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초래할 가능성

** (예시) :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기간 총 허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마련 검토

-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 및 금리상한대출상품 활성화** 유도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으로 구분
(→ 잔액기준은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지수로, 매월 신규조달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규취급액기준보다 변동성이 낮음)

** 대출금리 변동폭을 제한하여 차주 상환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

| 금리상한 종류 | 내 용 |
|---------------------|-----------------------|
| 초기간한도(lifetime cap) |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 |
| 기간한도(periodic cap) |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 |
| 상환한도(payment cap) | 금리조정시 월 상환액 증가 한도를 설정 |

③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 억제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 등 과도한 현금대출 경쟁 억제

나.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① PF대출 부실 예방 노력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PF 대출 부실화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 해소 유도
 - * 건설사의 담보·채무보증에 대해 수시공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10.4월) 하였으며, '11년 IFRS 도입으로 PF 지급보증 부채인식 범위가 확대될 예정

② 신속한 PF부실 정리를 통한 금융권 확산 방지

- 부실우려 PF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 상각, 시장 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을 통해 조기 정리
- 우량 PF사업장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 마련된 지원방안(8.29)을 차질없이 추진
 - * P-CBO·CLO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한주택보증 및 미분양 리츠·펀드의 매입대상 확대 등

③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증자, M&A 유도 등 선제적 관리로 건전성 제고 유도

- 예보 공동계정 설치*, 저축은행 예보료 인상(0.35%→0.40%), 구조조정기금 확보 등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확충

* 시스템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예보기금내 현행 금융업종별 계정과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국회입법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 추진)

④ 부실징후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의 선제적 감시역할 제고

- 「부실위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적 부실 대응을 강화

*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별로 예보의 대응을 체계화[예 : 부실징후 파악 → 현장확인(공동검사) → 부실예방(금융위 조치 요구)]

-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활성화 등 부실징후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감시기능을 확대
: (현행) 부보금융회사 → (추가)부실징후가 있는 대형 非부보금융회사 등

다. 취약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제 정비

①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회사 외화유동성과 주식·채권시장의 외국인투자 자금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대형 글로벌은행의 국내지점 검사주기 단축 및 프로그램 매매 감시 강화

- 기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의 이행현황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1차('09.11월) :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등
2차('10.6월) : 외환 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외환 파생상품거래,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② 자금시장 이상징후에 적기 대처

- 시중유동성 '쏟림현상'의 조기 파악 및 적기 대응을 위해 시장과의 연계체계(hot-line) 구축
 - * 글로벌 자금유입 등에 따른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경기회복과정에서 자금쏟림 및 금융회사 과당경쟁을 야기할 가능성
- 특히, 부동산 등 '이상과열 조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자산운용 등을 억제
- 금융회사의 과도한 고위험 투자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Stress Test)
 - 현재 등록되지 않고 있는 ABCP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금융회사의 ABCP 매입보장약정,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③ 외부충격에 대비한 대응체제 정비

- 유럽발 재정위기,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재정부, 한은뿐 아니라 안보부처 등 사태 주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
- 상황변화에 대비한 금융부문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라.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①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4월), 개별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6월)를 통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 특히 건설업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부실 우려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수시 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유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채권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른 워크아웃 등을 통해 관리

②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보완

-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기업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추진
 - * (예시) 워크아웃 개시 단계 :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간 협의절차 마련
워크아웃 과정 : 기업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 부여 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한시법)의 종료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체제 정비방안 검토
 - *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점차 조성해 나가는 한편, 여타 구조조정 제도와 조화방안 등을 모색

제②과제

실물경제 지원 강화

- ◇ 기업자금은 위기이전 수준보다 확대해 나가되, 위기시에
예외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정상화
 - 특히, 유망 중소기업 및 녹색산업 등 新성장동력 부문을
집중 지원
-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금융부문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

가. 新성장동력 지원 확대

미래 핵심산업 금융지원 확대

① 설비투자 자금지원 지속

- 금융공기업을 통해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총 21.9조원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
- 특히 에너지, 항공기산업 등 지원효과가 큰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해서도 자금 공급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국가 기간산업 지원(조원) : ('10)0.5 → ('11)0.9

②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

-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간 원활한 공조를 통해 원전사업, 고속전철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실적(억불) : ('06년)172→('09년)488→('10년)698°

- 수출입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입 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출자를 추진

■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① 녹색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정책금융 지원방식 다양화

- 녹색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녹색 설비 생산기업뿐 아니라 녹색 설비 수요기업 등 '녹색수요자'를 포함
 - 녹색 수요자에 대해서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보증
- 민간투자자가 녹색산업 투자시 장기·고위험 투자리스크를 정책금융기관이 일부 분담(예 : P-CBO)하는 방안 마련

②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및 금융상품 개발 유도

-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녹색경영 공시제도를 도입

* 현재 자율공시중이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너지 소비업체 중 상장기업에 대해서 녹색 경영공시를 '12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방안 검토

- 녹색금융 특화 MBA 과정(KAIST·고려대)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투자금융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
- * (예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 및 정화비용 등을 보상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상품 개발 등

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원활화

- 중소기업에 대해 위기 이전보다 확대된 92.3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

< 금융공기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단위 : 조원) >

| '07년 | '08년 | '09년 | '10년(잠정) | '11년(계획) | '08년대비 |
|------|---------|-------|----------|----------|------------|
| 75.8 | 80.6(A) | 104.8 | 98.9 | 92.3(B) | +11.7(B-A) |

* 산은, 기은, 정책금융공사, 신보, 기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합계

-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미래성장동력분야(수출·녹색 등) 보증공급 규모(조원) : ('10)22.0 → ('11)24.2

* 기업은행의 부품소재 및 기술개발 자금공급액(조원) : ('10)2.2 → ('11)2.4

- Fast-Track 프로그램*은 1년 연장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08.10월 도입)

- 역경매(逆競賣)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 구축(신·기보)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유도

* 중소기업이 희망 대출종류·금액 등을 등록 → 多數 은행이 금리 등 대출조건 제시 → 중소기업이 가장 좋은 대출상품을 선택

②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

- 신용도는 낮으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 제도를 활성화

* 현재 5%수준인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제도 활용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

-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중소·중견기업전용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지원대상에 중견 기업을 포함하여 운영

*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공급된 자금을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지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대출

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

- 기존 매출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 한도 (매출액의 1/4) 적용을 배제하고, 보증료 및 보증비율 우대

<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보증 공급 계획(단위 : 조원) >

| 구 분 | '10년 | '11년 | | | 증감 |
|--------|------|------|------|-----|------|
| | | | 신보 | 기보 | |
| 창업기업 | 13.4 | 13.8 | 8.0 | 5.8 | +0.4 |
| 고용창출기업 | 2.0 | 6.5 | 4.5 | 2.0 | +4.5 |
| 합 계 | 15.4 | 20.3 | 12.5 | 7.8 | +4.9 |

○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군(13개)*에 대해 정책자금 공급 확대

* (예시) 반도체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② 기업과 구직자간 연계강화 등 일자리 알선 확대

○ 기업이 워크넷(Work-Net)*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및 수수료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유도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 사이트

○ 잡월드(Job World)* 등 금융공기업의 일자리 알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금융회사로 확산** 유도

* '09.2~'10.11월까지 24만명 취업 알선, '11년중 신규 1.2만명 알선 예정(기업은행)

** KB는 잡뱅크(Job Bank) 사업(취업알선 사이트)을 개시할 예정('11년 초)

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 활성화

①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를 도입·시행하여 공시부담 완화 등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 '11년중 QIB 거래시스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기관투자자 및 채권 발행 예상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배경 등 홍보활동 강화

-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등의 유형을 다양화* 하는 방안 검토

* 현재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단순 회사채, CB, BW 등으로 한정

- 장기채권 발행·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회사채 만기(현재 평균 2.1년에 불과)를 장기화

- 만기가 길수록 발행분담금을 인하하거나 만기구분없이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행분담금 제도*를 개선

* (현행) ① 만기 1년이하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

② 만기 1년초과 2년이하 : 1만분의 7

③ 만기 2년초과 : 1만분의 9

- 장기·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회사채 전용 펀드 육성방안 마련

* (예시) 일정요건(규모, 회사채 편입비율, 장기투자 등)을 갖춘 공모 펀드를 회사채 집중투자펀드로 지정 등

②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 新성장동력·녹색 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특례 확대)하여 상장을 촉진하되,

* (예시) 창업초기 기업임을 감안하여 경상이익 및 자본이익율 요건 면제

** 신성장동력 산업(예시) :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융합산업(IT융합, 로봇응용), 고부가서비스산업(콘텐츠) 등

-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리 강화* 추진

*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변칙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 의무 부과 등

- 증권사가 자금조달·기업공개 등을 지원하는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 프리보드 시장 >

- 거래소시장 상장 전에 중소기업 등이 가입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 지정자문사의 역할 >

- 프리보드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 등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 담당
 - 기업금융 자문 또는 유망기업의 프리보드 진입 자문
 - 프리보드 진입시 공개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진입이후 상시 점검
 - 공시 등 프리보드 규정 준수 지도, 코스닥 IPO 지원 등

마.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연금시장 활성화

① (개인연금) 연금보험 상품규제* 완화를 통해 상품 다양화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연금보험 상품규제 현황(예시) : 무배당상품 개발 금지,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설정의무, 최소 5년 이상의 보증지급 의무 등

○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정보를 비교 제공하는 「개인연금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추진

* 상품의 수익률, 유지율, 위험정도 등 필수정보를 비교 공시

②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

○ 현행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일부 완화

* 현재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형펀드 등에 전체 적립금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③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현행 10개 은행)를 늘리고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택연금 공급을 확대

*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복지부)

○ 연금수급액 재조정* 등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강화

* 기대수명, 장기 주택시장 전망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수급액 등을 재산정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비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촉진

① 자녀출산 또는 다자녀(3인이상) 가구 등에 대해 예금·대출 금리를 우대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상품* 출시 유도

* 현재 출시된 출산장려상품 : 자녀희망보험(세번째 자녀 가입시 특약보험료 30% 할인), 희망플러스자녀보험(보험기간중 자녀출생시 보험료 2% 할인)

** 출산률(%) : (한국)1.15, (일본)1.37, (프랑스)2.00, (OECD평균)1.71

② 다자녀가정이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이용시 대출한도를 증액(1억원 → 1억5천만원)

*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중인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자녀가구의 한도를 확대

③ 노인장기요양보험(공적간병보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상품개발** 지원

* '08년 도입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

** 실손형 민영 장기간병보험 표준약관을 마련

〈 기본 방향 〉

- ◆ ‘삶의 質을 높이는 금융’을 구현하는데 정책적 역량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 규율 확립, 투명한 감독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 질서 확립
 -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민 금융을 내실화

■ [제③과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 다. 신뢰받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 [제④과제] 서민금융 내실화

- 가.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 나.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경감
- 다.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라. 나눔문화 확산

제③과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 ◇ 공급자 위주의 금융규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전환
- ◇ 불법 차명거래 방지,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확립
- ◇ G20 금융규제개혁에 걸맞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규제체계를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편

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통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구속성계약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 다만, 위험 및 특성이 다른 경우 판매행위 규제를 차별화

* (예시) 금융상품별로 설명의무의 내용을 차별화

- (투자성상품) 투자 위험
- (예금성상품) 이자율, 중도해지 수수료
- (보장성상품)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 등 강도높은 제재수단 도입

②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은행) 구속성 행위,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 (보험) 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 (저축은행) 경영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제재

③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강구

④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 종합적인 소비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령대별로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교육 콘텐츠와 방식을 개편

* 유소년 대상 뮤지컬, 은퇴자 대상 사기피해방지 교육 등

-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11년중 국회 제출 추진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경감

① 사업비용과 보험금 지출과정에서 누수 방지

- 예정사업비 초과지출행태 감독 강화 등 보험사가 지출하는 판매비용 절감 유도
- 차량수리시 발생가능한 과잉수리를 방지하고, 부품비용·대차비용 등 대물비용 절감
- 교통사고환자의 과잉 진료비용을 낮추고 보험회사의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대인비용 절감

②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교통사고 억제

-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자는 보험료를 덜 내는 방향으로 개편

③交通安全 관련 의식과 관행을 개선

- 교통법규 준수, 운전중 위험행위 금지, 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하여 자동차 사고율 하락 유도

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불법 차명거래 방지노력 강화

① 차명거래 제한의 필요성과 금융거래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불법 차명거래 효율적 근절 방안 마련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이행 감독 및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금융거래시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의심 등 자금세탁 우려시 거래당사자 여부와 거래목적을 확인

-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 차명거래 관련 규제 현황 >

- ① 금융기관에 의한 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실제당사자 여부” 확인을 위한 고객확인제도(특정금융거래보고법)
- ③ 금융거래자의 불법재산 관리행위 처벌(범죄수익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등) 등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 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정비
 - 주식연계증권(ELS)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처벌요건을 정비하고, 미공개 시장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
- ② 공시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 공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반복 위반 등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제재 강화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미이행시 강제철회토록 하고, 수시공시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심사를 강화
- ③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계감독 제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
 -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장폐지 우려기업의 재무제표 검증을 강화
 - 주주 500인 이상 및 공모사채 발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준하여 회계감독
 -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등에 한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를 도입

다. 신뢰받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① G20 금융개혁에 걸맞는 금융감독 구현

- '미시건전성 감독' 위주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까지 포괄하는 감독시스템으로 개편
 - 주기적 Stress Test 실시, 조기 경보모형(EWS) 활용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징후를 조기에 인식
 - 재정·금융·외환당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부 충격요인에 적기 대응
 - * 美, EU 등 각국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중
- '권역별 감독'에서 '기능별 감독' 위주로 전환
 -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경영지배구조법 제정 추진 등에 따라 기능별 규율체계로의 이행 본격화
 - 이에 맞춰 금융감독 대상 및 목표, 인력 및 조직 등 감독 자원을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적발위주 감독' 방식에서 '리스크 진단 및 컨설팅 위주 감독' 방식으로 개편
 - 금융기법 고도화, 금융산업 거대화·복합화 등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 감독·검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 *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및 전문검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속 정비 등

②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조사·검사·제재 관련 절차·기준 등을 지속 정비

* (예시) 불공정거래 조사권 남용금지 신설(자본시장법) 및 현행 검사·제재 관련 법규 정비 등

○ 현장검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소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검사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중요 검사계획의 보고대상자 상향조정(부서장 → 본부장), 질문서·답변서·관련자료 등 관리 강화 등

- 대형 금융회사 검사시 법무지원을 강화하고 검사품질관리 제도*(Quality Assurance) 활성화

* 검사역 스스로 검사관련 필요절차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검사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 실시 등 검사품질 평가를 실시

③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의 기능을 지속 확충

* '10년중 금융위내 전담조직('금융소비자과')을 기 마련하고, 금감원의 소비자본부를 확충

○ 금융법령 유권해석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가칭) 금융법령 해석 자문단' 구성

* 관련 학계,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다수 민원 금융회사 및 민원빈발 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약관 정비 등 제도개선으로 연계

○ 검사직원이 투자자신분으로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직접 체험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 실시

제④과제

서민금융 내실화

- ◇ 미소금융·햇살론 등 기 도입된 서민금융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 특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기능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확충을 병행 추진
- ◇ 서민층에 대한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금융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

가.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미소금융 활성화

① 미소금융 대출의 접근성 제고

-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수요자가 미소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인출장소 등 신규지점을 지속 확대
- '찾아가는 미소금융'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요자를 적극 발굴

② 컨설팅 서비스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컨설팅 내용을 내실화 하여 서민의 자활 성공률 제고
- 컨설팅 인력 육성 프로그램인 '(가칭)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지점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③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 사후 관리 및 기부캠페인 등 추진
-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점 미설립지, 상대적 원격지 등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순회상담팀' 운영* 확대

* (사례) S미소재단 : 울진시·군산시 등과 제휴하여 전통시장 순회상담 실시중

④ 미소금융 수행기관간 파트너십 강화

- 기존 복지사업자의 경험 노하우와 미소금융재단의 금융 노하우를 접목시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 정착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원*을 통해 기존 복지사업자의 발전 토대 배양

* 기존 복지사업자의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해보험 가입 지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 연계 등

⑤ 미소금융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 대출자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율 제고
-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방안 검토

* 대출 추가확대, 금리인하 또는 일부 납입이자 환급 등

- 공공기관 시설 무상이용을 통해 지점의 운영비 절감

* 국회심의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점설립계획을 마련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대출 안정적 운영

① 햇살론의 지속적 공급 확대

- 상품출시(7.26일)후 4개월간 1.3조원이 지원되었으며, 5년간 10조원 공급을 목표

② 서민대출의 건전성 제고 등 내실화

-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역량을 확충하여 대출 부실화 예방
- 대출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여 서민대출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 새희망홀씨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자 대출비중 등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고신용·고소득자 위주 대출을 방지
-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예방을 강화하고, 저신용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증제도 개선

③ 은행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전환대출 활성화

- 전환대출 접수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 * (당초) 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 24개 → ('10.11월) 6개 은행 약 5,400여개로 확대 → ('11년 상반기까지) 16개 은행 7,400여개로 확대 예정
- 은행수취 이자율 인하(연 7% → 연 6%, '10.11.22일)

④ 서민금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대출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중복 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서민금융 지원실적의 체계적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서민지원 확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병행토록 유도

신용회복지원 강화

①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중소기업인이 재창업뿐만 아니라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

* 종전에는 법인 연대보증인은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용회복을 지원

②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복지형 신용회복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간* 및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 현 8년 → 10년까지 연장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시(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 신용회복지원시 원리금 추가 감면 등 특례적용대상을 발굴·확대

③ 신·기보 구상채무도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감면·매각 추진

- 신·기보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참여하여 채무 감면

* 감면비율은 자산관리공사와 동일하게 원금 30%까지

- 법적 근거가 완비된 기보의 구상채권부터 매각을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도 추진

나.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경감

① 저소득층의 금리 부담 등을 지속 경감

-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대부업체 등 법정 상한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44%→39%, 5%p↓)
-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신탁·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 도입을 통해 금리인하 유도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확대
(연소득 2천만원 → 2천5백만원)
- * 정부 이차보전을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0.5~1.0% 인하하여 공급

② 중소자영업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추가 완화

- 보다 많은 중소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조정 유도

③ 불공정한 금융 관행과 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

- 장애인 등에 대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계약 인수지침 정비
- 대출채권 매각이후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고객에게 환급토록 하는 등 제도 정비

다.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①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차주의 변제능력 파악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부업자의 약탈적 대출행위 방지
- 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간 거래를 금지하는 등 다단계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피해 축소

② 불법적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 대부관행 근절

- 대부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광고매체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 불법사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고, 금융피해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실시

* 현재 경찰청에서 불법사채 신고포상제(포상금 200만원)를 시행중

③ 전화사기 피해구제 및 방지 노력 강화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없이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특별절차 마련
 - 금융회사는 피해자요청시 지급정지 실시 → 금감원은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공고(2개월간) → 피해자에게 피해금 반환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중(법사위 계류중)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혐의 계좌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 노력 확대

라. 나눔문화 확산

①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유도

- '따뜻한 금융사랑 고루 나누기' 캠페인 전개
 - 개별 금융협회별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각 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사랑 나누기 협의회」 운영
-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 유도
 -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하여 정례적으로 인터넷 공시 및 백서 발간
 - 개별 금융협회별로 사회공헌활동 수요와 금융회사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

②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보호체계 구축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의 공익적 기능 강화
- 금융회사의 기부문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노력이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기본 방향 〉

- ◆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 금융규제개혁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이 '혁신과 자율'에서 '안정과 규제'로 전환
 -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 [제⑤과제] 금융시스템 선진화

- 가.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 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 다.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제⑥과제] 글로벌 경쟁력 확충

- 가. (은행)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新성장전략 모색
- 나. (금융투자) 전문화·특성화 촉진
- 다. (보험) 소비자중심의 판매채널 선진화
- 라. (서민금융) 서민금융공급 역량 확충
- 마. (회계) 글로벌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 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노력을 지속 추진

제⑤과제

금융시스템 선진화

- ◇ 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과 함께 금융개혁 관련 국제논의에 주도적 참여
- ◇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및 감독 제도 선진화를 지속 추진

가.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

① 주요 금융규제개혁 과제별로 「G20 합의사항 제도화를 위한 과제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

- 선진국 규제동향, 추가 국제논의 및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 (예시) 은행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BaselⅢ), SIFI 지정 및 감독 강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

② 조속한 국내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예시) BaselⅢ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준비, 장외파생상품시장 중앙청산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③ 채권자 손실분담, 조건부 자본 도입,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 금융회사 부실화시 채권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 또는 감액시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토록 하는 제도
- *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 : 재무구조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본(보통주)으로 자동 전환되는 채권

- 다만, 국내법체계 및 대안별 장단점 등을 감안하여 도입여부 검토

⇒ 「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입법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 정부 및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개별과제별 후속 조치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입장도 정리

국제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① 현재 논의되고 있는 G20 금융규제개혁이 글로벌 차원에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

- 大馬不死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세부규제방안 논의과정에서 신흥국 입장 반영 추진
 - * 글로벌 SIFI 지정을 위한 국제 기준 마련, SIFI에 대한 보다 높은 손실 흡수방안 적용, 국가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정리제도 개편 등
- G20 정상들이 합의한 「FSB 비회원국 참여 확대(FSB Outreach)」를 위한 지역협의그룹 설립 논의를 적극 주도
 - * FSB 지역협의그룹을 설립하여 신흥국 등 FSB 비회원국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틀을 마련

- 금융안정위원회(FSB)내에 주요 국제기구(FSB, IMF, WB 등)가 참여하는 신흥국 의제 관련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을 주도

* (논의의제) 신흥국 감독역량 강화, 외환시장 위험관리, 본국-현지국 금융당국간 원활한 정보 공유, 무역금융 등

- 「신흥국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신흥국 의견을 폭넓게 수렴

② 'G20 신규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신규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금융개혁 등 한국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주도

< 금융분야 G20 신규 의제 >

| 이슈 | 담당기구 | 보고 또는 방안마련 시기 |
|---------------------------|----------------------|------------------|
| ①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 FSB, IMF, BIS | 차기 재무장관회의 |
| ②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 FSB, IMF, World Bank | 차기 정상회의 |
| ③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 FSB | '11년 중반 |
| ④상품파생시장 규제 | FSB, IOSCO | '11년 4월 |
| ⑤시장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FSB, IOSCO | '11년 6월 |
| ⑥금융소비자 보호 | FSB, OECD | 차기 정상회의 |

- 또한,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서민금융지원 등 한국의 우수사례를 주요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모범기준으로 정립 추진

* (글로벌 파트너십의 역할) 각국이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원칙 이행 지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법 개발 작업 추진

G20 의장국으로서 축적된 네트워크 및 경험의 체계적 관리

①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국제논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국내 민간전문가의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

- 실무논의 초기단계부터 국제논의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제기준 마련에도 기여

② 금융당국간 협력약정(MOU)* 체결을 확대하고, 감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지원

* 현재 미국, 독일 등 15개국 22개 금융당국과 MOU를 체결

** 신흥국 금융당국자 교육 등을 통해 감독역량 강화를 지원

- 또한, 한·미, 한·EU 등 FTA 체결 확대를 금융협력 강화 계기로 적극 활용

③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개최(10월)

* 자금세탁 범죄유형 발굴 및 심사분석기법 등 논의, 아·태 지역 40개국, IMF·World Bank 관계자 등 250명 참석 예정

- 베트남, 브루나이, 몽골 등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후발국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 정책컨설팅, 교육·훈련 지원 등과 연계하여 FIU 정보 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IT기업의 동반진출 모색

[참고] G20 서울정상회의 금융규제개혁 주요 합의사항

① 금융규제의 근간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Basel III)을 채택

* 새로운 기준은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회복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② 大馬不死에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및 이행일정에 합의

○ 특히, 모든 SIFI에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SIFI부터 우선 적용

○ 각국은 납세자 부담없이 모든 SIFI를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토록 하고, SIFI에 대한 강화된 감독 실행

○ 각국 SIFI 정책의 유효성 및 일관성을 점검

③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 및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 금융인프라 개선

* 금융회사 등의 기계적인 외부 신용평가등급 의존에 따른 경기순응성 증폭 등의 문제점을 개선

④ FSB 비회원국도 참여하는 지역협의그룹 구성을 통해 국제금융규제기준 마련시 신흥국 입장이 반영되는 기틀 마련

*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그룹회의가 2011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FSB 비회원국 참여 확대(Outreach) 방안 마련을 추진

⑤ 보다 높은 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회계기준 합치를 요구(2011년말까지)

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경영지배구조 개선

① 이사회·대주주·경영진 감시기능 강화

- 경영목표·평가, 임원 보수·임면, 리스크 관리기준 등 중요 사항을 반드시 이사회가 처리토록 하는 등 이사회 기능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
 - 일정수(예: 3인) 이상 사외이사를 두되 이사회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단, 사외이사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

②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기능의 내실화

-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는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감시인'을 설치·운영
- '보상위원회'가 위험과 보상이 연계되는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보수 등을 심의
 - * 보수 중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지급, 성과보수는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
- 감사기능과 내부통제기능의 독립성·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③ 집행임원에 대해 임원에 준하여 규율(선임, 자격요건, 제재 등)하고,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제도 도입

④ 동일한 사항임에도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통일적으로 정비

* (예시) 개별법령마다 차이가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비율을 동일하게 규정

⇒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기능별 감독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중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가칭)」 제정 추진

신용정보평가시스템의 합리적 개편

① 개인신용평가 및 공시 체계를 소비자 편익에 맞게 재정비

- 개인 신용평가기준 · 신용평가결과 등에 대한 공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발굴 · 정비
 - 소액 · 단기연체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이행정보*를 가점요인으로 반영
- * (예시) 신용회복위 ·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 이행채무성실상환 정보
- 제공 가능한 공공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하고,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② 신용평가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

-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실적을 분석
 - * 신용평가실적, 평가방법론, 평가에 사용된 정보의 질 등을 공시
- G20 합의사항의 국제적 후속논의를 감안하여 외부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및 내부신용평가 선진화 유도 방안 마련
 - * 시장참여자의 외부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 평가시스템을 선진화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① 증시 변동성 및 결제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최근 옵션 만기일(11.11일) 주가급락 사건과 관련 철저히 조사 및 조치
-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추진
 - * 최근 옵션 만기일(11.11일) 주가 급락으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이를 바탕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사후증거금 제도개선 : 결제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증거금을 부과
-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 :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물뿐 아니라 옵션거래에 대해서도 포지션 한도 규제대상에 포함
- 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제도 : 일정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

②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 추진

- 영업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관행 개선노력 강화
-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

* (예시)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 고유의 위험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①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징후를 조기 포착하기 위해 선행 지표 분석*을 강화

* (예시) 연체 전이율, 대출취급 시기별 연체율, 한도성 여신 소진율 등

- ② (금융투자)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Stress Test, 경영실태 평가, 자기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선정

- ③ (보험) 리스크 중심 자본규제체계('11.4월 시행)의 조기정착 및 정비

* (예시) 보험유형(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또는 보증유형(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에 따라 리스크 차등 반영토록 정비

- ④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예시) 요주의 자산 분류 기준(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상의 과도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시)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개별차주 여신한도(80억원)를 은행수준(자기자본의 20%)으로 완화한 바 있으나, 이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 금번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
- 국내 금융산업의 내실있는 안정성장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 노력을 강화

가. [은행]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新성장전략 모색

- ① 글로벌 규제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 PB·퇴직연금 등 新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 해외진출 규제 완화(사전협의 → 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 은행은 개정 은행법에 따라 '11.5.17일까지 「지배구조 내부규범」(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원칙·절차)을 제정·공시
- ② 은행간 외형경쟁 심화로 인한 특정 자산시장 대출 급증, 무리한 자금조달 등 리스크 요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을 수시 점검하고, 부동산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나. [금융투자] 전문화·특성화 촉진

①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다변화 및 특성화 유도

- 금융투자회사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제도를 정비

* 금융투자회사가 사모펀드에게 증권대차(Securities lending), 대출 등 자금 지원, 수탁·보관, 펀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주식회사외에 합자회사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전문화·특성화 유도

② 펀드별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편

- 공모펀드는 동일종목 투자제한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상품출시를 유도하되 투자자보호 관련규제는 강화
-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사모펀드는 인가·등록 및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보고의무 신설 등 감독은 강화
- 변화된 시장여건과 특성에 맞게 펀드·신탁 등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강화
-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판매회사간 경쟁을 유도
-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운용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추진

다. [보험] 소비자중심의 판매채널 선진화

① 판매채널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TM(Tele-Marketing),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증가

- 보험상품별 가격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를 확대
- 보험광고시 보장하는 위험, 보험료, 보험금 등을 명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보장

*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

②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 모집수당체계 및 판매방식 개선

- 보험상품 판매 이후에도 사후 관리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판매수당체계 개선

* 현재 판매수당의 초기집행방식을 분할 지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

- 불완전판매 억제를 위해 보험판매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윤리·법규교육 강화

③ 보험금 지급업무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단계별로 주요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 (보험금 청구 단계) 예상심사기간 → (심사 단계) 심사지연 사유
→ (지급단계) 보험금 지급일자 및 방식, 감액 사유

-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자제토록 유도

라. [서민금융] 서민금융공급 역량 확충

①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공급확대 기반 구축

* 저축은행 가계대출 비중(%) : ('05.6말) 28.7 → ('10.9말) 12.2

- 저축은행의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

- 중앙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토록 하고 지속적 확대 유도

* '10.11말, 총 105개 저축은행 중 39개(37.1%) 기 구축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여 가계대출 금리 인하여력 확충

② 신탁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 단위신탁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중앙회의 여유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 분산 유도

* (예시) 신탁 중앙회의 비회원 대출 한도

(현행)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 초과분부터 중앙회 대출 가능

(개선)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50% 초과분부터 중앙회 대출 허용

③ 서민대출시장 경쟁 촉진

- 공시확대 등을 통해 캐피탈, 대부업 등 서민대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리인하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이 진입하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 [회계] 글로벌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① 금융위원회 내에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회계법인의 대형화, 업무영역 확대 및 회계서비스 수출 지원

* 국제회계기준(IFRS)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일부 대형회계법인에서 IFRS 도입예정 국가인 역내 아시아 국가에 전문인력 수출 등을 추진중

②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을 계기로 국제적인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의 조직을 확대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활동을 활성화
- 국제회계기준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협조 강화

③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 IFRS의 적용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IFRS와 미국회계기준과의 합치 등 국제회계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 국제회계감사기준(New ISA) 도입 및 연결중심의 감리 확대 등 회계감독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선
- 국내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회계산업을 전략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 및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 회계산업비교(GDP 대비, %) : (한국)0.3, (영국)1.0, (호주)1.0, (미국)0.7

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노력을 지속 추진

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1~’13년)」 수립

-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 자산운용업, 파생, 선박금융 및 회계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타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특화전략 추진

②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 서울 여의도 지구, 부산 문현 지구

** 금융중심지법령 상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정 등을 마련·시행

-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금융중심지의 경영 환경 및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
- 금융중심지정책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IR 실시

③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금융MBA 연계 교육 및 산학협력 과정 개설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2011. 12. 30.



금융위원회

목 차

I. 지난 4년 금융정책 평가

1. 지난 4년 금융정책 추진성과
2. 보완할 점

<참고1> 2011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참고2> 지난 4년간 금융산업 변화모습

II. 2012년 금융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1. 대외여건 및 전망
2. 대내여건 및 전망

III. 2012년 금융정책 방향

1. <제1목표> 위기에 강한 금융
[과제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과제②] 금융시스템 선진화
2. <제2목표> 기업과 동반금융
[과제③]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과제④]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3. <제3목표> 서민과 나눔금융
[과제⑤]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과제⑥]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I. 지난 4년 금융정책 평가

1. 지난 4년 금융정책 추진성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시장안정 노력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 '08.9월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

○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은행 자본확충 지원, 금융회사 유동성·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1,000억불 한도), 정부·한은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5조원) 및 은행 자본확충펀드(4조원)를 통한 지원 등

○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신용경색 발생을 차단

* 중소기업 대출 만기 전액 연장,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지원업체수 11,861개, 지원액 30.7조원), 보증공급 확대(55.4조원), 상생보증 프로그램 가동 등

□ 위기극복 이후 금융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함

○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

* 외화유동성 비율 산출시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 적용, 외화안전자산 보유제도 도입, 여전사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 김치본드 투자제한 등

○ 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

* 원화예대율 '13년말(100% 이하) 도입, '11.6.29대책시 도입시기 단축('12.6말)

○ 금년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외화자금 확보를 유도

* '11.11말 국내은행 외화현금유동성은 '11.6말 대비 6배 이상 증가

⇒ 주요국보다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권의 위기대응능력도 대폭 향상

* 단기외화차입비중 : ('08.6말) 50.1% → ('11.9말) 29.2%

* 은행 BIS비율 : ('08.6말) 11.4% → ('11.9말) 14.1%

나. 잠재불안 요인에 대응

◆ 그동안 부채중심의 금융 외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가계부채, 저축은행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대출구조 개선 등을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6.29대책)'을 마련·시행
 -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 저축은행 업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과감히 정리
 - 저축은행 일괄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7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등 '11년중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 「구조조정기금*」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재원을 활용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뒷받침
 - * 5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등을 매입
 - **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조달을 위해 설치
- PF 부실이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PF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사업장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
 - PF 부실 정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PF 부실 정리를 유도
 - PF 정상화뱅크* 설립 등 사업장 정상화 지원 기반을 마련
 - * 7개 시중은행이 출자, '11년중 1.8조원 규모의 은행권 PF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성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추진

⇒ 시장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극대화

- * 신규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 ('10.12월중) 35% → ('11.9월중) 19.7%
- * 은행권 PF 부실채권 규모 : ('10.12말) 6.3조 → ('11.9말) 3.9조

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저소득층·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3대 서민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충

□ 3대 서민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대폭 확대

- '08년 이후 '11.10월말까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를 통해 총 3.4조원(약 40.4만건)을 서민층에 공급

* 지원실적('11.10월말까지): 미소금융('08.7) 5.4만건 0.4조원, 새희망홀씨('10.11) 14.9만건 1.2조원, 햇살론('10.7) 20.1만건 1.8조원

□ 가게부채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에 대응하여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 미소금융 적격자 발굴·경영컨설팅 강화,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전채무조정 제도 2년 연장 등

□ 수수료, 금리 등 금융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0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08.10 이전) 3.3~3.6% → ('11.6) 2.0~2.15%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1.6~1.8%, 서울시내 3대 대형백화점 2.0~2.4%)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2차례('10.7월, '11.6월)에 걸쳐 10%p 인하(49% → 39%)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 채무조정('08.1~'11.8월) 51.4만명(신용회복기금 21.4만명, 신복위 30만명)
전환대출('08.1~'11.8월) 5.9만명, 0.6조원

⇒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신용층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 금융채무불이행자: ('08월)227만명 → ('11.9월)130만명

* 저신용자(7~10등급) 비중: ('07월)22.9% → ('11.6월)17.3%

라.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성공적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금융 선진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

□ '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핵심 금융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BCBS, FSB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Basel III*, SIFI 규제** 관련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 은행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

** 추가 자본 적립방안, 정리절차 마련 등

○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및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신규의제로 제안하고 우리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

□ 선진금융 방식과 국제기준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금융 선진화 노력도 착실히 추진

○ 자본시장법 제정 등 자본시장 규율체계를 선진형으로 전환하고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도입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도입 등

○ 금융중심지 지정('09.1월,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해외진출 확대* 등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금융회사 해외점포수 : ('07말) 253개 ('11.9말) 341개

○ 파생상품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소속부제도 개편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 사후증거금 제도 개선,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 등

○ 국제회계기준(IFRS),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등 선진제도를 도입·시행

○ 한국 증시가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09.9월)되고,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에도 가입('09.10월)

⇒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선진금융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2

보완할 점

- (시장불안요인)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
 -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북한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와 파생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도 작용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은행권은 대출 증가속도와 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제2금융권 증가세는 지속
 - 경기부진 등으로 서민가계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지출부담이 늘어나 연체율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과제) 유럽 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고, 제2금융권을 포함한 부문별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와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

- (실물부문) 그간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위기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확대에 집중
 -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 담보위주 대출 관행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관행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미흡
 - 대출 부실화에 따른 책임문제도 기술력·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부족한 요인
 - 유동성 공급 등 시장불안에 대한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100세 시대 등 미래를 대비한 금융지원에는 미흡

(향후과제) 중소기업 지원관련 제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금융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서민금융 등) 서민 금융지원의 경우 일정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민층이 충분히 체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3대 서민금융 등을 통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서민층의 금융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 서민층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상대적 고금리 등 금융부담이 큰 상황
 -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한 실정
 -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지속 인하해 왔으나, 중소가맹점 등은 여전히 상대적인 고부담을 이유로 불만이 지속

(향후과제) 대학생과 서민층의 금융으로 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

- (금융인프라) 자산규모 증가 등 그간 금융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이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
 -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제기여도**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 제조업 대비 금융업의 생산성(배) : 한국 1.01, OECD 20개국 평균 1.65
 - **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 08년) : 한국 6.6, 영국 7.5, 미국 8.4
 - CEO에 권한집중·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저축은행 상근감사의 견제기능 소홀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 저하
 - 금융 IT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된 반면, IT 보안에 대한 관심과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 유출, 전산장애가 수차례 발생
 - * 현대캐피탈(11.4월), 농협('11.4월)
 - 보이스 피싱,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중시 경영 및 소비자보호 제도나 감독이 충분하지 못함
 - *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관련 신고 접수건수(10.28 기준) : 4,310건, 1,535억원
 - 저축은행 사태이후 비리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융감독에 대해 신뢰성이 저하

(향후과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지배구조·IT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금융감독의 신뢰를 제고

[참고1] 2011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 2011년 업무계획상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을 위해 선정했던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현재 66개 세부과제 중 62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
- 4개 과제는 법률안 국회제류 및 관계부처 법령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고용부 소관)과 연관) 지연

< 2011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

| 분 야 | 세 부 과 제 | | 추진상황 | |
|-----------------|---------|---|------|----|
| | 개수 | 주요 내용 | 정상 | 지연 |
| 1. 시장불안요인에 선제대응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예보기금 공동계정도입, 예보료 인상 •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등 | 9 | - |
| 2. 실물경제 지원 강화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동력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11 | 1 |
| 3.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자동차보험 부담 경감방안 추진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 | 8 | 1 |
| 4. 서민금융 내실화 |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활성화 • 햇살론 공급확대 및 전환대출 활성화 • 신용회복 지원 확대 등 | 13 | - |
| 5. 금융시스템 선진화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추진 • 중앙청산소 도입 추진 •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 6 | 1 |
| 6. 글로벌 경쟁력 확충 |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특성화 촉진 • 금융중심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 15 | 1 |

□ 법률개정 사항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시행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개정조치 완료 후 신속히 추진

[참고2] 지난 4년간 금융산업 변화 모습

□ (자산규모) 전반적인 금융자산 규모가 꾸준히 성장

금융업권별 자산규모 추이 (조원)

| | FY 07 | FY 08 | FY 09 | FY 10 | 2011.9 | 07말 대비 |
|-------|---------|---------|---------|---------|---------|--------|
| 은행 | 1,567.8 | 1875.3 | 1800.0 | 1841.8 | 1,995.7 | +27.3% |
| 보험사 | 371.4 | 402.3 | 458.7 | 518.8 | 545.9 | +47.0% |
| 증권사 | 130.9 | 148.8 | 177.0 | 199.8 | 253.0 | +93.3% |
| 여전사 | 89.6 | 102.1 | 104.1 | 120.8 | 154.6 | +72.5% |
| 저축은행* | 53.2 | 63.5 | 74.9 | 86.4 | 59.7 | +12.2% |
| 계 | 2,212.9 | 2,592.0 | 2,614.7 | 2,767.6 | 3,008.9 | +36.0% |

* 2011.9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91개사) 기준

□ (수익성)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나, 점차 위기이전의 이익수준으로 회복해 가는 모습

금융업권별 당기순이익 추이 (조원)

| | FY 07 | FY 08 | FY 09 | FY 10 | 2011.1~9 |
|------|-------|-------|-------|---------|----------|
| 은행 | 15.0 | 7.7 | 6.9 | 10.1 | 12.4 |
| 보험사 | 3.8 | 1.9 | 4.0 | 6.1 | 3.2 |
| 증권사 | 4.4 | 2.0 | 2.9 | 2.8 | 1.2 |
| 여전사 | 3.7 | 2.4 | 2.8 | 3.7 | 2.1 |
| 저축은행 | 0.37 | △0.13 | △0.56 | △0.80** | 0.14** |

* 2011.4~9월 수치(3월결산) / ** 2011.7~2011.9월 수치(6월결산)

□ (건전성) 위기 이후 은행 BIS 비율이 14%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

금융업권별 건전성지표 추이 (%)

| | | FY 07 | FY 08 | FY 09 | FY 10 | 2011.9말 |
|------|----------|-------|-------|-------|-------|---------|
| 은행 | BIS비율 | 12.28 | 12.31 | 14.36 | 14.55 | 14.17 |
| | 부실채권비율 | 0.7 | 1.1 | 1.2 | 1.9 | 1.7 |
| 보험사 | 부실채권비율 | 1.98 | 1.86 | 1.74 | 1.15 | 1.13 |
| 증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 | 591 | 617 | 580 | 555 | 518 |
| 여전사 | 카드사 연체율 | 3.79 | 3.43 | 2.23 | 1.68 | 1.91 |
| | 카드사外 연체율 | 2.8 | 4.5 | 3.9 | 3.8 | 3.5 |
| 저축은행 | BIS비율 | 9.09 | 9.08 | 9.43 | 9.05 | 10.31* |
| | 부실채권비율 | 10.2 | 9.4 | 10.3 | 10.6 | 15.2* |

* 2011.9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91개) 기준

II. 2012년 금융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1 대외여건 및 전망

◇ 유럽 재정위기 지속,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 '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대응 여력 약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전망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는 실물·재정부문에서 초래된 것으로 위기해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은 재정위기 해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재정긴축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
 - 미국은 주택·고용 부진과 저금리·재정악화에 따른 정책대응 능력 약화 등으로 빠른 경기회복세 기대는 어려운 상황
 - 중국 등 신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수출감소 등 둔화 우려도 상존

< IMF 경제성장률 전망(11.9.20일, 단위 : %) >

| 구 분 | 전세계 | 미국 | 유로존 | 중국 | 일본 |
|------|-----|-----|-----|-----|------|
| '11년 | 4.0 | 1.5 | 1.6 | 9.5 | △0.5 |
| '12년 | 4.0 | 1.8 | 1.1 | 9.0 | 2.3 |

□ 국제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 및 은행으로 확산될 우려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건전성 악화에 따라 자본확충이 어려워진 유럽계 은행들이 자산감축에 나서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
-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심화 우려

◇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내년도 국내경제는 유럽·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한은·재정부는 '12년도 성장률 둔화를 예상 ('11년 3.8% → '12년 3.7%)

○ 특히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

-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공급이 위축될 경우 창업 부진, 투자감소 등 실물부문 성장기반이 취약해질 우려

- 서민, 저신용층의 경우 소득회복 지연으로 생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원리금 부담은 가중될 우려

□ 국내금융시장도 경제 성장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투자 감소 및 외화차입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 (주요신평사·IB등 평가) 북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한국 신용등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북한권력이양 과정에서 동아시아내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

○ 경기 둔화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 상존

Ⅲ. 2012년 금융정책 방향

〈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

◇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의 탄탄한 성장 지원과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

⇒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와 6개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

【정책목표 1 : 위기에 강한 금융】

- 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유럽 재정위기,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잠재불안 요인에 적극 대비
- ② **금융시스템 선진화** :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 개선 등 다각적인 금융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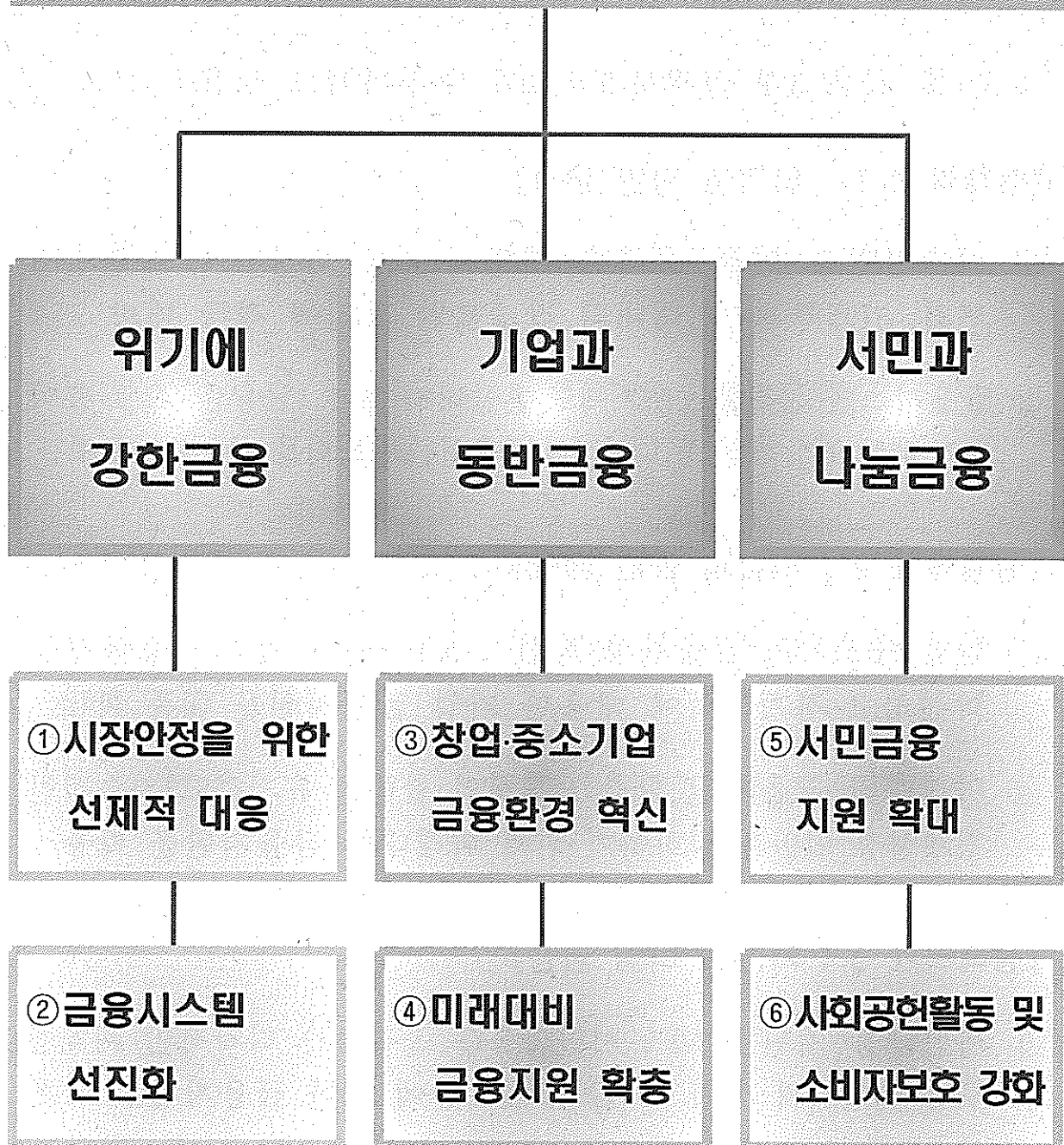
【정책목표 2 : 기업과 동반 금융】

- ③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한 기업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 ④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

【정책목표 3 : 서민과 나눔 금융】

- ⑤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발전시켜 서민 등 금융 애로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⑥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적극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더욱 확충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위기에 강한 금융

기업과

[과제1]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가.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 확립

- ① 시장 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
- ② 위기발생시 신속대응

나.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추진

- ①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가계부채증가 속도관리
 - 대출구조 개선
 - 가계부채 동향 점검 강화
- ② PF 연착륙 추진
 - PF대출 정상화 지원
 - PF대출 건전화 방안 검토

다. 외환건전성 제고

- ① 외화유동성 확보 및 차입선 다변화
- ② 외환건전성 규제 탄력적 적용

라.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 ① 금융회사 이익 내부유보
- ②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
- ③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 ④ 금융회사 감독 강화

마. 금융권 건전성 강화

- ① 저축은행 조기정상화
- ②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

[과제2]

금융시스템 선진화

가. 자본시장 개혁

- ① 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 투자은행 도입 및 헤지펀드 정착
 - 신용평가제도 선진화·파생상품 시장 건전화 추진 등
- ②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 ③ 단기자금시장 개편

나.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 개선

-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②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 ③ 은행소유규제 검토

다.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① 경쟁도입 및 감독시스템 정비
- ② 전자금융 인프라 마련

라.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① 공시·제재 강화
- ②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 ③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마. 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 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② 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 ③ FTA 이행 후속조치 마련
- ④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과제3]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가. 창업 지원 강화

- ① 창업지원 환경 혁신
 - 연대보증제도 개선
 -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
 - 미소금융 지원
 - 청년창업지원펀드 마련
- ② 재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지원 확대, 법인 부실 책임자 등록제도 개선 등

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 ① 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
 -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개선
 - 중기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 ② 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
- ③ 직접금융시장 접근성 확대

다. 정책금융 효율화

- ① 정책금융 공급 확대
- ②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 창업, 신생기업 보증 확대
- ③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① 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② 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 대주단협약 운영기한 연장, P-CBO 확대

주는 든든한 금융



동반금융

서민과 나눔금융

[과제4]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대

가.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 강화

- ①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확대
 -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지원 확대
 - 해외 프로젝트 여신 지원 강화

② 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 보증 확대

③ 코스닥 상장 지원 강화

나. 녹색 산업 금융지원 강화

- ①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 ②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③ 녹색금융상품 출시 유도
- ④ 녹색 경영공시 강화

다.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 ① 노후대비 장기투자상품 마련
 -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
- ②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지급방식 개선
 - 주택연금 취급기관 확대
- ③ 연금보험 활성화
- ④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⑤ 퇴직 금융인 취업지원
 - 금융권 퇴직인력 DB 구축

[과제5]

서민금융 지원 확대

가. 서민 금융공급 확대

- ①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 ②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 자금 지원 강화
- ③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저금리전환대출 대상 확대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나.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① 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강화
 - 불법광고 신종사기 상시점검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환급제도 개선

②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
- 금융회사 피해보상

③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

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

- 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
- ② 대학생 신용예로 완화
 - 채용시 신용정보 이용제한
 -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연체정보 일정기간 집중유예 추진

라. 신용카드 제도 개선

- ①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 ② 직불형 카드 활성화
- ③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④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

[과제6]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가.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① 사회공헌활동 예산 확대
- ② 고졸채용 지속 확대
- ③ 사회공헌활동 지속 확대
 - 학자금보증대출상품 제공
 - 대학생 등 주거안정방안
 - 청년창업 지원
- ④ 사회공헌활동 내실화
 - 사회공헌 담당조직 확충
 - 사회공헌 실적 비교공시 및 경영 실태평가 반영

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①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②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설명 의무 강화
- ③ 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
- ④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① 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 규정
- ② 제제강화 및 분쟁조정제도
- ③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라.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 ① 개인정보 수집 억제
- ② IT인력·예산 강화
- ③ 연간 IT보안계획 수립
- ④ IT보안 의무 위반시 제제강화

1 <제1목표> 위기에 강한 금융

< 기본 방향 >

- ◆ 북한 리스크 대두 이후 보다 확대된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대내외충격 발생에 신속히 대응
 -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요인 관리,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 ◆ 자본시장 혁신,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금융 인프라를 정비
 - 국제적인 금융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금융협력 강화 등 금융국제화도 지속 추진

■ [제①과제]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가.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확립
- 나.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추진
- 다. 외환건전성 제고
- 라.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 마. 금융권 건전성 강화

■ [제②과제] 금융시스템 선진화

- 가. 자본시장 개혁
- 나.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 개선
- 다.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라.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마. 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제①과제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가.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확립

- ◆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기 부진 등 대외 불안요인 지속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 ⇒ 글로벌 충격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발생시 확고한 시장안정 도모

① (상시시장점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신속 시행 추진

-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팀장: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외여건 변화와 이상징후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
 - * 채권, 주식, 외환, 역외 등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은행 외화유동성 현황 등 시장동향을 「비상금융통합상황실」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계량적 점검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성적 점검을 병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
 - * 위기 예측력이 높은 지표(외화유동성, 단기외채, 자산건전성 등) 및 리스크 요인(가계부채, 신용카드 대출, 부동산 PF 등)을 점검
- 글로벌 IB, 해외사무소, 외은지점 등과 Hot-line을 가동하여 국제금융시장 및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

② (위기대응) 위기 발생시에는 시장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既마련된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신속·과감하게 시행

- 위기대응계획의 상황별 조치사항(action plan)을 재점검·보완하여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도 사전 정비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관된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

나.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추진

◆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PF대출의 건전성이 취약

* 금년 1~9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 : 5.4% (은행 4.2%, 제2금융권 6.9%)

⇒ 향후 경기침체 장기화시 잠재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PF대출의 연착륙을 지속 추진

Ⅰ (가계대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은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

○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된 가계부채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 ('08)8.7%→('09)7.7%→('10)8.1%→('11.1~9월)5.4%

- 은행권은 예대율 및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 은행권 가계대출의 적정증가를 유도

*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일시상환형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 부문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계획('16년말 30% 목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세제혜택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저위험 대출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0.125%→0.05%) 등

** 소득공제한도 : (i)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시 확대(1,000만원→1,500만원)
(ii)여타 대출시 축소(1,000만원→500만원)

- 정부·한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하여 커버드 본드·MBS 발행여력을 제고

○ 가계부채 모니터링 등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

-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면밀하게 점검

- 저소득·저신용층의 상환능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

○ 가계부채 동향 점검 등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

② (PF대출) 사업성 있는 PF대출 정상화를 지원하고 PF부실 재발을 방지

- 금융회사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

- 특히,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하여 최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

*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금년중 1.8조원의 부실채권 매입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 추진

* 금년 1차 입찰(31개 사업장, 1.3조원)을 실시하여 민간사업자 유치 추진 중

- PF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증에 의존한 대출관행 개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 시스템 정착 유도 등을 위한 PF대출 개선방안을 마련

다. 외환건전성 제고

◆ 정부의 감독강화, 은행의 자체확보 노력 등으로 국내은행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상황

* '11.11말 국내은행이 보유한 외화 현금유동성은 6달 대비 약 6배 증가

⇒ 외화유동성 확보 및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대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

1 (유동성 확보) 외화유동성 확보 및 차입선 다변화 지속 추진

○ 국내은행 외화 Stress Test를 통해 외화유동성 여력을 지속 점검하고, 부족분은 구체적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확충토록 독려

* 위기발생시 최소 3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외화유동성 자체 확보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외화 여유자금을 확보

* 선제 확보한 여유자금은 유사시 중소기업 무역금융·외화대출 등의 용도로 활용

○ 중동자금 활용 등 외화자금 조달창구를 다변화

* 수은은 사우디에서 7.5억리알(약2억불)의 현지통화표시 채권 발행('11.11.24)

2 (건전성 규제) 외환건전성 규제의 탄력적 운용

○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 전개상황, 외화수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운용함으로써 거시건전성 확보

○ 외은지점, 국내은행 해외점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외환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

○ 차입 만기 장기화 및 불요불급한 외화자산 증가억제 등 지속 유도

* 국내은행 외화부문 경영계획 밀착 점검, 성과지표(KPI) 설계시 외환건전성 부문 강화 등

라.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 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이 안정적이나 대내외 불안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

* 은행 당기순이익(조원) : (FY09)6.9 → (FY10)10.1 → ('11.1~9)12.4

⇒ 금융회사의 내부유보 확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

① (내부유보) 금융회사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유도

○ Stress Test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자본적립·내부유보 적정성을 분석하여 총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과도한 배당을 억제

* 최근 월가 점령시위 등으로 촉발된 과도한 이익배분 관련 사회적 비판과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

② (건전성) 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방지하는 등 건전성을 제고

○ 은행의 예대율*('12.6말까지 100% 충족)을 지속 관리하고, 여전사에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를 도입

* 시중은행 예대율(%) :

('07말)122.2→('08말)118.0→('09말)112.4→('10말)98.2→('11.10말)97.0

* 여전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배수 :

('07말)5.9→('08말)6.5→('09말)5.3→('10말)5.1→('11.9말)5.3

○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 추진

*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채권유형별 산정방식으로 개선 등

** 담보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업계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최소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SIFI)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도입방안을 검토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③ (자본적정성) 적절한 자본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 은행은 바젤Ⅲ 자본규제('13년부터 단계적 도입) 및 유동성 규제('15년 도입) 시행에 대비

* 은행별 자본적정성 유지계획을 수립·점검하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제도 도입을 추진

- 보험사는 기본자본 요건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 산정기준을 강화

* 자기자본을 엄격하게 적용(현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한도없이 인정)하고, 결손누적으로 대손준비금 미적립시 요적립액을 지급여력에서 차감 등

-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여 기본자본 중심으로 운영

* BIS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 규제 도입추진,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 신협은 출자금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확충을 유도

* 조합원당 출자금 한도확대(총출자금의 10%→15%), 배당금의 출자금 전환 허용,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익년도에 환급

④ (감독체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

- 외은지점 진입 관련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영업형태별 감독 방안 등 외은지점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검토

-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검사 결과 등에 대한 시정조치요청권을 부여 (예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추진중)

- 거시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상설협의체 설치

마. 금융권 건전성 강화

◆ 2011년 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및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해당 업권의 건전성을 제고

⇒ 주기적인 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

①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으로 전환

○ 현재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 구조조정기금에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45개)에 대해 자본확충을 이행토록 독려

* 연도별 BIS비율 목표(1년내 6%, 2년내 7%, 3년내 8%) 달성

○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에도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히 정리

* 필요시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 및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 PF채권 추가 매입 추진

○ 충분한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추진(예보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 본연의 서민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허용 등

② (상호금융)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해당 업권의 안정을 유도

○ 신탁은 경영개선요구대상 신탁의 자구노력 촉진을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보기금 적립을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을 검토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

가. 자본시장 개혁

◆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아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비중**이 낮은 실정

* 증시 주가 등락률 및 일중 최대변동률('11.8-9월중, %) :

미국($\Delta 10.4$, 5.9), 영국($\Delta 12.1$, 7.6), 일본($\Delta 11.7$, 3.3), 한국($\Delta 17.8$, 8.0)

** 자금조달 비중('10년 기준) : 미국 1.25, 일본 1.51, 호주 3.70, 한국 0.78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

Ⅰ (인프라) 자본시장 저변확대 및 증시 안전판 마련 등 자본시장 관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

-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고 전문 사모펀드(헤지펀드) 안착을 도모
- 대체거래시스템(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중앙거래청산소(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
- 기업 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 시장투명성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를 선진화
- 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을 건전화
 - * 장내옵션 거래단위 조정, 장내파생상품 현금예탁비율 상향, ELW 상장 기준 강화, FX마진거래 개시증거금을 상향, ELS 투자자보호 강화 등
- 연기금의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고

② (금융투자산업) 진입기준을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

-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IB) 출현과 병행하여 전문화·특화된 “작지만 강한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을 마련

* 연구용역실시 등을 통해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 유도 등 지원방안 마련

- 자산운용업은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인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펀드 판매채널을 경쟁적 구조*로 개선

* 계열운용사 판매비중 축소,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회사에 펀드판매허용,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 개선 등

- 신탁업은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 등 「신탁법」 개정(12.7.26 시행)에 따라 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

③ (단기자금시장)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콜시장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을 개편

- 증권사의 과도한 콜 차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단기조달 장기운용의 유동성 리스크를 방지

* '11.6월 ~ '12.6월까지 자기자본의 25%까지 차입한도를 단계적 축소

* 증권사 콜머니 현황(조원): ('11.5말) 13.9 (9말) 10.5 (10말) 9.4 [5말 대비 △4.5]

- 콜 시장은 '14년부터 은행 중심의 시장으로 원활히 개편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기반 마련

* 제2금융권 자금조달을 위해 기관간 RP시장 및 전자단기사채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허용도 검토

- 기관간 RP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단기물 금리 기간구조 산출

* 현재 CD금리(3개월)는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나.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 개선

◆ 대주주·경영진 모럴헤저드, CEO·사외이사의 밀착관계 형성 등 대내외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업권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 체계를 마련

① (규율체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업권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형성

○ 이사회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를 '(현행)1/2이상→(개선)과반수'로 구성,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참여금지를 통해 영향력 방지 등
-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 상근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대주주 의결권 제한(3%), 감사위원 선임시 분리선출방식 도입 등

○ 금융회사 보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

- 임원 유형별(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연동 보수지급, 성과보수 이연지급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확립
- * 보수위원회 설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공시도 의무화

○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 의무화

- * CEO를 포함한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

② (대주주자격) 대주주에 대해 자격요건 유지의무(주기적 자격심사) 부과를 소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도모

○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주기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고 자격미달시 요건충족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을 부과

③ (은행소유규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포함한 은행 소유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다.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IT발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은 미흡

* 전자금융거래건수 : ('08년)87억건 → ('09년)98억건 → ('10년)114억건

⇒ 전자금융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갈 필요

①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감독시스템도 정비

○ 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참여자를 확대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완화 등

○ 해외 전자금융 시스템 및 감독체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 제도를 개선

② (전자금융 인프라) 전자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촉진

○ 전자단기사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여 실물증권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

③ (전자문서) '종이 없는(paperless)' 친환경 금융거래 기반 마련

○ 보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를 전자문서로 대체

* 1개 보험사당 A4용지 1.53억장(나무 15,300그루, 탄소 2,534톤 발생) 절약 가능

○ 자동이체를 위한 본인확인 서명도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토록 개선

라.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거래·부실감사·회계분식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가 상존
⇒ 공정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① (불공정거래)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제재를 강화

- 대량보유(5%) 보고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임원의 횡령·배임, 회계분식 등의 전력을 사업보고서에 공시
- 저축은행의 허위·지연 공시 등에 대해 형사벌(현재 과태료)을 부과하고,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의무 부과

② (회계감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

- 과징금 상한 조정(5억→20억원),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제한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
- 상장법인·금융회사 감사법인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품질관리 능력 및 손해배상책임능력)을 요구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

③ (자금세탁) 국제기준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추진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 개선
 - *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제재 개선, 테러자금 관련 거래제한 범위 확대, 업종·규모·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등
- 축적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는 전략적 심사·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금융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외환거래 및 행정정보 등

마. 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 국제적인 금융협력 등을 통한 정책공조가 중요해지고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등 국제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

⇒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충, 금융중심지 육성,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

1 (글로벌 파트너십) 주요 신흥국 및 선진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구축

- 금융당국간 협력약정(MOU) 체결을 통해 정보교류 및 감독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 현재 미국, 독일 등 18개국 30개 기관과 MOU를 체결
- 신흥국 감독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 한·중·일 당국간 핫 라인(Hot Line) 활성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

2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 기반을 지속 확대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목표로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11~2013)」을 차질 없이 추진
 - * 4대 핵심영역(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별 주요 금융정책과제 추진
-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시행('12.4월) 및 서울국제금융센터 완공('12.10월)을 계기로 국내외 금융회사의 금융중심지 집적을 가속화
- 금융중심지 IR을 통해 금융중심지정책 및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 금융사 국내 진입을 유도
 - * 서울시·부산시와 공동으로 미주·유럽 등지에서 금융중심지 홍보 IR 실시 (하반기)

③ (국제논의 주도) G20, FSB, BCBS 등을 통한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국내제도도 정비

- Basel II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등의 세부규제방안 마련 과정에서 선진국·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리더십 발휘
 - * 글로벌 SIFI에 대한 각국 협의체인 위기관리그룹(CMG : Crisis Management Group) 및 감독자협의체에 참여
-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FSB 이행점검 및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
 - * (주요 점검 대상 정책과제) Basel III,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혁, 보상 관행,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포함한 G-SIFI 정책패키지, 그림자금융 등

④ (FTA 이행) 한·EU 및 한·미 FTA 이행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로 활용

-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 관련 제도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검토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
 - * 해외위탁 근거 신설 및 감독 강화(수탁자 감독당국의 검사권 보장, 수탁회사의 조사동의, 국내 법령 준수 의무 부과 등)
- 4대 공제(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보험 관련법령·규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유예기간 2~3년)
 - * 농업협동조합법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개정완료
- 한·미 FTA 발효시 공제상품에 대해서도 상품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제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
 - *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민영보험과 동일한 상품심사 기준 적용 추진

⑤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원 다변화 지원

-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강화
- 금융공공기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해외진출 효과를 극대화

〈 기본 방향 〉

- ◆ 청년·기술창업 환경을 혁신하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확산을 적극 추진
 - 여신관행 개선, 정책금융 효율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
- ◆ 녹색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지원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 기반을 강화

■ [제③과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 가. 창업 지원 강화
- 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 다. 정책금융 효율화
- 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제④과제]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 가.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 강화
- 나. 녹색 산업 금융지원 강화
- 다.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제③과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가. 창업 지원 강화

◆ 최근 청년층의 벤처창업과 녹색산업 등 첨단기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추세

* 첨단 고기술 제조업 창업(개) : ('00년) 10,407 → ('09년) 5,207

* 2030 청년 벤처CEO 비중(%) : ('00년) 54 → ('10년) 10

⇒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붐업(Boom-up)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

① (창업환경 혁신)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

○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하되, 공동 창업시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

○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 지원 : (현행) 5천만원 → (개선) 3억원

*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 ('11년) 17.2조원 → ('12년) 21.7조원

○ 창업을 통한 자활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서민가계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을 적극 지원

* 청년층 이용이 부진(20대 대출자 비율: 6.7%)한 미소금융에 청년 창업지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경영컨설팅까지 연계 지원

○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기업의 창업을 지원

- 3년간 0.5조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여 1만 여개 기업의 창업 지원

②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재기 중소기업CEO의 신용회복을 지원

○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 확대 추진

* 현행 신·기보 원금감면한도는 30%(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50%)

○ 법인의 채무불이행 부실책임자로 등록되는 '관련인 정보'를 신용회복 시작시 삭제

- 또한, 2년 이상 성실 상환시 '신용회복 지원 중 정보'도 삭제

* 현재는 법인 채무와 관련없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 시작시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2년이상 성실상환시 '신용회복지원 정보'도 삭제

○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 보다는 대출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금융회사는 대출액·담보 등 외형중심의 대출관행을 유지

* 중소기업 직접금융(주식·채권) 비중(%)
: (07년) 7.3 → (09년) 20.1 → (11.1~8월) 11.2

⇒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을 제고

① (여신관행 개선)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여신 관행을 정착

○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형 중심의 중기 대출 심사관행을 혁신

○ 중소기업 금융 특화 CB* 육성, 공공정보 공유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

* '05년 중소기업 정보 공유를 위해 KED를 설립하였으나 충분한 정보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기능이 미흡

② (투자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패러다임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

○ 대출·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지원 추진

* ('12년) 정책금융공사(신규 1,000억원), 산은(신규 1,000억원), 기은(신규 2,000억원)

○ 정책금융공사의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

* ('11년) 700억원 → ('12년) 1,200억원

③ (직접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신설*

* 코스닥시장 진입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신시장 운영

○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술강소기업의 상장 추진을 위해 상장특례 확대 등 코스닥시장 제도개선을 추진

* 현재 상장특례가 인정되는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이외에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인증에 근거한 별도의 특례기준 마련

○ 증권회사의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업금융 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 현재는 기업금융 부분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더라도 자금지원(고유재산운용)으로 연결되는데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이 제한요인으로 작용

다. 정책금융 효율화

- ◆ 정책금융기관은 대내외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수행
⇒ 정책금융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

① (정책금융 강화) '12년도 중기 정책금융공급 규모를 실물경제 부진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단위:조원) >

|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 '12년 | |
|----|------|-------|-------|------|--------|-------|---------|
| | | | | 계획 | 실적(잠정) | 계획 | '11년 대비 |
| 합계 | 80.7 | 104.8 | 104.6 | 92.7 | 106.1 | 106.4 | +13.7 |

* '12년 계획(조원) : 정책금융공사(4.7)+산은(11.0)+기은(36.0)+신보(38.0)+기보(16.7)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을 '12.12월까지 1년 연장

* 지원실적(조원) : ('09년) 21.5 → ('10년) 5.3 → ('11.1~11월) 1.2

② (자금배분 효율화)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자금 배분을 통해 창업·신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신·기보의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③ (일자리 창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 창업 등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

- 산은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를 크게 확대

* ('11년) 579명 → ('12년) 1,328명 (+749명)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 * ('11년) 7.3조원 → ('12년) 8.4조원

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지속

◆ 경기둔화, 일부 업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족·부실화 가능성이 증가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지원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

① (구조조정)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주도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

-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시장불확실성 해소를 도모

- *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평가(7~10월)를 실시하고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시평가를 실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만료('13년말)에 대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의 정착 방안을 검토

- *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여타 구조조정 제도와의 조화방안 등을 모색

② (취약부문) 경기 취약업종 및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적기 대응

- 경기민감업종(건설·조선·해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등을 통해 자금사정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 필요시 업종별 수시평가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대주단협약 운영기한 연장('11년말 → '12년말)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

- '12년중 발행수요 등을 보아가며 건설사 P-CBO를 1조원 추가발행

- * '10.12월~'11.9월중 1.1조원 既발행

[참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KBK경제연구소) 결과

◇ 중소기업(3,000개), 창업기업(420개),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600명)를 대상으로 금융 수요·공급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문·면접 조사

① 수요자(창업·중소기업) 측면

- (은행대출 곤란) 창업 초기기업의 63.1%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 은행대출이 곤란한 사유로 까다로운 대출심사(44.5%), 과도한 담보 요구(41.9%),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38.9%) 등을 지적
- (연대보증 부담)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가 상당한 수준(25.1%)인 것으로 조사
 - * 연대보증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43.4%),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대보증인 입보제한(28.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직접금융 이용 저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주식,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차입 등 간접금융에 의존
 - * 주된 자금조달방식 : 은행대출 95.5%, 신용보증대출 32.6%, 주식·회사채발행 4.4%

② 공급자(금융기관) 측면

- (기술력평가대출 미미)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여신 심사시 기술력보다 담보, 신용등급 등을 중요하게 고려
 - * 중소기업 여신취급시 고려요인 : 담보 55.5%, 신용등급 50.7%, 기술력 11.9%
- (신용대출시 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유로 사업성평가의 어려움(61.5%),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문제(59.3%), 신용평가 정보 부족(39.1%) 등을 지적
- (부실발생시 책임문제) 여신 심사시 규정·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부실발생시 제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제④과제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가.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 강화

◆ 미래성장동력인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 등을 확대·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공급, 기업의 R&D 지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

① (자금 공급)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4개 펀드, 6천억원) 추가 조성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펀드 집행을 제고

* ('11년말) 14개 펀드, 3조1,746억원 → ('12년) 18개 펀드, 3조7,746억원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외화 온렌딩제도 도입을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특별온렌딩 : ('11년) 1.29조원 → ('12년) 1.50조원

- 원전 등 해외 프로젝트 여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간 공조 체제를 강화

* 정책금융기관간 협의회 구성·운영, 업무협조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② (R&D 지원) R&D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

- R&D 및 既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

* R&D 자금공급 규모(산은·기은) : ('11년) 0.99조원 → ('12년) 1.1조원

- R&D 단계별로 기술력을 평가하고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R&D특례보증을 확대

* 기보 R&D 특례보증 : ('11년) 0.9조원 → ('12년) 1.4조원

③ (상장 지원) 코스닥 상장특례('11.3월 도입)를 활용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상장 지원을 강화

나. 녹색 산업 금융지원 강화

- ◆ 녹색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
-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녹색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① (자금공급)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공급을 확대
-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조원) : ('11년) 8.6 → ('12년) 10.9

② (인력양성)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 학교별 교육과정('10~'11년)에 대해 실시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12년 이후 학교별 예산배정에 활용

③ (녹색금융상품)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출시 유도

- 녹색 수요자를 인증대상에 포함하는 등 녹색인증 대상확대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
- * 현행 녹색인증제도는 녹색상품 공급자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녹색상품 소비증가 → 공급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이 어려움

④ (인프라 구축) 녹색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녹색 경영공시 강화

- 온실가스 배출업체 등의 녹색경영정보(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 *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공시 제도는 既 시행('11.1월)

다.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 급속한 고령화·베이비붐 세대 퇴직시기 도래 등에 따라 은퇴·노후 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 퇴직연금 규모는 '06년말 0.8조원에서 '11.10월말 39.2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15년말 90조원에 달할 전망

⇒ 노후나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퇴직금융인의 재취업을 지원

① (장기펀드)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노후대비 장기투자상품을 마련

○ 장기·분산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

* (예)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개인, 10년 이상 적립

- 업계의 펀드운용·판매보수 최적화 및 투자자의 연령·위험 성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개발을 유도

② (주택연금)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 추진

○ 노후 연령별 지출형태를 감안하여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

* 의료·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의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30%→50%로 확대(주담대 상환·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이미 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 가능)

** 종신지급하더라도 지급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지급후반기에는 적게 지급하는 전후후박(前厚後薄) 형태로 월지급금을 지급

○ 주택연금 취급기관을 확대(11개 은행 → 은행·보험사 등 추가)하여 접근성을 제고

○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과 연계 마케팅 추진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

③ (연금보험) 노후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

-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연금보험 기피 계층을 흡수
- 고연령층의 위험보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위험을 및 관련 통계 제공 등 노후건강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제공
 - * 100세 이상 고연령층도 민영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별 산출기간을 확대(예:암위험률 82세 → 112세)
- 가입자의 취향에 따라 연금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 상품 수익률 및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

④ (퇴직연금)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효과적 자산운용 추진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추진
 - *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주식 및 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규제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DC 및 IRA의 경우 채권형펀드 투자만 허용

⑤ (취업지원) 퇴직 금융인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금융권 퇴직 인력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권 퇴직인력 DB'를 구축
- 금융권 퇴직자와 기업간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운영중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등 추진

3 <제3목표> 서민과 나눔금융

< 기본 방향 >

- ◆ 3대 서민금융·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을 확대
 - 신용회복지원 확대, 신용카드 제도개선 및 피해예방·구제 강화 등을 병행하여 서민층 금융애로를 해소
- ◆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등 나눔경영을 활성화
 - 서민 등 금융약자를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IT보안 강화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도 확충

■ [제⑤과제] 서민금융 지원 확대

- 가. 서민 금융공급 확대
- 나.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
- 라. 신용카드 제도 개선

■ [제⑥과제]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 가.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라.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제⑤과제

서민금융 지원 확대

가. 서민 금융공급 확대

◆ 유럽 재정위기 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 우려

⇒ 내실있는 서민금융 지원으로 서민층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1 (3대 서민금융) 3대 서민금융을 통해 서민금융공급을 확대

○ 미소금융은 신상품을 개발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는 기업·은행재단에서만 '특성화 상품'을 통해 대출

-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리의 미소금융 자금을 지원

* 전통시장 미소금융 지원채널(개) : ('11)300 → ('12)600 → ('13)900

- 미소금융을 점검한 후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전면 쇄신방안을 마련·추진

○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고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요건을 완화

○ 새희망홀씨는 연간 대출 공급규모를 지속 확대('11년 1.2→'12년 1.5조원)

< 3대 서민금융 개요 및 실적 >

| 구분 | 미소금융 | 햇살론 | 새희망홀씨 |
|-----|---|---|---|
| 목표 | · 10년간 2조 2천억원 | · 5년간 10조원 | ·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 10% |
| 대상 | ·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이하 |
| 이자율 | · 연 2~4.5% | · 연 11~14% | · 연 11~14% |
| 실적 | · 4,614억원(56,336건) ('08.7월 ~ '11.11.30) | · 18,374억원(204,946건) ('10.7.26 ~ '11.11.30) | · 11,913억원(148,759건) ('10.11.8 ~ '11.10.31) |

② (주택자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구입시 지원하되 12년중 일정한도 내에서 공급(연소득 2,500만원 이하는 既공급중)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5,000억원 한도)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으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자 지원

③ (금융비용부담) 전환대출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 전환대출인 신용회복기금의 바뀐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 (현행) 3천만원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전환대출 허용 → (개선) 바뀐드림론을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상환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총 3,0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전환대출 허용

※ 신용회복기금의 바뀐드림론 개요 및 실적

- ▶ (개요) 대부업체 등의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11% 수준의 은행채무로 전환
- ▶ (재원) 신용회복기금이 보유한 금융회사 출자금
- ▶ (실적) '08.12~'11.10월말 기준 총 6.8만명, 6,852억원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중개수수료를 인하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1.11월)

- (현행) 최대 12% 수준 → (개선) 상한 5%

-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안내, 환승론 서비스 등을 확대

*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중개업무도 병행하여 본인의 소득·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강화

나.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서민, 노약층,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및 불법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금액(억원) :

('08년) 877 → ('09년) 621 → ('10년) 554 → ('11.1~11월) 879

⇒ 3대 금융사기(私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① (私금융 피해) 불법 금융거래로 인한 서민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 행위, 불법추심, 신종대출사기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지속

-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법 私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중개수수료 환급제도 개선* 추진

* (예) 고객이 대출중개기관(현행)이 아닌 대부업체(개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환급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등을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대출권유 행위를 억제

*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

②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 가장 빈발하는 사기 유형에 대한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사기유형·편취방법 등에 따라 유형화·분석
 - * 비대면 인출시의 본인확인절차 강화,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절차 강화, 비대면 인출·이체시 한도조정 등 규제 강화
-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협의회"를 구성
 - * 대만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대응으로 교통부, 법무부,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원이 참여하는 '反詐欺부서통합협의회의'를 구성
- 금융위, 경찰청, 방통위,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금융-경찰-통신"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방지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예: 원금일부 감면 등)을 하도록 적극 지도·감독
- 피해자의 성별·연령·피해규모 분석 등을 통해 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홍보를 강화

③ (보험사기)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금지 의무 신설 및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마련
-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을 제고
 - 회의개최 정례화(분기별 개최), 유관기관간 공동조사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추진
- 자동차보험금 누수요인, 병의원 연루 보험사기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
- 공익광고 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

-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감소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으나 사후 신용회복지원과 함께 신용불량 방지 등 사전 노력도 필요한 상황
- ⇒ 신용회복 지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대학생 취업애로 요인을 개선

① (신용회복) 성실한 신용회복자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부담을 경감

-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관(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기금)의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

* ('10년) 700억원 → ('11년) 약 900억원 → ('12년) 1,000억원

- 저리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

- 신용회복 지원시 채무재조정 비용 및 신용회복 신청비 면제 대상을 확대

* 긴급상황 발생을 이유로 하는 채무재조정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 군복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용회복 신청비(5만원) 면제

② (취업지원) 채용시 신용정보 이용제한 등 대학생 취업애로 완화

-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직원 채용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
-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졸업후 일정기간(예:2년) 동안 정보의 집중 유예를 추진
-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신용회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라. 신용카드 제도 개선

◆ 그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약 70%)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1.8%이하) 적용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

① (수수료율 체계)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 수수료율 체계를 업종별 중심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

* 수수료 부담의 전반적 경감,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축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유지

② (직불형 카드) 카드결제 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

- 직불형 카드 비중을 5년내('16년까지)에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

*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09년, %) : 한국 9.0,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

| 카드종류 | 신용카드(A) | 직불(체크)카드(B) | 차이(A-B) |
|-------|----------|-------------|----------|
| 일반가맹점 | 1.5~3.6% | 1.5~1.7% | 최고 2.1%p |
| 중소가맹점 | 1.8%이하 | 1.0% | 최고 0.8%p |

- 소비자의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충

* '12년부터 소득공제율을 “신용 20%·직불 25% → 신용 20%·직불 30%”로 개선한데 이어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카드사 및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을 활성화

* 계좌 이용 수수료 인하, 다양한 유형의 신용·직불 겸용카드 발급 유도 등

○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직불형 카드수납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등

③ (표준약관)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계약행태를 시정

○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카드사 귀책사유로 판매대금 지급 지연시 카드사 배상책임을 명시

○ 판매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카드사의 자의적인 대금지급 가능성을 차단

*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변조 등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

○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를 의무화

*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1개월전 서면 통보 의무화

④ (조회시스템)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회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⑤ (실태점검)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시정

○ 부당한 수수료율 적용 등 가맹점의 제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가맹점 권익을 보호

가.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월가 점령시위(Occupy Wall Street)'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요구 및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확산

⇒ 금융권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Richess Oblige)을 활성화

①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확대

- 금융권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숙자 및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확대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예산 : ('11년) 0.9조원 → ('12년) 1.3조원

② 금융권의 고졸채용 확대를 지속 유도

- 고졸채용자의 승진 불이익 방지 및 학업 지속 등 금융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금융권은 '11~'13년 중 약 8,718명 채용 예정
연평균 채용 규모 : ('09-'10년 1,813명, '11-'13년 2,906명)

③ 대학생 및 소외계층 지원, 청년창업 지원, 고졸채용 확대 등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

- 은행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고금리 채무를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학자금보증대출상품 제공

○ 지방출신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강구

○ 펀드조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

④ 수수료 인하·이자부담 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정례적인 재점검 관행을 정착

* 취약계층에 대한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하, 신용공여 연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저축성 보험 중도해약환급금 상향조정 등

⑤ 사회공헌활동이 전시성·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

○ 금융회사별로 사회공헌 전담임원 임명 등 담당조직 확충, 사회 공헌 휴가제도 도입 등 추진

○ 금융회사별 사회공헌 실적을 비교공시(naming and shaming)하는 방안을 마련

○ 사회적 책임 이행상황 및 성과 등을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신설 또는 평가비중을 제고

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소비자 주권은 커지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이나 감독기준이 미흡한 상황

⇒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

① (공시)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부담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

○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 협회 주도로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

- (은행) 미공시되고 있는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를 공시

- (카드) 신용카드 금리수준별 회원분포와 평균금리 공시대상을 확대

- (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

- (보험) '공시내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시내용을 쉽게 재정비하고 활용도를 제고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제상품의 공시 강화방안도 마련 추진

- (신협) 대출종류별·신용등급별 금리 수준 등 비교공시대상을 확대

② (상품설명)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 노인 등 보험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상품광고 규제 및 상품 설명의무 강화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 세금추징으로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를 강화

* 해지시 세금추징 패널티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권역별 모든 연금저축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수수료 및 이율 공시와 경과기관별 수익률 통합비교공시를 의무화

③ (금융교육)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서비스 강화

- 연령별·계층별 교육수요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연령별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개발, 금융교육 콘텐츠를 e_book 및 web zine 형태로 보급하여 원스톱 학습 환경 구축

- 찾아가는 금융교육·방문상담 실시 및 참여형·토론형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현장서비스 활성화

* 지방주민을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MOU체결)으로 금융교육 확대, 재래시장 등 현장상담 및 교육 실시, 대학방문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

-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보다 쉽게 표현하고 동종 금융상품간 비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모범 가이드라인 개발

④ (감독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감독을 강화

-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에 대한 사모발행으로 제한하고 공모시에도 창구 직접판매는 금지

- 수수료 과다책정 등 불합리한 연금약관에 대한 심사 강화

- 보험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 방식 개선을 추진

* 국제회계기준의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이 “원가→시가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전문계리법인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개별 업권법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규제 체계가 미흡한 실정

⇒ 금융소비의全过程(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

① (판매행위)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 규정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

* (예) 설명의무 (①투자성상품 : 투자 위험, ②예금성상품 : 이자율·중도 해지 수수료, ③보장성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② (제재강화) 과징금제도 신설 등 위반시 제제도 대폭 강화

*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규제위반시 당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 이익의 3배 범위에서 부과

③ (분쟁조정제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 5백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진행 중 소송제기를 금지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④ (금융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금감원내에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한 준독립기구로 설치

라.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 전자금융은 외형적으로 성장*(전체 금융거래 80%)하고 있으나,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증가 및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발생

* 일평균 인터넷뱅킹 거래건수 약 38백만건, 거래규모 약 32조원

** '11년 고객정보 유출건수 총 5차례, 약270만건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전자금융 보안체계를 강화

① (정보보호) 이용자 편의제고 및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금융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억제

-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

② (IT보안체계) 금융회사의 IT보안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강화

- 금융회사가 적정수준의 보안관련 인력·예산*을 유지하도록 유도

* (인력) 전체인력의 5%를 IT 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보안인력으로 확보
(예산) 전체IT예산의 7%를 보안예산으로 확보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해 취약점을 정례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역량을 제고

- CEO 책임하에 연간 IT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IT보안관련 책임성을 강화

- IT보안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침해유인을 최소화

* 중대한 보안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시 형사처벌 신설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 6.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3. 평가

II.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방향>

<금융부문 대응방안>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2. 가계대출구조 개선방안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4.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III. 추진 계획

(별첨) 금융부문대책 추진일정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 11.3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가계대출이 752.3조원*
(은행권 435.1조+비은행권 317.2조), 판매신용이 49.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364.9조(은행 289.9조, 비은행 75.0조)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

□ 가계부채는 99년~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

□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경제·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09년 기준으로 GDP대비 86%(12위), 가처분소득 대비 153%(9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OECD평균 |
|-----------------|------------|-------|-------|---------------------|--------|
| ▪ 가계부채/GDP(%) | 85.9 (12위) | 100.2 | 110.0 | 80.4 | 77.0 |
|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152.7 (9위) | 132.0 | 171.5 | 129.5 ¹⁾ | 134.1 |

주)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09년, 통계가 공표된 27개국 기준), 1) 08말 기준

< 가계부채 추이 >

* 한은 가계신용기준

| (조원) | '99말 | '02말 | '05말 | '07말 | '09말 | '10말 | '11.3말 |
|----------------------|-------|-------|-------|-------|-------|-------|--------|
| 가계신용 | 214.0 | 439.1 | 521.5 | 630.7 | 733.7 | 795.4 | 801.4 |
| 가계대출 | 191.9 | 391.1 | 493.5 | 595.4 | 692.0 | 746.0 | 752.3 |
| - 은행 | 76.3 | 222.0 | 305.5 | 363.7 | 409.5 | 431.5 | 435.1 |
| 주담대 | - | - | 190.2 | 221.6 | 264.2 | 284.5 | 289.9 |
| - 비은행 | 115.6 | 169.1 | 188.0 | 231.7 | 282.5 | 314.5 | 317.2 |
| (상호금융) ¹⁾ | 37.8 | 45.7 | 77.8 | 101.4 | 132.2 | 154.8 | 157.4 |
| (여전사) | 16.2 | 57.1 | 23.8 | 30.7 | 31.5 | 36.3 | 36.9 |
| 주담대 ²⁾ | - | - | - | 46.6 | 64.6 | 73.1 | 75.0 |
| 판매신용 ³⁾ | 22.1 | 47.9 | 28.0 | 35.3 | 41.7 | 49.4 | 49.1 |

1) 단위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 보험사·여전사 등 제외,
3) 카드사 신용판매, 여전사 및 판매회사(백화점 등) 제공 신용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99~02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 05~06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증

| (연평균 증가율) | '99~'02 | '03~'04 | '05~'06 | '07~'10 |
|--------------|---------|---------|---------|---------|
| ▪ 가계 부채 (%) | 24.3 | 4.0 | 10.7 | 8.1 |
| ▪ 경상 GDP (%) | 9.5 | 7.1 | 4.8 | 6.6 |

□ (99~02년) 시중유동성 증가, 기업대출수요 감소, 가계수지 악화 등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연평균 24%)

○ 금리급락 등으로 시중유동성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은 구조조정·재무구조 개선 추진으로 대출수요가 감소

* 유동성 증가율(L) - GDP 증가율(%) : (99년)△0.3, (00년)2.1, (01년)4.0, (02년)3.0

* 제조업 부채비율(%) : (97년) 396, (99년) 215, (01년) 182, (02년) 135

- 가계대출 수요가 기업대출수요 감소를 점진적으로 대체

* 은행대출 증가율(%) : [가계] (99년)44.2, (00년)40.5, (01년)46.1, (02년)41.7
[기업] (99년)18.1, (00년)18.0, (01년)△10, (02년)24.8

○ 외환위기이후 소득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교육비·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급감

* 개인 저축률(%) : (99년) 21.6, (00년) 8.6, (01년) 4.8, (02년) 0.4

* 가계지출 중 교육비+통신비 비중(%) : (97년)13.6, (99년)15.6, (01년)17.2, (02년)17.6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으로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및 판매신용도 30%대 증가세를 시현

*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율(%) : (99년)35.0, (00년)107.4, (01년)30.0, (02년)30.8

* 여전사 판매신용 증가율(%) : (99년)30.9 (00년) 35.5, (01년)62.3, (02년)29.2

□ (03~04년) 카드사태 등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연평균 4.0%)

- 여전사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판매신용은 감소

* 03~04년중 연평균 증가율(%): (은행대출)11.6, (비은행대출)1.2, (판매신용)△27.4

□ (05~06년) 부동산경기 과열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연평균 10.7%)

-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경쟁 등 시중자금의 주택시장 쏠림현상 발생

* 수도권 아파트가격/은행 주담대 증가율(yoy, %): (05년)7.2/12.4, (06년)24.6/14.1

□ (07년 이후) 주택대출 규제 강화, 기업 자금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연평균 8.1%)

- 은행권은 경제성장을 이내로 조정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의 증가폭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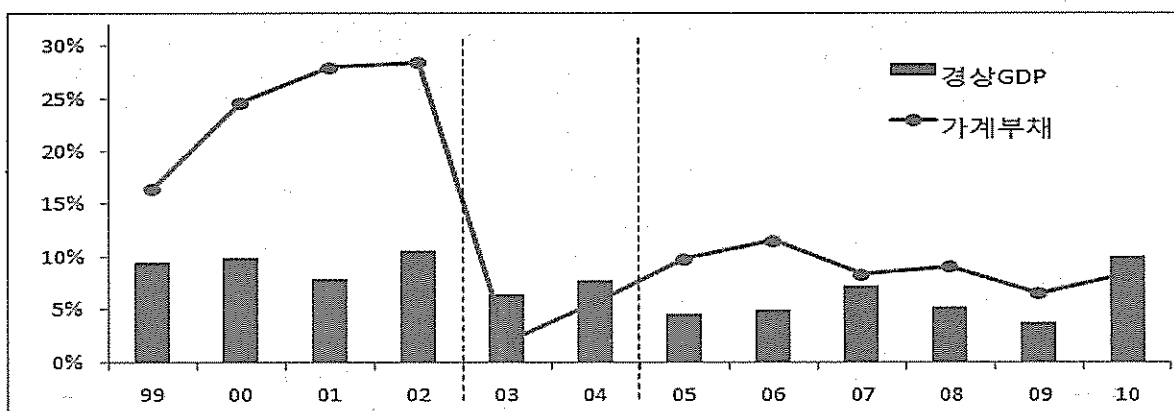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07년)5.5, (08년)6.8, (09년)5.4, (10년)5.4

* 07~10년 연평균 증가율(가계대출/주담대, %): (은행)5.7/7.0, (비은행)11.4/16.2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 06말 37.1% → 10말 42.2%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 지속(9.1%)

<시기별 가계부채 추이>



< 참고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동향 >

- 07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11.4%)

| (yoy, %) | '07 | '08 | '09 | '10 | ('07~'10 평균) |
|------------|------|--------|--------|--------|--------------|
| * 은행 가계대출 | 5.0 | 6.8 | 5.4 | 5.4 | 5.7 |
| * 비은행 가계대출 | 13.5 | 12.1 | 8.7 | 11.3 | 11.4 |
| (주택담보대출) | (-) | (20.1) | (15.4) | (13.1) | (16.2) |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도 상승(06말 37.1%→10말 42.2%)

-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년들어 여전사·저축은행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상호금융) 세제혜택* 등에 따른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년이후 평균 15.4% 증가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09.1월부터 비과세한도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확대)

*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예금 증가율 : 15.9%(대출 증가율 15.4%)

- (저축은행) 아직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PF대출 시장 위축에 따라 가계대출이 확대(10년중 11.3% 증가)

- (여전사) 10년중 카드론(35.2%)을 중심으로 가계대출(15.2%) 증가,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신용판매(12.3%)도 급증

< 비은행권 가계대출 추이(한은, 가계신용) >

| | '06말 | '07말 | '08말 | '09말 | '10말 | '11.3말 |
|--------------------|---------|---------|---------|---------|---------|---------|
| 비은행권 합계 | 204.2 | 231.7 | 259.8 | 282.5 | 314.5 | 317.1 |
| (전년동기비) | (10.7%) | (13.7%) | (15.4%) | (10.9%) | (16.4%) | (10.8%) |
| 상호금융 ¹⁾ | 87.5 | 101.4 | 118. | 132.2 | 154.8 | 157.4 |
| 보험 | 50.9 | 55.9 | 61.7 | 64.2 | 66.0 | 66.7 |
| 여전사 | 25.2 | 30.7 | 31.3 | 31.5 | 36.3 | 36.9 |
| 저축은행 | 7.7 | 6.8 | 6.9 | 7.3 | 8.2 | 8.4 |

1) 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및 추가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추세

* 한국 : (01) 61.2% → (09) 85.9% (+24.7%p)

* OECD 평균 : (01) 51.8% → (09) 77.0% (+25.2%p)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내수회복 등 위기극복·경제성장에 기여

* 99년~02년중 GDP 증가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 74.4% (90년 이후 평균 48%)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과거 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시정되면서 가계의 금융이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기업부문에 집중되고 가계부문에는 위축되었던 기업과 가계간 자금배분의 불균형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이에 따라 기업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

(98말) 27.7 → (02말) 47.1 → (10말) 43.7 [美(04말) 45.2, 英(03말) 46.0]

* 기업부채비율(%) : (98년) 303.0, (02년) 135.4, (05년) 100.9, (09년) 109.6

□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으로 판단

○ 금융권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

* 가계대출 연체율(전업권, %): (06)2.44, (07)1.94, (08)1.91, (09)1.76, (10)1.68

(은행, %): (06)0.70, (07)0.55, (08)0.60, (09)0.42, (10)0.61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전업권, %) : (10.12월) 0.87, (美, 10.4/4) 8.22

○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이들 계층의 대출비중이 증가

* 고신용등급(1~4등급) 대출 비중(%) : (06말) 62.0, (08말) 62.4, (10말) 70.2

※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 비우량 대출인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이 01년 8.6%에서 06년 20%까지 확대

○ 가계대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당히 낮음

* 韓 47%, 美 75%, 英 61%, 佛 80%, 獨 74%, 홍콩 64% ('09말 기준)

- BIS 비율·당기순이익 등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높아진 상황

* BIS 비율(은행, %) : ('06말)12.8, ('08말)12.3, ('10말)14.6(글로벌 20대 은행 13.6)

* 당기순이익(은행, 조원) : ('07년) 15.0, ('08년) 7.7, ('09년) 6.9, ('10년) 9.3

○ 또한 최근 수년간 가계금융부채 증가와 동시에 금융자산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가계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오히려 상승

* 가계금융자산 / 부채 (배) : ('08말) 2.09, ('09말) 2.28, ('10말) 2.32, ('11.3말) 2.33

※ 가계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02년 이후 OECD 평균 $\Delta 0.67$ 배 감소한 반면, 우리는 $+0.12$ 배 증가

□ 다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 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

-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고, 금리 적용기간이 짧음

*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09말, %) : (韓)95, (美)10, (英)62, (佛)13, (獨)10

* 금리적용기간(변동주기)는 통상 3개월 수준(美은 통상 1년, 日은 6개월 이상)

-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만기시 상환부담이 크고 차환위험에 노출

·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연장 관행 지속

* 일시상환 비중(은행) : (韓) 41%('10말), (美) 9.7%('10말), (EU) 7.5%('09말)

* 주담대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거치기간중인 분할상환) 비중 : 80%('10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유형별 현황('10년말)>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합계 |
|---------|---------|---------|--------|
| | 거치기간중 | 원금상환중 | |
| 117.4조 | 108.8조 | 58.8조 | 284.5조 |
| (41.3%) | (38.2%) | (20.5%) | (100%) |

■ : '10년말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경기·금리여건에 대한 민감도가 큰 저신용층의 어려움이 상존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
| * 금리1%p 상승시 순이자부담(만원) (가처분소득대비) | 16.1 (3.2%) | 13.0 (1.0%) | 9.8 (0.4%) | 9.0 (0.4%) | 17.1 (0.3%) | 12.4 (0.4%) |

주) 통계청 2010년 가계신용조사,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리민감 자산 및 부채 기준

➡ 지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응여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 방향>

- ◇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
 -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 ①, ②과제의 세부 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 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가계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일 발표)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

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

①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

※ 고위험 대출(例示) :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별도 마련

- 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
- ②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

- 특정부문(예: 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예: 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영향분석·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 결정

②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

-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은행기준, 10.1~6월)
 - *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 LTV 비율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업무가 소홀
- 앞으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CAMELS 반영 등)
-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 단, 충분한 예고 및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

□ 은행 예대율 관리 강화

- 100% 초과 은행 : 100% 준수기한(13년말)을 12.6월말까지 1년6개월 단축 지도
- 100% 미달 은행 : 준수기한(12.6월말)중 다시 100%를 초과 하지 않도록 지도

* 11.3월말 현재 일반은행(13개) 예대율 : 97.1%

나.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전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 ①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를 설정·관리(6.7일 既발표)
 - 회사별 목표수준에 대해 정기점검
 -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 ②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와 여타 여전사간 규제수준을 차등화
 - 규제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점진적인 규제준수를 유도

* 레버리지 현황(평균/최고, 11.3말, 배) :

(카드사) 4.1 / 7.7, (할부사) 8.4 / 20.1, (리스사) 7.2 / 18.0

③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대비 10배) 폐지(6.7일 既발표)

- * 자본금이 영세한 여전사에 대한 지원성격으로 도입(98년 여전법 시행) 되었으나 도입당시에 비해 자본규모가 18.3배(98년말 1.4조 → 10년말 24.9조) 증가한 상황에서 과다차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 필요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6.15일 규정개정 완료,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
 - * 정상 여신 : 1.5% → 2.5%, 요주의 여신 : 40% → 50%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요주의 여신('12년) : 2%(할부대출), 8%(가계대출) → 10%
 - 정상 여신 : 1%(은행과 동일) → 적립비율 상향폭은 리스크 수준 및 레버리지 규제도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 유도(3.30일 既발표)

- 카드 모집실태 및 마케팅 경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 강화
 - *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매반기→매분기),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20명→30명, 금감원 참여(월1회))
-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3장→2장이상 소지자)
 - * 현재 신용카드 3개 이상 소지자의 카드 사용실적, 이용한도 등에 대해 카드사간 정보공유

[상호금융]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
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확대

* 09~10년중 예수금 증감 (증가율) : (상호금융) 57.5조(29.1%) (은행) 191.8조(21.9%)
가계대출 증감(증가율) : (상호금융) 36.8조(31.2%) (은행) 42.9조(11.0%)

※ <참고>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 개요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9의3)
- 혜택 : 비과세(~'12말) → 5%과세('13) → 9%과세('14~)

⇒ 비과세 혜택은 12년말 예정대로 종료하여 가계대출
확대요인이 된 상호금융 수신증가를 최대한 정상화

- 상호금융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

○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 | <현 행> | <개 선(안)> |
|----------|--------------|--------------|
| * 정상여신 | : 3개월미만 연체 | → 1개월미만 연체 |
| * 요주의여신 | : 3~6개월미만 연체 | → 1~3개월미만 연체 |
| * 고정이하여신 | : 6개월이상 연체 | → 3개월이상 연체 |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

* 정상여신 (0.5% → 1%), 요주의여신 (1% → 10%)

⇒ 2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 및 비율
상향조정(유예기간 중 최소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토록하여 충격흡수 유도)

☐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는 있으나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합리적 수준의 최고한도 설정

*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

* 자기자본/동일인 대출한도(11.3말, 억원) : 신탁 44/9, 농협 147/30, 산림조합 34/7

② 신탁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한도 강화

*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

- 간주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 총한도(연간 신규대출 취급액의 1/3로 제한)에 포함해서 적용

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25%까지 소득공제

☐ 개인신용평가지 신용카드 이용실적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현재 신용카드는 장기간 연체 없이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 향상요인이 되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3월말 既 시행)

* 2.0~2.5% → (중소가맹점) 1.0%, (일반가맹점) 1.5~1.7%

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신규대출부터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공제제도 개선 방안>

| 구분 | 현행 | 개선안 |
|------------|---------------|--|
| 주택보유수 | 무주택자 | 좌동 |
| 대상주택 |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 좌동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좌동 |
| 소득공제 한도 | 1,000만원 |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1,500만원 ▪ 기타 대출 : 500만원 |

-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차등화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 (현행) 고정금리대출은 연 0.125%(거치식·비거치식 구분 없음)
변동금리대출은 연 0.260%

-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은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예: 매년 3년주기)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

*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분리 운영도 가능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및 혼합대출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대출금의 일정부분(예: 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상기 목표대출 실적에 포함)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 데스크 설치 등 on-off 라인을 통한 상품 안내·홍보 강화(은행연합회)

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유동화(MBS발행) 지원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 자산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일정비율(예: 20%~50%) 이상 포함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증가추이를 보아가며 편입비율 확대

☐ MBS·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유동화 수요를 보면서 자본금 확충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①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지의무 등 강화

- 차주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필수사항 규정

※ 고지의무사항(예시) :

- (i) 금리·금리변동주기·금리변동사유 등 기본적 사항
- (ii)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 (iii)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월간, 연간)
- (iv)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 금리변동시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부여(예: 최소 1개월전)

*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한자에 한해 1~2주전 고지

②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시 약 1.5% 수수료 부과

③ 변동성이 낮은 COFIX(잔액기준) 연동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 변동폭을 축소하는 옵션부 대출상품 개발 유도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 종류>

| | |
|---------------------|------------------------|
| 초기간한도(lifetime cap) |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 |
| 기간한도(periodic cap) |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 |
| 상환한도(payment cap) | 금리조정시 월 상환금액 증가 한도를 설정 |

- CD(3개월) 등 여타 금리 연동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금리상한 옵션 대출 상품 판매 등)토록 유도

- 금리변동주기 확대(3개월 →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도

* 통상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이상)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 점검(은행 등 가능한 업권부터 先시행)

□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

-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 마련(협회별 T/F 구성)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 수수료 등 실태조사 강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 불법·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

-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일선점포 불법·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본점의 책임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이 심화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

◇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

※ 11.4.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접근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 지원(10.1~11.6 : 2,521억원 대출)

- 미소금융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직능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중

* 금년중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 4천명 교육

* 현재 세탁업중앙회, 미용사 협회 등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고 있는 것을 여타 단체로 확대

○ (햇살론)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10.7~11.6 : 1조6,368억원 대출)

-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예시)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탄력적용, 보증지원절차 간소화 등

○ (새희망홀씨) 기존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의 지원대상 확대 등 개선(10.11~11.5 : 6,867억원)

- 새희망홀씨 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 제정

□ 금리·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 2.0~2.2% → 1.6~1.8%
기타 중소 가맹점 : 3.3~3.6% → 2.0~2.15%

-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10.4) 9,600만원미만 → (11.5) 1.2억원미만 → (12.1) 1.5억원미만)

- (고금리 대부업 피해 방지) 대부업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연49%→연44%(10.7)→연39%(11.6))하였으며, 과다·허위 대부
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 방안 마련·추진

- (금리비교공시 확대)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상호금융·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도 도입

- (대출중개비용 경감)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 수행, 불법 대출중개 단속강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서민층 고금리부담 완화

*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준비중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조회기록 및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미반영, 단기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5년 → 3년)

*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중, 전
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

-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의 우량정보를 모든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하고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

* 4.28일부터 정보집중 개시, 10월부터 신용평가시 반영 예정

□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지원노력 강화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08년 이후 47.6만건 지원)

-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 시행 중(당초 11.4월 종료 예정)

- 6.1일부터 채무 상환기간(8년→10년) 및 상환 유예기간(1년→2년) 연장 시행 등 신용회복 제도 보강

- “사이버 지부” 활성화, 안내·홍보활동 강화, 신용회복 지원협약 참여기관(현재 3,523개) 확대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활성화 추진

○ (소액대출·취업지원) 신용회복지원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지원 및 취업지원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 재할 자금(4%) 지원규모 확대(10년 700억원→11년 1,000~1,200억원)

* 은행 등의 추가 기부금 출연 등 재원확대방안 강구

-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중인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원까지 확대

○ (전환대출) 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6등급이하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내외의 은행대출로 전환(08년이후 4,697억원 지원)

- 지원대상 확대 및 창구 확대 등 전환대출 지원 보강

* 지원대상(6.10 시행) : (현행) 6~10등급 → (개선) 연소득 2,600만원 이하

* 지원창구(6.30 예정) : (현행) 6개 은행 창구 → (개선) 전국 모든 은행 창구

Ⅲ. 추진 계획

□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조기사행이 가능한 사항은 7월중 추진
-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검토후 하반기중 시행
- 법령·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중 개정완료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

①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예: 10%~50%)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 준비금 적립시 배당이 제한되므로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당기손익 및 배당을 제한하는 현행 대손충당금과는 달리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배당만 제한; 대손준비금과 유사)

⇒ 적정수준 기준, 적립률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분석,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②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③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④ 고위험·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

별첨
금융부문 대응방안 추진 일정

| 추진 과제 | 필요 조치 | 시행시기 | 소관부처 |
|-----------------------------------|------------------|--------------|--------------|
| 1.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 | | | |
| 나. 은행권 | | | |
| ❶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 | 시행세칙 개정 | 11년중 | 금감원 |
| ❷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❸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❹ 예대율 관리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가. 비은행권 | | | |
| ❶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추진 | 여전법 등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금융위 |
| ❷ 여전사 총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❸ 상호금융 대출한도 설정 | 시행령 등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❹ 상호금융 총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다. 체크카드 활성화 | | | |
| ❶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 | 소득세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기재부 |
| ❷ 신용평가 개선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 | | |
| 가. 고정금리·분할상환 활성화 | | | |
| ❶ 소득공제 차등화 | 소득세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기재부 |
| ❷ 주신보 출연료를 차등화 | 시행규칙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❸ 은행별 목표관리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년중 | 금감원 |
| 나. 장기자금조달 여건 마련 | | | |
| ❶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이후 | 금융위 금감원 |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 | |
| ❶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금융위 · 금감원 |
| ❷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
| ❸ 잔액기준 COFIX 유도 | 실적점검 | 11.7월중 | |
| ❹ 금리상한상품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
| ❺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 실태점검 | 11년중 | |
| ❻ 불법·허위 광고 억제 | 실태점검 | 11년중 | |
| 4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 | | | |
| ❶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 11.7월 | 금융위 |
| ❷ 과다 허위 대부광고 피해방지 | 대부업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금융위 |
| ❸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 실적점검 | 11년중 | 금융위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2012. 2.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II. 기본방향

III.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예대출 관리 강화
2.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3.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4.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5.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개선
6.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IV.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조정
2.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V.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
3.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VI. 향후 추진 계획

I.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1. 일반현황

□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말 대비 7.6% 증가한 858.1조원

○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9조원으로 2010년말 대비 5.7%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402.3조원으로 9.9% 증가

□ 2007년 이후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율(%) >

(괄호안은 연도별 증가액, 조원)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전체 | 9.7 (45.5) | 11.4 (58.7) | 9.7 (55.6) | 8.7 (54.8) | 7.7 (53.0) | 8.1 (59.6) | 7.6 (60.6) |
| 은행 | 10.6 (29.2) | 13.3 (40.7) | 5.0 (17.5) | 6.8 (24.9) | 5.4 (20.9) | 5.4 (22.0) | 5.7 (24.4) |
| 제2금융권 | 8.4 (16.3) | 8.6 (18.0) | 16.7 (38.1) | 11.2 (29.9) | 10.8 (32.1) | 11.5 (37.7) | 9.9 (36.2) |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수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결과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한은기준, 조원)

: (은행) '04말 276.3 → '11년말 455.9 (제2금융권) '04말 193.8 → '11년말 402.3

-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 175.0 (보험) 74.7 (저축은행) 10.2 (여전) 38.8

2. 부문별 현황

□ (보험)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원으로 '10년말 대비 6.4조원(9.3%)이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

○ 특히 '11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년 대비 빠르게 상승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상호금융)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0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2조원(13.1%)이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업권별 증가율 : 신탁 15.1%, 농·수협·산림조합 11.5%, 새마을금고 17.5%

○ '02년말 45.7조원에 불과하던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11년말 까지 불과 9년 사이에 네 배 가까운 규모로 급속히 증가

* 2003~2011년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6.1%에 달함

□ (저축은행)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0.2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조원(24.9%) 증가

○ 증가속도가 빠른편이나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좀 더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방안 검토

□ (여전사)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38.8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5조원(7.0%)이 증가

○ '11년중 카드사에 대한 대책*등으로 '10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10년 15.1% → '11년 7.0%)

* 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상향('11.6월 시행), 레버리지 규제 도입방안 발표, 카드발급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카드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참고 : 6.29 대책 이후 가계대출 동향 〉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발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

○ (은행권)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11.6조원(+2.7%)이 증가하여 상반기 12.8조원(+3.0%)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제2금융권) 반면 제2금융권은 하반기 20.5조원(+5.6%)이 증가하여 상반기 15.7조원(+4.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 특히 보험사(1.6%→7.7%), 상호금융(5.5%→7.6%)의 경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높아짐

2011년 분기·반기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전년말비, %)

| | '11.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상반기 | 하반기 |
|--------|---------|------|------|------|------|------|
| 가계대출 | 1.4% | 2.2% | 1.6% | 2.4% | 3.6% | 4.0% |
| 은행권 | 0.9% | 2.1% | 1.2% | 1.5% | 3.0% | 2.7% |
| 제2금융권 | 1.9% | 2.4% | 2.1% | 3.5% | 4.3% | 5.6% |
| (보험) | 0.8% | 0.8% | 4.4% | 3.3% | 1.6% | 7.7% |
| (상호금융) | 1.7% | 3.8% | 3.1% | 4.5% | 5.5% | 7.6% |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대비 기간별 증가액으로 산출

II. 기본방향

-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예대출 관리,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충당금 조기적립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
 - 보험사는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
- ◇ 이와함께 가계부채 규모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도 차질 없이 추진
 -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노력 강화
 -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신규대출 위주로 시행
- ◇ 또한 서민금융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도 병행 추진

Ⅲ.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 예대출 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수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들어 예대출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

* 상호금융 예대출 현황 (한은 비은행기관 여수신자료 · 분기말 잔액 기준)

| | 2010년 | | 2011년 | | | |
|--------------------|-------|-------|-------|-------|-------|-------|
|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신협 | 65.2% | 65.8% | 68.1% | 68.7% | 69.4% | 71.1% |
| 상호금융 ¹⁾ | 68.9% | 68.2% | 67.9% | 68.7% | 69.3% | 69.4% |
| 새마을금고 | 55.1% | 56.4% | 58.1% | 60.5% | 62.8% | 66.8% |

1) 단위 농 · 수협, 산림조합

⇒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햇살론 · 희망드림론)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예대출을 관리

* FTA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 필요성, 서민대출 중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을 제외하고 예대출 산정

- ① 예대출을 80%이내로 운용*토록하고, 80%초과 조합은 2년내에 80%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 징구**

* 은행과 동일하게 예대출 규제를 법제화하여 시행
(’12년 3/4분기까지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해 이행계획 징구 (’12년 1/4분기중)

- ②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출 평균을 초과한 조합 · 금고는 2011년말 예대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 감독하고 위반시 우선 검사하는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

* 단 지역 경제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예수금 절대액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예대출이 상승한 경우에는 일부예외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일시상환 · 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은 신용위험이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은 만큼 보다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
 - 은행권은 일시상환 ·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35%→50%로 상향 조정
- ⇒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대응방안

- 고위험 대출 유형을 설정하고,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총당금 추가 적립 · 중점검사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 '12년 3/4분기 중 개정)
 - * 사업자금 성격임이 증명된 대출은 고위험 대출 분류시 제외
 - * 고위험 대출에 포함되는 일시상환 · 거치식 대출 금액 · 다중채무자 대출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 ② 신규 고위험 대출의 총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
 - (2012. 3/4분기부터 적용)
 - 신규 고위험 대출부터 우선 적용하되, 기존 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고위험 대출 총당금 기준을 적용
 - * 세부적인 총당금 적립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 (예) 정상, 요주의, 고정분류 대출에 대한 총당금 적립기준에 20%를 가산
 - ③ 고위험 대출 과다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 · 감독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증가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 상승

* 단위농협 비조합원 대출비중 : (08말)29%→(09말)31%→(10말)32%→(11.11월)33%
단위수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비중은 66% 수준

⇒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 원격지 대출 관리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조합원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의 연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 농·수협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높은 한도를 적용

*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한도 : (농협) 신규대출의 1/2, (수협) 대출한도 미적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규대출의 1/3

⇒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

대응방안

□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1/3이내로 일원화

○ 단위농협은 금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 대출의 1/3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 (행정지도, '12년 1/4분기중)

○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없는 단위수협의 경우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로 제한 (수협법·수협법시행령 개정, '15년부터 시행)

- 다만, 비조합원 신규 대출 비중을 2011년말 기준으로 standstill하고, 비조합원 신규 대출 단계적 감축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

□ 정관·업무방법서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일관성·실효성을 확보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현재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정관(단위 농·수협, 산림조합)이나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등에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규정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권역외 대출임에도 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한도가 미적용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 조합원과 동일세대, 준조합원(농·수협),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

- ⇒ 권역외 대출의 확대는 대출관리의 부실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해당지역 공동유대에 기반한 상호금융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

대응방안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삭제
(신협법·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삭제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비조합원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게 됨

- 상호금융의 사업 중 신용사업(대출업무)에 한하여 적용

*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경제사업 등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 이용시에는 계속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

- 법령 개정 전에도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중 담보대출(11.9월말 총 대출의 86.4%)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
- 상호금융은 업권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
 - 상호금융의 경우 상용근로자 보다 농어업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고객비중이 높음
 - 한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권역외 대출 등의 경우 원격지의 담보를 충실히 관리하는데 한계
- ⇒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마련 → 업권별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 '12년 2분기 시행)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하여 소득 증빙 자료의 인정범위 등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여신업무방법서에 가이드라인을 반영
 - 소득 확인방법 및 인정대상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 단, 소득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농림어업인 등의 경우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방식*도 허용
- * (예) 행정안전부(재산등록 매뉴얼)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및 소득계산법 등
- 금감원·중앙회의 검사시 상환능력 확인 여부 중점 점검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6.29 대책에서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2015년까지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연체기간 : (정상)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요주의) 6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고정)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연체
 - * 대손충당금 적립율 : (정상) 0.5%→1%, (요주의) 1%→10%
- 다만, 시행시기와 방법은 2013.6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 그러나 유예기간중 상호금융 자체적인 사전준비 없이 2013.7월 부터 강화된 기준을 일시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또한 상호금융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강화된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기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
- ⇒ 유예기간 중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대응방안

-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유예기간(~2013.6말) 중에도 강화된 수준(2013.7월부터 적용되는 수준)까지 자산건전성 · 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 상향 적용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 · 대손충당금 기준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각 조합의 이행여부를 점검
- (12년 1분기 중 이행계획 제출 → 6월 반기결산시 이행여부 점검)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조기적용 예시 (단위 :%)

| 구 분 | 현 행 | '12.7 | '13.1 | '13.7 | '14.1 | '14.7 | '15.1 | '15.7 |
|-------|-----|-------|-------|-------|-------|-------|-------|-------|
| 정 상 | 0.5 | 0.55 | 0.6 | 0.65 | 0.7 | 0.8 | 0.9 | 1.0 |
| 요 주 의 | 1.0 | 2.0 | 3.0 | 4.0 | 5.5 | 7.0 | 8.5 | 10.0 |

※ 굵은 테두리 부분은 강화된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

IV.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중 보험사 가계대출이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 시현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특히 2011.6월 이후의 증가속도가 빠름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증감액 (증가율) | 0.6조원 (0.8%) | 0.5조원 (0.8%) | 3.0조원 (4.4%) | 2.3조원 (3.3%) |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 대비

- ⇒ 보험사의 경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2년 2분기 규정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정상 : 0.75% → 1.0%, 요주의 : 5% → 10%, 회수의문 : 50% → 55%

-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세칙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2.8%로 상향조정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4.0%로 상향조정

* 일시상환조건 대출, 3건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
→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범주와 동일(은행의 경우 BIS위험가중치 상향)

-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조정은 신규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기존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사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알선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단지 배포 등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측면

⇒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억제 등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보험회사 등의 대출영업 억제

-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보험모집·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 제한 (행정지도, '12년 1분기 중 시행)
-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 (행정지도, '12년 2분기 중 시행)
-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적으로 집중검사하여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관련 항목을 추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중 시행)

- 상환능력 확인 등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 (비계량평가 항목)하여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

V.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 (미소금융) 채신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12년 상반기 중)
 - 특히, 전통시장 상인 및 신용등급은 양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 (햇살론) 대환대출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12.2.13 既 시행)
 -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95%(현행 85%)로 확대
 - 신용 6등급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기청 고시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시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 서민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대출취급 前 현장실사를 신용 보증 지역재단에서 수행토록 개선
- (새희망홀씨 대출)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 ('11년 공급목표 1조 2천억원)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

-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뀐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
 - '12년중 4,000억원 지원 목표 ('09~'11년중 연평균 2,623억원 지원)
 - 바뀐드림론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서민에 대해 총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2.2.1 既 시행)
 -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안내, 환승론 서비스 등을 확대

□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저금리(4%) 재활자금 지원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09~'11년중 연평균 648억원 지원)
- 인터넷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

3 |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증자리론 지원을 확대 ('12.1.16 既 시행)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2,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공급 신설('12년 1.5조원 이내 공급)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 ('12.2.27일부터 시행)
 -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 가구에 대해 공급
- 오피스텔(주거 목적) 및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신규로 지원
('12.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 국민주택기금·은행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보증대상을 확대

VI. 향후 추진 계획

☐ 1/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행정지도 등 조기사행이 가능한 사항은 1/4분기 중 추진
-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기관 협의 후 3/4분기 까지 시행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 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

< 추가 대응방안 예시 >

○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

-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적립금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은행권 도입 여부와 연계하여 검토)

참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추진일정

| 추진과제 | 필요조치 | 시행시기 | 소관부처 |
|--------------------------------|------------------------|---------------|--------------------|
| 1.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 | |
| ① 예대출 관리 강화 | | | |
| ▪ 예대출 규제 제도화 |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 | 2분기 3분기 | 금융위 행안부 |
| ▪ 예대출 관리 이행계획 징구 | 지도공문 발송 이행계획 징구 | 1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 평균 예대출 초과조합 지도·감독 | 지도공문 발송 | 1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② 고위험 대출 규제·감독 강화 | | | |
| ▪ 고위험 대출 총당금 기준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3분기 | 금융위 행안부 |
| ▪ 고위험 대출 과다조합 감독강화 | 검사·감독 | 3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③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 | | |
| ▪ 농·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관리 | 지도공문 발송 | 1분기 | 농식품부 금감원 중앙회 |
| ▪ 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신설 | 수협법·시행령 개정 | 2015년 | 농식품부 |
| ▪ 비조합원 대출한도 법정화 | 농·수·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개정 | 금년 중 국회 제출 | 관계부처 |
| ④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 농·수·신협법 산림조합법 개정 | 금년 중 국회 제출 | 관계부처 |
| ⑤ 상환능력 확인 강화 | 여신업무방법서 개정 | 2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⑥ 강화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기준 적용 준비 | 이행계획 제출 검사·감독 | 1분기 2분기 | 금감원 중앙회 |
| 2.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 | |
| ①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 | | | |
| ▪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2분기 | 금융위 |
| ▪ 가계대출 신용위험 계수 상향조정 | 시행세칙 개정 | 2분기 | 금감원 |
| ② 가계대출 관리·감독 강화 | | | |
| ▪ 과도한 대출영업 억제 | 지도공문 발송 검사·감독 | 1분기 2분기 | 금감원 |
| ▪ RAAS 평가지표 개선 | 시행세칙 개정 | 2분기 | 금감원 |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2012. 7. 19 (목)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1. 가계부채 대책 추진현황

2. 가계부채 동향 및 평가

가. 동향 개요

나.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다.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문제

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3.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

II.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1. 서민금융 지원대책 추진현황

2.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I.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1. 가계부채 대책 추진현황

□ 가계부채는 외환위기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규모·소득증가에 비해 빠름

* '99~'10년중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 11.7%, GDP 7.3%, 가처분소득 5.7%

② 대출구조도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위주로 취약

* 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비중('10) : 94.9% (미국 10%, 독일 10%, 영국 62%)

*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비중('10) : 41.3% (미국 9.7%, EU 7.5%)

□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본격 추진

○ DTI규제 원상회복('11.3.30),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외형확대 억제('11.6),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가계부채 관리여건을 조성

○ 이를 바탕으로 4대 분야*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응방향을 정립

* ①총유동성 안정적 관리, ②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③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④서민금융 강화

□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을 추진

○ 서민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확대방안('12.3.30) 마련

⇒ 경기측면 등을 고려, 급격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기둔화 지속, 소득여건 개선 지연에 따라 저소득·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가계부채 동향 및 평가

가 | 동향 개요

- (증가속도) '11년중 가계부채는 8.1%가 증가하여 '10년 8.7% 대비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나, 경상GDP(5.4%)·가처분소득(4.8%)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가계부채 비중은 다소 상승

* 가계부채 비중('10→'11,%) : (GDP대비)86.6→89.2, (가처분소득대비)158.0→163.7

- 다만 지난해 하반기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금년 1분기중 '09년이후 3년만에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911.9→911.4조원)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11.2Q)9.1 (3Q)8.8 (4Q)8.1 ('12.1Q)7.0

- 금년 1~5월중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은 3.1조원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감소

* 1~5월 증가액(증가율,%) : ('10)13.0조(2.4) ('11)15.6조(2.6) ('12)3.1조(0.5)

- 은행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고, 비은행도 작년의 1/3수준으로 축소

* 1~5월중 증감 : (은행) '11.1~5월 +9.5조 → '12.1~5월 +0.8조
(비은행) '11.1~5월 +6.1조 → '12.1~5월 +2.3조

- (대출구조) 은행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이 확대되고, 원금상환중인 대출비중도 늘어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추세

- 고정금리대출 비중(잔액)이 5.1%→12.5%로 2배이상 증가하고, 일시상환대출 비중도 41.3%→37.6%로 축소

< 대출구조 개선 추이(2010년말·2012.3월 비교) >

| | | 2010년말(A) | 2012.3월(B) | B-A |
|--------------------|---------|-----------|---------------------|----------|
| 은행 고정금리 | 잔액기준 | 5.1% | 12.5% ¹⁾ | +7.4%p |
| 가계대출 비중 | 신규취급액기준 | 11.7% | 44.3% ¹⁾ | +32.6%p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 | 6.4% | 8.5% | +2.1%p |
|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 | (18.2조원) | (26.0조원) | (+7.8조원) |
| 일시상환 대출 비중 | | 41.3% | 37.6% | △3.7%p |
|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 | (117.4조원) | (115.2조원) | (△2.2조원) |

1) 2012.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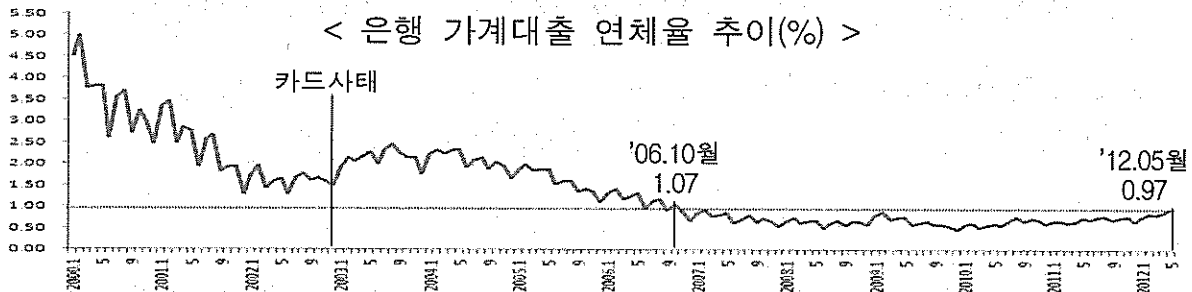
□ (연체율) 금년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추세

- '12.5월 연체율(은행)은 0.97%로 '06.10월 1.07%이후 최고수준이나, 2000년대 중반이전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

※ 6월말 연체율은 상각 등 분기말 은행 연체관리로 하락(0.97%→0.83%^P)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분양관련 분쟁 등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은 높은수준 → 집단대출 제외시 연체율은 '12.5월 0.76% 수준

* 집단대출 연체율(%) : ('11.6)1.41 (9)1.25 (12)1.18 ('12.3) 1.48 (4) 1.56 (5) 1.71



평가

-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일단 안정되고 대출구조 개선추세가 정착되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

* 금년 가계부채는 상반기 8조원, 4~5월 증가추세(2.5~3.5조원) 감안시 하반기 19~26조원이 증가하여 연간 27~34조원(2.9%~3.7%) 수준의 증가가 예상

- ◇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주의 구성,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가능한 상황이나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

- 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뒷받침되는 등 손실흁수능력이 양호

* 순이익(FY11, 조원) : 은행11.8('12.1Q 3.5), 보험5.8, 여전2.5('12.1Q 1.1)

- ②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69.1%를 보유

* 가계부채비중(%) : (1분위)5.6 (2분위)10.6 (3분위)14.8 (4분위)22.9 (5분위)46.2

- ③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모습

* 금융자산/금융부채 : ('08)1.96 ('09)2.12 ('10)2.15 ('11)2.09 ('12.3월)2.14

- ④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나, 절대수준이나 상승속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월평균 연체율 상승폭 : (최근 '12.1~5)0.06%p, (카드사태 '03.1~8)0.12%p

나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 '12.5월 자영업자는 584.6만명 : 전체취업자(2,513.3만명)의 23.3%

○ '11.8월 이후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 ('11.1~7)△7.2 ('11.8~12)10.3 ('12.1~5)15.9

○ 50대이상,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 증감('12.1~5월, 전년동기대비, 만명) : (50세미만)△1.6 (50세이상)17.5

* 업종별 증감('12.1~5월, 전년동기대비, 만명) : (전체)15.9 (도소매·음식숙박)10.8

□ '11년 하반기부터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12.5월 165조원)

* 대출증가율(은행, %) : ('11년) 개인사업자 8.8(상반기 2.9, 하반기 5.9), 가계 5.7 ('12.1~5월) 개인사업자 4.0, 가계 0.2

○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개인사업자 대출비중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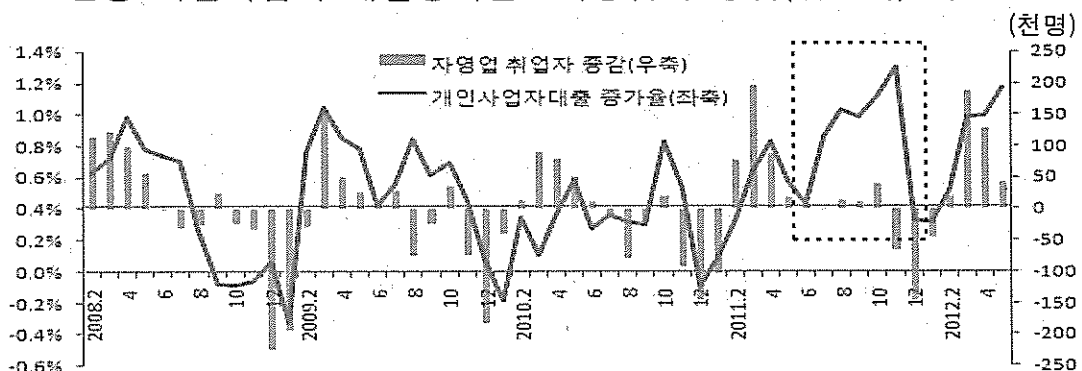
* '10년말~'12.3월중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조원)

: (전체)16.5 (부동산·임대업)8.8 (도소매·음식숙박업)6.0 (기타)1.7

○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에는 자영업자 증가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

- 자영업자의 채무부담능력은 취약한데 반해 은행권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어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율·자영업자 증감(전월비) 비교 >



□ 채무상환능력 면에서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취약

- 연체율은 가계대출보다 높고, 중소기업대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건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다소 높은 상황

* 연체율('12.3월, %) : (전체)1.0 (건설)1.33 (도소매)1.25 (음식숙박)1.09
(가계대출 0.84, 중소기업대출1.58)

- 가처분소득·금융자산 대비 채무부담도 높은 수준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로 상환여력을 어느정도 보완

< 자영업자·상용근로자의 부채비율 비교 >

| | 금융부채/금융자산 | 금융부채/가처분소득 | 총부채/총자산 |
|-------|-----------|------------|---------|
| 상용근로자 | 37.8 | 78.9 | 17.0 |
| 자영업자 | 80.7 | 159.2 | 19.5 |

평가

- ◇ 향후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가속화되면서 자영업 진출과 대출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

*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현재 49~57세)의 임금근로자 규모('10년 344만명, 평균정년(56.8세, '06년 노동부조사) 등을 감안시 본격적인 퇴직 증가 예상

- 이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진출이 과도해질 경우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 ◇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측면에서는 과밀·취약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

다

주택경기과 가계부채 문제

- 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추세가 지속

* 2012.1~6월 주택가격 변동(%) : (전국)0.6 (서울)△0.9 (수도권)△1.1 (지방)2.4

- 지방의 경우 '09~'11년중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시현한 이후 금년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

* '09~'11년 주택가격 변동(%) : (지방광역시) 24.9 (광역시 外) 20.7

-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폭은 고점대비 2~3% 수준

* 고점대비 변동(%) : (서울)△2.2(고점:'10.3) (수도권)△3.0(고점:'08.9)

- 다만 주택가격이 고점대비 15%까지 하락한 지역도 일부 있음

* (분당)△16.9%(고점:'07.3) (과천)△17.9%(고점:'07.1) (용인)△12.1%(고점:'07.9)

-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대출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고 집단 대출 연체가 가계부채 부실화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은행들은 채권확보, 채무자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응

- LTV 예외인정 등을 통해 대체로 만기연장이 허용되는 등 상환요구는 크지 않음

* '12.1~5월중 만기연장률은 92.2%로 높은 수준이며, 만기 연장시 은행권의 일부상환 요구규모는 총 만기연장액(15.3조원)의 1.9%(2,854억)로 낮은 수준 → 실제 상환요구는 크지 않은 상황

-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회수 또는 가산금리 적용 사례도 있음

- '12.5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에 비해 높은 수준

- 주택가격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도금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세

* 집단대출연체율(%) : ('10.12)0.95 ('11.3)0.91 (6)1.41 (9)1.25 (12)1.18 ('12.5)1.71

* '12.4월 집단대출은 102.4조원. 이중 연체가능성이 높은 중도금대출은 27조원 수준(26.2%) : 잔금 68조원 > 중도금 27조원 > 이주비 8조원

- 일부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무효소송 등을 제기

※ 손해배상요구, 계약무효소송 제기 등 분쟁 발생 사업장은 총 94개 (대출잔액 3.9조원) 연체규모는 1.1조원 수준

< 집단대출 규모 및 분쟁사업장 대출액 현황(조원) >

| | 가계 대출 | 주택담보 대출 | 집단대출 | 중도금 | 이주비 | 잔금 |
|-----------|----------|------------|-------|------|-----|------|
| 규모 | 451.1 | 305.6 | 102.4 | 26.8 | 7.6 | 68.0 |
| 분쟁 사업장 | 대출액 | | 3.9 | 2.8 | 0.1 | 1.0 |
| | 연체액 | | 1.1 | 1.1 | 0.0 | 0.0 |
| | 소송금액 | | 0.5 | 0.5 | 0.0 | 0.0 |

- 중도금 연체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보다는 분양가 인하 요구와 관련된 분쟁이 작용한 사례가 다수

평가

- ◇ 주택담보대출의 LTV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확대 가능성은 제한적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은 금융권 평균 LTV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
LTV(전금융권, %) : ('07)48.0 ('08)47.1 ('09)47.5 ('10)48.0 ('11)48.1 ('12.3)48.5

- '06~'08년 중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30%이상 상승한데 비해 최근 하락속도는 완만하여 위험의 확산정도는 낮음

* '06.1~'08.12월 주택가격 변동 : (서울)31.6%, (수도권)33.4%
'10.1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격 변동 : (서울)△1.8%, (수도권)△2.4%

- 다만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증가 가능성

- ◇ 집단대출 연체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

- 총 연체금액이 1.6조원이고 중도금대출에 집중

- 중도금대출의 75.6%가 시공사·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

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 저소득·고령층·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급속한 부실화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음

□ (저소득층)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타 소득 분위에 비해 매우 높음

* 금융부채/가처분소득(중위수 기준, %)

- (1분위)179.3 (2분위)94.5 (3분위)79.6 (4분위)79.8 (5분위)76.3

○ 소득 1분위 차주의 비중이 증가('09.3월 15.3%→'12.3월 16.6%)하고, 원리금상환부담(DSR)도 상승('09.3월 18.1%→'12.3월 23.3%)하는 추세

- 소득 1분위의 연령별 분포는 30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소득1분위중 30대비중(%) : ('09.3) 18.4 ('10.3) 20.8 ('11.3) 23.0 ('12.3) 24.2

○ 다만 소득 1분위 연체율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별히 높은 상황은 아님

* 연체율('12.3) : (1분위)0.96 (2분위)1.03 (3분위)0.86 (4분위)1.02 (5분위)1.21

□ (장년·고령층) 50대이상 장년·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차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금융부채/가처분소득(중위수 기준, %)

- (20대)40.8 (30대)82.8 (40대)85.7 (50대)90.9 (60대이상)112.1

* 전체차주중 비중('09.3→'12.3월) : 50세이상(32.3%→37.8%)

○ 특히 60세이상은 고소득 차주비중도 낮은 상황

* 소득4-5분위 차주비중(%) : (30대) 43.8 (40대) 68.8 (50대) 67.4 (60대이상) 35.5

○ 50대이상 차주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로 상환여력을 보완

* 연체율('12.3)(20대)1.17 (30대)0.6 (40대)1.1 (50대)1.42 (60대이상)1.16

* 총부채/총자산(%) : (30대)27.9 (40대)24.6 (50대)21.1 (60대이상)18.9

□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11년중 증가세가 다소 둔화

* 다중채무자 수(만명) : ('07)616 → ('08)649 → ('09)668 → ('10)700 → ('11)722
(증가율) : (5.4%) (2.9%) (4.7%) (3.2%)

○ 업권별로는 저축은행·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증가세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중채무자 증가율(%) : (은행)20 (보험)9.0 (상호금융)4.3 (저축은행)17.5 (대부업)17.1
다중채무자 연체율(%) : (은행)3.9 (보험)5.5 (상호금융)5.4 (저축은행)16.5 (대부업)28.4

-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11년중 연체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07)38.7% → ('08)33.9% → ('09)29.6% → ('10)23.7% → ('11)26.3%

○ '11년에는 다중채무자중 3건이상 고위험군의 증가세가 둔화

< 대출건수별 다중채무자 증가율(%) >

|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평균(2-5건) |
|------|------|------|------|-------|----------|
| 2010 | 1.3% | 4.2% | 9.3% | 21.6% | 4.7% |
| 2011 | 2.3% | 3.7% | 3.5% | 6.3% | 3.2% |

- 3건이상 다중채무자·채무액 비중도 상승세가 둔화

* 총 차주중 다중채무자 비중(%) : ('09)17.1 → ('10)18.3 → ('11)18.6
총 대출액중 다중채무액 비중(%) : ('09)28.4 → ('10)29.5 → ('11)29.8

- 또한 저신용층 보다는 고신용층 위주로 차주가 증가

* 신용등급별 3건이상 다중채무자 증가율('10년→'11년)
: (1-4등급 고신용층) 5.5% → 11.3% / (5-8등급 저신용층) 17.0% → 3.3%

평가

◇ 취약계층은 경기부진·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 ①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완화, 저축지원 등 소득기반 확충
- ②주거·학자금·육아 부담등 지출요인 축소 ③금융권에서 신용도에 부합하는 차입기회 확대 ④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 회복지원, 사금융피해 방지 등을 통해 지원

3.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

□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마련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

- 충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창출 등 채무상환능력 제고 노력을 강화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한은('12년, 1350억)·정부('13년) 출자 및 커버드본드 법제화('12.11월 법안 국회제출) 등 은행권 장기·고정 금리 대출 여건을 확충
- 은행권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은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적립토록 유도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상권정보 제공, 창업인턴제, 교육·컨설팅 강화 등 준비된 창업 및 시니어 창업인프라 확충 등 경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유도
-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
 - * 사회서비스업(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사업서비스업(연구개발, IT, 컨설팅) 활성화, 귀농·귀촌활성화, 자영업자의 협업화·조직화 지원 등
-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
 - * 업종별 익스포저(exposure)관리 등 과도한 자산확대 방지

□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애로를 완화

-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추진
- 담보가치 하락 등에 따른 기존 대출자의 만기연장 애로를 완화
 - 만기연장시 대출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 (예시) 가산금리 인상, 원금 일부상환 중 차입자가 유리한 방법 선택
 -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일부상환 요구 등을 자제토록 유도

II.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1. 서민금융 지원대책 추진현황

□ 지난 4년간 서민 정책금융·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 제도를 정비·확대하여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 서민에 대한 우대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

* 미소금융('09.12월~, 0.5조원), 햇살론('10.7월~, 2.1조원), 새희망홀씨('10.11월~, 5.2조원, 희망홀씨 포함) 등을 통해 '12.6말까지 7.8조원 공급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08~'12.6말까지 채무조정 65.5만건, 소액대출 2,636억원, 취업지원 2,306명

○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대출(20% 이상)을 은행권의 저금리(11% 내외) 대출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금리부담을 경감

* '08~'12.6말까지 10.9만명에게 1.1조원 지원

○ 대부업·여신금융회사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

* 대부업법 최고금리 : ('02) 66% ('07.10) 49% ('10.7) 44% ('11.6) 39%

*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원칙 도입 등 → 총 223만 가맹점 중 214만개 (96%)의 수수료율 인하 예상('11년 2.1% → 개선1.9%)

□ 실물경기 둔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서민금융 환경 변화에 맞추어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도 지속 추진

○ 특히,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 및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12.3) 등을 마련·추진

□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상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해 서민금융 공급 등 피해를 구제

* 4.17~7.12중 43,028건의 피해상담·신고를 접수, 이중 서민금융 희망자 2,166건 중 642건(29.6%) 서민금융 지원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12.6 완료), 서민금융 종합포털(서민금융나들목 '12.6.14) 등 통합 안내체제를 정비

□ 현 정부 출범 이후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서민금융 공급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

○ '07년까지 민간복지사업자 위주로 소규모·국지적으로 이루어 지던 서민금융이 '08년 이후 대규모·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 ('07년 이전) 민간복지사업자(약 1,500억원 규모 추정) 위주 공급 → ('08년 이후) 서민 정책금융(4년간 약 9조원 규모 공급) 공급

○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채널도 다양화

| 지원 제도 | 공급 채널 |
|-------|--|
| 미소금융 | 156개 미소금융 지점 (기업재단 75개, 은행재단 52개, 지역재단 29개) |
| 햇살론 | 3,750여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농·수협·신협 등) |
| 새희망홀씨 | 16개 시중·특수·지방은행 |
| 희망드림론 | 1,432개 새마을금고 |

◇ 3대 서민 우대금융,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의 체계가 확립

◇ 미소금융 공급 이후 전통시장 고금리 일수대출 근절 등 서민 금융생활에서 가시적인 변화도 시현

* 미소금융이 지원된 전통시장(대전 중앙시장, 경북 죽도시장 등)의 고금리 일수 관행이 근절

2.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경기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 (연 3조원 → 4조원 수준)

- ①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②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

가

햇살론 : 연간공급규모 5천억원 → 7천억원

- 햇살론 보증비율을 현행 85% → 95%로 상향 조정
 - 지원 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2%p내외 수준으로 인하 (現 10~13% → 개선 8~11%)

나

새희망홀씨 : 연간공급목표 1.5조원 → 2조원

- 은행권에서 지원중인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를 5,000억원 추가확대(1.5조원 → 2조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를 중점 지원
 - * 저신용(7등급이하)·저소득(2천만원이하) 대출비중(~'12.6 누계기준) : 74.7%
-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에는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출
 - * 소득환산기준(증빙자료) 예시: ①일용근로자: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급여통장확인 ②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원천배제하지 않고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다

미소금융 : 연간공급목표 2천억원 → 3천억원

-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 대출한도를 증액 운용

< 미소금융 대출한도 증액 >

| | 현 행 | 개 선 |
|--------|------|------|
| 운영자금 | 1천만원 | 2천만원 |
|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 2천만원 |
| 창업자금 | 5천만원 | 7천만원 |

- 전통시장 상인대출 활성화*, 설·추석 긴급자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

* '12.1~6월 중 436.4억원 지원('12년 목표 700억원)

** 금년 추석(9.30)을 앞두고 현재 신청서 접수 중 (8월 중순 자금지원 예정)

- 금년 5월말부터 시행중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12.6.18 시행), 긴급 생활자금 대출**(12.5.31 시행)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 ① 학자금 이외 생계자금(하숙비, 학원비 등) 등도 전환 지원

② 대학(원)생의 연령제한(현 29세) 폐지

** 일률적·획일적 기준(예 :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정량적 기준 엄격 적용)을 폐지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지원

- 아울러 개강시기(8월말~9월초)에 대학 캠퍼스 내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상담·홍보활동을 강화

라

신용회복 : 소액대출 연간 1,000억원 → 1,500억원

-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활성화

*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 '13.4월 종료 예정으로 운영중인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 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확대

* 現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 감면 → 최대 50% 감면

- 은행권에서 연체채권 등에 대해 상환가능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 추진

* 예 :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는(1년 이상)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확대

* 現 500만원 한도 → 1,000만원 한도

(실제 대출금액은 상환능력, 부채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 중인 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출을 지원

**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최초 소액대출 지원요건과 동일(2년이상 성실상환, 500만원 한도)

-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연 5,000억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원활화 지원

- 바뀔드림론 지원규모도 지속 확대('12년목표 0.65조원 → '13년 0.8조원)

마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

- 종합적인 서민금융 안내를 통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

-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종합 상담, 지역 주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서민금융의 중심창구로 활용

- 미소금융·햇살론·바뀔드림론·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 번호(예 : 1397)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 설치 (8월말 개통 예정)

- 통합 콜센터 개통시기에 맞추어 서민금융 종합 홍보를 실시

* 대부업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서민금융의 주요 메시지 전달('길목차단형' 홍보)

바**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확대**

- ☐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창업재단의 인지도를 제고

* 지하철 및 무가지 광고 확대,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상 홍보 강화 및 창업보육센터, 창업스쿨 등과의 제휴 확대

- ☐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
- ☐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들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를 출범('12.9월 목표)
- ☐ '기업가정신센터' 개원('12.11월)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공간, 창업교육·정보, 인적네트워크 등 제공 추진

사**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재산형성 지원**

- ☐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
-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역모기지)의 활용도를 제고

* 가입요건 : “부부 모두 60세 이상” →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

- ☐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재산형성을 지원

민 병 두 의원

민 병 두 의원(민주통합당)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목록, 감사처분서 (사본), 직원들의 징계처분서

☐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는 총 10건임

| 감 사 명 | 감사 기간 | 처분서 |
|---------------------------|-------------------|------|
|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0.03.15 ~ 03.19 | 별첨1 |
|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10.01.28 ~ 04.02 | 별첨2 |
|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 '10.09.06 ~ 10.13 | 별첨3 |
|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 '10.12.09 ~ 12.29 | 별첨4 |
|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1.03.17 ~ 03.25 | 별첨5 |
|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 '11.03.21 ~ 05.26 | 별첨6 |
|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 '11.07.04 ~ 07.29 | 별첨7 |
|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 '11.09.19 ~ 10.31 | 별첨8 |
|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 '12.01.09 ~ 02.28 | 별첨9 |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12.03.05 ~ 03.16 | 별첨10 |

☐ 직원들의 징계처분서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0.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주의·시정)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2009.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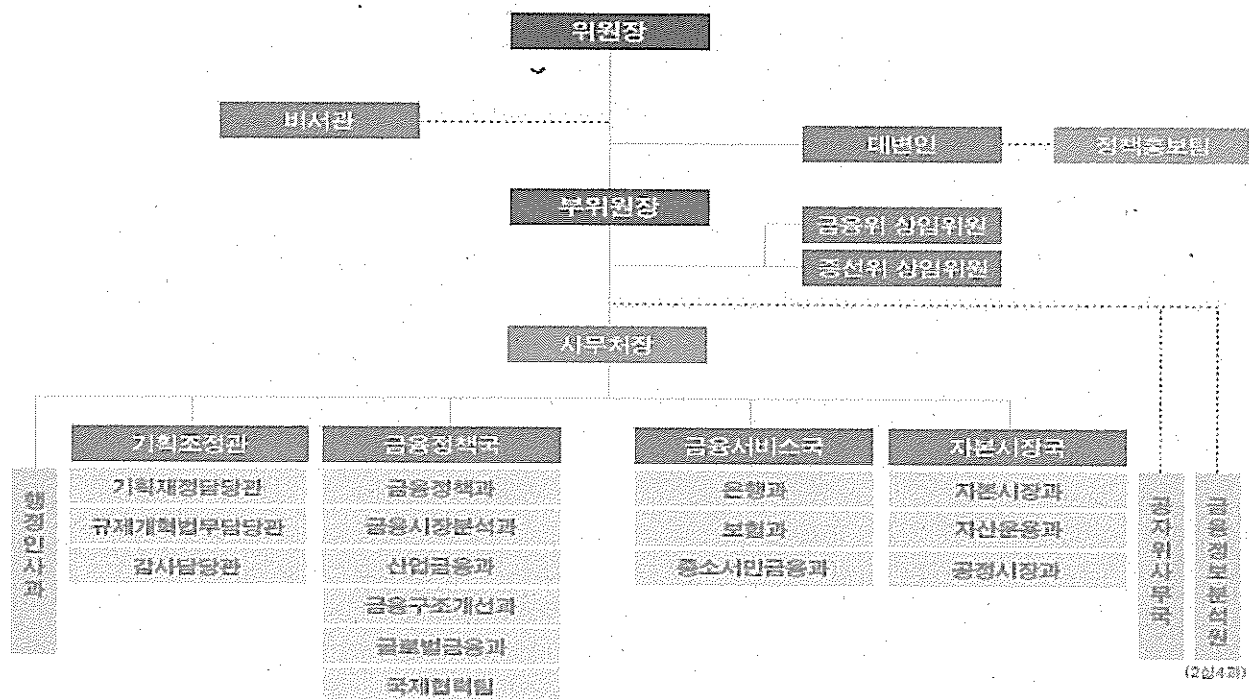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0 | 220 | 2 | 2 | 4 | 4 | 200 | 190 | 1 | 1 | 11 | 11 | 12 | 12 |
| 본 부 | 164 | 161 | 2 | 2 | 4 | 4 | 137 | 134 | 1 | 1 | 9 | 9 | 11 | 11 |
| 소속기관 | 66 | 59 | 0 | 0 | 0 | 0 | 63 | 56 | 0 | 0 | 2 | 2 | 1 | 1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09세출예산 | '08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6,811 | 424,263 | 38.3 |
| 일 반 회 계 | | 28,868 | 3,037 | 850.5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8,766 | 421,457 | 32.5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 110,362 | 89,972 | 22.6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 1,560 | 1,721 | △9.3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57,909 | 30,743 | 88.3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4,595 | 16,030 | 53.4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 20,912 | 13,250 | 57.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1,168 | 9,757 | 14.4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117,819 | 170,412 | △30.8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12,085 | 89,567 | △86.5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202,35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 | |
|---|-----------------------------|
| 일반회계 | 28,868 |
| 인건비 | 139 |
| 기본경비* | 86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 822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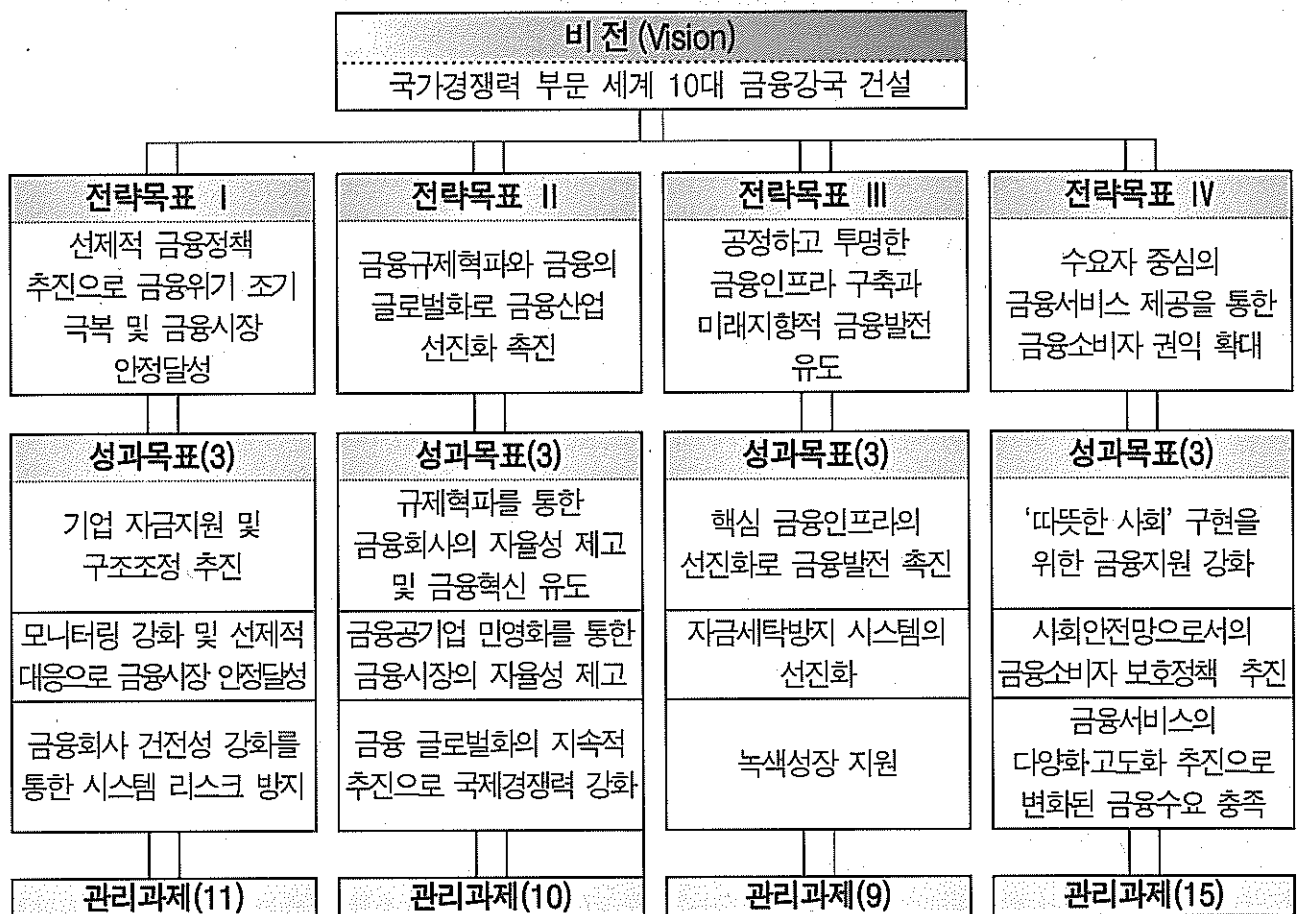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¹⁾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²⁾하

1)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³⁾

3)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 구 분 | 부적격 대출자 수 | 발건 주택수 | 부적격 대출잔액 | 부당 이차보전금 |
|-----------------------------------|-----------|-----------|---------------|--------------------------|
| 취급기준 위반 ¹⁾ | 3 | 6 | 200,072,054 | 2,939,440 |
| 사후적 자격 상실 ²⁾ (3주택자) | 31 (3) | 65 (9) | 1,552,079,790 | 26,192,495 ³⁾ |
| 계 | 34 | 71 | 1,752,151,844 | 29,131,935 |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
△동 △△△호를 보유하고 있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⁴⁾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위 직계 준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
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 전 략 목 표 | 사업규모(억 원) |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
|---|-----------|-----------------------------|
|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 33,667 | 17/17 (100%) |
| II.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23.1 | 15/19 (79%) |
|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 52.8 | 13/16 (81%) |
|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4,709.5 | 20/25 (80%) |
| 총 계 | 38,452.4 | 65/77 (84%)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목표치 |
|-----------------------------------|-------------------------|------------|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Ⅰ-3-정책②) | RBC제도 시행 | 관련 법규 개정 |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Ⅱ-1-정책①) |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Ⅱ-1-정책②) |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 법 제정 |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Ⅱ-1-정책③)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회계공시제도 개선 (Ⅲ-1-정책①) |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 시행령 및 규정개정 |
|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Ⅳ-2-정책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Ⅳ-2-정책②) | 관련 법령 개정 | 법령 개정 |
|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Ⅳ-2-정책③) | 내부통제개선 | 법 |
| 헤지펀드 도입 (Ⅳ-3-정책②) |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 시행령 개정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Ⅳ-2-재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재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

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1.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1-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1-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 | |
|----------------------------|--|
| 임무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
| 비전 |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I-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 성과목표 I-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성과목표 I-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II-1.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 성과목표 II-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 성과목표 II-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III-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 성과목표 III-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 성과목표 III-3. 녹색성장 지원 ▪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IV-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 성과목표 IV-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¹⁾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납 시 「국세징수법」상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해당연도 | 징수결정액 ²⁾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D=A-B-C) | | | |
|-------|----------------------------|------------|--------------|----------------|--------|---------------|-------|
| | | | | 소계 | 납기 미도래 | 거소불명· 재력부족 | 징수유예 |
| 2008년 | 26,194 | 7,825 | 2,017 | 16,352 | 2,062 | 13,810 | 480 |
| 2009년 | 30,273 | 7,251 | 834 | 22,188 | 4,210 | 15,394 | 2,584 |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²⁾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³⁾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⁴⁾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 부과일 | 과징금 체납액 |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 불납결손 결정일 |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
|--------------|-------------|-----------------|---------------|---------------|
| 2003. 7. 23. | 51,400,000 | 2008. 10. 29. | 2008. 12. 11. | 2010. 11. 23. |
| 2002. 6. 14. | 639,000,000 | 2009. 5. 22. | 2009. 12. 29. | 2010. 11. 23. |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⁵⁾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별첨 4>

감사결과보고서

-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

2011. 7.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대한생명 매각 경위 등 주요 현황

1. 공적자금 지원 전 대한생명 매각 경위
2. 대한생명 공적자금 지원 경위
3. 대한생명 매각 경위
4. 예금보험공사의 국제중재 관련 경위

III. 감사 결과

1.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
2.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3. 매각과정에서의 기망행위 관련 논란
4. 조치할 사항

[별 표]

표 목 차

- [표 1] 1~3차 입찰참가자 현황
- [표 2] 대한생명 관련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내역
- [표 3] 대한생명 지분 변동 현황
- [표 4]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경위
- [표 5] 한화계열 3사에 대한 제재조치 및 이행결과
- [표 6] ○○그룹과 △△그룹에 대한 제재조치
- [표 7] 2001년 대한생명 경영실적 추이
- [표 8] 감정평가 방식별 63빌딩 감정평가금액
- [표 9]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구성 내역
- [표 10] 할인을 적용에 따른 대한생명의 신계약가치 비교
- [표 11] 협상일자별 대한생명 매각협상가격 변동 추이
- [표 12] 대한생명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승소 내역
- [표 13]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현황
- [표 14] 대한생명 등에서 @@@(주)로부터 분양받은 내역

그림 목차

- [그림]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기관별 업무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에서 2010. 10. 1.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를 점검하여 국회에 그 실태를 보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감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 감사요구 내용 >

대한생명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자격 문제, 기망행위 여부, 매각가격의 적정성 문제, 공적자금 손실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10년 전에 있었던 매각절차 및 매각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는데 상당 시일이 소요되었고, 당시 관련자들도 이미 상당수가 퇴직한 후였기 때문에 면담을 통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감사로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국회 감사요구 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밝히고자 노력하면서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

란,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매각과정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논란을 감사중점으로 설정하였다.

3. 감사 기간 및 인원

2010. 12. 9.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1명(공인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6.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대한생명 매각 경위 등 주요 현황

1. 공적자금 지원 전 대한생명 매각 경위

- '99. 2. 13. : 금융감독원, 대한생명 자산·부채 평가 및 특별검사 착수

▶ 실사 결과, '98. 12. 31. 기준으로 순자산 부족액 2조 9,080억 원

- '99. 3. 23. : 구 금융감독위원회, 경영관리명령 부과 및 직접 매각 추진

- '99. 5~7월 : 구 금융감독위원회, 3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

[표 1] 1~3차 입찰참가자 현황

| 구 분 | 1차('99. 5. 8.) | 2차('99. 6. 7.) | 3차('99. 6. 28.) |
|-------|---------------------------------------|---|--|
| 참가자 수 | 4개사 | 8개사 | 5개사 |
| 입찰참가자 | ①① ¹⁾ , ①①, ②②(미국), ③③(미국) | 한화, ①①, ②②, ③③(미국), ④④(미국), ⑤⑤(미국), ⑥⑥(미국), ⑦⑦(미국), ⑧⑧(미국), ⑨⑨(미국), ⑩⑩(미국), ⑪⑪(미국), ⑫⑫(미국), ⑬⑬(미국), ⑭⑭(미국), ⑮⑮(미국), ⑯⑯(미국), ⑰⑰(미국), ⑱⑱(미국), ⑲⑲(미국), ⑳㉑(미국), ㉒㉓(미국), ㉔㉕(미국), ㉖㉗(미국), ㉘㉙(미국), ㉚㉛(미국), ㉜㉝(미국), ㉞㉟(미국), ㊱㊲(미국), ㊳㊴(미국), ㊵㊶(미국), ㊷㊸(미국), ㊹㊺(미국), ㊻㊼(미국), ㊽㊾(미국), ㊿(미국) | 한화 ²⁾ , ㉔㉕(미국), ㉖㉗(미국), ㉘㉙(미국), ㉚㉛(미국), ㉜㉝(미국), ㉞㉟(미국), ㊱㊲(미국), ㊳㊴(미국), ㊵㊶(미국), ㊷㊸(미국), ㊹㊺(미국), ㊻㊼(미국), ㊽㊾(미국), ㊿(미국) |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2. 대한생명 공적자금 지원 경위

- '99. 9. 14. : 구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 '99. 10. 1. : 예금보험공사, 500억 원 출자
- '99. 11. 25. : 예금보험공사, 2조 원 추가 출자

1) ①①그룹은 자금 조달 가능성은 높으나, 투자 규모(1조 원)가 다른 회사(2조 원)에 비해 적어 탈락하였음
2)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㉔㉕(미국)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문제로 탈락하였음

- '00. 4. 12. : 경영정상화 세부 이행계획 약정서 체결
- '00. 12. 2. : 국회, 추가 공적자금 조성(1.5조 원) 동의
- '01. 9. 6. : 예금보험공사, 1.5조 원 추가 출자

[표 2] 대한생명 관련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내역

(단위: 억 원)

| 구 분 | 일 자 | 관련 금액 | 지원 사유 및 회수 방법 |
|-------------------|--------------|--------|--|
| 지 원 | 합 계 | 35,500 | - |
| | '99. 10. 1. | 500 | ▪ 완전감자에 따른 출자 |
| | '99. 11. 25. | 20,000 | ▪ 경영정상화를 위한 순자산 부족분 지원 |
| | '01. 9. 6. | 15,000 | ▪ 경영정상화 및 매각추진을 위한 순자산 부족분 지원 |
| 회 수 ³⁾ | 합 계 | 12,406 | - |
| | '02. 12. 12. | 8,236 | ▪ 예보 보유 지분 51% 매각(1주당 2,275원) |
| | '08. 9. 29. | 2,584 | ▪ 예보 보유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이행(1주당 2,275원) |
| | '10. 3. 5. | 1,586 | ▪ 대한생명 상장공모 시 구주매출에 참여(8%, 1주당 8,200원) |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3. 대한생명 매각 경위

- '01. 3. 20.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3차), 대한생명 매각추진방안 의결
- '01. 5. 30. : 예금보험공사, 매각자문사 등 선정

▶ 매각주간사로 메릴린치&○○은행을, 법무법인으로 ㉠과 ㉡를,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을, 보험계리법인으로 ㉣를 선정하였음

- '01. 8. 7.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11차), 대한생명 세부 매각추진방안 의결

▶ 매각대상 주식은 51% 이상, 자격은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

▶ 63빌딩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는 분리매각)

3) 2010년 12월 현재, 예보의 잔여지분(215백만 주)을 감안하면 추가로 약 1조 7천억여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215백만 주 × 1주당 8,200원 = 1조 7,630억 원)

- '01. 10. 8. : ①①와 한화 컨소시엄, 인수의향서 제출
- '02. 3. 13. : 예금보험공사, 구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 '02. 3. 20. : ①①, 거래구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입찰 포기
- '02. 6. 21. : 구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회신
- '02. 6. 27.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26차), 한화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협상자로 선정

- ▶ 대한생명 인수 후, 3년간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금지
- ▶ '05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위 조건들 미충족 시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지분에 대해 콜옵션 행사)

- '02. 9. 18. : 구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수정 회신
- '02. 9. 23.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32차), 한화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선정,
대한생명 지분 51% 매각 의결
- '02. 10. 28. : 예금보험공사,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매각 본계약 체결
- '02. 12. 12. : 매각대금 수령 및 지분양도 등의 매각절차 완료

- ▶ 매각대금 8,236억 원은 2차례에 걸쳐 분할 수령('02. 12. 12., '04. 12. 13.)

[표 3] 대한생명 지분 변동 현황

(단위: %)

| 구 분 | | '02년 10월 | '03년 12월 | '07년 12월 | '08년 9월 | '10년 3월 ⁴⁾ |
|-------------|-------|----------|----------|----------|---------|-----------------------|
| 한 화 컨소시엄 | 한화그룹 | 30.50 | 34.00 | 51.00 | 67.00 | 50.25 |
| | 오 리 스 | 17.00 | 17.00 | - | - | - |
| | 맥쿼리생명 | 3.50 | - | - | - | - |
| 예금보험공사 | | 49.00 | 49.00 | 49.00 | 33.00 | 24.75 |
| 기 타 주 주 | | - | - | - | - | 25.00 |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4) 2010년 12월 현재 대한생명의 대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한화그룹[○○ 24.88%, ○○ 21.67%, ○○○ 3.70%]에서 50.25%, 예금보험공사에서 2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4. 예금보험공사의 국제중재 관련 경위

○ '04. 11. 17. : 검찰, ○○○○ ◎◎◎ @@@(대한생명 매각 당시 협상 대표)에
대한 수사 착수

○ '05. 2. 15. : 검찰, 위 사람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

▶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 내용을 숨긴 채,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 '05. 7. 1. : 서울지방법원, 1심 무죄(입찰방해)

○ '05. 11. 18. : 서울고등법원, 2심 무죄(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 '06. 6. 16. : 대법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 맥쿼리생명에 2,000만 달러를 빌려주고,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위장해 입찰과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무죄,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한 부분은 유죄

○ '06. 7. 28. : 예금보험공사, 매매계약 무효·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 신청

○ '08. 7. 23. : 국제중재법원,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패소)

○ '08. 9. 29. : 예금보험공사, 한화그룹 앞으로 콜옵션 대상 주식 이전

Ⅲ. 감사 결과

1.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

한화그룹에서 대한생명을 인수하려던 당시(2002년),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4호 등5)에 따라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이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며6),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등 주요 출자자7)(이하 “대주주”라 한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그런데 당시 한화 컨소시엄8)(한화그룹+오릭스+맥쿼리생명)에 속한 한화그룹은 2001년 12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32%로 200%를 초과하고 있었고, ~~가가가~~ ~~가~~·~~나나나나~~ 등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구 금감위 규정(「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부실 책임을 면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책임 여부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2002. 3. 14. 계열사에 대해 분식회계(주식회사 ㉠㉠ 3,310억 원, ㉡㉡ 주식회사 1,214억 원, 주식회사 ㉢㉢ 3,554억 원)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어 위 대주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대한생명 인수 자격이 없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별표 1]과 「보험업 감독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에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이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며,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등 주요 출자자(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음

6) 「보험업 감독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에 구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음

7) ‘주요 출자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8) 2001. 8. 7.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대한생명 세부 매각추진방안을 의결하면서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함에 따라 당시 보험사가 없었던 한화그룹(59.8%)에서는 일본 소매금융기관인 오릭스(33.3%)와 호주 생명보험사인 맥쿼리생명(6.9%)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음

이러한 논란에 대해 ①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 “매각소위”라 한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라 한다)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 ② 공자위 사무국의 매각소위 심사결과보고서 조작 여부, ③ 대주주 변경 시에도 보험업 신규허가 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④ 한화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 여부, ⑤ 한화계열사 분식회계로 인한 인수 자격 상실 여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공자위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매각소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인수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도 공자위에서 우선 협상대상자⁹⁾로 선정한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

① 2002년 6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상황

1999년 구 금감위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한생명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인수가격을 너무 낮게 제시(㉠㉠)하였거나 금융기관 부실책임자로서 인수자격이 없다(한화)라는 사유 등으로 모두 탈락된 이후, 정부에서 2001년까지 3.5조여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2년 6월 당시 인수대상자는 과거 대한생명 인수에 참여하였다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제척된 한화 컨소시엄만이 유일하게 남은 상황으로 같은 해 4월부터 위 한화 컨소시엄의 인수자격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온 매각소위는 같은 해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4명 중 3명의 의견으로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데 자격이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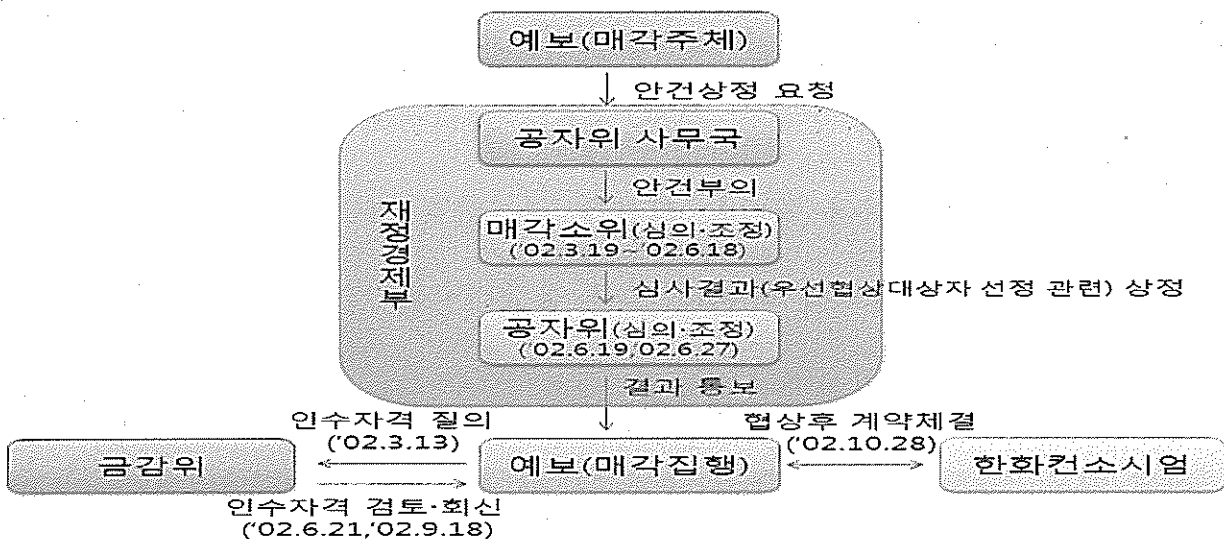
9)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안 매각협상에 우선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므로 매각 과정에서 큰 의의를 지님

그러나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는 「보험업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은 신규 설립할 때의 허가 요건으로서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구 금감위의 유권해석을 함께 검토하여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찬성의 표결로써 위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9. 23. 위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결정하였다.

② 검토 중점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그림]과 같이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라 한다)에서 대한생명 안전 상정을 요청하면 매각소위에서 공자위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대한생명 매각 관련 심사보고서 등의 안전을 심의·조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자위 안전으로 올려 이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그림]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기관별 업무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2년 9월까지 공자위(제1차~제32차)와 매각소위(제1차~제35차) 회의 중에서 대한생명 관련 안건 자료, 의사경과요지, 의결서 등을 검토하고, 당시 관련자들과의 전화·대면 면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공자위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 재정경제부 산하에 공자위를 두도록 했으므로 대한생명 매각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최종적인 심의·조정 권한은 공자위에 있고, 매각소위는 단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자위 소속으로 설치된 산하기구로서 공자위 기능을 보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비록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4명 중 3명의 의견으로 한화 컨소시엄으로의 대한생명 매각을 반대하였으나, 공자위가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위 매각소위 심사결과에 기속되어야 하는 의무는 없고, 위 매각소위에서도 위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각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공자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매각소위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공자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구 보험업 법령상의 대주주 요건을 한화 컨소시엄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구 금감위의 인

수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함께 검토하여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찬성(찬성 4, 반대 2, 불참 1)의 표결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내용 판단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 권한은 공자위에 있고, 그 공자위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표결로써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자위 사무국의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 조작 여부

< 검토 내용 >

- 공자위 사무국에서 매각소위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왜곡하는 등 심사결과 보고서를 조작하여 공자위 안건으로 상정했는지 여부

① 공자위 사무국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 제1항 및 구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등에 따르면 공자위의 업무 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구 재정경제부 산하¹⁰⁾에 공자위 사무국을 두어 공자위 및 매각소위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자위 사무국에서 3.5조여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매

10) 공자위는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2009년 4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다시 설치되었음

각과 관련하여 [표 4]와 같이 2002년 6월과 7월 사이에 개최된 공자위와 매각소위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4]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경위(2002년 6~7월)

- 2002. 6. 12. 사무국, 매각소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
- 2002. 6. 17. 사무국, 공자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
-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 개최, 한화의 인수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 2002. 6. 19. 제25차 공자위 개최, 구 금감위와 ○○학회 의견 보완 요청
- 2002. 6. 24. 구 재정경제부, 구 행정자치부에 ●●● 위원 해촉 의뢰
- 2002. 6. 25. 사무국, 매각소위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자위 안건 수정 보고
사무국, 공자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
- 2002. 6. 26. 구 행정자치부, 구 재정경제부에 ●●● 위원을 해촉하는 내용의 발령 통지
- 2002. 6. 27. 제26차 공자위 개최, 한화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2002. 7. 2. 제35차 매각소위 개최, 최종 심사결과를 사후 심의하여 수정 의결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제구성

② 검토 중점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2002년 6월 당시 공자위(제25~26차)와 매각소위(제34~35차) 회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당시 관련자들¹¹⁾과의 면담과 제출된 이메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심사결과 보고서 조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의 경우,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자위 사무국은 2002. 6. 19. 제25차 공자위

11)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자위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위임했던 매각소위 위원(▲▲▲)과 당시 공자위 사무국 실무자

안전으로 올리기 위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 사무국이 매각소위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반발¹²⁾이 있어 공자위 안전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매각소위 위원장(▶▶▶)이 구두 보고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02. 6. 27. 제26차 공자위 안전에는 매각소위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공자위에서도 표결을 통해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공자위 의결 후인 같은 해 7. 2. 제35차 매각소위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추인까지 하였으므로 매각소위 의견이 왜곡·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사무국은 2002년 6월 대한생명 매각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자위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매각소위 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공자위에 제대로 전달하는 한편, 공자위 위원의 출석관리를 제대로 하여 공자위 의결에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다음과 같이 위 사무국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

문제점 가) 대한생명 매각 관련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불철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정부와 예보 등 자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자위 산하에 매각소위를 두도록 되어 있고, 매각소위는 그 심사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¹³⁾되어 있다.

12) ♣♣♣ 위원은 사무국에서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송부함

13)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도 매각소위는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의1에도 매각대상 자산 및 매각의 기본방안을 결정하는 사항을 심사·의결하고, 최종심사 결과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또한,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무국장은 의결권이 없음)하여 의결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구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은 매각소위 회의의 의사경과요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무국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매각소위 위원들의 논의 및 찬성·반대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자위 안건으로 올리는 등 보좌 역할을 제대로 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바뀌치기’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2. 6. 18. 개최된 제34차 매각소위에서 대한생명 매각입찰에 참여한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위 한화 컨소시엄의 경우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별표 1]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매각소위 위원 중 한 명인 ♠♠♠ 위원이 그 내용을 기재¹⁴⁾하여 공자위에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공자위에서 매각소위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표 1] “사무국과 ♠♠♠ 위원 초안 등 비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사무국¹⁵⁾은 위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기 민영화를 통한

하고 있음

14) 공자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는 매각소위 위원들의 견해를 토대로 제작성하되, 의결권 있는 과반수(4명 중 3명)가 한화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의결하였음

15) 2002. 6. 18. 당시 사무국장은 매각소위 회의에서 “한화에 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안 판다.”라고 하였으나, 같은 해 6. 19.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있어 한화 컨소시엄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책상 필요하면 협상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음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매각절차 장기화에 따른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 후에 일정시점까지 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인수 후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34차 매각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매각소위 심사결과와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자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매각소위 위원들이 위 사무국이 임의로 작성한 위 안건에 반발함에 따라 위 안건을 정식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지 못하였고, 2002. 6. 19. 개최된 제25차 공자위에는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 매각소위 위원장이 구두로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¹⁶⁾하여 공자위는 당일 위 한화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구 금감위와 ○○학회의 의견을 보완하여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6. 27. 개최된 제26차 공자위에도 여전히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 후에 일정시점까지 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된 안건이 상정¹⁷⁾되어 위 한화 컨소시엄이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공자위 의결이 있는 뒤에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7. 2. 매각소위¹⁸⁾를 다시 열어 이를 추진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공자위 등이 운영된 유일한 사례가 되었으며, 그 후에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심사결과 보고서 ‘바꿔치기’ 논란 등의 빌미가 되었다.

16) 회의 종료 후에 ▲▲▲ 위원은 사무국에서 작성한 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17) 제25차 공자위 회의 후, 위 사무국에서는 매각소위 위원들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제26차 공자위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18) 매각소위에서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음

문제점 나) 공자위 위원 출석관리 불철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자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무국은 공자위 위원들에 대한 출석관리를 하면서, 2002. 4. 12. 공자위 위원 8인 중 대통령 위촉으로 선임된 ○○○○ 위원¹⁹⁾의 경우 같은 해 5월 (정확한 날짜 미상)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식 해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원 신분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도, 같은 해 6. 17. 및 6. 25. 제25차 및 제26차 공자위 회의 개최사실을 위원들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면서 ○○○○ 위원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제26차 공자위 회의 개최 (2002. 6. 27.)를 앞둔 같은 해 6. 24.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뢰하여 개최 전날인 같은 해 6. 26. 해촉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6. 27. 개최된 제26차 공자위 회의에서는 위 공자위 재적 위원이 당초 8명(의결정족수 5명)에서 7명(의결정족수 4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위원의 숫자에 영향을 주었고,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각소위의 반대의견이 있어 논란이 있다가 결국 위원 4명의 찬성²⁰⁾으로 가결(우선

19) 당초에 ○○○○ 위원의 임기는 2002. 4. 12.부터 2004. 4. 11.이었음

20) 제26차 공자위 회의에 매각소위 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

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위원 1명의 표결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3) 대주주 변경 시에도 보험업 신규허가 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 내용 >

- 매각소위 등의 의견처럼 보험업을 신규로 설립허가할 때에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한화그룹(대주주 변경)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① 2002년 구 금감위 공식의견(유권해석)과 관련한 상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당시 한화그룹은 「보험업법」 제5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도 현행 법령상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에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수자가 충분한 경영·출자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위 요건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2002. 3. 13. 예보에서 구 금감위에 대한생명 매각 관련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02. 6. 19. 제25차 공자위에서 매각소위로 하여금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공식의견을 접수한 후에 이를 최종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구 금감위는 같은 해 6. 21. 당시 보험업법령(「보험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보험회사 설립허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규

정하고 있으나, 설립 이후 대주주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주주 변동 사항은 금감위(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 보험사(대한생명)를 인수하는 한화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신규 설립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적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식의견을 회신하였고, 같은 해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이 공식의견을 바탕으로 한화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²¹⁾로 선정하였다.

② 검토 중점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한화그룹에 대한 대한생명 인수 자격 논란을 종결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 금감위의 공식의견(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 의견 및 검토 절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③ 검토 결과

「보험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 금감위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구 금감위에서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주식을 취득(지분 51% 이상)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최대주주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구 금감위가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21) 예보로 하여금 한화 컨소시엄과의 협상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벽(Fire Wall)을 마련하고 대한생명의 대주주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한화그룹에 신규 설립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과 같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수도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보험업법」에 최대주주 변경 시 주요출자자 조건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근거²²⁾가 필요하였다.

또한, 2000. 1. 21. 보험회사 신규 설립허가 시 주요 출자자 조건을 갖추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이후, 구 금감위는 ■■화재, ●●화재 등 다른 부실 보험 회사를 매각하면서 변경된 최대주주²³⁾에게도 위 법에 따른 주요 출자자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법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보험업법」에 최대주주를 변경할 때에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다른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금감위가 한화 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대하여 법적 제한이 없다²⁴⁾고 한 공식의견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④ 내용 판단

「보험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시 구 금감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신규 설립허가 시 요구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려면 명시적 법규정이 필요한 점, 다른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한 대

22) 2003. 8. 30 개정된 「보험업법」 제6조 제4항에서 보험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금감위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었음

23) 2001. 12. 7. ◆◆의 ■■화재 인수(지분 100%)와 2002. 1. 12. ●●의 ●●화재 인수(지분 100%)에도 신규 설립 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음

24) 최대주주 변경 시에는 보험회사 신규 설립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과다 여부는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없었음

주주에게 위 주요 출자자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 금감위에서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한화그룹에 대해 기존 보험사인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데 있어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한 공식의견(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화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 여부²⁵⁾

< 검토 내용 >

- 과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한화그룹이 책임 이행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금융당국 결정의 적정 여부

① 한화그룹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책임 이행과 관련한 상황

한화그룹은 1998년 퇴출된 [가가가가]과, [나나나나] 대주주로서 2002년 2월 말 기준으로 각각 1조 4,794억 원, 1조 4,874억 원 등 약 3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였다.

2000. 2. 24. 구 금감위에서 ○○○○의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면서 ○○○○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가가가가]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²⁶⁾에 따라 1,300억 원²⁷⁾의 증권금융채권(이하 “증금채”라 한다)을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25) 이미 검토한 “(3)항”과 같이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시에만 보험업 법령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 유무는 대한생명을 인수하는데 관계없는 사안이나, 실질적인 책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였음

26)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새로운 금융업 진출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경제정책조정회의(1999. 10. 22.)를 근거로 2000. 1. 14. 금감위 의결로 마련된 규정임

27) 순자산부족액(8,352억 원) × 대주주 지분율(33.3%) × 1/2 = 1,300억 원으로 당시 대주주 지분율은 실제로 17.38%였으나 대주주 지분율이 33.3% 이하인 경우에는 33.3%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

이후, 구 금감위에서는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 승인조건 변경 신청에 따라 증금채 매입기간을 기존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2000년 12월까지 3회로 분할²⁸⁾ 매입하는 것으로 2000. 8. 25. 변경 의결하였다.

한편, 2001. 3. 16. 구 금감위 간담회²⁹⁾에서 ○○○○에 대한 선물업 허가에 대해 검토하면서 [나나나나] 부실책임과 관련하여 IMF 관리체제 이전에는 임원 선임 등에 있어 정부 통제 및 간여가 있어 대주주의 경영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는 이유로 IMF 당시 퇴출된 은행에 대해 대주주의 경영참여 및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같은 해 4. 27. 구 금감위에서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선물업 허가를 하는 등으로 한화그룹은 [나나나나] 부실책임에서 면책되었다.

② 검토 중점

[가가가가] 부실 책임과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따라 증금채 1,300억 원을 실제 매입했는지 여부와 [나나나나] 부실 책임과 관련하여 구 금감위 간담회 당시 제출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의 검토 의견과 구 금감위 결정 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실 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한 구 금감위 면책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28) 2000년 8월 이내 100억 원, 9월 이내 추가 500억 원, 12월 이내 700억 원으로 연장

29) 2001. 3. 16. 간담회 참석 위원은 부위원장 [가가가] 등 7명의 위원이었는데, 간담회는 구 금감위 운영의 효율성과 신중한 심사를 위해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음
이는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각 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는 목적이고, 개별 인허가 사안은 구 금감위의 정식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음

③ 검토 결과

가) ○○○○ 대주주로서 부실책임 이행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의 채권예탁자계좌부를 확인한 결과, 2000. 8. 31. 100억 원, 같은 해 9. 30. 500억 원, 같은 해 12. 29. 700억 원의 증금채를 ○○○○이 인수한 사실이 있어 한화그룹이 위 금감위의 변경 의결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1,300억 원의 채권매입을 통해 부실책임을 이행하였지만 실제 부담금액은 328억 원에 불과³⁰⁾하여 1조 4,794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비해 적은 금액이므로 증금채 매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은 전액 예금대지급 자금으로 위 금액 자체가 부실규모가 아니고 이미 지원된 공적자금 중 ○○○○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배당을 통해 9,887억 원을 이미 회수한 바도 있었다.

문제점 나) ○○○○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에 대한 면책결정 부적정

2001. 3. 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운용방안”³¹⁾에 대한 구 금감위 간담회 수정안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여부는 일반법리와 적용 관례에 따라 경영참여 사실여부 및 부실경영에 관련된 사실의 정도에 따라

30) 채권인수금액(1,300억 원)에서 5년 만기 특수채(AA) 기준으로 현가할인한 인수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972억 원)를 뺀 금액

3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 운용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 적용사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한 향후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논의 내용은 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파악, ② 부실경영에 대한 직·간접 책임의 범위, ③ 순자산부족액 적용 기준시점, ④ 경제적 책임부담 시 실질 손실부담액의 형평성이었음

판단한다고 하였고, 판단의 일관성 유지와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해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관 감독부서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 소관 부서인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한화계열에 ○○○○ 부실 관련 경영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검토 결과를 선물업 허가 담당 부서인 증권감독국에 검토 자료로 제출하였고, 2001. 3. 16. 증권감독국에서는 위 은행감독국 의견과 한화 측 의견, 내부 변호사 의견을 구 금감위 간담회 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서 은행감독국은 “○○○○의 은행장 등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한화계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은행법」의 내용, ○○○○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화계열이 다른 주주와의 담합 등을 통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깊게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화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등은 대주주에 대한 경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 사항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반면, 위와 별도로 증권감독국에서 첨부한 내부 변호사 2인의 의견은 “부실 경영의 책임이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며, 한화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등은 대주주에 대한 경영책임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이라며 위 은행감독국 의견과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구 금감위에서 2001. 4. 27.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선물업 허가를 하는 등으로 한화그룹

의 [나나나나]에 대한 부실책임을 면책결정하면서 한화계열의 경영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 위 상반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별표 2] “퇴출은행 최대주주의 부실책임 관련 비교”와 같이 한화계열 여신 비중(15.2%)은 1998년 6월 당시 퇴출된 다른 4개 은행의 대주주 여신비율을 평균(7.2%)에 비해 두 배나 높았고, 다른 4개 은행과 달리 대주주에 대한 지급보증비율(37.4%)도 높았으며, [가가가가] 출신인 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는 한편, 한화계열에 대한 역외외화대출 6백만 달러가 전액 부실화되는 등 [나나나나]에 대한 한화계열의 실질적인 경영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도 2001. 3. 16. 구 금감위 간담회에서 [나나나나]에 대한 한화계열사의 부실책임을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 27. 구 금감위에서 ○○○○이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선물업 허가를 함으로써 한화그룹은 [나나나나] 부실책임에서 면책된 결과, 국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④ 내용 판단

한화그룹은 [가가가가] 부실책임과 관련하여 증금채 매입을 조건대로 이행하였으나, [나나나나] 부실책임과 관련해서는 한화계열 여신 비중, 대주주에 대한 지급보증비율 등과 같은 정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금융감독원 내부에 상반된 의견이 있었는데도 구 금감위에서 다른 퇴출

은행과 함께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 결정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업무처리였다.

(5) 한화계열사 분식회계로 인한 인수자격 상실 여부

< 검토 내용 >

- 시민단체 등에서 2002년 3월 한화계열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한 사실을 적발당하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대한생명 인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의 적정 여부

① 한화계열사 분식회계와 관련한 상황

1998년 12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해석」 42-59에 따르면, “부의 영업권³²⁾은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하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한 결과, 한화계열 3사[(주)㉠㉠, (주)㉡㉡, ㉢㉢(주)]는 투자주식 취득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면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액 발생연도의 당기순이익으로 일시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2. 3. 14.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위 한화계열 3사에 대해 [표 5]와 같은 제재조치를 한 바 있고, 한화계열 3사는 이를 이행하였다.

[표 5] 한화계열 3사에 대한 제재조치 및 이행결과

32) 취득가액(시장매입가액)과 장부가액(시장매입가액의 5~7배) 간의 차액

| 회사명 | 지적사항 | 제재조치 | 이행결과 |
|-------|--|---------------|-----------------------------|
| (주)㉠㉠ |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3,311억 원 |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 이행 |
| | | 감사인 지정 2년 | '02. 6. 28., '03. 6. 26. 지정 |
| | | 시정요구 | '02. 4. 12. 이행 |
| (주)㉡㉡ |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3,554억 원 |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 이행 |
| | | 감사인 지정 2년 | '02. 6. 28., '03. 6. 26. 지정 |
| | | 담당임원 해임권고(1명) | '02. 4. 12. 이행 |
| ㉢㉢(주) | ①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1,214억 원 ② 지분법 평가 시 내부 미실현 이익 미제거 : 1,594억 원 ③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주식 미기재 : 2,550억 원 |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 이행 |
| | | 감사인 지정 2년 | '02. 6. 28., '03. 6. 26. 지정 |
| | | 담당임원 해임권고(1명) | '02. 4. 9. 이행 |
| | | 시정요구 | '02. 4. 9. 이행 |

자료: 금융감독원

② 검토 중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분식회계 위반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한 다른 사례의 경우 보험업 영위에 있어 제한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③ 검토 결과

이미 검토한 “(3)항”과 같이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시에만 보험업 법령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화계열 3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가증권 발행제한(3~6개월),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2년)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보험사³³⁾를 소유하고 있던 ○○그룹[○○(주)·●●(주)·◇◇(주)]과 △△그룹[△△(주)]도 [표 6]과 같이 한화계열 3사와 유사한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보험업 영위에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표 6] ○○그룹과 △△그룹에 대한 제재조치

| 구 분 | 회사명 | 지적사항 | 제재조치 |
|------|-------|--------------------------------------|---|
| ○○그룹 | ○○(주) |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1명), 시정요구 |
| | ●●(주) |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
| | ◇◇(주) |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경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
| △△그룹 | △△(주) | ①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 | 주의, 시정요구 |

자료: 금융감독원

그리고 2002년 3월 구 금감위에서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에 대한 검토’³⁴⁾에서 한화계열사의 분식회계는 가공매출 계상 등과 같은 고의적인 회계조작이 아니고 주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회계처리라는 점에서 한화그룹의 사회적 신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한화의 시정조치 결과가 보험사 신규 설립허가 시에는 주요 출자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설립 이후 주요 출자자가 되는 경우(대주주 변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 위 분식회계와 관련한 한화

33) ○○화재, ○○생명, △△생명

34) 2002. 3. 13.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 관련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를 하자 보험감독과에서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상임위원 2인과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유사한 내용으로 같은 해 4월 공자위 매각소위에 제출하였음

계열 3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05년 3월 검찰에서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도 있었다.

④ 내용 판단

금융감독원에서 한화계열 3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고, 유사한 사례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업 영위 제한을 한 적이 없으며, 가공매출 계상 등과 같은 고의적인 회계적 사실의 조작이 아니라는 구 금감위 의견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법적인 조치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당시에 대주주 변경 시 신규 설립허가를 할 때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분식회계 적발 사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예보에서 공적자금 3.5조여 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매각(지분 51%)하는 실무 업무를 하면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는 매각 과정에서 [표 7]과 같이 그 당시 대한생명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어 공적자금의 추가 출자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앞으로의 경영 전망을 비관적으로 추정한 자료를 토대로 2001년 9월에 공적자금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도록 유도하였고, 매각주관사인 메릴린치 등이 대한생명 가치를 평가·산정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는 등 대한생명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한화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표 7] 2001년 대한생명 경영실적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 합 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당기순이익 | 8,794 | 607 | 2,057 | 3,032 | 3,098 |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국, 2002년 10월 위 공사는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지분 51%)을 2001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수준인 8,236억 원³⁵⁾에 매각하였고, 이 가격은 대한생명 지분을 100%로 환산할 경우에 1조 6,1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매각 1년 전에 추가로 투입된 공적자금 1조 5천억 원을 감안하게 되면 실제 매각가격은 1,150억 원에 불과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을 초래³⁶⁾했다는 사회

35) 매각대금 8,236억 원조차도 2차례(2002. 12. 12.와 2004. 12. 13.)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음

36) 구 금감위가 공개 매각을 추진하던 1999년에 한화 측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정부 부담을 6,700억 원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실제 부담이 없었으나, 2002년에는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대한생명을 1조 6,150억 원(지분 100%로 환산)으로 매각하여 1조 9,350억 원만큼의 공적자금 회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의혹도 있었음

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① 1999년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과 비교했을 때, 공적자금 회수의 손실 여부, ② 대한생명 매각 직전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의 적정 여부, ③ 대한생명 가치평가 및 산정의 적정 여부, ④ 대한생명 매각가격의 적정 여부, ⑤ 대한생명 관련 소송 승소액 귀속의 적정 여부, ⑥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가 쌍방대리를 했는지 여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1999년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 대비 2002년 매각조건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1999년 구 금감위가 추진하던 대한생명 매각 시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과 비교하여 공적자금 3.5조여 원이 투입되었는데도 2002년 공자위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큰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

① 1999년과 2002년 대한생명 매각 경위 등 비교

금융감독원에서 1999년 2월에 대한생명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은 2조 9,080억 원으로 정상적인 보험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구 금감위는 1999년 5월에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한생명의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다.

구 금감위에서 1999. 6. 28. 최종 입찰 결과, 당시 한화 측은 위 순자산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1조 5,600억 원을 투자금액으로 제시하고 그 외 6,800억 원을 후순위 차입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6,700억 원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투자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한화 측이

부실금융기관인 [가가가가]의 대주주였던 사유로 매각 대상에서 탈락되는 등으로 대한생명 매각이 실패하였다.

이처럼 대한생명 매각 추진이 실패한 이후에 향후 부실규모 증가가 우려되자, 구 금감위에서는 순자산 부족액에 대해 먼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뒤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까지 예보에서 총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대한생명에 출자하고, 2001년 3월부터 공자위는 대한생명 매각을 다시 추진하여 2002. 9. 23. 대한생명(지분 51%)을 한화 컨소시엄에게 8,236억 원(지분 100%로 환산할 경우 1조 6,150억 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② 검토 중점

1999. 6. 28. 구 금감위가 추진했던 대한생명 공개 매각에서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과 2002. 9. 23. 제32차 공자위에서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을 때의 매각가격 및 공적자금 투입액 등을 비교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1999년에 비해 2002년에 공자위가 대한생명을 헐값으로 매각³⁷⁾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큰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③ 검토 결과

1999년 구 금감위가 추진했던 매각 과정에서는 대한생명에 대한 재무실사가 없어 정확한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한화 측은 순자산 부족

37) 대한생명 매각가격의 적정 여부는 “(4)항”에서 별도로 검토하였음

액(2조 9,080억 원) 충당을 위한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동시에 추후에 실사를 통한 가치 평가를 하고서 순자산 부족액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초과 부분만큼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대한생명의 경우, 1999년 이후에 추가 부실이 발생하여 예보에서는 당시 순자산 부족액 2조 9,080억 원보다 6,420억 원 많은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2002년 공자위에서 매각을 다시 추진하면서 대한생명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1조 700억 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으로 1999년 한화 측이 투자조건을 제시한 이후에 총 1조 7,120억 원의 추가 부실이 나타났다.

④ 내용 판단

1999년 구 금감위가 한화 측의 투자조건을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 부실액 1조 7,120억 원만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2002년도 매각 조건하에서의 실질적인 공적자금 부담액 1조 9,350억 원과의 차이는 2,230억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99년과 2002년 매각을 추진했을 때의 대한생명 부실규모에 차이가 있는 등 경영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대한생명 매각 직전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대한생명에 대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매각 직전에 비관적으로 경영 전망을 한 자료를 토대로 1.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하여 실제 매각가격은 1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적정 여부

①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과 관련한 상황

1999. 9. 14. 구 금감위에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감소 명령과 함께 예보에 순자산 부족액의 50% 이상을 출자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1. 25. 예보에서는 ㉠회계법인의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순자산 부족분 3조 3,548억 원 가운데 예보채권 발행한도와 대한생명 영업력 등을 고려하여 60% 수준인 2조 500억 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2000년 3월 말 기준으로 다시 대한생명 순자산 부족액이 1조 6,312억 원³⁸⁾에 이르는 등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자, 같은 해 9월 구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매각 업무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³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2월에 국회로부터 대한생명 추가 출자(1.5조 원)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 4. 25. 개최된 위 공사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이 2조 500억 원으로 확대⁴⁰⁾되어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실누적으로 인한 순자산 부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조기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매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유로 1.5조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의결⁴¹⁾하여 같은 해 9. 6. 위 금액을 대한생명에 출자하였다.

38)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대한생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오류 수정손실(1,547억 원), 대우그룹 관련 추가손실 반영(714억 원), ▽▽▽ 전 회장의 세금대납손실(426억 원) 등으로 인해 2조 500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순자산 부족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9) 2001. 3. 20. 제3차 공자위에서도 대한생명 관련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매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 추가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음

40) ㉠회계법인에서 대한생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실사를 한 결과, 주식시장 침체(종합주가지수 : 2000. 1. 4. 1059, 같은 해 12. 26. 504) 등으로 인한 주식평가손실(2,264억 원),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추가(1,117억 원) 등으로 인해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이 2조 5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41) 대한생명에 대한 추가 출자분 1조 5,000억 원을 제외한 5,500억 원의 순자산 부족액은 대한생명의 자구노력으로 해소하기로 하였음

② 검토 중점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01년 9월까지 공자위, 매각소위 회의 자료는 물론, 예보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한화 컨소시엄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관적인 경영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공적자금 1.5조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예보에서 대한생명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인 한화 컨소시엄과 (주)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주)대한”라 한다)로부터 인수희향서를 접수(2001. 10. 8.)하기 이전인 2000년 9월에 이미 구 금감위에서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했으므로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당시 대한생명의 과다한 순자산 부족분을 그대로 두고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1.5조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었고, 추가 출자한 만큼 매각가치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매각가격에 그 가치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추가 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⁴²⁾

④ 내용 판단

대한생명 매각을 추진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42) 2001년부터 대한생명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은 공적자금 1.5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 후에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 의도적으로 경영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5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대한생명의 당기순이익 발생이 공적자금 1.5조 원 추가 투입을 통한 재무개선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기 위해 비관적 경영전망을 토대로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대한생명 가치평가 및 산정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매각주관사인 메릴린치 등이 평가하여 산정한 대한생명의 기업가치에 대해 적정하게 검토하고 매각협상을 했는지 여부

①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산정방법과 63빌딩 감정평가방법

대한생명에 대한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국내에서 합리적 기업가치(Appraisal Value)로 생명보험사 기업가치를 산정한 후에 매각한 최초 사례⁴³⁾였다.

합리적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해당 기업의 장부상 가치인 요구자본과 잉여자본으로 구성된 순자산가치, 현재 보유 중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보유계약가치와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영업을 통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신계약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그중 보유계약가치와 신계약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으로부터

43) 기업가치(1조 6,150억 원) = 보유계약가치(9,010억 원) + 신계약가치(1조 7,870억 원) + 조정 순자산가치(△1조 730억 원)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과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 등의 가정이 필요하다.

2001. 3. 20. 공자위의 대한생명 매각 의결에 따라 2002. 10. 28. 예보에서는 대한생명 지분 51%와 위 보험사의 보유자산인 63빌딩⁴⁴⁾을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으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 공사의 요청에 따라 2001. 9. 30. 기준으로 63빌딩을 감정평가한 (주)■■■■■감정평가법인은 63빌딩의 적정가격을 [표 8]과 같이 재조달 원가에 근거한 ‘원가방식’,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와 비교하는 ‘비준방식’, 매년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수익방식’으로 각각 산정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4,750억 원으로 정식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였다.

[표 8] 감정평가 방식별 63빌딩 감정평가금액

(단위: 억 원)

| 원가방식 | 비준방식 | 수익방식 | 적정가격 |
|-------|-------|-------|-------|
| 5,184 | 4,750 | 4,500 | 4,750 |

자료: (주)■■■■■감정평가법인

② 검토 중점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공자위 및 매각소위 회의자료와 예보 등에

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에 소재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로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권도 있는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함

서 대한생명 매각을 위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산정한 자료를 검토하고, 당시 대한생명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여 자산·부채평가를 실시한 ㉔㉔ 회계법인, 63빌딩을 포함한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주)㉔㉔㉔㉔ 감정평가법인, 현재 보유한 보험계약가치와 앞으로 발생할 신계약가치를 산정한 보험계리법인 ㉔㉔의 관련자, ○○학회 평가팀장 등을 면담하여 위 대한생명 기업가치 산정 방법과 가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내 다른 보험계리법인[㉔㉔㉔(주) 등]으로부터 검증은 받아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2001. 8. 7. 제11차 공자위에서는 대한생명 매각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하면서 세부 매각조건은 매각주체인 예보에 일임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산정 및 매각가격 협상 등 매각과 관련된 실무를 위 공사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후에 그 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에는 대한생명 매각 실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1. 6. 27. 용역계약을 통하여 메릴린치 피어스 페너 앤 스미스(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와 ○○은행(이하 “메릴린치”라 한다)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법률·회계·부동산 감정평가 등의 자문과 계리평가를 위하여 법무법인 ㉔㉔, ㉔㉔회계법인, (주)㉔㉔㉔㉔ 감정평가법인 및 ㉔㉔를 각각 자문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표 9]와 같이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를 평가·산정하도록 하는 등 매각 실무를 수행하였다.

[표 9]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구성 내역

(단위: 억 원)

| 구 분 | 평가금액(할인율 15% 적용) | |
|----------------|------------------|---------------|
| | '01년 9월 말 기준 | '02년 3월 말 기준 |
| 1. 조정 순자산가치 | △12,200 | △10,730 |
| 2. 보유계약가치 | 6,110 | 7,540 ~ 9,010 |
| 3. 신계약가치 | 18,500 | 15,440~17,870 |
| 4. 기업가치(1+2+3) | 12,410 | 12,250~16,150 |

자료: 에금보험공사

그 후,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을 대한생명 매각의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위 공사는 한화 컨소시엄과 세부 매각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대한생명)을 매각할 때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협상가격의 근거가 되는 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협상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했다.

또한, 한화 컨소시엄에서도 위 공사에서 제시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기초45)로 인수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협상에 임하였으므로 위 공사는 대한생명 매각을 추진할 때 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미비점들이 발견되었다.

문제점 가) 신계약가치 산정시 발생기간 적용 부적정 및 할인율에 대한 보고 미흡

1) 신계약가치 발생기간 과소 적용

45) 2002. 8. 5. 한화 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입찰과 관련한 한화 컨소시엄 최종 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한화 컨소시엄은 위 공사의 대한생명 매각주관사인 메릴린치 서울사무소(지점)로부터 2002. 7. 4.에 제공받은 최근 자료를 분석하고 대한생명의 최근 실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별첨과 같이 입찰가격을 제시합니다.”라고 하였음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가치는 순자산가치, 보유계약가치 및 신계약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신계약가치는 앞으로 발생할 보험가입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통상 1년간의 신계약가치를 구한 후에 배수를 곱하여 전체 신계약가치를 산정하거나, 처음부터 몇 년간의 신계약 해당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대한생명 매각이 국내 최초 사례)이 있다.

2002년 당시 예보에서 대한생명 기업가치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인 신계약 가치를 산정하면서 대한생명은 국내 3위 규모의 생명보험회사로서 공적자금 3조 5,500억 원이 투입되어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2001회계연도 당기순이익도 8,68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신계약 물량의 발생기간을 최대한 길게 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2002년 6월(정확한 날짜 미상)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보험계리평가기관인 ㉠㉠가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3년, 5년, 10년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요청⁴⁶⁾하자 위 공사는 이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매각주간사(메릴린치)의 의견에 따라 5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계약가치는 미래의 수익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이를 반영할 때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하는데 위 ㉠㉠는 [표 10]과 같이 보유계약가치와 신계약가치의 할인율을 13%, 15%, 17% 세 가지로 적용하되, 신계약

46) 2001년 9월에는 ㉠㉠가 1년치의 신계약가치를 평가하여 배수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나중에 예보와 ㉠㉠가 협의하여 공사 측 기업가치는 다시 산정해야 했기 때문에 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3년, 5년, 10년 세 가지 (안)을 제시하여 위 공사와 주간사가 협의를 통해 5년으로 결정하였음

가치에 대해서는 보유계약가치에 비해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 5년을 기초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 추가로 5%를 더 하여 할인율을 18%, 20%, 22%로 하여 신계약가치를 세 가지로 산정하였고, 2002년 6월(정확한 날짜 미상) 위 공사에서는 그 중간 값인 할인율 15%(평가시점에서 판매시점까지 20%)를 선택하여 신계약가치를 1조 7,870억 원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한화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시작⁴⁷⁾하였다.

[표 10] 할인을 적용에 따른 대한생명의 신계약가치 비교(2002년 3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 할인율 13%(판매시점까지 18%) | 할인율 15%(판매시점까지 20%) | 할인율 17%(판매시점까지 22%) |
|---------------------|---------------------|---------------------|
| 17,370~20,080 | 15,440~17,870 | 13,880~16,090 |

주: 신계약에 대해서는 판매시점에서 평가시점까지 5% 추가 할인

자료: 예금보험공사

2) 공자위에 신계약가치 산정 시 적용한 할인율에 대한 보고 미흡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리평가기관인 ④④에서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 5년을 기초로 신계약가치에 대한 할인율 13%, 15%, 17%와 신계약가치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 적용하는 할인율 18%, 20%, 22%로 각각 신계약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예보는 그 가운데에서 신계약가치에 대한

47) 기업가치와 매각가격은 다른 개념으로 기업가치는 매각협상가격의 근거가 되는 것인 반면, 매각가격은 매도자(예보)와 매수자(한화 컨소시엄, 통상 우선 협상대상자) 사이에 매각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기업가치 평가 및 산정과 매각협상가격에 있어 일부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헐값 매각’ 등 매각가격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할인율을 15%(평가시점에서 판매시점까지 20%)로 선택하여 위 가치를 1조 7,870 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신계약가치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큰 항목이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은 신계약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큰 변수⁴⁸⁾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2년 6월 매각소위에서 위 15% 할인율도 높다고 하는 등 논란⁴⁹⁾이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결정과 심사를 하는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기업가치 산정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신계약가치 산정에 적용된 할인율을 제대로 보고하여 위 위원회들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2002. 6. 19.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개최된 모든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위 신계약가치를 보고할 때에는 신계약 전체에 대해 15%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면서도 신계약가치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의 할인율은 실제로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한화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⁵⁰⁾하였다.

48) 기업가치평가에 있어 현재가치 할인에 사용되는 자기자본비용의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선택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한 15%(5년 기간)를 기준으로 1%의 자기자본비용 변화(할인율 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7~8% 수준이 되므로 어떤 기업의 기준가치를 2조 원이라 가정한다면 할인율 1%의 변화에 따라 1,500억 원 내외의 기업가치평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49) 매각소위에서 보유계약 및 신계약가치 산정 시 적용된 할인율 수준(15%)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학회에 할인율 15%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위 ○○학회는 어떤 수치를 사용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며 가장 낙관적인 값만을 사용할 경우에 할인율은 최소 12% 내외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하였음

50) [별표 3] "신계약물량 발생기간과 할인율에 따른 대한생명 신계약가치 비교"와 같이 위 공사가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보고한 것처럼 신계약물량 발생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신계약가치는 2조 69억 원인데도 위 공사에서는 평가시점에서 판매시점까지의 할인율을 20%로 적용하여 신계약가치를 1조 7,870억 원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는 신계약가치를 2,199억 원만큼 더 적게 산정한 상태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하였음

이에 대하여 예보는 대한생명의 매각주관사인 메릴린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매각협상과정에서 위 발생기간에 대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며, 대한생명 매각 이전에 신계약물량 발생기간을 5년 전후로 한 유사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년간 신계약가치를 계상한 후, 이에 대해 협상을 통한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한생명 매각은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반영하여 신계약가치를 산정한 방식의 최초 사례였고, 예보는 국민 세금이 투입(3조 5,500억 원)된 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최대한 길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매각주관사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다만, 위 공사는 대한생명 매각의 매도자 입장에서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더 많이 인정했다면 공적자금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점과 신계약가치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공자위 안전 등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문제점 나) 차감할 필요 없는 ‘지급여력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매각협상을 위한 기업가치 계상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은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회사가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순자산가치)을 보험계약자 몫으로 유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유보된 순자산만큼 주주의 몫에서 제외되고 향후 보험계약이 만료될 때에 다시 환원시키게 되므로 보험사 매각을 위한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⁵¹⁾해야 한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56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7]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은 1조 8,362억 원이었으며, 감정평가액은 9,652억 원이었다.

따라서 대한생명에 대한 지급여력금액 산정을 하면서 위 부동산 장부가액(1조 8,362억 원) 중 감정평가액(9,65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8,710억 원)만큼의 지급여력에 대해서는 주주 입장에서 앞으로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이익을 유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주주의 기회비용 4,645억 원⁵²⁾을 대한생명 기업가치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었다.⁵³⁾

그런데도 위 공사는 기업가치 산정 용역기관인 ④④가 대한생명에 대한 지급여력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지급여력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위 지급여력 확충에 대한 주주의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기업가치를 1조 6,15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02. 10. 9. 구 금감위(보험감독과)에서 검토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본 계약 체결(안) 검토’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공사 측 자문사가 평가한 기업가치는 부동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8,710억 원(할인을 15%를

51)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주주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하여도 모두 배당받을 수 없고 일정기준에 따라 자본이나 잉여금 등을 ‘지급여력’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위 ‘지급여력’을 투자하여 운용수익률(본 건의 경우 연간 7%)이 발생하더라도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본 건의 경우 연간 15%)에 비하여 더 낮은 수익률로 투자되어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됨

52) $(8,710\text{억 원} \times (\text{주주 요구수익률 } 15\% - \text{지급여력 운용수익률 } 7\%)) \div \text{할인율 } 15\% = 4,645\text{억 원}$

53)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2002. 5. 20. 회제이 8360-00153)에서도 대한생명이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의 사용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한다면 부동산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감액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대한생명보험 지급여력평가 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인정하였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2. 1. 12. 매각 본 계약을 체결한 ★★★★★보험주식회사 사례가 있었음

적용하면 4,645억 원)만큼 과소계상 되었음을 지적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공자위나 매각소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기업가치는 양측이 각자의 방식으로 산정한 후 최종 금액 1조 6,15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8,236억 원으로 한다고 합의되어 2002. 9. 23. 공자위 의결까지 거친 사항이므로 내부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과소 계상된 기업가치를 기초로 합의된 매각가격대로 계약을 체결⁵⁴⁾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력을 인정할 경우, 대한생명 기업가치는 2조 795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주주의 기회비용분인 위 4,645억 원을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한화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예보는 대한생명에 대한 지급여력금액을 산정하면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부동산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익⁵⁵⁾(8,710억 원)을 기업가치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 효익을 계리적인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업가치 산정 용역기관에서 지급여력 확충에 대한 주주의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생명의 기업가치(1조 6,150억 원)는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 흐름을 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유계약가치(9,010억 원)와 신계약가치(1조 7,870억 원)를 계산한 후, 조정 순자산가치를 차감(1조 730억 원)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주주에

54) 위 공사는 구 금감위의 지적에 대해 2005년 3월까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 당기순이익으로 총당금(적립금)을 쌓은 후, 총당금이 부동산 가치 차액 보전 가능한 시점에서 부동산을 재평가한 뒤에 시가를 장부가치로 반영하기로 하여 대한생명 기업가치가 8,710억 원(할인율 15%를 적용하면 4,645억 원)만큼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각 계약은 공자위에서 의결한 그대로 하되 사후적으로 한화 측의 배당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가치가 과소 계상된 부분을 치유하고자 하였음

55) 배당재원 증가에 따른 효익 또는 지급여력 충족재원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게 귀속 가능한 모든 현금 흐름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예보는 지급여력가치(부동산 장부가 - 감정평가액)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효익을 제한하는 방법(주주배당 제한)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를 철저히 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다만, 위 공사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 효익의 가치를 산정하여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주주간 계약서에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장부가에 반영하기 전까지 주주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사후에 위 효익을 차단한 사실은 인정한다.

문제점 다) 63빌딩을 공식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협상

2002년 10월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지분 51%)하면서 위 생명보험사 소유의 63빌딩도 일괄매각하였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대한생명)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2001. 8. 7. 제11차 공자위와 2002. 9. 23. 제32차 공자위에서 대한생명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63빌딩을 분리매각하거나 일괄매각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정하게 평가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위 공사 및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는 63빌딩을 포함한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 산정을 위해서 (주)■■■■■감정평가법인⁵⁶⁾에 감정평가를 요청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은 63빌딩의 적정가격을 4,75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56) 해외 감정평가법인인 ■■■■에도 감정평가를 요청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인 4,750억 원과 차이가 너무 많아 그대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협상을 하기로 함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대한생명의 인수 희망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2002. 6. 27.)되기 이전부터 한화 측과 63빌딩 매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한화 측에서 63빌딩의 가격을 3,800억 원으로 제시하고, 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개인 의견으로 위 감정평가법인의 공식 감정평가액 4,750억 원보다 11.9%(520억 원) 낮은 4,230억 원을 협상 가격으로 제시하자, 마치 이를 위 감정평가법인의 공식적인 수정가격인 것처럼 그대로 인정하여 4,230억 원으로 63빌딩의 가격을 낮추어 조정⁵⁷⁾한 후 대한생명 매각 가격(8,236억 원)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보는 (주)○○○○○○○○○○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4,750억 원)을 토대로 감정평가사 개인 의견을 참고하여 매각협상을 위한 금액(4,230억 원)을 정한 후, 한화 컨소시엄의 제시금액(3,800억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였으므로 특혜가 아니고, 63빌딩을 대한생명(지분 51%)과 함께 일괄매각하여 전체의 매각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 수정된 공식 감정평가액인 것처럼 수용한 (주)○○○○○○○○○○감정법인 감정평가사의 63빌딩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순수한 개인의견이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공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위 공사에서 63빌딩을 대한생명과 일괄매각하면서 전체 매각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다만, 예보는 4,230억 원이 위 공사의 매각협상을 위한 금액으로 (주)○○○○○○○○○○

57) (주)○○○○○○○○○○감정평가법인의 공식 감정평가액(4,750억 원)과 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개인 의견을 인정하여 매각협상에 반영한 금액(4,230억 원)과의 차이인 520억 원만큼 기업가치를 과소계상(대한생명 지분 51%를 곱하면 265억 원 상당임)한 상태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하게 되었음

감정평가법인의 공식 감정평가액이 아닌데도 이를 수용하여 당시 63빌딩 가치를 낮추는 등의 업무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대한생명 매각가격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공적자금 3.5조 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지분 51%)을 한화 컨소시엄에 8,236억 원으로 매각한 가격에 매각부대조건(지분 51% 매각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부여, 매각대금 50%를 2년간 이연함에 따른 이자절감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① 경영권 프리미엄의 중요성

경영권 프리미엄⁵⁸⁾은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가로서 기업 고유의 가치라기보다는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인수기업(한화 컨소시엄)이 피인수 기업(대한생명)을 인수함에 따른 인수기업의 시너지 효과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인수기업은 다른 계열 기업과의 협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상장사의 현재 주가 또는 생명보험사 기업 가치(순자산가치+보유계약가치+신계약가치)에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불하게 된다.

2002년 당시 비상장 생명보험사⁵⁹⁾였던 대한생명에 대해서도 51% 이상의 지

58) 최근 ㉠㉡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지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분가격의 10%를 더 지급하기로 했고, ㉠㉡지주는 ㉢㉣은행 등을 인수하기 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합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분을 매각한 뒤, 증시에 상장될 때까지 잔여지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므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51% 이상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상받을 필요성이 있었다.

② 검토 중점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공자위 및 매각소위 회의자료와 예보 등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매각 협상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검토하고, 당시 매각 실무를 담당하였던 관련자들과 ○○학회 평가팀장 등을 면담하여 매각 가격 8,236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콜옵션 가치 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외국계 투자은행으로부터 콜옵션 산정 방법 등을 검증받는 등으로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예보는 3.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한생명에 대해 2002. 6. 27.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가격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표 11]과 같이 6차례에 걸친 매각 협상을 진행하여 같은 해 10. 28. 대한생명 지분 51%를 8,236억 원(지분 100%로 환산하면 1조 6,150억 원, 5년 이내에 추가 16% 지분에 대한 콜옵션 포함)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생명 매각 관련 실무를 수행하였다.

59) 2010년 3월 대한생명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되었음

[표 11] 협상일자별 대한생명 매각협상가격 변동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 '02. 7. 5. | '02. 7. 8. ⁶⁰⁾ | '02. 7. 13. ⁶¹⁾ | '02. 8. 5. | '02. 8. 29. | '02. 9. 22. |
|--------|------------|---------------------------|----------------------------|------------|-------------|-------------|
| 매각협상가격 | 11,000 | 12,200 | 13,000 | 14,200 | 15,200 | 16,150 |

자료: 예금보험공사

위 공사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대한생명)을 매각할 때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했고,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이 3.5조 원이나 투입된 대한생명에 혈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경영권 프리미엄,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가치, 매각대금 이연납부에 따른 이자경감액을 기업가치 등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이를 기초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 대한생명 매각부대조건에 대한 매각협상가격 반영 미흡

문제점 가) 매각협상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미반영 의혹

2001. 7. 27. 예보에서 작성하여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제출한 ‘대한생명(주) 매각추진방안’에 따르면 대한생명 지분을 51%에서 66%까지 매각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양도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매각가치를 높일 수 있고, 67%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극대화를 통해 초기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60) 2002. 7. 8. 한화 컨소시엄은 콜옵션 16%와 매각대금 2회 분할 납부의 조건을 제시하였음

61) 2002. 7. 13. 한화 컨소시엄은 제시한 인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을 포함하였음

그리고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2년 4월과 5월에 개최된 매각소위에서도 매각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 바도 있었다.

또한, 2002. 7. 12. 위 공사에서 작성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협상내용 보고’에 따르면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 공사의 기업가치 산정 용역기관인 ④④가 평가한 기업가치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비교 검토하였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업가치에 반영하는 등으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가격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2002. 6. 27.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추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지도 아니하였고, ④④가 구체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금액을 밝히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으로 위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문제점 나) 매각협상가격에 콜옵션 가치 미반영

예보의 요청으로 2002년 10월 구 금감위(보험감독과)에서 회신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본계약 체결(안) 검토’에 따르면 한화 측에서 행사 가능한 콜옵션 적용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적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5년 후(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장시점)에 행사 가능한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의 적용

가격을 당초 매각가격(주당 2,274.51원)이 아닌 공정하고 통상적인 방법을 통한 재평가된 가격⁶²⁾으로 매각하도록 위 공사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는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추가 지분 매입권(콜옵션) 16%를 재평가하여 그 옵션가치를 별도로 산정한 후에 기업가치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위 콜옵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추가로 매입할 때의 적용가격도 재평가된 가격이 아닌 당초 매각가격으로 위 컨소시엄이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하여 위 컨소시엄이 실제로 당초 가격인 2,584억 원(주당 2,274.51원)으로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최소 619억 원⁶³⁾에서 최대 1,384억 원⁶⁴⁾만큼 그 가치⁶⁵⁾가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문제점 다) 매각협상가격에 매각대금 이연납부에 따른 이자수익 미반영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을 하면서 대한생명 매각대금의 50%에 해당하는 4,118억 원을 2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납부조건을 이연해 주었으므로 그에 따른 2년간 이자비용 453억 원을 매각협상가격에 포함하여 협상을 추진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협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가항”, “나항”, “다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사는

62) 한화 입장에서는 주당 가치가 현재 매각가격보다 상승한 경우에만 지분을 추가 매입(콜옵션 행사)할 것이므로 한화가 추가 매입할 때의 적용가격은 주식분할, 병합, 추가적인 발행, 주식배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고려한 이자비용, 옵션 가격 모델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 받는 모델인 ‘블랙숄츠모형’ 등에 따라 재평가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

63) 2,584억 원 - {2,584억 원 ÷ (1.0563)⁵(2002. 10. 31. 기준의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619억 원

64) 콜옵션 16%(113,600,000주)의 가치에 대해 ‘블랙숄츠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할 경우에 1,384억 원으로 추정됨

65) 2004. 8. 4. (주)한화는 오릭스로부터 콜옵션을 주당 1,116원에 매입하였음

한화 컨소시엄과의 대한생명 매각협상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콜옵션 가치, 매각대금 이연 납부로 인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채, 대한생명의 순수 기업가치(조정 순자산가치+ 보유계약가치+신계약가치)만 산정하여 협상을 시작한 반면, 위 컨소시엄은 위 공사가 제시한 기업가치 범위 내에서 매각가격을 제시하면서도 제시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콜옵션 가치 등이 모두 반영된 것처럼 하여 협상가격을 제시했는데도 예보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협상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매각 협상을 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콜옵션 가치,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비용 등 합계 최소 2,472억 원⁶⁶⁾에서 최대 3,237억 원⁶⁷⁾을 매각협상가격에 추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대한생명을 한화 컨소시엄에 8,236억 원(51% 지분가치)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보는 대한생명 매각 당시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산정하기는 곤란하였고, 2002. 9. 23. 제32차 공자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종의 무형자산으로서 대한생명 기업가치에 포함되었다는 의견을 보고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 받은 후에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인수자(한화 컨소시엄) 측에서 오히려 대한생명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발생 등을 감안하여 포함(1,400억 원)했고, 2002년 7월 예보에서

66)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 + 콜옵션 최소가치 619억 원 + 이연납부 경감액 453억 원

67)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 + 콜옵션 최대가치 1,384억 원 + 이연납부 경감액 453억 원

내부 검토 문서를 통해 대한생명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과 비교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반영하여 가격협상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일종의 무형자산으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위 공사는 ‘블랙솔즈모형’에 따른 콜옵션 가치산정방식은 대한생명 매각당시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생명보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옵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콜옵션 가치 및 매각대금 이연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은 기업가치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한화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상향시키는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 매각가격(8,236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자문사 최소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생명 기업가치 평가에 적용된 할인율(15%)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생명보험사가 없었는데도 재무관리이론을 통해 산출한 바 있으므로 국내에 상장된 보험사가 없어 콜옵션 가치를 산출할 수 없었다는 위 공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대한생명 기업가치와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위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어 있지만 예보의 기업가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제외하면 매각자문사 최소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기초로 매각협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5) 대한생명 관련 소송 승소액 귀속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예보가 매각 이후 발생하게 될 대한생명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승소액을 위 공사에 귀속되도록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이 발생하고, 대한생명 인수자인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

①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소송 승소액의 귀속과 관련한 상황

2003. 11. 28. 대한생명은 기독교선교 (주)재단을 상대로 대한생명의 전 회장이었던 ∇∇∇이 1993년 6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위 기독교선교 (주)재단에 불법으로 기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010년 12월 303억여 원을 회수한 것을 포함하여 [표 12]와 같이 위 보험회사와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예보에서는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득하는 소송 승소액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표 14]와 같이 대한생명 관련 소송 승소액이 한화 컨소시엄으로 귀속되고, 위 귀속액만큼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12] 대한생명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승소 내역

| 구 분 | 판결금액 | 합의금액 | 회수액 | 소제기일 | 확정판결일 | 지분에 따른 예보 환수 가능액 ⁶⁸⁾ |
|------|-----------|-----------|-----------|--------------|--------------|------------------------------------|
| ☞☞ | 3,970만 달러 | 3,500만 달러 | 3,500만 달러 | '99년 12월 | '04. 12. 29. | 1,785만 달러 |
| ☞☞ | 683억 원 | - | 4,000만 원 | '02. 10. 2. | '07. 5. 10. | 2,040만 원 |
| ☞☞재단 | 507억 원 | 348억 원 | 303억 원 | '03. 11. 28. | '08. 4. 24. | 228억 원 |

자료: 예금보험공사

68) 예보는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지분 51%)한 후에 대한생명에 대해 49%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었고, 2008. 9. 29. 한화그룹에 대한 콜옵션 이행으로 33%의 지분을, 2010. 3. 13. 대한생명의 유상증자 및 상장 등으로 인하여 2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각 승소액 귀속시기의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 미환수분 액수를 산정하였음

② 검토 중점

2002. 9. 18.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공자위에 보고한 최종 협상 결과 보고서와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 전 대한생명 회장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 등 1,596억여 원의 우발채무 및 우발자산과 관련된 위 공사의 보고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한생명 매각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 및 우발자산을 한화 컨소시엄에 귀속되도록 한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2002. 6. 27.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에 예보는 위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출채권 부실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분만큼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풋백 옵션⁶⁹⁾을 위 컨소시엄에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세금·계열사 간의 법적 분쟁 등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 전 회장의 횡령금액⁷⁰⁾과 관련하여 1999.

69) 풋백 옵션은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예, 추가 부실 발생)하면 매수자가 기업 인수 후에 일정한 시점이나 가격에 대해 매도자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70) 2002. 10. 28. 예보가 한화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당시 대한생명은 ▽▽▽ 전 회장이 횡령한 1,809억여 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585억여 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0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상황이었고, ▽▽▽ 전 회장이 1999. 6. 29. 퇴직함에 따라 특수 관계가 소멸되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 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1호에 따라 앞으로 ▽▽▽ 전 회장이 횡령한 1,867억여 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합계 1,343억여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4. 1.부터 1999. 6. 29.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1,343억여 원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 등록세 등 253억여 원⁷¹⁾을 위 공사의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여 한화 컨소시엄에 위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위 공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2. 9. 23. 공자위는 위와 같은 최종 협상 결과를 전제로 대한생명을 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예보에서는 위 최종 협상 결과를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에 반영하여 위 컨소시엄에 대출채권 부실화 등과 관련된 풋백 옵션을 부여하지 않았고, 향후 ▽▽▽ 전 회장 및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세금을 위 공사의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여 매각 이후에 발생 가능한 일부 우발채무를 위 컨소시엄에 부담하게 하는 한편, 매각 이후에 발생하는 소송 승소액 등과 같은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④ 내용 판단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소송 승소액 등 우발자산 귀속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으나, 대출채권 부실화 등과 관련된 풋백 옵션을 위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생명 매각 이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은 발생 확정과 동시에 대한생명에 귀속되어 위 공사와 위 컨소시엄은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손익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므로

71) 대한생명은 1996.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내인 불광동, 강서, 성남시 분당에 지점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 138조에 따라 94억여 원의 등록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한생명의 안양, 부평, 강남 사옥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어 158억여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었으므로 향후 ▽▽▽ 전 회장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함께 1,596억여 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음

예보가 우발자산에 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만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곤란⁷²⁾하다.

또한,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이 확정될 때마다 별도의 귀속 조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절차와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여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명료하게 처리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의 처리 방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보에서 앞으로 대한생명이 취득하게 될 소송 승소액과 같은 우발자산에 대해 귀속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이 발생하고, 위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가 쌍방대리를 했는지 여부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을 위한 주간사로 메릴린치를 선정한 절차의 적정 여부와 메릴린치가 한화 컨소시엄 측에도 자문하는 등 쌍방대리를 하였는지 여부

① 예보의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

2001. 4. 20.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보의 ‘매각주간사 선정 위원회’에서 매각주간사 제안서를 접수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

72)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매 대상 회사에 귀속(이 사건의 경우, 대한생명)되는 것이지만, 부실 회사의 인수·합병 시 매수자는 자산 부실에 따른 추가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우발채무에 대한 풋백 옵션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임. 예보도 대한생명 매각 이전인 1999. 12. 31. 財團은행을 財團에 5천억여 원에 매도하면서 일반여신은 2002년 말까지, 워크아웃 여신은 2003년 말까지 추가로 부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보가 2001년 말까지 3조 7,756억여 원의 풋백 옵션 대금을 공적자금으로 지급한 바 있어(현재까지 5조 2천억여 원의 풋백 옵션 대금 투입), 대한생명 매각 당시에 제한적인 항목(세금, 계열사 간의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만 손실 보전을 약정하고 일반적인 자산(대출채권, 유가증권, 소송 패소액 등) 부실에 대한 풋백 옵션을 부여하지 않았음

가를 통하여 ①①① 등 5개 기관⁷³⁾으로 압축하였고, 이후 2001. 4. 27. 매각소위(1인)·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5인)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1차 평가 결과로 선정된 5개 기관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차 평가를 실시하여 메릴린치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

② 검토 중점

매각주간사로 선정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12개 기관(1차) 및 5개 기관(2차)에 대한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당초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메릴린치의 수입 수수료 명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위 기간 중에 한화 컨소시엄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쌍방대리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다.

③ 검토 결과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와 평가 자료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메릴린치에 대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메릴린치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쌍방대리를 한 경우에 수취하였을 수도 있는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화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2. 8. 5. 한화 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입찰과 관련한 한화 컨소시엄

73) ①①①, ①① & ①①, ①①①, ①①① & ①①, 메릴린치

최종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대한생명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서울사무소(지점)로부터 2002. 7. 4.자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대한생명의 실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나, 보험회사에 대한 계리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채택된 가정에 따라 계리가치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통상의 보험회사 M&A과정에서 매도자 측에서 매각대상 보험회사의 보험계리가치 평가자료를 매수자 측에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 쌍방대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내용 판단

메릴린치를 대한생명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별도의 계좌추적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감사상의 한계가 있어 한화에서 메릴린치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3. 매각과정에서의 기망행위 관련 논란

2004. 11. 17. 검찰에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인수자격 관련 특혜 의혹과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당시 한화그룹의 협상 대표였던 ○○○○ ○○○○ @@@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2006. 6. 16.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검찰 수사와 3심 재판 과정에서 대한생명을 최종 인수한 한화 컨소시엄이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2002. 6. 27.)되기 전인 2001년 12월에 한화그룹은 위 컨소시엄에 생명보험사가 참여⁷⁴⁾하여 투자자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당시 투자참여가 불투명하던 맥쿼리생명(호주계 생명보험사)의 명의를 사실상 차용하는 내용의 비밀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생명사가 한화 컨소시엄의 전략적 투자자라는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예보에 제출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①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보에서 한화의 기망행위를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한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③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의 조건 이행에 대한 예보 점검의 적정 여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74) 대한생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국내의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었음

(1)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내용 >

- 검찰 수사와 국내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의 이면계약 등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의 이면계약과 관련한 검찰 기소 내용

한화그룹 임원(○○○○ ○○○ @@@)은 공자위가 제시한 투자자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생명보험사인 맥쿼리생명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2001년 12월 초순경 한화 컨소시엄에 위 생명보험사가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생명 인수 후에 운용자산의 1/3에 해당하는 자산운용권을 주는 것 이외에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위 생명보험사의 투자지분(3.5%)에 해당하는 출자금 미화 2,000만 달러⁷⁵⁾와 이에 따른 제반 비용⁷⁶⁾ 전부를 한화그룹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초순경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팀 사무실에서 컨소시엄 구성원이 각자 대한생명 지분을 직접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화그룹은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곡물수출입방식을 통하여 지원⁷⁷⁾하고, 그 외에 위 생명의

75) 2001. 12. 14. 한화그룹이 제시한 대한생명 예상 인수가격 7,000억여 원에 대한 맥쿼리생명의 지분

76) 보험료, 대리인 수수료, 은행수수료, 법률자문비용,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비용, 세금, 문서작성 비용 등

77) 곡물수출입 회사인 □□ □□□□, ▲▲ ▲▲▲와 사전 협의하에 주식회사 한화는 □□ □□□□부터 대두유(Soybean oil) 27,180,816달러 상당을 360일 뒤 결제조건의 기한부 수입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하고, 한화는 다시 위 대두유를 주식회사 ▼▼▼▼에 27,918,28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며, ▼▼▼▼은 위 대두유를 ☆☆☆☆☆에 26,338,00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고, ☆☆☆☆☆은 위 대두유를 한화가 사전에 알선했던 ▲▲ ▲▲▲에 26,338,000달러에 즉시 현금결제 조건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 전액을 맥쿼리생명에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대여하고, 맥쿼리생명은 위 26,338,000달러(한화 28,262,500,000원)를 대

보험사의 컨소시엄 참여에 따른 제반 비용과 이익제공은 1차 이면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2차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화 컨소시엄은 이러한 이면계약의 내용을 숨기고 마치 맥쿼리생명 이 진정한 투자 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2002. 9. 23. 공자위로 하여금 대한생명(지분 51%)을 위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10. 28. 예보와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2005. 2. 15. 위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한화그룹 임원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한 후,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예비적으로 기소하였다.

② 검토 중점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한화 측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원의 형사판결문과 국제중재법원의 국제중재 판정문 및 관련 소송기록 일체를 입수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와 국제중재 소송에서의 패소 사유를 확인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③ 법원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

서울지방법원(1심 법원)은 2005. 7. 1. 위와 같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공자위가 제시한 투자자 자격조건은 필수 조건이 아닌 우대 조건으로 투자자를 본격

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하여 한화그룹 및 오릭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에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며, ☆☆☆☆☆는 대한생명 주식보호 예수기간 1년이 경과한 즉시 한화그룹이 지정한 회사(○○○○)에 위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이 위 곡물 메입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음

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가 입찰을 포기하여 2인 이상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입찰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2005. 11. 18. 서울고등법원(2심 법원)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예비적으로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매각소위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자격과 가격 등의 문제에는 심사를 엄격하게 했으면서도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위 컨소시엄도 투자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컨소시엄이 위 생명보험사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예보 등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월한 부정한 수단이나 책략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2006. 6. 16.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한화그룹 임원의 이면계약 체결 행위에 관한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⁷⁸⁾를 확정하였다.

④ 국제중재 소송에서의 패소 사유

2006. 7. 28. 예보는 국제중재법원에 맥쿼리생명이 한화그룹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공사를 기망한 후에 주식매매계약

78) 구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부분 등은 유죄를 선고하였음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은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투자와 관련된 위험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고의적으로 이면계약 내용을 숨긴 사실은 모두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예보는 입찰과정에서 한 번도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하거나 주식 자금조달에 대하여 실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주주 간 계약서에도 위 생명보험사가 대한생명 지분을 언제라도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위 공사는 위 생명보험사의 자금출처뿐만 아니라 참여 그 자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소극적 기망행위와 대한생명 매각 결정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2008. 7. 23. 위 공사의 청구를 기각(예보 패소)하였다.

⑤ 검토 결과

이처럼 이면계약에 따른 기망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법적 절차를 통해 그 사실관계는 인정되고 있으나,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 전략적 투자자 검증 및 매매계약 체결 업무 미흡

2001. 8. 7. 제11차 공자위에서 대한생명에 대한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하는 ‘대한생명 세부 매각추진방안’을 의결하면서 예보로 하여금 투자자 자격요건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매각조건 및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 컨소시엄과의 협상에 대한 실무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화 컨소시엄이 2001. 12. 14.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맥쿼리생명의 자금조달방법에 대해 자금조달준비를 완료하지 않았으나, 컨소시엄이 지급해야 할 매수가격의 본인 부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금조달방법과 출처는 구체적으로 기재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와 같은 해 9. 23. 제32차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투자자 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최종 인수자로 각각 선정하고, 대한생명(지분 51%)을 매각하도록 의결했으므로 위 공사는 투자자 자격과 관련하여 필수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맥쿼리생명이 투자위험을 부담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했다.

또한, 경영 능력이 검증된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면 대한생명을 매각한 후에 잔여 지분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공사는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하기 전에 맥쿼리생명이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인지를 검증하여야 했고, 대한생명 매각 후에도 위 생명보험사가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각 관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한화 컨소시엄이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자금조달방법과

출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위 공사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위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더구나, 2002년 2월경 대한생명의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도 위 컨소시엄에 대해 컨소시엄 외국파트너들의 투자는 제한적이고, 경영 참여범위가 불확실하며, 인수 자금조달능력도 유보적인 한편,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협력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해 4. 13. 맥쿼리생명에서는 위 공사에 “이사회에 구성원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는 등 경영 참여 등에 불명확한 태도와 의사를 표명하여 위 컨소시엄이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는에도 위 생명보험사의 경영 참여 등 투자자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거나 대한생명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처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위 공사는 2002. 6. 27.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위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내용이 투자자 자격요건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맥쿼리생명과 한화그룹 사이에 체결된 이면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같은 해 10. 28. 컨소시엄 구성원 간 별도 약정이 유효함을 인정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주식매매계약(주식매매계약서 4.10조) 등을 체결⁷⁹⁾하였다.

79) 대한생명 매각의 투자자 자격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험사인 맥쿼리생명이 장기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는데도 위 생명보험사가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언제든지 컨소시엄 내부 구성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컨소시엄을 탈퇴할 수 있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주주간 계약서 3.2조)을 체결하였고, 대한생명 매각 1년 뒤인 2003년 12월 실제로 위 생명보험사는 이면계약 내용과 같이 한화건설에 지분 3.5%를 모두 매각하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음

그 결과, 2008. 7. 23. 국제중재법원에서 위 공사의 맥쿼리생명에 대한 투자자 자격 검증 방식과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위 공사가 맥쿼리생명이 전략적 투자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오히려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별도로 체결된 위 약정을 반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패소 판정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2) 국제중재 신청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예보가 한화 컨소시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① 예보의 국제중재 신청 관련 처리 경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과정에서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체결된 이면계약에 따른 기망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 2006년 예보에서는 외부 법무법인과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에 한화 컨소시엄의 이면계약을 이유로 위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 질의를 하였으나 “준거법이 「민법」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답변⁸⁰⁾을 받았다.

80) ① 예보에서 항소심 법원 판결 이후인 2006년 1월 법무법인 ㉔㉔에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인지 여부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하여 국제중재 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질의를 하자, 위

그런데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위 공사는 사장 내부 결재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해 7. 28. 국제중재법원에 한화그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8. 7. 23. 패소하였다.

② 검토 중점

예보의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규정」, 「내규 및 소송 등 관리규정」 등의 내부 규정과 국제중재 관련 법률 자문 서류를 검토하고, 위 공사가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하여 공자위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입수한 후에 관련자들로부터 국제중재 신청 처리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으로 위 공사가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문제점: 국제중재 신청 관련 업무처리 미흡

문제점 가) 이사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위배하면서 국제중재 신청 결정

예보 내부 규정인 「이사회 규정」 제5조 제5호에 따라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필수 의결사항이고,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6항에 따라

법무법인에서는 2006. 1. 27.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식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 컨소시엄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기도 어렵다면서 국제중재를 신청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였음

② 2006년 3월 예보에서 법무법인 ○○에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같은 사유로 취소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질의를 하자, 2006. 3. 24. 위 법무법인에서는 대한생명 관련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다소 곤란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계약은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정상적으로 이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주장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였음

③ 예보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에서도 위 “②항”과 같은 법률 질의에 대해 2006. 5. 10.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한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상태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한화 컨소시엄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한 예보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였음

사장이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장의 최종 결재 후에 감사에게 송부하여 공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 내부 규정인 「내규 및 소송 등 관리규정」 제18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부서장 등은 소송업무를 하면서 법무실장에게 소송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법무실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송심의회위원회에 부의하여 소송사유,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내부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고, 사장 전결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이후에는 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공람하도록 하여야 했다.

또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국제중재는 조정 등과 같이 소송에 준하는 분쟁 해결 절차이고, 외부 법무법인과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의 법률자문 결과가 중재 신청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므로, 「내규 및 소송 등 관리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⁸¹⁾하여 소송심의회위원회에 국제중재 신청 여부를 부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사장 전결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후, 감사에게 송부하여 공람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소송심의회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지도 않았다.

81) 어떤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사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

문제점 나) 공자위에 국제중재 신청 관련 보고를 하면서 중요사항 누락

위와 같이 예보에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후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6. 5. 29. 공자위에 ‘대한생명 매각 관련 사후관리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공자위의 심의를 받았다.

그런데 위 공사가 공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부 법무법인 등의 법률자문 결과,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점과 대한생명 매각 관련 국제중재의 경우에 준거법이 국내 「민법」이므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 국제중재 비용(법무법인 비용 등 국제중재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얼마가 예상된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자위 위원들이 국제중재 신청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위 보고서에 한화그룹의 행위는 공자위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하였으므로 국제중재가 불가피하다며 검토배경, 이면계약의 문제점,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만을 기재하고, 별첨으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법률검토 의견(매각 당시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히 위 법무법인에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민법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간략히 기재하였다.

이상의 “가항”과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보는 국제중재 신청에 대

한 외부 법무법인과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의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는데도 이사회 의결과 감사의 공람,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자위에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채로 2006. 7. 28.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2008. 7. 23. 국제중재법원에서 국내 「민법」을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패소 판정함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국제중재 신청 관련 비용으로 210억여 원⁸²⁾의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한화 컨소시엄의 조건 이행에 대한 예보 점검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후에 해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예보에서 적정하게 점검했는지 여부

① 예보의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조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경위

2002. 3. 20. 거래구조 등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에서 대한생명 인수를 포기한 후, 대한생명 인수 희망자로 유일하게 남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해 같은 해 4월부터 인수자격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오던 매각소위는 같은 해 6. 18. 제34차 회의에서 위 컨소시엄의 주요한 구성원인 한화그룹이 현행 보험업법령(「보험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사의 신규 설립

82) 패소에 따른 공사 부담 비용 121억 원, 자문수수료 81억 원, 국제중재법원 비용 7억여 원, 출장비 1억 원 등

허가에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위 컨소시엄을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4인 중 3인의 의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위 보험업법령에 따른 주요 출자자 요건은 보험사를 신규 설립허가할 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구 금감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만, 매각소위에서 반대한 한화그룹의 자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미만을 달성할 것 등의 조건⁸³⁾을 세부협상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컨소시엄이 위 조건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2002. 9. 23. 제 32차 공자위는 위 컨소시엄을 대한생명의 최종 인수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 10. 28.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주식 51%(한화그룹 30.5%, 오릭스 17%, 맥쿼리생명 3.5%)를 8,236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한화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부채비율을 2005. 1. 31.까지 항상 2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2005. 12. 31. 이전까지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주주간 계약서 5.2조 a항)과 대한생명은 주주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한화계열사에 신규로 자금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주주간 계약서 5.2조 b항)을 주주간 계약서에 반영하였고, 한화그룹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컨소시엄에 매도한 주식을 반환받을

83) 인수 후 일정 기간(3년) 동안 대한생명은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고, 2005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미만을 달성하며, 예보가 감사와 일정한 수의 이사 임명권을 보유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음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내용(주주간 계약서 5.3조 a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한화그룹이 위 주주간 계약서에 따른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2003. 8. 29.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한 이후로 2006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행점검을 실시⁸⁴⁾하였다.

② 검토 중점

2003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예보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그룹에 부여된 조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와 이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화그룹에 대한 이행점검을 적정하게 했는지 확인하였다.

③ 검토 결과

[표 13]과 같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3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현황(2002~2005년)

(단위: %)

| 구 분 | 2002년 (230% 미만) | 2003년 (230% 미만) | 2004년 (230% 미만) | 2005년 (200% 미만) |
|--------------------|--------------------|--------------------|--------------------|--------------------|
| 공정거래위원회 공표 부채비율 | 206.5 | 194.6 | 179.2 | 159.3 |
|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한 부채비율 | - | 208.0 | 202.6 | 171.0 |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84) 제1차 이행점검 : 2003. 8. 29.~9. 17., 제2차 이행점검 : 2004. 7. 5.~7. 13., 제3차 이행점검 : 2004. 11. 11.~11. 19.
제4차 이행점검 : 2005. 7. 18.~7. 22., 제5차 이행점검 : 2006. 1. 9.~1. 19., 제6차 이행점검 : 2006. 6. 12.~ 7. 11.

그런데 국회 등 일부에서 한화그룹이 인수한 대한생명의 지분법 평가이익 등이 위 부채비율에 반영된다면 조건 이행점검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예보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을 점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표한 부채비율에서 대한생명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한 부채비율도 함께 검토한 결과, [표 13]과 같이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하고서도 주주간 계약서 5.2조 a항에 따른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이전에 대한생명은 이미 총 5건의 여신⁸⁵⁾, 합계 810억 원을 한화그룹에 지원하였는데, 이후 위 810억 원의 여신에 대해 만기 연장(2005. 7. 31. 기준으로 여신 잔액은 670억 원이었음)을 한 것과 [표 14]와 같이 대한생명, △△△와 ▽▽▽가 @@@(주)로부터 164억여 원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이 주주간 계약서 5.2조 b항에 따른 신규자금 지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표 14] 대한생명 등에서 @@@(주)로부터 분양받은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 합 계 | 대한생명 | △△△ | ▽▽▽ |
|-------|--------|--------|-------|-------|
| 합 계 | 16,450 | 10,774 | 4,340 | 1,336 |
| 골프회원권 | 7,080 | 5,160 | 960 | 960 |
| 콘도회원권 | 9,370 | 5,614 | 3,380 | 376 |

자료: 예금보험공사

85) 2002년 1월 ㉠에 250억 원, 2000년 1월 ㉢㉣에 120억 원, 2002년 1월 ㉢㉢에 300억 원, 2002년 1월 ㉠㉣에 120억 원, 1999년 12월 ㉢㉢에 20억 원의 여신을 각각 취급하였음

그러나 만기 연장의 합의는 기존 채권의 중요 부분에 대한 변경합의가 아니라, 기존 여신이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다7445판결)이 있고, 위 공사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무법인 ㉔ ㉕, 법무법인 ☆☆ 등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한생명의 한화계열사에 대한 만기 연장을 신규 자금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위 주주간 계약서 5.2조 b항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신규 자금 지원’이란 대한생명과 그 계열사들이 한화계열사에 대해 대출, 회사채 인수, 지급보증 등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거래와 같은 상품·용역 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위 법무법인들의 의견도 있었으므로 이것 역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 취소 대상 매매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미흡

2004년 11월 예보에서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2005년 1월 법무법인 ㉔㉕에 이면계약과 관련하여 위 공사가 한화 컨소시엄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하여 질의하는 등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등에 위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등에 대한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한 바가 있

어,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관련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계약서 제11.3조에 따라 위 컨소시엄에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공사는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한화그룹에 대한 조건 이행점검을 실시⁸⁶⁾하는 등 위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추인'⁸⁷⁾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 체결을 이유로 위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등의 취소를 계속 검토하였던 위 공사는 주식매매계약서 제11.3조에 따라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위 컨소시엄에 송달하여 신속하게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거나, 취소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한화그룹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때 주식매매계약 등을 추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위 컨소시엄에 고지하는 등으로 '추인'에 해당하여 향후 행사될 수 있는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이면계약 내용을 인지한 이후에 신속하게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지 않았고, 2004. 12. 13.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지분 매각대금의 잔금 4,118억 원을 수령할 때에는 매각대금의 잔금 수령이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86) 제4차 이행점검 : 2005. 7. 18. ~ 7. 22., 제5차 이행점검 : 2006. 1. 9. ~ 1. 19., 제6차 이행점검 : 2006. 6. 12. ~ 7. 11.

특히, 제6차 이행점검은 예보에서 내부적으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이후에 실시하였음

87)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취소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계약상 권리의 추인으로 보는 것으로 위 '추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따라 발생하게 될 공사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매매계약을
추인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하고서도 한화그룹에 대한 제4차에서 제6차
까지의 이행점검을 실시하면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점검을 실
시하는 등 한화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위 주식매매계약 등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2008. 7. 23. 국제중재법원에서 위 공사가 이면계약 사실을 인정한
후에 신속하게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약 1년 반 동안 위 컨소
시엄과 그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회사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은 주식매매계약 등을 추진⁸⁸⁾한 것이라는 사유 등으로 패소 판정하는 하나의 원
인을 제공하였다.

88) 국제중재법원은 예보가 현재 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이 발각된 후, 거의 1년 반 동안 한화
컨소시엄의 인수계약 이행을 계속 수용한 것은 주식매매계약 등의 추진이라고 판단하였음

4.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보좌하면서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논의 및 찬성·반대에 대한 심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고,
-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출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③ 대주주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데도 다른 부실금융기관들과 함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 결정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생명보험사 매각을 위한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매각 협상을 시작하면서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짧게 인정하는 등으로 신계약가치를 적게 산정하고, 차감할 필요가 없는 지급여력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기업가치가 과소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업무도 제대로 하는 한편,
- ②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적정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협상하지 않도록 하고, 대주주 지분 50%를 넘게 매각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콜옵션 등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 컨소시엄의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④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절차도 준수하도록 하며,

⑤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별 표 】

[별표 1] 사무국과 ♠♠♠ 위원 초안 등 비교

[별표 2] 퇴출은행 최대주주의 부실책임 관련 비교

[별표 3] 신계약물량 발생기간과 할인율에 따른 대한생명 신계약가치 비교

[별표 1]

사무국과 ♠♠♠ 위원 초안 등 비교

| 구 분 | 공자위 사무국 초안 | ♠♠♠ 위원 초안 | '02. 6. 19. 공자위 안건 |
|---------------------------------|--|---|--|
| 심사 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 매각가격의 적정성, 인수자의 적정성 순의 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 시 고려사항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원칙에 충실"하여 구조조정 비용 회수의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저가 매각 또는 특혜시비 등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 ▪ 인수요향을 제시한 투자자들과의 협상 결과 @@가 제출한 투자제안서상 거래 방식은 매각추진방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매각가격의 적정성 순의 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비용 회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회수 극대화 원칙에 충실하고, 투명·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저가매각특혜시비를 사전 차단 |
|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령상 기존 보험사의 인수자격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 - 한화 컨소시엄의 경우, 공자위가 의결한 세부매각추진방안에도 부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심사소위가 한화컨소시엄의 인수 자격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게 된 계기는 올 3월 한화그룹 주요계열사들의 분식 결산사실이 적발되면서 한화그룹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을 의심할 상황이 야기되었기 때문 - 결국 한화컨소시엄이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한화그룹사들의 감사보고서들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 - 그러나 상기 요건은 보험사의 신규 설립 시 허가요건으로서 현행 법령상 기존 보험사 인수 시에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존재 |
|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규정한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수자가 충분한 경영출자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 이에 따라 대한생명 인수자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규정한 공적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수자의 충분한 경영출자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불가피 - 매각심사소위 위원 4인 중 3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화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의 인수자로서 적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 - 이에 따라 대한생명 인수자에 대해서도 현행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위원회에서 제기 |
|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요건을 감안한 경우, 한화 컨소 시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한화컨소시엄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마땅히 구비 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물론, 이번 사안은 신규허가가 아니라 기존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 * 분식회계 문제의 경우 투자제안서 제출시점('02. 3. 15.)에 제기됨에 따라 인수자 적정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계기를 제공 |

| 구 분 | 공자위 사무국 초안 | ◆◆◆ 위원 초안 | '02. 6. 19. 공자위 안건 |
|---------------------------------|--|---|---|
|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 <p>① 부채비율 200% 초과</p> <p>② 과거 간헐적 부실책임과 관련, 현행 금감위 규정에 의거 책임이행 완료</p> <p>- 실질적인 책임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은 상존</p> <p>③ 최근 한화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 적발사실 등을 감안할 때 경영 투명성 또는 사회적 신용 관련 문제도 제기</p> | <p>- 그러나 「보험업법」상 주요출자자에게 일정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신규 허가나 자본인수나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주요출자자의 사후변경 시에도 사실상 보고를 받고 감독권한을 행사하므로 주요 출자자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p> <p>▪ 상기 요건을 감안할 경우, 한화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p> <p>① 부채비율 232%로서 「보험업법」 관련 법령상 기준인 200% 초과</p> <p>② 한화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에 결격</p> <p>▪ 둘째, 대한생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p> <p>① 그룹 전체로 최근 10년간 적자발생이 지속되는 등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보유 여부에 의문</p> <p>② 최근 한화그룹 소속사들의 회사채 발행내역, 회사채 발행 시 지적된 각종 위험성 등에 비추어 한화컨소시엄이 향후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구심 제기</p> | <p>▪ 재무능력 문제</p> <p>- 한화그룹 주력사의 가용자금규모 및 회사채 만기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대한생명 인수자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p> <p>- 그러나 향후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출자능력에는 의문이 제기</p> <p>- 최근 10년간 그룹 전체로 적자발생이 계속되고 주력계열사의 재무능력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p> |
| 결론 (심사 의견) | <p>▪ 한화컨소시엄의 투자제안서는 매각 가격과 인수자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는 일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p> <p>-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대한생명의 조속한 민영화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p> <p>①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 및 국가 신인도 제고</p> <p>② '99년 이후 수차례 매각추진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른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p> | <p>▪ 매각심사소위 위원 4인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3인의 위원은 한화컨소시엄이 인수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p> <p>- 하지만, 인수자격 문제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공자위에 있으므로 추후 가격협상의 진행 여부는 공자위에서 대한생명의 조속한 민영화 필요성 등 각종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p> | <p>▪ 한화컨소시엄의 투자제안서를 인수자 및 매각가격의 적정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당초 공자위가 매각 시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p> <p>- 이하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p> |

| 구 분 | 공자위 사무국 초안 | ◆◆◆ 위원 초안 | '02. 6. 19. 공자위 안건 |
|--|--|---|--|
| 결 론 (심사 의견) | <p>③ 그간의 경영개선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시기능 및 선진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점도 감안</p> <p>▪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의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p> <p>-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매각가격과 인수자의 적정성 문제 해소를 위 향후 협상 방향과 함께 강구</p> | <p>▪ 추후 가격협상을 하게 될 경우, 매각 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한생명의 가치는 현행 가치평가결과에 동 기준 시점 이후 대한생명의 경영개선실적, 유사기업과의 상대가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조정</p> <p>- 아울러 한국재무학회의 용역결과를 반영</p> <p>- 구체적인 매각지분비를 등은 매각 주체에 일임하되, 상기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한 지분매각대금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각대금에 반영</p> | <p>③번은 제외</p> <p>- 이에 따라 향후 매각협상 방안은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함이 바람직</p> |
| 결 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 향후 협상 방향) | <p>▪ 매각가격 관련 사항</p> <p>- 매각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한생명의 가치는 현행 가치평가결과에 동 기준 시점 이후 대한생명의 경영개선실적, 유사기업과의 상대가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조정</p> <p>- 구체적인 매각지분비를 등은 매각 주체에 일임하되, 상기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한 지분매각대금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각대금에 반영</p> <p>▪ 인수자 관련 사항</p> <p>- 인수자의 건전한 재무능력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해 대한생명 인수 후 일정 시점까지 현행 법령상 보험사 신규 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p> <p>- 대한생명의 계열사 지원에 따른 제 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 후 일정기간 동안 대출, 유가증권 매입 등 제반 자금지원을 제한</p> <p>- 예보의 경영감시기능 확보 차원에서 예보는 감사 및 보유지분에 비례한 이사 임명권을 보유</p> | <p>▪ 관련 내용 없음</p> | <p>▪ 인수자의 적정성</p> <p>- 대한생명의 인수자는 현행 「보험업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 및 충분한 출자재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한화컨소시엄의 경우, 현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p> <p>- 다만, 동 출자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행 「보험업법」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상기한 조기 민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자위 결정에 따라 향후 협상을 계속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적정성 관련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조건으로 협상하는 것도 강구할 수 있음</p> <p>- 인수자 적정성 해소방안(예시),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p> <p>▪ 매각가격의 적정성</p> <p>- 현행 한화컨소시엄의 투자제안서상 매각대금은 대한생명의 적정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p> <p>-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p> |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자료 재구성

[별표 2]

퇴출은행 최대주주의 부실책임 관련 비교

| 구 분 | 대대대대 | ₩ ₩은행 | 〇〇은행 | ⊥ ⊥은행 | ∠ ∠은행 |
|--------------------------|---|----------------------------|--------------------------|----------------------------------|-------------------------------------|
| 지배구조 | 최대주주(한화) 지분율(16.5%), 대대대대가 한화계열 2사의 주요 주주 | 최대주주(₩₩) 지분율(4.25%) | 최대주주(〇〇은행) 지분율(7.60%) | 최대주주(∞은행, 〇〇은행) 지분율(7.60%) | 최대주주(∞생명, ≫≫≫ 계열) 지분율(10.08%) |
| 임원의 선임 |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선임 | 최대주주인 ₩₩가 비상임 이사로 재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용공여 | 총여신의 15.2% (지급보증 37.4%) | 총여신의 0.05%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총여신의 1.54% |
| 관련 임원의 부실 책임 | 갑〇〇 (문책경고, 손배소제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대주주 관련 여신의 부실화 여부 | 계열사 여신 6백만 달러 전액 부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자료: 구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자료

[별표 3]

신계약물량 발생기간과 할인율에 따른 대한생명 신계약가치 비교

| 신계약물량 발생 기간 | 할인을 적용에 따른 신계약가치 | |
|----------------|--------------------------------------|--------------------------------------|
| | 15% | 15%(판매시점까지 20%) |
| 3년 | $2.40\text{배} \times 5,498 = 13,196$ | $2.22\text{배} \times 5,498 = 12,207$ |
| 5년 | $3.65\text{배} \times 5,498 = 20,069$ | $3.25\text{배} \times 5,498 = 17,870$ |
| 10년 | $5.87\text{배} \times 5,498 = 32,276$ | $4.84\text{배} \times 5,498 = 26,613$ |
| 영구 | $9.31\text{배} \times 5,498 = 51,191$ | $6.38\text{배} \times 5,498 = 35,080$ |

주: 1. 2002년 3월 말 기준임

2. 신계약가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보와 한화 컨소시엄 계약 시 적용된 5,498억 원임

3. 기업성장률은 예보와 한화 컨소시엄 계약에서 적용한 4.1%를 가정하였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별첨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1.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2. 농어기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주의)
3.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소극적으로 설정하였는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

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3. 17.부터 같은 해 3. 25.까지(7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4. 2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2010. 12. 31. 현재)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¹⁾ 등 총 9인으로 구성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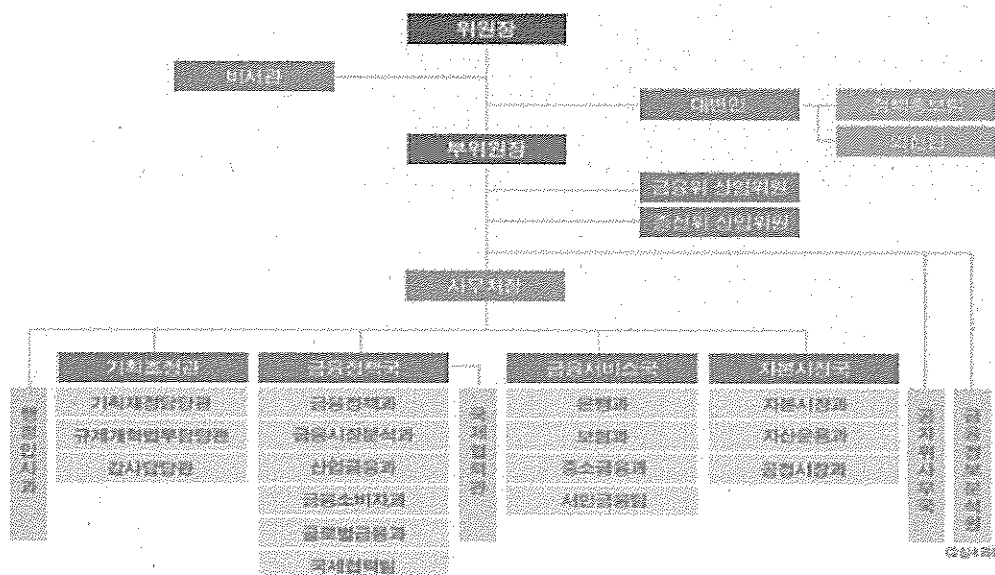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1)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2010. 12. 31. 현재)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경찰)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1 | 230 | 2 | 2 | 5 | 5 | 193 | 190 | 7 | 7 | 1 | 1 | 11 | 11 | 12 | 14 |
| 본 부 | 167 | 167 | 2 | 2 | 5 | 5 | 140 | 139 | - | - | 1 | 1 | 8 | 8 | 11 | 12 |
| 공자위 사무국 | 12 | 11 | - | - | - | - | 12 | 11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 52 | 52 | - | - | - | - | 41 | 40 | 7 | 7 | - | - | 3 | 3 | 1 | 2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9,104억 원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기금 55조 7,6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진출된 금액이 3조원으로 전년도에 위 기금으로 진출된 금액 787억 원 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10세출예산 | '09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9,104 | 586,811 | 0.4 |
| 일반회계 | | 31,464 | 28,868 | 9.0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7,640 | 558,766 | △0.2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 201,758 | 110,362 | 82.8 |
| | 농어기목돌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 1,559 | 1,560 | △0.1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42,206 | 57,909 | △27.1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0,821 | 24,595 | △15.3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중앙회) | 15,736 | 20,913 | △24.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4,577 | 11,168 | 30.5 |
| | 여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금보험공사) | 132,668 | 117,820 | 12.6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21,899 | 12,086 | 81.2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106,416 | 202,353 | △47.4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중 [표 3]과 같이 회계기금 간 거래 3조 33억 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1,097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사업금액은 334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2억 원으로 전체의 66.5%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12억 원)한다.

[표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 일반회계 | 31,464 |
|---|---------------------------|
| 인건비 | 150 |
| 기본경비 ¹⁾ | 72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 4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2 - 모기지론 여차보전 민간이전 45 | 1,209 (직속 금액 합은 1,097)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0,000 - IBRD차관 원금상환 30 - IBRD차관 이자상환 3 | 30,033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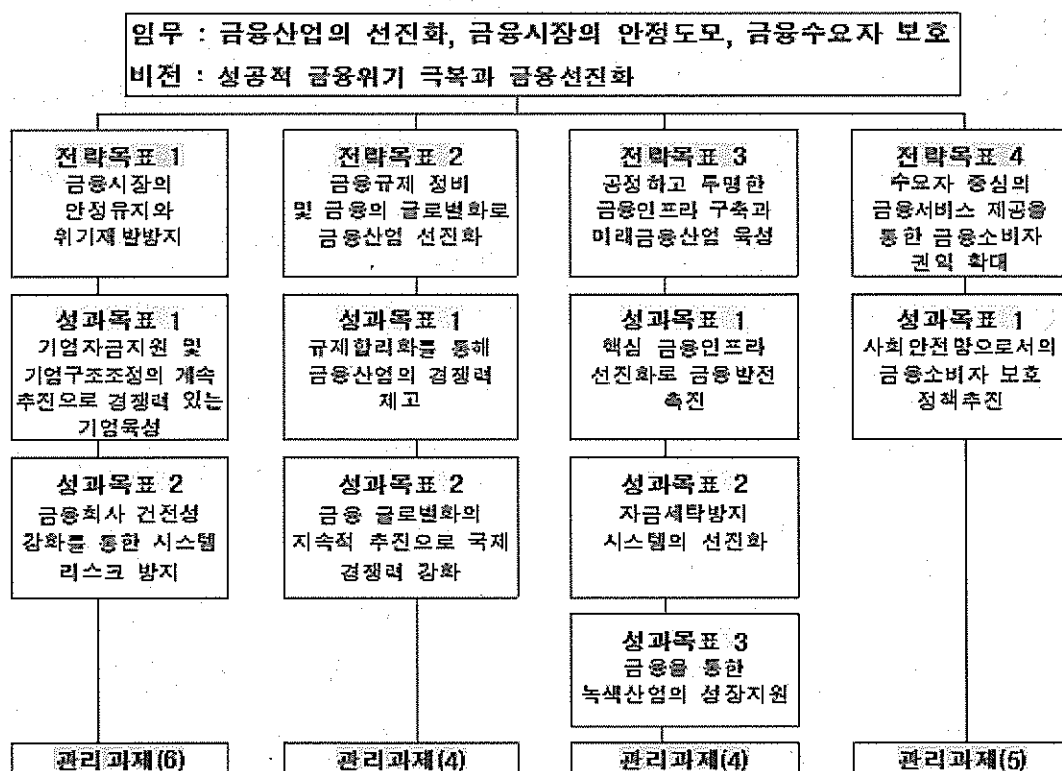
가. 임무 및 비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8개의 성과목표, 19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2010. 1. 15. “2010년 녹색금융 특화 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및 같은 해 2. 2. “녹색금융 특화 MBA 심사·선정 계획(안)”에 따라 △△△ △△과 ○○대학교를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5억 원,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당초 2010년 녹색금융특화 MBA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과 교수채용비 6억 원 총 1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2009. 12. 3.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녹색금융 MBA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교수채용비 6억 원을 삭감하여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¹⁾만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회 예산심의·확정 취지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다.

또한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내 녹색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앞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1) 국내학생장학보조비 5억 원,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

4억 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지적²⁾이 있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도국 학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 12. 18.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교수채용 예산을 삭감한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을 교수채용비, R&D투자비용³⁾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교와 △△△△△에서 2010. 7월 [표]와 같이 학생장학보조비 545백만여 원, 연구개발비 160백만여 원, 교육인력 지원비 84백만여 원, 기타 사업경비(사업 운영경비 + 간접경비) 109백만여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같은 해 8. 17. 이를 승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국회 예산 및 보조금 예산 신청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 구 분 | 국회 심의·확정 예산(A) | △△△△△ | | ○○대학교 | | 합계(B) | |
|--------------|-------------------|---------|---------|---------|---------|---------|---------|
| |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 국내학생 장학보조비 | 500,000 | 151,600 | 151,600 | 270,000 | 270,000 | 421,600 | 421,600 |
| 개도국 학생 장학보조비 | 400,000 | 124,000 | 119,300 | - | - | 124,000 | 119,300 |
| 연구개발비 | - | 90,640 | 88,450 | 70,000 | 70,000 | 160,640 | 158,450 |
| 교육인력지원 | - | 44,040 | 29,704 | 40,000 | 40,000 | 84,040 | 69,704 |
| 사업 운영경비 | - | 64,720 | 62,714 | 20,000 | 14,897 | 84,720 | 77,611 |
| 간접경비 | - | 25,000 | 25,000 | - | - | 25,000 | 25,000 |
| 미집행잔액 | - | - | 23,232 | - | 5,101 | - | 28,335 |
| 총 계 | 900,000 | 500,000 | 500,000 | 400,000 | 400,000 | 900,000 | 900,000 |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대학교들에서 2010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가 아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359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개도국 학

2) 2009. 11. 12. 국회 정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상 지적함

3) 사실상 교수채용비 성격이며 교과목개발비는 수당, 영어강의 개발수당, 책임교수 직책판공비 등으로 지급함

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도 개도국 학생
유치계획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교는
2010년 개도국 학생을 1명도 유치하지 못하였고 △△△△△는 개도국학생보조비
예산 400백만 원 중 281백만 원⁴⁾을 개도국 학생보조비와는 다르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보조
금을 집행하는 등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존에 자체 학교운영비로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녹색금융 MBA예산으로 대체하여 120백만여
원을 사용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¹⁾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89,206백만 원, 65,000백만 원, 65,200백만 원을 출연(법정장려금 채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부담)하였다.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 관서에서 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추가 출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10년 11월²⁾, 추가 출연 필요금액³⁾ 10,363백만 원보다 5,937백만 원 많은 16,300백만 원을 위 기금에 출연하는 등

1)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리(일반 1.5 ~ 2.5% 저소득 6.0 ~ 9.0%) 추가 제공

2) 금융위원회는 2, 5, 8, 11월, 한국은행은 3, 6, 9, 12월에 출연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참고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기간이 3년, 5년으로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정장려금 지급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였다.

[표] 정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 10월 말 기금 잔액(A) |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 ⁴⁾ 까지 지급 예상액(B) | 추가 출연 필요금액 [C=(B-A)/2] | 11월 실제 출연금액(D) | 과다 출연금액 (D-C) |
|------|-------------------|--|------------------------------|-------------------|------------------|
| 2008 | 39,748 | 48,037 | 8,289 ²⁾ | 22,301 | 14,012 |
| 2009 | 12,290 | 28,976 | 8,343 | 16,250 | 7,907 |
| 2010 | 14,286 | 35,013 | 10,363 | 16,300 | 5,937 |

- 주: 1. 차년도 1월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출연계획이 없어 차년도 1월분만큼 해당연도에 추가 출연하여 여유 자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은 한국은행이 3월에 연간 출연금 전액을 출연하였으므로 추가 출연 필요금액이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실제 지급액'은 2008~2010년 각각 46,464백만 원, 28,660백만 원, 33,307백만 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기금에서는 연도 말에 법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액⁴⁾ 중 위 과다 출연금액만큼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출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금의 2008 ~ 2010년 말 잔액은 각각 36,579백만 원, 27,040백만 원, 27,697백만 원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 과목표(8개)-관리과제(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0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가 22개(55%), 초과 달성한 지표가 13개(32.5%), 목표치에 미달한 지표가 5개(12.5%)로 [표]와 같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성과지표가 35개로 전체적으로 87.5%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표] 전략목표 달성현황

(단위 : 억 원, %, 개)

| 전략목표 | 사업규모 | | | 성과지표 실적 | |
|--|---------|--------|-------|---------|------|
| | 예산 | 결산 | 집행률 | 달성/전체 | 달성률 |
| 전략목표Ⅰ :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저발 방지 | 147,944 | 66,928 | 45.2 | 7/10 | 70 |
| 전략목표Ⅱ :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34.2 | 31.6 | 92.1 | 9/9 | 100 |
| 전략목표Ⅲ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 76.8 | 76.3 | 99.3 | 11/11 | 100 |
| 전략목표Ⅳ :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3,932 | 4,271 | 108.6 | 8/10 | 80 |
| 총계 | 151,987 | 71,307 | 46.9 | 35/40 | 87.5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1. 3. 17. ~ 3. 25.) 중 11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29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Ⅱ-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Ⅱ-2-재정①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성과지표)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의 성과지표를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로 설정하고 측정방법을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100’으로 하여 목표치를 70%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측정방법은 외국금융회사의 애로 해소와는 무관하게 답변만 있으면 100% 달성되는 것이고, 위 관서에서 설정한 목표치도 2008년 및 2009년 모두

100% 답변이 완료되었는데도 2010년에 70%로 낮게 설정하는 등으로 위 측정방법과 목표치는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3.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
(성과지표) 녹색금융계획 수립(건)

성과목표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를 ‘녹색금융계획 수립(건)’ 및 측정방법을 ‘분기별 보고횟수’로 하여 목표치를 ‘4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금융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분기별 보고횟수’를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③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제발 방지
(성과목표) I-2.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리과제) I-2-재정,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
(성과지표)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성과지표를 ‘은행권 부실채권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포함하는 시장상황 및 금융회사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제시한 측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적치를 산정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2-제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관련 국제협력’의 성과지표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으로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 참석 및 MOU 체결횟수’로 하고서는 목표치는 ‘협상’으로만 측정하기로 하여 5회로 설정하였으나 박상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면담, 협상, 정보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여 19회로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쉽게 달성하였다.

② 설문조사를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1.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관리과제) III-1-제정②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성과지표)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행정지원 효율화’의 성과지표를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으로 설정하고 위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위 관서에서는 ‘주요 금융정책별 평균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목표치를 10%로 제시하였고 실적은 56.7%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햇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 관서에서는 ‘쌀과 관련된 정책’ 또는 ‘대북정책’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까지 위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헛살론을 서민 대출로 알고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은 43.4%에 불과한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56.7%로 나타나 실적이 다소 과장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당연히 달성되거나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를 당초 설정한 측정방법과 다르게 측정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7>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

2011. 12.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에서는 2011년 1월 실시한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어음대체결제수단¹⁾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B2B대출”(Business to Business대출)이라 한다]²⁾을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하는 사항을 지적하여 같은 해 6. 3.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에서 유사사례를 점검(대출금액 10억 원 이상)한 결과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된 B2B대출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는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에서 실제 상거래 유무(세금계산서 확인 등)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업체 간 상호 협조 등의 방법으로 실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유통³⁾을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B2B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구매자금대출”⁴⁾이라 한다] 취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토함으로써 금

1) 종이어음 거래업체의 자금난에 따른 연체부도 등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수단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전자어음 등이 있음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B2B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 활동으로써 제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되어 있음

3) 상거래상 우월적인 구매기업이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면 자금경색 완화 등을 위해 협력업체인 판매기업 등을 통해 판매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

4)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유질서 문란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실물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실제 상거래를 수반한 대출관행 정착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매기업 등의 결제행태 개선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사례는 샘플 조사)을 감사하였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을 총괄한 한국은행, 국내은행의 대출시스템 등 금융시스템을 감독·검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우리은행·기업은행·경남은행, 구매자금대출 관련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09. 1. 1. 이후 처리한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실행과 사후관리가 적정한지, 구매자금대출 관련 보증 취급과 대위변제가 적정한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은 적정한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국내은행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을 적정하게 감독·검사하고 있는지와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하였는지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표 1] 참조)

※ 제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구매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이라고 되어 있음

[표 1]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감사중점사항

| 대상기관 | 감사 중점사항 |
|----------------------|--|
| 1.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 | •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 2.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 구매자금대출 관련 보증 및 대위변저의 적정성 |
| 3. 한국은행 | • 총액한도대출 지원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 4. 금융감독원 5. 금융위원회 | • 국내은행의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감독·검사의 적정성 •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적정성 |

4. 감사기간

이번 감사는 2011. 7. 4부터 같은 해 7. 29까지 12명(외부감사인원 2명 포함)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와 질문서와 답변서를 주고받는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12. 1.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현황

1. 도입배경

한국은행에서는 2000년부터 기업 간에 상거래대금 결제 시 종이어음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연쇄부도 축소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인 구매자금대출(2000. 5. 22.부터 시행)과 B2B대출(2001. 2. 12.부터 시행)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한국은행이 도입하기로 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표 2]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

[표 2]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관련 인센티브 제도

| 구분 | 시행시기 | 시행기관 | 내 용 |
|-----------|---------------|-----------------|-------------------|
| 충액한도대출지원 | 2000. 5. 22. | 한국은행 |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
| 보증기관 지원 | 2000. 3. 17.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
| 세제지원 | 2000. 10. 21. | 기획재정부 | 법인세액 10% 이내 공제 등 |
| 불공정 행위 완화 | 2001. 12. 26. | 공정거래위원회 | 벌점 감점(1점 내지 2점) 등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제공

3. 대출취급 간소화 방안 시행

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2000. 8. 7. 부터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징구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대신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대출취급 간소화 방안'(이하 "간소화방안"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를 이후 도입된 B2B대출에도 적용하였다.

그런데 간소화방안 전후 마련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등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에 의해 실제 상거래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국내은행에서는 간소화방안 시행 이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4. 대출취급 현황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할인어음 방식의 대출은 [표 3] 및 [도표]같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B2B대출 등 대출 현황(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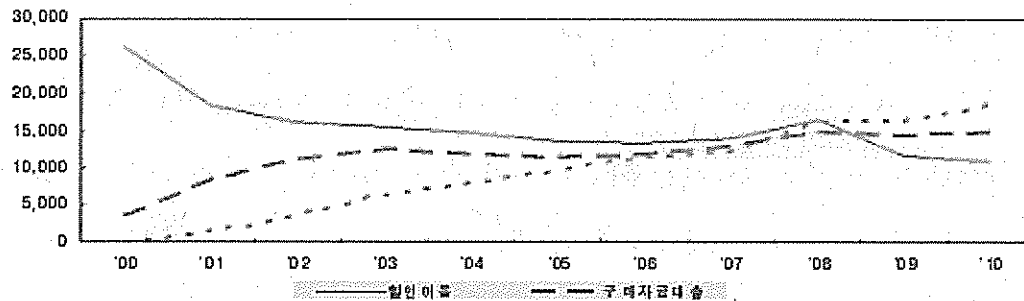
(금액단위: 십억 원)

| 연도 | 할인어음 | 구매자금대출 | B2B대출 |
|------|----------|----------|----------|
| 2000 | 26,107.6 | 3,359.4 | - |
| 2005 | 13,648.8 | 11,408.5 | 9,753.4 |
| 2008 | 16,392.8 | 14,903.1 | 16,264.2 |
| 2009 | 11,651.2 | 14,308.7 | 16,160.2 |
| 2010 | 10,953.8 | 14,795.7 | 18,276.2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제공

[도표] B2B대출 등 대출 현황(잔액 기준)

(금액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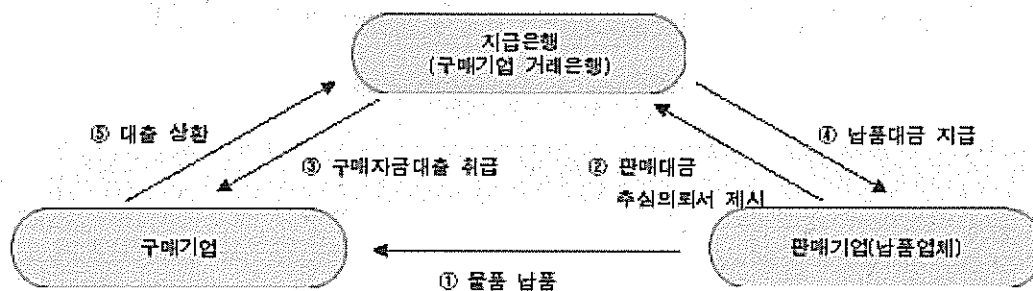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5. 대출취급 절차

구매자금대출(차주가 구매기업)은 [그림 1]과 같이 판매기업이 물품을 판매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외뢰서(세금계산서 첨부)⁵⁾를 제시하면 은행이 구매기업에 대출을 취급한 후 대출금을 판매기업에 직접 지급 결제하고 대출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구매자금대출 취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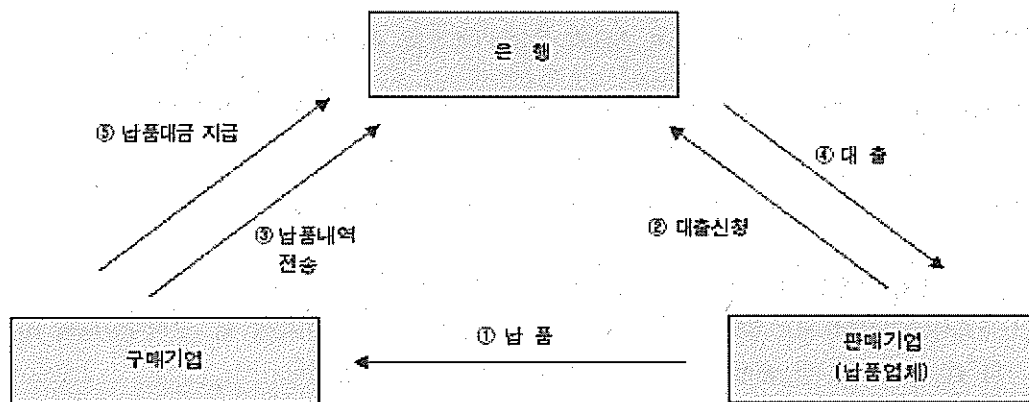


5) 판매대금 추심외뢰서를 제시하는 전자방식 외에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제시하는 오프라인(Off-line)방식이 있는데 거래 건수가 적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소수의 기업이 이용

- ①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 납품(D일)
- ② 판매기업은 물품납품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금 추심외서(세금계산서 첨부)를 지급은행에 제시(D+30일 이내)
- ③ 은행이 구매기업에 구매자금대출 취급
- ④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출금으로 납품대금 지급 결제(D+37일 이내)
- ⑤ 구매기업이 대출만기일에 대출 상환

B2B대출(차주가 판매기업)은 [그림 2]와 같이 판매기업이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으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대신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 B2B대출 취급 절차



- ①~② 판매기업은 물품을 판매한 후 거래은행에 관련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 ③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앞으로 확인서 전송
- ④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내용과 구매기업이 전송한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대출 실행
※ 대출이자는 선취(어음할인방식의 할인료와 동일)
- ⑤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고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III. 감사결과

1. 실태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은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이 2000년부터 도입된 이후 10여 년 동안 대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건별 10억 원 이상)⁶⁾ 및 구매자금대출(건별 5억 원 이상)⁷⁾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국내은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실거래 유무 등 대출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였는데, [표 4]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대출실행 누적액(115조 3,170억여 원)의 7.3%인 8조 4,719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 것으로 확인(B2B대출 2조 4,717억여 원, 구매자금대출 6조 2억여 원)되었다.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주요 사례>

- (○○ 계열) □□은행에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계열의 주요 협력업체에 2008년 이후 취급한 B2B대출 642억 원, 구매자금대출 80억 원, 총 722억 원 중 647억 원이 무거래 대출인 것으로 확인)
 - * ○○계열은 2009. 4. 3. 워크아웃이 게시되어 현재 진행 중
- (□□ 계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경우, 2008년 이후 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300억 원의 관계사 간 구매자금대출 및 B2B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은행, 은행 대출 총 324억 원을 점검한 결과, 234억 원이 무거래 대출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976억 원도 무거래 대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 계열은 2010. 6. 30. 기업회생절차가 게시되어 현재 진행 중

6)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 간 B2B대출만 대상), 경남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3억 원 이상에서 실행된 대출을 대상으로 점검

7)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건별 3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

[표 4]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 은행명 | B2B대출 등 실행부적 종목(억 원) |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 | | | 소계 | | 확인불가† | |
|-----|----------------------------|---------------|-------|---------|------------|---------|-------|----------|-------|
| | | 무거래 대출 | 과다 대출 | 선 대출 | 기간초과 대출 | 금액(억) | 비율(%) | 금액(억) | 비율(%) |
| | | | | | | | | | |
| *** | 55,706.8 | 310.7 | 17.9 | 213.2 | 483.3 | 1,025.1 | 1.8 | 23,989.7 | 43.1 |
| *** | 11,515.6 | 12.6 | 164.2 | 497.3 | 943.3 | 1,617.4 | 14.0 | 1,074.6 | 9.3 |
| *** | 2,835.4 | 26.3 | 21.8 | 169.1 | 19.4 | 236.6 | 8.3 | 17.9 | 0.6 |
| *** | 8,853.3 | 64.4 | 25.3 | 325.7 | 1,860.4 | 2,275.8 | 25.7 | 83.6 | 0.9 |
| *** | 6,394.4 | 7.1 | 0.1 | 216.0 | 75.2 | 298.4 | 4.7 | 27.6 | 0.4 |
| *** | 12,855.2 | 268.0 | 164.5 | 1,115.9 | 381.3 | 1,929.7 | 15.0 | 39.1 | 0.3 |
| *** | 6,253.7 | 57.2 | 8.3 | 328.4 | 85.7 | 479.6 | 7.7 | 25.2 | 0.4 |
| *** | 10,902.6 | 63.8 | 124.7 | 233.9 | 186.9 | 609.3 | 5.6 | 42.7 | 0.4 |
| 총계 | 115,317.0 | 810.1 | 526.8 | 3,099.5 | 4,035.5 | 8,471.9 | 7.3 | 25,300.4 | 21.9 |

주 : 1.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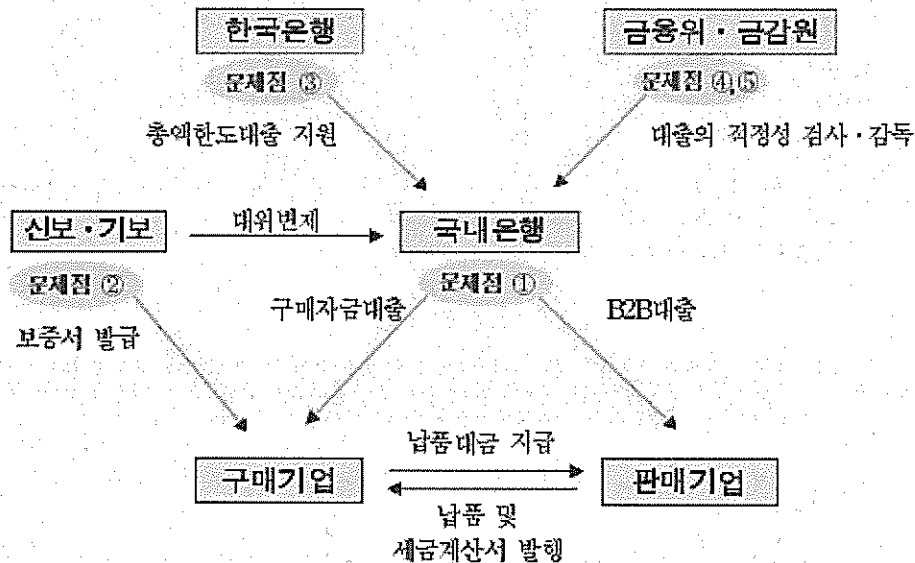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무거래 대출 | • 실제 실행거래에 기반하지 않고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운전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거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관계사 등인 판매기업과 공모하여 허위로 판매기업에 B2B대출 등을 받게 한 후에 판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 |
| 과다 대출 | • 실제 실행거래는 있으나 거래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거래 대출의 일종 |
| 선대출 | •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대출 실행(B2B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되면 대출일과 관계없이 선대출임) |
| 기간초과 대출 |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후에 찾아옴 등을 추심의뢰한 구매자금대출(「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6조) |

2. 확인불가(업체 부도나 폐업, 자료 미제출 등)에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 있음
자료: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 자료 재구성

2. 문제점

문제점 종합

□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구조도



□ 문제점 개요

- ① **국내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여 허위 대출신청 이후 구매기업이 자금유통 목적으로 판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만연
- ② **신보·기보**에서 대출실행 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위변제하거나 대출 적정성 점검 의무도 명백히 부과하지 않음
- ③ **한국은행**에서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점검 등을 하지 않고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 ④ **금감원**에서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 여부 등을 검사·감독하지 않아 관리에 사각 발생
- ⑤ **금융위·금감원**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방지 시스템 구축 미흡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고 시후에도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래 의심대출 징검도 미흡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에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인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위 3개 은행 여신 담당부서⁸⁾에서 기업 간 상거래 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감리 담당부서⁹⁾에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대출의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절차」(이하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이하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B2B대출이나 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에 해당 대출이 제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적정한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5조 및 제458조 등¹⁰⁾의 규정에 따르면 여신담당자는 여신의 용도 외 자금유용이 없도록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 취급 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여신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8)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고책부, 우리은행은 여신정책부, 경남은행은 기업영업추진부

9) 검사 담당부서는 3개 은행 모두 검사부, 감리 담당부서는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각각 리스크감리부, 여신감리부, 여신감리부

10) 우리은행은 「여신규정」 제6조 및 제8조, 경남은행은 「여신운용규칙」 제12장 제1절 제11조

한편 한국은행은 2000. 8. 7.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사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도입하면서 상거래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B2B대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입력하게 하면 업무를 간소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기업들이 실제 상거래도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3개 은행에서는 B2B대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제출받지 않고 그 내역을 전산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기업들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실행 전후로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¹¹⁾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출이 무거래 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차주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시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 은행 기업고객부에서는 '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¹²⁾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11) 대출일자 또는 대출일 전후에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 또는 직전에 대출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상환내역이 있는 대출, 관계사 간 거래를 바탕으로 한 대출 등임

12)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등 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일부 개인사업자는 2012년)에게 의무화하였음.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면 세금과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상거래 없이 대출을 위해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꾸미는 실익이 줄어들

구축하고 의심대출에 대해서는 여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차주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중소기업은행 B2B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 제3장 제3절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B2B대출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 세금계산서 확인 대신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받을 수 있게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만 하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1. 7. 4.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융통자금¹³⁾ 점검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지 않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례와 같이 여신취급부서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3) 실제 상거래 없이 B2B 대출 등을 받아 대출금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풍상 은행에서 융통자금이라고 함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 부적정 사례>

- ① 리스크감리부에서 2011. 4. 7. 무거래 대출이 의심되는 거래기업 178개를 해당 지점에 통보한 후 같은 해 4. 14.까지 “유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보고서”를 제출받음
- □□□□지점 등 13개 지점에서 △△상사 등 14개 기업이 무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표 1] “유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리스크감리부는 보고서(작성보고 포함)가 적절한지 여부 등을 같은 해 8. 8.까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 그 결과 □□□□지점 등 2개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사 등 2개 기업이 [별표 2] “영업점 조치사항 지연 처리 후 대출 명세”와 같이 해당 영업점에서 무거래 대출임을 확인하고서도 취급금지 등의 조치를 지연함으로써 구매자금대출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 □□□□지점 등 6개 지점에서 주식회사 ▽▽▽▽ 등 6개 기업이 [별표 3] “영업점 점검결과 보고 부적정 명세”와 같이 무거래 대출을 받았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확인하여 해당 기업의 관련 대출을 회수하는 한편 취급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
- ② 또한, 각 영업점에서는 여신기획부가 2010. 6. 1.부터 B2B대출 등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전산을 통해 “유통의심 점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의심 거래(무거래 대출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점검하도록 하였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이번 감사원 감사 시 무거래 대출로 확인된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받은 9건의 대출(23억여 원)이 위 점검표상에 ‘취급주의’ 또는 ‘취급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무거래 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신취급제한 등록 등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점검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¹⁴⁾

이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¹⁵⁾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대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결과, [표 5]와 같이 총 1조 6,174억여 원의 대출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어 향후 업체부실발생 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14) 위 9건, 23억여 원의 대출금은 모두 회수되었음

15) B2B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구매자금대출은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임

[표 5] 중소기업은행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 대출 구분 | 총계 (A) |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 | | | | | 정심 | 확인 불가 |
|-------------------|-----------|--------------|--------------------|-------|------------|---------|-------------|---------|----------|
| | | 무거래 대출 | 과다대출 ²⁾ | 선대출 | 기간초과 대출 | 소 계 | | | |
| | | | | | | 금액(B) | 비중 (B/A) | | |
| B2B ¹⁾ | 3,393.3 | - | 75.3 | 293.3 | - | 368.6 | 10.8 | 2,132.5 | 892.2 |
| 구매자금 | 8,122.3 | 12.6 | 88.9 | 204.0 | 943.3 | 1,248.8 | 15.4 | 6,691.1 | 182.4 |
| 합 계 | 11,515.6 | 12.6 | 164.2 | 497.3 | 943.3 | 1,617.4 | 14.0 | 8,823.6 | 1,074.6 |

주 1: 과다대출은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액 기재

2: B2B대출의 경우 총 대출 37조 2,834억 원 중 대기업 대출 33조 8,901억 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

3: 확인불가는 부도폐업 및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기간 내 파악이 불가능한 대출임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

2. 우리은행 B2B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우리은행에서는 「여신업무지침」 제413조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B2B대출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 세금계산서 확인 대신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받을 수 있게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만 하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2011. 7. 4. 감사개시일 현재 B2B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구매자금대출에는 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용통자금 점검 프로세스 등)’은 B2B대출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반면 구매자금대출에는 구축(2008. 10. 29. 시행)되어 있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2008년 이후 할인어음에 대해서는 실제 상거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하였으나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여신취급부서에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수시(기획)감리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은행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¹⁶⁾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대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6]과 같이 총 1조 251억여 원의 대출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어 향후 업체부실발생 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

[표 6] 우리은행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 대출 구분 | 총계 (A) | 부적격 대출 | | | | | | 정상 | 확인 ²⁾ 불가 |
|----------|-----------|-----------|--------------------|-------|------------|-----------|-------------|----------|------------------------|
| | | 무거래 대출 | 과다대출 ¹⁾ | 선대출 | 기간초과 대출 | 소 계 | | | |
| | | | | | | 금액 (B) | 비중 (B/A) | | |
| B2B | 47,944.1 | 308.9 | 17.1 | 122.3 | - | 448.3 | 0.9 | 24,675.7 | 22,820.1 |
| 구매자금 | 7,762.7 | 1.8 | 0.8 | 90.9 | 483.3 | 576.8 | 27.9 | 6,016.3 | 1,169.6 |
| 계 | 55,706.8 | 310.7 | 17.9 | 213.2 | 483.3 | 1,025.1 | 1.8 | 30,692 | 23,989.7 |

주 1: 과다대출은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액을 기재

2: 확인불가는 부도폐업 및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기간 내 파악이 불가능한 대출임

자료: 우리은행 제출자료

16) B2B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구매자금대출은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임

3. 경남은행 B2B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남은행에서는 「여신종류별 운용규칙」 제5-4장 제1절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B2B대출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 세금계산서 확인 대신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받을 수 있게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만 하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남은행에서는 2011. 7. 4.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유통자금 점검 프로세스 등)'도 구축하고 있지 않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례와 같이 여신취급부서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 부적정 사례>

- 여신감리부에서 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유통 목적의 불건전한 자금 지원 차단을 목적으로 건별 취급기한이 120일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 및 감리업무를 하면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구매기업으로서 구매자금대출 4건, 계 4,655백만 원을 받아 판매기업이자 관계사인 ■■■■■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후 당일 위 대출금을 ○○○○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확인(경남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조회)하였는데도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해당 지점의 의견서 등을 근거로 실제 상거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종결
 - 결국 위 4,655백만 원은 무거래 대출로 확인되었고, ○○○○은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도 대출금 회수나 신규 여신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결과 초래

이에 이번 감사 시 경남은행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¹⁷⁾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대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7]과 같이 총 2,366억여 원의 대출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어 향후 업체부실발생 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표 7] 경남은행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 구분 | 총계 (A) |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 | | | | | 정산 | 확인 불가능 |
|------|-----------|--------------|--------------------|-------|------------|-------|-------------|---------|-----------|
| | | 무거래 대출 | 과다대출 ¹⁾ | 선대출 | 기간초과 대출 | 소 계 | | | |
| | | | | | | 금액(B) | 비율 (B/A) | | |
| B2B | 2,341.7 | 17.2 | 18.4 | 166.0 | - | 201.6 | 8.6 | 2,125.2 | 14.9 |
| 구매자금 | 493.7 | 9.1 | 3.4 | 3.1 | 19.4 | 35.0 | 7.1 | 455.7 | 3.0 |
| 합 계 | 2,835.4 | 26.3 | 21.8 | 169.1 | 19.4 | 236.6 | 8.3 | 2,580.9 | 17.9 |

주 1: 과다대출은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액을 기재

2: 확인불가능 부도폐업 및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기간 내 파악이 불가능한 대출임

자료: 경남은행 제출자료

17) B2B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구매자금대출은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임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경남은행장은

- ①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확인 시스템 및 유통자금 점검 프로세스 구축과 대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대출취급 업무지침이나 자체 감리방안, 향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자체 검사 강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전후로 세금계산서 확인 등 실제 상거래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취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구매자금대출 보증 취급 및 대위변제 부적정

보증취급 시 구매자금대출 실행 은행에 세금계산서 확인 등 대출의 적정성 확보 의무 부과 의무 미준수 시 대위변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백히 미러하지 않고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양산 초래

신용보증기금에서 2001년 9월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07년 5월부터 각각 신용도가 낮은 구매기업이 국내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표 8]과 [표 9]와 같이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하고, 구매기업의 연체 등 보증사고 발생 시 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한 국내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대위변제하고 있다.

[표 8]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구매자금대출 보증 잔액(2008년~2011년 6월 말)

(금액단위: 십억 원)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6월 |
|-------------|---------|---------|---------|----------|
| 구매자금대출 보증잔액 | 1,223.4 | 1,797.4 | 2,665.4 | 3,295.4 |

자료: 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표 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구매자금대출 보증 잔액(2008년~2011년 6월 말)

(금액단위: 십억 원)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6월 |
|-------------|-------|---------|---------|----------|
| 구매자금대출 보증잔액 | 779.5 | 1,150.2 | 1,358.1 | 1,284.8 |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6조와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금대출 취급은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에 의하여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받거나 전송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보”라 한다)은 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할때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보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0. 8. 7.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3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상거래도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보·기보에서는 국내은행이 신보·기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¹⁸⁾(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다하였는지 확인한 후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보·기보에서 국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일반적인 보증특약만 부여한 채 보증함에 따라 국내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은행이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3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였는지만 확인하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보의 보증에 근거하여 실행된 구매자금대출(대출 건별 3억 원 초과)의 적정성을 보증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결과 [표 10]과 같이 무거래 대출이 41건, 184억 원에 이르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계 731건, 3,754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에 향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하여 기금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18) 대법원 판례 2005다 24349(2006. 3. 10.)에 따르면 보증기관이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

[표 10] 신용보증기금 보증 구매자금대출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현황

(금액단위: 십억 원)

| 무거래대출 | | 과다대출 | | 신대출 | | 기간초과대출 | | 합계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41 | 18.4 | 30 | 5.0 | 68 | 35.7 | 592 | 316.3 | 731 | 375.4 |

자료: 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또한,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제 연체 등 보증사고로 인하여 신보에서 대위변제한 52개 구매자금대출 업체¹⁹⁾ 중 8개 업체²⁰⁾를 대상으로 대출 적정성을 표본 점검한 결과, [별표 4]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명세”와 같이 ▽▽▽▽▽▽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서 계 144억여 원(무거래 대출 124.9억여 원, 과다 대출 5.7억여 원, 기간초과 대출 14.2억여 원)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56억여 원²¹⁾을 기금에서 대위변제하여 기금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기보의 보증에 근거하여 실행된 구매자금대출(대출 건별 3억 원 초과)의 적정성을 보증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결과 [표 11]과 같이 무거래 대출이 8건, 65억 원에 이르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계 425건, 2,607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에 향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하여 기금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 정상 대출과 부당 대출을 포함한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제원 관계사이거나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계속 대출하는 등 부당 대출 가능성이 높은 18개 기업을 추출한 후 휴·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10개 업체 제외

21)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받은 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 144억여 원이나 그중 88억여 원은 대위변제를 하기 전 예 상환되거나 부분보증비율(80% 내지 85%)을 감한 금액

[표 11]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구매자금대출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현황

(금액단위: 십억 원)

| 무거래대출 | | 과다대출 | | 신대출 | | 기간초과대출 | | 합계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8 | 6.5 | 10 | 1.4 | 17 | 7.1 | 390 | 245.7 | 425 | 260.7 |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또한,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제 연체 등 보증사고로 인하여 기보에
서 대위변제한 32개 구매자금대출 업체²²⁾ 중 8개 업체²³⁾를 대상으로 대출 적정
성을 표본 점검한 결과, [별표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무거래 대출 명세”²⁴⁾와 같이 5개 업체에서 무거래 대출 계
18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39억여 원²⁵⁾을 기금에서 대위변제하
여 기금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내은행이 신보·기보의 보증에 따라 대출을 한 후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여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사고 발생 시 대위변제를 청구한 경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위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용보증특약」²⁶⁾ 및 「신용보증약관」²⁷⁾에
포함하는 등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명백히 하여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
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22) 정상 대출과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포함한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23)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계열 관계사이거나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계속 대출하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가능성이 높은 16개 기업을 추출한 후 휴·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8개 업체 제외

24) 기보의 경우 과다대출과 기간초과대출 사례가 미발생

25)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받은 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 181억여 원이나 그중 142억여 원은 대위변제를 하기 전
에 상환되거나 부분보증비율(85% 내지 100%)을 감당한 금액

26)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음

27)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용임

<조치할 사항>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대위변제하여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특약」 및 「신용보증약관」에 실제 상거래가 의심되는 대출에 대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백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총액한도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구매자금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그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이하 “대출규정”이라 한다) 제11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이하 “대출세칙”이라 한다) 제2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B2B대출, 구매자금대출 등의 취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액한도대출 한도범위²⁸⁾ 내에서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배정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한 후 대출규정 제18조와 대출세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실적 등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총액한도대출 취급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절차 제3조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세칙」(이하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세칙”이라 한다)

²⁸⁾ 금융동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화통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합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정함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판매업체에 대하여 B2B대출을 실행할 경우 판매업체로부터는 대출신청서 및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을, 구매업체로부터는 물품구매내역을 전송받도록 되어 있고, B2B대출의 용자금액은 판매업체가 제화 및 용역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의 용자금액은 구매업체에 제화 및 용역을 판매한 업체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상의 금액 또는 판매업체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상의 추심의뢰금액 범위 내로 되어 있고,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등은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은행이 금융기관의 B2B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에 따른 총액 한도 대출 지원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절차 제2조와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해당 대출이 제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적정한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대출받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세칙」 제26조,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절차」 제37조,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세칙 제7조,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B2B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 한도 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을 방지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 1. 1.부터 2011. 3. 31.까지 중소기업은행

등 14개²⁹⁾ 국내은행이 취급한 B2B대출 중 건당 10억 원³⁰⁾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의 적정성을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6]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B2B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167건, 4,299억여 원이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먼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선 대출을 받은 것이 1,344건, 1조 9,274억 원에 이르는 등 12개 은행에서 계 1,768건, 2조 4,717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취급한 구매자금대출 중 건당 5억 원³¹⁾ 이상의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7]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396건, 3,801억여 원이었고,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추심외회하지 않았는데도 구매업체가 대출받은 기간초과 대출이 4,781건, 4조 355억여 원에 이르는 등 15개 은행에서 계 7,470건, 6조 2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은행은 위와 같은 15개 국내은행의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의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포함한 대출 실적을 고려하여 총액한도대상

29) 국내은행 17개 중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는 B2B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30)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3억 원 이상 중 실행된 대출 확인

31)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3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확인

대출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내은행에서는 총 8조 4,719억여 원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취급하였는데도 총액한도대출 한도 감액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은행 총재는

- ① 국내은행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받은 총액한도 대출금을 산정하여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절차」 제37조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총액한도 대출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국내은행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한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을 총액한도대출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총액한도대출 취급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검사·감독 부적정

세금계산서 확인 간소화 방안 실시 이후 국내은행 등으로 하여금 B2B대출 등 실행 시 대출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대책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대출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 적정성 검사도 미흡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신관리의 적정성 등을 항목으로 하는 자산건전성 등의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내은행의 경영실태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위 감독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에는 용도 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은행들이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였는지와 그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사·감독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사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을 도입하여 상거래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를 기업들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결제자금 대출을 위해 상거래 유무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입력하게 하면 업무를 간소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기업들이 실제 상거래도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B2B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만연하지 않도록 검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 1. 1.부터 2011. 3. 31.까지 중소기업은행 등 14개³²⁾ 국내은행이 취급한 B2B대출 중 건당 10억 원³³⁾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의 적정성을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6]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B2B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167건, 4,299억 여 원이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먼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선 대출을 받은 것이 1,344건, 1조 9,274억 원에 이르는 등 12개 은행에서 계 1,768건, 2조 4,717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취급한 구매자금대출 중 건당 5억 원³⁴⁾ 이상의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7]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396건, 3,801억여 원이었고,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추심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구매업체가 대출받은 기간초과 대출이 4,781건, 4조 355억여 원에 이르는 등 15개 은행에서 계 7,470건, 6조 2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한편 국내은행 중 우리은행은 B2B대출 실행 시 입력하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기업들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신청

32) 국내은행 17개 중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는 B2B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33)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3억 원 이상 중 실행된 대출 확인

34)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3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확인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그 밖의 국내 은행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15개 국내은행들이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 총 8조 4,719억여 원을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데도(우리은행 제외) 이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향후 부실사고로 연결될 경우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등의 취급 적정성 등을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국내은행이 B2B대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국내은행들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검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거래 관련 대출실행액 등을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

금융위원회에서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감독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용도 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은행에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어음발행, 타 은행 B2B대출 등으로 이미 결제가 완료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아 실제 상거래와 무관하게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방법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은행에서 개별기업 상거래대금 실행(결제) 총액³⁵⁾을 파악하여 그 기업의 매입액과 비교할 수 있다면 매입액보다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이 큰 기업의 경우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결정하고 향후 대출 취급 시 실제 상거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당 또는 부

35) 개별기업의 은행별 어음발행액, B2B대출 관련 채권발행액, 구매자금대출 실행액 등을 합한 금액. 현재 국내은행은 자기 은행을 통한 상거래대금 실행액만 알 수 있고 타 은행을 통한 상거래대금 실행액은 알 수 없음

적격 대출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이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기반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거래대금 실행(결제)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³⁶⁾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비교³⁷⁾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한 여신한도 부여 및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이 매입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³⁸⁾해 본 결과, 주식회사 ○○○○○○의 경우 2010년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은 814억 원(B2B대출 150억 원, 어음발행 664억 원)이나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매입총액은 485억여 원에 불과하여 328억여 원이 초과하였고, 이 중 B2B대출 150억 원은 정상적인 상거래 없이 업체가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별표 8] “대출액·매입액 대비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등 비교 명세”와 같이 12개 구매기업에서 상거래 결제총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입총액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매입액보다 많은 부당 또는 부적격대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B2B대출 등이 실제 기업 간의 상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거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여신한도 및 잔액 등)를 집중관리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은 이러한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으로 제공받아 여신의 심사(한도부여) 및 실행,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음

37)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결제하고 국세청에 매입을 신고하였다면 상거래대금 결제총액이 국세청 매입신고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였다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유동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38) 2010년 B2B대출 미결제·연체기업 521개를 표본으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등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실행된 대출총액(어음발행액 포함)을 조사하여 해당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입총액과 비교

래대금 실행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지 않는 등 걱정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걱정한 여신한도 부여 및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 표]

- [별표 1] 유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부적정 명세
- [별표 2] 영업점 조치사항 지연 처리 후 대출 명세
- [별표 3] 영업점 점검결과 보고 부적정 명세
- [별표 4]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명세
- [별표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무거래 대출 명세
- [별표 6]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 [별표 7]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 [별표 8] 매출액·매입액 대비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등 비교 명세

[별표 1]

유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부적정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 영업점 보고일자 | 대출 과목 | 대출 금액 (잔액) | 최종 만기일 | 부적정 기업명 | 부적정 의심 유형 ^{주)} | 영업점 조치사항 | 추가 조치사항 | 추가 조치일자 |
|--------------------------|---------------|------------------|----------------|------------|-------------------------------|---|-------------------|----------------|
| '11. 4. 14. | 구매자금 (B2B) | 180 (0) | '11. 7. 8. | *** | 1,2 | 조기회수 ('11. 7. 1.)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4. 14. | 구매자금 (B2B) | 180 (0) | '11. 9. 9. | *** | 1,2 | 조기회수 ('11. 4. 26.)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7. 6. | 할인어음 | 146 (0) | '11. 8. 5. | *** | 1 | 만기일 회수 |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7. 7. | 구매자금 (B2B) | 9 (0) | '11. 5. 31. | *** | 2 | 조기회수 ('11. 5. 20.)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7. 8. | 할인어음 | 36 (0) | '11. 4. 15. | *** | 1 | 만기일 회수 |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15. |
| '11. 4. 14. | 구매자금 (B2B) | 6 (0) | '11. 9. 1. | *** | 2 | 조기회수 ('11. 7. 14.)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8. 3. |
| '11. 5. 6. '11. 7. 8. | 구매자금 (B2B) | 89 (0) | '11. 6. 10. | *** | 2 | '11. 5. 6. 적정판단 '11. 7. 8. 부적정판단 조기회수('11. 6. 3.)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5. 29. | 구매자금 (B2B) | 50 (0) | '11. 4. 22. | *** | 2 | '11. 4. 20(20백만원회수) '11. 4. 22(20백만원회수)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4. 12. | 구매자금 (B2B) | 1,000 (0) | '11. 4. 7. | *** | 2 | 만기일 회수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4. 14. | 구매자금 (B2B) | 20 (0) | '11. 8. 9. | *** | 1,2 | 조기회수('11. 7. 19.)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15. |
| '11. 4. 14. | 구매자금 (B2B) | 200 (0) | '11. 9. 5. | *** | 1,2 | 조기회수(71백만 원) 만기일회수(129백만 원)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7. |
| '11. 4. 14. | 구매자금 (B2B) | 104 (0) | '11. 7. 13. | *** | 1,2 | 조기회수(60백만 원) 만기일회수(44백만 원) |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7. |
| '11. 4. 14. | 할인어음 | 60 (0) | '11. 7. 24. | *** | 2 | 만기일 회수 |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 '11. 4. 14. | 구매자금 | 224 (0) | '11. 7. 29. | *** | 1,2 | 조기회수('11. 7. 15.) 만기일회수(77백만 원) | 취급금지 특약등록 | '11. 7. 29. |

주: 유형1,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유형2, 결제상 여신 취급금액 중 상대거래처 자금이체

자료: 중소기업은행

[별표 2]

영업점 조치사항 지연 처리 후 대출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 영업점 부적정 보고일자 | 기업명 | 대출과목 | 대출금액 (잔액) | 추가 대출일자 | 추가 대출금액 (잔액) | 영업점 추가 조치 일자 | 영업점 추가 조치사항 |
|----------------------------|-----|---------------|--------------|----------------------------|--------------------|----------------------------------|----------------------|
| '11. 4. 14 | *** | 구매자금 (B2B) | 180 (0) | '11. 4. 26. | 80 (0) | '11. 7. 29. 조기회수('11. 8. 11.) | 전자상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 '11. 7. 8 ^{*)} | *** | 구매자금 (B2B) | 89 (0) | '11. 5. 26. '11. 6. 20. | 45(0) 40(0) | '11. 7. 29. 조기회수('11. 8. 12.) | 전자상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주: 최초 보고('11. 5. 6.)는 적정이었으나 '11. 7. 8. 영업점 점검결과 부적정으로 판정
자료: 중소기업은행

[별표 3]

영업점 점검결과 보고 부적정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 영업점 적정 보고일자 | 대출 과목 | 대출 금액 (잔액) | 최종 만기일 | 검리결과 부적정 기업명 | 검리결과 부적정 유형 ^{*)} | 검리결과 적정 조치사항 | 영업점 추가 조치일자 | 추가 조치사항 |
|-------------------|---------------|------------------|----------------|--------------------|---------------------------------|----------------------------|--|----------------------------|
| '11. 4. 8. | 할인대출 | 97 (0) | '11. 4. 21. | *** | 1 | 기업여신상품취급 세화에 의한 사후관리 | '11. 7. 29. 만기일회수 | 기업여신상품 취급세화에 의한 사후관리 |
| '11. 4. 14. | 구매자금 (B2B) | 15 (0) | '11. 3. 31. | *** | 2 | 특약사항 등록 등 사후관리 | '11. 8. 11. 만기일회수 | 전자상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 '11. 4. 29. | 할인대출 | 293 (0) | '11. 6. 12. | *** | 1 | 기업여신상품취급 세화에 의한 사후관리 | '11. 7. 29. 만기일회수 | 기업여신상품 취급세화에 의한 사후관리 |
| '11. 4. 21. | 구매자금 (B2B) | 21 (0) | '11. 4. 4. | *** | 1 | 특약사항 등록 등 사후관리 | '11. 8. 11. 만기일회수 | 전자상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 '11. 4. 29. | 구매자금 (B2B) | 44 (0) | '11. 7. 18. | *** | 2 | 특약사항 등록 등 사후관리 | '11. 8. 11. 조기회수 ('11. 5. 20.) | 전자상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
| '11. 4. 12. | 할인대출 | 100 (0) | '11. 7. 9. | *** | 1 | 기업여신상품취급 세화에 의한 사후관리 | '11. 7. 29. 만기일회수 | 기업여신상품 취급세화에 의한 사후관리 |

주: 유형1.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유형 2. 결제상 여신 취급금액 중 상대거래처 자금이체
자료: 중소기업은행

[별표 4]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 업체명 | 무거래대출 | | 과다대출 | | 기간초과대출 | | 합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25 | 9,791 | - | - | - | - | 25 | 9,791 |
| *** | 1 | 1,208 | - | - | - | - | 1 | 1,208 |
| *** | 3 | 1,384 | - | - | - | - | 3 | 1,384 |
| *** | 2 | 109 | - | - | 2 | 540 | 4 | 649 |
| *** | - | - | 2 | 578 | 2 | 882 | 4 | 1,460 |
| 합계 | 31 | 12,492 | 2 | 578 | 4 | 1,422 | 37 | 14,492 |

자료: 신용보증기금

[별표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무거래 대출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 업체명 | 무거래대출 | |
|-----|-------|--------|
| | 건수 | 금액 |
| *** | 38 | 6,954 |
| *** | 15 | 3,495 |
| *** | 4 | 1,181 |
| *** | 5 | 6,000 |
| *** | 1 | 497 |
| 합계 | 63 | 18,127 |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별표 6]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금액단위: 십억 원)

| 은행명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부적격 대출 | | | | | | | | 확인불가 | |
|-----|----|----------------|----------|--------|-------|-------|-------|-------|---------|-------|---------|--------|----------|
| | | | | 무거래 대출 | | 과다 대출 | | 선대출 | | 소 계 |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 | AA | 56,911 | 47,944.1 | 96 | 308.9 | 110 | 17.1 | 184 | 122.3 | 390 | 448.3 | 29,120 | 22,820.1 |
| 2 | BB | 9 | 18.5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3 | CC | 1,171 | 1,907.3 | 8 | 12.7 | 2 | 0.0 | 70 | 90.0 | 80 | 102.7 | 33 | 63.5 |
| 4 | DD | 1,382 | 2,423.2 | 4 | 6.4 | 0 | 0.0 | 101 | 163.7 | 105 | 170.1 | 18 | 22.3 |
| 5 | EE | 2,662 | 5,105.3 | 12 | 23.2 | 1 | 0.9 | 318 | 692.4 | 331 | 716.5 | 14 | 18.0 |
| 6 | FF | 54 | 80.2 | 0 | 0.0 | 0 | 0.0 | 26 | 34.6 | 26 | 34.6 | 0 | 0.0 |
| 7 | GG | 1,235 | 2,305.5 | 8 | 56.7 | 1 | 0.0 | 173 | 271.9 | 182 | 328.6 | 5 | 5.6 |
| 8 | HH | 169 | 266.0 | 0 | 0.0 | 0 | 0.0 | 6 | 10.7 | 6 | 10.7 | 0 | 0.0 |
| 9 | II | 231 | 343.2 | 0 | 0.0 | 0 | 0.0 | 50 | 73.8 | 50 | 73.8 | 0 | 0.0 |
| 10 | JJ | 33 | 46.6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11 | KK | 2,954 | 2,341.7 | 35 | 17.2 | 27 | 18.4 | 192 | 166.0 | 254 | 201.6 | 29 | 14.9 |
| 12 | JJ | 23 | 40.0 | 0 | 0.0 | 0 | 0.0 | 1 | 2.1 | 1 | 2.1 | 0 | 0.0 |
| 13 | LL | 10,678 | 3,393.3 | 0 | 0.0 | 107 | 75.3 | 218 | 293.3 | 325 | 368.6 | 2,893 | 892.2 |
| 14 | MM | 490 | 1,016.0 | 4 | 4.8 | 9 | 2.7 | 5 | 6.6 | 18 | 14.1 | 0 | 0.0 |
| 총 계 | | 78,032 | 87,260.9 | 167 | 429.9 | 257 | 114.4 | 1,344 | 1,927.4 | 1,768 | 2,471.7 | 32,120 | 23,836.6 |

주: 우리, 경남, 중소기업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외 대출 포함, 대출실행 건당 3억 원 이상 대상
 자료: 한국은행 등 자료 재구성

[별표 7]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금액단위: 십억 원)

| 은행명 | | 구매자금 대출실행 | | 부적격 대출 | | | | | | | | | | 확인불가 | |
|-----|----|--------------|----------|--------|-------|-------|-------|-------|---------|------------|---------|-------|---------|-------|---------|
| | | | | 무거래 대출 | | 과다 대출 | | 선대출 | | 기간초과 대출 | | 소계 |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 | AA | 8,887 | 7,702.7 | 5 | 1.7 | 11 | 0.8 | 152 | 90.9 | 606 | 483.3 | 774 | 576.8 | 1,091 | 1,099.6 |
| 2 | BB | 1,492 | 2,003.0 | 1 | 0.6 | 65 | 62.7 | 53 | 42.0 | 77 | 133.5 | 196 | 236.8 | 7 | 4.7 |
| 3 | CC | 5,904 | 6,946.0 | 65 | 51.7 | 73 | 25.3 | 296 | 235.7 | 1,975 | 1,890.4 | 2,409 | 2,173.1 | 22 | 20.1 |
| 4 | DD | 2,917 | 3,971.2 | 1 | 0.7 | 1 | 0.1 | 52 | 52.3 | 61 | 75.2 | 115 | 128.3 | 6 | 5.3 |
| 5 | EE | 6,247 | 7,749.9 | 206 | 244.8 | 249 | 163.6 | 393 | 423.5 | 271 | 381.3 | 1,119 | 1,213.2 | 28 | 21.1 |
| 6 | FF | 988 | 1,336.3 | 9 | 8.1 | 2 | 0.3 | 8 | 5.1 | 10 | 10.5 | 29 | 24.0 | 0 | 0.0 |
| 7 | GG | 3,369 | 3,948.2 | 1 | 0.5 | 19 | 8.3 | 80 | 56.5 | 103 | 85.7 | 203 | 151.0 | 24 | 19.6 |
| 8 | HH | 674 | 1,014.6 | 0 | 0.0 | 0 | 0.0 | 0 | 0.0 | 2 | 1.1 | 2 | 1.1 | 0 | 0.0 |
| 9 | I | 1,257 | 1,606.2 | 0 | 0.0 | 45 | 32.7 | 60 | 43.4 | 30 | 27.6 | 135 | 103.7 | 19 | 38.0 |
| 10 | JJ | 163 | 190.1 | 0 | 0.0 | 0 | 0.0 | 0 | 0.0 | 2 | 1.0 | 2 | 1.0 | 0 | 0.0 |
| 11 | KK | 21 | 24.3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12 | LL | 2 | 1.7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13 | MM | 719 | 493.7 | 17 | 9.1 | 7 | 3.4 | 8 | 3.1 | 42 | 19.4 | 74 | 35.0 | 7 | 3.0 |
| 14 | NN | 414 | 716.7 | 0 | 0.0 | 0 | 0.0 | 9 | 10.0 | 9 | 12.2 | 18 | 22.2 | 0 | 0.0 |
| 15 | OO | 13,485 | 8,122.3 | 34 | 12.6 | 236 | 88.9 | 427 | 204.0 | 1,591 | 943.3 | 2,288 | 1,248.8 | 244 | 182.4 |
| 16 | PP | 1,387 | 1,954.9 | 57 | 50.3 | 37 | 20.3 | 0 | 0.0 | 0 | 0.0 | 94 | 76.6 | 0 | 0.0 |
| 17 | QQ | 117 | 164.3 | 0 | 0.0 | 0 | 0.0 | 10 | 5.6 | 2 | 1.0 | 12 | 6.6 | 0 | 0.0 |
| 총계 | | 48,046 | 48,068.1 | 396 | 380.1 | 745 | 412.4 | 1,548 | 1,172.1 | 4,781 | 4,035.5 | 7,470 | 6,000.2 | 1,448 | 1,433.8 |

주 : 우리, 경남, 중소기업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외 대출 포함, 대출실행 건당 3억 원 이상 대상
 자료 : 한국은행 등 자료 제구성

[별표 8]

매출액채입액 대비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등 비교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 연번 | 구매기업 | 매출액 (A) | 매입액 (B) | 외상매출채권 충발행액 ¹⁾ (C) |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²⁾ (D) | 차액 | |
|----|------|------------|------------|-------------------------------------|-------------------------------------|--------|--------|
| | | | | | | D-A | D-B |
| 1 | *** | 43,292 | 48,561 | 15,000 | 81,444 | 38,152 | 32,883 |
| 2 | *** | 36,819 | 40,107 | 4,356 | 62,707 | 25,888 | 22,600 |
| 3 | *** | 22,482 | 20,955 | 9,205 | 43,819 | 21,337 | 22,864 |
| 4 | *** | 23,144 | 19,145 | 7,801 | 42,237 | 19,093 | 23,092 |
| 5 | *** | 39,207 | 35,681 | 36,277 | 53,967 | 14,760 | 18,286 |
| 6 | *** | 12,155 | 6,834 | 4,286 | 23,563 | 11,408 | 16,729 |
| 7 | *** | 12,254 | 11,365 | 6,658 | 18,020 | 5,766 | 6,655 |
| 8 | *** | 6,972 | 6,384 | 3,603 | 9,755 | 2,783 | 3,371 |
| 9 | *** | 15,247 | 14,413 | 2,049 | 17,462 | 2,215 | 3,049 |
| 10 | *** | 5,834 | 5,767 | 5,608 | 7,292 | 1,458 | 1,525 |
| 11 | *** | 9,001 | 7,974 | 3,394 | 9,982 | 981 | 2,008 |
| 12 | *** | 1,053 | 727 | 1,095 | 1,095 | 42 | 368 |

주: 1. 외상매출채권 충발행액: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산으로 등록한 총 누계액

2.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B2B대출, 구매자금대출, 구매카드, 어음발행액 등 정상적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불한 총 누계금액(단, 현금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자료 재구성

<별첨 8>

특정감사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

2012. 2.

감 사 원

목 차

| | |
|---|----|
| I. 감사실시 개요 | 1 |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
|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2 |
| 3. 감사 중점 | 2 |
| 4. 감사 기간 및 인원 | 2 |
| II. 증권시장 운영 현황 | 3 |
| 1.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체계 | 3 |
| 2. 증권시장 운영 현황 | 4 |
| 3. 증권 예탁·결제 현황 | 6 |
| 4.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 체계 및 현황 | 7 |
|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8 |
| 1)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 8 |
| 2)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부적정(통보) | 16 |
|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 21 |
| 4)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신용정보 활용 부적정(통보) | 27 |
| 5)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통보) | 30 |
| 6)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당 매매(문책) | 38 |
| 7) 적극적인 시장감시로 지능적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통보(모범)] | 40 |
| 8)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주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통보(모범)] ... | 44 |

| | |
|--------------------------------------|----|
| 9)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에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주의·통보) | 47 |
| 10)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 55 |
| 11) 해외주권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부적정(주의) | 62 |
| 12)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 66 |
| 13)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 69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시가총액 1,239조 원으로 세계 17위 수준인 반면,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연간 거래량¹⁾ 37억 계약 건으로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투기적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²⁾라 한다) 거래로 개인투자자 손실액이 1.8조여 원으로 추정되는 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에 불리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증권사에서 스캘퍼(scalper)³⁾에게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에 대한 감독소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증권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우회상장한 102개 업체 중 23개 업체(22.5%)가 상장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불성실공시로 373개 업체가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부실 상장·공시가 여전하며, 일부 증권회사의 시세조종⁴⁾ 등 주가조작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증권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FIA(Future Industry Association)에서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상품별 거래대금 자료를 발표하는 기관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비교

2)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 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 워런트)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

3) 알고리즘매매시스템을 통해 초단타매매를 하는 투자자

4) 금융위원회는 ○○증권주식회사가 2010. 11. 11.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주식 2조 4,353억 원 어치를 메도(KOSPI 지수 53p 하락)하는 시세조종으로 448억 원의 부당 이득 취득한 혐의로 위 증권사를 2011년 2월 검찰에 고발

이에 따라 상장, 공시, ELW 등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와 시장감시 활동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증권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이번 감사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09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 이후 실시한 증권시장 감독 및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① 상장 및 상장관리, ELW시장 운영 및 감독의 적정성, ② 공시제도의 운영 및 시장감시의 적정성, ③ 증권 예탁·결제의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1. 9. 19.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자료수집과 예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여 같은 해 10. 10.부터 10. 31.까지 15일간 총 27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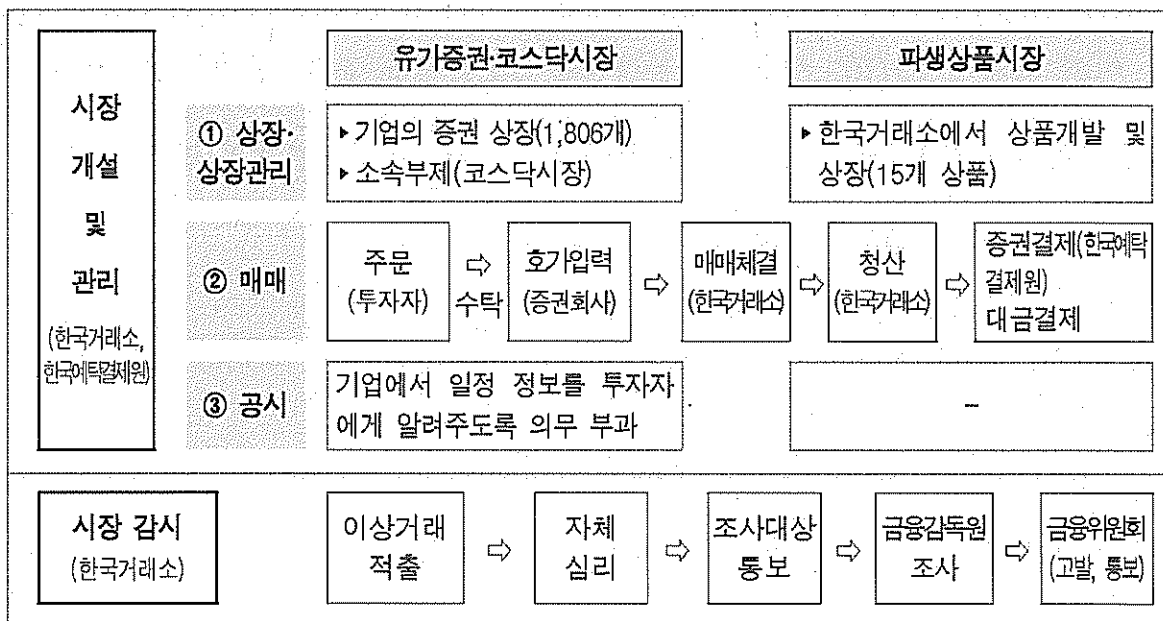
그리고 같은 해 11. 3.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질문서와 답변서 등을 주고받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12. 2.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증권시장 운영 현황

1.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체계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 규정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독점적으로 개설하여 증권 또는 상품의 상장 및 매매업무, 공시업무, 시장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같은 법 제294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 집중예탁 및 매매에 따른 증권결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증권시장 운영 체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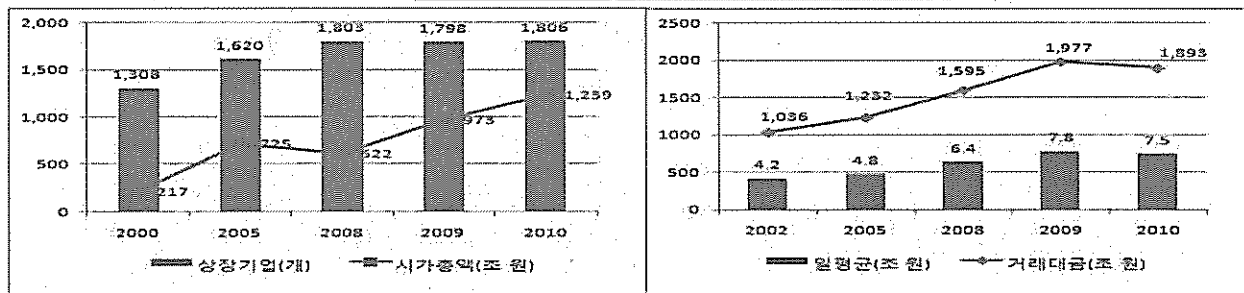
한편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규정에 대해 승인을 하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한국거래소 등의 검사⁵⁾ 및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중요 사항 등의 심의·의결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위탁

2. 증권시장 운영 현황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은 [도표 1]과 같이 2010년 말 현재 시가총액 1,239조 원으로 세계 17위 규모(세계증시의 약 2%)이고, 연간 거래대금은 1,893조 원으로 세계 7위 규모(일평균 7.5조 원)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777개, 코스닥시장 1,029개 등 총 1,806개 업체가 상장⁶⁾되어 있다.

[도표 1] 연도별 시가총액, 상장기업 및 거래대금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한편 파생결합증권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은 2005년 12월 시장개설 이후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⁷⁾하여 2010년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여 원 수준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시장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다.

파생상품시장은 KOSPI200선물·옵션 등 15개 상품이 상장되어 있고, 2010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56조여 원이며 연간 거래량은 [표 1]과 같이 37억여 계약으로 세계 1위(거래량 기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표 1] 연도별 세계 주요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 현황

(단위: 백 만 계약, %)

| 순위 | 거래소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비중 |
|----|--------------|-------|-------|-------|-------|-------|------|
| 1 | KRX(한국) | 2,475 | 2,776 | 2,867 | 3,103 | 3,752 | 16.8 |
| 2 | EUREX(독일) | 1,527 | 1,900 | 2,165 | 1,687 | 1,897 | 8.5 |
| 3 | CME(미국) | 1,403 | 1,775 | 1,893 | 1,476 | 1,656 | 7.4 |
| 4 | NSE(인도) | 194 | 380 | 602 | 919 | 1,616 | 7.2 |
| 5 | EURONEXT(유럽) | 730 | 949 | 1,050 | 1,056 | 1,223 | 5.5 |

주: EURONEXT는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의 브뤼셀 등 유럽 3개국의 증권시장이 통합된 단일 증권시장
 자료: 한국거래소

6) 그 중 외국법인은 중국 0000공사 등 17개 업체가 상장

7) 일평균 거래대금: 2008년 3,845억 원 → 2009년 8,523억 원 → 2010년 1조 6,374억 원

투자자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비중은 [표 2]와 같이 개인투자자의 경우 2010년에 시가총액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빈번한 주식거래로 주식 거래대금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⁸⁾ 기관과 외국인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각각 13.5%, 31.2%를 보유하고 있다.⁹⁾

[표 2] 투자자별 주식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현황

(단위: 천억 원, %)

| 구분 | 시장 | 개인 | | 기관 | | 외국인 | | 기타 | | 합계 | |
|-------|------|--------|--------|--------|--------|--------|--------|--------|-------|--------|--------|
| | | 시가총액 | 거래대금 | 시가총액 | 거래대금 | 시가총액 | 거래대금 | 시가총액 | 거래대금 | 시가총액 | 거래대금 |
| 2008년 | 유가증권 | 1,557 | 12,750 | 711 | 5,591 | 1,657 | 6,580 | 1,831 | 822 | 5,756 | 25,743 |
| | 코스닥 | 306 | 5,563 | 16 | 201 | 38 | 324 | 102 | 91 | 461 | 6,179 |
| | 소계 | 1,863 | 18,313 | 727 | 5,792 | 1,695 | 6,904 | 1,933 | 913 | 6,218 | 31,922 |
| | (비중) | (30.0) | (57.4) | (11.7) | (18.1) | (27.2) | (21.6) | (31.1) | (2.9) | | |
| 2009년 | 유가증권 | 2,753 | 17,117 | 1,111 | 6,467 | 2,897 | 5,051 | 2,113 | 691 | 8,874 | 29,326 |
| | 코스닥 | 609 | 9,934 | 60 | 353 | 63 | 231 | 120 | 102 | 852 | 10,620 |
| | 소계 | 3,362 | 27,051 | 1,171 | 6,820 | 2,960 | 5,282 | 2,233 | 793 | 9,726 | 39,946 |
| | (비중) | (34.5) | (67.7) | (12.1) | (17.1) | (30.4) | (13.2) | (23.0) | (2.0) | | |
| 2010년 | 유가증권 | 2,414 | 15,401 | 1,596 | 6,139 | 3,755 | 5,739 | 3,624 | 932 | 11,383 | 28,211 |
| | 코스닥 | 565 | 8,920 | 67 | 370 | 99 | 268 | 244 | 104 | 975 | 9,662 |
| | 소계 | 2,979 | 24,321 | 1,663 | 6,509 | 3,854 | 6,007 | 3,868 | 1,036 | 12,364 | 37,873 |
| | (비중) | (24.0) | (64.2) | (13.5) | (17.2) | (31.2) | (15.9) | (31.3) | (2.7) | | |

주: 기타는 일반법인 및 정부기관

자료: 한국거래소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투자자별 비중은 개인투자자 32.2%, 기관 36.2%, 외국인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해외 선진국¹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시장감시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건수가 2008년 180건에서 2010년 2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중 파생상품시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2009년 27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표 4]와 같이 미공개정보이용 31.6%, 시세조종 28%, 지분보고의무 위반 22.8%,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13.2% 순으로 적발되었다.

8) 주식투자 인구 수는 2010년 12월 말 현재 개인 4,740,056명, 기관·외국인 등 47,012개 업체(명)

9) 2011년 8월 이후 우리나라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은 높은 주식보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차익 획득 위주의 투자가 큰 원인으로 파악됨

10)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은 닛케이225선물 10.4%, 닛케이225옵션 14.6%

[표 3] 연도별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 이상거래 적출 | 심리 | 금융감독원 조사대상 통보 | 금융위원회 조치 | | | |
|-------|---------|-----|------------------|----------|----|----|-----|
| | | | | 고발 | 통보 | 기타 | 무혐의 |
| 2008년 | 120,590 | 344 | 180 | 50 | 65 | 42 | 26 |
| 2009년 | 52,184 | 460 | 240 | 65 | 77 | 34 | 23 |
| 2010년 | 52,193 | 549 | 257 | 75 | 63 | 40 | 23 |

주: 금융감독원 조사대상 통보 건수는 종목 기준, 금융위원회 조치는 조치연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표 3] 2010년 유형별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현황

(단위: 건, %)

| 구분 |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 보고위반 | 단기매매차익 | 합계 |
|-------------|--------------|--------------|-------------|--------------|--------------|--------------|
| 유가증권시장 | 17 | 15 | 5 | 15 | 7 | 59 |
| 코스닥시장 | 69 | 61 | 7 | 47 | 29 | 213 |
| 합 계 (비중) | 86 (31.6) | 76 (28.0) | 12 (4.4) | 62 (22.8) | 36 (13.2) | 272 (100) |

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종목만 대상으로 한 건수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3. 증권 예탁결제 현황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표 5]와 같이 2011년 9월 말 현재 주식 1,052조 원 (시가총액), 채권 1,342조 원을 보관하고 있다.

[표 5] 주식 등 예탁 현황

(단위: 천 매, 조 원)

| 구분 | 예탁 | | | | CD, CP (금액) | 보호 예수 | | | |
|------------|-------|-------|-----|-------|----------------|-------|------|------|------|
| | 주식 | | 채권 | | | 주식 | | 채권 | |
| | 매수 | 금액 | 매수 | 금액 | | 매수 | 주식 수 | 매수 | 금액 |
| 2009년 | 2,171 | 913 | 790 | 1,083 | 78 | 1,443 | 92 | 0.3 | 0.1 |
| 2010년 | 2,247 | 1,167 | 730 | 1,174 | 79 | 1,473 | 97 | 1.9 | 0.17 |
| 2011년 9월 말 | 2,310 | 1,052 | 617 | 1,342 | 90 | 611 | 492 | 1.20 | 0.36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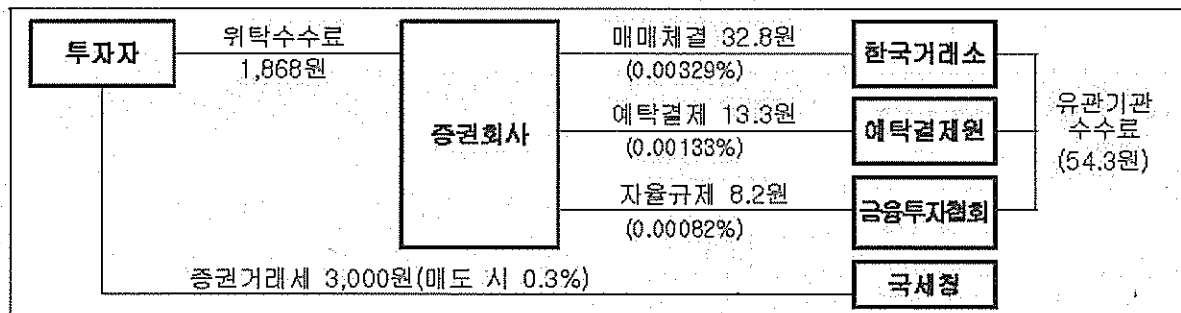
증권결제는 2010년도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월평균 주식 거래량 및 결제량이 각각 80억 주, 62.4억 주에 이르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월평균 주식 거래량 및 결제량이 각각 130억 주, 26.8억 주에 이르고 있다.¹¹⁾

11) 월평균 거래량과 결제량의 차이는 차감결제에 따른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차감률 21%, 코스닥시장 차감률 80%

4.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 체계 및 현황

한국거래소 등은 증권매매 체결과 예탁 결제업무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그림 2]와 같이 한국거래소 0.00329%, 한국예탁결제원 0.00133% 등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 관련 수수료로 징수¹²⁾하고 있다.

[그림 2] 주식(1백만 원) 거래 시 수수료 징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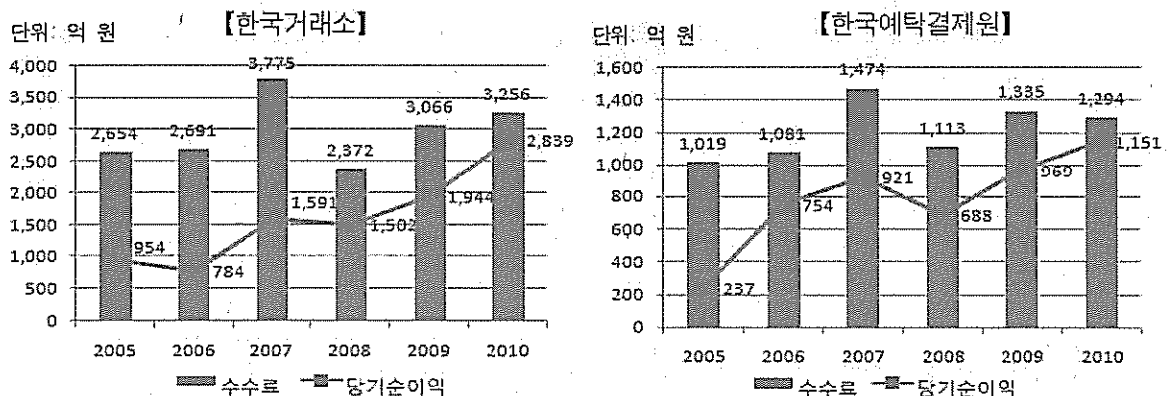


주: 위탁수수료는 온라인 주식거래(HTS)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도표 2]와 같이 2010년도에 각각 수수료 수입 3,256억 원, 1,294억 원, 당기순이익 2,839억 원, 1,151억 원을 얻고 있고, 2010년 말 현재 누적 이익잉여금은 각각 1조 4,850억 원, 7,351억 원에 이르고 있다.

[도표 2] 연도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징수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12) 한국거래소는 거래수수료 등 3종,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등 28종, 금융투자협회는 협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수수료 변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 이사회 결의로 변경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ELW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제반 규정을 승인하고 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LW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 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 워런트)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으로, 투자자의 최대 손실액이 증권매입액 범위로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형식상 ‘증권’에 해당하나,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장래에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옵션과 법적성격 또는 거래구조만 다를 뿐¹⁾ 그 경제적 특성은 동일하다.

ELW 거래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3년 3월 i) 소액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ii) 위험회피(hedge) 등의 과정에서 전체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iii) 선진 금융기법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ELW 등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2005. 12. 1. ELW 시장이 한국

1) ELW는 장의파생업을 인가받은 증권사만 발행하고, 유동성공급자(LP)가 존재하며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나, 옵션은 불특정 투자자가 발행하고 유동성은 투자자 간 수급에 의존하며 거래소가 결제를 보증하고, 거래소가 만기일과 행사가를 지정하여 표준화된 옵션을 상장하면 시장 참여자가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음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개설²⁾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ELW 시장개설 이후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0월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 678억 원에 이르는 등 ELW 거래규모가 세계 1위 시장인 홍콩(2조 1,000억여 원)에 근접할 정도로 급격히 커졌다.

그런데 위험회피수단 및 소액투자기회 제공 등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수 시장참가자의 투기적 수요에 의해 ELW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시장에서 가격결정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³⁾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과 2011년 5월에 ELW 시장 건전화 방안⁴⁾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으로 2011년 8월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9,336억 원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위 건전화 방안은 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투자자 교육, 기본예탁금(1,500만 원)제도 도입 등 소극적인 방안에 불과하여 2011년 10월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여 원(유가증권시장 전체의 15.6%⁵⁾ 상당)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ELW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 및 시장참여자별 수익구조 등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ELW 시장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 당초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2004년 7월 ELW 시장개설방안을 마련하여 구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KOSPI200 옵션과 유사한 상품인 ELW를 상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소 통합 이후 옵션시장과의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보류함
- 3) "악마의 유혹 ELW"(◎경제 기획연재, 2011년 3월), "증권사-스캘퍼 뒷거래설 업계 무성"(◇◇일보, 2011. 3. 25.) 외 다수 언론보도,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ELW가 투기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
- 4) 투자자 교육이수 의무화, 유동성공급자(LP)평가 강화, 기본예탁금 부과, 주문속도 관련 기준 마련 등
- 5) ELW는 옵션과 경제적 특성이 동일한 반면 이하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옵션에 비해 가격결정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더 비싸게 형성되고 있는데도, 2011년 10월 기준 ELW의 일평균 거래규모(1조 4,004억여 원)가 장내옵션의 일평균 거래규모(1조 6,688억여 원)의 83.9%에 이르고 있는 실정

1. 유동성공급자(LP)에 의한 가격결정 구조

ELW를 발행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 내지 같은 규정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동성공급자⁶⁾(Liquidity Provider, 이하 “LP”라 한다)를 지정하여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고 LP는 ELW 발행사로부터 발행물량 전부를 인수한 후 이를 거래소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와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 양방향 호가 및 수량을 제시하여 시장을 조성하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파생상품시장(옵션시장)에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한국거래소가 정한 매매규칙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옵션을 매도하고 이를 다수의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⁷⁾되는 반면, ELW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장마감 후 ELW를 보유(over-night position)한 금액이 2011년 10월 말 기준 1,304억 원(전체 시가총액 24조여 원의 0.54% 수준)에 불과한 등 시장에서 LP의 독점적 지위가 지속⁸⁾되고 있다.

이에 따라 LP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제시하는 호가와 수량에 따라 ELW의 가격이 주로 결정되고 있으나, ELW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⁹⁾ 중 주가 지수(또는 개별주식의 주가)의 장래 변동성(이하 “내재변동성¹⁰⁾”이라 한다)은 LP의

6) 매 5분 이내로 특정종목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ELW를 발행한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사로부터 유동성공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대부분 발행사가 LP업무를 겸하고, 제3자 LP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7) 옵션시장에서는 형성된 시세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면 누구라도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고 반대로 낮다면 매수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양방향 대응이 가능하므로 옵션가격 형성에 있어서 특정인의 영향력 행사가 어려움. 또한 옵션시장에는 다양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나 헤지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8) 장 종료시점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보유한 ELW를 LP에게 되팔기 때문에 장 시작 시에는 LP에 의한 공급독점, 장 중에는 LP에 의한 대량호가, 장 종료 시에는 LP에 의한 수요독점 상태가 상장기간 중 계속됨

9) ①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② ELW 행사가격, ③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른바 ‘내재변동성’), ④ 잔존만기, ⑤ 무위험 이자율, ⑥ 기초자산 배당정보 등을 변수로 하여 산출(블랙숄즈 모델)되며, ‘내재변동성’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항목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값

10) 일반적으로 ‘향후 만기시점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계량화한 값’으로, 이를 산출하기 위한 확률적인 기준이나 이론은 없음. 따라서 LP는 과거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초로 향후 변동가능성을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 그 추론 방식은 LP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임

주관적 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조건의 ELW의 가격이 LP마다 다르게 산정되고 있고, 이와 같이 LP에 의해 형성된 ELW 가격이 적정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위와 같이 ELW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 및 적정가격 산정의 어려움에 따라 발행사가 ELW 가격을 높게 발행하거나, LP가 시장에서 매매차익 확보를 위해 임의로 가격을 변동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거래되고 있는 ELW(이하 “지수형 ELW”라 한다)의 가격을 동일 구조¹¹⁾의 옵션가격과 비교한 연구결과¹²⁾에 따르면 지수형 ELW¹³⁾는 동일 구조의 옵션보다 평균 24.2%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소가 매일 공시하고 있는 LP의 ELW 가격결정을 위해 적용한 내재변동성의 일관성¹⁴⁾을 분석해보면 [표 1]과 같이 2011년 3분기 중 LP가 내재변동성을 일중에 최고 5% 이상 변동시킨 사례가 총 735회에 달하고 있다.

[표 1] LP에 의한 ELW 내재변동성 변동비율 5% 이상 현황

(단위: 종목 수)

| 내재변동성 변동비율 | 5%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계 |
|---------------|-----------------|------------------|-------------------|--------|-----|
| 종목 수 | 273 | 198 | 234 | 30 | 735 |

주: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간 중 일중 5분 마다 산정한 LP의 내재변동성 변동비율 중 최고치가 5% 이상인 종목 수(잔존만기 30일 미만인 종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거래소

2. 특정 시장참여자에 의한 시장교란 및 일반 개인투자자의 구조적 손실 발생

2011년 10월 기준 ELW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 1조 4,004억 원 중 투자자별 매매비중을 보면 개인이 6,750억 원(48.2%), LP가 6,310억 원(45.1%)을 차

11)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ELW와 만기와 행사가 등이 동일한 옵션상품

12) 최종 거래일이 2010. 6. 10. 도래, 기초자산이 KOSPI200인 콜 ELW 중 거래가 활발한 13개 종목을 표본으로 동일구조의 주식옵션과 1분 간격으로 가격 비교(“ELW 시장의 가격행태 분석”, 한국증권학회지 제40권 1호, 2011년 2월)

13)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동일한 구조의 옵션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의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을 비교할 대상이 없음

14) 내재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게 또는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LP의 임의적인 가격결정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지하고 있고, 기관¹⁵⁾과 외국인의 참여(각각 3.7%, 2.5%)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일평균 거래횟수가 100회 이상으로 알고리즘 매매시스템¹⁶⁾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이하 “스캘퍼”라 한다)은 2011년 9월. 계좌 수 기준으로 개인 전체(36,154개 계좌)의 3.46%(1,251개 계좌)에 불과하나 거래 대금은 74.8%(4,286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등 ELW 시장은 LP와 소수 스캘퍼 간의 투기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1 항”에서와 같이 ELW의 가격이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이 아닌 주로 LP가 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제시¹⁷⁾하는 호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스캘퍼는 이러한 가격결정 구조와 LP의 호가제시 시스템을 파악한 후 증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빠른 주문 프로세스¹⁸⁾ 등을 이용하여 LP의 호가 조정에 선행하여 매수(저가매수)하고 LP 호가가 상향 조정될 경우 즉시 매도(고가매도)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익을 지속적으로 실현¹⁹⁾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기간 중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일평균 ELW 거래 대금이 100억 원 이상인 79개 계좌의 매매손익을 분석한 결과, 스캘퍼는 위 계좌 중 77개 계좌를 통해 총 627억여 원(계좌당 8억 1,443만 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²⁰⁾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15) LP를 제외한 증권사

16) 투자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자동화된 방법에 의해 금융상품의 매매 기회를 인지하고 주문을 집행하는 매매유형으로서, 사전에 설계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각종 분석지표(가격의 움직임, 거래량, 일중 시간대 등)를 분석하여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낼 것인지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

17) LP는 많게는 수 백 종류의 ELW를 운용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초자산 가격에 대응하여 즉각적으로 호가를 변경해야 하므로, LP가 매순간 시장 정보를 확인하면서 개별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호가를 제출

18) LP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수수료 수익 증대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목적으로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내부 전산망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보다 주문속도가 20여 배 빠른 주문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등 스캘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어 12개 증권회사 대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19) LP는 스캘퍼와의 거래로 일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상장 초기에 자산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캘퍼와의 거래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향이 있어 스캘퍼의 지속적인 수익확보가 가능

또한 금융투자회사도 ELW와 동일한 구조의 옵션을 파생상품시장에서 매입하여 헤지 포지션을 구축한 후 “1 항”에서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ELW를 매각²²⁾하거나, 유통 시장에서 ELW의 매도·매수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2,917억 원의 수익²³⁾을 얻고 있다.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만기에 권리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가격이 저렴한 ELW(이하 “외가격 ELW”²⁴⁾라 한다)에 주로 투자하는데, 이러한 외가격 ELW는 기초자산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그 가격이 “0”으로 수렴²⁵⁾하므로 이를 매입할 경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며²⁶⁾, 실제로 개인투자자는 [표 2]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ELW 시장에서 1조 8천억여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등 시장 참여자별 불합리한 수익구조가 ELW 시장에 고착화되어 있다.

[표 2] 2006년 이후 ELW 거래주체별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
|-----------|--------|--------|--------|--------|--------|---------|
| 개인 | △2,004 | △1,048 | △5,647 | △5,317 | △4,148 | △18,164 |
| LP 금융투자회사 | 323 | △648 | 386 | 1,789 | 1,067 | 2,917 |
| 외국법인 | △114 | △18 | 1,971 | 356 | △1,218 | 977 |

주: 1. 개인손익은 {매도약정-매수약정+권리행사차금+(연말보유 ELW 평가액-전년말보유 ELW평가액)}으로 산출
2. LP손익은 LP영업과 관련한 내부관리 손익(ELW 매매손익+헤지손익-제 비용)

자료: 금융감독원

20) 손실 계좌는 2개(손실 합계액: 7,458만 원)

21)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1월 중 ELW 거래금액 상위 20개 계좌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해당 20개 계좌는 일명 스캘핑 기법으로 총 47.1억 원의 수익(일평균 계좌당 1,130만 원)을 안정적으로 얻은 것으로 나타남(손실계좌 없음)

22) 이 경우 투자자와의 매매과정에서 ELW 매매차손이 발생하더라도 LP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입한 옵션상품의 이득으로 이를 상쇄하고, ELW와 옵션의 가격차이 만큼 이득을 볼 수 있음

23) LP의 손익은 (ELW 매매손익+헤지손익-제 비용)으로 구성되므로 헤지비용의 증가(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또는 불완전 헤지 등에 따라 일시적인 손실(2007년의 경우 648억 손실)을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론적으로 LP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ELW 가격을 산정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

24) 2011년 8월 말 기준 콜ELW 7,684개 종목 중 권리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높아 내재가치가 “0”이고 시간가치로만 구성된 종목(이하 “외가격 ELW”라 한다)이 6,948개 종목으로 콜ELW의 대부분(90.4%)을 차지

25) ELW는 만기에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내재가치’와 기초자산 변동에 대한 기대치인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기에 근접할수록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내로 변동할 확률이 낮아지므로 ‘시간가치’는 점차 “0”으로 수렴

26) 시간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LP의 호가 스프레드(매도와 매수가격 차이)에 의한 손실, 빈번한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 등도 ELW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원인

위 “1~2항”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ELW 시장은 LP가 유통시장에서 가격과 수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소수의 투기적 세력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들은 ELW 발행에 대한 규제²⁷⁾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투자회사 간 ELW 투자자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8월 말 기준 총 9,286개 종목의 ELW를 경쟁적으로 발행·상장하고 있으나, 이 중 6,889종목은 일종 거래대금이 해당 종목 시가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ELW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ELW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수요를 감소시키고 시장 참여자별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ELW 발행 및 호가제출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으로 ELW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²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7)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영업용순자산비율이 300%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발행물량 10원 이상, 만기 3개월~3년 이내의 ELW를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고, 종목당 발행비용도 저렴(20억 원 발행 시 상장수수료는 55만 원)

28)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사원 감사 후 2011. 12. 1. i) LP에 대한 규제 강화(매도·매수 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0~15% 사이에서 호가 제출 가능), ii) LP평가 성적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ELW 발행·상장을 일부 제한, iii)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시장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감독원 본원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4-4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증거금 등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¹⁾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위탁증거금²⁾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거래소 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4-4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의 이용대가로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회는 자본시장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2) 위탁증거금이란 장내파생상품 투자자의 향후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예탁받는 결제이행 보증금으로 KOSPI200선물거래의 경우 선물1거래 시 매매금액의 15%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함. 위탁증거금은 현금, 대용증권(주식, 채권 등), 외화로 예탁할 수 있음

관(이하 “☐☐협회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거래소 업무규정 제134조에 따르면, ‘현금위탁증거금’이란 선물거래를 하는 고객이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 중 반드시 현금으로 위탁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위탁증거금률×현금위탁증거금률³⁾”과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등으로 정의⁴⁾되어 있다.

[거래소 업무규정 상 현금위탁증거금 산정 예시]

- KOSPI200선물 1거래의 경우(KOSPI200지수는 240포인트, 현금위탁증거금률은 1/3으로 가정)
 - ① 계약금액은 240포인트×500,000원(거래승수⁵⁾)으로 1억 2,000만 원
 - ② 위탁증거금은 위탁금액 1억 2,000만 원에 위탁증거금률 15%를 곱한 1,800만 원
 - ③ 현금위탁증거금은 위탁증거금 1,800만 원에 현금위탁증거금률 1/3을 곱한 600만 원
- ※ 선물거래 투자자는 위탁증거금 1,800만 원 중 600만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현금, 대용증권(주식, 채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런데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5조 및 ☐☐협회 표준약관 제19조에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투자자예탁금 중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각 회사가 정하는 요율⁶⁾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가 위 거래소 업무규정 제134조의

-
- 3)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에 따르면 현금위탁증거금 비율은 3분의 1을 최저율로 하여 3분의 3 이내에서 회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4) 한국거래소는 현금위탁증거금이 위탁증거금 예탁수단 중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2011. 7. 6.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현금예탁필요액’으로 용어를 변경(시행세칙은 2011. 10. 20. 개정)
 - 5) 선물은 1계약을 기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1계약을 거래했을 때 얼마만큼의 거래대상을 인수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의 크기를 거래승수라고 함(즉, 지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한 계약의 금액을 산출함)
 - 6) ☐☐증권주식회사의 경우 3개월 예탁금 평균잔액기준으로 1천만 원 미만은 0%, 1천만~3천만 원은 0.25%, 3천만~1억 원은 0.5%, 1억~3억 원은 1%, 3억~5억 원은 1.5%, 5억 원 이상은 2%의 예탁금 이용료를 각각 적용(☐☐주식회사도 ☐☐증권주식회사와 유사한 등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가 비슷한 구조임)

현금위탁증거금과 같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⁷⁾.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별로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여 이용료를 산정·지급하고 있을 소지가 있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62개⁸⁾ 전체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이용료 지급실태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증권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증권주식회사는 거래소 업무규정 제134조의 현금위탁증거금 정의와 같이 투자자가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위탁증거금의 1/3⁹⁾)만 ‘현금위탁증거금’으로 해석하고 이를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60개 금융투자업자¹⁰⁾는 투자자가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을 모두 ‘현금위탁증거금’으로 해석한 후 현금으로 위탁한 증거금 전체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고 않고 있었다.(아래 [예시] 참조)

[금융투자업자별 이용료 지급대상 투자자 예탁금 산정 예시]

- 앞 페이지의 ‘현금위탁증거금 산정예시’에서 선물거래로 1,800만 원의 위탁증거금(이중 현금위탁증거금은 600만 원)이 발생한 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별 이용료 지급대상 투자자 예탁금 산정 방식

- ① [□□증권 등 2개사] 9,400만 원 = 전체예탁금(1억 원)-현금위탁증거금(600만 원)
- ② [나머지 60개사] 8,200만 원 = 전체예탁금(1억 원)-현금으로 예치한 위탁증거금 전체(1,800만 원)

7) ☐☐협회 표준약관 제5조(수탁의 거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수탁 거부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현금위탁증거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협회는 위 표준약관 제5조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금위탁증거금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

8) 총 69개 금융투자업자(증권사 62개사, 선물사 7개사) 중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7개사를 제외한 숫자

9)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에 따르면 현금위탁증거금 비율은 3분의 1을 최저율로 하여 3분의 3 이내에서 회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2011년 10월 말 현재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현금위탁증거금률을 1/3로 정하고 있음

10) 69개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예탁금 적정산정 2개사, 파생상품 미취급 7개사를 제외한 60개 금융투자업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위탁증거금의 범위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투자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 협회로 하여금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i) 현금위탁증거금을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위탁증거금 중 일부를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제대기성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고, ii) 2010년 10월 말 현재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현금위탁증거금률(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비율)을 1/3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안정적인 결제를 위해 보유할 필요가 있는 현금 비율을 스스로 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최소한 현금으로 위탁하여야 하는 증거금'(위탁증거금의 1/3)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위탁증거금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제각각 달리 해석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 등 2개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60개 금융투자업자는 2010회계연도(2010. 4. 1.~2011. 3. 31.¹¹⁾) 동안에만 총 3조 676억여 원¹²⁾의 예탁금(일평균 기준)에 대한 이용료(연간 307억여 원 추정¹³⁾)를 지

11)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간이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2) 위 60개 금융투자업자는 '현금으로 위탁해야 하는 증거금'인 1조 188억여 원이 아닌,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체'에 해당하는 4조 864억여 원을 모두 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급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이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3) 위 60개 사의 회사별 평균 예탁금 이용료율(최저 0.3%, 최고 2.25%, 회사별 평균 1~1.5%)을 적용하여 미지급 이용료를 산출해 본 결과 2010회계연도에 총307억여 원의 이용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료 미지급액은 실제 계좌별로 산출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신고·공시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 공시 후 중단된 자원개발사업 등 미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서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의 공시를 위해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등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에 신고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장법인이 위 규정 등에 따라 자원개발 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공시한 이후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사실은 자원개발사업 투자를 공시한 상장법인 투자자 등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또한 상장법인이 실제 사업성이 낮은데도 사실과 다른 자원개발사업 관련 공시를 하여 주가 부양을 꾀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원개발 투자 등의 사실을 공시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의무 공시사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자원개발 사업에 착수한 사실을 공시한 상장법인에 대해서 자원개발 사업의 진행경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규정이 없어²⁾ 2008. 1. 1.부터 2011. 9. 30.까지 자원개발 공시를 한 77개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28개, 코스닥시장 49개) 중 26개 법인은 자원개발 착수 공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가 없는 26개 법인의 자원개발사업 35건에 대하여 2011년 10월 현재 사업진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는 2009. 4. 3. 미얀마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공시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진행 상황이 없는 등 [별표] “거래소 상장법인의 자원개발사업 진행상황”과 같이 16건의 자원개발사업은 투자협상 결렬, 사업타당성 부족, 지분취득 업체의 폐업 등으로 사업의 진행사항이 없거나 사업 중단 또는 이미 해당사업에서 철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신고내용을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공시

2) 2011. 7. 11.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자원개발 관련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 인허가·탐사비 관련 사항 등 상세정보를 기재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사항으로서 2011년 10월 말 현재까지 개정된 서식에 의해 공시한 상장법인은 1개에 불과, 최초 공시 이후 진행사항 및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데 그침

그 결과 이와 같이 사업성이 없거나 지분을 취득한 타 법인이 이미 폐업 또는 사업을 철수한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악재성 정보를 알고 있는 해당기업의 내부자는 이를 불공정거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2. 경영진의 범죄혐의 등 미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임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³⁾,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 당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 공시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횡령·배임 등은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이러한 범죄 경력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1. 10. 10.~10. 31.) 동안 2007년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7. 9. 14. 주식회사 □□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는 같은 회사에서 횡령·배임행위(53억 원, 공시일자 2008. 5. 8.)를 한 이후인 2009. 10. 13. 아무런 공시없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회사에서 192억 원을 재차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⁵⁾ 있는 등 2011. 11. 6. 현재 27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

4) 상장법인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나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해당 법인의 기업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투자 등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5) 위 ◇◇◇는 2011. 11. 28. 1심 재판에서 횡령 및 사기(182억 원)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

명이 2개 이상의 상장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횡령·배임행위로 해당법인에 총 1조 1,6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에 있거나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증권감독기관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상장법인의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과거 10년간 형사처벌 전력과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계류 중인 내역 등을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⁶⁾

그런데 거래소의 공시규정에는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에 있는 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시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 등으로 취임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는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고, 범죄경력자가 동일한 범죄 행위를 다른 상장법인에서 계속 저질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원개발사업 착수를 공시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경과 및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과거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자 등이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도 관련 범죄경력 및 혐의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미국의 경우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및 1934년 「증권거래법」(Exchange act)에서 요구하는 공시서류 등의 비재무적사항 기재방법에 관한 기본지침인 Regulation S-K Item 401(f)에 이와 같이 규정

[별표]

거래소 상장법인의 자원개발사업 진행상황

| 연번 | 종목(시장) ¹⁾ | 자원유형 | 최종 공시일자 | 개발대상 | 사업경과 |
|----|----------------------|-------------|---------------|---------------------|--|
| 1 | ○○(유) | 유전 | 2009. 1. 21. | 카자흐스탄 ○○ | 탐사 시추 준비 중 |
| 2 | ♀♀♀주식회사(유) | 가스 | 2009. 4. 3. | 미얀마 ○○ | 진행사항 없음 |
| | | 유연탄 | 2009. 8. 25. | 호주 ○○ | 채탄 중 |
| 3 | ○○(유) | 가스 | 2008. 12. 12. | 중국 ○○ ²⁾ | 협상 결렬로 사업 중단 |
| | | 유전 | 2009. 1. 21. | 카자흐스탄 ○○ | 시추선 도입 자금 계약 |
| 4 | ○○(유) | 가스 | 2009. 10. 16. | 예멘 ○○ | 생산 중(연간 640만 톤) |
| | | 니켈 | 2010. 7. 6. | 마다가스카르 ○○ | 생산 예정 |
| 5 | ○○(유) | 유전 | 2009. 1. 21. | 카자흐스탄 ○○ | 시추선 계약 |
| | | 동 | 2010. 9. 16. | 미국 ○○ | 환경영향평가 중 |
| 6 | ○○(유) | 유전 | 2008. 2. 28. | 미국 ○○ | 사업 지연 |
| 7 | ○○(유) | 유전 | 2008. 12. 19. | 콜롬비아 ○○ | 탐사정 시추 예정 |
| | | | 2009. 1. 21. | 카자흐스탄 ○○ | 탐사 중 |
| 8 | ○○(유) | 가스 | 2008. 3. 5. | 미국 ○○ | 진행사항 없음 |
| 9 | ○○(유) | 유전 | 2008. 3. 5. | 뉴질랜드 ○○ | 탐사 자료취득 중 |
| | | 구리 | 2008. 4. 30. | 멕시코 ○○ | 생산설비 구축 중(2011년 8월 현재 건설 공정률 48%) |
| | | 유전 | 2009. 1. 21. | 카자흐스탄 ○○ | 시추현장 조사 중 |
| 10 | ○○(유) | 철광석/ 티타늄 | 2010. 5. 27. | 남아공 ○○ | 개발타당성 없어 투자 보류 |
| 11 | ○○(유) | 아연 등 | 2010. 9. 8. | 페루 ○○ | 투자 진행 중 |
| 12 | ○○(유) | 유전 | 2008. 7. 21. | ○○ 지분 취득 | 사업 중단 |
| 13 | ○○(유) | 유전 | 2009. 8. 21. | ○○ 지분 취득 | 환경조사 등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중 |
| 14 | ○○(코) | 특정 대상 없음 | 2008. 3. 10. | 자원탐사(특정 대상 없음) | 지분취득(지분율 19.35%, 취득가액 15억 원, 2010년 장부가액 904만 원) 후 주식양수도 대금 반환청구소송 중(진행상황 파악 불가능) |
| 15 | ○○(코) | 특정 대상 없음 | 2008. 4. 21. |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현금출자(10억 원)를 통해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설립 후 사업목적에서 자원개발 삭제 |

| 연번 | 종목(시장) ¹⁾ | 자원유형 | 최종 공사일자 | 개발대상 | 사업경과 |
|----|----------------------|-------------|---------------|----------------|--|
| 16 | ○○(코) | 유전 | 2010. 2. 23. | 카자흐스탄 ○○ | ○○와 지분 판매 계약 완료 |
| | | 유전 | 2010. 5. 27. | 카자흐스탄 ○○ | 생산 시작 |
| 17 | ○○(코) | 원유, 천연가스 | 2009. 5. 29. | 캐나다 ○○ | 신규 광구 탐사 중 |
| 18 | ○○(코) | 특정 대상 없음 | 2009. 9. 8. |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폐업. 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및 전 대 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정 |
| 19 | ○○(코) | 특정 대상 없음 | 2008. 4. 11. |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 출자금 전액 대손상각 |
| | | 특정 대상 없음 | 2008. 4. 29. |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 출자금 전액 대손상각 |
| 20 | ○○(코) | 석탄 | 2008. 9. 5. | 인도네시아 ○○ | 2010. 8. 31. 사업 철수 |
| 21 | ○○(코) | 몰리브덴 | 2008. 4. 11. | 몰리브덴 ○○ | 매년 평가손실로 처리. 시추결과에 따 라 지분매각 검토 중 |
| 22 | ○○(코) | 구리, 우라늄 | 2008. 3. 26. | 잠비아 ○○ | 탐사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 |
| 23 | ○○(코) | 특정 대상 없음 | 2009. 10. 26. |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 2010. 7. 22. 상장폐지 |
| 24 | ○○(코) | 에너지 | 2008. 10. 17. | 러시아 ○○ | 자금조달을 위해 중국 ○○과 LOI 체결 |
| 25 | ○○(코) | 석탄 | 2009. 3. 24. | 인도네시아 ○○ | ○○ 폐업 |
| 26 | ○○(코) | 무연탄 | 2008. 12. 22. | 북한 ○○ | ○○ 지분매각 |

주: 1. (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 ○○은 중국 ○○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2004. 12. 24.부터 2009. 6. 12.까지의 조회공시요
구에 대하여 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자료: 한국거래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신용정보 활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2008. 1. 1.부터 2011. 10. 25. 사이에 1억원 이상의 대출원금을 10일 이상 연체한 자료¹⁾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09년 이후 상장폐지된 81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75개 기업(93%)에서 대출원금 연체가 상장폐지보다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원금 연체 사실이 기업부실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사실은 상장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여부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

1)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10일 이상 연체되면 2영업일 이내에 위 사실을 등록해야 함

로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일정 규모 또는 기간 이상의 대출금 연체사실에 대한 공시의무²⁾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식회사 ○○증권 등 37개 투자매매업자 등은 2011. 9. 30. 현재 거래소에 88% 이상(전체 20,000,000주 중 17,633,869주)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거래소는 은행연합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대출원금 연체 자료를 받아 위 공시의무 이행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을 연체한 사실을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식회사 □□(2009. 4. 11. 상장폐지)의 경우 2008. 2. 19.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 19억의 연체(2008. 12. 31. 조회 기준)를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계 192억여 원(2007년 말 자본총액 82억여 원 대비 234% 수준)의 대출금을 연체한 후 같은 해 8. 14. 관리종목³⁾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때까지 투자자에게 위 대출금 연체 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한 채 거래가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표]

2) 현재 이와 유사한 공시의무사항으로서 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3) 당해 주식의 시장유동성 부족 및 경영악화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폐지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

와 같이 대출금을 1억 원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서 2009년 이후 상장폐지된 81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49개 기업(60.5%)의 주식이 최초의 연체기산일 이후에도 위 사실이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873일 동안 그대로 거래되고 있었다.

[표] 대출원금 연체 후에도 정상기업으로 분류된 상장기업 현황

(단위: 개, %)

| 구 분 | 계(비율) | 정상종목 | 관리종목 | 상장폐지 |
|------|---------|--------|--------|------|
| 상장기업 | 81(100) | 49(61) | 26(32) | 6(7) |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여부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금 연체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출금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아 공시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및 제4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은 해당 증권 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및 자본시장법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의 제78호와 제283호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투자자 예탁증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을 지체없이 결제원에 투자자분으로 예탁하게 하고, 투자자 예탁증권을 임의로 자사의 고유재산 계좌에 대체한 후 이를 펀드결제용이나 대차상환 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20개 증권사¹⁾를 대상으로 2009. 1. 1.부터 2011. 10. 31.까지 투자자 예탁증권 계좌 및 고유재산 증권계좌 간의 이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증권에서는 총 48회에 걸쳐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자 증권계좌에 있는 예탁증권²⁾을 아래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투자자 예탁증권을 증권사가 설정한 펀드 결제용으로 무단 사용

△△증권에서는 2011. 8. 19. 주식회사 ☆☆자산운용과 같은 해 8. 23. ♀♀ 등 19개 종목 14,350주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이하 “ETF”라 한다)인 ♂♂ 700,000주를 지급받는 내용의 ETF 설정계약³⁾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계약 이행에 필요한 ♀♀ 등 19개 종목 16,956주를 주식시장에서 매수하였다.

그 후 △△증권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위 계약의 결제일인 2011. 8. 23. 결제교착⁴⁾으로 인하여 주식시장거래에서 매수한 ♂♂ 주식 등의 인수가 지연되

1) 조사 기간 동안 투자자 증권예탁계좌에서 자기 고유재산 증권계좌로 이체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하루에 20개 종목 이상 증권대차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위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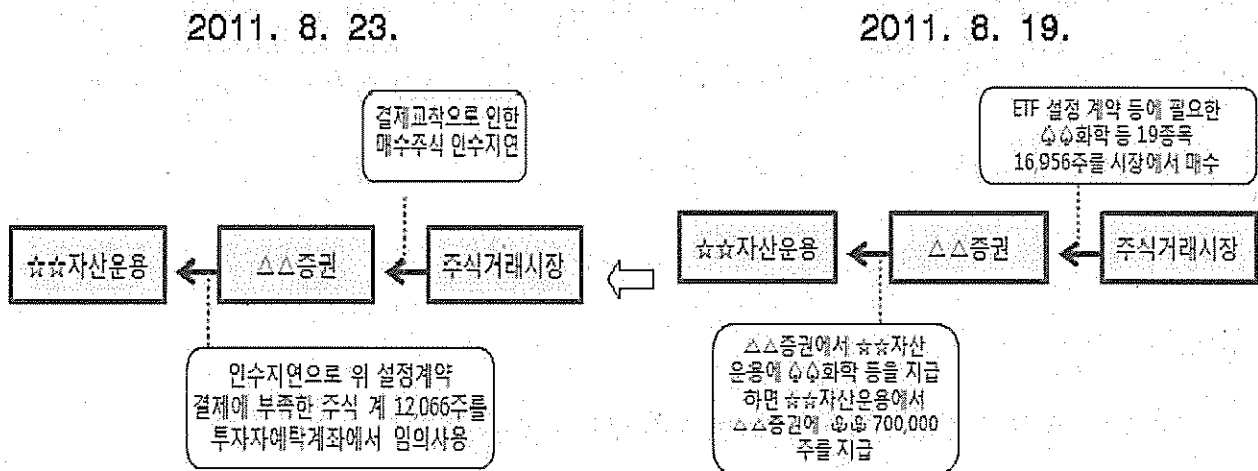
2) 주식 및 ETF 계 136개 종목, 824,433주, 전일종가기준 46,418백만여 원

3) ETF 설정계약은 증권회사나 기관이 ETF자산운용사에 ETF를 구성하는 주식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ETF 주식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

4) 현행 결제시스템상 증권사는 자신이 매도한 증권을 결제일까지 결제원에 납부해야 매수한 주식을 인도받을 수 있음. 그런데 증권사가 매도증권을 결제원에 납부하지 못하여(예: 매도주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등)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 결제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

주를 투자자 동의 없이 △△증권 고유재산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같은 날 17시 38분 ☆☆자산운용의 수탁은행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ETF거래 설정계약에 대한 결제를 하였다.

[그림] △△증권 투자자에탁증권 임의사용 흐름도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이후 △△증권에서는 2011. 8. 23. 17시 40분에 결제교착이 해소되어 주식시장에서 ♢♢ 주식 등이 인수되자 같은 날 17시 47분이 되어서야 이를 투자자 계좌에 다시 반환하는 등 19개 종목, 12,066주(230백만 원 상당, 전일종가 기준)를 투자자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 5) 위 ETF 설정에 따른 결제는 △△증권이 운용사인 ☆☆자산운용에 ETF 구성종목 전부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사례의 경우처럼 ETF 구성종목을 자산운용사에 실제로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TF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증권은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증권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표] “투자자 예탁증권 임의사용 명세”와 같이 2010. 4. 6.부터 2011. 10. 7.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 등의 설정에 필요한 ETF 구성종목인 ▽▽ 주식 등 369,799주(360억 3,700만 원 상당, 전일종가 기준)를 투자자 동의 없이 짧게는 9분에서 길게는 24시간 27분 동안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자사의 대차증권 상환을 위해 투자자 예탁증권을 무단 사용

△△증권에서는 증권대차거래를 하면서 자사가 차입했던 증권의 상환만기일에 결제지연 등으로 인해 결제마감시각(17시)까지 대차상환에 필요한 증권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사유로 [별표]와 같이 상환만기일 오전 등에 미리 투자자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 등 65개 종목, 454,634주(전일종가 기준, 10,381백만 원 상당)를 △△증권 고유재산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통해 대차증권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결제마감시각 이후 위 대차증권 상환을 위해 주식거래시장에서 매수했던 종목이 인수되면 이를 투자자 계좌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별표]와 같이 2009. 8. 17.부터 2011. 9. 16.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짧게는 24분에서 길게는 9시간 10분까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자 예탁증권을 반복하여 무단 사용하고 있는 등 투자자 예탁증권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을 임의로 자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② 투자자 예탁증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식회사 △△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등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투자자 예탁증권 임의사용 명세

(단위: 주, 원)

| 유형 | 사용 연번 | 사용 일자 | 종 목 | 사용수량 (A) | 전일증가 (B) | 금액 (A×B) | 사용시간 |
|-----------|----------|---------------|-------------------|-------------|-------------|----------------|----------|
| | 합계 | 48회 | 136 (중복 종목 제외) | 824,433 | | 46,418,283,430 | |
| ETF 결제 | 소계 | 9회 | 96 | 369,799 | | 36,037,126,280 | |
| | 1 | 2010. 4. 6. | ▽▽ 등 8개 종목 | 70,974 | 58,500 등 | 6,045,019,700 | 1시간 59분 |
| | 2 | 2010. 5. 12. | ▽▽ 등 4개 종목 | 45,230 | 35,700 등 | 1,535,412,200 | 1시간 12분 |
| | 3 | 2010. 5. 18. | ▽▽ 등 7개 종목 | 20,160 | 53,800 등 | 1,651,216,500 | 54분 |
| | 4 | 2010. 11. 9. | ▽▽ 등 5개 종목 | 2,063 | 76,700 등 | 173,689,200 | 49분 |
| | 5 | 2011. 8. 3. | ▽▽ 등 20개 종목 | 2,515 | 145,000 등 | 323,660,280 | 57분 |
| | 6 | 2011. 8. 23. | ♠♠ 등 19개 종목 | 12,066 | 302,500 등 | 230,341,900 | 12분 |
| | 7 | 2011. 9. 23. | ▽▽ 등 20개 종목 | 45,507 | 56,500 등 | 7,170,639,700 | 9분 |
| | 8 | 2011. 9. 28. | ▽▽ 등 34개 종목 | 77,308 | 6,000 등 | 9,835,233,800 | 1시간 16분 |
| | 9 | 2011. 10. 7. | ▽▽ 등 29개 종목 | 93,976 | 21,200 등 | 9,071,913,000 | 24시간 27분 |
| 대차 상환 | 소계 | 39회 | 65 | 454,634 | | 10,381,157,150 | |
| | 1 | 2009. 8. 17. | ♠♠ | 15,000 | 20,740 | 311,100,000 | 4시간 55분 |
| | 2 | 2009. 8. 31. | ▽▽ | 880 | 16,200 | 14,256,000 | 1시간 2분 |
| | 3 | 2009. 10. 14. | ▽▽ | 275 | 98,700 | 27,142,500 | 1시간 58분 |
| | | | ▽▽ | 79 | 65,000 | 5,135,000 | |
| | 4 | 2009. 11. 5. | ▽▽ | 2 | 184,500 | 369,000 | 3시간 28분 |
| | | | ▽▽ | 20 | 46,000 | 920,000 | |
| | | | ▽▽ | 6 | 46,200 | 277,200 | |
| | | | ▽▽ | 2 | 47,250 | 94,500 | |
| | 5 | 2009. 12. 15. | ♠♠ | 300,000 | 22,145 | 6,643,500,000 | 7시간 42분 |
| | 6 | 2009. 12. 24. | ▽▽ | 40 | 22,000 | 880,000 | 1시간 28분 |
| | | | ▽▽ | 18 | 59,000 | 1,062,000 | |
| | | | ▽▽ | 2 | 71,000 | 142,000 | |
| | | | ▽▽ | 4 | 82,200 | 328,800 | |
| | | | ▽▽ | 2 | 116,500 | 233,000 | |
| | | | ▽▽ | 2 | 784,000 | 1,568,000 | |
| | | | ▽▽ | 24 | 65,600 | 1,574,400 | |
| | | | ▽▽ | 4 | 101,500 | 406,000 | |
| | | | ▽▽ | 8 | 55,200 | 441,600 | |
| | | | ▽▽ | 4 | 175,000 | 700,000 | |
| | | | ▽▽ | 40 | 11,050 | 442,000 | |

| 유형 | 사용 연번 | 사용 일자 | 종 목 | 사용수량 (A) | 전일종가 (B) | 금액 (A×B) | 사용시간 |
|----------|----------|---------------|-----|-------------|-------------|---------------|---------|
| 대차 상환 | 6 | 2009. 12. 24. | ▽▽ | 4 | 66,800 | 267,200 | 1시간 28분 |
| | | | ▽▽ | 4 | 122,000 | 488,000 | |
| | | | ▽▽ | 4 | 113,500 | 454,000 | |
| | | | ▽▽ | 10 | 58,700 | 587,000 | |
| | 7 | 2010. 1. 12. | ▽▽ | 2,500 | 27,300 | 68,250,000 | 2시간 59분 |
| | 8 | 2010. 2. 10. | ▽▽ | 20 | 18,500 | 370,000 | 8시간 47분 |
| | 9 | 2010. 2. 11. | ▽▽ | 50 | 5,000 | 250,000 | 8시간 35분 |
| | 10 | 2010. 3. 4. | ▽▽ | 400 | 45 | 18,000 | 2시간 9분 |
| | 11 | 2010. 3. 30. | ㉡㉡ | 50,000 | 22,520 | 1,126,000,000 | 3시간 22분 |
| | 12 | 2010. 5. 14. | ▽▽ | 600 | 24,950 | 14,970,000 | 6시간 50분 |
| | 13 | 2010. 6. 1. | ▽▽ | 860 | 6,920 | 5,951,200 | 7시간 30분 |
| | 14 | 2010. 6. 10. | ▽▽ | 20 | 5,250 | 105,000 | 6시간 16분 |
| | | | ▽▽ | 40 | 6,700 | 268,000 | |
| | | | ▽▽ | 110 | 3,045 | 334,950 | |
| | 15 | 2010. 6. 14. | ▽▽ | 60 | 4,775 | 286,500 | 4시간 24분 |
| | | | ▽▽ | 18 | 41,000 | 738,000 | |
| | | | ▽▽ | 10 | 34,000 | 340,000 | |
| | | | ▽▽ | 8 | 61,900 | 495,200 | |
| | | | ▽▽ | 20 | 11,000 | 220,000 | |
| | | | ▽▽ | 60 | 8,410 | 504,600 | |
| | 16 | 2010. 6. 30. | ▽▽ | 13 | 86,200 | 1,120,600 | 8시간 13분 |
| | 17 | 2010. 8. 27. | ▽▽ | 2,500 | 10,700 | 26,750,000 | 42분 |
| | | | ▽▽ | 500 | 36,300 | 18,150,000 | |
| | 18 | 2010. 8. 31. | ▽▽ | 5,000 | 10,700 | 53,500,000 | 7시간 41분 |
| | | | ▽▽ | 1,000 | 36,450 | 36,450,000 | |
| | | | ▽▽ | 11,350 | 7,200 | 81,720,000 | |
| | 19 | 2010. 9. 20. | ▽▽ | 492 | 205,500 | 101,106,000 | 24분 |
| | | | ▽▽ | 232 | 63,600 | 14,755,200 | |
| | | | ▽▽ | 336 | 773,000 | 259,728,000 | |
| | | | ▽▽ | 444 | 148,000 | 65,712,000 | |
| | 20 | 2010. 10. 12. | ▽▽ | 1 | 4,310 | 4,310 | 7시간 43분 |
| | 21 | 2010. 10. 15. | ▽▽ | 25,250 | 7,780 | 196,445,000 | 5시간 7분 |
| | 22 | 2010. 11. 1. | ▽▽ | 10 | 53,600 | 536,000 | 6시간 24분 |
| | 23 | 2010. 11. 8. | ▽▽ | 2,800 | 9,550 | 26,740,000 | 1시간 21분 |
| | 24 | 2010. 11. 12. | ▽▽ | 1,000 | 47,550 | 47,550,000 | 4시간 54분 |
| | 25 | 2010. 12. 1. | ▽▽ | 15,150 | 7,360 | 111,504,000 | 3시간 45분 |
| | | | ▽▽ | 6,300 | 7,760 | 48,888,000 | |
| | | | ▽▽ | 1,680 | 8,740 | 14,683,200 | |

| 유형 | 사용 연번 | 사용 일자 | 종 목 | 사용수량 (A) | 전일증가 (B) | 금액 (A×B) | 사용시간 |
|----------|----------|---------------|-----|-------------|-------------|-------------|---------|
| 대차 상환 | 26 | 2010. 12. 8. | ▽▽ | 290 | 27,350 | 7,931,500 | 3시간 5분 |
| | 27 | 2010. 12. 13. | ▽▽ | 32 | 795,000 | 25,440,000 | |
| | 28 | 2010. 12. 14. | ▽▽ | 560 | 194,000 | 108,640,000 | 5시간 15분 |
| | 29 | 2010. 12. 27. | ▽▽ | 4,238 | 192,500 | 815,815,000 | 9시간 10분 |
| | | | ▽▽ | 50 | 53,100 | 2,655,000 | |
| | | | ▽▽ | 10 | 146,500 | 1,465,000 | |
| | 30 | 2011. 1. 31. | ▽▽ | 180 | 250 | 45,000 | 6시간 22분 |
| | 31 | 2011. 3. 7. | ▽▽ | 280 | 2,185 | 611,800 | 7시간 45분 |
| | 32 | 2011. 5. 16. | ▽▽ | 30 | 20,150 | 604,500 | 7시간 14분 |
| | | | ▽▽ | 530 | 15,500 | 8,215,000 | |
| | | | ▽▽ | 1,473 | 11,600 | 17,086,800 | |
| | | | ▽▽ | 616 | 5,530 | 3,406,480 | |
| | 33 | 2011. 5. 30. | ▽▽ | 5 | 1,280,000 | 5,640,000 | 4시간 9분 |
| | 34 | 2011. 6. 3. | ▽▽ | 40 | 2,905 | 116,200 | 6시간 29분 |
| | 35 | 2011. 6. 10. | ▽▽ | 30 | 223,500 | 6,705,000 | 2시간 14분 |
| | 36 | 2011. 6. 15. | ▽▽ | 10 | 13,200 | 132,000 | 5시간 43분 |
| | | | ▽▽ | 20 | 26,850 | 537,000 | |
| | | | ▽▽ | 4 | 45,700 | 182,800 | |
| | | | ▽▽ | 3 | 16,150 | 48,450 | |
| | | | ▽▽ | 6 | 2,810 | 16,860 | |
| | | | ▽▽ | 85 | 222,000 | 18,870,000 | |
| | 37 | 2011. 8. 12. | ▽▽ | 40 | 29,800 | 1,192,000 | 3시간 |
| | 38 | 2011. 8. 31. | ▽▽ | 114 | 87,800 | 10,009,200 | 9시간 4분 |
| | 39 | 2011. 9. 16. | ▽▽ | 120 | 4,890 | 586,800 | 1시간 20분 |
| | | | ▽▽ | 60 | 21,100 | 1,266,000 | |
| | | | ▽▽ | 300 | 20,900 | 6,270,000 | |
| | | | ▽▽ | 240 | 3,570 | 856,800 | |

자료: 한국에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당 매매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문책 대상자 ① 한국예탁결제원 ○○본부 ○○팀
○○○

② 한국예탁결제원 □□본부 □□팀
□□□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11. 3. 28.부터, □□□는 2011. 6. 7.부터 2011. 10. 31. 현재까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위 직에서 예탁대체 계좌 기획, 질권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3조 제 1항, 제304조 및 결제원 「내부통제규정」(2009. 5.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제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모집·매출 등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자기 명의’의 한 계좌만을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은 타인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목적으로 2000.

8. 30.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9. 2. 4⁷⁾부터 2011. 10. 27.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총 642회에 걸쳐 4,425백만 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최대투자액 80백만 원)하였다.

또한, □□□는 「내부통제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규제를 피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목적으로 2003. 10. 16. 개설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 2. 4.부터 2011. 9. 29.까지 126회에 걸쳐 1,682백만 원의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최대투자액 50백만 원)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결재원 「내부통제규정」 제14조에 위배된 것으로 결재원 「상벌규정」 제17조 제6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위 사람들을 한국예탁결제원 「상벌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극적 시장감시로 지능적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모 범 부 서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 시장감시1팀

모 범 내 용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3조와 「시장감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장감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 종목의 거래양태, 가격변동, 거래량 규모, 시세·거래관여도 및 품문 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 상위계좌의 시세·거래관여도 등 한국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매매데이터를 근거로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데이터에 근거한 시장감시 방법은 유사 투자자문업자¹⁾가 인터넷에 증권방송·카페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개설한 계좌를 연계하여 수행하는 지능적인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1)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지 않음

있다.

그런데 위 관서 시장감시1팀에서는 2011. 4. 14.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장감시업무를 하면서 전통적인 매매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증권사이트 등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시장의 매매양태를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투자자문업자가 증권방송·카페를 통해 위 종목을 추천하는 내용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투자자의 불만사항 등 시장 밖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분석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인 □□연구소장 ■■■■²⁾이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매수 추천한 종목이 매수추천 후 일시 상승하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데서 단서를 포착하고 감시대상 종목을 해당 증권방송에서 추천한 65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거래상위 계좌들 간의 연계성과 호가·시세판여도 등을 분석하는 한편 ■■■■의 증권방송 내용과 유료회원들의 매매방향성 및 주가의 흐름 등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기존 시장감시 활동과는 다르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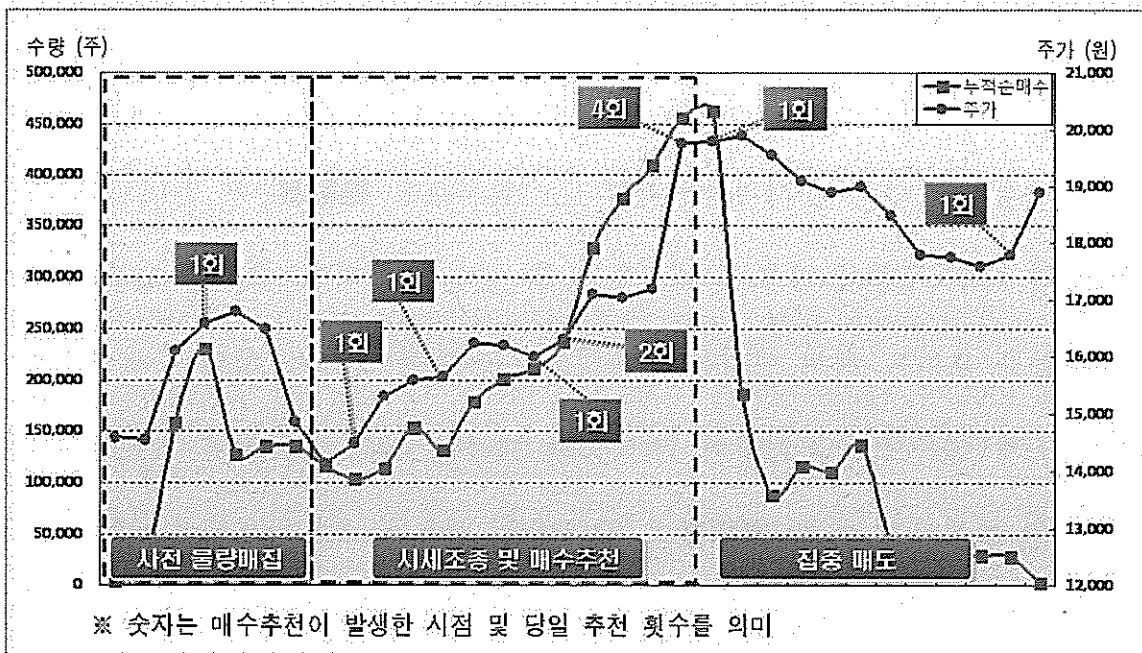
그 결과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이 운영하는 증권사이트의 유료회원(월평균 이용료 100여만 원)으로 구성된 연계계좌군(45명, 137개 계좌)이 ㉠㉡㉢ 등 5개 종목³⁾의 주식을 선매집한 후 연계계좌 간 종가조작, 가장·통정매매, 허수성 매매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은 시세상승기간 동

2) 2007년부터 ‘□□’라는 필명으로 <K&K>에서 증권 전문가로서 방송을 진행

3)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안 간헐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추천함으로써 시세조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아래 [사례] 참조)을 주면서, 주가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면 연계군의 보유주식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수추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매집물량이 고가에 매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114억여 원 상당의 부당 매매차익을 얻은 지능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그림] 참조)를 적발⁴⁾하였다.

[그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사례(㉠㉡)



[■ ■ ■ 이 실제 상황과 반대로 추천한 사례]

- 2011. 3. 3. ㉠㉡ 주식을 898,698주까지 보유한 후 매도하여 2011. 3. 25. 533,361주로 감소한 상태에서 2011. 3. 27. 22시 8분경 ■ ■ ■ 은 다음과 같이 방송

“ ~ 우리 방(카페, VIP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중략) 카페 회원들한테 15,000~16,000원에서 무조건 사라고 문자 드렸죠. 저를 믿고 따르시는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말로 해야 하나. 단기 목표가 21,0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는 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사람은 익일(월요일) 장중에 310,174주(약 5,870백만 원)를 순매도

4) 한국거래소는 2011. 7. 22. ■ ■ ■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융감독원에 통보

또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감시 활동을 계기로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증권사이트에 대한 현황(회원가입 규모, 월가입 회비 등)을 조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한국거래소 내부적으로 시장감시 세미나, 감시·심리 합동세미나 등을 통해 위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시장감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주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모 범 부 서 투자서비스본부 증권대행팀

모 범 내 용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에서 주권 발행회사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으로서 주주명부 작성·관리 등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유가증권의 발행·교부업무 등 유가증권 발행 대행업무 및 배당금 지급통지서 작성·발송 등 배당금 지급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등 발행회사와 결제원 사이에 체결한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에 따라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교부일에 증권회사의 거래계좌가 있는 주주의 주권(주식)은 증권회사로 입고시키고 거래계좌가 없는 주주의 주권(주식)은 주주가 청구했을 때 지급하며 미지급분(미수령주식)은 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 증권대행팀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휴면주식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¹⁾하

1)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캠페인 행사기간은 2009. 5. 1.~8. 31.(4개월), 2010. 7. 26.~9. 8.(7주), 2011. 8. 29.~9. 30.(5주)

면서 [표 1]과 같이 주주명부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지로 미교부 주식명세와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표 1] 연도별 미수령 주식 통지 현황

(단위: 명)

| 연 도 | 통지 기준 | 행정안전부에 주소의뢰하여 확인한 개인주주 | 실제 통지한 개인 및 법인주주 |
|-------|-------------------|---------------------------|---------------------|
| 2009년 | 50주 이상 보유자 | 6,281 | 6,281 |
| 2010년 | 주식시가 10만 원 이상 보유자 | 14,702 | 15,134 |
| 2011년 | 주식시가 5만 원 이상 보유자 | 16,026 | 15,609 |

주: 1. 2011년의 통지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 방문 시 발생하는 왕복 교통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
2.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에 주소의뢰한 후 캠페인 행사 전인 같은 해 7월과 8월에 주식을 교부한 주주는 제외하고 발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신문·방송사 등 언론을 활용하여 2009년 32회, 2010년 60회, 2011년 76회 보도자료 등으로 홍보를 하였고, 미수령 주식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미수령 주식을 확인·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 및 ☆☆은행 등 주식업무대행 기관에도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은행은 2010년 11월, ○○은행은 2011년 9월에 위 캠페인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혜자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2011년 캠페인 기간 중 평상시 홈페이지 주식조회시스템을 100라인에서 1,000라인으로 확대(179,863건 조회)하였고, 일반업무를 취급하는 상설창구 이외에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운영(5,945건 상담)하였으며 기존 채용한 인턴사원 6명을 활용하여 미수령 주식 전용창구를 설치함으로써 고객의 주권 교부처리 시간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까지 배려하였다.

그 결과 [표 2] 및 [사례]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권 교부일로부터 미수령 기간이 3년을 초과²⁾한 주주 계 1,704명(주식 수 30,918주)에게 94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찾아주는 등 주주들이 주식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휴면주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어 미수령 주식소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표 2] 연도별 캠페인 효과

(단위: 명, 주, 억 원)

| 연도 | 캠페인기간 중 총 교부실적 | | | 한국예탁결제원 보유기간 3년 이내 주권 교부실적 | | | 캠페인 효과 ²⁾ (한국예탁결제원 보유기간 3년 초과 주권 교부실적) | | |
|-------|----------------|---------|-------|----------------------------|---------|-------|---|--------|-----|
| | 주주 | 주식 | 시가 | 주주 | 주식 | 시가 | 주주 | 주식 | 시가 |
| 2009년 | 1,745 | 75,458 | 2,253 | 1,483 | 64,139 | 1,915 | 262 | 11,319 | 338 |
| 2010년 | 3,012 | 92,547 | 2,911 | 2,560 | 78,665 | 2,474 | 452 | 13,882 | 437 |
| 2011년 | 1,776 | 77,870 | 1,060 | 786 | 72,153 | 894 | 990 | 5,717 | 166 |
| 합계 | 6,533 | 245,875 | 6,224 | 4,829 | 214,957 | 5,283 | 1,704 | 30,918 | 941 |

주: 2011년은 실제 보유기간을, 2009년과 2010년은 보유기간 관련 자료가 없어 3년 초과 경험률(15%)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재구성

[사 례]

- 2011년 캠페인 기간 중 ☆☆☆(서울 양천구 거주)는 1982년(날짜 모름) □□주식회사 근무 당시 우리사주 600주를 구입한 후 주식소유 사실을 잊고 있다가 30년이 지나 결제원의 안내문을 받고 무상배당을 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여 120백만 원 상당의 주식 및 배당금을 수령

조치할 사항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2) 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82%, 3년 이내에 85%를 교부받는 등 3년 이내에 대부분을 찾아가므로 교부일로부터 3년 초과한 주권이 캠페인 기간 내에 교부되는 것은 미수령 주식 보유사실을 잊거나 모르고 있던 주주에게 재산을 찾아주거나 최소한 통상 주주의 주권 수령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원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및 제4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 수신을 위해 증권매매를 할 때 일정기간 경과 후 일정가격으로 해당 증권을 다시 매수(매도)하는 조건으로 투자매매업자와 일반법인 또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 제5-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¹⁾ 등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조건부매매 업무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건부매도증권을 보관·관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하고 있는 조건부매도증권 전부에 대하여 투자자 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하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여야 하며,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조건부매도증권의 시장가액을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이하 “의무예탁비율”이라 한다)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5-21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조건부매도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 예탁분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객분 조건부매도증권을 투자자 예탁분²⁾으로 예탁하도록 하면서 의무예탁비율을 둔 취지는 금융투자업자가 조건부매도증권을 환매수하지 못할 위험을 최소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조건부매매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조건부매매거래를 한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마감 후 또는 영업시간 중에도 조건부 매도증권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을 결제원에 예탁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조건부매매 거래를 하는 49개 금융투자업자가 매 영업일 영업마감 후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영업마감 후 의무예탁비율 미준수 명세”와 같이 □□□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2011. 3. 31. 영업마감 후 조건부매도증권 잔량(환매가액 5조 9,683억여 원)에 대하여 의무예탁비율 준수를 위해 6조 2,667억여 원(환매가액의 105%) 이상의 증권을 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2,294억여 원 적은 6조 372억여 원

2) 대고객 조건부매도증권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거래로서 해당 증권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보관·관리하며 매도자가 매도하여 결제원에 예탁한 경우 투자자 예탁분 계좌로 들어가고 해당 증권을 환매수한 경우 자기예탁분 계좌로 대체됨

상당의 증권만을 예탁³⁾하는 등 7개 금융투자업자는 총 53회(일자별 의무예탁 부족금액 계 2조 8,350억여 원)에 걸쳐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위 49개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시간 중에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결과, ☆☆☆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표 1]과 같이 2009. 4. 16.부터 2011. 10. 31.까지의 기간(영업일수 633일) 중 628일⁴⁾에 걸쳐 영업시작 전(7:00~09:00) 또는 영업시간 중에 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투자자 예탁증권 전액(최소 3,180억여 원, 최대 1조 2,971억여 원)을 임의로 자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영업마감(16:00) 이후에야 투자자 예탁계좌에 다시 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등 영업시간 중에는 사실상 투자자 자산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 1] ☆☆☆증권의 투자자 예탁증권 무단이체 현황

(단위: 일, 억 원)

| 구분 | 07:00~09:00 | | 09:00~10:00 | | 10:00~15:00 | | 15:00~16:00 | | 총계 | |
|-------|-------------|-----------|-------------|---------|-------------|--------|-------------|-------|-----|-----------|
| | 일수 | 대체금액 | 일수 | 대체금액 | 일수 | 대체금액 | 일수 | 대체금액 | 일수 | 대체금액 |
| 2009년 | 166 | 713,974 | 12 | 22,370 | 3 | 11,163 | 0 | 0 | 181 | 747,507 |
| 2010년 | 240 | 1,439,786 | 3 | 21,347 | 1 | 4,578 | 1 | 7,662 | 245 | 1,473,373 |
| 2011년 | 176 | 1,664,315 | 20 | 180,060 | 6 | 52,754 | 0 | 0 | 202 | 1,897,129 |
| 총계 | 582 | 3,818,076 | 35 | 223,777 | 10 | 68,495 | 1 | 7,662 | 628 | 4,118,012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더욱이 위 ☆☆☆증권은 [별표 2] “☆☆☆증권의 영업시간 마감 후 미예탁 명세”와 같이 2009. 7. 13.부터 2011. 9. 30.까지 5차례에 걸쳐서 투자자 예탁증권을 자사계좌로 전량 이체한 후 이를 다음 날 영업종료 후(18:00~21:00)에야 의무예탁비율만큼 예탁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3) □□증권은 익일 영업시작 전에 전일 조건부매도증권 환매수가액에 대하여 의무예탁비율만큼 예탁
4) 전일 증권을 예탁하지 않아 다음날 대체할 증권이 없는 경우인 5일 제외

경우에도 [표 2]과 같이 2011. 10. 4. 11:00에 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할 조건부매도 증권 2,255억 원의 10.43%(235억여 원)만 남겨놓고 2,390억 원(10:00의 예탁잔액 2,625억 원-235억 원)을 자사계좌로 대체한 후 16:00까지는 조건부매도증권 잔량의 8.96~10.43%만 결제원에 예탁하는 등 2010. 8. 2.부터 2011. 10. 28.까지의 기간(영업일수 311일) 중 [표 3]와 같이 조건부매도증권 잔량의 50% 이상 미달되게 예탁하고 있는 영업일이 257일, 90% 이상 미달되게 예탁한 영업일도 73일이나 되었다.

[표 2] ○○○증권의 시간대별 계좌 입의대체 현황(2011. 10. 4.)

(단위: 억 원, %)

| 구 분 | 7:00 ~8:00 | 8:00 ~9:00 | 9:00 ~10:00 | 10:00 ~11:00 | 11:00 ~12:00 | 12:00 ~13:00 | 13:00 ~14:00 | 14:00 ~15:00 | 15:00 ~16:00 | 16:00 ~17:00 | 17:00 ~18:00 | 18:00 ~ |
|--------------|---------------|---------------|----------------|-----------------|-----------------|-----------------|-----------------|-----------------|-----------------|-----------------|-----------------|------------|
| 예탁원예탁잔액(A) | 2,625 | 2,625 | 2,625 | 235 | 235 | 235 | 235 | 235 | 235 | 2,625 | 2,625 | 2,625 |
| 매도잔량시기(B) | 2,625 | 1,355 | 1,355 | 2,255 | 2,255 | 2,255 | 2,255 | 2,625 | 2,625 | 2,625 | 2,625 | 2,625 |
| 예탁비율(A/B) | 100 | 193.71 | 193.71 | 10.43 | 10.43 | 10.43 | 10.43 | 8.96 | 8.96 | 100 | 100 | 100 |
| 예탁부족액(C=A-B) | 0 | 1,270 | 1,270 | (2,020) | (2,020) | (2,020) | (2,020) | (2,390) | (2,390) | 0 | 0 | 0 |
| 예탁부족비율(C/B) | 0.00 | 93.71 | 93.71 | (89.57) | (89.57) | (89.57) | (89.57) | (91.04) | (91.04) | 0.00 | 0.00 | 0.00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제구성

[표 3] ○○○증권의 조건부 매도증권 부족 예탁 현황

(단위: 일, 억 원)

| 구분 | 50~70% 부족 | | 70~90% 부족 | | 90~100% 부족 | | 총계 | |
|-------|-----------|--------|-----------|---------|------------|---------|-----|---------|
| | 일수 | 금액 | 일수 | 금액 | 일수 | 금액 | 일수 | 금액 |
| 2010년 | 42 | 65,074 | 18 | 45,033 | 7 | 21,631 | 67 | 131,738 |
| 2011년 | 13 | 22,284 | 111 | 253,656 | 66 | 180,725 | 190 | 456,665 |
| 총계 | 55 | 87,358 | 129 | 298,689 | 73 | 202,356 | 257 | 588,403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제구성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조건부 매매거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마감 후 또는 영업시간 중 의무예탁비율만큼의 조건부 매매증권을 결제원에 예탁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조건부 매매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 예탁

증권 가액이 환매수가액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부도 및 파산 등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조건부매도증권 환매신청에 대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하면서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증권주식회사 등 9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등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하면서 투자자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예탁비율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영업마감 후 의무예탁비율 미준수 명세

(단위 : 백만 원, %)

| 번호 | 날 짜 | 투자매매업자명 | 환매가액(A) | 예탁금 평가액(B) | 의무예탁금액 (C=A×105%) | 의무예탁부족 금액(D=C-B) | 예탁비율 (B/A) | 의무예탁 미달비율(D/A) |
|----|-------------|---------|-----------|---------------|----------------------|---------------------|---------------|-------------------|
| 1 | 2010.10.1. | □□□증권 | 4,689,077 | 4,902,318 | 4,923,531 | 21,213 | 104.55 | 0.45 |
| 2 | 2010.10.8. | " | 4,839,524 | 5,027,148 | 5,081,501 | 54,353 | 103.88 | 1.12 |
| 3 | 2010.10.21. | " | 5,288,237 | 5,549,753 | 5,552,649 | 2,896 | 104.95 | 0.05 |
| 4 | 2010.10.25. | " | 5,294,508 | 5,553,967 | 5,559,233 | 5,266 | 104.90 | 0.10 |
| 5 | 2010.10.29. | " | 5,429,107 | 5,655,689 | 5,700,562 | 44,874 | 104.17 | 0.83 |
| 6 | 2010.11.9. | " | 5,606,017 | 5,885,606 | 5,886,318 | 712 | 104.99 | 0.01 |
| 7 | 2010.11.26. | " | 5,563,630 | 5,809,156 | 5,841,811 | 32,655 | 104.41 | 0.59 |
| 8 | 2010.12.24. | " | 5,840,945 | 6,129,322 | 6,132,992 | 3,670 | 104.94 | 0.06 |
| 9 | 2010.12.31. | " | 5,798,252 | 6,056,283 | 6,088,164 | 31,881 | 104.45 | 0.55 |
| 10 | 2011.1.12. | " | 5,794,553 | 6,064,849 | 6,084,281 | 19,432 | 104.66 | 0.34 |
| 11 | 2011.3.31. | " | 5,968,354 | 6,037,299 | 6,266,772 | 229,473 | 101.16 | 3.84 |
| 12 | 2011.4.18. | " | 6,057,492 | 6,244,438 | 6,360,367 | 115,929 | 103.09 | 1.91 |
| 13 | 2011.4.22. | " | 5,687,978 | 5,972,312 | 5,972,376 | 64 | 105.00 | 0.00 |
| 14 | 2011.4.29. | " | 5,630,256 | 5,811,290 | 5,911,768 | 100,478 | 103.22 | 1.78 |
| 15 | 2011.5.13. | " | 5,557,374 | 5,831,294 | 5,835,243 | 3,949 | 104.93 | 0.07 |
| 16 | 2011.5.31. | " | 5,366,668 | 5,557,169 | 5,635,001 | 77,832 | 103.55 | 1.45 |
| 17 | 2011.6.9. | " | 5,562,465 | 5,768,377 | 5,840,588 | 72,211 | 103.70 | 1.30 |
| 18 | 2011.6.10. | " | 5,380,740 | 5,542,785 | 5,649,777 | 106,992 | 103.01 | 1.99 |
| 19 | 2011.6.15. | " | 5,429,658 | 5,681,758 | 5,701,141 | 19,382 | 104.64 | 0.36 |
| 20 | 2011.6.20. | " | 5,398,911 | 5,619,863 | 5,668,856 | 48,993 | 104.09 | 0.91 |
| 21 | 2011.6.29. | " | 5,154,672 | 5,306,282 | 5,412,406 | 106,124 | 102.94 | 2.06 |
| 22 | 2011.6.30. | " | 4,882,873 | 5,020,861 | 5,127,016 | 106,156 | 102.83 | 2.17 |
| 23 | 2011.7.1. | " | 4,810,938 | 5,021,553 | 5,051,485 | 29,932 | 104.38 | 0.62 |
| 24 | 2011.7.7. | " | 4,812,097 | 5,017,216 | 5,052,702 | 35,486 | 104.26 | 0.74 |
| 25 | 2011.7.12. | " | 4,780,815 | 4,872,865 | 5,019,855 | 146,990 | 101.93 | 3.07 |
| 26 | 2011.7.21. | " | 4,934,923 | 5,081,512 | 5,181,669 | 100,157 | 102.97 | 2.03 |
| 27 | 2011.7.26. | " | 4,765,074 | 4,860,313 | 5,003,328 | 143,015 | 102.00 | 3.00 |
| 28 | 2011.7.29. | " | 4,912,593 | 5,155,924 | 5,158,223 | 2,299 | 104.95 | 0.05 |
| 29 | 2011.8.8. | " | 4,880,164 | 5,090,429 | 5,124,172 | 33,744 | 104.31 | 0.69 |
| 30 | 2011.8.9. | " | 4,896,701 | 5,130,955 | 5,141,536 | 10,581 | 104.78 | 0.22 |

| 번호 | 날 짜 | 투자매매업자명 | 환매가액(A) | 에탁금 평가액(B) | 의무에탁금액 (C=A×105%) | 의무에탁부족 금액(D=C-B) | 에탁비율 (B/A) | 의무에탁 미달비율(D/A) |
|----|-------------|---------|-------------|---------------|----------------------|---------------------|---------------|-------------------|
| 31 | 2011.8.11. | □□□증권 | 4,794,009 | 4,897,411 | 5,033,710 | 136,298 | 102.16 | 2.84 |
| 32 | 2011.8.23. | " | 4,944,063 | 5,093,580 | 5,191,266 | 97,686 | 103.02 | 1.98 |
| 33 | 2011.8.26. | " | 5,054,772 | 5,249,801 | 5,307,511 | 57,710 | 103.86 | 1.14 |
| 34 | 2011.8.30. | " | 4,909,167 | 5,132,141 | 5,154,625 | 22,484 | 104.54 | 0.46 |
| 35 | 2011.8.31. | " | 4,901,694 | 5,119,325 | 5,146,779 | 27,453 | 104.44 | 0.56 |
| 36 | 2011.9.8. | " | 5,044,213 | 5,208,385 | 5,296,423 | 88,038 | 103.25 | 1.75 |
| 37 | 2011.9.9. | " | 4,952,507 | 5,149,143 | 5,200,133 | 50,990 | 103.97 | 1.03 |
| 38 | 2011.9.15. | " | 4,931,545 | 5,079,580 | 5,178,122 | 98,542 | 103.00 | 2.00 |
| 39 | 2011.9.22. | " | 5,059,849 | 5,248,673 | 5,312,842 | 64,169 | 103.73 | 1.27 |
| 40 | 2011.9.27. | " | 4,983,504 | 5,109,767 | 5,232,680 | 122,913 | 102.53 | 2.47 |
| 소계 | 40회 | □□□증권 계 | 208,589,919 | 216,546,392 | 219,019,414 | 2,473,022 | | |
| 41 | 2010.12.23. | △△△투자 | 859,610 | 883,959 | 902,591 | 18,631 | 102.83 | 2.17 |
| 42 | 2011.4.8. | " | 843,614 | 875,423 | 885,795 | 10,372 | 103.77 | 1.23 |
| 43 | 2011.4.7. | " | 838,358 | 867,831 | 880,276 | 12,445 | 103.52 | 1.48 |
| 44 | 2011.1.25. | " | 839,529 | 880,019 | 881,506 | 1,487 | 104.82 | 0.18 |
| 소계 | 4회 | △△△투자 계 | 3,381,111 | 3,507,232 | 3,550,168 | 42,935 | | |
| 45 | 2011.6.2. | ◇◇◇증권 | 1,376,389 | 1,427,668 | 1,445,209 | 17,541 | 103.73 | 1.27 |
| 46 | 2011.6.29. | " | 1,329,908 | 1,345,349 | 1,396,404 | 51,054 | 101.16 | 3.84 |
| 47 | 2011.5.12. | " | 1,075,180 | 1,093,446 | 1,128,939 | 35,493 | 101.70 | 3.30 |
| 소계 | 3회 | ◇◇◇증권 계 | 3,781,477 | 3,866,463 | 3,970,552 | 104,088 | | |
| 48 | 2011.8.10. | ▮▮▮증권 | 2,192,573 | 2,290,939 | 2,302,201 | 11,263 | 104.49 | 0.51 |
| 49 | 2011.1.20. | " | 2,197,991 | 2,260,154 | 2,307,890 | 47,736 | 102.83 | 2.17 |
| 소계 | 2회 | ▮▮▮증권 계 | 4,390,564 | 4,551,093 | 4,610,091 | 58,999 | | |
| 50 | 2010.10.22. | ▯▯▯ | 3,035,500 | 3,186,403 | 3,187,275 | 872 | 104.97 | 0.03 |
| 51 | 2010.10.21. | " | 3,024,600 | 3,063,533 | 3,175,830 | 112,297 | 101.29 | 3.71 |
| 소계 | 2회 | ▯▯▯ 계 | 6,060,100 | 6,249,936 | 6,363,105 | 113,169 | | |
| 52 | 2011.1.20. | ▱▱▱증권 | 1,849,514 | 1,902,965 | 1,941,990 | 39,025 | 102.89 | 2.11 |
| 소계 | 1회 | ▱▱▱증권 계 | 1,849,514 | 1,902,965 | 1,941,990 | 39,025 | | |
| 53 | 2011.4.5. | ▴▴▴증권 | 81,038 | 81,274 | 85,090 | 3,815 | 100.29 | 4.71 |
| 소계 | 1회 | ▴▴▴증권 계 | 81,038 | 81,274 | 85,090 | 3,815 | | |
| 총계 | 53회 | | 228,133,723 | 236,705,355 | 239,540,410 | 2,835,053 | | |

자료: 한국에탁결제원 자료 제공

[별표 2]

☆☆☆증권의 영업시간 마감 후 미예탁 명세

(금액단위: 억 원)

| 번호 | 일자 | 구분 | 07:00 ~ 08:00 | 08:00 ~ 09:00 | 09:00 ~ 10:00 | 10:00 ~ 11:00 | 11:00 ~ 12:00 | 12:00 ~ 13:00 | 13:00 ~ 14:00 | 14:00 ~ 15:00 | 15:00 ~ 16:00 | 16:00 ~ 17:00 | 17:00 ~ 18:00 | 18:00 ~ 19:00 | 19:00 ~ 20:00 |
|----|----------------|----------|---------------------|---------------------|---------------------|---------------------|---------------------|---------------------|---------------------|---------------------|---------------------|---------------------|---------------------|---------------------|---------------------|
| 1 | 2009. 7.13. | 예탁잔액 | 3,66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3,368 | 3,303 | 3,366 | 3,364 | 3,362 | 3,359 | 3,349 | 3,470 | 3,477 | 3,535 | 3,535 | 3,535 | 3,535 |
| | | 예탁부족액 | 295 | (3,303) | (3,366) | (3,364) | (3,362) | (3,359) | (3,349) | (3,470) | (3,477) | (3,535) | (3,535) | (3,535) | (3,535) |
| | 2009. 7.14. | 예탁잔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790 | 3,790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3,422 | 3,398 | 3,395 | 3,392 | 3,391 | 3,387 | 3,384 | 3,526 | 3,589 | 3,628 | 3,628 | 3,628 | 3,628 |
| | | 예탁 부족액 | (3,422) | (3,398) | (3,395) | (3,392) | (3,391) | (3,387) | (3,384) | (3,526) | (3,589) | (3,628) | (3,628) | 162 | 162 |
| 2 | 2010. 5.13. | 예탁잔액 | 5,25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3,881 | 3,583 | 3,585 | 4,782 | 4,782 | 4,726 | 4,958 | 5,054 | 5,211 | 9,263 | 9,262 | 9,261 | 9,261 |
| | | 예탁 부족액 | 1,369 | (3,583) | (3,585) | (4,782) | (4,782) | (4,726) | (4,958) | (5,054) | (5,211) | (9,263) | (9,262) | (9,261) | (9,261) |
| | 2010. 5.14. | 예탁잔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78 | 5,278 | 5,278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7,862 | 3,820 | 5,006 | 5,085 | 4,981 | 4,974 | 4,975 | 5,095 | 5,173 | 5,219 | 5,219 | 5,219 | 5,219 |
| | | 예탁 부족액 | (7,862) | (3,820) | (5,006) | (5,085) | (4,981) | (4,974) | (4,975) | (5,095) | (5,173) | (5,219) | 59 | 59 | 59 |
| 3 | 2010. 5.24. | 예탁잔액 | 5,23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3,602 | 3,576 | 4,773 | 4,784 | 4,776 | 4,756 | 4,969 | 5,093 | 5,652 | 5,726 | 5,726 | 5,725 | 5,725 |
| | | 예탁 부족액 | 1,629 | (3,576) | (4,773) | (4,784) | (4,776) | (4,756) | (4,969) | (5,093) | (5,652) | (5,726) | (5,726) | (5,725) | (5,725) |
| | 2010. 5.25. | 예탁잔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02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5,582 | 3,453 | 4,775 | 4,771 | 4,769 | 4,756 | 4,628 | 5,078 | 5,083 | 5,141 | 5,140 | 5,140 | 5,140 |
| | | 예탁 부족액 | (5,582) | (3,453) | (4,775) | (4,771) | (4,769) | (4,756) | (4,628) | (5,078) | (5,083) | (5,141) | (5,140) | (5,140) | 62 |
| 4 | 2010. 5.31. | 예탁잔액 | 0 ⁽⁷⁾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4,933 | 3,283 | 3,258 | 4,846 | 4,837 | 4,836 | 4,836 | 4,882 | 4,919 | 4,982 | 4,982 | 4,982 | 4,982 |
| | | 예탁 부족액 | (4,933) | (3,283) | (3,258) | (4,846) | (4,837) | (4,836) | (4,836) | (4,882) | (4,919) | (4,982) | (4,982) | (4,982) | (4,982) |
| | 2010. 6.1. | 예탁잔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26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3,302 | 3,267 | 3,261 | 3,258 | 3,254 | 4,773 | 4,790 | 4,856 | 5,134 | 5,163 | 5,163 | 5,163 | 5,163 |
| | | 예탁 부족액 | (3,302) | (3,267) | (3,261) | (3,258) | (3,254) | (4,773) | (4,790) | (4,856) | (5,134) | (5,163) | (5,163) | (5,163) | 63 |
| 5 | 2011. 9.29. | 예탁잔액 | 11,467 | 11,46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12,194 | 11,592 | 2,486 | 3,484 | 3,483 | 7,680 | 10,987 | 10,936 | 11,109 | 11,434 | 11,434 | 11,434 | 11,434 |
| | | 예탁 부족액 | (727) | (125) | (2,486) | (3,484) | (3,483) | (7,680) | (10,987) | (10,936) | (11,109) | (11,434) | (11,434) | (11,434) | (11,434) |
| | 2011. 9.30. | 예탁잔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920 | 9,920 |
| | | 매도잔량시장가액 | 3,899 | 3,881 | 3,879 | 5,681 | 5,680 | 5,675 | 9,676 | 10,189 | 11,692 | 11,943 | 11,942 | 11,942 | 11,942 |
| | | 예탁 부족액 | (3,899) | (3,881) | (3,879) | (5,681) | (5,680) | (5,675) | (9,676) | (10,189) | (11,692) | (11,943) | (11,942) | (2,022) | (2,022) |

주: 7:00~08:00에 5,131억 원을 자기예탁분계좌로 대체함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제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¹⁾ 등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거래·예탁 관련 수수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94조, 제373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업무 및 증권 예탁·결제업무를 각각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별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체계”와 같이 거래 수수료(거래대금의 0.00329%)와 예탁·결제수수료(거래대금의 0.00133%)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10년 3월 금융위원회에 i) 거래소와 결제원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한 후 특정 연도에 수수료가 ‘최저보장 영업수익’을 초과할 경우 연말까지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거나 다음 해 수수료율을 더욱 낮추는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ii)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위 기관에서 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국거래소 등에서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전산에 대하여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수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를 심의²⁾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위원회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징수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iii) 절감 가능한 영업비용 및 영업외이익 등을 수수료 감축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도록 통보³⁾하였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거래소와 결제원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의 증권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수료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와 결제원에서 2010년 10월에서야 공동으로 컨설턴트법인 ◇◇◇에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⁴⁾을 발주한 후, 2010년에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각각 3,256억 원(영업이익률 41%), 1,301억 원(영업이익률 43%)의 과도한 수수료 수입 및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서도 위 연구용역을 핑계로 2010년 연말에는 아무런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⁵⁾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 처분요구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11년

2) 이에 따라 두 기관이 수익 감소로 연결되는 수수료 인하안을 자발적으로 시장효율화위원회에 부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

3) 증권거래 운영실태 감사결과(감사기간: 2009. 10. 29. ~ 같은 해 12. 3.), ① 금융위원회가 2010. 1. 4.부터 적용할 예정인 수수료 인하방안(각각 17.3%, 16.7%)이 위 2개 기관의 영업외이익 및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② 거래소와 결제원에도 최저보장 영업이익률, 영업외이익, 이익잉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일정기간 징수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4) “미래 경영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재무관리 방안”(계약기간: 2010. 11. 26. ~ 2011. 4. 25. 계약금액: 3억 원), 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의 경우 중·장기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약 28~33%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결제원의 경우 중·장기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약 25~3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수수료 통제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5)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1. 10. 24.과 같은 해 10. 27.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한시

10월 말까지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위 기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도록 통보하였을 뿐,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거래소와 결제원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후에도 수수료 인하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10년도에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원은 거래수수료를 각각 3,256억 원, 1,301억 원, 당기순이익을 각각 2,839억 원, 1,151억 원을 얻었고,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 수입 3,035억 원, 1,142억 원⁶⁾을 얻고 있다.

[표 1]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수입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 원, %)

| 구분 | 합계 |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
| | 거래소 | 예탁원 | 거래소 | 예탁원 | 거래소 | 예탁원 | 거래소 | 예탁원 | 거래소 | 예탁원 | 거래소 | 예탁원 | 거래소 | 예탁원 |
| 거래수수료 | 17,708 | 7,350 | 2,646 | 1,023 | 2,591 | 1,086 | 3,776 | 1,479 | 2,372 | 1,119 | 3,067 | 1,342 | 3,256 | 1,301 |
| 영업이익률 | 37.8 | 36.5 | 37.3 | 28.0 | 35.7 | 28.2 | 50.2 | 42.3 | 24.9 | 31.8 | 36.8 | 45.5 | 41.6 | 43.2 |
| 당기순이익 | 9,616 | 4,715 | 954 | 237 | 784 | 749 | 1,592 | 921 | 1,502 | 688 | 1,945 | 969 | 2,839 | 1,151 |

주: 1. 거래소와 예탁원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 40.1%

2. 영업이익률 합계는 6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편 유사업종인 증권·선물업의 최근 3년(2008~2010년) 평균영업이익률은 6.06%에 불과한데도 거래소와 결제원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 40.1%로 증권·선물업보다 약 5~6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시행
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거래소 34.3%, 결제원 23% 증가

또한, 과도한 수수료 수입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원의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도 [표 2]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에 비해 2.4배 내지 6배 많았다.

[표 2]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중은행 등의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 원, 명)

| 구분 | 2008년 | | | 2009년 | | | 2010년 | | |
|----------|-----------|--------|-----------------|-----------|--------|-----------------|-----------|--------|-----------------|
| | 당기 순이익 | 직원 수 |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 당기 순이익 | 직원 수 |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 당기순 이익 | 직원 수 |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
| 한국거래소 | 1,502 | 707 | 2.12 | 1,944 | 699 | 2.78 | 2,839 | 682 | 4.16 |
| 한국예탁결제원 | 688 | 450 | 1.53 | 969 | 459 | 2.11 | 1,151 | 471 | 2.44 |
| 시중은행(평균) | 8,865 | 14,744 | 0.60 | 6,645 | 14,788 | 0.45 | 10,085 | 14,041 | 0.72 |
| 증권회사(평균) | 1,143 | 2,647 | 0.43 | 2,025 | 2,749 | 0.74 | 1,887 | 2,779 | 0.68 |

주: 1. 시중은행은 ○○, ○○, ○○, ○○, ○○은행

2. 증권회사는 ■■■, ■■■, ■■■, ■■■, ■■■, ■■■, ■■■ 등 매출액 기준 상위 7개사

그리고 거래소는 위와 같은 과도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보다 약 12.3~16.2% 포인트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고, 배당금 총액도 3년간 평균 49.4% 증가하였다.

[표 3] 한국거래소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배당 현황

(단위: 억 원, %)

| 구분 | 2008년 | | | 2009년 | | | 2010년 | | |
|-----------|-----------|-----------|----------|-----------|-----------|----------|-----------|-----------|----------|
| | 당기 순이익 | 배당금 총액 | 배당 성향 | 당기 순이익 | 배당금 총액 | 배당 성향 | 당기 순이익 | 배당금 총액 | 배당 성향 |
| 한국거래소 | 1,502 | 529 | 35.2 | 1,945 | 674 | 34.7 | 2,839 | 812 | 28.6 |
| 유가증권시장 | 432,352 | 86,601 | 20.0 | 580,406 | 107,510 | 18.5 | 829,866 | 134,882 | 16.3 |
| 상장법인 증권회사 | 12,687 | 4,100 | 32.3 | 18,447 | 5,273 | 28.6 | 17,018 | 5,126 | 30.1 |

주: 1. 배당성향=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100

2. 2007년 한국거래소 배당금 총액은 327억 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배당금 총액은 139,162억 원(증권회사 7,099억 원)

자료: 한국거래소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7)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3년간 연평균 1% 감소

마련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체계(2011년 9월 말 기준)

가. 한국거래소

| 수수료 종류 | 시장 | 종목 | 징수기준 |
|-------------------------|--------------|--|---|
| 거래 수수료 ¹⁾ | 유가 증권 | 주식·수익증권 | 거래대금×0.00329% |
| | | 신주인수권 증권·증서 | |
| | | ETF ²⁾³⁾ ·ELW ²⁾ | |
| | 채권 | 국채 ⁴⁾ | 거래대금×0.0001265% |
| | | REPO ⁵⁾ | (거래수수료) 2,560원+0.00001536%×기간 (청산결제수수료) 400원+0.0000024%×기간 |
| | | 일반채권 ⁵⁾ | 거래대금×0.0051785% |
| | 코스닥 | 주식·수익증권 | 거래대금×0.00329% |
| | | 코스닥ETF | |
| | 선물 | KOSPI200선물 | 약정대금×0.00030364% |
| | | 주식선물 ⁶⁾ | 약정대금×0.0018981% |
| | | 3·5·10년 ⁶⁾ 국채선물 | 약정대금×0.000202% |
| | | 돈육선물 | 약정대금×0.0051874% |
| | | 미국달러선물 |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3818%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07636% |
| | | 엔선물 |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4025%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08051% |
| | | 유로선물 |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2738%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05476% |
| | | 금선물 |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7363%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14726% |
| | 옵션 | KOSPI 200 옵션 | 약정대금×0.012654% |
| | | 미국달러옵션 |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12654% (행사배정 시) 약정대금×0.0007636% |
| 상장 수수료 | 유가증권 | 상장수수료 | 상장금액, 상장자본금 등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체계를 가짐 |
| | | 연부과금 | |
| | 채권 | 상장수수료 | |
| | | 연부과금 | |
| | 코스닥 |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 |
| 정보 이용료 | 현물 및 지수선물 | 시세정보 등 원시정보 | 코스콤 원시정보 수익의 34.46% |
| | | 시세정보 등 가공정보 | 코스콤 가공정보 수익의 10% |
| | 상품선물 등 | 상품선물 및 지수라이선스 | KRX가 직접 판매한 수익 |

주: 1.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2010. 1. 4.)에 따라 청산결제수수료 포함(프로세스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 정액 징수)

2. 2005. 12. 1.부터 유동성공급자(LP) 거래수수료 면제(ETF, ELW, 저유동성 주식)

3. 2012. 1. 2.부터 2012. 12. 28.까지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ETF를 제외한 모든 ETF 수수료 면제

4. 2006. 7. 14.부터 장내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면제

5. 2010. 1. 1.부터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면제

6. 2006. 12. 18.부터 시장조성자 거래수수료 일부 환급(파생상품시장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품목)

자료: 한국거래소

나. 한국에탁결제원

| 수수료 | | 부과대상 | 기 준 | 요 율 | |
|--------------|-----------------|-------------|-----------------|---|--|
| 발행 서비스 | 증권대행수수료 | 위탁회사 | 자본금 | - 기본수수료 126만 원 ~ 7백만 원(개별수수료는 서비스별 차등 부과) | |
| | 채권등록수수료 | 발행회사 | 발행금액 | - 채권: 1억 원당 0.1만 원 ~ (최대 50만 원) | |
| | 파생상품발행대행수수료 | 발행회사 | 발행건 | - 발행 건당 1~3만 원 (타 대행은 1.5~4.5만 원) | |
| | 증권용지관리수수료 | 발행회사 | 용지별 발행매수 | - 주식: 214.1원 / 수익증권: 1,281.74원 - 신주인수권증서: 270.2원 | |
| 에탁 결제 서비스 | 증권회사수수료 | 증권회사 | 거래대금, 결제건수 | - 주식: 0.1333/10,000(신주인수권증서, ELW, ETF, KDR 포함) - 채권: 0.0171/10,000 - 결제 건: 건당 5백 원 | |
| | 에탁수수료 | 에탁자 | 일별 계좌잔량, 계좌대체건수 | - 주식: 주당 0.00125원~0.00075원(액면 5천 원당 1주) - 채권: 1만 원당 0.00125원~0.00075원(CP, DR, ETF 포함) - 계좌대체 건: 건당 1천 원(인도 측만 부과) | |
| | 주식워런트증권수수료 | 에탁자 | 발행금액 | - 납입금액의 1/10,000 | |
| | 금보관수수료 | 임치인 | 일별보관잔량 | - 1kg당 1천 원~150원 - 참고증권발행 시: 1매당 2.5천 원 | |
| | 보호예수수수료 | 보호예수 의뢰인 | 일별보관잔량 | - 기본수수료: 의뢰 건당 1백 원 - 주식: 주당 0.01원(액면 5천 원당 1주) - 채권: 1만 원당 0.01원 | |
| | 국내교환주식관리수수료 | 발행회사 | 발행금액 | - 교환사채 총액의 5/10,000 | |
| | 의결권행사수수료 | 에탁자 | 행사 건수 | - 상임대리인: 신청 건당 15만 원+외국인 주주별 1만 원 - 발행회사: 신청 건당 10만 원 - 전자투표: 1억 원당 2만 원~0.5만 원 | |
| | 정보이용수수료 | 정보이용자 | 상품별 제공정보 | - 주식정보: 50만 원~150만 원/월 - 채권정보: 50만 원~100만 원/월 | |
| | 기관투자자채권결제수수료 | 채권결제참가자 | 거래대금 | - 1억 원당 20원~100원 | |
| 파생 거래 지원 서비스 | 대차중개수수료 | 차입자, 대여자 | 대차수수료 | - 대차수수료의 2%(수수료가 1% 이하일 경우 대차중개가격의 2/10,000) | |
| | 대용증권관리수수료 | 선물회원 | 대용가액 | - 매 영업일 대용가액 1억 원당 220원 | |
| | 조건부매매(Repo) 수수료 | 매매참가자, 중개회사 | 거래대금 | - 기관 Repo: 1억 원당 20원 - 대고객 Repo: 1억 원당 2원 (거래기간 1일 미만은 1억 원당 10원) | |
| | 담보콜거래관리수수료 | 차입자, 대여자 | 거래대금 | - 1억 원당 20원 | |
| | 장외파생상품담보관리 수수료 | 담보권자·설정권자 | 담보관리금액 | - 1억 원당 일별 20원(정부정책 참가자 1억 원당 2원) | |
| | 고객담보관리수수료 | 담보권자 | 담보증권가액 | - 연간 3/10,000 | |
| 국제 투자 지원 서비스 | 해외 증권 관리 수수료 | 교환주식관리 | 발행회사 | 발행금액 | - 1천만 \$ 이상: 연간 1/10,000 - 1천만 \$ 미만: 연간 1천 \$ |
| | | 외화증권 관리 수수료 | 발행사, 권리행사자 | 정액 | - 연간 3백만 원 |
| | | 오프라인 | 기관투자자 | 일별잔량 | - 주식: 월평균 시장가치의 3/10,000 - 채권: 월평균 액면가치의 2/10,000 |
| | | HTS | 증권회사 | 결제건수 | - 건당 5.5\$ |
| | KDR업무수수료 | 발행회사, 투자자 | 발행금액/ 증서 수 | - 발행수수료: 증서당 3원~16원 - 전환해지수수료: 1DR당 30원~50원 | |
| | DR관리수수료 | 해외에탁기관 | DR발행 및 해지수수료 | - 해외에탁기관 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 징수(BONY, JP MORGAN: 16%, 도이치: 20%, CITI: 250만 \$까지 20%, 초과분은 10%) | |
| | Custody수수료 | 외국법인투자자 | 보관잔량, 의결권행사 건수 | - 보관수수료: 1억 원당 연간 0.002/10,000~0.7/10,000 - 매매결제수수료: 1억 원당 0.005\$~1.5\$ - 권리행사수수료 : 건당 30\$~50\$ | |
| | 집합 투자 지원 서비스 | 펀드결제수수료 | 집합투자기구 | 신탁원본액 | - 연간 0.25/10,000 |
| 일반사무관리수수료 | | 집합투자기구 | 순자산 총액평잔 | - 연간 0.4~25/10,000 | |

자료: 한국에탁결제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해외주권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글로벌 거래소 및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해외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소(이하 “☆☆☆”라 한다)에 원주가 상장(2009년 9월)된 <<국가 기업인 ‘○○’ (이하 “○○”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예탁증서(Korea Depositary Receipts, 이하 “KDR”이라 한다)를 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에 2차 상장시키는 등 2011년 10월 말 현재 19개 외국기업(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 시장 14개)을 상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2011. 3. 21. ☆☆☆에 상장된 ○○의 원주 가격이 장중에 24% 급락하여 같은 날 장 마감 후 원주와 KDR 간의 가격괴리율이 45.37%(원화환산 원주 증가 3,367원, KDR 증가 4,895원)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는 같은 날 18시 4분 당일 주가급락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에 요구하였고, ○○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같은 날 19시 33분 원주에 대한 매매거래중단(trading halt)¹⁾을 ☆☆☆에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모두 ☆☆☆의 공시시스템(☆☆☆NET)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되었다.

한편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서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 및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소는 같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공시되지 않은 풍문 및 보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풍문 및 보도가 없더라도 주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변한 경우 미공개된 중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장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거래소는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이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장감시부서, 풍문 및 보도자료 등 수집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 권한 등이 부여된 취지는 거래소가 상장기업의 공시에만 의존하여 시장을 관리할 경우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해태하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한국거래소와 달리 ☆☆☆거래소 공시규정 43조에 따르면 동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은 즉시 비정상적인 거래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에 매매거래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기업의 매매거래중단 요청을 모두 승인하는 것이 관행임(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 상장법인의 매매중단요청 63건이 모두 승인됨)

그런데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주된 사업장 및 거래처, 현지 법률에 따른 감독당국 등이 해외에 소재하고 주요 경영진 및 공시책임자 등이 국내 공시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공시의무 위반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언론 등을 통해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풍문, 보도내용 등을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과 같이 2차 상장방식으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원주 가격이 해외 거래소에서 이상 급락했을 때에는 KDR 가격도 연이어 급락하거나 국내에 미공개된 정보가 현지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거래소는 ○○ 원주의 주가변동 및 이에 따른 ☆☆☆의 ○○ 관련 공시사항 및 현지 언론보도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으로 ○○이 공시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 원주가 ☆☆☆에서 매매거래 중단된 사실을 ☆☆☆ 공시시스템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에 대한 시장정보 수집을 국내 언론 및 풍문 등에만 의존해 온 결과, 2011. 3. 22. 9시 50분에 ○○의 국내 공시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²⁾받을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0시에서야 뒤늦게 ○○ KDR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그 결과 ☆☆☆자산운용주식회사 등 12개 기관투자가 등(29개 계좌)은 같은 날 장 개시 후 1,819,577주(77억 877만 원)의 ○○ KDR을 순매도하여 같은 날 9시 44분에 하한가(4,165원)까지 주가가 급락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은 ☆☆☆에서

2) 2011. 4. 14.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요청 사실을 지연공시한 ○○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

원주의 매매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매수하게 되는 등 같은 날 10시까지 총 4,039,038주가 거래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 22. 위 KDR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장기간 매매거래정지³⁾로 인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상장폐지⁴⁾에 따른 금전적 피해(매입가액-상장폐지 시 정리매매가액)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권기업의 공시 지연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은 ☆☆☆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 자회사(△△)의 장부상 은 행잔고 내역의 실제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아 감사결과보고서가 확정될 때까지 위 매매거래중단을 매매거래정지(trading suspension)로 전환해줄 것을 2011. 3. 24. ☆☆☆에 요청

4) ○○은 2011. 10. 24.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음에 따라 거래소에서는 ○○ KDR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1. 2. ○○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2. 3. 15.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규정」 제6조 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8의 규정에 따라 회원사(증권·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주문·호가 및 체결내역 등을 감시·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게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출된 주문행위에 대하여 사전경고,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¹⁾를 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장감시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회원사가 거래소의 시장감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이하 “감리”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는 거래소가 허수성 매매주문²⁾, 통정·가장거래³⁾ 등과 같은 불공

1) 반복적출 시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 예고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문수탁을 거부하도록 하고, 직전 조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적출되지 않은 계좌는 최초 적출부터 다시 적용

2)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평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정거래 행위의 적출기준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설정⁴⁾하고 투자자의 주문행위를 가장 가까워서 인지할 수 있는 회원사로 하여금 예방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사전 예방수단이다.

하지만 회원사의 경우 투자자의 주문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되더라도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거래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회원사 업무에 대한 감리활동을 수행하면서 위 모니터링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적출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장감시 활동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거래소는 회원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에 최근 3년간 회원사로부터 수탁거부된 사실이 있는 증권거래계좌에 대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내역과 회원사의 조치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총 2,840명이 86,77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되었는데도 이 중 약 19.9%인 17,246건에 대해서만 예방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4) 허수성 매매주문, 가장·통정성 매매주문, 예상가 관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16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적출기준을 설정함
5) 이상거래가 적출된 종목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를 심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

[표 1] 최근 3년간 수탁거부 계좌 중 모니터링 시스템 적출 대비 예방조치 실적

(단위: 명, 개, 건, %)

| 총 적출인원(A) | 계좌 수(B) | 1인 평균 계좌 수(B/A) | 적출건수(C) | 조치건수(D) | 조치율(D/C) |
|-----------|---------|-----------------|---------|---------|----------|
| 2,840 | 3,919 | 1.38 | 86,777 | 17,246 | 19.9 |

주: 2008. 9. 1. ~ 2011. 9. 30. 사이에 수탁거부된 계좌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한국거래소

그리고 위 2,840명 중 [표 2]와 같이 허수성 매매주문, 통정·가장거래 등의 사유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200회 이상 적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감사일 기준 최근 6개월간(2011. 4. 1.~9. 30.)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29명의 투자자가 3,885회에 걸쳐 75억여 원의 허수성 매매주문을 내거나 1,370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가장거래하는 등 시장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최근 3년간 수탁거부자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적출 건수별 현황

(단위: 명)

| 적출 건수 | 300회 이상 | 200회 이상~ 300회 미만 | 100회 이상~ 200회 미만 | 10회 이상~ 100회 미만 | 10회 미만 | 계 |
|-------|---------|---------------------|---------------------|--------------------|--------|-------|
| 인원 | 4 | 25 | 121 | 1,866 | 824 | 2,840 |

자료: 한국거래소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복 적출자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부실이 확정되면 부실 정도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이 확정되기 전에 부실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2011. 5. 2. 투자주의 환기종목(이하 “투자주의종목”이라 한다)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외 부적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별표 3]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부실점수를 산출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임계(한계) 부실점수를 초과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투자주의종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및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을 기초로 상장유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이하 “상장폐지 실질심사”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각 제도의 운영 취지 및 효과 또한 다르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기업이라도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의 임계 부실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실위험요인을 해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2011. 4. 28. ‘투자주의환기종목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코스닥 상장기업 1,011개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 등에 의해 산출된 임계 부실점수를 300점으로 정한 후 같은 해 5. 2. 이를 초과한 43개 1) 부실위험기업을 선정한 후, 이 중 주식회사 ㉠○○ 등 2개 기업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라 부실점수가 높게 산출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경우 부실점수가 496점(부실순위 46위)으로 위 임계 부실점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5개 연도 연속 영업손실²⁾이 발생(2010년 영업손실액 57억여 원, 매출액 72억여 원)하는 등 부실 위

1) 임계 부실점수 300점을 초과한 89개 기업 중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32개)되거나 상장폐지(14개)되어 투자주의종목 지정 실익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수치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당연 상장폐지 사유

험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0. 12. 17.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실질심사³⁾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상종목⁴⁾인 중견기업부로 분류하는 등 [표 1]과 같이 2010. 8. 16.⁵⁾부터 2011. 4. 27.까지 실시한 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8개 기업은 부실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상장유지 결정 사유로 투자주의종목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명세

(단위: 점, 위)

| 기업명 | 실질심사 종료일 | 부실위험점수 (부실 순위) | 기업명 | 실질심사 종료일 | 부실위험점수 (부실 순위) |
|----------|---------------|-------------------|----------|---------------|-------------------|
| 주식회사 ㉠〇〇 | 2010. 8. 16. | 421 (55) | 주식회사 ㉠〇〇 | 2010. 12. 14. | 341 (72) |
| 주식회사 ㉠〇〇 | 2010. 9. 15. | 380 (59) | 주식회사 ㉠〇〇 | 2010. 12. 14. | 323 (83) |
| 주식회사 ㉠〇〇 | 2010. 11. 3. | 384 (58) | 주식회사 ㉠〇〇 | 2010. 12. 17. | 496 (46) |
| 주식회사 ㉠〇〇 | 2010. 11. 10. | 424 (54) | 주식회사 ㉠〇〇 | 2011. 3. 24. | 347 (66) |

주: 부실순위는 코스닥 상장기업 1,011개 중 부실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 것으로 관리종목지정 기업과 상장폐지 기업이 포함된 순위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

2.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외규정 불합리

한편 거래소에서는 2011. 3. 2.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관리종목 지정의 사전 예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해 4. 28. 투자주의종목을 지정하면서 임계 부실점수 300점을 초과

에 해당하지만 부칙(2006. 9. 29., 제194호)에서 2013년부터 적용토록 규정

- 3) 2010. 6. 29.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받고 같은 해 12. 17. 5개 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예상(2010년 10월 말 기준 44억여 원 적자)되는 상황이었지만 최대주주 변경 등을 통해 기존의 분식회계한 경영진이 퇴진하여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장유지하기로 결정
- 4) 코스닥 상장기업 중 부실의 정도에 따라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먼저 분류하고 나머지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로 구분
- 5) 반기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2010. 8. 15. 기준으로 이후에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

한 부실위험기업 89개의 상장주식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32개 종목을 제외하였다.

그런데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시기는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어 확인된 날의 익일로 되어 있고,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 시기는 일률적으로 당해 연도 5월 최초 매매일(이하 “정기지정일”이라 한다)로 정한 후 그 효과가 1년간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서 제외된 기업은 다음 정기지정일 이전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시 검토한 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가 부실위험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리종목을 투자주의종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이 투자주의종목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1. 5. 2.부터 같은 해 10. 30.사이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중견기업부 등 정상종목으로 편입된 5개 기업이 해제 당시 투자주의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상사(대표이사 △△△)의 경우 같은 해 5. 14. 법원에 접수(같은 해 4. 27.)된 파산신청이 기각되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으나 부실위험점수가 334점(같은 해 4. 28. 기준, 이하 같

다)으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정상기업(중견기업부)으로 분류하는 등 [표 2]와 같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주식회사 ㉔〇〇 등 4개 기업이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정상종목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표 2]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 현황

(단위: 점, 위)

| 구분 | 기업명 | 부실위험점수 (부실순위) | 관리종목 | | 관리종목 해제 후 분류 |
|---------|----------|------------------|--------------|----------------|-----------------|
| | | | 해제일 | 해제사유 | |
| 300점 이상 | 주식회사 ㉔〇〇 | 818(8) | 2011. 9. 16. | 매출액 미달 사유 해소 등 | 중견기업부 |
| | 주식회사 ㉔〇〇 | 693(24) | 2011. 9. 8. | 자본잠식률 해소 | 중견기업부 |
| | 주식회사 ㉔〇〇 | 552(35) | 2011. 9. 28. | 상장폐지사유 해소 | 중견기업부 |
| | 주식회사 ㉔〇〇 | 334(74) | 2011. 5. 14. | 파산신청 기각 | 중견기업부 |
| 300점 이하 | 주식회사 ㉔〇〇 | 47(705) | 2011. 6. 30. | 거래실적부진 해소 | 중견기업부 |

주: 부실순위는 코스닥 상장기업 1,011개 중 부실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함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

위 “1~2항”의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되거나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부실위험 기업이 정상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등 투자자에게 부실위험을 적시에 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도 일탈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기업이나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이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0>

재 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2012. 4.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낭비 관행을 철저히 검사하고, 국가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1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 결산의 검사를 통해 예산낭비 관행,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점검하고, 금년부터 결산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재무제표에 대

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낮게 설정하였는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2. 3. 5.부터 같은 해 3. 16.까지(10일간) 감사인원 18명(회계사 7명 포함)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4. .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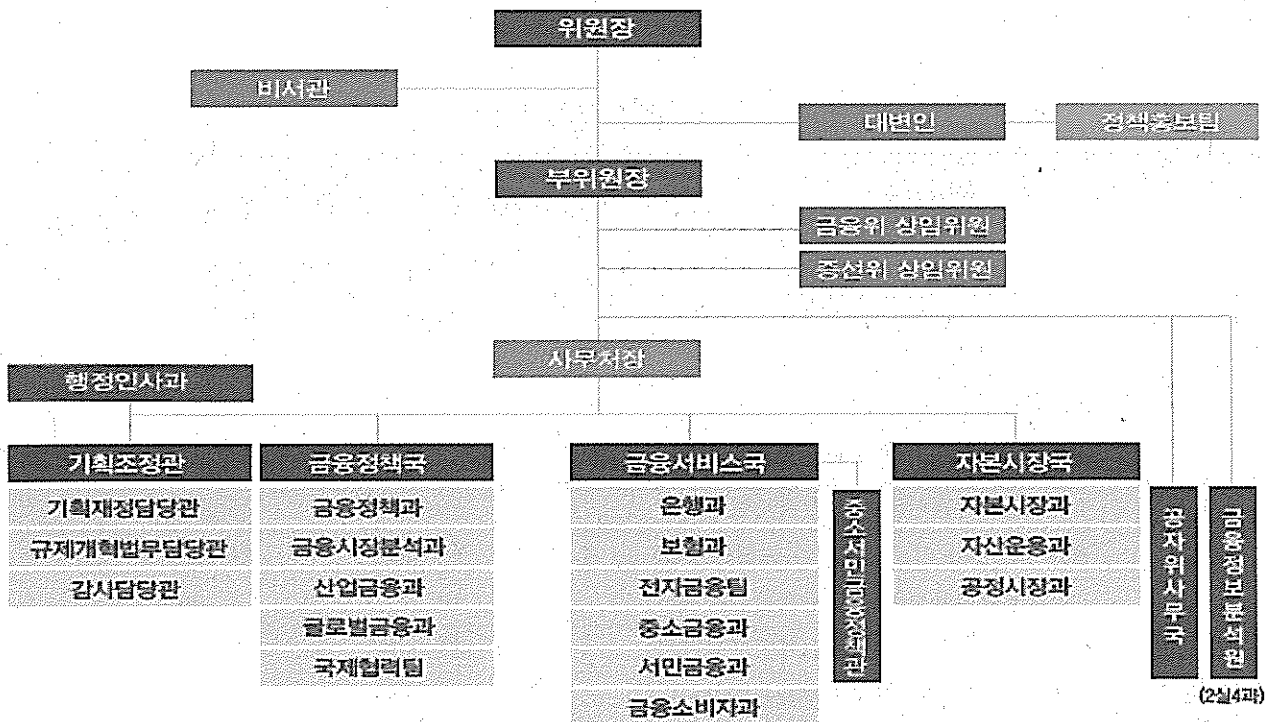
1. 일반 현황(2011. 12. 31. 현재)

가. (금융위)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¹⁾ 등 총 9인으로 구성

나. (중선위)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6과 3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한시조직으로 공자위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1)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2011. 12. 31. 현재)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경찰)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3 | 234 | 2 | 2 | 6 | 6 | 196 | 195 | 7 | 7 | 1 | 1 | 11 | 11 | 10 | 12 |
| 본 부 | 169 | 171 | 2 | 2 | 6 | 6 | 143 | 143 | - | - | 1 | 1 | 7 | 7 | 10 | 12 |
| 공자위 사무국 | 12 | 12 | - | - | - | - | 11 | 11 | - | - | - | - | 1 | 1 | - | - |
| 금융정보분석원 | 52 | 51 | - | - | - | - | 42 | 41 | 7 | 7 | - | - | 3 | 3 | - | -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2.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31조 7,567억 원 (일반회계 1조 5,556억 원, 기금 30조 2,01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6% 감소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1조 4,494억 원으로 전년도에 위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 3조 32억 원보다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계구분 | | 2010 예산 | 2011 예산 | 증감률 |
|------|----------------------|---------|---------|-------|
| 일반회계 | | 31,464 | 15,556 | △50.6 |
| 기금회계 | 소 계(관리주체) | 549,183 | 302,011 | △45 |
| | 공적자금상환기금(금융위) | 193,291 | 24,685 | △87.2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위) | 1,569 | 1,542 | △1.7 |
| |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42,206 | 46,245 | 9.6 |
| |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 20,821 | 25,067 | 20.4 |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협중앙회) | 15,736 | 24,406 | 55.1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 14,577 | 14,709 | 0.9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 132,668 | 80,691 | △39.2 |
| |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21,899 | 28,914 | 32.0 |
| | 구조조정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06,416 | 55,752 | △47.6 |
| 총 계 | | 580,647 | 317,567 | △45.3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1조 5,556억 원 중 [표 3]과 같이 회계기금 간 거래 1조 4,525억 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연금 등 684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사업금액은 34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38억 원으로 전체의 68.5%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09억 원)한다.

[표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 일 반 회 계 | 15,556 |
|--------------------|----------------------|
| ■ 인 건 비 | 163 |
| ■ 기 본 경 비 | 75 |
| ■ 주 요 사 업 비 | 793 (좌측금액 합은 684)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 |
|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 |
| ■ 회계기금 간 거래 | |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
| - IBRD차관 원금 상환 | |
| - IBRD차관 이자 상환 | 14,525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금융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말 자산은 [표 4]와 같이 35조 6,207억 원, 부채는 79조 4,413억 원으로 순자산은 -43조 8,206억 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는 4조 7,825억 원, 비교환 수익 등은 3조 5,367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조 2,458억 원이다.

본 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35조 6,207억 원으로 전년도의 43조 2,046억 원보다 7조 5,839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등이 3,599억 원 증가하였으나, 장기금융상품 등의 투자자산이 7조 8,710억 원(-34.4%)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부채는 79조 4,413억 원으로 전년도의 81조 7,577억 원 보다 2조 3,164억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장기충당부채 등이 3조 5,74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장기차입부채가 5조 6,598억 원(-7.6%)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4]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억 원, %)

| 구 성 | 구 분 | 2010 | 2011 | 전년 대비 증감(Δ) | |
|---------|---------------|----------|----------|-------------|--------|
| | | | | 금액 | 비율 |
| 재 상 정 태 | 자 산 | 432,046 | 356,207 | Δ75,839 | Δ17.6% |
| | 부 채 | 817,577 | 794,413 | Δ23,164 | Δ2.8% |
| | 순 자 산 | Δ385,531 | Δ438,206 | Δ52,675 | Δ13.7% |
| 재 운 정 영 | 재 정 운 영 순 원 가 | 26,526 | 47,825 | 21,299 | 80.3% |
| | 비 교 환 수 익 등 | 30,425 | 35,367 | 4,942 | 16.2% |
| | 재 정 운 영 결 과 | Δ3,899 | 12,458 | 16,357 | 419.5% |
| 순 자 산 등 | 기 초 순 자 산 | Δ438,438 | Δ393,245 | 45,193 | 10.3% |
| | 기 말 순 자 산 | Δ385,531 | Δ438,206 | Δ52,675 | Δ13.7%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4. 2011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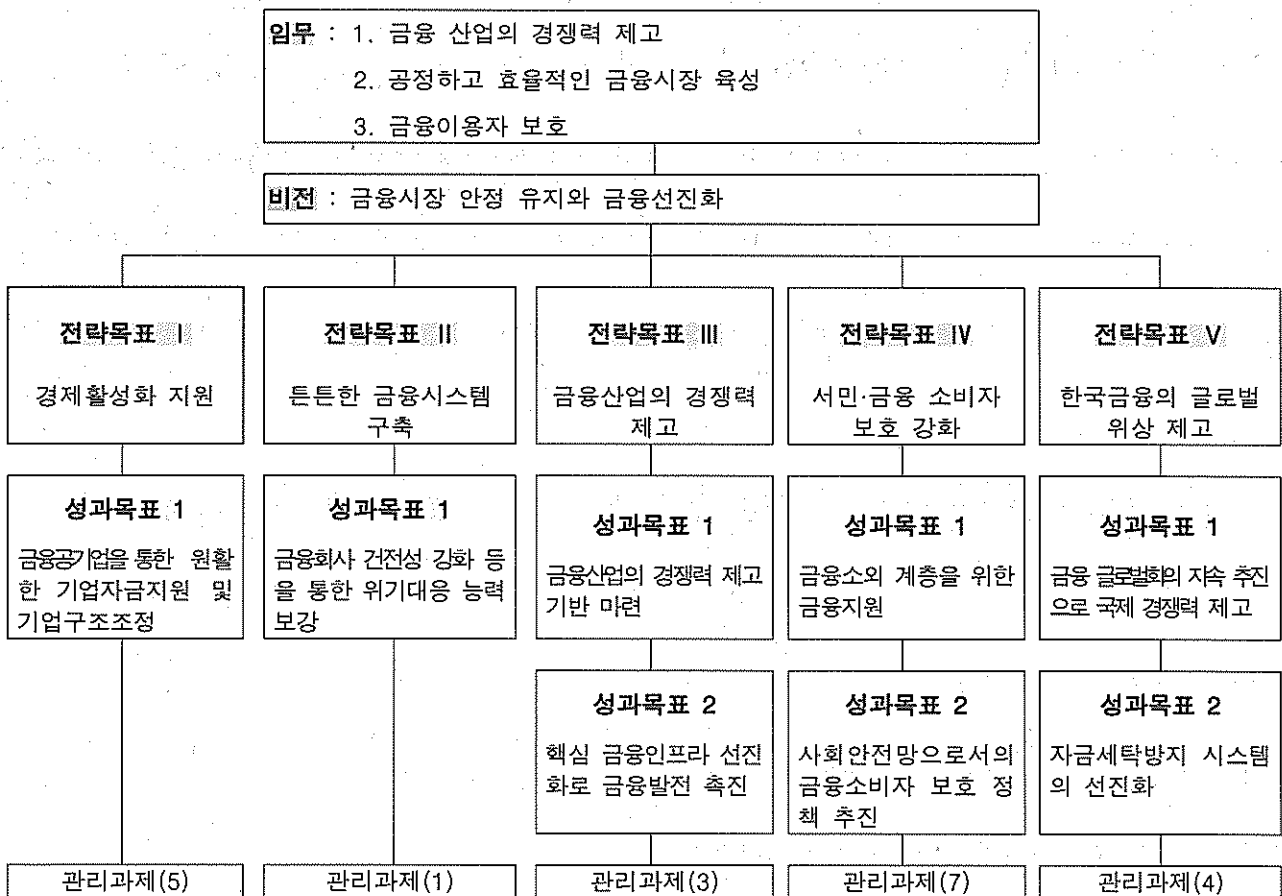
가. 임무 및 비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와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5개의 전략목표, 8개의 성과목표, 20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39개, 계 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2011. 6. 27. OOOO연구원과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11. 6. 27. ~ 9. 26. 계약금액: 1,500만 원)을 체결하고 최종보고서 100부를 같은 해 9. 26.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위 연구원 등과 총 18개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구용역 계약의 「과업지시서」와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제4조 및 제7조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보고서의 최종 내용을 확정하여 최종보고서 파일과 인쇄본 일체를 제출받은 후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출 기한까지 최종보고서 일체를 작성,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연장된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연구’ 용역계

약의 경우 보고서 최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OOOO연구원에서 보고서 제출기한인 2011. 9. 26.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 없이 위 연구원에서 같은 해 12. 18. 최종보고서 초안의 컴퓨터 파일과 인쇄본 10부를 제출하자 같은 해 12. 21. 위 연구원에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표]와 같이 총 6개의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보고서 인쇄본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연구개발비 1억 6,500만 원을 같은 해 2011. 12. 16.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위 연구원 등 용역수행기관에 미리 지급하였다.

[표] 연구용역 대금 선지급 현황

(단위: 만 원, 부)

| 과제명 | 계약 상대방 | 계약 체결일 | 대금 | 결과물 제출기일 | 대금 지급일 | 인쇄물 부수 | 최종보고서 인쇄물 수령일자 |
|--|----------------|------------------|--------|------------------|------------------|--------|---------------------------------------|
|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연구 | OOOO 연구원 | 2011. 6. 27. | 1,500 | 2011. 9. 26. | 2011. 12. 21. | 100부 | 2011. 12. 18.(10부) 90부 미수령 |
|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 관련 주요 검토사항 | OOOO 연구원 | 2011. 10. 27. | 3,000 | 2011. 12. 19. | 2011. 12. 28. | 100부 | 100부 미수령 |
|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 연구 | OOOO 연구원 | 2011. 10. 25. | 3,000 | 2011. 12. 15. | 2011. 12. 16. | 100부 | 2012. 3. 9.(100부) |
| 금융회사 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 OOOO 연구원 | 2011. 10. 19. | 3,000 | 2011. 12. 16. | 2011. 12. 21. | 100부 | 2012. 3. 7.(10부) 2012. 3. 13.(90부) |
| SIFI 규제 국내 제도화 방안 연구 | OOOO 연구원 | 2011. 10. 19. | 3,000 | 2011. 12. 20. | 2011. 12. 28. | 50부 | 2012. 3. 7.(10부) 2012. 3. 13.(40부) |
| 부동산개발금융 제도 개선방안 연구 | OO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1. 10. 26. | 3,000 | 2011. 12. 23. | 2011. 12. 26. | 50부 | 2012. 3. 7.(10부) 2012. 3. 13.(40부) |
| 합계 | | | 16,50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6개 연구용역 중 4개는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감사원 감사기간(2012. 3. 5. ~ 3. 16.) 중인 2012. 3. 7.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제출받았고, 나머지 2개의 최종보고서는 감사종료일까지도 제출받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과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약정에 어긋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보고서 일체를 제출받지 않고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계약 업체에서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별표 1]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와 같이 임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와 비전 “금융시장 안정 유지와 금융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0개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39개 등 계 5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원회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0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가 32개(64%), 초과 달성한 지표가 13개(26%), 목표치에 미달한 지표가 5개(10%)로서 [표]와 같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성과지표가 45개로 전체적으로 90%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표] 전략목표 달성 현황

(단위: 억 원, %, 개)

| 전략목표 | 사업규모 | 성과지표 실적 |
|------|------|---------|
|------|------|---------|

| | 예산 | 결산 | 집행률 | 달성/전체 | 달성률 |
|--------------------|--------|--------|------|-------|-------|
| I. 경제활성화 지원 | 39,856 | 34,676 | 87.0 | 13/14 | 92.9 |
|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50,000 | 17,698 | 35.4 | 2/2 | 100.0 |
|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17 | 15 | 87.6 | 6/8 | 75.0 |
| IV.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4,375 | 4,339 | 99.2 | 15/16 | 93.8 |
|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 77 | 75 | 97.6 | 9/10 | 90.0 |
| 총계 | 94,326 | 56,803 | 60.2 | 45/50 | 90.0 |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기획재정부 「201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III-2-(5)에 따르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각각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며,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를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II-1. 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는 위 지침 등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응하는 각종 실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2. 3. 5. ~ 3. 16.) 중 위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가. 성과지표를 중복하여 사용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성과목표) V-1.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추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양자·다자 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
(관리과제) V-1-재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국제협상횟수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목표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추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V-1.)의 성과지표를 ‘양자·다자 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로 선정하면서 측정산식 등을 관리과제 ‘금융관련 국제협력’(V-1-재정②)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등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표명만 다를 뿐 성과지표가 중복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성과지표의 구체성 결여

(전략목표) IV.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
(성과지표)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
(관리과제) IV-2-재정③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지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목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IV-2.)의 성과지표를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과제 ‘금융소비자 보호’(IV-2-재정③)의 성과지표를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성과지표의 경우 측정방식이 개선방안 제출 또는 미제출 등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 과제의 난이도를 적정하

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의 경우 구체성도 미흡하여 성과 측정 시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가 있는 등 성과지표로서 적정하지 않다.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낮게 설정

(전략목표) Ⅰ. 경제활성화 지원

(성과목표) Ⅰ-1.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성과지표)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목표치: 70%)

위 위원회에서는 [별표 2] “목표치 하향 설정 명세”와 같이 성과지표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의 목표치를 70%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의 경우 비록 2011년에 신설된 지표이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이미 있었고 2011년에도 동일한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과거 3년간 추세치가 2008년 86.8%, 2009년 87.9%, 2010년 90.7%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년도 실적치인 90.7%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목표치를 70%로 낮게 설정하였다.

라. 성과지표와 전략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지표체계의 혼란 발생

(전략목표) Ⅲ.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Ⅲ-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성과지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목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Ⅲ-1.)의 성과지표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성과지표명은 전략목표명과 동일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성과

지표가 성과목표보다 오히려 상위 개념으로 설정되어 지표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등 성과지표로서 적정하지 않다.

2.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가.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로 성과 실적치를 산정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III-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관리과제) III-1-재정① 금융업법 체제개편
(성과지표) 2단계(기능별) 법령 제·개정

위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관리과제 ‘금융업법 체제개편’(III-1-재정①)의 성과지표를 ‘2단계(기능별) 법령 제·개정’으로 설정하였고 성과 측정방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로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1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위 2건의 법률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0.9,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0.7의 목표달성도 실적을 자의적으로 부여하여 실적치를 1.6¹⁾으로 산정하는 등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로 성과 실적치를 산정하였다.

나. 임의로 측정산식을 변경하여 측정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III-2. 핵심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성과지표) 정부입법계획 달성률

위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목표 ‘핵심금융인프라

1)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절차 과정을 감안하여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규제심사를 완료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0.9로,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0.7로 총 1.6을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실적 산정 방식은 성과계획서 상에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실적치 산정의 객관성이 미흡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Ⅲ-2.)의 성과지표 '정부입법계획 달성률'의 측정산식을 '당초 입법계획 대비 국회제출'로 설정하였다.

한편, 위 위원회에서 2011년 초 법제처에 제출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경영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당초 제출한 입법계획 중 실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건이므로 정부입법계획 달성률을 66.7%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1. 9. 16. 위 위원회에서는 법제처에 당초 계획에 없으나 국회에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등 2건을 추가하여 입법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신청하고, 2011회계연도가 10일 남은 2011. 12. 20.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등 2건을 철회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측정산식을 '(국회제출/당초입법계획)×100'에서 '(국회제출/입법계획)×100'으로 임의로 변경한 뒤 2011년 중 위 추가하고 철회한 건들을 반영하여 6건의 입법계획 중 6건 모두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적치를 100%로 산정하는 등 성과 실적을 과다하게 측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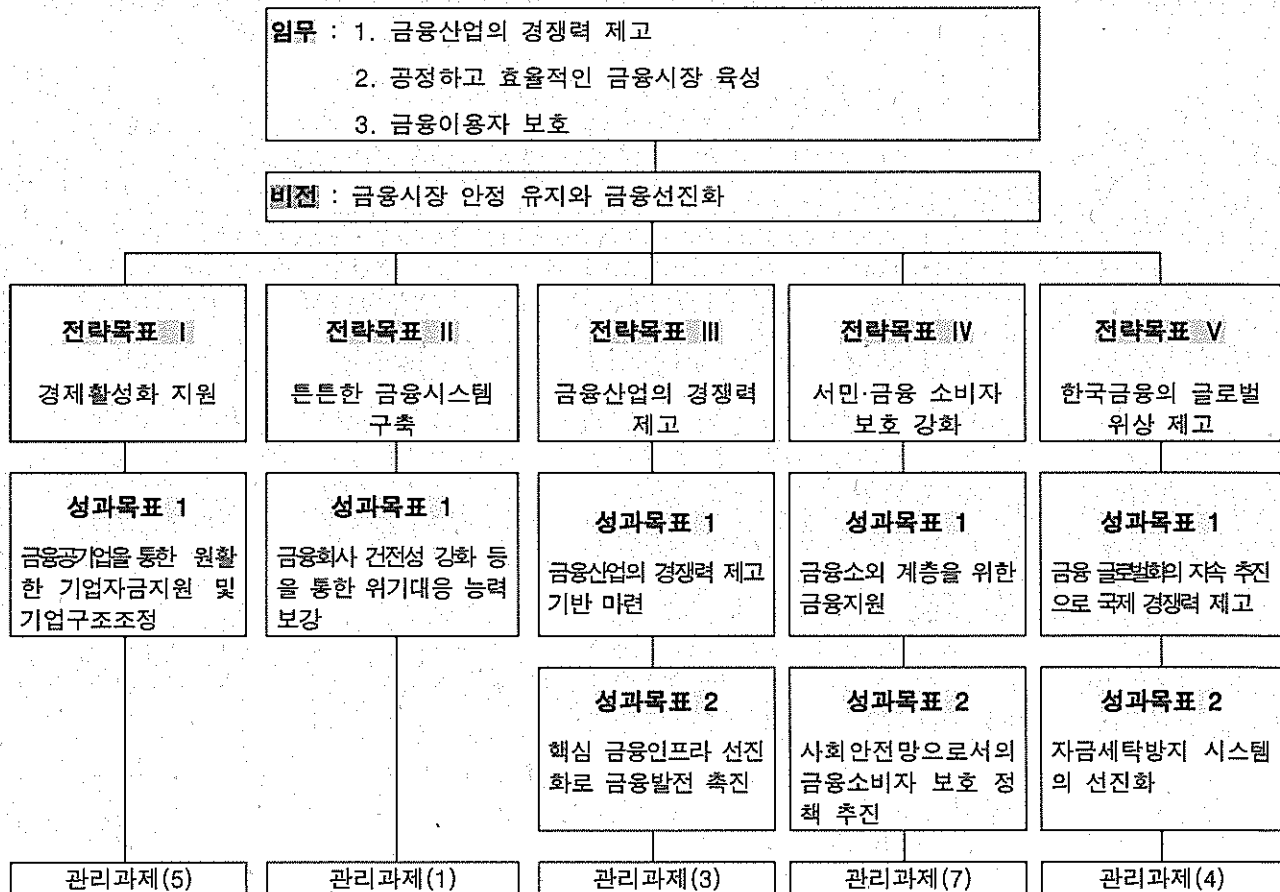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성과지표를 중복하여 사용하거나 구체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낮게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전략목표명과 동일

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며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로 성과 실적치를 산정하거나 임의로
추정산식을 변경하여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별표 2]

목표치 하향 설정 명세

| 성과목표 I -1.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 | | | | | | | |
|--|----------|------|------|------|---------------|---------------------|-------------------|---------|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 '08 | '09 | '10 | '11 | | | |
|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 | 목표 | - | - | 신설 | 70 | "대체로 만족"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설문조사 | 외부위탁 자료 |
| | 실적 | 86.8 | 87.9 | 90.7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박 대 동 의 원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1. 해외 출장 관련

1-1. 연도별(2009~2012.6월)임직원 국외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 출장내역은 엑셀파일 참조

- 국외출장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보고시스템
(btis.mopas.go.kr)에서 확인

09년-12.6월 임직원 국외출장현황

| 직원명 | 부서 | 직위, 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이○○ | 대법인실 | 주무관 | 10.10.25~10.10.30 | 홍콩, 싱가포르 | 해외홍보 현장학습 | ₩ 788,500 | - | - | \$ 185 |
| 이○○ | 대법인실 | 대법인 | 12.06.09~12.06.13 | 태국, 홍콩 |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 ₩ 2,107,700 | \$ 559 | \$ 388 | \$ 175 |
| 윤○○ | 대법인실 | 주무관 | 12.06.09~12.06.14 | 태국, 홍콩 |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 ₩ 1,417,800 | \$ 386 | \$ 245 | \$ 130 |
| 김○○ | 대법인실 | 사무관 | 11.12.06~11.12.10 | 중국 하이난, 홍콩 | 제4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 및 제6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 ₩ 1,263,200 | \$ 273 | \$ 176 | \$ 120 |
| 송○○ | 기업재무 개신지원단 | 사무관 | 09.07.06~09.07.09 | 싱가포르 | 해운시장동향 파악 및 선박가치평가의 긍정 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선박매입프로그램 협에 대한 해외은행상대 홍보 및 아시아시장 의 현지방문 조사 | ₩ 625,500 | \$ 190 | \$ 236 | \$ 120 |
| 이○○ | 행정인사과 | 주무관 | 09.11.29~09.12.12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행정기관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의 국외정책연수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 서○○ | 기업재무개신지원단 | 사무관 | 10.11.24~10.11.26 | 일본 |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 현 지 조사 | ₩ 1,250,400 | \$ 364 | \$ 324 | \$ 168 |
| 김○○ | 행정인사과 | 사무관 | 10.11.30~10.12.09 | 영국, 네덜란드 | 10년 (허반기) 해외성과관리 전문교육과정 출 장 | ₩ 1,830,000 | \$ 910 | \$ 678 | \$ 300 |
| 이○○외1인 | 행정인사과 | 사무관 주무관 | 10.12.09~10.12.11 | 일본 | 일본 금융청 연임 | ₩ 1,254,200 | \$ 548 | \$ 444 | \$ 168 |
| 최○○외1인 | 행정인사과 | 주무관 주무관 | 10.12.15~10.12.18 | 홍콩 | ASFM 국제컨퍼런스 참석 | ₩ 1,212,000 | \$ 774 | \$ 536 | \$ 208 |
| 송○○ | 행정인사과 | 사무관 | 11.9.10~11.9.15 |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 |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기준세미나(the IMF's Data Standards Initiatives Seminar) 참석 | ₩ 956,700 | \$ 273 | \$ 176 | \$ 120 |
| 조○○ | 기획조정관 | 국장 | 09.01.15~09.01.17 | 일본 | 재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105 |
| 이○○ | 기획재정담당관실 | 사무관 | 09.04.27~09.05.01 | 현임 | 영국대사관주관 원년집합연수 | ₩1,827,400 | \$870 | \$648 | \$370 |
| 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 사무관 | 09.08.26~09.09.02 | 스페인, 이탈리아 |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 수 | ₩1,610,000 | \$570 | \$472 | \$331 |
| 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 주무관 | 10.06.22~10.06.29 | 헝가리, 슬로바키 아 |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 연 수 | ₩1,813,900 | \$522 | \$360 | \$328 |
| 정○○ | 기획조정관 | 국장 | 10.08.23~10.08.27 | 싱가포르 | 제3차 국장급 공무원 싱가포르 방문 프로그램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315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이○○ 외 3인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담당관실 |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 10.12.20~10.12.22 | 러시아 | 고객화인제도 이행실태 및 임원사례조사 | ₩6,443,500 | \$564 | \$930 | \$348 |
| 채○○ 외 1인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 상임위원 팀장 | 11.01.26~10.02.01 | 호주, 말레이시아 |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 ₩8,211,700 | \$752 | \$696 | \$420 |
| 최○○ | 금융위원회 | 상임위원 | 11.1.26~21 | 호주, 말레이시아 |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 ₩4,456,400 | \$472 | \$432 | \$240 |
| 최○○ | 의사운영정보팀 | 팀장 | 11.1.26~21 | 호주, 말레이시아 |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 ₩3,755,300 | \$280 | \$264 | \$180 |
| 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사무관 | 11.3.13~3.20 | 아루바 | 여그공 그룹 회의 참석 | ₩2,950,100 | \$725 | \$567 | \$210 |
| 송○○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사무관 | 11.8.31~9.7 | 독일, 네덜란드 | 2011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 ₩1,806,600 | \$696 | \$472 | \$240 |
| 최○○ | 기획재정부담당관실 | 과장 | 11.9.25~10.1 | 미국 | 해외 국경감사 지원(미국) | ₩2,796,200 | \$750 | \$567 | \$224 |
| 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과장 | 11.9.25~10.1 | 영국, 독일 | 해외 국경감사 지원(영국) | ₩2,615,400 | \$682 | \$501 | \$210 |
| 박○○ | 시장분석과 | 사무관 | 09.03.01~09.03.04 | 동경 | 제10차 동경 라운드 태이블 참석 | ₩ 575,000 | \$ 542 | \$ 324 | \$ 120 |
| 진○○ | 시장분석과 | 사무관 | 09.05.17~09.05.23 | 파리 |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세미나 참가 | ₩ 1,596,400 | \$ 725 | \$ 567 | \$ 210 |
| 추○○ | 금융정책국 | 국장 | 09.06.29~09.07.04 | 프랑스, 포르투갈, 리 | 선진국 주요 정책금융기관 방문 및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해외 대응방향 논의 | ₩ 5,331,600 | \$ 618 | \$ 584 | \$ 210 |
| 김○○ | 산업금융과 | 사무관 | | | | ₩ 2,339,700 | \$ 530 | \$ 442 | \$ 180 |
| 우○○ | 산업금융과 | 과장 | 10.01.10~10.01.14 | 북셈부르크, 제네바 | 국제적 정부주도 금융규제 현황 등 논의 | ₩ 2,672,900 | \$ 285 | \$ 295 | \$ 150 |
| 박○○ | 시장분석과 | 사무관 | 10.04.11~10.04.18 | 시애틀, 워싱턴, LA | 미국의 금리체계·제도 운용 현황 비교 분석 | ₩ 4,161,710 | \$ 770 | \$ 604 | \$ 370 |
| 이○○ | 금융소비자과 | 주무관 | 10.09.26~10.10.02 | 토론토, 오타와 | 캐나다 차등보험포용제 운영현황 등 조사 | ₩ 2,426,700 | \$ 435 | \$ 343 | \$ 302 |
| 권○○ 외 2인 |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외신대변인 | 부위원장 외신대변인 | 10.10.15~10.10.17 | 싱가포르 | 중국 국제금융포럼 참석 | ₩ 790,700 | 주최측부담 | \$ 261 | \$ 150 |
| 김○○ 외 1인 | 금융정책과 | 사무관 | 11.04.05~11.04.10 | 파리 | OECD 금융시장위원회의 회의 참석 | ₩ 561,500 | 주최측부담 | \$ 132 | \$ 210 |
| 김○○ | 시장분석과 | 사무관 | 11.05.17~11.05.20 | 런던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지원 | ₩ 2,047,600 | \$ 580 | \$ 486 | \$ 0 |
| 박○○ | 금융제도팀 | 사무관 | 11.05.17~11.05.20 | 프랑스, 파리 | WGTM 회의참석 | ₩ 2,253,600 | \$ 290 | \$ 324 | \$ 120 |
| 전○○ | 금융시장분석과 | 사무관 | 11.05.17~11.05.20 | 프랑스, 파리 | 제113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 ₩ 2,446,700 | \$ 334 | \$ 405 | \$ 150 |
| 전○○ | 금융시장분석과 | 사무관 | 11.10.05~11.10.10 | 프랑스, 파리 | 제113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 ₩ 2,289,900 | \$ 676 | \$ 486 | \$ 180 |

| 직위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최○○ | 금융정책과 | 사무관 | 11.10.30~11.11.13 | 덴마크 코펜하겐 | 덴마크 주먹금융시스템 조사 | ₩ 2,870,200 | \$ 272 | \$ 295 | \$ 150 |
| 이○○ | 금융시장분석과 | 사무관 | 11.10.30~11.11.14 | 영국 런던 | 유럽단기자금시장 인프라 및 거래제도 현황 파악 | ₩ 2,402,200 | \$ 600 | \$ 486 | \$ 180 |
| 최○○ | 글로벌금융과 | 과장 사무관 | 11.11.24~11.11.29 | 터키, 영국 | 금융위협과 터키, 영국 금융당국간 협력체계 구축 | ₩ 7,466,500 | \$ 1,439 | \$ 750 | \$ 360 |
| 송○○ | 금융시장분석과 | 사무관 | 11.12.5~11.12.16 | 싱가포르 | IMF 금융시장 및 신용산업 세미나 | ₩ 753,650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 김○○ | 금융정책과 | 사무관 | 12.4.17~11.4.21 | 프랑스 파리 |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 ₩ 2,387,200 | \$ 450 | \$ 405 | \$ 150 |
| 송○○ | 금융시장분석과 | 사무관 | 12.4.25~11.4.29 | 프랑스 파리 | 제114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 ₩ 2,387,200 | \$ 669 | \$ 405 | \$ 150 |
| 윤○○ 외 1인 | 산업금융과 | 과장 사무관 | 12.6.25~12.6.29 | 싱가포르, 태국 | 산업은행 민영화 및 IPO 추진 | ₩ 3,138,000 | \$ 772 | \$ 500 | \$ 300 |
| 이○○ 외 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사무관 | 09.01.21~09.01.23 | 일본 동경, 싱가포르 | 한국 IR 개최 | ₩ 5,164,300 | \$ 354 | \$ 365 | \$ 120 |
| 이○○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09.01.28~09.02.01 | 스위스 다보스 | 세계경제포럼(Davos 포럼) 참석 | ₩ 3,744,900 | \$ 240 | \$ 221 | \$ 90 |
| 이○○ 외 2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서기관 사무관 | 09.01.31~09.02.06 |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 G-20 WGI 회의 참석 및 한국금융비로알리기 설명회 | ₩ 4,822,300 | \$ 660 | \$ 468 | \$ 200 |
| 오○○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09.03.07~09.03.11 | 사우디 리아드 | 한-GCC FTA 제2차 협상참석 | ₩ 4,874,800 | \$ 969 | \$ 764 | \$ 240 |
| 이○○ 외 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사무관 | 09.03.11~09.03.21 | 미국 뉴욕, 워싱 턴, 샌프란시스코 | 한국경제비로알리기 설명회 | ₩ 5,240,300 | \$ 1,845 | \$ 1,330 | \$ 400 |
| 이○○ 외 2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사무관 | 09.03.11~09.03.15 | 영국 런던 | 영국 4대 언론 IR 개최 | ₩ 1,760,600 | \$ 1,305 | \$ 810 | \$ 300 |
| 이○○ 외 3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사무관 | 09.03.24~09.03.26 | 홍콩 | 아시아투자컨퍼런스 참석 | ₩ 4,750,800 | \$ 870 | \$ 640 | \$ 200 |
| 김○○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09.05.06~09.05.08 | 싱가포르 | IFSB 연례회의 참석 | ₩ 1,503,400 | \$ 435 | \$ 324 | \$ 120 |
| 김○○ | 글로벌금융과 | 서기관 | 09.05.10~09.05.16 | 페루 리마 | 한페루 FTA 제2차 협상 참석 | ₩ 2,810,200 | \$ 435 | \$ 324 | \$ 120 |
| 신○○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09.05.17~09.05.21 | 호주 캔버라 | 한호주 FTA 제1차 협상 참석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 480 | \$ 150 |
| | | | | |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 243 | \$ 90 |
| | | | | | | ₩ 463,800 | \$ 290 | \$ 243 | \$ 90 |
| | | | | | | ₩ 463,800 | \$ 290 | \$ 243 | \$ 210 |
| | | | | | | ₩ 1,177,300 | \$ 190 | \$ 177 | \$ 90 |
| | | | | | | ₩ 2,432,600 | \$ 248 | \$ 222 | \$ 180 |
| | | | | | | ₩ 1,560,600 | \$ 210 | \$ 220 | \$ 150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 09.05.25~09.05.29 | 스위스 바젤, 프랑크푸르트, 뮌헨 | FSB 오리엔테이션 참석 | ₩ 7,089,500 | \$ 559 | \$ 631 | \$ 200 |
| | | 과장 | 09.05.25~09.05.28 | 스위스 바젤, 프랑크푸르트 | | ₩ 2,414,000 | \$ 190 | \$ 177 | \$ 90 |
| | | 사무관 | 09.05.25~09.05.29 | 스위스 바젤, 프랑크푸르트 | | ₩ 3,088,500 | \$ 335 | \$ 339 | \$ 150 |
| 진○○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위원장 | 09.06.24~09.06.27 | 홍콩, 스위스 바젤 | 홍콩 비즈니스 강연 및 FSB 총회 참석 | ₩ 8,504,000 | \$ 614 | \$ 594 | \$ 240 |
| | | 상임위원 | | | | ₩ 5,227,600 | \$ 447 | \$ 396 | \$ 160 |
| | | 비서관 | | | | ₩ 2,890,900 | \$ 190 | \$ 258 | \$ 120 |
| | | 과장 | | | | ₩ 2,890,900 | \$ 190 | \$ 258 | \$ 120 |
| | | 사무관 | | | | ₩ 2,300,700 | \$ 285 | \$ 236 | \$ 120 |
| | | 사무관 | | | | ₩ 2,300,700 | \$ 285 | \$ 236 | \$ 120 |
| 유○○외1인 | 대법인실 | 대법인 | 09.06.24~09.06.25 | | | ₩ 1,301,400 | \$ 166 | \$ 107 | \$ 35 |
| | | 사무관 | | | | ₩ 461,100 | \$ 145 | \$ 81 | \$ 3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금융연구원 | 09.06.30~09.07.02 | 중국 상하이 |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석 | ₩ 431,000 | \$ 140 | \$ 132 | \$ 90 |
| | | 사무관 | | | | ₩ 431,000 | \$ 140 | \$ 132 | \$ 90 |
| 이○○ | | 상임위원 | 09.08.26~09.08.29 | 영국 런던 | FSB 운영위원회 참석 | ₩ 5,547,500 | \$ 615 | \$ 532 | \$ 160 |
| | | 국제협력관 | 09.09.07~09.09.09 | *영국 런던 | FSB 상임위원회 참석 | ₩ 1,777,900 | \$ 332 | \$ 321 | \$ 105 |
| 진○○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위원장 | 09.09.13~09.09.15 | 프랑스 파리 | FSB 총회 참석 | ₩ 8,623,100 | \$ 774 | \$ 558 | \$ 180 |
| | | 과장 | | | | ₩ 1,872,200 | \$ 290 | \$ 243 | \$ 90 |
| | | 서기관 | | | | ₩ 1,872,200 | \$ 290 | \$ 243 | \$ 90 |
| | | 사무관 | | | | ₩ 1,872,200 | \$ 290 | \$ 243 | \$ 90 |
| | | 사무관 | | | | ₩ 1,872,200 | \$ 290 | \$ 243 | \$ 90 |
| 신○○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외신대법인 | 09.09.13~09.09.16 | 페루 리마 | 한-페루 FTA 제4차 협상 참석 | ₩ 1,872,400 | \$ 190 | \$ 177 | \$ 90 |
| | | 과장 | 09.10.19~09.10.24 | | | ₩ 4,269,000 | \$ 248 | \$ 185 | \$ 15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09.10.24~09.10.28 | 이탈리아 로마 | FSB 운영위원회 참석 | ₩ 2,358,900 | \$ 224 | \$ 150 | \$ 130 |
| | | 상임위원 | | | | ₩ 5,329,200 | \$ 447 | \$ 396 | \$ 160 |
| 김○○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09.11.04~09.11.09 | 영국 세인트앤드루 |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 ₩ 2,982,200 | \$ 285 | \$ 236 | \$ 120 |
| | | 사무관 | | | | ₩ 2,622,800 | \$ 838 | \$ 354 | \$ 180 |
| 박○○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09.11.15~09.11.19 | 두바이 | 한-GCC FTA 협상참석 | ₩ 1,839,600 | \$ 261 | \$ 196 | \$ 104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신○○외2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09.12.01~09.12.06 | 호주 캔버라 | 한-호주 FTA 제3차 협상 참석 | ₩ 1,666,500 | \$ 210 | \$ 176 | \$ 240 |
| | | 법률자문관 | | | | ₩ 3,577,900 | \$ 354 | \$ 288 | \$ 280 |
|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 | | ₩ 1,666,500 | \$ 192 | \$ 148 | \$ 104 |
| 이○○외2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 09.12.17~09.12.18 | 일본 동경 | 한일 고위급 경제회담 참석 | ₩ 1,008,000 | \$ 205 | \$ 266 | \$ 80 |
| | 글로벌금융과 | 서기관 | | | | ₩ 665,000 | \$ 145 | \$ 162 | \$ 6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665,000 | \$ 145 | \$ 162 | \$ 6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 09.12.03~09.12.1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제7회 동아시아권퍼런스 참석 및 주요 아시아 금융당국 민담 | ₩ 2,280,200 | \$ 1,385 | \$ 1,045 | \$ 40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1,121,500 | \$ 905 | \$ 633 | \$ 300 |
| | | 위원장 | | | | ₩ 8,773,800 | \$ 614 | \$ 408 | \$ 180 |
| 진○○외4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0.01.08~10.01.11 | 스위스 바젤 | FSB 총회 참석 | ₩ 2,599,400 | \$ 190 | \$ 177 | \$ 90 |
| | 위원장실 | 사무관 | | | | ₩ 2,599,400 | \$ 190 | \$ 177 | \$ 9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2,511,800 | \$ 190 | \$ 177 | \$ 9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2,511,800 | \$ 190 | \$ 177 | \$ 90 |
| 이○○ | | 국제협력관 | 10.01.16~10.01.19 | 영국 런던 | FSB 상임위원회 참석 | ₩ 5,659,600 | \$ 332 | \$ 321 | \$ 105 |
| | | 상임위원 | | | | ₩ 1,729,900 | | \$ 532 | \$ 16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1,322,500 | \$ 435 | \$ 324 | \$ 120 |
| 이○○외1인 | | 국제협력관 | 10.03.03~10.03.05 | 싱가포르 |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 ₩ 2,430,900 | \$ 240 | \$ 234 | \$ 105 |
| | | 사무관 | | | | ₩ 816,300 | \$ 190 | \$ 177 | \$ 90 |
|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 | | | ₩ 5,882,400 | \$ 503 | \$ 464 | \$ 160 |
| 이○○외2인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0.03.07~10.03.11 | 스위스, 영국 | FSB 운영위원회 및 제23차 한-영 경제협의회 참석 | ₩ 2,725,700 | \$ 480 | \$ 361 | \$ 150 |
| | 보협과 | 사무관 | | | | ₩ 2,725,700 | \$ 480 | \$ 361 | \$ 150 |
| | | 상임위원 | | | | ₩ 967,000 | \$ 205 | \$ 266 | \$ 80 |
| 이○○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0.03.16~10.03.17 | 일본 동경 |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 568,200 | \$ 145 | \$ 162 | \$ 60 |
| | | 상임위원 | | |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 594 | \$ 24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2,175,300 | \$ 380 | \$ 354 | \$ 18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10.05.01~10.05.07 | 캐나다 워털루 | CIG(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 권파권스 참석 | ₩ 2,258,100 | \$ 320 | \$ 259 | \$ 182 |
| | | 상임위원 | | | | ₩ 583,200 | \$ 452 | \$ 506 | \$ 175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3,419,200 | \$ 385 | \$ 383 | \$ 150 |
| 이○○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 10.05.15~10.05.19 | 이탈리아 로마 | FSB 운영위원회의 및 OECD 한국경제점토프회의 참석 | ₩ 5,351,800 | \$ 447 | \$ 495 | \$ 200 |
| | 금융정책과 | 사무관 | | | | ₩ 2,102,400 | \$ 720 | \$ 582 | \$ 24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2,102,400 | \$ 720 | \$ 582 | \$ 240 |
| 오○○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위원장 | 2010.05.19~2010.05.21 | 독일 베를린 | 독일 재무부 주관 국제권파권스 참석 | ₩ 8,797,200 | \$ 307 | \$ 408 | \$ 180 |
| | | 과장 | | | | ₩ 3,615,200 | \$ 95 | \$ 177 | \$ 90 |
|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 | | ₩ 1,610,200 | \$ 192 | \$ 185 | \$ 130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사무관 | 10.05.25~10.05.27 | 중국 베이징 | 아시아 신흥국 은행규제 및 금융인정권리 스 참석 | 주최측 부담 ₩ 502,800 | 주최측 부담 ₩ 190 | \$ 297 | \$ 120 |
| 김○○외1인 | 금융시장분석과 | 사무처장 사무관 | 10.06.06~10.06.10 | 미국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 여법준비은행 주관 아시아인퍼 런스 및 은행감독자회의 | ₩ 5,111,600 ₩ 1,625,300 | 주최측 부담 ₩ 435 | \$ 665 \$ 405 | \$ 200 \$ 150 |
| 이○○ | | 국제협력관 | 10.06.08~10.06.13 | 캐나다 오타와 | FSB 감독강화 워크숍 참석 | ₩ 6,494,500 | \$ 360 | \$ 468 | \$ 21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사무관 | 10.06.08~10.06.12 | 오스트리아 비엔 나 | IMF(국제금융연합회) 춘계 총회 참석 | ₩ 5,335,700 ₩ 2,412,200 | \$ 447 ₩ 285 | \$ 495 \$ 295 | \$ 200 \$ 150 |
| 진○○외4인 |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금융정책과 위원장실 | 위원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 10.06.13~10.06.17 | 캐나다 토론토, 미 국 워싱턴 | FSB 총회 참석 및 미국금융당국 방문 | ₩ 11,409,900 ₩ 5,236,300 ₩ 2,441,800 ₩ 2,441,800 | \$ 1,001 ₩ 335 ₩ 430 ₩ 430 | \$ 830 \$ 361 \$ 420 \$ 420 | \$ 300 \$ 150 \$ 180 \$ 180 |
| 류○○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0.06.27~10.07.01 | 스위스 제네바 | WTO DDA 서비스 협상 참석 | ₩ 5,236,300 ₩ 2,593,800 | \$ 335 ₩ 285 | \$ 361 \$ 295 | \$ 150 \$ 15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국제협력관 사무관 | 10.07.04~10.07.08 | 독일 베를린 | 독일 경제개발협력기구 주최 국제회의 참석 | ₩ 1,868,300 | 주최측 부담 ₩ 285 | \$ 312 \$ 236 | \$ 140 \$ 12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국제협력관 사무관 | 10.08.29~10.09.02 | 독일 프랑크푸르 트, 영국 런던 | FSB 감독규제개혁 상임위 및 워크숍 참석 | ₩ 6,659,400 ₩ 2,892,000 | \$ 406 ₩ 335 | \$ 477 \$ 361 | \$ 175 \$ 15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과장 | 10.08.29~10.09.02 | 독일 프랑크푸르 트, 이탈리아 로 마, 프랑스 파리 | FSB 의장 등 주요 회원국과의 주요 금융과제 협의 | ₩ 6,598,800 ₩ 3,826,100 | \$ 503 ₩ 335 | \$ 563 \$ 339 | \$ 200 \$ 150 |
| 진○○외2인 | 글로벌금융과 |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관 | 2010.9.8 | 일본 동경 | G20 서울정상회의 금융규제개혁 분야 주요과 제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임무협의 | ₩ 946,400 ₩ 946,400 ₩ 657,800 | - - - | \$ 186 \$ 133 \$ 81 | \$ 60 \$ 40 \$ 3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사무관 | 10.09.12~10.09.15 | 스위스 바젤 | FSB 운영위원회 참석 | ₩ 6,430,600 ₩ 2,751,400 | \$ 298 ₩ 190 | \$ 396 \$ 236 | \$ 160 \$ 120 |
| 진○○외3인 |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 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 10.09.25~10.09.28 | 프랑스 파리 | 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 ₩ 9,511,800 ₩ 2,664,300 ₩ 2,664,300 ₩ 2,664,300 | \$ 774 ₩ 435 ₩ 435 ₩ 290 | \$ 744 \$ 405 \$ 405 \$ 324 | \$ 240 \$ 150 \$ 150 \$ 120 |
| 이○○외2인 | 은행과 외신팀 | 상임위원 사무관 사무관 | 10.11.15~10.11.17 | 홍콩 | 아시아 리스크 컨퍼런스 참석 | 주최측 부담 ₩ 567,400 ₩ 567,400 | \$ 205 ₩ 290 ₩ 290 | \$ 399 \$ 243 \$ 243 | \$ 120 \$ 90 \$ 90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여비 |
|--------|--------|-------|-------------------|-----------------|--|-------------|-------|-------|-------|
| 최○○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0.11.15~10.11.19 | 호주 캔버라 | 한-호주 FTA 2차 회기간 협상 참석 | ₩ 1,760,700 | ₩ 210 | ₩ 220 | ₩ 150 |
|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 | | ₩ 1,760,700 | ₩ 192 | ₩ 185 | ₩ 130 |
| 전○○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0.11.30~10.12.04 | 중국 산둥성 | 한중일 FTA 산관화 공동연구 제3차회의 참석 | ₩ 402,900 | ₩ 280 | ₩ 220 | ₩ 150 |
|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 | | ₩ 324,500 | ₩ 435 | ₩ 405 | ₩ 150 |
| 서○○외2인 | 서민금융팀 | 사무관 | 10.11.29~10.12.03 | 영국 런던 | 영국 금융청(FSA) 주관 국제연례세미나 참석 | ₩ 1,963,900 | ₩ 435 | ₩ 405 | ₩ 150 |
|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 | | ₩ 1,963,900 | ₩ 387 | ₩ 335 | ₩ 130 |
| 이○○ | 국제협력관 | 국제협력관 | 10.12.05~10.12.08 | 영국 런던 |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참석 | ₩ 6,301,900 | ₩ 332 | ₩ 428 | ₩ 140 |
|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 | | ₩ 2,693,800 | ₩ 236 | ₩ 288 | ₩ 160 |
| 이○○외2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0.12.06~10.12.09 | 캐나다 오타와 | 한-캐나다호스탐 금융협력 심포지엄 참석 | ₩ 1,234,000 | ₩ 140 | ₩ 176 | ₩ 120 |
| | 보험과 | 사무관 | | | | ₩ 1,234,000 | ₩ 140 | ₩ 176 | ₩ 120 |
| 이○○ | 국제협력관 | 국제협력관 | 11.01.10~11.01.13 | 스위스 바젤 |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참석 | ₩ 3,285,200 | ₩ 240 | ₩ 312 | ₩ 140 |
| | 국제협력관 | 국제협력관 | | | | ₩ 2,473,000 | ₩ 360 | ₩ 390 | ₩ 175 |
| 이○○외2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 11.01.16~11.01.19 | 홍콩 |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참석 | ₩ 113,800 | ₩ 435 | ₩ 324 | ₩ 120 |
| | 금융정책과 | 사무관 | | | | ₩ 622,600 | ₩ 387 | ₩ 268 | ₩ 104 |
| 전○○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1.01.18~11.01.21 | 인도 델리 |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 참석 | ₩ 1,986,000 | ₩ 236 | ₩ 190 | ₩ 120 |
|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 | | | ₩ 2,007,500 | ₩ 435 | ₩ 486 | ₩ 180 |
| 이○○외2인 | 글로벌금융과 | 서기관 | 11.01.20~11.01.25 | 미국 로스앤젤레스 | 한미경제회의 참석 | ₩ 2,007,500 | ₩ 387 | ₩ 402 | ₩ 156 |
| | 금융정책과 | 주무관 | | | | ₩ 6,145,900 | ₩ 332 | ₩ 428 | ₩ 140 |
| 이○○ | 이화여대 | 교수 | 11.02.02~11.02.03 | 일본 동경 | 일본 금융청 주관 국제 핀테크 컨퍼런스 참석 | ₩ 1,894,300 | ₩ 290 | ₩ 324 | ₩ 120 |
|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 | | ₩ 1,894,300 | ₩ 290 | ₩ 324 | ₩ 120 |
| 서○○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1.02.03~11.02.06 | 프랑스 파리 |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 1,894,300 | ₩ 290 | ₩ 324 | ₩ 120 |
| | 글로벌금융과 | 서기관 | | | | ₩ 3,174,100 | ₩ 470 | ₩ 412 | ₩ 24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11.03.04~11.03.11 | 터키 앙카라, 스위스 제네바 | 한-터키 FTA 제3차 협상, WTO/ DDA 금융서비스 위원회 참석 | ₩ 3,174,100 | ₩ 430 | ₩ 344 | ₩ 208 |
| | 글로벌금융과 | 국제협력관 | | | | ₩ 6,764,300 | ₩ 738 | ₩ 691 | ₩ 225 |
| 한○○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1.03.09~11.03.15 | 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 ₩ 2,956,500 | ₩ 625 | ₩ 523 | ₩ 210 |
| | 이화여대 | 교수 | | | | ₩ 6,401,300 | ₩ 332 | ₩ 428 | ₩ 140 |
| 신○○외2인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1.03.22~11.03.25 | 영국 런던 |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 2,065,200 | ₩ 280 | ₩ 324 | ₩ 120 |
| | 글로벌금융과 | 부위원장 | | | | ₩ 6,354,400 | ₩ 440 | ₩ 468 | ₩ 200 |
| 서○○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1.04.03~11.04.06 | 이탈리아 로마 | FSB 총회 참석 | ₩ 2,396,300 | ₩ 190 | ₩ 236 | ₩ 120 |
| | 글로벌금융과 | 서기관 | | | | ₩ 2,396,300 | ₩ 190 | ₩ 236 | ₩ 120 |
| 서○○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서기관 | 11.04.12~11.04.16 | 스위스 제네바 | WTO/DDA 금융서비스분과 협상 참석 | ₩ 3,741,300 | ₩ 285 | ₩ 295 | ₩ 150 |
| | 글로벌금융과 | 주무관 | | | | ₩ 2,338,300 | ₩ 261 | ₩ 245 | ₩ 130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사무관 | 11.04.16~11.04.19 | 미국 워싱턴 | 거시건전성 감독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 ₩ 7,368,200 | \$ 205 | \$ 532 | \$ 160 |
| 전○○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1.05.02~11.05.04 | 중국 북경 | 한중 FTA 대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참석 | ₩ 2,090,000 | \$ 145 | \$ 324 | \$ 12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서기관 | 11.05.05~11.05.08 | 스위스 바젤 | FSB 정리채계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 715,400 | \$ 190 | \$ 177 | \$ 90 |
| 김○○ | 공자위 사무국 | 국장 | 11.05.11~11.05.14 | 프랑스 파리 |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파트너십 회의 참석 | ₩ 6,764,100 | \$ 447 | \$ 396 | \$ 160 |
| 류○○ | 글로벌금융과 | 사무관 | 11.05.16~11.05.18 | 스위스 바젤 |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 3,236,400 | \$ 285 | \$ 236 | \$ 120 |
| 이○○ | | 국제협력관 | 11.05.18~11.05.26 |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 FSB 거시건전위기관리그룹, IASFSB 활동 워크숍 참석 | ₩ 4,619,800 | \$ 332 | \$ 428 | \$ 14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사무관 | 11.06.06~11.06.09 | 독일 프랑크푸르트 | FSB 운영위원회 참석 | ₩ 2,771,900 | \$ 95 | \$ 177 | \$ 90 |
| 최○○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사무관 | 11.06.12~11.06.16 | 이탈리아 로마 | FSB 감독강화회의 참석 | ₩ 9,393,400 | \$ 904 | \$ 847 | \$ 315 |
| 이○○ | 글로벌금융과 | 상임위원 과장 | 11.06.19~11.06.25 | 스위스 바젤 | FSB 정리채계운영위원회 및 신용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회의 참석 | ₩ 6,889,400 | \$ 298 | \$ 396 | \$ 160 |
| 최○○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에디티 | 11.06.21~11.06.25 | | | ₩ 2,434,500 | \$ 190 | \$ 236 | \$ 120 |
| 이○○ 외 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1.7.6~11.7.9 | 파리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G-20 워크숍 참석 | ₩ 1,997,100 | \$ 285 | \$ 295 | \$ 150 |
| 신○○외3명 | 부위원장실 | 부위원장 | 11.7.17~11.7.20 | 파리 | FSB 총회 참석 | ₩ 1,861,200 | \$ 285 | \$ 295 | \$ 150 |
| 이○○외2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1.8.1~11.8.2 | 동경 | 이머징마켓 포럼 참석 | ₩ 5,984,200 | \$ 745 | \$ 693 | \$ 280 |
| 김○○ | 글로벌금융과 | 행정사무관 | 11.8.28~11.8.31 | 바젤 |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림자금융 TF 회의 참석 | ₩ 2,563,000 | \$ 285 | \$ 295 | \$ 150 |
| 김○○외3인 | 위원장실 | 위원장 | 11.9.1~11.9.4 | 올리바트로 |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림자금융 TF 회의 참석 | ₩ 2,563,000 | \$ 261 | \$ 245 | \$ 130 |
| 이○○ | 금융정책국 | 국제협력관 | 11.9.18~11.9.20 | 런던 | 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 규제협력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 ₩ 8,345,000 | \$ 780 | \$ 856 | \$ 28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1.9.25~11.9.28 | 워싱턴 | 금융안정위원회(FSB) 정리채계 운영그룹(ReSG) 회의 참석 | ₩ 13,088,600 | \$ 2,150 | \$ 1,612 | \$ 560 |
| 이○○외1인 | 글로벌금융과 | 행정사무관 | 11.9.25~11.9.28 | 제네바 | WTO/ODA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 참석 | ₩ 2,479,000 | \$ 807 | \$ 710 | \$ 248 |
| 신○○외1인 | 감사담당관실 | 주무관 | 11.9.27~11.9.30 | 바젤 | 금융안정위원회(FSB) LFI 워크숍 참석 | ₩ 2,630,490 | \$ 174 | \$ 177 | \$ 90 |
| 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사무국장 | 11.9.29~11.10.4 | 멕시코 |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PN) 회의 참석 | ₩ 4,585,600 | \$ 730 | \$ 624 | \$ 465 |
| 추○○외3인 | 부위원장실 | 부위원장 | 11.10.1~11.10.4 | 취리히 |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 6,485,900 | \$ 184 | \$ 321 | \$ 105 |
| | | | | | | ₩ 10,714,000 | \$ 637 | \$ 856 | \$ 280 |
| | | | | | | ₩ 4,848,600 | \$ 442 | \$ 432 | \$ 224 |
| | | | | | | ₩ 5,616,200 | \$ 347 | \$ 294 | \$ 156 |
| | | | | | | ₩ 3,513,100 | \$ 470 | \$ 390 | \$ 175 |
| | | | | | | ₩ 16,327,100 | \$ 1,692 | \$ 1,136 | \$ 544 |

| 차원명 | 부서 | 차의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비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최○○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1.10.13~11.10.16 | 파리 |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 ₩ 3,328,900 | \$ 352 | \$ 324 | \$ 120 |
| 서○○ | 글로벌금융과 | 서기관 | 11.10.16~11.10.23 | 뉴욕, 워싱턴 | 한미 양국 금융경제 정책담당자간 협력구축을 위한 회의 참석 | ₩ 2,265,100 | \$ 1,268 | \$ 648 | \$ 240 |
| 최○○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1.11.8~11.11.12 | 알마타 | 한-카자흐스탄 금융포럼 참석 | ₩ 3,328,900 | \$ 411 | \$ 236 | \$ 120 |
| 이○○외1인 | 금융정책국 | 국제협력관 | 11.11.16~11.11.19 | 런던, 프랑크푸르트 | 영국(FSA) 및 독일(BaFin) 금융정책 담당자들과의 업무협의 | ₩ 9,163,400 | \$ 942 | \$ 602 | \$ 244 |
| 김○○외1인 | 위원장실 | 위원장 | 11.11.25~11.11.29 | 티카리핀 | 금융위원회와 티카·영국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외출장 | ₩ 33,405,000 | \$ 5,584 | \$ 2,796 | \$ 1,266 |
| 이○○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1.11.30~11.12.3 | 뉴욕 |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참석 | ₩ 8,253,100 | \$ 214 | \$ 399 | \$ 12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1.12.6~11.12.10 | 하이난 | 제4차 한중일 고위급 회담 및 제6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참석 | ₩ 4,242,900 | \$ 963 | \$ 640 | \$ 400 |
| 이○○외2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1.12.17~12.1.11 | 바젤 | FSB 총회 참석 | ₩ 8,963,600 | \$ 1,352 | \$ 1,094 | \$ 51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2.1.15~12.1.19 | 홍콩 | 아시아 금융포럼(AFF) 참석 | ₩ 654,600 | \$ 523 | \$ 856 | \$ 280 |
| 이○○외1인 | 금융정책국 | 국제협력관 | 12.1.29~12.2.1 | 런던 | FSB 건국규제협력상임위원회의 참석 | ₩ 4,555,900 | \$ 407 | \$ 750 | \$ 33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2.2.3~12.2.6 | LA | 제24차 한미 재계회의 참석 | ₩ 1,930,400 | \$ 265 | \$ 684 | \$ 226 |
| 최○○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2.2.12~12.2.15 | 하노이 | 한국-베트남 금융당국간의 MOU 체결 관련 실무협의 | ₩ 586,700 | \$ 182 | \$ 132 | \$ 135 |
| 김○○외4인 | 위원장실 | 위원장 | 12.2.28~12.3.4 | 베트남, 인니 |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동 | ₩ 10,548,180 | \$ 3,636 | \$ 1,460 | \$ 925 |
| 나○○외1인 | 글로벌금융과 | 행정사무관 | 12.3.28~12.4.1 | 뉴욕 | 금융안정위원회(FSB) CBCM 워크숍 참석 | ₩ 4,509,800 | \$ 993 | \$ 740 | \$ 280 |
| 박○○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2.4.11~12.4.15 | 워싱턴 | 금융안정위원회(FSB) SIE 회의 참석 | ₩ 2,297,600 | \$ 512 | \$ 324 | \$ 12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2.4.15~12.4.18 | 브뤼셀 | *Global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컨퍼런스 참석 | ₩ 3,249,700 | \$ 232 | \$ 632 | \$ 28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2.4.25~12.4.28 | 바젤 | 금융안정위원회(FSB) ReSG 회의 참석 | ₩ 10,238,800 | \$ 343 | \$ 632 | \$ 280 |
| 박○○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2.5.3~12.5.8 | 방콕, 아부다비 | 제3차 한국-UAE 경제공동위원회(S7 중견급 5.6 실무급)에 참석 | ₩ 2,644,900 | \$ 435 | \$ 324 | \$ 18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2.5.6~12.5.10 | 바젤 |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FSB Steering Committee) 및 신흥국 리스크 그룹 회의(EMDE Review Group Meeting) 참석 | ₩ 9,685,400 | \$ 974 | \$ 790 | \$ 350 |
| 박○○외1인 | 글로벌금융과 | 과장 | 12.5.13~12.5.14 | 베이징 | 한중 FTA 제1차 협상 참석 | ₩ 1,486,400 | \$ 307 | \$ 216 | \$ 112 |
| 김○○ | 글로벌금융과 | 행정사무관 | 12.5.13~12.5.15 | 쿠알라룸푸르 |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 ₩ 820,400 | \$ 137 | \$ 132 | \$ 90 |
| 이○○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2.5.13~12.5.18 | 쿠알라룸푸르, 베이징 |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및 JFC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녹색금융 포럼 참석 | ₩ 2,574,200 | \$ 173 | \$ 540 | \$ 240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임○○외1인 | 금융정책국 | 국제협력관 | 12.5.17~12.5.20 | 러던 | 영국 런던 금융청(FSA)에서 개최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간담·규제협력 상임위원회(SRC) 회의 참석 | ₩ 9,001,300 | \$ 1,198 | \$ 752 | \$ 260 |
| 이○○외1인 |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 12.5.22~12.5.24 | 베이징 | 2012 중국금융포럼(China Financial Summit) 참석 | ₩ 570,700 | \$ 284 | \$ 474 | \$ 210 |
| 주○○외3명 | 부위원장실 | 부위원장 | 12.5.27~12.5.30 | 상하이, 홍콩 |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 4,203,800 | \$ 3,006 | \$ 1,079 | \$ 544 |
| 김○○외4명 | 위원장실 | 위원장 | 12.6.9~12.6.13 | 태국, 홍콩 | 금융위원장 태국, 홍콩 출장 | ₩ 8,280,200 | \$ 2,903 | \$ 1,805 | \$ 880 |
| 임○○ | 금융정책국 | 국제협력관 | 12.6.14~12.6.17 | 암스텔담 | 금융안정위원회(FSB) 국경간 위기관리그룹(CBCM) 회의 참석 | ₩ 6,664,000 | \$ 320 | \$ 312 | \$ 140 |
| 임○○ | 금융정책국 | 국제협력관 | 12.6.27~12.6.30 | 바젤 |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그룹(Implementation Group) 회의 참석 | ₩ 7,009,500 | \$ 439 | \$ 312 | \$ 140 |
| 이○○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09.09.20~09.09.23 | 상하이 | 중국 금융정책 및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 파악 | ₩ 1,332,100 | \$ 260 | \$ 221 | \$ 120 |
| 정○○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0.02.07~10.02.13 | 더블린, 아테네 | 위기 이후 주요 금융중심지 현황조사 및 정책 벤치마킹 | ₩ 3,360,000 | \$ 425 | \$ 301 | \$ 310 |
| 권○○외4인 |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 10.05.10~10.05.12 | 상가포르 | 한국금융 IR | - | - | \$ 351 | \$ 150 |
| | 금융위원회 중선위 | 상임위원 | 10.05.12~10.05.15 | 호주 시드니 | | ₩ 3,763,200 | \$ 236 | \$ 216 | \$ 120 |
| | 국제협력팀 | 팀장 | 10.05.10~10.05.15 | 상가포르, 호주 시드니 | | ₩ 1,719,000 | \$ 140 | \$ 309 | \$ 180 |
| | 외선대변인실 | 외선대변인 | | 도니 | | ₩ 1,719,000 | \$ 140 | \$ 309 | \$ 180 |
| 정○○외1인 | 금융정책과 | 서기관 | 10.05.10~10.05.12 | 상가포르 | 한국금융 IR | - | - | \$ 177 | \$ 90 |
|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0.05.10~10.05.15 | 상가포르, 호주 시드니 | | ₩ 1,719,000 | \$ 140 | \$ 309 | \$ 180 |
| 김○○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0.09.10~10.09.13 | 미국 뉴욕 | 2010 FSS Korean Finance Job Fair 참석 | ₩ 2,121,900 | \$ 387 | \$ 268 | \$ 224 |
| 윤○○ | 국제협력팀 | 팀장 | 10.10.24~10.10.29 | 스위스 취리히, 룩셈부르크 | 금융중심지 경쟁국인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금융인력 양성 현황 파악 | ₩ 4,298,300 | \$ 380 | \$ 295 | \$ 150 |
| 이○○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0.11.21~10.11.26 | 스페인 마드리드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홍보 | ₩ 4,298,300 | \$ 380 | \$ 295 | \$ 150 |
| 이○○ | 금융위원회 | 국제협력관 | | 영국 런던 | | ₩ 6,705,100 | \$ 692 | \$ 555 | \$ 210 |
| 정○○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0.11.21~10.11.25 | 영국 런던 | 금융사의 국내 유치 활성화 | ₩ 1,835,000 | \$ 285 | \$ 236 | \$ 120 |
| 정○○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1.02.21~11.02.26 | 영국 런던, 독일 함부르크 | 금융중심지 정책 홍보 및 선박금융 관련 외국 금융사의 국내 유치 활성화 | ₩ 3,014,500 | \$ 575 | \$ 420 | \$ 180 |
| 김○○ | 국제협력팀 | 주무관 | 11.03.27~11.03.31 | 영국 런던 | World Islamic Finance Conference 참석 | ₩ 2,388,200 | \$ 387 | \$ 268 | \$ 104 |
| 이○○ | 금융위원회 | 국제협력관 | 11.9.25 ~ 11.9.28 | 일본(동경), 홍콩 | 2011년 국제 정부위원회(해외국정감사·수감) | ₩ 2,507,700 | \$ 1,004 | \$ 428 | \$ 140 |
| 양○○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2.5.15 ~ 12.5.17 | 중국 북경 | 국제 녹색금융포럼 참석 | ₩ 570,700 | \$ - | \$ 177 | \$ 90 |
| 석○○ | 국제협력팀 | 사무관 | 12.7.1 ~ 12.7.4 | 호주 시드니 | 현지 금융감독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호주 금융인력 양성 사례 연구 | ₩ 1,851,300 | \$ 181 | \$ 176 | \$ 120 |

| 직위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대비 | 기타/여비 |
|---------|-----------------------|--------------------------|-------------------|-----------------|--|--------------|----------|----------|--------|
| 임○○외1인 | 중소과 | 상임위원 사무관 | 09.04.27~09.05.04 | 칠리산티아고 | 세계저축은행협회 회의 참석 | ₩ 12,805,300 | \$ 970 | \$ 1,092 | \$ 490 |
| 김○○외1인 |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국장 서기관 | 09.05.17~09.05.21 | 영국 런던 | 영국 재무성 및 FSA 관계자 만남/중장 | ₩ 1,640,300 | \$ 933 | \$ 940 | \$ 325 |
| 권○○ | 보험과 | 사무관 | 09.07.07~09.07.12 | 프랑스 파리 |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 회의 참석 | ₩ 1,956,400 | \$ 580 | \$ 486 | \$ 180 |
| 성○○외1인 | 보험과 보험과 | 과장 사무관 | 09.11.01~09.11.08 | 태국, 베트남 | 태평양 보험회의 회의 참석 | ₩ 1,529,200 | \$ 840 | \$ 704 | \$ 610 |
| 조○○ | 은행과 | 사무관 | 09.11.16~09.11.22 | 태국, 싱가포르, 홍콩 | 태국 싱가포르/홍콩 투자자 사전 설명회 | ₩ 1,047,000 | \$ 525 | \$ 434 | \$ 210 |
| 김○○외1인 | 보험과 보험과 | 사무관 주무관 | 09.11.29~09.12.06 | 프랑스 파리 |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 회의 참석 | ₩ 3,619,200 | \$ 1,740 | \$ 1,296 | \$ 448 |
| 신○○ | 은행과 | 사무관 | 09.11.29~09.12.05 | 미국 워싱턴D.C. | IMF 범부처 세미나 참석 | ₩ 1,975,100 | \$ 725 | \$ 567 | \$ 210 |
| 마○○외1인 | 은행과 은행과 | 사무관 주무관 | 09.12.14~09.12.19 | 프랑스 파리 | OECD 무역위원회 회의 참석 | ₩ 3,348,400 | \$ 1,096 | \$ 888 | \$ 456 |
| 성○○ | 보험과 | 과장 | 10.06.05~10.06.11 | 스페인 마드리드 | 2010 국제보험학회(INS) 총회 참석 | ₩ 2,632,600 | \$ 475 | \$ 413 | \$ 210 |
| 이○○ | 중소금융과 | 사무관 | 10.10.04~10.10.06 | 일본 동경 | 일본 대금업시장 정책연구 및 대금시장 현황 조사 | ₩ 578,000 | \$ 290 | \$ 243 | \$ 60 |
| 최○○외1인 | 금융위 보험과 | 상임위원 서기관 | 10.10.26~10.10.29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JAS 연차총회 참석 | ₩ 5,138,200 | \$ 488 | \$ 632 | \$ 280 |
| 김○○외3인 |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은행과 |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 10.11.17~10.11.20 | 몽골 울란바토르 | 몽골 중앙은행에 대한 한국의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설명 | ₩ 2,143,200 | \$ 708 | \$ 536 | \$ 818 |
| 김○○외1인 | 보험과 보험과 | 사무관 주무관 | 10.11.29~10.12.03 | 프랑스 파리 |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 회의 참석 | ₩ 4,016,000 | \$ 1,370 | \$ 1,036 | \$ 392 |
| 허○○외2인 | 중신위 보험과 공정시장과 | 비상임위원 사무관 주무관 | 10.12.15~10.12.23 | 영국 런던 | IFRS 보험계약 Round table 회의 참석 | ₩ 11,426,300 | \$ 2,791 | \$ 2,147 | \$ 794 |
| 안○○ 외1인 | 서민금융팀 민간전문가(예보) | 사무관 차장 | 11.01.11~11.01.15 | 오스트리아 비엔 나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주관 미 소금융 글로벌 컨퍼런스 회의 참석 | ₩ 3,482,600 | \$ 570 | \$ 590 | \$ 300 |
| 추○○ | 서민금융팀 | 주무관 | 11.05.15~11.05.19 | 캄보디아 | CGAP Annual Meeting 참석 | ₩ 803,800 | \$ 224 | \$ 150 | \$ 130 |
| 신○○ | 보험과 | 과장 | 11.06.18~11.06.24 | 캐나다 토론토 | 2011년도 국제보험학회(INS) 총회 참석 | ₩ 2,475,800 | \$ 475 | \$ 413 | \$ 210 |
| 배○○ | 은행과 | 주무관 | 11.7.17~11.7.23 | 인도 코치 | 제14차 APG 연차 총회 참석 | ₩ 4,327,600 | \$ 525 | \$ 343 | \$ 182 |
| 송○○ | 중소금융과 | 사무관 | 11.9.13~11.9.18 | 미국 샌프란시스코 | 2011년 APEC 여성경제회의 참석 | ₩ 1,877,900 | \$ 600 | \$ 486 | \$ 180 |
| 박○○ | 보험과 | 사무관 | 11.9.10~11.9.13 | 싱가포르 | 2011년 태평양보험학회(PIC) 총회 참석 | ₩ 944,200 | \$ 411 | \$ 236 | \$ 120 |
| 서○○ | 은행과 | 사무관 | 11.9.28~11.10.1 | 이탈리아 로마 | FATF 전문가 회의 및 WGEI 회의 참석 | ₩ 2,612,700 | \$ 348 | \$ 236 | \$ 120 |

| 좌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제○○ | 보험과 | 사무관 | 11.10.9~11.10.13 | 말레이시아 | 2011년 제16회 동아시아-태평양 총회 참석 | ₩ 792,000 | \$ 364 | \$ 220 | \$ 150 |
| 김○○외2인 | 금융위 은행과 중소금융과 | 과장 사무관 사무관 | 11.11.27~12.1 11.11.27~12.3 | 암스테르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 커버드본드 해외사례 및 외은지점 해외제도 연구 등 | ₩ 10,940,100 | \$ 1,781 | \$ 1,121 | \$ 570 |
| 김○○외1인 | 금융위 은행과 | 사무처장 사무관 | 11.11.27~11.11.29 |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정책 40주년 기념행사 및 Global-Asia Dynamics 라운드테이블 참석 | ₩ 3,125,000 | \$ 688 | \$ 474 | \$ 210 |
| 이○○ | 보험과 | 주무관 | 11.11.26~11.12.3 | 파리 |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위원회의 참석 | ₩ 2,207,100 | \$ 924 | \$ 536 | \$ 208 |
| 김○○외1인 | 은행과 보험과 | 주무관 등 | 11.12.5~11.12.10 | 워싱턴 뉴욕 | 커버드본드 해외사례 및 외은지점 해외제도 연구 등 | ₩ 4,412,400 | \$ 1,240 | \$ 804 | \$ 312 |
| 마○○ | 보험과 | 사무관 | 12.6.3~11.6.10 | 파리 |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위원회의 참석 | ₩ 2,471,500 | \$ 900 | \$ 648 | \$ 240 |
| 배○○ | 은행과 | 과장 | 12.6.9~11.6.13 | 타국, 홍콩 | 타국, 홍콩 금융감독국과의 MOU 체결 등 연구 등 | ₩ 1,417,800 | \$ 571 | \$ 294 | \$ 150 |
| 정○○ | 금융서비스국 | 국장 | 12.6.15~12.6.23 |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로, 미국 시카고 | IS(국제보험학회) 참석 및 시카고 한인경제인 협회 세미나 참석 | ₩ 12,901,800 | \$ 960 | \$ 624 | \$ 280 |
| 제○○ | 보험과 | 사무관 | 12.6.15~12.6.24 |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로, 미국 뉴욕 | IS(국제보험학회) 참석 및 미국 보험시장 조 사 | ₩ 3,588,800 | \$ 764 | \$ 619 | \$ 270 |
| 정○○ | 금융소비자과 | 사무관 | 12.4.9~12.4.13 | 러시아 모스크바 | APEC 전문가 워크숍 참석 | ₩ 2,028,200 | \$ 450 | \$ 405 | \$ 150 |
| 안○○ | 금융소비자과 | 사무관 | 12.6.25~12.6.29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APEC 주관 컨퍼런스 참석 | ₩ 2,625,900 | \$ 348 | \$ 295 | \$ 150 |
| 송○○외1인 | 시민금융과 | 사무관 주무관 | 12.7.1~12.7.7 | 뉴욕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참석 | ₩ 5,198,000 | \$ 1,572 | \$ 1,036 | \$ 392 |
| 전○○ | 자본과 | 사무관 | 09.03.10~09.03.11 | 일본 동경 | FTSE 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 ₩ 674,100 | \$ 145 | \$ 162 | \$ 60 |
| 김○○ | 공정과 | 사무관 | 09.04.25~09.05.01 | 스위스 바젤 |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회의참석 | ₩ 2,006,800 | \$ 475 | \$ 413 | \$ 210 |
| 김○○ | 자산과 | 사무관 | 09.04.26~09.05.03 | 영국 런던 |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 집합연수 | ₩ 1,643,500 | \$ 870 | \$ 648 | \$ 240 |
| 김○○외1인 | 자본과 | 증신위원 사무관 | 09.06.06~09.06.12 | 이스라엘 텔아비 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 ₩ 6,066,900 | \$ 940 | \$ 348 | \$ 620 |
| 이○○외1인 | 자본과 | 부위원장 사무관 | 09.09.07~09.09.08 | 일본 동경 |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일본 금융청 방문 | ₩ 1,555,900 | \$ 435 | \$ 482 | \$ 160 |
| 김○○ 외1인 | 증신위원 자본과 | 증신위원 사기관 | 09.09.07~09.09.10 | 중국 상해 |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상해금융감독 당국 라운드테이블 참석 | ₩ 1,354,000 | \$ 564 | \$ 464 | \$ 410 |
| 윤○○ | 공정과 | 주무관 | 09.09.13~09.09.16 | 싱가포르 |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회의참석 | ₩ 688,800 | \$ 261 | \$ 196 | \$ 224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전○○ | 자본과 | 사무관 | 09.10.04~09.10.08 | 스위스 제네바 |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회의 참석 | ₩ 2,569,000 | \$ 285 | \$ 295 | \$ 280 |
| 정○○ | 자산과 | 과장 | 09.10.13~09.10.19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국제연금감독기구(IOPS) 연차총회 참석 | ₩ 3,022,600 | \$ 285 | \$ 413 | \$ 210 |
| 김○○ | 자산과 | 사무관 | 09.10.21~09.10.24 | 호주 멜버른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참석 | ₩ 1,445,000 | \$ 140 | \$ 176 | \$ 120 |
| 이○○외1인 | 공정과 자산과 | 과장 주무관 | 09.11.17~09.11.20 | 중국 베이징 |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중국 국영 자산관리 공사주관 컨퍼런스 참석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주최측 부담 |
| 김○○외1인 | 자산과 자산과 | 사무관 사무관 | 09.12.17~09.12.22 | 홍콩, 베트남 | 아시아지역 펀드교류 협력방안 논의 | ₩ 1,560,400 | \$ 1,000 | \$ 713 | \$ 620 |
| 이○○외1인 | 자본과 자본과 | 과장 사무관 | 10.01.14~10.01.17 | 미국 뉴욕 | 장외파생상품 감독자포럼 참석 | ₩ 4,279,600 | \$ 580 | \$ 648 | \$ 240 |
| 김○○ | 공정과 | 사무관 | 10.01.16~10.01.21 | 영국 런던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참석 | ₩ 1,880,500 | \$ 580 | \$ 486 | \$ 310 |
| 구○○ | 공정과 | 사무관 | 10.02.08~10.02.13 | 프랑스 파리 |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워크숍 참석 | ₩ 1,688,000 | \$ 580 | \$ 486 | \$ 180 |
| 이○○외1인 | 공정과 공정과 | 과장 주무관 | 10.03.20~10.03.25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제7차 정기회의 참석 | ₩ 3,157,600 | \$ 728 | \$ 540 | \$ 280 |
| 최○○외 1인 | 자본과 | 상임위원 사무관 | 10.06.06~10.06.13 |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뉴욕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미국 투자은행(IB) 기관 방문 | ₩ 9,712,700 | \$ 1,782 | \$ 1,014 | \$ 840 |
| 이○○ | 공정과 | 사무관 | 10.06.14~10.06.18 | 오르단 암만 | 시장감시 교육프로그램 참가 | ₩ 1,927,000 | \$ 350 | \$ 264 | \$ 310 |
| 송○○ | 자본과 | 서기관 | 10.06.30~10.07.02 | 중국 제남 북경 | 산동기인 한국상장-설명회 참석 | ₩ 727,400 | \$ 95 | \$ 59 | \$ 90 |
| 정○○ | 자본과 | 과장 | 10.07.07~10.07.09 | 프랑스 파리 | 장외파생상품 국제 컨퍼런스 참석 | ₩ 1,815,200 | \$ 162 | \$ 435 | \$ 90 |
| 최○○ | 공정과 | 과장 | 10.07.28~10.07.29 | 일본 동경 | 국제회계기준(IFRS) 컨퍼런스 참석 | ₩ 624,900 | \$ 145 | \$ 162 | \$ 190 |
| 이○○ | 자본시장과 | 사무관 | 10.09.06~10.09.07 | 일본 동경 | 일본 금융감독 정책협의 및 일본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참석 | ₩ 624,700 | \$ 145 | \$ 162 | \$ 60 |
| 김○○외3인 | 자본시장과 대법인실 보험과 | 부위원장 과장 과장 사무관 | 10.09.08~10.09.11 | 중국 북경, 심천 | 중국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참석 및 중국 금융감독 정책협의 | ₩ 4,432,000 | \$ 1,158 | \$ 876 | \$ 560 |
| 최○○ | 공정과 | 과장 | 10.09.26~10.09.30 | 스페인 마드리드 |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총회 | ₩ 2,115,000 | \$ 285 | \$ 295 | \$ 150 |
| 최○○외1인 | 자본과 | 상임위원 사무관 | 10.10.07~10.10.11 | 리우스, 베트남 | 리우스 및 베트남 출장 | ₩ 3,220,400 | \$ 564 | \$ 580 | \$ 350 |
| 신○○ | 자산과 | 과장 | 10.10.30~10.11.05 | 호주 시드니 | IOPS 연차총회 및 OECD/IOPS 사전연검포럼 참석 | ₩ 1,729,000 | \$ 350 | \$ 308 | \$ 210 |
| 최○○외 1인 | 자본과 자본과 | 사무관 주무관 | 10.11.15~10.11.19 | 프랑스 파리 |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참석 | ₩ 3,718,000 | \$ 822 | \$ 740 | \$ 530 |
| 김○○외1인 | 자본과 자산과 | 사무관 주무관 | 10.11.24~10.11.27 | 싱가포르 | 기래스 국제회 관련 싱가포르 기래스 방문 | ₩ 2,059,500 | \$ 451 | \$ 373 | \$ 194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조 〇〇 외2인 | 공정과 공정과 | 비상임위원 사무관 주무관 | 10.11.27~10.12.05 |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로 | IOSCO SROCC 세미나 참석 | ₩ 19,782,900 | \$ 1,655 | \$ 1,863 | \$ 864 |
| 전 〇〇 | 자본과 | 사무관 | 10.11.30~10.12.02 | 중국 상해/상진 | ChinNext 및 상해 신물거래소 방문 | ₩ 1,138,000 | \$ 140 | \$ 132 | \$ 90 |
| 이 〇〇 | 자본과 | 사무관 | 10.12.16~10.12.18 | 중국 상해/상진 | 2010 OECD ARCG 회의 참석 | ₩ 504,700 | \$ 140 | \$ 132 | \$ 90 |
| 구 〇〇 | 공정과 | 사무관 | 11.03.21~11.03.22 | 말레이시아 | Monitoring Board 공청회 참석 | ₩ 1,125,802 | \$ 70 | \$ 88 | \$ 60 |
| 김 〇〇 | 공정과 | 과장 | 11.03.30~ 11.04.03 | 영국 런던 | IFRS재단 정기이사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 2,079,200 | \$ 435 | \$ 405 | \$ 150 |
| 전 〇〇 | 자본과 | 사무관 | 11.04.16~ 11.04.23 | 남아공 | IOSCO 연차총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 4,362,000 | \$ 475 | \$ 236 | \$ 240 |
| 최 〇〇 | 자본과 | 사무관 | 11.05.09~ 11.05.15 | 북셀브르크 | IFSB 총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 3,045,600 | \$ 475 | \$ 413 | \$ 210 |
| 김 〇〇 | 자산운용과 | 사무관 | 11.08.01~11.08.04 | 싱가포르 | APEC Fund Passport 관련 워크숍 참석 | ₩ 1,235,000 | \$ 410 | \$ 236 | \$ 120 |
| 김 〇〇 | 공정시장과 | 과장 | 11.09.25~11.09.28 | 태국 방콕 | IFAR 정기총회 참석 | ₩ 1,311,400 | \$ 411 | \$ 176 | \$ 120 |
| 국 〇〇 | | 사무관 | | | | ₩ 1,315,500 | \$ 411 | \$ 176 | \$ 120 |
| 홍 〇〇 | 증권선물위원회 | 상임위원 | 11.09.27~11.10.01 | 터키 이스탄불 | IFS2011 총회 참석 | ₩ 6,396,000 | \$ 915 | \$ 288 | \$ 200 |
| 이 〇〇 | 자본시장과 | 사무관 | | | | ₩ 2,226,000 | \$ | \$ 176 | \$ 150 |
| 진 〇〇 | 자본시장과 | 국장 | 11.10.17~11.10.18 | 중국 상해 |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 | ₩ 977,000 | \$ | \$ 116 | \$70+₩10,000 (세외비용) |
| 김 〇〇 | 자본시장과 | 사무관 | | | | ₩ 603,000 | \$ | \$ 88 | \$70+₩10,000 (세외비용) |
| 최 〇〇 | 법률자문관실 | 법률자문관 | 11.10.23~11.10.29 | 프랑크푸르트, 취 리히 | 해외 해지펀드 관련규제 조차 | ₩ 6,995,000 | \$ 1,056 | \$ 693 | \$ 280 |
| 최 〇〇 | 자산운용과 | 주무관 | 11.10.24~11.10.30 | 스페인 마드리드 | IOSCO 프로그램 참석 | ₩ 2,141,000 | \$ 591 | \$ 294 | \$ 182 |
| 이 〇〇 | 공정시장과 | 사무관 | 11.11.15~11.11.18 | 프랑스 파리 | OECD 지배구조 회의 참석 | ₩ 2,270,300 | \$ 450 | \$ 324 | \$ 120 |
| 김 〇〇 | 자본시장과 | 과장 | 11.11.25~11.11.30 | 홍콩, 호주 시드니 | ATS 규제조차 | ₩ 3,355,500 | \$ 604 | \$ 412 | \$ 180 |
| 이 〇〇 | 자본시장과 | 사무관 | 11.11.30~11.12.04 | 미국 뉴욕, 워싱턴 DC | FSB 참석 | ₩ 2,191,700 | \$ 528 | \$ 405 | \$ 383 |
| 류 〇〇 | 증권선물위원회 | 비상임위원 | 11.12.11~11.12.17 | 홍콩, 말레이시아 | 펀드 패스포드 워크숍 참석 | ₩ 2,382,800 | \$ 952 | \$ 687 | \$ 280 |
| 김 〇〇 | 자산운용과 | 사무관 | | | | ₩ 1,446,100 | \$ 608 | \$ 419 | \$ 210 |
| 진 〇〇 | 자본시장과 | 국장 | 11.12.06~11.12.07 | 일본 도쿄 | | ₩ 1,062,000 | \$ 223 | \$ 214 | \$ 70 |
| 이 〇〇 | 공정시장과 | 사무관 | | | | ₩ 657,000 | \$ 176 | \$ 162 | \$ 60 |
| 허 〇〇 | 증권선물위원회 | 비상임위원 | 11.12.14~11.12.20 | 뉴질랜드, 호주 | 해외 투자은행 동 방문 | ₩ 4,226,700 | \$ 472 | \$ 360 | \$ 280 |
| 장 〇〇 | 자본시장과 | 주무관 | 12.03.07~12.03.09 | 홍콩 | 국제금융정책포럼 참석 | ₩ 2,026,300 | \$ 260 | \$ 185 | \$ 182 |
| 김 〇〇 | 자산운용과 | 사무관 | 12.04.17~12.04.22 | 프랑스 파리 |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참석 | ₩ 691,000 | \$ 300 | \$ 243 | \$ 90 |
| 홍 〇〇 | 자본시장과 | 주무관 | | | | ₩ 2,386,400 | \$ 528 | \$ 335 | \$ 130 |
| 유 〇〇 | 증권선물위원회 | 상임위원 | 12.04.17~12.04.19 | 캄보디아 프놈펜 | 캄보디아 증권시장 출범식 참석 | ₩ 1,991,000 | \$ 85 | \$ 122 | \$ 80 |
| 이 〇〇 | 자본시장과 | 사무관 | | | | ₩ 927,000 | \$ 64 | \$ 74 | \$ 60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차사비 | 기타 여비 |
|--------|---|---|-------------------|------------------|---------------------------------|--------------|----------|----------|--------------------------|
| 진○○ | 자본시장국 | 국장 | 12.05.13~12.05.17 | 중국 북경 | 2012년 IOSCO 연차총회 참석 | ₩ 1,319,600 | \$ 1,443 | \$ 390 | \$175+₩10,000 (비자발급) |
| 김○○ | 자본시장과 | 사무관 | | | | ₩ 802,300 | | \$ 295 | \$150+₩10,000 (비자발급) |
| 유○○ | 증권선물위원회 | 상임위원 | 12.06.03~12.06.06 | 프랑스 파리 | OECD 참석 | ₩ 6,623,300 | \$ 1,292 | \$ 532 | \$ 160 |
| 오○○ | 자본시장과 | 사무관 | | | | ₩ 2,424,200 | | \$ 324 | \$ 120 |
| 조○○ | 자산운용과 | 주무관 | 12.06.03~12.06.08 | 프랑스 파리 | 제89차 OECD PPP, OPS 관련 회의 참석 | ₩ 2,267,600 | \$ 422 | \$ 402 | \$156+₩14,920 (여행자보험) |
| 김○○ | 자산운용과 | 과장 | 12.06.24~12.06.28 | 싱가포르, 태국 방콕 | 제5차 APEC 핀드 상호인종 워크숍 참석 | ₩ 951,000 | \$ 626 | \$ 206 | \$ 120 |
| 김○○ | 자산운용과 | 사무관 | | | | ₩ 951,000 | | \$ 206 | \$ 120 |
| 김○○외4인 |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 원장 실장 서기관 사무관 에디터 | 09.02.22~09.03.01 | 프랑스 (파리) | 제207기 2차 FATF 총회 참가 | ₩ 14,170,000 | \$ 4,274 | \$ 3,532 | \$ 1,188 |
| 이○○외2인 |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 팀장 주무관 주무관 | 09.03.01~09.03.08 | 과테말라 | Egmont 실무그룹 회의 참석 | ₩ 8,930,000 | \$ 788 | \$ 812 | \$ 1,027 |
| 이○○외1인 |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 | 과장 사무관 | 09.04.26~09.05.07 | 미국 뉴질랜드 호주 | 카지노 AML/CFT 검사체계 수립을 위한 출장 | ₩ 6,990,000 | \$ 1,630 | \$ 1,234 | \$ 820 |
| 김○○외6인 |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 실장 팀장 팀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 09.05.03~09.05.08 | 호주(시드니) | FATF 상호평가자 회의 | ₩ 13,190,000 | \$ 2,290 | \$ 1,710 | \$ 1,116 |
| 김○○외3인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 원장 서기관 김정 사무관 | 09.05.24~09.05.29 | 카타르(도하) | 제17차 여그움 그룹 총회 참석 | ₩ 7,770,000 | \$ 1,926 | \$ 1,498 | \$ 740 |
| 김○○외7인 |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 원장 팀장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에디터 | 09.06.21~09.06.26 | 프랑스(파리) |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결과 총회 참가(6) | ₩ 23,540,000 | \$ 5,370 | \$ 4,392 | \$ 2,269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정 〇〇외3인 |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 실장 사무관 사무관 | 09.07.05~09.07.12 | 호주(브리스번) | 제12차 APG연차 총회 참석 | ₩ 7,510,000 | \$ 1,680 | \$ 1,408 | \$ 960 |
| 이 〇〇 | 금융정책과 | 사무관 | 09.07.07~09.07.12 | | | ₩ 1,516,600 | \$ 280 | \$ 264 | \$ 180 |
| 이 〇〇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09.08.16~09.08.23 | 호주(브리스번) | APG 주관 상호평가자 교육 | ₩ 1,400,000 | \$ 490 | \$ 352 | \$ 240 |
| 김 〇〇외4인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 원장 실장 팀장 사무관 | 09.10.12~09.10.16 | 프랑스(파리)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 참석 | ₩ 10,600,000 | \$ 2,983 | \$ 2,817 | \$ 960 |
| 박 〇〇 외2인 |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 실장 사무관 주무관 | 09.10.24~09.10.30 | 캐나다(오타와) | APG 유형론 워크숍 참석 | ₩ 6,810,000 | \$ 985 | \$ 812 | \$ 887 |
| 신 〇〇 | 은행과 | 사무관 | | 캐나다(오타와) | FATF 상호평가자 교육 워크숍 참여 | ₩ 716,100 | \$ 310 | \$ 259 | \$ 210 |
| 유 〇〇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09.10.24~09.10.30 | 싱가포르 | ASEAN+3 지역 범죄예방 세미나 참가 | ₩ 3,400,000 | \$ 720 | \$ 702 | \$ 315 |
| 김 〇〇 | 기획행정실 | 팀장 | 09.11.22~09.11.27 | 호주(시드니) | 중장기 정보화계획수립 | ₩ 5,650,000 | \$ 486 | \$ 510 | \$ 325 |
| 이 〇〇외 1인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원장 과장 사무관 | 10.01.19~10.02.22 | 아부다비/싱가포르 | FATF 총회/실무회의 | ₩ 10,640,000 | \$ 2,170 | \$ 1,932 | \$ 910 |
| 최 〇〇외3인 |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기획행정실 | 원장 과장 사무관 | 10.02.14~10.02.20 | 몽골(울란바토르) | MOU 체결을 위한 몽골 고위급 협의 | ₩ 2,850,000 | \$ 486 | \$ 392 | \$ 280 |
| 최 〇〇외1인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원장 사무관 | 10.02.28~10.03.06 | UAE(모리세스) | 에그몽 실무그룹 회의 | ₩ 3,130,000 | \$ 280 | \$ 308 | \$ 210 |
| 김 〇〇 | 기획행정실 | 팀장 | 10.03.09~10.03.14 | 프랑스(파리) | OECD 재정위원회 스그룹 회의 참석 | ₩ 9,000,000 | \$ 1,760 | \$ 1,530 | \$ 666 |
| 김 〇〇외2인 |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 사무관 주무관 | 10.05.23~10.05.26 | 일본(동경) | 심사분석 실무 개선 회의 | ₩ 1,130,000 | \$ 885 | \$ 696 | \$ 364 |
| 박 〇〇외1인 | 심사분석실 | 실장 | 10.05.23~10.05.26 | 미국(워싱턴, 뉴욕, 라스베이거스) | 카지노 검사체계 구축방안 | ₩ 7,560,000 | \$ 1,458 | \$ 1,740 | \$ 800 |
| 송 〇〇외1인 |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 | 과장 사무관 | 10.05.23~10.05.31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제21기 3차 FATF 총회 | ₩ 8,640,000 | \$ 1,860 | \$ 1,568 | \$ 890 |
| 이 〇〇외2인 |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 실장 사무관 주무관 | 10.06.21~10.07.04 | 폴란드(아카르타 해나) | 제18차 어그온 그룹 연차 총회 | ₩ 19,980,000 | \$ 2,218 | \$ 1,788 | \$ 1,300 |
| 최 〇〇 외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 원장 팀장 사무관 | 10.06.26~10.07.04 | | | | | | |
| | 파견(금강원) | 수석감사역 | | | | | | | |

| 직위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최○○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 원장 사무관 사무관 | 10.07.11~10.07.17 | 상가포르 | 제13차 APG총회 | ₩ 4,030,000 | \$ 1,751 | \$ 1,370 | \$ 600 |
| 차○○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10.08.22~10.08.27 | 상가포르 | APG/JMF 상호평가자 워크숍 | ₩ 940,000 | \$ 475 | \$ 354 | \$ 310 |
| 강○○ | 심사분석1과 | 사무관 | 10.10.03~10.10.09 | 홍콩 | 홍콩 경찰청 '2010 금융조사과정'참석 | ₩ 580,000 | \$ 870 | \$ 567 | \$ 340 |
| 최○○외4인 |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 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예디터 | 10.10.17~10.10.22 | 프랑스(파리) | 제22기 제1차 FATF 총회 | ₩ 16,780,000 | \$ 3,660 | \$ 2,557 | \$ 1,170 |
| 서○○ | 은행과 | 사무관 | 10.10.17~10.10.23 | | | ₩ 2,665,400 | \$ 725 | \$ 567 | \$ 340 |
| 한○○외1인 |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 10.10.24~10.10.31 | 방글라데시 | APG 유형론 워크숍 참석 | ₩ 5,600,000 | \$ 670 | \$ 567 | \$ 642 |
| 최○○ |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10.11.08~10.11.11 | 미국(워싱턴) | 선진 AML/CFT 체계 구축방안 협의를 위한 FinCEN 등 방문 | ₩ 7,280,000 | \$ 410 | \$ 532 | \$ 160 |
| 최○○외1인 | 심사분석실 심사분석3과 | 실장 사무관 사무관 | 10.11.14~10.11.21 |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프타운)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유형론에 관한 2010년도 FATF-애그레그팅 전문가 회의 참석 | ₩ 12,400,000 | \$ 976 | \$ 1,264 | \$ 690 |
| 조○○외1인 | 은행과 | 실장 | 10.12.06~10.12.11 | 홍콩 | FATF 전문가 회의 | ₩ 2,020,000 | \$ 1,555 | \$ 1,316 | \$ 455 |
| 이○○외1인 |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 사무관 주무관 | 10.12.06~10.12.08 | | | ₩ 606,000 | \$ 268 | \$ 387 | \$ 104 |
| 이○○외1인 | 행정인사과 | 실장 사무관 | 11.01.27~11.01.30 | 프랑스(파리) | 제4차 상호평가 이행결과 보고 관련 FATF 사 무국 협의 참석 | ₩ 8,050,000 | \$ 622 | \$ 752 | \$ 260 |
| 이○○외1인 | 심사분석실 | 팀장 | 11.02.19~11.02.26 | 호주(시드니) | 선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체제 구 축방안 연구 | ₩ 5,530,000 | \$ 936 | \$ 760 | \$ 488 |
| 김○○외3인 |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 실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 11.02.19~11.02.26 | 프랑스(파리) | FATF 제22기 제2차 총회 참석 | ₩ 11,840,000 | \$ 3,190 | \$ 2,430 | \$ 900 |
| 차○○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11.02.28~11.03.03 | 미국(워싱턴) | 해적 자금 차단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 ₩ 2,030,000 | \$ 435 | \$ 324 | \$ 120 |
| 김○○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11.03.13~11.03.20 | 아로바 | 애그레그팅 회의 참석 | ₩ 2,950,000 | \$ 725 | \$ 567 | \$ 210 |
| 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사무관 | | | | ₩2,950,100 | \$725 | \$567 | \$210 |
| 김○○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11.03.13~11.03.20 | 케이프타운 | FATF 전문가 회의 참석 | ₩ 2,120,000 | \$ 475 | \$ 472 | \$ 240 |
| 최○○외2인 |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3과 | 실장 팀장 과장 | 11.04.09~11.04.17 | 미국(워싱턴) | FinCEN 회의 참석 | ₩ 18,500,000 | \$ 3,582 | \$ 2,889 | \$ 945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송○○ | 제도운영과 | 과장 | 11.04.24~11.04.29 | 스페인/영국 | 카지노 금융회사 AMU/CFT 감독·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출장 | ₩ 3,640,000 | \$ 480 | \$ 420 | \$ 180 |
| 김○○외1인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원장 사무관 | 11.05.05~11.05.13 | 홍콩/호주/피지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회의개최 및 피지 내판과의 협력 MOU 체결을 위한 공무원 출장 | ₩ 10,070,000 | \$ 1,450 | \$ 1,422 | \$ 630 |
| 이○○ | 기획행정실 | 팀장 | 11.05.11~11.05.13 | 홍콩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회의개최 및 피지 내판과의 협력 MOU 체결을 위한 공무원 출장 | ₩ 610,000 | \$ 90 | \$ 243 | \$ 290 |
| 김○○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11.05.11~11.05.13 | 프랑스(파리) | FATF 전문가 회의 및 WGM 회의 참석 | ₩ 1,900,000 | \$ 1,015 | \$ 729 | \$ 270 |
| 최○○외2인 |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 실장 사무관 에디터 | 11.06.17~11.06.27 | 멕시코 | FATF 제22기 제3차 총회 참가 | ₩ 12,850,000 | \$ 2,414 | \$ 1,972 | \$ 920 |
| 조○○ | 운영과 | 사무관 | | | | ₩ 2,438,900 | \$ 760 | \$ 590 | \$ 300 |
| 박○○ | 심사분석1과 | 과장 | 11.07.10~ 11.07.17 | 아르메니아 | 제19차 예그롱 연합총회 참석 | ₩ 3,680,400 | \$ 535 | \$ 352 | \$ 240 |
| 김○○ | 기획행정실 | 사무관 | | | | ₩ 3,634,900 | \$ 348 | \$ 308 | \$ 222 |
| 권○○ | 심사분석실 | 팀장 | | | | ₩ 3,608,900 | \$ 800 | \$ 546 | \$ 245 |
| 이○○ | 기획행정실 | 5급 | 11.07.17~ 11.07.24 | 인도 코치 | 제14차 APG 연차총회 참석 | ₩ 3,421,900 | \$ 655 | \$ 413 | \$ 247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 | | ₩ 4,327,600 | \$ 524 | \$ 413 | \$ 249 |
| 오○○ | 심사분석실 | 5급 | | | | ₩ 3,421,900 | \$ 685 | \$ 413 | \$ 243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11.09.06~11.09.10 | 프랑스 파리 | WGTM Interresional 회의 참석 | ₩ 2,465,300 | \$ 330 | \$ 405 | \$ 168 |
| 이○○ | 심사분석실 | 5급 | 11.09.25~11.10.01 | 아르메니아 프마 | WGEM Interresional 회의 참석 | ₩ 1,986,900 | \$ 620 | \$ 413 | \$ 210 |
| 김○○ | 기획행정실 | 실장 | | | | ₩ 6,600,100 | \$ 237 | \$ 243 | \$ 90 |
| 이○○ | 기획행정실 | 5급 | 11.10.23~11.10.29 | 프랑스 파리 | FATF 제23기 제1차 총회 참석 | ₩ 2,446,000 | \$ 760 | \$ 486 | \$ 180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292,400 | \$ 975 | \$ 567 | \$ 210 |
| 최○○ | 심사분석실 | 5급 | | | | ₩ 2,290,000 | \$ 760 | \$ 486 | \$ 180 |
| 김○○ | 심사분석3과 | 5급 | 11.10.23~11.10.29 | 홍콩 | Financial Investigation Course 참석 | ₩ 649,500 | \$ 850 | \$ 486 | \$ 214 |
| 권○○ | 심사분석3과 | 경감 | | | | ₩ 648,800 | \$ 850 | \$ 402 | \$ 210 |
| 이○○ | 심사분석실 | 실장 | 12.01.08~12.01.15 | 프랑스 파리 | FATF 제23기 특별총회 참석 | ₩ 6,335,700 | \$ 960 | \$ 798 | \$ 265 |
| 이○○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166,300 | \$ 1,050 | \$ 729 | \$ 310 |
| 차○○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881,900 | \$ 900 | \$ 648 | \$ 258 |
| 이○○ | 기획행정실 | 팀장 | 12.01.29~12.02.05 | 캘리핀 마닐라 | 예그롱 그룹 실무회의 참가 | ₩ 681,600 | \$ 384 | \$ 259 | \$ 210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 | | ₩ 681,600 | \$ 384 | \$ 259 | \$ 330 |
| 고○○ | 심사분석2과 | 5급 | | | | ₩ 681,600 | \$ 384 | \$ 259 | \$ 210 |
| 정○○ | 심사분석1과 | 6급 | | | | ₩ 681,600 | \$ 360 | \$ 210 | \$ 182 |

| 직원명 | 부서 | 직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격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박○○ |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12.02.13~12.02.19 | 프랑스 파리 | FATF 제23기 2차 총회 참석 | ₩ 6,333,500 | \$ 720 | \$ 665 | \$ 700 |
| 송○○ | 제도운영과 | 과장 | | | | ₩ 2,378,100 | \$ 450 | \$ 405 | \$ 150 |
| 이○○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463,900 | \$ 750 | \$ 567 | \$ 247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164,700 | \$ 900 | \$ 648 | \$ 290 |
| 변○○ | 심사분석실 | 7급 | | | | ₩ 2,463,900 | \$ 792 | \$ 536 | \$ 208 |
| 황○○ | 심사분석실 | 팀장 | 12.04.15~12.04.21 | 싱가포르 | FATF WGFI 평가방법론 작성실무회의 참석 | ₩ 821,800 | \$ 517 | \$ 468 | \$ 251 |
| 이○○ | 기획행정실 | 5급 | | | | ₩ 821,800 | \$ 647 | \$ 413 | \$ 273 |
| 신○○ | 심사분석과 | 과장 | 12.04.24~12.04.29 | 말레이시아 | APG 실무회의 참석 | ₩ 820,100 | \$ 308 | \$ 220 | \$ 150 |
| 남○○ | 기획행정실 | 5급 | | | | ₩ 820,100 | \$ 308 | \$ 220 | \$ 150 |
| 박○○ |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12.05.27~12.06.01 | 미얀마, 태국, 베트남 |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및 MOU 체결 | ₩ 2,823,000 | \$ 416 | \$ 399 | \$ 240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 | | ₩ 1,744,700 | \$ 1,805 | \$ 243 | \$ 345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12.05.28~12.06.01 | 미얀마 |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 ₩ 1,484,600 | \$ 338 | \$ 220 | \$ 301 |
| 차○○ | 기획행정실 | 5급 | | | | ₩ 1,484,600 | \$ 338 | \$ 220 | \$ 150 |
| 이○○ | 기획행정실 | 에디터 | | | | ₩ 1,484,600 | \$ 338 | \$ 220 | \$ 150 |
| 권○○ | 심사분석실 | 팀장 | 12.06.13~12.06.23 | 이탈리아 로마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제23기 3차 총회 및 OECD Tax and Crime Forum 2012 참가 | ₩ 1,948,700 | \$ 1,219 | \$ 858 | \$ 385 |
| 박○○ |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12.06.17~12.06.23 | 이탈리아 로마 | FATF 제23기 3차 총회 참석 | ₩ 5,465,400 | \$ 608 | \$ 693 | \$ 280 |
| 김○○ | 기획행정실 | 실장 | | | | ₩ 2,036,800 | \$ 675 | \$ 413 | \$ 210 |
| 이○○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199,400 | \$ 944 | \$ 531 | \$ 332 |
| 이○○ | 기획행정실 | 에디터 | | | | ₩ 2,135,700 | \$ 809 | \$ 472 | \$ 264 |
| 이○○ | 심사분석실 | 실장 | | | | ₩ 5,976,500 | \$ 1,266 | \$ 891 | \$ 360 |
| 송○○ | 심사분석실 | 5급 | 12.07.07~12.07.15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제20차 예그공 연차총회 참석 | ₩ 1,979,600 | \$ 829 | \$ 531 | \$ 270 |
| 김○○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128,700 | \$ 968 | \$ 531 | \$ 270 |
| 차○○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128,700 | \$ 830 | \$ 531 | \$ 287 |
| 박○○ |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12.07.14~12.07.21 | 호주 브리즈번 | 제15차 APG 연차총회 참석 | ₩ 4,104,100 | \$ 435 | \$ 432 | \$ 240 |
| 임○○ | 심사분석과 | 과장 | | | | ₩ 2,332,400 | \$ 231 | \$ 352 | \$ 260 |
| 이○○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279,300 | \$ 1,846 | \$ 352 | \$ 314 |
| 남○○ | 기획행정실 | 5급 | | | | ₩ 2,431,000 | \$ 965 | \$ 264 | \$ 265 |
| 이○○ | 기획행정실 | 에디터 | | | | ₩ 2,332,400 | \$ 777 | \$ 308 | \$ 265 |
| 김○○ | 공자위 사무국 | 사무관 | 10.07.18~10.07.21 | 몽골 | 몽골 금융감독기구 및 부실채권관리기구 업무 협의 | ₩ 1,087,100 | ₩223,516 | ₩177,851 | ₩300,423 |
| 이○○ | 정책개발팀 | 서기관 | | | | ₩ 1,087,100 | \$ 186.00 | \$ 148.00 | \$ 240.00 |

| 직원명 | 부서 | 직임/직급 | 기간 | 출장국 | 출장내용 | 항공가액 | 숙박료 | 식사비 | 기타 여비 |
|-----|-----------|-------------|-------------------|------------------|--|-------------|----------|----------|----------|
| 박○○ | 공자위 사무국 | 사무관 | 10.10.04~10.10.07 | 홍콩 | 공적자금 투입기관 민영화를 위한 해외법인 매도자 심사지원 | ₩ 571,100 | ₩494,116 | ₩368,032 | ₩283,975 |
| 유○○ | 공자위 사무국 | 주무관 | | | | ₩ 571,100 | ₩439,593 | ₩304,422 | ₩254,441 |
| 김○○ | 공자위 사무국 | 사무관 | 10.12.20~10.12.25 | 워싱턴, 뉴욕 | 미국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정책조사 | ₩ 2,583,300 | ₩500,250 | ₩465,750 | ₩172,500 |
| 남○○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과장 | | | | ₩2,584,287 | \$435.00 | \$405.00 | \$150.00 |
| 장○○ | 공자위 사무국 | 사무관 | 10.12.20~10.12.24 | 영국 | 영국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정책조사 | ₩ 1,964,500 | ₩500,250 | ₩465,750 | ₩172,500 |
| 박○○ | 공자위 운용기획팀 | 팀장(4급) | 11.9.13~11.9.15 | 홍콩(HSBC, 로스 지월드)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매각관련 해외 투자자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 ₩ 648,800 | \$ 176 | \$ 243 | \$ 90 |
| 김○○ | 공자위 운용기획팀 | 행정사무관 | | | | ₩ 648,800 | \$ 176 | \$ 243 | \$ 90 |
| 유○○ | 공자위 운용기획팀 | 행정주사 | 11.12.5~11.12.9 | 피지(APEC FRTD) | ADB와 피지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 ₩ 1,649,300 | \$ 284 | \$ 150 | \$ 130 |
| 박○○ | 공자위 운용기획팀 | 팀장(4급) | 11.12.18~11.12.21 | 독일(FMSA) | 독일 금융시장인정자금 운용실태 및 현황조사 | ₩ 1,529,700 | \$ 232 | \$ 236 | \$ 120 |
| 유○○ | 공자위 운용기획팀 | 행정주사보 | | | | ₩ 1,529,700 | \$ 210 | \$ 196 | \$ 104 |
| 김○○ | 공자위 회수관리팀 | 행정주사 | | | | ₩ 1,529,700 | \$ 210 | \$ 196 | \$ 104 |
| 김○○ | 공자위 | 국장(일반고위공무員) | 12.3.27~11.3.31 | 미국 워싱턴 | 미국 공적자금 투입회수사례 및 Dodd-Frank 법에 따른 금융회사 합병 관련 규제변화 조사 | ₩ 7,533,600 | \$ 669 | \$ 535 | \$ 175 |
| 송○○ | 공자위 운용기획팀 | 행정사무관 | | | | ₩ 2,255,200 | \$ 528 | \$ 405 | \$ 150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1-2. 연도별(2009년~2012.6월) 임직원 법인카드 해외 사용 현황

1-3. 2010~2012.6월까지 임직원 법인카드 해외사용 내역

□ 연도별 임직원 법인카드 해외사용 현황(본부)

| 사용일 | 카드번호 | 사용자 | 사용처명 | 용도 | 출장명 |
|----------|---------------------|------|---------------------------------|-----------|--------------------------------------|
| 09.1.23 | 4067-0300-0036-3928 | 상임위원 | OVER EASY | 업무협의 |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출장 |
| 09.2.1 | 4067-0300-0036-3928 | 상임위원 | THE MET/ NOBU REST | 기자간담회 | |
| 09.3.20 | 4067-0300-0036-3928 | 상임위원 | TAMARINE RESTAURANT | 업무협의 | 한국경제 바로알리기 출장 |
| 09.5.27 | 4067-0300-0036-3928 | 상임위원 | Movenpick Bras. Baselstab | 관계자 면담 | FSB 오리엔테 이션 |
| 09.6.28 | 4067-0300-0036-2961 | 위원장 | REST. KOREA PAVILLON | 업무협의 | 홍콩비지 니스포럼 강연 및 FSB 총회 참석 |
| 09.6.27 | 4067-0300-0036-2961 | 위원장 | Restaurant Mandar in | 업무협의 | |
| 09.6.24 | 4067-0300-0036-2961 | 위원장 | ISLAND SHANGRI-LA | 업무협의 | |
| 09.6.25 | 4067-0300-0036-2961 | 위원장 | Rest Koreahof | 업무협의 | |
| 09.6.27 | 4067-0300-0036-3928 | 상임위원 | Hotel Euler + Hotel Centr | 관계자 면담 | |
| 09.8.27 | 4067-0300-0036-3928 | 상임위원 | RULES | 기자간담회 | FSB 운영위원회 |
| 09.9.15 | 4067-0300-0048-6901 | 위원장 | LAVINIA | 업무협의 | FSB 총회 |
| 09.10.25 | 4067-0300-0036-3928 | 상임위원 | TRATTORIA DA ALFREDO | 업무협의 | FSB 운영위원회 |

| 사용일 | 카드번호 | 사용자 | 사용처명 | 용도 | 출장명 |
|---------|---------------------|------------|---------------------------------|------|---------------------------|
| 10.1.10 | 4067-0300-0048-6901 | 위원장 | RESTAURANT GO GUNG | 업무협의 | FSB 총회 |
| 10.5.11 | 4067-0300-0036-2979 | 부위원장 | HALDHI RESTAURANT | 업무협의 | 한국금융 IR |
| 10.12.9 | 4067-0300-0047-4972 | 이종석 사무관 | ITAMAESUSHI AKASAKATEN | 업무협의 | 일본금융청 면담 |
| 11.1.27 | 4067-0300-0049-4913 | 최명수 과장 | STS UNITED PTY LTD | 업무협의 |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
| 11.1.28 | 4067-0300-0049-4913 | 최명수 과장 | LEGAL GROUNDS CAFE | 업무협의 | |
| 11.1.29 | 4067-0300-0049-4913 | 최명수 과장 | SHINARA GRILL AND LOUNGE | 업무협의 | |
| 11.9.29 | 4067-0300-0036-3910 | 증선위원 | UDONYA. GIDA URUNLERI AS. | 업무협의 | 터키 IFS 회의 |
| 11.9.29 | 4067-0300-0036-3910 | 증선위원 | HILTON INTERNATIONAL ISTA | 업무협의 | |

□ 연도별 임직원 법인카드 해외사용 현황(금정국 기본경비)

| 사용일 | 카드번호 | 사용자 | 사용처명 | 용도 | 출장명 |
|--------|---------------------|------|--------------------|------|---|
| 09.7.2 | 4067-0300-0040-8939 | 금정국장 | Restau le Seoul | 업무협의 | 한국정책 금융공사 설립 관련 선진국 주요 정책금융 기관 방문 |
| 09.7.2 | 4067-0300-0040-8939 | 금정국장 | Sushi Gourmet | 업무협의 |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에 대한 해외 대응방향 논의 출장 |

□ 법인카드 해외사용 현황(금융서비스국)

| 사용일자 | 카드번호 | 사용자 | 사용내역 | 가맹점명 | 업종구분 |
|------------|---------------------|-------------------|---|---------------------------|-------------|
| 2009-05-02 | 4067-0300-0041-3954 | 임승태 | 세계저축은행협회 총회 | HOTEL PORTILLO | 호텔업 |
| 2009-05-20 | 4067-0300-0041-5918 | 김광수 | 글로벌 금융시스템 협력도모를 위한 영국 출장 관련 | ICHI-RIKI SUSHI HOUSE | 기타 일반 음식점업 |
| 2009-06-05 | 4067-0300-0041-4903 | 김주현 | IOSCO연차총회 참가비 | 상호없음 | 일반 및 국제 여행사 |
| 2009-06-16 | 4067-0300-0041-4903 | 변제호 | IOSCO총회 등록비 | 상호없음 | 일반 및 국제 여행사 |
| 2009-09-08 | 4067-0300-0041-3954 | 이창용 | 동경 IR 관련 간담회 | 상호없음 | 호텔업 |
| 2009-09-09 | 4067-0300-0041-3962 | 김주현 | 중국 상해 IR 관련 오찬 | SHANG HAI WAN JING CAN YI | 기타 일반 음식점업 |
| 2009-09-09 | 4067-0300-0041-3962 | 김주현 | 중국 상해 IR 관련 간담회 | 상호없음 | 기타 일반 음식점업 |
| 2010-05-24 | 4067-0300-0041-4903 | 성대규 | 국제보험학회(IIS) 회의 참석비 | 상호없음 | 기타업종 |
| 2010-10-08 | 4067-0300-0041-4903 | 최종구 | 제17차 IAIS 연차총회 회의참가비 | 상호없음 | 부동산 중개업 |
| 2011-11-22 | 4067-0300-0041-4952 | 김정각 이종림 신장수 | 커버드본드 해외사례 및 외은지점 해외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철도운임 | Hispeed | 철도 운송업 |

□ 법인카드 해외사용 현황 및 내역(자본시장국)

| 사용일시 | 카드번호 | 카드 지급부서 | 카드 사용자 | 사용 처명 | 외화사용액 (지급금액) | 용도 | 해당 출장명 |
|------------------------|-----------------------------|------------|------------|---------------------------|-------------------------|------------------------------------|-------------------------------------|
| '10.05.31 '10.06.01 | 4067-03 00-0050 -4927 | 자본 시장국 | 최규연 이한진 | AMF OICV 2010 | \$2,998 (3,655,692원) | 2010년 IOSCO 연차총회 등록비 (2인) | 2010년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미국IB 방문 |
| '10.06.12 | 4067-03 00-0050 -5940 | 자본 시장국 | 최규연 이한진 | HWAL UH WHET JIP | \$323 (407,026원) | IOSCO 참석 유관기관 간담회 | 2010년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미국IB 방문 |
| '10.10.08 | 4067-03 00-0050 -5940 | 자본 시장국 | 최규연 이한샘 | INDO- CHI- NE | \$63 (72,321원) | 베트남 현지 진출 한국 금융기관 간담회 | 라오스 및 베트남 출장 |
| '11.04.07 | 4067-03 00-0050 -4927 | 자본 시장국 | 전수한 | 상호 없음 | \$1,991 (2,110,599원) | 2011년 IOSCO 연차총회 등록비 | 2011년 IOSCO 연차총회 참석 |
| '12.05.03 '12.05.09 | 4067-03 00-0061 -6945 | 자본 시장국 | 진웅섭 김승민 | 상호 없음 | \$4,197 (4,812,681원) | 2012년 IOSCO 연차총회 등록비 (2인) | 2012년 IOSCO 연차총회 참석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 경영효율화 관련

2-1. 연도별(2009년 ~ 2012.6월) 노사합의서 및 노조요구사항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2. 연도별(2009년 ~ 2012.6월) 기관장, 임원별, 직원 직급별 임·직원의 평균연봉(급여)액 및 급여 인상을

○ 국가공무원 보수체계

| 구 분 | 보수체계(단위 : 천 원) |
|-------------------|--|
| 정무직 | 고정급적 연봉제 (장관급 : 106,273, 차관급 : 103,209) |
| 고위공무원단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준급+직무급+성과급) (기준급 : 51,524~76,700, 직무급 : 4,800~10,800,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
| 과장급 | 성과급적 연봉제 (3급 : 53,632~79,837, 4급 : 42,449~73,036) |
| 4급 이하 (과장급 제외) |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4, 5, 8, 10의 봉급표)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지급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3. 연도별(2009년~2012.6월) 기관별 후생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내역, 출연사유, 후생
복지기금의 지출항목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4. 연도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해고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현황(청년인턴 별도)

□ 09년 이후 연도별 비정규직 고용·해고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현황(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 연도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8월말기준) | | |
|--------------------------|------------------|-------|-------|-------|------------------|------------------|------------|
| 기간제 | 고 용 현 황 | 17 | 27 | 17 | 13 | 해 고 현 황 | 해당사항 없음 |
| 무기계약직 | | 7 | 13 | 21 | 27 | | |
| 기간제 ⇒ 무기 계약직 전환 인원 | | 0 | 6 | 8 | 6 | | |

*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 09년 이후 청년 인턴 채용현황 관련

|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
| 채용인원 | 8 | 5 | 0 | 0 |
| 중도탈락인원 | 7 | 3 | - | - |
| 계약종료인원 | 1 | 2 | - | - |
| 계약연장 및 정규직 채용인원 | 0 | 0 | - | -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5. 연도별(2009년~2012.6월) 기관장 및 임원별, 기타 직급/팀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사용액

□ 연도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사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사업명 | 사용자 | 연도 | 배정액 | 사용액 | 비고 |
|-------------------------------|---|----|-----|-----|----|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미대상)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및 국,과장 등 | 09 | 705 | 509 | |
| | | 10 | 593 | 507 | |
| | | 11 | 564 | 507 | |
| | | 12 | 604 | 258 | |
|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미대상) | 대변인, 정책홍보팀장, 홍보전문관, 외신대변인 | 09 | - | - | |
| | | 10 | 45 | 51 | |
| | | 11 | 81 | 81 | |
| | | 12 | 81 | 36 | |
| 금융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미대상) | 금정국 및 금정국장·과장· 팀장 | 09 | 21 | 21 | |
| | | 10 | 19 | 19 | |
| | | 11 | 22 | 22 | |
| | | 12 | 37 | 20 | |
| 금융서비스국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미대상) |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정책관, 중소서민금융 정책관, 과장 등 | 09 | 57 | 56 | |
| | | 10 | 29 | 29 | |
| | | 11 | 34 | 34 | |
| | | 12 | 34 | 23 | |
| 자본시장국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미대상) | 자본시장국장 및 과장 등 | 09 | - | - | |
| | | 10 | 29 | 29 | |
| | | 11 | 32 | 32 | |
| | | 12 | 34 | 20 | |

| 소관사업명 | 사용자 | 연도 | 배정액 | 사용액 | 비고 |
|-------------------------------|------------------------------------|----|------|------|----|
|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미대상) | 공자위사무국장, 운용기획팀장, 회수관리팀장 등 | 09 | - | - | |
| | | 10 | 40 | 40 | |
| | | 11 | 40 | 40 | |
| | | 12 | 40 | 19 | |
| 금융업법 체계개편 | 금정국 및 금정국장·과장· 팀장 | 09 | 17 | 15 | |
| | | 10 | 15 | 15 | |
| | | 11 | 15 | 15 | |
| | | 12 | - | -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 국제협력관, 글로벌금융과장 등 | 09 | 98 | 22 | |
| | | 10 | 98 | 85 | |
| | | 11 | 100 | 79 | |
| | | 12 | 68 | 30 | |
| 금융중심지 추진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팀장 등 | 09 | 30 | 25 | |
| | | 10 | 30 | 30 | |
| | | 11 | 30 | 28 | |
| | | 12 | 20 | 12 | |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 금융서비스국장, 은행과장 등 | 09 | 13 | 11 | |
| | | 10 | 14 | 13 | |
| | | 11 | 17 | 15 | |
| | | 12 | 17 | - | |
| FIU운영 | 원장 기획행정실장, 심사분석실장, 제도운영과장 | 09 | 61.6 | 61.5 | |
| | | 10 | 62 | 62 | |
| | | 11 | 62 | 62 | |
| | | 12 | 80 | 39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사업담당자 | 09 | 20 | 18 | |
| | | 10 | 17 | 16 | |
| | | 11 | 17 | 16 | |
| | | 12 | 20 | 8 |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6. 2011~2012.6까지 기관장 및 부기관장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 별도제출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7. 연도별(2009년 ~ 2012.6월) 임직원 자녀 채용
(공/특채 구분) 현황, 노사합의사항 중 임직원
채용 관련 사항, 임직원 (특별)채용 관련 내부
규정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2-8. 연도별(2009~2012) 예산현황

□ '09 ~ '12년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
| 일반회계 | 2,886,807 | 3,146,391 | 1,555,631 | 423,107 |
| 금융업법제체계개편 (직접, 1131-301) | 79 | 79 | 71 | |
| 녹색금융 (직접, 1131-307) | | 150 | | |
| 한국산업은행출자 (출자, 1132-301) | 900,000 | 10,000 | | |
| 중소기업은행 출자 (출자, 1133-301) | 800,000 | 30,000 | |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출자, 1134-301) | 600,000 | | | |
| 역모기지론활성화출연 (출연, 1233-301) | 3,000 | | | |
| 금융관련국제협력 (직접, 1431-302) | 373 | 637 | 573 | 432 |
| 금융중심지추진 (직접, 1435-301) | 300 | 298 | 213 | 126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보조, 1435-302) | 450 | 500 | 510 | 460 |
| 금융전문인력양성 (보조, 1435-303) | 1,500 | 1,900 | 1,350 | 1,305 |
| 모기지론이차보전 (보조, 2631-541) | 3,903 | 4,563 | 4,700 | 9,720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출자, 2632-301) | 400,000 | | | |

|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
| 금융정책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직접, 7111-203) | 62 | 72 | 72 | 72 |
| 금융정책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직접, 7111-253) | 267 | 298 | 335 | 304 |
| 저축의날 행사 및 저축장려 (직접, 1231-301) | 72 | 74 | 60 | 60 |
| 농어기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출연, 1231-881) | 65,000 | 65,200 | 63,700 | 36,900 |
| 금융소비자보호 (직접, 1232-301) | | | 128 | |
| 금융서비스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직접, 7111-204) | 72 | 49 | 55 | 56 |
| 금융서비스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직접, 7111-254) | 452 | 240 | 302 | 274 |
| IFIAR총회 (직접, 1400-304) | | | | 100 |
| 자본시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직접, 7111-205) | | 49 | 49 | 49 |
| 자본시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직접, 7111-255) | | 238 | 261 | 257 |
| FIU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직접, 7102-101) | 2,781 | 2,879 | 2,926 | 3,040 |
| FIU운영 (직접, 1331-301) | 1,102 | 1,256 | 1,295 | 1,198 |
| APG유형론 실무회의 (직접, 1331-302) | | | 430 |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직접, 1331-501) | 4,757 | 4,656 | 4,623 | 4,738 |
|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직접, 7101-101) | 11,533 | 11,524 | 12,779 | 13,383 |

|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직접, 7111-201) | 989 | 1,321 | 1,379 | 1,482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직접, 7111-252) | 6,547 | 4,229 | 4,249 | 4,742 |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직접, 7132-501) | 604 | 570 | 542 | 510 |
| 정책연구개발 (직접, 7135-302) | 500 | 600 | 650 | 640 |
| 공자위사무국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직접, 7102-102) | | 625 | 645 | 640 |
|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직접, 7118-201) | | 89 | 89 | 93 |
|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직접, 7118-251) | | 370 | 400 | 379 |
|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전출금 (직접, 8411-880) | 78,660 | 3,000,000 | 1,449,353 | 338,537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직접, 7135-301) | 127 | 121 | 113 | 106 |
|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 차관원금상환 (직접,8611-881) | 2,636 | 2,948 | 2,754 | 2,755 |
|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차관이자 상환 (직접, 8711-882) | 574 | 340 | 424 | 125 |
| 대변인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직접, 7111-202) | 11 | 17 | 17 | 17 |
| 대변인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직접, 7111-252) | 197 | 168 | 254 | 292 |
| 금융정책알리기 (직접, 7135-303) | 260 | 330 | 330 | 314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3. 경영투명성 관련

3-1. 연도별(2009년~2012.6월) 공용카드 발급현황 및 실사용자

☐ 공용카드 발급현황

| 소관 | 연도 | 카드번호 | 발행기관 | 유효기간 | 사용자 |
|--------|----|---------------------|------|-------|----------------|
| 본부 | 09 | 4067-0300-0036-3928 | 기업은행 | 02/13 | 상임위원 |
| | 09 | 4067-0300-0044-5907 | 기업은행 | 02/13 | 상임위원 |
| | 09 | 4067-0300-0036-2995 | 기업은행 | 02/13 | 부위원장실 |
| | 09 | 4067-0300-0036-3985 | 기업은행 | 02/13 | 기재단국장 |
| | 09 | 4067-0300-0045-4917 | 기업은행 | 01/14 | 위원장 |
| | 09 | 4067-0300-0048-6901 | 기업은행 | 06/14 | 위원장 |
| | 09 | 4067-0300-0036-3936 | 기업은행 | 02/13 | 위원장실 |
| | 09 | 4067-0300-0036-3977 | 기업은행 | 02/13 | 기재단과장 |
| | 09 | 4067-0300-0036-3951 | 기업은행 | 02/13 | 행정인사과 |
| | 09 | 4067-0300-0049-4913 | 기업은행 | 08/14 | 행정인사과 |
| | 10 | 4067-0300-0056-1992 | 기업은행 | 10/15 | 행정인사과 |
| | 10 | 4067-0300-0050-7953 | 기업은행 | 12/14 | 행정인사과 |
| | 10 | 4067-0300-0056-3915 | 기업은행 | 11/15 | 행정인사과 |
| | 11 | 9470-0300-0046-3983 | 기업은행 | 02/14 | 행정인사과 |
| | 11 | 4067-0300-0059-5982 | 기업은행 | 03/14 | 행정인사과 |
| | 11 | 4067-0300-0059-8952 | 기업은행 | 04/16 | 사무처장 |
| | 11 | 4067-0300-0056-9995 | 기업은행 | 12/15 | 위원장실 |
| | 11 | 9470-0300-0061-5988 | 기업은행 | 02/13 | 기사실 |
| 기획조정관실 | 09 | 9470-0300-0048-2991 | BC카드 | 05/14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1 | 9470-0300-0061-0930 | BC카드 | 07/16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09 | 9470-0300-0050-1972 | BC카드 | 11/14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09 | 9470-0300-0041-7997 | BC카드 | 03/13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 | 11 | 9470-0300-0061-5905 | BC카드 | 09/16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 | 09 | 9470-0300-0041-8904 | BC카드 | 03/13 | 의사운영정보팀 |

| 소관 | 연도 | 카드번호 | 발행기관 | 유효기간 | 사용자 |
|-------|----|---------------------|------|---------------|---------------|
| | 11 | 4067-0300-0041-2980 | BC카드 | 02/13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1 | 4067-0300-0061-3991 | BC카드 | 08/16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0 | 9470-0300-0041-2998 | BC카드 | 02/13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1 | 9470-0300-0041-3905 | BC카드 | 02/13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0 | 9470-0300-0041-3913 | BC카드 | 02/13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1 | 9470-0300-0044-0924 | BC카드 | 해지 (11/11)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1 | 9470-0300-0049-8989 | BC카드 | 09/14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1 | 4067-0300-0058-6965 | BC카드 | 12/15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12 | 9470-0300-0064-7957 | BC카드 | 04/17 | 기획재정담당관실 |
| 대변인실 | 10 | 4067-1136-0802-2946 | 비씨농협 | 03/13 | 대변인실 |
| | 10 | 4067-1136-0802-2904 | 비씨농협 | 03/13 | 대변인실 |
| | 11 | 4067-1136-0802-2912 | 비씨농협 | 03/13 | 정책홍보팀장 |
| | 11 | 4067-1136-0802-2920 | 비씨농협 | 03/13 | 대변인 |
| | 12 | 9470-1136-0940-5991 | 비씨농협 | 03/13 | 외신대변인 |
| | 12 | 9470-1136-1000-9949 | 비씨농협 | 12/14 | 대변인실 |
| | 12 | 9470-1136-1212-9943 | 비씨농협 | 06/17 | 정책홍보팀장 |
| 금융정책국 | 10 | 9470-0300-0051-7960 | 기업은행 | 01/15 | 금융정책국 |
| | 10 | 9470-0300-0051-8992 | 기업은행 | 02/15 | 금융정책국 |
| | 10 | 9470-0300-0051-9909 | 기업은행 | 02/15 | 금융정책국 |
| | 11 | 4067-0300-0058-7948 | 기업은행 | 01/16 | 금융정책국 |
| | 11 | 4067-0300-0061-0955 | 기업은행 | 07/16 | 금융정책국 |
| | 11 | 4067-0300-0061-0948 | 기업은행 | 07/16 | 금융정책국 |
| | 12 | 9470-0300-0064-4921 | 기업은행 | 02/17 | 금융정책국 |
| 서비스국 | 09 | 4067-0300-0046-5962 | 기업은행 | 03/14 | 보험과 |
| | 09 | 4067-0300-0048-9954 | 기업은행 | 07/14 | 업추비 공용 |
| | 10 | 9470-0300-0051-9925 | 기업은행 | 02/15 | 서민금융과 |
| | 10 | 4067-0300-0052-1962 | 기업은행 | 03/15 | 업추비 공용 |
| | 10 | 4067-0300-0056-1976 | 기업은행 | 10/15 | 은행과장 |
| | 11 | 4067-0300-0061-9998 | 기업은행 | 11/16 | 중소서민 금융정책관 |
| | 11 | 9470-0300-0061-9972 | 기업은행 | 11/16 | 금융소비자과 |
| | 11 | 9470-0300-0061-9980 | 기업은행 | 11/16 | 전자금융팀 |
| | 11 | 9470-0300-0061-9964 | 기업은행 | 11/16 | 특근 예비용 |
| | 12 | 4067-0300-0064-3972 | 기업은행 | 01/17 | 중소금융과장 |
| | 12 | 4067-0300-0064-4913 | 기업은행 | 01/17 | 업추비 공용 |
| 자본시장국 | 09 | 4067-0300-0050-4950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과 |

| 소관 | 연도 | 카드번호 | 발행기관 | 유효기간 | 사용자 |
|------------|----|---------------------|------|-------|--------|
| | 09 | 4067-0300-0050-4943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과 |
| | 09 | 4067-0300-0050-4968 | 기업은행 | 12/14 | 자산운용과 |
| | 09 | 4067-0300-0050-4976 | 기업은행 | 12/14 | 공정시장과 |
| | 09 | 4067-0300-0050-4927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4935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4984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4992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5908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5916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5924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장 |
| | 09 | 4067-0300-0050-5932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5940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09 | 4067-0300-0050-5957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 12 | 4067-0300-0061-6945 | 기업은행 | 12/14 | 자본시장국 |
| 공자위 사무국 | 09 | 4067-0300-0049-2966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2974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07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2990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15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2982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23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31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49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56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72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64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80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4905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 09 | 4067-0300-0049-3998 | 기업은행 | 08/14 | 공자위사무국 |
| FIU | 12 | 4067-0300-0051-8914 | 기업은행 | 02/13 | 기획행정실장 |
| 글로벌 금융과 | 09 | 9470-0300-0045-4925 | 기업은행 | 01/14 | 글로벌금융과 |
| | 11 | 9470-0300-0045-4941 | 기업은행 | 01/14 | 글로벌금융과 |
| | 12 | 4067-0300-0045-4966 | 기업은행 | 01/14 | 글로벌금융과 |
| | 12 | 9470-0300-0046-1938 | 기업은행 | 02/14 | 글로벌금융과 |
| | 12 | 4067-0300-0051-1922 | 기업은행 | 01/15 | 글로벌금융과 |
| | 12 | 9470-0300-0051-1930 | 기업은행 | 01/15 | 글로벌금융과 |

| 소관 | 연도 | 카드번호 | 발행기관 | 유효기간 | 사용자 |
|-------|----|---------------------|------|-------|--------|
| | 12 | 4067-0300-0059-9992 | 기업은행 | 05/16 | 글로벌금융과 |
| 국제협력팀 | 09 | 4067-0300-0048-8972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48-8980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48-8998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48-9905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48-9913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48-9921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48-9947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48-9939 | 기업은행 | 07/14 | 국제협력팀 |
| | 09 | 9470-0300-0049-8906 | 기업은행 | 09/14 | 국제협력팀 |
| | 09 | 9470-0300-0049-8914 | 기업은행 | 09/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50-1949 | 기업은행 | 11/14 | 국제협력팀 |
| | 09 | 4067-0300-0050-1956 | 기업은행 | 11/14 | 국제협력팀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3-2. 연도별(2009년~2012.6월) 공용카드(법인카드, 클린카드 등)에 대한 자체감사, 감사원, 총리실, 청와대, 경찰, 검찰 등 외부기관의 부당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4. 연구용역 관련

4-1. 연도별('09~'12년 6월) 연구용역 내역

□ 2009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 방식 | 활용내용 |
|----|---|-----------------------|------------------------|--------------|-----------|---|
| 1 |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 09.04.13~ 09.08.14 |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 30 | 수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마련시 활용 |
| 2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 09.03.16~ 09.12.16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재) | 45 | 경쟁→ 수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수립에 활용 |
| 3 |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 09.06.01~ 09.08.31 |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 20.5 | 수의 | 자본-외환시장 연계성 분석-정책적 함의 활용 |
| 4 |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09.06.10~ 09.08.15 |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홍식) | 40 | 수의 | 예보법 개정 등 정책추진 과정에 참고 |
| 5 |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 09.05.13~ 09.11.30 |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오용협) | 30 | 수의 | 금융중심지 정책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 |
| 6 |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 09.05.28~ 09.11.11 |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 28.8 | 경쟁→ 수의 | 현행 위탁보증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 7 |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 09.04.21~ 09.08.28 |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 30 | 경쟁→ 수의 | 금융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등에 활용 |
| 8 |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 09.07.09~ 09.11.30 |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 35 | 수의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기초자료로 활용 |
| 9 |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09.08.05~ 09.12.02 |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 32 | 경쟁→ 수의 |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방안마련 등에 활용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시 활용 |
| 10 |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 09.08.28~ 09.12.28 | 아주대 산학협력단 (이운제) | 35 | 경쟁→ 수의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마련에 활용 |
| 11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 09.10.07~ 09.12.06 |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 30 | 수의 | 은행산업의 성장 전략과 발전방안을 위한 참고자료 |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방식 | 활용내용 |
|----|--|-----------------------|-----------------------|--------------|------|---|
| 12 |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 09.10.15~ 09.12.17 |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 40 | 수의 | 주요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에 참고 |
| 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 09.09.30~ 09.12.05 |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 20 | 수의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의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 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09.09.18~ 09.12.17 | (사)한국보험연구원 (유경원) | 20 | 수의 | 보험산업의 신성장 전략 및 발전방안마련에 참고 |
| 15 |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 09.10.08~ 09.12.23 |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 20 | 수의 | 신용평가회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평가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 |
| 16 |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 09.11.11~ 09.12.10 |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 23 | 수의 | 미소금융사업 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 |
| 17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 09.09.16~ 09.11.16 |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 20 | 수의 | 중장기적으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참고 |

※ 계약방식 “경쟁→수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경쟁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2010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방식 | 활용내용 |
|----|---------------------------|-----------------------|-----------------------|--------------|-----------|--|
| 1 |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 10.03.26~ 10.07.25 | 한국개발연구원 (손옥) | 30 | 수의 | 저축은행, 신탁 등 기존 서민금융 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참고 |
| 2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 10.04.01~ 10.07.31 |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 30 | 수의 | 장외 파생상품 CCP 도입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시 활용 |
| 3 |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 10.04.19~ 10.08.31 |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 40 | 수의 |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안 참고자료로 활용 |
| 4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 10.05.28~ 10.07.31 | 법무법인 율촌 (김정수) | 30 | 경쟁→ 수의 | 11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시 활용 |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 방식 | 활용내용 |
|----|--|-----------------------|----------------------------|--------------|-----------|---|
| 5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 10.04.13~ 10.07.12 |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 45.5 | 경쟁→ 수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마련시 활용 |
| 6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 10.06.09~ 10.7.30 |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 30 | 수의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안 마련시 참고 |
| 7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 10.04.09~ 10.09.03 |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 30 | 수의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투자산업 역할 제고 방안 마련시 참고 |
| 8 |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 10.05.01~ 10.10.31 |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 20 | 수의 | 금융위 조기경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등에 활용 |
| 9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10.08.30~ 10.12.20 |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 30 | 수의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참고 |
| 10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 10.09.16~ 10.12.15 |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 30 | 수의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대비 |
| 11 |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 10.09.20~ 10.12.20 |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 25 | 수의 | 현행 외환건전성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검토 |
| 12 |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 10.10.11~ 10.12.11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 30 | 수의 | 국내 개인신용정보 평가 및 유통 제도개선 활용 |
| 13 |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 10.10.11~ 10.12.11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 25 | 수의 | 해외 점포에 대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시에 활용 |
| 14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 10.10.15~ 10.12.14 |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 30 | 수의 | 파생상품 제도개선 관련 정책수립에 참조 |
| 15 |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 10.10.15~ 10.12.14 |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 30 | 수의 | '감리조치 개선방안'에 참조 |
| 16 |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 10.04.20~ 10.11.30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 30 | 경쟁→ 수의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중 비금융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수립시 용역 결과를 반영 |
| 17 |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 10.10.27~ 10.12.27 | (주)데이터메이선 (한미혜) | 27.7 | 경쟁→ 수의 | 자금세탁판단지표의 유용성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보고서 품질개선에 활용 |
| 18 |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10.10.25~ 10.12.20 |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 47.5 | 수의 | 해외 국가경쟁력 지수 등에 대한 대응 및 국내 평가기관의 설문 수행방식 개선 등에 활용 |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 방식 | 활용내용 |
|----|--|-----------------------|------------------|--------------|----------|----------------------------------|
| 19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 10.11.03~ 10.12.20 |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 10 | 수의 | 자본시장관련 미국 금융규제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 20 |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 10.11.03~ 10.12.20 | 보험연구원 | 3 | 수의 | 미국 금융개혁 관련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검토 |

□ 2011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 방식 | 활용내용 |
|----|---|-----------------------|-------------------|--------------|-----------|--|
| 1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 11.01.27~ 11.06.02 | 금융연구원 (이명활) | 40 | 수의 |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적극 활용 |
| 2 |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 11.04.06~ 11.05.30 | 금융연구원 (이병윤) | 20 | 수의 | 금감원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방안 마련 |
| 3 |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 11.05.02~ 11.06.30 |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 30 | 수의 | 동 연구내용의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여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 4 |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 11.06.27~ 11.09.26 | KDI (정찬우) | 15 | 수의 | 과거 부실원인 연구를 통해 향후 저축은행 건전화 방안 정책입안 참고자료로 활용 |
| 5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 11.07.01~ 11.12.30 | KDI (고영선) | 50 | 수의 | 금융위기 극복과정 기술 및 시사점을 도출 |
| 6 |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 11.07.11~ 11.11.04 |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 30 | 수의 | 대형IB 자기자본규제 방안 마련시 정책 참고자료 및 법령 개정에 반영 |
| 7 |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 11.07.26~ 11.11.30 | KDI (천규승) | 25 | 경쟁→ 수의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책 추진에 활용 |
| 8 |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 11.08.19~ 11.10.31 |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중) | 29 | 경쟁→ 수의 | 한-미 및 한-EU FTA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해외위탁 허용에 필요한 정책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 |
| 9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 11.09.23~ 11.12.15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 30 | 수의 |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 |

| 연 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 방식 | 활용내용 |
|--------|--|-----------------------|------------------------|--------------|-----------|---|
| 10 |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11.10.04~ 11.12.20 |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 39 | 경쟁→ 수의 | 우리나라 환경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위험성과악과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 |
| 11 |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 11.10.12~ 11.12.20 | 금융연구원 (이윤석) | 44 | 경쟁→ 수의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국내 입법 연구 및 외국사례 연구 |
| 12 |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 11.10.19~ 11.12.16 | 금융연구원 (이규복) | 30 | 수의 |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장개편에 활용 |
| 13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 11.10.19~ 11.12.20 | 금융연구원 (김동환) | 30 | 경쟁→ 수의 | 국내 SIFI 규제 제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
| 14 |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 11.10.25~ 11.12.15 | 금융연구원 (연태훈) | 30 | 수의 | EFT 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마련시 참고 |
| 15 |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 11.10.26~ 11.12.25 | 건국대산학협력 단 (고성수) | 30 | 경쟁→ 수의 | 현행 부동산개발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 16 |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 11.10.27~ 11.12.27 | 금융연구원 (이윤석) | 30 | 수의 | 외은지점 규제체계 정비 방안 모색 |
| 17 |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 11.07.15~ 12.02.29 |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윤덕용) | 35 | 경쟁→ 수의 | 외환 자본시장을 이용한 광범위한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을 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기법 개발에 활용 |
| 18 |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 11.12.22~ 12.04.21 | 금융연구원 (구본성) | 30 | 수의 | 현행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지원 제도의 문제점 분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감독측면에 정책 수립에 활용 |

□ 2012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방식 |
|----|--|-----------------------|--|--------------|--------|
| 1 |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2.04.06~ 12.06.03 |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 20 | 수의회약 |
| 2 |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 12.04.24~ 12.09.23 |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 26 | 경쟁→수의회 |
| 3 |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 12.04.30~ 12.08.31 | 보험연구원 (김대환) | 30 | 수의회약 |
| 4 | 금융세계 현황 및 발전 방향 | 12.05.04~ 12.08.31 | 금융연구원 (연태훈) | 30 | 경쟁→수의회 |
| 5 |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 12.05.18~ 12.10.31 |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 39 | 경쟁→수의회 |
| 6 |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2.05.25~ 12.08.23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 35 | 경쟁→수의회 |
| 7 |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 12.06.08~ 12.07.07 | 한국갤럽연구소 (박병일) | 10 | 수의회약 |
| 8 |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 12.06.25~ 12.10.31 |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 26 | 경쟁→수의회 |
| 9 |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 12.07.06~ 12.10.05 |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 20 | 경쟁→수의회 |
| 10 |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 12.07.17~ 12.11.20 |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 40 | 경쟁→수의회 |
| 11 |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 체계 개편방향 | 12.07.26~ 12.11.26 |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 30 | 경쟁→수의회 |
| 12 |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 12.07.30~ 12.10.29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 20 | 수의회약 |
| 13 | 가계부채 미시분석 | 12.08.16~ 12.11.15 |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 40 | 경쟁→수의회 |
| 14 |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 기준 이행 방안 | 12.08.20~ 12.12.20 |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 35 | 경쟁→수의회 |
| 15 |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정보 제공방안 | 12.09.10~ 12.11.30 |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 34 | 경쟁입찰 |
| 16 |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 (금융부문 중심) | 12.09.13~ 12.12.30 |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 35 | 경쟁입찰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4-2. 연도별('09~'12년 6월) 연구용역비 현황

□ 연도별 연구용역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용역 건수 | 예산액 | 전년대비 증감율 | 집행액 (%) | 이전용액 (%) | 불용액 (%) | 이월액 (%) |
|------|----------|-----|-------------|------------|-------------|------------|------------|
| 2008 | 12 | 630 | - | 358(56.8) | - | 272(43.2) | - |
| 2009 | 17 | 500 | △20.7 | 499(99.9) | - | 1(0.2) | - |
| 2010 | 20 | 600 | 20.0 | 574(95.6) | - | 26(4.3) | - |
| 2011 | 18 | 650 | 8.3 | 502(77.2) | - | 83(12.8) | 65(10) |
| 2012 | 22 | 640 | △1.5 | 470(73.4)* | - | - | - |

* 2012. 9월말 현재 계약 체결 기준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4-3. 연도별('09~'12년 9월) 발주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의 건수 및 금액

□ 연도별 연구용역 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 용역수 | 계약총액 | 수의계약 | | 경쟁입찰 |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9 | 17 | 499 | 12 | 328 | 5 | 171 |
| 2010 | 20 | 574 | 16 | 441 | 4 | 133 |
| 2011 | 18 | 567 | 11 | 335 | 7 | 232 |
| 2012.9월 | 16 | 640 | 4 | 80 | 12 | 390 |

참고

2009년~2012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 2009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방식 |
|----|---|-----------------------|---------------------|--------------|-------|
| 1 |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 09.04.13~ 09.08.14 |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 30 | 수의계약 |
| 2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 09.03.16~ 09.12.16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재) | 45 | 경쟁→수의 |
| 3 |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 09.06.01~ 09.08.31 |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 20.5 | 수의계약 |
| 4 |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09.06.10~ 09.08.15 |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홍식) | 40 | 수의계약 |
| 5 |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 09.05.13~ 09.11.3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협) | 30 | 수의계약 |
| 6 |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 09.05.28~ 09.11.11 |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 28.8 | 경쟁→수의 |
| 7 |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 09.04.21~ 09.08.28 |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 30 | 경쟁→수의 |
| 8 |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 09.07.09~ 09.11.30 |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 35 | 수의계약 |
| 9 |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09.08.05~ 09.12.02 |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 32 | 경쟁→수의 |
| 10 |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 09.08.28~ 09.12.28 | 이주대 산학협력단 (이윤제) | 35 | 경쟁→수의 |
| 11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 09.10.07~ 09.12.06 |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 30 | 수의계약 |
| 12 |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 09.10.15~ 09.12.17 |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 40 | 수의계약 |
| 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 09.09.30~ 09.12.05 |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 20 | 수의계약 |
| 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09.09.18~ 09.12.17 | (사)한국보험연구원 (유경원) | 20 | 수의계약 |
| 15 |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 09.10.08~ 09.12.23 |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 20 | 수의계약 |
| 16 |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 09.11.11~ 09.12.10 |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 23 | 수의계약 |
| 17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 09.09.16~ 09.11.16 |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 20 | 수의계약 |

□ 2010년

| 연번 | 과 제 명 | 계약 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 방식 |
|----|--|-----------------------|----------------------------|--------------|----------|
| 1 |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 10.03.26~ 10.07.25 | 한국개발연구원 (손욱) | 30 | 수의회약 |
| 2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 10.04.01~ 10.07.31 |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 30 | 수의회약 |
| 3 |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 10.04.19~ 10.08.31 |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 40 | 수의회약 |
| 4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 10.05.28~ 10.07.31 | 법무법인 을촌 (김정수) | 30 | 경쟁→수의회약 |
| 5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 10.04.13~ 10.07.12 |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 45.5 | 경쟁→수의회약 |
| 6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 10.06.09~ 10.7.30 |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 30 | 수의회약 |
| 7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 10.04.09~ 10.09.03 |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 30 | 수의회약 |
| 8 |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 10.05.01~ 10.10.31 |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 20 | 수의회약 |
| 9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10.08.30~ 10.12.20 |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 30 | 수의회약 |
| 10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 10.09.16~ 10.12.15 |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 30 | 수의회약 |
| 11 |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 10.09.20~ 10.12.20 |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 25 | 수의회약 |
| 12 |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 10.10.11~ 10.12.11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 30 | 수의회약 |
| 13 |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 10.10.11~ 10.12.11 | 한국금융연구원 (서근우) | 25 | 수의회약 |
| 14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 10.10.15~ 10.12.14 |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 30 | 수의회약 |
| 15 |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 10.10.15~ 10.12.14 |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 30 | 수의회약 |
| 16 |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 10.04.20~ 10.11.30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 30 | 경쟁→수의회약 |
| 17 |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 10.10.27~ 10.12.27 | (주)데이터메이션 (한미혜) | 27.7 | 경쟁→수의회약 |
| 18 |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10.10.25~ 10.12.20 |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 47.5 | 수의회약 |
| 19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 10.11.03~ 10.12.20 |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 10 | 수의회약 |
| 20 |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 10.11.03~ 10.12.20 | 보험연구원 | 3 | 수의회약 |

□ 2011년

| 연 번 | 과 제 명 | 계 약 기 간 | 제 약 자 (책임연구원) | 용 역 비 (백만원) | 계 약 방 식 |
|--------|---|-----------------------|------------------------|----------------------|------------------|
| 1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 11.01.27~ 11.06.02 | 금융연구원 (이명환) | 40 | 수의회약 |
| 2 |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 11.04.06~ 11.05.30 | 금융연구원 (이병윤) | 20 | 수의회약 |
| 3 |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 11.05.02~ 11.06.30 |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 30 | 수의회약 |
| 4 |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 11.06.27~ 11.09.26 | KDI (정찬우) | 15 | 수의회약 |
| 5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 11.07.01~ 11.12.30 | KDI (고영선) | 50 | 수의회약 |
| 6 |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 11.07.11~ 11.11.04 |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 30 | 수의회약 |
| 7 | 금융소비자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비전 연구 | 11.07.26~ 11.11.30 | KDI (천규승) | 25 | 경쟁→수의회 |
| 8 |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 11.08.19~ 11.10.31 |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종) | 29 | 경쟁→수의회 |
| 9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 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 11.09.23~ 11.12.15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 30 | 수의회약 |
| 10 |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11.10.04~ 11.12.20 |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 39 | 경쟁→수의회 |
| 11 |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 11.10.12~ 11.12.20 | 금융연구원 (이윤석) | 44 | 경쟁→수의회 |
| 12 |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 11.10.19~ 11.12.16 | 금융연구원 (이규복) | 30 | 수의회약 |
| 13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 제 도입방안 | 11.10.19~ 11.12.20 | 금융연구원 (김동환) | 30 | 경쟁→수의회 |
| 14 |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 11.10.25~ 11.12.15 | 금융연구원 (연태훈) | 30 | 수의회약 |
| 15 |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 11.10.26~ 11.12.25 | 건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 30 | 경쟁→수의회 |
| 16 |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 11.10.27~ 11.12.27 | 금융연구원 (서병호) | 30 | 수의회약 |
| 17 |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 11.07.15~ 12.02.2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 35 | 경쟁→수의회 |
| 18 |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 11.12.22~ 12.04.21 | 금융연구원 (구본성) | 30 | 수의회약 |

□ 2012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자 (책임연구원) | 용역비 (백만원) | 계약방식 |
|----|--|-----------------------|--|--------------|-------|
| 1 |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2.04.06~ 12.06.03 |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 20 | 수의계약 |
| 2 |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 12.04.24~ 12.09.23 |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 26 | 경쟁→수의 |
| 3 |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 12.04.30~ 12.08.31 | 보험연구원 (김대환) | 30 | 수의계약 |
| 4 | 금융세제 현황 및 발전 방향 | 12.05.04~ 12.08.31 | 금융연구원 (연태훈) | 30 | 경쟁→수의 |
| 5 |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 12.05.18~ 12.10.31 |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 39 | 경쟁→수의 |
| 6 |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2.05.25~ 12.08.23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 35 | 경쟁→수의 |
| 7 |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 12.06.08~ 12.07.07 | 한국궤협연구소 (박병일) | 10 | 수의계약 |
| 8 |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 12.06.25~ 12.10.31 |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 26 | 경쟁→수의 |
| 9 |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 12.07.06~ 12.10.05 | 한국제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 20 | 경쟁→수의 |
| 10 |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 12.07.17~ 12.11.20 |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 40 | 경쟁→수의 |
| 11 |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 체계 개편방향 | 12.07.26~ 12.11.26 |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 30 | 경쟁→수의 |
| 12 |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 12.07.30~ 12.10.29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 20 | 수의계약 |
| 13 | 가계부채 미시분석 | 12.08.16~ 12.11.15 |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 40 | 경쟁→수의 |
| 14 |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 기준 이행 방안 | 12.08.20~ 12.12.20 |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 35 | 경쟁→수의 |
| 15 |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정보 제공방안 | 12.09.10~ 12.11.30 |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 34 | 경쟁입찰 |
| 16 |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 (금융부문 중심) | 12.09.13~ 12.12.30 |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 35 | 경쟁입찰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5. 2009-2011까지의 국무총리실의 업무평가 실적

< '09년도 평가 결과 >

| 평가부문 | 평가대상수 | 평가 결과 | 금융위 |
|-----------|--------|------------------------|---------------------|
| ① 핵심과제 | 95개 과제 | 우수(17), 보통(63), 미흡(15) | 우수(1), 보통(1), 미흡(1) |
| ② 녹색성장 | 22개 과제 | 우수(4), 보통(14), 미흡(4) | 미흡(1) |
| ③ 정책관리역량 | 38개 기관 | 우수(8), 보통(26), 미흡(4) | 우수 |
| ④ 정책소통·홍보 | 39개 기관 | 우수(8), 보통(23), 미흡(8) | 보통 |
| ⑤ 규제개혁 | 30개 기관 | 우수(7), 보통(16), 미흡(7) | 보통 |
| ⑥ 정책만족도 | 96개 과제 | 우수(21), 보통(56), 미흡(19) | 보통(3) |
| ⑦ 민원만족도 | 39개 기관 | 우수(8), 보통(23), 미흡(8) | 보통 |

< '10년도 평가 결과 >

| 평가부문 | 평가대상수 | 평가 결과 | 금융위 |
|-----------|--------|------------------------------|-----|
| ① 핵심과제 | 38개 기관 | 최우수(3), 우수(9), 보통(23), 미흡(3) | 미흡 |
| ② 일자리 창출 | 10개 기관 | 최우수(1), 우수(1), 보통(6), 미흡(2) | 보통 |
| ③ 녹색성장 | 26개 기관 | 최우수(1), 우수(4), 보통(17), 미흡(4) | 미흡 |
| ④ 정책관리역량 | 38개 기관 | 최우수(1), 우수(9), 보통(25), 미흡(3) | 보통 |
| ⑤ 정책홍보 | 39개 기관 | 최우수(2), 우수(6), 보통(23), 미흡(8) | 보통 |
| ⑥ 규제개혁 | 31개 기관 | 최우수(2), 우수(5), 보통(17), 미흡(7) | 미흡 |
| ⑦-1 정책만족도 | 39개 기관 | 상위(8), 보통(23), 하위(8) | 보통 |
| ⑦-2 민원만족도 | | | 하위 |

< '11년도 평가 결과 >

| 평가부문 | 평가대상수 | 금융위 평가등급 |
|-----------|--------------------|----------|
| ① 핵심과제 | 38개 기관 | 보통 |
| ② 서민생활안정 | 14개 기관 | 보통 |
| ③ 녹색성장 | 24개 기관 | 우수 |
| ④ 일자리 창출 | 11개 기관 (금융위 제외) | - |
| ⑤ 정책관리역량 | 38개 기관 | 미흡 |
| ⑥ 정책홍보 | 39개 기관 | 미흡 |
| ⑦ 규제개혁 | 31개 기관 | 미흡 |
| ⑧-1 정책만족도 | 39개 기관 | 보통 |
| ⑧-2 민원만족도 | | 하위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6. 소관 위원회 관련

- 6-1. 연도별(2009~2012.6월) 소관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 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 6-2. 연도별(2009~2012.6월) 위원별 회의수당 지급현황
- 6-3. 연도별(2009~2012.6월) 위원별 출장내역 및 출장비용
- 6-4. 연도별(2009~2012.6월) 각 위원회 예산현황
(자체수입·정부지원금 구분)
- 6-5. 연도별(2009~2012.6월) 위원회별 개최 현황

금융정책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질의이므로, 묶어서 답변 드립니다.)

- ☐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2012.6월중 활동했던 금융발전심의회 설치근거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회 현황]

- (근거)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

| 명칭 | 설립근거 | 설립년도 |
|---------|--|-----------|
| 금융발전심의회 | · 금융발전심의회 설치·운영 규정 (재경부 훈령, 83.3월 제정) | 1986.3.14 |

- (분과위 구성) 위원은 위촉직(민간전문가 등)과 당연직(정부·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연임가능)
- 특히, 5개 분과위 전체 위촉직 위원은 50명 수준이며, 학계 및 연구기관, 금융 및 실업계, 언론인 및 법조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위촉

<금융발전심의회 위촉직 위원 (금융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

[회의 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운영비(210-01, 일반수용비) 집행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회의수당 집행 현황]

- 수당 지급단가 및 지급실적

- '09년 : 해당사항 없음
- '10년 : '10년도 4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편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분과별로 개최 회수도 늘어나 2010년 편성된 예산으로는 참석수당을 매번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았음
- '11년 : 금융정책국 기본경비로 정책분과와 글로벌분과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비(20만원)를 지급(1,380만원)

< '11년도 이후 집행 실적 >

(단위 : 원)

| 일자 | 회의명 | 지급단가 | 참석 인원 | 지급금액 |
|-----------|---|---|---------------|-----------|
| '11.7.22 | 2011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융서비스분과, 서민금융분과) | 200,000 = (회의수당 10만원 + 안전검토비 10만원) | 16 | 3,200,000 |
| '11.07.26 | 2011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 200,000 (회의참석수당) | 정 책 7 글로벌7 | 2,800,000 |
| '11.9.7 | 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서비스분과 제1차회의 | 200,000 = (회의수당 10만원 + 안전검토비 10만원) * 100,000 (발제자 사례금) | 12 | 2,200,000 |
| '11.9.29. | '11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서민금융분과회의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발표자 사례금 100,000 | 6 | 1,300,000 |
| '11.10.05 | 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회의 1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9 | 1,800,000 |
| '11.10.13 | 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회의 1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6 | 1,200,000 |
| '11.10.27 | 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회의 2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8 | 1,600,000 |
| '11.11.07 | 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회의 3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5 | 1,000,000 |
| '11.11.15 | 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 200,000 | 8 | 1,600,000 |

| 일자 | 회의명 | 지급단가 | 참석 인원 | 지급금액 |
|------------|---|---|----------|-----------|
| | 글로벌분과회의 2차 |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 |
| '11.11.15 | 2011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글로벌분과회의 4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6 | 1,200,000 |
| '11.11.25. | '11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서민금융분과회의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7 | 1,400,000 |
| '11.12.6 | 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서비스분과 제2차회의 | 200,000 = (회의수당 10만원 + 안전검토비 10만원) * 100,000 (발표자 사례금) | 10 | 1,800,000 |
| '11.12.15 | 2011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분과회의 3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8 | 1,600,000 |
| '11.12.15 | 2011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글로벌분과회의 5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7 | 1,400,000 |
| '12.1.31 | 2012년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서비스분과 제1차회의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 | 1,000,000 |
| '12.04.20 | 2012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분과회의 1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8 | 1,600,000 |
| '12.5.4 | 2012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융서비스분과, 서민금융분과) | 200,000 = (회의수당 10만원 + 안전검토비 10만원) | 15 | 3,000,000 |
| '12.5.9 | 2012년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서비스분과 제2차회의 | 200,000 = (회의수당 10만원 + 안전검토비 10만원) | 9 | 1,800,000 |
| '12.05.14 | 2012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9 | 1,800,000 |
| '12.6.5. | '12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서민금융분과회의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발표자 사례금 200,000 | 6 | 1,400,000 |
| '12.06.14 | 2012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글로벌분과회의 1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6 | 1,200,000 |
| '12.06.18 | 2012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분과회의 2차 | 200,000 = 100,000 (회의참석수당) + 100,000 (안전검토사례금) | 8 | 1,600,000 |

[최근 3년간 개최 내역]

○ 최근 3년간 개최실적

| 회의 / 분과명 | | 차수 |
|----------------|------|----------|
| 09년 금융발전심의회 | 정책 | 1차(3.20) |
| | 글로벌 | 1차(8.14) |
| | 은행 | 1차(4.17) |
| | 보험 | 1차(6.12) |
| | 중소서민 | 1차(7.17) |
| | 자본 | 1차(5.22) |

| 회의 / 분과명 | | 차수 |
|----------------|------|-----------|
| 10년 금융발전심의회 | 정책 | 1차(4.8) |
| | | 2차(7.15) |
| | | 3차(11.29) |
| | 시장 | 1차(4.15) |
| | | 2차(6.16) |
| | | 3차(8.27) |
| | 글로벌 | 1차(4.13) |
| | | 2차(6.1) |
| | | 3차(9.16) |
| | | 4차(11.18) |
| | 은행 | 1차(4.16) |
| | | 2차(7.2) |
| | | 3차(12.8) |
| | 보험 | 1차(4.22) |
| | | 2차(6.30) |
| | | 3차(12.3) |
| | 중소서민 | 1차(5.12) |
| | | 2차(6.25) |
| | | 3차(12.17) |
| | 자본 | 1차(4.9) |
| | | 2차(5.14) |
| | | 3차(7.9) |
| | | 4차(9.10) |
| | | 5차(11.12) |

| 회의 / 분과명 | | 차수 |
|----------------|------|---------------|
| 11년 금융발전심의회 | 전체회의 | 1차('11.7.22) |
| | 정책 | 1차('11.9.22) |
| | | 2차('11.10.19) |
| | | 3차('11.12.14) |
| | 글로벌 | 1차('11.10.5) |
| | | 2차('11.10.13) |
| | | 3차('11.10.19) |
| | | 4차('11.10.27) |
| | | 5차('11.12.14) |
| | 서비스 | 1차('11.9.7) |
| | | 2차('11.12.6) |
| | 중소서민 | 1차('11.9.29) |
| | | 2차('11.11.25) |
| | 자본 | 1차('11.1.28) |
| | | 2차('11.10.14) |
| | | 3차('11.11.11) |
| | | 4차('11.11.25) |

| 회의 / 분과명 | | 차수 |
|----------------|------|--------------|
| 12년 금융발전심의회 | 전체회의 | 1차('12.5.4) |
| | 정책 | 1차('12.4.18) |
| | | 2차('12.6.13) |
| | 글로벌 | 1차('12.5.30) |
| | 서비스 | 1차('12.1.31) |
| | | 2차('12.4.18) |
| | 중소서민 | 1차('12.6.5) |
| | 자본 | 1차('12.2.21) |
| | | 2차('12.3.28) |
| | | 3차('12.5.31) |

참 고

2012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명단

□ 위촉직 위원 (5개분과 51명)

| 분과 | 성명 | 현직위 | 분야 | 성명 | 현직위 | 분야 |
|-------------------------|-----|----------------|-----|-----|--------------------|-----|
| 정책 분과 (11) |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학 계 | 김 석 | 삼성증권 대표이사 | 금융계 |
| | 모종린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학 계 | 이팔성 | 우리금융지주 회장 | 금융계 |
| | 박상수 | 경희대 국제경영학 교수 | 학 계 | 하영구 |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 금융계 |
| | 송의영 | 서강대 경제학 교수 | 학 계 | 이미현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법조계 |
| | 정영철 |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 | 학 계 | 김기천 | 조선일보 논설위원 | 언론계 |
| | 조명현 | 고려대 경영학 교수 | 학 계 | - | - | - |
| 글로벌 금융 분과 (9) | 신인석 | 중앙대 경영학 교수 | 학 계 | 구자갑 | 골든브릿지 캐피탈 대표이사 | 금융계 |
| | 함준호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학 계 | 최석운 | 골드만삭스증권 한국 대표 | 금융계 |
| | 박우규 |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장 | 연구원 | 황호석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조계 |
| | 윤창현 | 금융연구원장 | 연구원 | 홍기영 | 매일경제 중소기업 경제연구소 부장 | 언론계 |
| | 조성렬 | BS금융지주 경제연구소장 | 연구원 | - | - | - |
| 금융 서비스 분과 (11) | 김지한 |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 | 학 계 | 김우진 | LIG손해보험 부회장 | 금융계 |
| | 김태준 | 동덕여대 국제경영학 교수 | 학 계 | 서진원 | 신한은행 은행장 | 금융계 |
| | 박경서 | 고려대 경영학 교수 | 학 계 | 신용길 | 교보생명보험 사장 | 금융계 |
| | 오창수 | 한양대 경영학 교수 | 학 계 | 최승순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법조계 |
| | 차은영 |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 학 계 | 임규진 | 동아일보 산업부 부장 | 언론계 |
| | 김대식 | 보험연구원장 | 연구원 | - | - | - |
| 서민 금융 분과 (9) | 김선구 | 서울대 경제학 교수 | 학 계 | 이건호 | KB 리스크 부행장 | 금융계 |
| | 이기영 | 경기대 경제학 교수 | 학 계 | 이종휘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금융계 |
| | 이종욱 | 서울여대 경제학 교수 | 학 계 | 서동우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법조계 |
| | 김정인 | KCB 연구소장 | 연구원 | 이정재 | 중앙일보 경제부장 | 언론계 |
| | 이강태 | 하나 SK카드 고문 | 금융계 | - | - | - |
| 자본 시장 분과 (11) | 김석진 | 경북대 경영학 교수 | 학 계 | 장경준 | 삼일회계법인 대표 | 금융계 |
| | 김용재 | 고려대 법학과 교수 | 학 계 | 정찬형 |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 금융계 |
| | 박형석 | 서강대 경영학 교수 | 학 계 | 임기영 | 대우증권 대표이사 | 금융계 |
| | 조인호 |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 | 학 계 | 임재연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법조계 |
| | 김형태 | 자본시장연구원장 | 연구원 | 오형규 | 한국경제 논설위원 | 언론계 |
| | 임석식 | 한국회계기준원장 | 연구원 | - | - | - |

공정시장과

□ 연도별 소관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위원수 (위촉직) | 위원별 임기 | 회의개최 방식 | 경비지원 기준* |
|------------------------|----------------------------|--------------|----------------------|------------|--------------------------|
| 감리위원회 | 외부감사및 회계등에 관한규정 제23조, 제25조 | 9(5)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2년 | 대면/서면 | 안전검토수당:10만원 참석수당:10만원 |
|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 자본시장조사업 무규정 제21조 | 7(3)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2년 | " | |
|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 외부감사및 회계등에 관한규정 제23조, 제24조 | 11(7)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2년 | " | |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 공 인 회 계 사 법 제6조의2 | 7(4)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3년 | 서면 | |
|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 공 인 회 계 사 법 제48조 | 7(2)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재임기간 | " | |

* 외부 위촉직에 한정하여 회의 수당 지급(회의수당 외 위원회 별도 예산 편성 없음)

□ 연도별 위원별 회의수당 지급현황

(단위:천원)

| 위원회명 | 연도 | 위촉직 위원(임기) | 회의수당 지급현황 |
|-------|------|--|--------------|
| 감리위원회 | '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승돈(08.5.30~10.5.29) 김호중(08.2.2~09.10.5) → 정영기(09.10.6~11.10.5) 이만우(07.5.4~09.5.3) → 박재환(09.5.4~11.5.3) 전영순(08.11.22~10.11.21) | 7,990 |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승돈(08.5.30~10.5.29) → 박창은(10.5.30~12.5.29) 정영기(09.10.6~11.10.5) 박재환(09.5.4~11.5.3) 전영순(08.11.22~10.11.21) → 황이석(10.11.25~12.11.24) | 8,160 |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창은(10.5.30~12.5.29) 정영기(09.10.6~11.10.5) → 지현미(11.10.6~13.10.5) 박재환(09.5.4~11.5.3) → 정석우(11.5.4~13.5.3) 황이석(10.11.25~12.11.24) | 9,400 |

| 위원회명 | 연도 | 위촉직 위원(임기) | 회의수당 지급현황 |
|---------------------|-------|--|--------------|
| |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창은(10.5.30~12.5.29) → 최호영(12.6.3~14.6.2) · 지현미(11.10.6~13.10.5) · 정석우(11.5.4~13.5.3) · 황이석(10.11.25~12.11.24) | 6,500 |
|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 '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희철(08.4.7~10.4.6) · 정순섭(07.4.1~09.3.31), 길재욱(07.4.1~09.3.31) → 김성용(09.4.1~11.3.31), 안수현(09.4.1~11.3.31) | 4,930 |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희철(08.4.7~10.4.6) → 유승남(10.4.7~12.4.6) · 김성용(09.4.1~11.3.31) · 안수현(09.4.1~11.3.31) | 6,120 |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승남(10.4.7~12.4.6) · 김성용(11.4.1~12.3.31) · 안수현(09.4.1~11.3.31) → 김유니스(11.4.1~13.3.31) | 7,350 |
| |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경호(12.4.7~14.4.6) · 안동현(12.4.1~14.3.31) · 김유니스(11.4.1~13.3.31) | 4,500 |
|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 '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임, 한봉희, 전팔(07.4.27~09.4.26) → 안영균, 백복현, 정도진(09.7.21~11.7.20) · 윤경식(08.7.10~10.7.9) · 최외홍(08.7.10~10.7.9) · 조현연(08.7.10~10.7.9) · 이병우(09.3.3~11.3.2), | 3,400 |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경식, 최외홍, 조현연 (08.7.10~10.7.9) → 정다미, 이선종, 함종호(10.10.5~12.10.4) · 이병우(09.3.3~11.3.2) · 안영균(09.7.21~11.7.20) · 백복현(09.7.21~11.7.20) · 정도진(09.7.21~11.7.20) | 3,910 |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우(09.3.3~11.3.2) → 이영훈(11.7.4~13.7.3) · 안영균, 백복현, 정도진(09.7.21~11.7.20) → 권현수, 전규안, 한종수(11.9.5~13.9.4) · 정다미(10.10.5~12.10.4) · 이선종(10.10.5~12.10.4) · 함종호(10.10.5~12.10.4) | 3,400 |
| |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다미(10.10.5~12.10.4) · 이선종(10.10.5~12.10.4) · 함종호(10.10.5~12.10.4) · 이영훈(11.7.4~13.7.3) · 권현수(11.9.5~13.9.4) · 전규안(11.9.5~13.9.4) · 한종수(11.9.5~13.9.4) | 1,100 |

| 위원회명 | 연도 | 위촉직 위원(임기) | 회의수당 지급현황 |
|------------------------|------|--|--------------|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 '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택곤(06.12.20~09.12.19) 윤승준(06.12.20~09.12.19) 이정치(06.12.20~09.12.19) 정덕주(06.12.20~09.12.19) | - |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일(09.12.20~12.12.19) 최현덕(09.12.20~12.12.19) 이정치(09.12.20~12.12.19) 최 관(09.12.20~12.12.19) | 300 |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일(09.12.20~12.12.19) 최현덕(09.12.20~12.12.19) 이정치(09.12.20~12.12.19) 최 관(09.12.20~12.12.19) | - |
| |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일(09.12.20~12.12.19) 최현덕(09.12.20~12.12.19) 이정치(09.12.20~12.12.19) 최 관(09.12.20~12.12.19) | 400 |
|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 '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영(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재임기간) 김문철(증선위 비상임위원 재임기간) | - |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영(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재임기간) 손성규(증선위 비상임위원 재임기간) | - |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영(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재임기간) 손성규(증선위 비상임위원 재임기간) | 500 |
| |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영(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재임기간) 손성규(증선위 비상임위원 재임기간) | 500 |

□ 연도별 위원별 출장내역 및 출장비용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위원회별 개최

(회의비용 단위 :천원)

| 위원회명 | 연도 | 회의 개최 횟수 | 회의방식 | | 안건수 | 회의결과 | | | 회의 비용 | 회의록 작성여부 |
|--------------------------------|-------|----------------|--------|--------|------|----------|----------|----|----------|--------------------------|
| | | | 참 석 | 서 면 | | 원안 가결 | 수정 가결 | 부결 | | |
| 감리 위원회 | '09 | 9회 | 9회 | 0회 | 75건 | 68건 | 7건 | 0건 | 7,990 | 작성 ¹⁾ |
| | '10 | 13회 | 13회 | 0회 | 89건 | 67건 | 22건 | 0건 | 8,160 | |
| | '11 | 11회 | 11회 | 0회 | 91건 | 81건 | 9건 | 0건 | 9,400 | |
| | '12.6 | 9회 | 9회 | 0회 | 51건 | 43건 | 8건 | 0건 | 6,500 | |
| 회계 제도 심의 위원회 | '09 | 4회 | 4회 | 0회 | 23건 | 22건 | 1건 | 0건 | 3,400 | 작성 ¹⁾ |
| | '10 | 4회 | 4회 | 0회 | 20건 | 18건 | 2건 | 0건 | 3,910 | |
| | '11 | 3회 | 3회 | 0회 | 10건 | 10건 | 0건 | 0건 | 3,400 | |
| | '12.6 | 1회 | 1회 | 0회 | 2건 | 2건 | 0건 | 0건 | 1,100 | |
| 공인 회계사 자격제도 심의 위원회 | '09 | 1회 | 0회 | 1회 | 1건 | 1건 | 0건 | 0건 | - | 서면회의 로 회의록 작성 불요 |
| | '10 | 1회 | 0회 | 1회 | 1건 | 1건 | 0건 | 0건 | 300 | |
| | '11 | - | - | - | - | - | - | - | - | |
| | '12.6 | 1회 | 0회 | 1회 | 1건 | 1건 | 0건 | 0건 | 400 | |
| 공인 회계사 징계 위원회 | '09 | 2회 | 2회 | 0회 | 23건 | 23건 | 0건 | 0건 | - | 작성하지 않음 |
| | '10 | 1회 | 1회 | 0회 | 8건 | 8건 | 0건 | 0건 | - | |
| | '11 | 1회 | 1회 | 0회 | 10건 | 10건 | 0건 | 0건 | 500 | |
| | '12.6 | 1회 | 1회 | 0회 | 10건 | 10건 | 0건 | 0건 | 500 | |
|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 '09 | 13회 | 13회 | 0회 | 198건 | 187건 | 9건 | 2건 | 4,930 | 작성하지 않음 ²⁾ |
| | '10 | 13회 | 13회 | 0회 | 161건 | 159건 | 2건 | 0건 | 6,120 | |
| | '11 | 11회 | 11회 | 0회 | 150건 | 147건 | 3건 | 0건 | 7,350 | |
| | '12.6 | 7회 | 7회 | 0회 | 67건 | 65건 | 1건 | 1건 | 4,500 | |

1)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 회의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함

2)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보관하지 않음

국제협력팀

1. 연도별(2009년~2012.6월) 소관 위원회 현황(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기준)

☐ 위원회 명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설치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수(당연직, 위촉직 구분)

| 당연직 | 위촉직 |
|-----|-----|
| 11명 | 10명 |

□ 위원별 임기

| 구분 | 민간위원(10명) | 정부위원 | 유관기관위원 |
|----|-----------|------|--------|
| 임기 | 2년 | 영구 | 영구 |

□ 회의개최 방식 : 대면 또는 서면

□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기준

<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도별(2009년~2012.6월) 위원별 회의수당 지급현황

| 연도 | 회차 | 수당지급 |
|------|------|--|
| '09년 | 제6차 | 50만원 = 민간위원 5명 x 10만원 |
| '10년 | 제10차 | 60만원 = 민간위원 6명 x 10만원 |
| | 제11차 | 90만원 = 민간위원 9명 x 10만원 |
| '11년 | 제13차 | 135만원 = 민간위원 9명 x 10만원 |
| | 제14차 | 240만원 = 민간위원 8명 x 30만원* * 참석수당(10만원), 안건검토비(20만원) |

* 제4차 회의('09.1.12) 참석수당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전산회계시스템상 산출 불가

3. 연도별(2009년~2012.6월) 위원별 출장내역(국내외 구분) 및 출장비용

☐ 해당사항 없음

4. 연도별(2009년~2012.6월) 각위원회 예산현황(자체수입·정부지원금 구분)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예산 |
|------|------|--------|
| 정부예산 | '09년 | 34,650 |
| | '10년 | 25,200 |
| | '11년 | 11,250 |
| | '12년 | 3,375 |

5. 연도별(2009년~2012.6월) 위원회별 개최현황

☐ '09년(4차~6차)

| 위원회명 | 회의개최횟수 | 회의방식 | | 회의결과 | | | | 회의*비용 | 회의록작성여부 |
|------------|--------|------|----|------|------|------|----|---------|---------|
| | | 참석 | 서면 | 안건수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 |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3회 | 2회 | 1회 | 7건 | 7건 | - | - | 2,348천원 | 2회 |

* 6차 회의비용만 계상(4차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전산회계시스템상 산출 불가)

☐ '10년(7차~11차)

| 위원회명 | 회의개최횟수 | 회의방식 | | 회의결과 | | | | 회의*비용 | 회의록작성여부 |
|------------|--------|------|----|------|------|------|----|---------|---------|
| | | 참석 | 서면 | 안건수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 |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5회 | 2회 | 3회 | 10건 | 10건 | - | - | 6,889천원 | 2회 |

□ '11년(12차~14차)

| 위원회 명 | 회의 개최 횟수 | 회의방식 | | 회의결과 | | | | 회의* 비용 | 회의록 작성 여부 |
|------------------------|----------------|------|----|------|----------|----------|----|--------------|-----------------|
| | | 참석 | 서면 | 안건수 | 원안 가결 | 수정 가결 | 부결 | | |
| 금융 중심지 추진 위원회 | 3회 | 2회 | 1회 | 7건 | 7건 | - | - | 14,025 천원 | 2회 |

□ '12.6월(15차~16차)

| 위원회 명 | 회의 개최 횟수 | 회의방식 | | 회의결과 | | | | 회의* 비용 | 회의록 작성 여부 |
|------------------------|----------------|------|----|------|----------|----------|----|-----------|-----------------|
| | | 참석 | 서면 | 안건수 | 원안 가결 | 수정 가결 | 부결 | | |
| 금융 중심지 추진 위원회 | 2회 | - | 2회 | 4건 | 4건 | - | - | - | - |

운용기획팀

□ 위원회 현황

- (근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

| 위원회명 | | 설치근거 | 위원수 | 위원별 임기 | 회의개최 방식 |
|------------------|--------------|-------------------|----------------------------|--------------------|------------|
|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 당연직:2명 위촉직:6명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2년 | 대면/서면 |
| 소 위 원 회 | 매각심사 소위원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2조 | 공자위위원:3명 위촉직:2명 사무국장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1년 | 대면/서면 |
| | 자금지원 소위원회 | | 공자위위원:2명 위촉직:3명 사무국장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1년 | 대면/서면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 공적자금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2조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의수당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 구분 | 개최회수 | 회의수당 지급금액 | 지급기준 |
|--------|-----------|------|--------------|---|
| 2009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8 | 36,900 | 회의참석수당 : 10만원 (2시간이상 : 15만원) 안전검토수당 : 40만원 *당연직 지급제외 |
| | 매각심사소위원회 | 7 | 17,320 | |
| | 자금지원소위원회 | 5 | 13,040 | |
| | 계 | 20 | 67,260 | |
| 2010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22 | 101,870 | |
| | 매각심사소위원회 | 17 | 65,350 | |
| | 자금지원소위원회 | 13 | 33,170 | |
| | 계 | 52 | 200,390 | |
| 2011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17 | 99,550 | |
| | 매각심사소위원회 | 10 | 41,600 | |
| | 자금지원소위원회 | 12 | 36,650 | |
| | 계 | 39 | 177,800 | |
| 2012.6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10 | 51,500 | |
| | 매각심사소위원회 | 17 | 45,650 | |
| | 자금지원소위원회 | 4 | 5,000 | |
| | 계 | 31 | 102,150 | |

□ 출장내용 및 출장비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정부예산 | - | 270,000 | 270,000 | 268,800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09.5월)」 개정으로 '09.8월 공자위가 재설치되었기 때문에 '09년의 경우 예보채상환기금 등에서 회의운영비를 분담

□ 개최현황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연도 | 회의개최 회수 | 회의방식 | | 안전수 | 회의결과 | | | 회의 비용 (만원) | 회의록 작성여부 |
|--------|------------|------|----|-----|-------------|----------|----|------------------|-------------|
| | | 참석 | 서면 | | 원 가 결 | 수정 가결 | 부결 | | |
| 2009 | 8 | 8 | - | 44 | 43 | 1 | - | 3,690 | 작성 |
| 2010 | 22 | 22 | - | 83 | 78 | 5 | - | 10,187 | |
| 2011 | 17 | 17 | - | 68 | 66 | 2 | - | 9,955 | |
| 2012.6 | 10 | 9 | 1 | 35 | 35 | - | - | 5,150 | |

○ 매각심사소위원회

| 연도 | 회의개최 회수 | 회의방식 | | 안전수 | 회의결과 | | | 회의 비용 (만원) | 회의록 작성여부 |
|--------|------------|------|----|-----|-------------|----------|----|------------------|-------------|
| | | 참석 | 서면 | | 원 가 결 | 수정 가결 | 부결 | | |
| 2009 | 7 | 7 | - | 9 | 7 | 2 | - | 1,732 | 작성 |
| 2010 | 17 | 17 | - | 19 | 10 | 9 | - | 6,535 | |
| 2011 | 10 | 10 | - | 15 | 10 | 5 | - | 4,360 | |
| 2012.6 | 14 | 14 | - | 20 | 16 | 4 | - | 4,565 | |

○ 자금지원소위원회

| 연도 | 회의개최 회수 | 회의방식 | | 안전수 | 회의결과 | | | 회의 비용 (만원) | 회의록 작성여부 |
|--------|------------|------|----|-----|-------------|----------|----|------------------|-------------|
| | | 참석 | 서면 | | 원 가 결 | 수정 가결 | 부결 | | |
| 2009 | 5 | 5 | - | 13 | 13 | - | - | 1,304 | 작성 |
| 2010 | 13 | 13 | - | 22 | 21 | 1 | - | 3,317 | |
| 2011 | 12 | 12 | - | 19 | 19 | - | - | 3,665 | |
| 2012.6 | 4 | 4 | - | 5 | 5 | - | - | 500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금융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회의개최 방식 : 매월 2회 개최(첫째, 셋째 수요일)

* 임시회의 : 위원장 단독소집, 3인 이상의 위원 요구시

○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6) :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예보 사장

- 위촉직 위원(3) :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 위원별 임기(2009-2012.6)

| | 직 위 | 성 명 | 재 임 기 간 |
|-----------|---------|-------|-------------------|
| 당연직 위원 | 위 원 장 | 전 광 우 | 2008. 3 ~ 2009. 1 |
| | " | 진 동 수 | 2009. 1 ~ 2010.12 |
| | " | 김 석 동 | 2011. 1 ~ 현재 |
| | 부 위 원 장 | 이 창 용 | 2008. 3 ~ 2009.11 |
| | " | 권 혁 세 | 2009.11 ~ 2011. 3 |
| | " | 신 제 윤 | 2011. 3 ~ 2011. 9 |
| | " | 추 경 호 | 2011. 9 ~ 현재 |
| | 기획재정부차관 | 김 동 수 | 2008. 7 ~ 2009. 1 |
| | " | 허 경 욱 | 2009. 1 ~ 2010. 4 |
| | " | 임 종 룡 | 2010. 4 ~ 2011. 9 |
| | " | 신 제 윤 | 2011. 9 ~ 현재 |

| | 직 위 | 성 명 | 재 임 기 간 |
|-----------|----------|-------|-------------------|
| | 금융감독원원장 | 김 종 창 | 2008. 3 ~ 2011. 3 |
| | " | 권 혁 세 | 2011. 3 ~ 현재 |
| | 예금보험공사사장 | 박 대 동 | 2008. 1 ~ 2009. 4 |
| | " | 이 승 우 | 2009. 5 ~ 2012. 5 |
| | " | 김 주 현 | 2012. 5 ~ 현재 |
| | 한국은행부총재 | 이 승 일 | 2006. 4 ~ 2009. 4 |
| | " | 이 주 열 | 2009. 4 ~ 2012. 4 |
| | " | 박 원 식 | 2012. 4 ~ 현재 |
| 위촉직 위원 | 상임위원 | 이 종 구 | 2008. 3 ~ 2011. 3 |
| | " | 임 승 태 | 2009. 2 ~ 2010. 4 |
| | " | 최 종 구 | 2010. 5 ~ 2011. 4 |
| | " | 이 석 준 | 2011. 3 ~ 2012. 1 |
| | " | 이 상 제 | 2011. 4 ~ 현재 |
| | " | 홍 영 만 | 2012. 3 ~ 현재 |
| | 비상임위원 | 채 희 율 | 2008. 3 ~ 2011. 3 |
| | " | 심 인 숙 | 2011. 3 ~ 현재 |

*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증권선물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회의개최 방식 : 매월 2회 개최(둘째, 제 수요일)

* 임시회의 : 위원장 단독소집, 2인 이상의 위원 요구시

○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1) :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위촉직 위원(4) :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 위원별 임기(2009-2012.6)

| | 직 위 | 성 명 | 재 임 기 간 |
|------------|-------|-------|-------------------|
| 당연직 위원 | 위 원 장 | 이 창 용 | 2008. 3 ~ 2009.11 |
| | " | 권 혁 세 | 2009.11 ~ 2011. 3 |
| | " | 신 제 윤 | 2011. 3 ~ 2011. 9 |
| | " | 추 경 호 | 2011. 9 ~ 현재 |
| 위촉직 위원* | 상임위원 | 권 혁 세 | 2008. 1 ~ 2009. 2 |
| | " | 김 주 현 | 2009. 2 ~ 2009.12 |
| | " | 최 규 연 | 2009.12 ~ 2011. 3 |
| | " | 홍 영 만 | 2011. 4 ~ 2012. 3 |
| | " | 유 재 훈 | 2012. 3 ~ 현재 |
| | 비상임위원 | 최 혁 | 2007. 4 ~ 2010. 4 |
| | " | 김 문 철 | 2007. 4 ~ 2010. 4 |
| | " | 조 인 호 | 2008. 3 ~ 2011. 3 |
| | " | 허 창 수 | 2010. 4 ~ 현재 |
| | " | 손 성 규 | 2010. 4 ~ 현재 |
| | " | 류 시 관 | 2011. 3 ~ 현재 |

*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금융위·증권위 동일)

| 구 분 | 지 급 액 |
|-----------|---------------------------------------|
| 회의 참석 수당 | (기본 2시간) 회당 10만원 (2시간 초과시) 회당 15만원 |
| 안건 검토 사례금 | 회당 30만원 |
| 조사 활동비 | 월 100만원 |

□ 연도별 위원별 회의수당 지급현황

○ 2009년도

(단위 : 만원)

| 위원회 | 성명 | 회의참석수 | 안전검토사례금 지급내역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 조사활동비 |
|-----|-----|-------|-------------------|------------------|----------------------|
| 금융위 | 채희율 | 25회 | 375 (15만원×25회) | 175 (7만원×25회) | 1,200 (100만원×12월) |
| 증선위 | 최혁 | 20회 | 300 (15만원×20회) | 140 (7만원×20회) | 1,200 (100만원×12월) |
| | 김문철 | 21회 | 315 (15만원×21회) | 147 (7만원×21회) | 1,200 (100만원×12월) |
| | 조인호 | 21회 | 315 (15만원×21회) | 147 (7만원×21회) | 1,200 (100만원×12월) |

○ 2010년도

(단위 : 만원)

| 위원회 | 성명 | 회의 참석수 | 안전검토사례금* 지급내역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 조사활동비 |
|-----|--------------|-----------|-------------------|---------------------------------|----------------------|
| 금융위 | 채희율 | 24회 | 720 (30만원×24회) | 198 (7만원×14회)+ (10만원×10회) | 1,200 (100만원×12월) |
| 증선위 | 조인호 | 23회 | 690 (30만원×23회) | 590 (7만원×6회)+ (10만원×17회) | 1,200 (100만원×12월) |
| | 최혁 (~3월) | 6회 | 180 (30만원×6회) | 54 (7만원×2회)+ (10만원×4회) | 300 (100만원×3월) |
| | 김문철 (~3월) | 6회 | 180 (30만원×6회) | 54 (7만원×2회)+ (10만원×4회) | 300 (100만원×3월) |
| | 허창수 (4월~) | 16회 | 480 (30만원×16회) | 151 (7만원×3회)+ (10만원×13회) | 900 (100만원×9월) |
| | 손성규 (4월~) | 16회 | 450 (30만원×15회) | 154 (7만원×2회)+ (10만원×14회) | 900 (100만원×9월) |

* 2010년도부터 안전 검토사례비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기존 지급액 15만원) 하였고, 회의 참석 수당은 기본 7만원에서 2시간 초과시 10만원을 지급

○ 2011년도

(단위 : 만원)

| 위원회 | 성명 | 회의 참석수 | 안전검토사례금 지급내역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 조사활동비 |
|-----|--------------|----------------|-------------------|--|----------------------|
| 금융위 | 채희율 (~3월) | 9회 (서면1회)** | 300 (30만원×10회) | 76 (7만원×3회)+ (10만원×5회)+ (15만원×1회) | 300 (100만원×3월) |
| | 심인숙 (4월~) | 25회 (서면3회) | 840 (30만원×28회) | 265 (10만원×22회)+ (15만원×3회) | 900 (100만원×9월) |
| 증권위 | 허창수 | 24회 | 720 (30만원×24회) | 312 (7만원×1회)+ (10만원×8회)+ (15만원×15회) | 1,200 (100만원×12월) |
| | 손성규 | 24회 | 720 (30만원×24회) | 312 (7만원×1회)+ (10만원×8회)+ (15만원×15회) | 1,200 (100만원×12월) |
| | 조인호 (~3월) | 5회 | 150 (30만원×5회) | 52 (7만원×1회)+ (10만원×3회)+ (15만원×1회) | 300 (100만원×3월) |
| | 류시관 (4월~) | 17회 | 510 (30만원×17회) | 235 (10만원×4회) + (15만원×13회) | 900 (100만원×9월) |

* 회의참석수당은 2월부터 '11년도 예산처리지침의 인상기준(기본 10만원, 2시간 초과시 15만원)에 따라 지급

** 서면회의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2012년도(6월말까지)

(단위 : 만원)

| 위원회 | 성명 | 회의 참석수 | 안전검토사례금 지급내역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 조사활동비 |
|-----|-----|---------------|-------------------|---------------------------------|-------------------|
| 금융위 | 심인숙 | 14회 (서면1회) | 840 (30만원×28회) | 150 (10만원×12회)+ (15만원×2회) | 600 (100만원×6월) |

| | | | | | |
|-----|-----|-----|-------------------|---------------------------------|-------------------|
| 증선위 | 허창수 | 16회 | 480 (30만원×16회) | 200 (10만원×8회)+ (15만원×8회) | 600 (100만원×6월) |
| | 손성규 | 16회 | 480 (30만원×16회) | 200 (10만원×8회)+ (15만원×8회) | 600 (100만원×6월) |
| | 류시관 | 15회 | 450 (30만원×15회) | 185 (10만원×8회) + (15만원×7회) | 600 (100만원×6월) |

□ 연도별 위원별 출장내역(국내외 구분) 및 출장비용

| 구분 | 출장기간 | 방문국 | 대상 위원 | 출장비용 |
|-----|----------------|------------------------------|-------|--|
| 증선위 | 10.11.27~12.5 |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 조인호 | 항공운임료 (₩1,168,500) 체제비(\$1,996) |
| 증선위 | 10.12.15~12.23 | 영국(런던) | 허창수 | 항공운임료 (₩15,466,500) 체제비(\$2,400) |
| 금융위 | 11.1.26~2.1 | 호주(시드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채희율 | 항공운임료 (₩4,456,400) 체제비(\$1,144) |

□ 연도별 금융위·증선위 예산현황(자체수입·정부지원금 구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중 금융위·증선위 비상임위원 수당 관련

(단위 : 천원)

| 사업명 | '09~'11년도 | | '12년도 | |
|------------------|--------------|---------|--------------|---------|
| | 산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금액 |
| 비상임위원 조사활동비 | 100만원×6명×12월 | 72,000 | 100만원×4명×12월 | 48,000 |
| 비상임위원 안전검토사례금 | 15만원×4명×50회 | 30,000 | 30만원×4명×50회 | 60,000 |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 7만원×4명×50회 | 14,000 | 15만원×4명×50회 | 30,000 |
| 합 계 | | 116,000 | | 138,000 |

* 조사활동비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실제 필요금액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
(조사활동비는 금융위 출범이후 축소된 비상임위원 수(6인→4인)에 맞게 조정하고,
안건검토사례금은 인상분(15만원→30만원)을 반영)

□ 연도별 위원회별 개최 현황

| 위원회명 | 연도 | 회의 개최 회수 | 회의방식 | | 안전수 | 회의결과 | | | 회의 비용 | 회의록 작성 여부 |
|------|--------|----------------|------|----|-----|----------|----------|----|----------|-----------------|
| | | | 참석 | 서면 | | 원안 가결 | 수정 가결 | 부결 | | |
| 금융위 | 2009 | 30 | 27 | 3 | 487 | 471 | 16 | - | - | ○ |
| | 2010 | 24 | 24 | - | 426 | 421 | 5 | - | | |
| | 2011 | 40 | 36 | 4 | 397 | 391 | 6 | - | | |
| | 20126월 | 15 | 14 | 1 | 205 | 200 | 5 | - | | |
| 증선위 | 2009 | 23 | 22 | 1 | 453 | 443 | 10 | - | - | ○ |
| | 2010 | 22 | 22 | - | 405 | 382 | 23 | - | | |
| | 2011 | 24 | 24 | - | 339 | 327 | 12 | - | | |
| | 20126월 | 14 | 14 | - | 174 | 168 | 6 | - | |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7. 임직원 교육 훈련 관련 (국내외, 6개월 이상 교육)

7-1.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7-2. 연도별(2009년~2012.6월)교육훈련별 임직원 교육이수 내역

7-1. 교육훈련제도별 개요

가. 국외 교육훈련

| 종 류 | 학위/직무 여부 | 기 간 | 대상 지역 | 재 원 | 정 원 |
|-------------|----------------|----------------|----------|----------------------|----------|
| 장기일반 과정 | 학위, 직무, 1+1 | 2년 | 영어권 | 국비(행안부) | 2명 |
| | 학위, 직무, 1+1 | 2년 6개월 | 전지역 | 국비(행안부) | 5명 이내 |
| 험프리 | 직무 | 2년 | 미국 | 험프리 재단 | 1명 이내 |
| 카이스트 | 학위+학위 (직무) | 2년 | 전지역 | KAIST장학금+ 국비(행안부) | 1명 이내 |
| KDI | 학위+학위 (직무) | 2년 | 전지역 | KDI장학금+ 국비(행안부) | 2명 이내 |
| 영리더 | 학위 (+직무선택) | 1년(+1년 연장) | 일본 | 일본장학금+ 국비(행안부) | 1명 이내 |
| 과장급 직무훈련 | 직무 | 1년(+6개월 연장) | 전지역 | 국비(행안부) | 2명 이내 |

나. 국내 교육훈련

1. 중앙공무원교육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행정안전부 주관)

1)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교육

- 목적 : 올바른 공직관 함양 및 관리자 역량 배양 등
- 실시기간 : 7급 신규자 과정(4주), 5급 승진자교육(6주)
- 교육대상 : 7급 신규 임용자 및 5급 승진자
- 훈련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2)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 과정 및 외국어교육

- 목적 : 직무 능력 및 외국어 능력 향상
- 실시기간 : 교육과정별로 상이
- 교육대상 : 전 직원 대상
- 훈련기관 : 사이버중앙공무원교육원(<http://cyber.coti.co.kr>) 및 외국어교육업체(<http://mopas.winglish.com>)

2. 금융위원회 자체 직장 교육

1) 의무교육

- 목적 : 청렴, 안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공직관 함양
- 실시기간 : 월 1회
- 교육대상 : 전 직원 대상
- 훈련기관 : 금융위원회 강당

2) 자체 금융교육

- 목적 : 금융 등 업무관련 상시교육을 통해 직원의 전문적 직무능력 향상
- 실시기간 : 월 2회
- 교육대상 : 희망자
- 지원조건 : 점심식사 제공
- 훈련기관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민간위탁교육(전화영어)

- 목적 :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 실시기간 : 교육과정별로 상이
- 교육대상 : 희망자
- 지원조건 : 수강료 일부 지원
- 훈련기관 : 민간위탁

7-2. 연도별(09년~12.6월)교육훈련별 임직원 교육이수 내역

☐ 국외 교육훈련현황 첨부 엑셀파일 7-2(국외)번 별도제출

☐ 국내 교육훈련현황은 첨부 엑셀파일 7-2(국내)번 별도제출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 감사관련

8-1. 연도별(2009년~2012.6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질문답변서, 결과
보고서 사본(지적사항별 조치결과, 조치계획
포함)

□ '09~'12.6월말 현재 감사원 처분요구서는 총 11건임

| 감 사 명 | 감사 기간 | 감사결과 | 비 고 |
|------------------------------|-----------------------|------|----------|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09.06.15 ~ 07.17 | 별첨1 | 별도 제출 |
|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0.03.15 ~ 03.19 | 별첨2 | 별도 제출 |
|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10.01.28 ~ 04.02 | 별첨3 | 별도 제출 |
|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 '10.09.06 ~ 10.13 | 별첨4 | 별도 제출 |
|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 '10.12.09 ~ 12.29. | 별첨5 | 별도 제출 |
|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1.03.17 ~ 03.25 | 별첨6 | 별도 제출 |
|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 '11.03.21 ~ 05.26 | 별첨7 | 별도 제출 |
|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 '11.07.04 ~ 07.29 | 별첨8 | 별도 제출 |
|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 '11.09.19 ~ 10.31 | 별첨9 | 별도 제출 |
|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 '12.01.09 ~ 02.28 | 별첨10 | 별도 제출 |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12.03.05 ~ 03.16. | 별첨11 | 별도 제출 |

□ 감사원 집행전말서 및 결과보고서 사본
: 감사담당관실 1건(별첨 12)

□ 감사원 질문답변서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2. 연도별(2009 - 2012.6월)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의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한 현황(공문사본 포함) 및 처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3. 연도별(2009-2012.6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청와대, 국정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접수한 수사(조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통보서, 감사원이 제출한 수사요청서 사본

☐ 별도제출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4. 연도별(2009년~2012.6월) 감사관실 작성 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조치내역 포함)

□ '09~'12.6월말 현재 자체 및 산하단체 감사계획서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4건임

○ 감사계획서(4건)

| 계획연도 | 계획서 | 계획연도 | 비 고 |
|--------|----------|--------|----------|
| 2009년도 | 별첨1 별도제출 | 2011년도 | 별첨3 별도제출 |
| 2010년도 | 별첨2 별도제출 | 2012년도 | 별첨4 별도제출 |

○ 감사결과보고서(10건)

| 감 사 명 | 감사 기간 | 감사결과 | 비 고 |
|-------------------|--|------|------|
|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 '09.07.06 ~ 07.17 | 별첨5 | 별도제출 |
| 금융연수원 종합감사 | '09.11.16 ~ 11.27 | 별첨6 | 별도제출 |
| 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 | '10.03.29 ~ 04.06 | 별첨7 | 별도제출 |
|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 '10.05.31 ~ 06.14 | 별첨8 | 별도제출 |
|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 '10.11.15 ~ 11.26 | 별첨9 | 별도제출 |
| 2010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 '10.12.16 ~ 12.22 | 별첨10 | 별도제출 |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 '11.08.25 ~ 09.07 | 별첨11 | 별도제출 |
|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 '11.11.21 ~ 11.29 | 별첨12 | 별도제출 |
| 미소금융중앙재단 종합감사 | '11.10.20 ~ 10.28 / '11.12.05 ~ 12.16 | 별첨13 | 별도제출 |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 '11.12.26 ~ 12.30 | 별첨14 | 별도제출 |

* '09년도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09.06.15~07.17) 수감으로 자체감사 생략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5. 연도별(2009년 - 2012.6월) 직원 징계현황(피징계자, 직급·직책·직위, 징계사유, 징계유형, 징계의결서, 처리결과 등 포함)

□ 징계현황

| 징계일 | 피징계자 | 징계종류 | 피징계 사실개요 | 징계시 직위·직급 | 현직위·직급 |
|-----------|------|------|----------|--------------|-----------|
| '09. 1.16 | ○○○ | 견책 | 음주운전 | 서기관 | 퇴직 |
| '09. 2.27 | ○○○ | 감봉 | 금품수수 | 서기관 | 서기관 |
| '09. 2.27 | ○○○ | 감봉 | 금품수수 | 서기관 | 서기관 |
| '09. 2.27 | ○○○ | 견책 | 음주운전 | 행정 사무관 | 행정 사무관 |
| '11.12.16 | ○○○ | 파면 | 금품수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퇴직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관할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6. 연도별(2009 - 2012. 6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자에 대한 현황(피징계자,
직급·직책·직위, 징계사유, 징계유형, 징계
의결서, 처리결과 등 포함)

☐ 해당사항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7.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본부 및 산하기관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 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 | 2009년 (‘09.1.~’09.12.) | 2010년 (‘10.1.~’10.12.) | 2011년 (‘11.1.~’11.12.) | 2012년 (‘12.1.~’12.6.) |
|-----|---------------------------|---------------------------|---------------------------|--------------------------|
| 접 수 | 2504 | 2665 | 1705 | 720 |

○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 | 처리완료 | 민원취하/ 착수전 해결 | 민원인· 민원요지 불명 | 처리중 |
|----------------------------|------|-----------------|-----------------|-----|
| 2009년 (‘09.1.~ ’09.12.) | 2286 | 207 | 11 | - |
| 2010년 (‘10.1.~ ’10.6.) | 2349 | 277 | 39 | - |
| 2011년 (‘11.1.~’11.12.) | 1336 | 292 | 77 | - |
| 2012년 (‘12.1.~’12.6.) | 474 | 184 | 57 | 5 |

□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우리 위원회 관련 민원은 없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8-8. 2005년 이후 청렴도 평가 순위 및 개선이행 조치결과

☐ 금융위원회는 2008년 2월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평가연도 | 종합청렴도 | 청렴도 | | 청렴도 (순위) |
|------|-------|-------|-------|---------------|
| | |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 | |
| '08 | 8.63 | 9.03 | 8.46 | 우수 (7/21) |
| '09 | 9.14 | 9.09 | 9.17 | 우수 (4/39) |
| '10 | 8.76 | 8.41 | 8.89 | 우수 (11/38) |
| '11* | - | 8.71 | - | - |

* '11년 외부청렴도 평가는 표본부족으로 제외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평가에 따른 별도의 개선조치 요구 등을 하지 않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9. 조직관리, 인사운영 관련

9-1. 연도별(2009년 ~ 2012.6월) 직원 중 여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 연도별(2009년 ~ 2012.6월) 직원 중 여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 연도 | 여성 현황 | 장애인 현황 | 국가유공자 현황 |
|---------|-------|--------|----------|
| 2009 | 47명 | 6명 | 4명 |
| 2010 | 50명 | 6명 | 4명 |
| 2011 | 58명 | 9명 | 4명 |
| 2012.6월 | 60명 | 7명 | 4명 |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9-2. 연도별(2009년~2012.6월)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단위: 천원)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본부 | 09.1.14 | 다이어리, 수첩제작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18,040 |
| | 09.1.30 | 문서파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250 |
| | 09.2.19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0,091 |
| | 09.4.20 | 비누 | 한국장애우마을 | 수의 | 165 |
| | 09.4.20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690 |
| | 09.4.30 | 비누 | 두레장애인작업장 | 수의 | 132 |
| | 09.6.9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690 |
| | 09.8.14 | 각티슈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43 |
| | 09.8.21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690 |
| | 09.9.17 | 종이컵 | 양주시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 수의 | 40 |
| | 09.9.22 | 문구류, 휴지 등 | 한국장애우마을 | 수의 | 100 |
| | 09.10.30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126 |
| | 09.12.24 | 복사용지, 문서보존상자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094 |
| | 09.12.28 | 다이어리, 수첩제작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13,860 |
| | 10.3.10 | 다이어리, 수첩제작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3,046 |
| | 10.4.15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645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10.5.14 | 각티슈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43 |
| | 10.7.8 | 문구류, 휴지 등 | 한국장애우마을 | 수의 | 110 |
| | 10.10.21 | 인쇄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17,295 |
| | 10.11.12 | 인쇄 3건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49,968 |
| | 10.12.24 | 인쇄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25,230 |
| | 10.12.29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 수의 | 1,943 |
| | 10.12.29 | 다이어리, 수첩제작 |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 수의 | 26,950 |
| | 11.3.15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 수의 | 455 |
| | 11.6.20 | 인쇄 |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 수의 | 4,784 |
| | 11.6.29 | 인쇄 |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 수의 | 15,962 |
| | 11.7.5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 수의 | 627 |
| | 11.8.8 | 복사용지 | 늘푸른직업재활원 | 수의 | 418 |
| | 11.8.16 | 인쇄 |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 수의 | 4,748 |
| | 11.9.23 | 복사용지 | 행복한나무(중증장애인) | 수의 | 438 |
| | 11.9.28 | 인쇄 |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 수의 | 4,576 |
| | 11.10.7 | 각티슈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43 |
| | 11.10.20 | 복사용지 | 늘푸른제지(장애인) | 수의 | 410 |
| | 11.10.20 | 인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의 | 22,786 |
| | 11.11.4 | 인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의 | 28,489 |
| | 11.11.22 | 인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의 | 23,703 |
| | 11.12.1 | 인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의 | 25,629 |
| | 11.12.7 | 복사용지 | 행복한나무(중증장애인) | 수의 | 1,314 |
| | 11.12.21 | 법령집제작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의 | 16,418 |
| | 11.12.28 | 다이어리, 수첩제작 |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 수의 | 23,716 |
| | 12.3.22 | 복사용지 | (사)한국근로장애인 진흥회 | 수의 | 666 |
| | 12.4.18 | 인쇄 2건 | (사)한국장애인 | 수의 | 25,957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 | 이워크협회 | | |
| | 12.5.31 | 인쇄 |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 수익 | 15,499 |
| | 12.6.19 | 복사용지 | (사)한국근로장애인 진흥회 | 수익 | 1,468 |
| 기획조정관실 | 09.4.15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690 |
| | 09.6.2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843 |
| | 09.7.29 | 정부 화일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750 |
| | 09.7.29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920 |
| | 09.9.22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1,380 |
| | 09.10.28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805 |
| | 09.11.1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645 |
| | 09.12.16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645 |
| | 10.1.14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125 |
| | 11.7.22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627 |
| | 11.10.13 | 인쇄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익 | 2,624 |
| | 11.10.13 | 인쇄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익 | 1,505 |
| | 11.10.13 | 인쇄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익 | 4,192 |
| | 11.10.13 | 인쇄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익 | 4,045 |
| | 11.10.13 | 인쇄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익 | 2,869 |
| | 11.10.13 | 인쇄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익 | 1,027 |
| | 11.10.31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익 | 2,035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11.12.28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660 |
| | 12.3.30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657 |
| | 12.5.15 | 인쇄비 |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 수의 | 2,422 |
| | 12.5.15 | 인쇄비 |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 수의 | 1,179 |
| | 12.5.15 | 인쇄비 |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 수의 | 657 |
| | 12.6.27 | 복사 용지 |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438 |
| 대변인실 | 09.5.27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304 |
| | 09.6.29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920 |
| | 09.11.3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460 |
| | 10.4.29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645 |
| | 10.7.6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089 |
| | 10.8.24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587 |
| | 10.10.12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016 |
| | 10.11.4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983 |
| | 11.3.28 | 사무용품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175 |
| | 11.8.19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535 |
| | 11.9.20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 11.10.7 | 인쇄 |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수의 | 1,796 |
| | 11.10.11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11.11.3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 11.11.25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 11.12.16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4,524 |
| | 12.4.20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 12.4.25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 12.5.23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 12.6.12 | 복사 용지 |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754 |
| 금융정책국 | 09.04.16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2,662 |
| | 09.08.10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3,816 |
| | 09.11.25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2,596 |
| | 10.02.02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1,935 |
| | 10.03.16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1,975 |
| | 10.04.2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3,440 |
| | 10.11.10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4,580 |
| | 10.11.10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1,305 |
| | 10.12.1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572 |
| | 11.02.1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3,706 |
| | 11.06.08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3,066 |
| | 11.10.2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3,669 |
| | 11.10.27 | 자료제작 | 사회적 기업노란들판 | 수의 | 1,558 |
| | 11.10.27 | 자료제작 | 사회적 기업노란들판 | 수의 | 255 |
| | 12.04.1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4,051 |
| | 12.04.1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1,565 |
| | 12.06.18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 수의 | 2,212 |
| 금융 서비스국 | 09.5.29 | 복사용지, 행정봉투,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648 |
| | 09.6.29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 수의 | 4,423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 행정봉투, 정부화일, 보존상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 | 09.9.29 | 복사용지,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3,125 |
| | 10.2.3 | 복사용지,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845 |
| | 10.5.14 | 복사용지,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371 |
| | 10.6.11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106 |
| | 10.7.15 | 복사용지, 보존상자, 행정봉투,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594 |
| | 10.10.8 | 복사용지, 보존상자, 행정봉투,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809 |
| | 10.11.11 | 복사용지, 보존상자,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435 |
| | 10.11.19 | 복사용지, 보존상자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966 |
| | 11.2.11 |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037 |
| | 11.3.18 |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085 |
| | 11.5.4 | 복사용지,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221 |
| | 11.6.23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095 |
| | 11.8.4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628 |
| | 11.9.28 | 복사용지,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658 |
| | 11.9.28 | 재생 프린터 · 토너 |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 수의 | 858 |
| | 11.10.12 | 인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수의 | 782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11.10.31 | 재생 프린터 토너 |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 수의 | 990 |
| | 11.11.14 | 복사용지, 정부화일, 행정봉투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576 |
| | 11.11.28 | 재생 프린터 토너 |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 수의 | 1,800 |
| | 11.12.15 | 복사용지, 정부화일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721 |
| | 11.12.27 | 재생 프린터 토너 |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 수의 | 420 |
| | 12.2.10 |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412 |
| | 12.3.15 | 재생 프린터 토너 |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 수의 | 100 |
| | 12.3.27 |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552 |
| | 12.5.2 | 재생 프린터 토너 |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 수의 | 420 |
| | 12.6.8 |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852 |
| 자본시장국 | 10.03.24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2,663 |
| | 10.06.04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2,406 |
| | 10.10.12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3,041 |
| | 10.12.14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3,010 |
| | 11.04.14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2,127 |
| | 11.04.25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660 |
| | 11.05.27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1,089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11.06.28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198 |
| | 11.07.26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330 |
| | 11.08.29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990 |
| | 11.09.02 | 복 사 용 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2,081 |
| | 11.11.23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1,430 |
| | 11.11.29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462 |
| | 11.12.09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660 |
| | 12.01.25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2,660 |
| | 12.02.1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2,206 |
| | 12.02.29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660 |
| | 12.03.26 | 재생 프린터 카 트 리 지 | 협신사무기 | 수의 | 924 |
| 공자위사무국 | 09.12.17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150 |
| | 10.03.30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860 |
| | 10.05.11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985 |
| | 10.10.28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173.5 |
| | 10.12.24 | 사무용품 | 열린마음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43 |
| | 10.12.24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916 |
| | 11.05.23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001 |
| | 11.09.14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876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11.10.11 | 각티슈 | 열린마음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43 |
| | 11.11.15 | 사무용품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25 |
| | 12.01.16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876 |
| | 12.07.09 | 복사용지 | 한국 근로장애인 진흥회(사) | 수의 | 159.2 |
| | 12.07.09 | 각티슈 | 행복한나무(주) | 수의 | 181.5 |
| 금융정보 분석원 | 09.3.19 | 종이컵, 행정봉투 등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929 |
| | 09.6.8 | 복사용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990 |
| | 09.9.30 | 복사용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943 |
| | 10.5.25 | 복사용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214 |
| | 10.10.28 | 파일 및 문서보존상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339 |
| | 10.12.15 | 복사용지 및 행정봉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2,125 |
| | 10.12.24 | 09년 연차 보고서발간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9,625 |
| | 11.4.21 | 복사용지 및 행정봉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460 |
| | 11.6.17 | 행정봉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460 |
| | 11.6.20 | 종이컵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10 |
| | 11.7.5 | 복사용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수의 | 1,314 |
| | 11.7.29 | 종이컵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10 |
| | 11.10.7 | 종이컵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10 |
| | 11.11.23 | 책자 발간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수의 | 4,359 |
| | 12.2.15 | 종이컵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110 |
| | 12.6.14 | 종이컵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330 |
| | 12.8.7 | 종이컵 | 장애인재활센터 | 수의 | 220 |
| 글로벌 금융과 | 09.04.27 | 행정물품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230 |
| | 09.06.22 | 행정물품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267 |
| | 09.07.28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470 |
| | 09.09.17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690 |

| 소관 | 구매 일자 | 구매 품목 | 업체명 | 구매 절차 | 금액 |
|-------|----------|----------|-----------------------|----------|-----|
| | 09.11.26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360 |
| | 10.02.25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322 |
| | 10.05.10 | 행정물품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430 |
| | 10.06.28 | 행정물품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504 |
| | 10.10.05 | 행정물품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458 |
| | 11.05.25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329 |
| | 11.08.03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548 |
| | 11.10.27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548 |
| | 11.12.02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548 |
| | 11.12.27 | 복사지 | 서울시립장애인 | 수의 | 673 |
| 국제협력팀 | 11.12.07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438 |
| | 11.12.22 | 복사용지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 | 657 |

